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김형주 · 연보라 · 정세정 · 변금선

협동연구총서 21-79-01
연구보고 21-R18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저 자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연구진 연구책임자_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연보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정세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연구위원)
변금선(서울연구원 ·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이민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청년 이슈가 금년 한해처럼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청년 문제는 청년 개인의 취업 문제로 국한하여 치부되다보니 산업화 시대처럼 일자리 개수를 늘리고 취업을 통해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면 청년의 사회 정착에 필요한 많은 문제가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는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보는 시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득 이외에 주거, 교육, 문화, 건강,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청년층 삶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어려움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 사회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청년의 빈곤 문제를 다루면서 전통적인 이슈인 경제와 소득 측면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빈곤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청년의 삶에서 발생하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이제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청년정책 연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의 사회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본 연구가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 모두를 대표하여

연구책임자 김형주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와 영향요인을 3년간 연속연구를 통해 누적적으로 파악하고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임
- 금년도 1차년도는 연속연구 첫해로서 청년 빈곤의 분류틀 및 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지표별 실태 및 유형 분석, 경제/소득 및 노동 빈곤의 인식과 정책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자립안전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방법

- 선행연구 분석으로서 청년 빈곤에 대한 개념화 동향 및 최근 선행연구 고찰, 청년 빈곤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 최근 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의 청년 빈곤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음
- 전문기관간 협동연구 추진으로서 본 1차년도에는 청년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청년 빈곤 정책·법제도 분석과 청년 빈곤지표 분석 등을 공동연구하였음
- 2차 자료 분석으로서 청년 빈곤의 분류틀 및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청년의 소득, 자산, 주거, 물질적 결핍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대상으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통계적 실태를 분석하였음. 또한 청년층에 대한 다차원적인 빈곤 집단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음

- 설문조사로서 만 19세~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법정 연령)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빈곤의 금년도 중점영역(경제/소득, 노동)에 대한 상황, 인식, 전망, 정책 만족도, 정책욕구를 조사하였는데, 전국 17개 시·도 대상 지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표본 수 청년층 4,000명 내외에 대해서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 추출로 온라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심층면담조사로서 청년 빈곤의 주요영역에 대한 청년층 삶의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한 것으로서 청년들의 일과 삶을 중심으로 빈곤의 상태와 빈곤에 이르게 된 경로, 위험성 예측을 위해 20명 내외의 빈곤 청년 대상 심층면담조사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 및 정책포럼으로서 청년 빈곤 동향 및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조사결과 및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 정책연구실무협의회로서 연구의 방향 및 정책적 수요 등에 대한 관련 부처협의회 개최, 청년 빈곤에 대한 조사결과, 정책방안에 관한 부처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청년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고찰

- 청년 빈곤에 대해 사회적·정책적 개념화
- 청년 빈곤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 등 선행연구 고찰
- 청년 빈곤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정책 현황 분석
- 청년 빈곤에 대한 국회 및 지방의회 최근 입법 현황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추진 동향 분석

2) 청년 빈곤 실태 분석

- 청년 빈곤의 개념을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였고, 청년 빈곤의 영역을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자본으로 분류하였음.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영역에서는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노동 영역에서는 실업과 노동안정성,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비 부담과 최저주거기준,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과 의료비 부담,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과 니트(NEET),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문화 활동 시간을 빈곤 지표로 확정하였고 각 지표별 빈곤선(cut-off)을 설정하였음
- 영역별 지표의 빈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이행기 변화는 청년의 사회적 과업과 직결되는 영역의 빈곤 위험을 크게 만들고 있었음. 청년은 노동과 주거, 그리고 교육영역에서 빈곤율이 높은 수준이었음. 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해 정착하는 것, 그리고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는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자원과 기회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줌. 노동시장과 교육영역 밖에서 일할 기회, 역량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배제된 청년, 그리고 이행기의 불안정성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한 안정적 공간으로서의 주거 자원이 결핍된 청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과거보다 최근의 청년은 경제영역 중 자산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청년의 순자산 빈곤율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으며, 그 경향도 최근 더 강하게 나타났음.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의 집단내 격차가 커지는 등의 청년 불평등 문제가 악화할 수 있음을 의미함.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고, 청년의 집단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 최근 청년은 빈곤연구에서 간과해온 비화폐적 영역인 건강과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하였음.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은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을 직접으로 보여주는 노동, 교육, 주거와 달리 청년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기초역량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 영역의 빈곤 위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청년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청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소득지원만으로 청년 이행기의 배제, 박탈, 결핍을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의 관계와 연결망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3) 청년 빈곤 관련 의식, 전망,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

- 만 19세~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법정 연령)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빈곤의 1차년도 주요영역인 경제/소득 및 노동에 대한 상황, 인식, 전망, 정책 만족도, 정책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국 17개 시·도 대상 지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표본 수 청년층 4,000명 내외에 대해서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 추출로 온라인조사를 시행함
- 청년 빈곤 분류틀에 따라 소득과 노동 영역에 대한 상황, 인식, 미래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청년 빈곤 영역별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청년 빈곤 관련 필요 정책에 대한 정책 욕구 조사, 청년 빈곤에 관한 인식 및 정책 욕구 조사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함

4) 청년 빈곤의식 심층면담

- 심층면담조사로서 1차년도 청년 빈곤의 주요영역인 경제/소득 및 노동에 대해 20명 내외의 청년 대상 심층면담조사 실시하였음
- 청년의 삶에 있어서 경제 및 소득,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빈곤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빈곤의 상태, 원인 및 경로, 그리고 빈곤위험성 등에 관한 청년 대상의 심층면담조사를 시행하였고, 심층면담조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4.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청년의 자립안전망 체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 경제와 노동이라는 2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경제 분야의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 경제적 지원 연계 종합 서비스 강화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확대
 - 청년 개인 소득·자산 빈곤 지원 제도 개선
 - 청년 경제적 빈곤 지원 대상자 근로조건 완화
 - 취약계층 청년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채무 부담 완화
- 노동 분야의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환류시스템 구축
 - 청년 노동 빈곤 상황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정례화
 - 노동 빈곤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내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기회 확대
 -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및 인프라

-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청년진흥원 설립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협동연구총서 21-79-01
연구보고 21-R1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3. 연구내용	8
4. 연구방법	9

II. 청년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고찰

1. 청년 빈곤의 개념화 논의	13
2. 청년 빈곤 관련 선행연구 고찰	20
3. 청년 빈곤 정책 및 법제도 동향	28
4. 해외 청년 빈곤 정책 추진 동향	59

III. 청년 빈곤 실태 분석

1.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	91
2.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110
3. 청년 다차원 빈곤 심층 분석	146

IV. 청년 빈곤 관련 인식, 전망,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	
1. 조사 개요	189
2. 청년의 소득	191
3. 청년의 노동	331
4. 청년 빈곤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	418
V. 청년 빈곤의식 심층면담	
1. 면담조사 개요	509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513
3. 소결 및 시사점	571
VI.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581
2. 정책 제언	582
3. 결론	606
참고문헌	611
부 록	629
국문초록	673
Abstract	675

표 목차

표 II-1. 청년 관련 법령 상 청년의 범위	14
표 II-2. 자산형성지원제도 법적 근거	28
표 II-3.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	31
표 II-4.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32
표 II-5. 2021.8.26. 청년특별대책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주요 내용	34
표 II-6. 문화누리카드 지급의 법적 근거	42
표 II-7. 문화누리카드 지급의 법적 근거	42
표 II-8. 2021. 8. 26 청년특별대책의 고용 정책 주요 내용	44
표 II-9.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	47
표 II-10. 17개 광역지자체의 청년 조례	49
표 II-11. 광역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중 청년 빈곤 관련 내용	52
표 II-12. 광역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의 영역별 청년 빈곤 관련 내용 구분	57
표 III-1. 선행연구에서의 청년 빈곤 분류 영역	93
표 III-2. 선행연구에서의 청년 빈곤 분류 영역별 지표	95
표 III-3. 델파이 조사 개요	96
표 III-4. 델파이 참여 전문가	97
표 III-5. 청년 빈곤 분류 영역 및 영역별 지표(안)	98
표 III-6. 청년 빈곤의 개념 타당성 평가	100
표 III-7.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 타당성 평가	100
표 III-8.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 중요성 평가	101
표 III-9. 청년 빈곤의 지표 타당성 평가	103
표 III-10. 청년 빈곤의 영역별 지표 중요성 평가	105
표 III-11. 청년 빈곤의 지표별 빈곤선 타당성 평가	107
표 III-12. 청년 빈곤 분류 영역 및 영역별 지표(최종안)	109
표 III-13. 청년 이행기의 특성 변화	111
표 III-14. 분석 내용	115

표 Ⅲ-15. 분석자료 개요	115
표 Ⅲ-16. 상대적 빈곤율(2011~2019)	118
표 Ⅲ-17. 저임금근로자 비율(2005, 2010, 2015, 2019, 2020) ...	120
표 Ⅲ-18. 순자산 빈곤율(2017~2020)	121
표 Ⅲ-19. 실업률(2010~2020)	123
표 Ⅲ-20.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2013~2020)	124
표 Ⅲ-21. 가구특성별 RIR(2017~2019)	126
표 Ⅲ-22.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2017~2019) ...	127
표 Ⅲ-23.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2015~2020)	129
표 Ⅲ-24.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2016~2020)	131
표 Ⅲ-25.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2010, 2019)	132
표 Ⅲ-26.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2012~2020)	135
표 Ⅲ-27. 청년 니트 비율(2007, 2017)	136
표 Ⅲ-28.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2013~2019)	139
표 Ⅲ-29. 시간 빈곤율	140
표 Ⅲ-30.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143
표 Ⅲ-31.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유형 분류 기준	154
표 Ⅲ-32.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유형(3개 집단)	157
표 Ⅲ-33.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과 전체 연령대 빈곤율 비교 ...	160
표 Ⅲ-34.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62
표 Ⅲ-35. 인구사회학적 배경(혼인상태, 가구유형)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67
표 Ⅲ-36.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0
표 Ⅲ-37. 삶의 만족도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74
표 Ⅲ-38. 삶의 사다리 인식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75
표 Ⅲ-39. 자살 생각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76
표 Ⅲ-40.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77
표 Ⅲ-41.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	181
표 Ⅳ-1. 응답자 특성표	190
표 Ⅳ-2.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연령별)	192
표 Ⅳ-3.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배경변인별)	192
표 Ⅳ-4.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연령별)	194
표 Ⅳ-5.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배경변인별)	195

표 IV-6. 총 연간소득(연령별)	197
표 IV-7. 총 연간소득(배경변인별)	198
표 IV-8. 총 연간소득 만족도(연령별)	199
표 IV-9. 총 연간소득 만족도(배경변인별)	200
표 IV-10.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연령별)	202
표 IV-11.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배경변인별)	202
표 IV-12.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연령별)	205
표 IV-13.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배경변인별)	206
표 IV-14.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연령별)	207
표 IV-15.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배경변인별)	208
표 IV-16.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연령별)	210
표 IV-17.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배경변인별)	210
표 IV-18.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연령별)	212
표 IV-19.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배경변인별)	213
표 IV-20.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 여부(연령별)	214
표 IV-21.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 여부(배경변인별)	215
표 IV-22.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여부(연령별)	217
표 IV-23.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여부(배경변인별)	218
표 IV-24.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형태(연령별)	219
표 IV-25.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형태(배경변인별)	220
표 IV-26. 거주 주택 비용 마련 방법(연령별)	222
표 IV-27. 거주 주택 비용 마련 방법(배경변인별)	223
표 IV-28.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연령별)	224
표 IV-29.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배경변인별)	225
표 IV-30. 본인 명의 자가 마련 희망 여부(연령별)	227
표 IV-31. 본인 명의 자가 마련 희망 여부(배경변인별)	228
표 IV-32. 기대하는 본인 명의 자가 마련 시기(연령별)	229
표 IV-33. 기대하는 본인 명의 자가 마련 시기(배경변인별)	230
표 IV-34. 본인이 보유한 총 부동산의 가격 변화 예측(연령별)	232
표 IV-35. 본인이 보유한 총 부동산의 가격 변화 예측(배경변인별) ..	233
표 IV-36. 본인 소유의 자동차 소유 여부(연령별)	234
표 IV-37. 본인 소유의 자동차 소유 여부(배경변인별)	235
표 IV-38. 자동차 배기량(연령별)	237
표 IV-39. 자동차 배기량(배경변인별)	238
표 IV-40. 전기자동차 여부(연령별)	239

표 IV-41. 전기자동차 여부(배경변인별)	240
표 IV-42.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희망 여부(연령별)	242
표 IV-43.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희망 여부(배경변인별)	242
표 IV-44. 향후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시기(연령별)	244
표 IV-45. 향후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시기(배경변인별)	245
표 IV-46. 금융상품(연령별)	247
표 IV-47. 금융상품(배경변인별)	247
표 IV-48. 주식, 채권, 펀드(연령별)	249
표 IV-49. 주식, 채권, 펀드(배경변인별)	250
표 IV-50. 암호화폐(연령별)	251
표 IV-51. 암호화폐(배경변인별)	252
표 IV-52. 기타(빌려준돈, 갚돈 등)(연령별)	254
표 IV-53. 기타(빌려준돈, 갚돈 등)(배경변인별)	254
표 IV-54. 금융재산 총합(연령별)	256
표 IV-55. 금융재산 총합(배경변인별)	257
표 IV-56.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유(연령별)	259
표 IV-57.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유(배경변인별)	260
표 IV-58.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연령별)	261
표 IV-59.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배경변인별)	262
표 IV-60.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연령별)	264
표 IV-61.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배경변인별)	264
표 IV-62. 은행 부채(연령별)	266
표 IV-63. 은행 부채(배경변인별)	267
표 IV-64. 2금융권 부채(연령별)	268
표 IV-65. 2금융권 부채(배경변인별)	269
표 IV-66. 대부업체 부채(연령별)	271
표 IV-67. 대부업체 부채(배경변인별)	271
표 IV-68. 기타 부채(연령별)	273
표 IV-69. 기타 부채(배경변인별)	274
표 IV-70. 부채 총합(연령별)	275
표 IV-71. 부채 총합(배경변인별)	276
표 IV-72. 부채 발생 이유(연령별)	278
표 IV-73. 부채 발생 이유(배경변인별)	279
표 IV-74. 부채 부담 정도(연령별)	280
표 IV-75. 부채 부담 정도(배경변인별)	281

표 IV-76. 예상하는 부채 완전상환 기간(연령별)	283
표 IV-77. 예상하는 부채 완전상환 기간(배경변인별)	283
표 IV-78.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연령별)	285
표 IV-79.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배경변인별)	286
표 IV-80. 식료품비(외식비 포함)(연령별)	288
표 IV-81. 식료품비(외식비 포함)(배경변인별)	289
표 IV-82. 주거비(연령별)	290
표 IV-83. 주거비(배경변인별)	291
표 IV-84. 교육비(보육료 포함)(연령별)	293
표 IV-85. 교육비(보육료 포함)(배경변인별)	294
표 IV-86. 의료비(연령별)	295
표 IV-87. 의료비(배경변인별)	296
표 IV-88. 교통비(연령별)	298
표 IV-89. 교통비(배경변인별)	298
표 IV-90. 통신비(연령별)	300
표 IV-91. 통신비(배경변인별)	301
표 IV-92. 기타(연령별)	302
표 IV-93. 기타(배경변인별)	303
표 IV-94. 소비 지출 총합(연령별)	305
표 IV-95. 소비 지출 총합(배경변인별)	305
표 IV-96.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인지도(연령별)	308
표 IV-97.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인지도(배경변인별)	308
표 IV-98.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인지도(연령별)	310
표 IV-99.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인지도(배경변인별)	311
표 IV-100. 청년기본소득 인지도(연령별)	312
표 IV-101. 청년기본소득 인지도(배경변인별)	313
표 IV-102.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참여 경험(연령별)	315
표 IV-103.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참여 경험(배경변인별)	316
표 IV-104.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참여 경험(연령별)	317
표 IV-105.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참여 경험(배경변인별)	318
표 IV-106. 청년기본소득 참여 경험(연령별)	320
표 IV-107. 청년기본소득 참여 경험(배경변인별)	320
표 IV-108.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만족도(연령별)	322
표 IV-109.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만족도(배경변인별)	323

표 IV-110.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만족도(연령별)	324
표 IV-111.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만족도(배경변인별)	325
표 IV-112.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연령별)	327
표 IV-113. 청년기본소득 만족도(배경변인별)	327
표 IV-114.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연령별)	329
표 IV-115.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배경변인별)	330
표 IV-116. 지난주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연령별)	332
표 IV-117. 지난주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배경변인별)	332
표 IV-118. 지난 4주내 구직 여부(연령별)	334
표 IV-119. 지난 4주내 구직 여부(배경변인별)	335
표 IV-120. 지난주 직장에서의 지위(연령별)	336
표 IV-121. 지난주 직장에서의 지위(배경변인별)	337
표 IV-122. 과거(2018~2021년)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연령별)	339
표 IV-123. 과거(2018~2021년)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배경변인별)	340
표 IV-124.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연령별)	342
표 IV-125.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배경변인별)	342
표 IV-126. 수입 만족도(연령별)	344
표 IV-127. 수입 만족도(배경변인별)	345
표 IV-128. 직업안정성 만족도(연령별)	346
표 IV-129. 직업안정성 만족도(배경변인별)	347
표 IV-130.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연령별)	349
표 IV-131.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배경변인별)	349
표 IV-132. 이직 의향(연령별)	351
표 IV-133. 이직 의향 (배경변인별)	352
표 IV-134. 이직 희망의 주된 이유(연령별)	353
표 IV-135. 이직 희망의 주된 이유(배경변인별)	354
표 IV-136. 취업을 원하는 기관(연령별)	356
표 IV-137. 취업을 원하는 기관(배경변인별)	357
표 IV-138. 해당 기관의 취업 가능성(연령별)	359
표 IV-139. 해당 기관의 취업 가능성(배경변인별)	359
표 IV-140.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연령별)	361
표 IV-141.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배경변인별)	362

표 IV-142.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 개선 여부(연령별)	364
표 IV-143.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 개선 여부(배경변인별)	365
표 IV-144. 현재 창업 여부(연령별)	366
표 IV-145. 현재 창업 여부(배경변인별)	367
표 IV-146. 창업 유형(연령별)	369
표 IV-147. 창업 유형(배경변인별)	369
표 IV-148. 창업의 주된 동기(연령별)	371
표 IV-149. 창업의 주된 동기(배경변인별)	372
표 IV-150. 창업에 대한 만족도(연령별)	373
표 IV-151. 창업에 대한 만족도(배경변인별)	374
표 IV-152. 창업 유지 의향 여부 (연령별)	376
표 IV-153. 창업 유지 의향 여부(배경변인별)	376
표 IV-154.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이유(연령별)	378
표 IV-155.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이유(배경변인별)	379
표 IV-156. 창업 의향 여부 (연령별)	380
표 IV-157. 창업 의향 여부(배경변인별)	381
표 IV-158.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연령별)	383
표 IV-159.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배경변인별)	384
표 IV-160. 창업하려는 이유(연령별)	386
표 IV-161. 창업하려는 이유(배경변인별)	386
표 IV-162.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연령별)	388
표 IV-163.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배경변인별)	389
표 IV-164.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연령별)	391
표 IV-165.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배경변인별)	391
표 IV-166.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인지도(연령별) ...	394
표 IV-167.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인지도(배경변인별) ...	394
표 IV-168.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지도(연령별)	396
표 IV-169.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지도(배경변인별)	397
표 IV-17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지도(연령별)	398
표 IV-17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지도(배경변인별)	399
표 IV-172.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험(연령별) ...	401
표 IV-173.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험(배경변인별)	401
표 IV-174.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경험(연령별)	403
표 IV-175.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경험(배경변인별)	404

표 IV-17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경험(연령별)	405
표 IV-17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경험(배경변인별)	406
표 IV-178.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연령별) ...	408
표 IV-179.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배경변인별)	409
표 IV-18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족도(연령별)	410
표 IV-18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족도(배경변인별)	411
표 IV-18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족도(연령별)	413
표 IV-18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족도(배경변인별)	413
표 IV-184.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연령별)	416
표 IV-185.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배경변인별)	417
표 IV-186.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연령별)	419
표 IV-187.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배경변인별)	419
표 IV-188.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연령별)	421
표 IV-189.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배경변인별)	422
표 IV-190. 본인의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연령별)	424
표 IV-191. 본인의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배경변인별)	424
표 IV-192. 청년 빈곤의 영역별 중요도(연령별)	426
표 IV-193. 청년 빈곤의 영역별 중요도(배경변인별)	427
표 IV-194.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연령별)	429
표 IV-195.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배경변인별)	430
표 IV-196.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연령별)	432
표 IV-197.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배경변인별)	432
표 IV-198.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연령별)	434
표 IV-199.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배경변인별)	435
표 IV-200.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연령별)	436
표 IV-201.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배경변인별)	437
표 IV-202.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연령별)	439

표 IV-203.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배경변인별)	440
표 IV-204.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연령별)	441
표 IV-205.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배경변인별)	442
표 IV-206.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등)에 거주하는 경우(연령별)	444
표 IV-207.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등)에 거주하는 경우(배경변인별)	445
표 IV-208.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연령별)	446
표 IV-209.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배경변인별)	447
표 IV-210.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연령별)	449
표 IV-211.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배경변인별)	449
표 IV-212.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연령별)	451
표 IV-213.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배경변인별)	452
표 IV-214.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연령별)	454
표 IV-215.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배경변인별)	454
표 IV-216.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연령별) ..	456
표 IV-217.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배경변인별)	457
표 IV-218.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연령별)	459
표 IV-219.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배경변인별)	459
표 IV-220.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추세 여부(연령별)	461
표 IV-221.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추세 여부(배경변인별)	462

표 IV-222.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연령별)	464
표 IV-223.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배경변인별)	465
표 IV-224.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연령별)	466
표 IV-225.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배경변인별) ..	467
표 IV-226.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연령별)	469
표 IV-227.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배경변인별) ..	470
표 IV-228.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연령별)	472
표 IV-229.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배경변인별)	472
표 IV-230.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연령별)	475
표 IV-231.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배경변인별)	475
표 IV-232.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연령별)	477
표 IV-233.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배경변인별)	478
표 IV-234.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연령별)	480
표 IV-235.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배경변인별)	480
표 IV-236.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연령별)	482
표 IV-237.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배경변인별)	483
표 IV-238.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연령별)	485
표 IV-239.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배경변인별)	485
표 IV-240.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연령별)	487
표 IV-241.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배경변인별)	488
표 IV-242.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연령별)	490
표 IV-243.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배경변인별)	491
표 IV-244.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연령별)	493
표 IV-245.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배경변인별)	493
표 IV-246.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연령별)	496
표 IV-247.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배경변인별) ..	496
표 IV-248.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연령별)	498
표 IV-249.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배경변인별)	499
표 IV-250.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연령별)	501
표 IV-251.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배경변인별)	502
표 IV-252.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연령별)	504

표 IV-253.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배경변인별)	504
표 V-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510
표 V-2. 청년 빈곤 인식 면담조사 주요내용	511
표 V-3. 심층면담 결과 요약	576
표 VI-1. 청년 경제적 지원 연계 종합서비스 강화 소요예산	583
표 VI-2.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확대 소요예산	585
표 VI-3. 청년 개인 소득·자산 빈곤 지원 제도 개선 소요예산	587
표 VI-4. 청년 경제적 빈곤 지원 대상자 근로조건 완화 소요예산	589
표 VI-5. 취약계층 청년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채무 부담 완화 소요예산	591
표 VI-6.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592
표 VI-7. 청년 취업지원 범정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요예산	593
표 VI-8.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594
표 VI-9.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환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요예산	595
표 VI-10. 청년 노동 빈곤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연구 소요예산	597
표 VI-11. 노동 빈곤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내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확대 소요예산	599
표 VI-12.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 확대	601
표 VI-13.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소요예산	603
표 VI-14.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소요예산	605

그림 목차

그림 Ⅰ-1. 구직급여 신규신청 및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4
그림 Ⅰ-2.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5
그림 Ⅰ-3.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그림 Ⅱ-1. 청년 연령규정	15
그림 Ⅱ-2.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및 누적가입자	33
그림 Ⅱ-3. 청년 비정규직 비중(2013년~2020년)	45
그림 Ⅱ-4. 영국 청년 니트족 비율의 변화	63
그림 Ⅱ-5. 독일의 연령에 따른 빈곤율 현황	72
그림 Ⅲ-1. 청년 이행기의 사회적 위험과 빈곤	112
그림 Ⅲ-2. 상대적 빈곤율(2011~2019)	118
그림 Ⅲ-3. 저임금근로자 비율(2005, 2010, 2015, 2019, 2020)	120
그림 Ⅲ-4. 순자산 빈곤율(2017~2020)	122
그림 Ⅲ-5. 연령별 실업률(2010~2020)	123
그림 Ⅲ-6. 비정규직 비율(2013~2020)	125
그림 Ⅲ-7. 가구특성별 RIR(2017~2019)	126
그림 Ⅲ-8.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2017~2019)	128
그림 Ⅲ-9.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2015~2020)	130
그림 Ⅲ-10.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2016~2020)	131
그림 Ⅲ-11. 과부담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2010~2019)	133
그림 Ⅲ-12.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2012~2020)	134
그림 Ⅲ-13. 청년 니트 비율 변화	137
그림 Ⅲ-14.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2013~2019)	138
그림 Ⅲ-15. 시간 빈곤율(2014)	141
그림 Ⅲ-16.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144

그림 Ⅲ-17. 청년 다차원 빈곤 심층 분석 모형	153
그림 Ⅲ-18.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유형 정보준거지수(AIC, BIC, SABIC)	155
그림 Ⅲ-19.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유형(3개 집단)	156
그림 Ⅲ-20.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유형 모집단 추정 비율	159
그림 Ⅲ-21.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과 전체 연령대 빈곤율 비교 ...	160
그림 Ⅲ-22. 성별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63
그림 Ⅲ-23. 연령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64
그림 Ⅲ-24. 거주지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65
그림 Ⅲ-25. 교육수준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66
그림 Ⅲ-26. 혼인상태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68
그림 Ⅲ-27. 가구유형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69
그림 Ⅲ-28. 삶의 만족도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74
그림 Ⅲ-29. 삶의 사다리 인식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75
그림 Ⅲ-30. 자살 생각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76
그림 Ⅲ-31. 생계급여 수급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78
그림 Ⅲ-32. 의료급여 수급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78
그림 Ⅲ-33. 주거급여 수급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79
그림 Ⅲ-34. 교육급여 수급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80
그림 Ⅲ-35. 고용지원 프로그램(공공근로,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직장 체험연수, 실업자직업훈련) 참여 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82
그림 Ⅲ-36. 고용지원 프로그램(창업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인턴제도, 근로자능력개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183
그림 Ⅳ-1.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	191
그림 Ⅳ-2.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	194
그림 Ⅳ-3. 총 연간소득	197
그림 Ⅳ-4. 총 연간소득 만족도	199
그림 Ⅳ-5.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	201
그림 Ⅳ-6. 연령대별 예측되는 연간소득	204
그림 Ⅳ-7.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205
그림 Ⅳ-8.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207
그림 Ⅳ-9.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209
그림 Ⅳ-10.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	212

그림 IV-11.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 여부	214
그림 IV-12.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여부	217
그림 IV-13.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형태	219
그림 IV-14. 거주 주택 비용 마련 방법	222
그림 IV-15.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	224
그림 IV-16. 본인 명의 자가 마련 희망 여부	227
그림 IV-17. 기대하는 본인 명의 자가 마련 시기	229
그림 IV-18. 본인이 보유한 총 부동산의 가격 변화 예측	232
그림 IV-19. 본인 소유의 자동차 소유 여부	234
그림 IV-20. 자동차 배기량	237
그림 IV-21. 전기자동차 여부	239
그림 IV-22.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희망 여부	241
그림 IV-23. 향후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시기	244
그림 IV-24. 금융상품	246
그림 IV-25. 주식, 채권, 펀드	249
그림 IV-26. 암호화폐	251
그림 IV-27. 기타(빌려준돈, 갯돈 등)	253
그림 IV-28. 금융재산 총합	256
그림 IV-29.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유	259
그림 IV-30.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261
그림 IV-31.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	263
그림 IV-32. 은행 부채	266
그림 IV-33. 2금융권 부채	268
그림 IV-34. 대부업체 부채	270
그림 IV-35. 기타 부채	273
그림 IV-36. 부채 총합	275
그림 IV-37. 부채 발생 이유	278
그림 IV-38. 부채 부담 정도	280
그림 IV-39. 예상하는 부채 완전상환 기간	282
그림 IV-40.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	285
그림 IV-41.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288
그림 IV-42. 주거비	290
그림 IV-43. 교육비(보육료 포함)	293
그림 IV-44. 의료비	295
그림 IV-45. 교통비	297

그림 IV-46. 통신비	300
그림 IV-47. 기타	302
그림 IV-48. 소비 지출 총합	304
그림 IV-49.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인지도	307
그림 IV-50.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인지도	310
그림 IV-51. 청년기본소득 인지도	312
그림 IV-52.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참여 경험	315
그림 IV-53.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참여 경험	317
그림 IV-54. 청년기본소득 참여 경험	319
그림 IV-55.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만족도	322
그림 IV-56.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만족도	324
그림 IV-57.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326
그림 IV-58.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	329
그림 IV-59. 지난주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	331
그림 IV-60. 지난 4주내 구직 여부	334
그림 IV-61. 지난주 직장에서의 지위	336
그림 IV-62. 과거(2018~2021년)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	339
그림 IV-63.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	341
그림 IV-64. 수입 만족도	344
그림 IV-65. 직업안정성 만족도	346
그림 IV-66.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	348
그림 IV-67. 이직 의향	351
그림 IV-68. 이직 희망의 주된 이유	353
그림 IV-69. 취업을 원하는 기관	356
그림 IV-70. 해당 기관의 취업 가능성	358
그림 IV-71.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	361
그림 IV-72.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 개선 여부	364
그림 IV-73. 현재 창업 여부	366
그림 IV-74. 창업 유형	368
그림 IV-75. 창업의 주된 동기	371
그림 IV-76. 창업에 대한 만족도	373
그림 IV-77. 창업 유지 의향 여부	375
그림 IV-78.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이유	378
그림 IV-79. 창업 의향 여부	380
그림 IV-80.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	383

그림 IV-81. 창업하려는 이유	385
그림 IV-82.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	388
그림 IV-83.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	390
그림 IV-84.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인지도	393
그림 IV-85.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지도	396
그림 IV-8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지도	398
그림 IV-87.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험	400
그림 IV-88.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경험	403
그림 IV-8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경험	405
그림 IV-90.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	408
그림 IV-9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족도	410
그림 IV-9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족도	412
그림 IV-93.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	415
그림 IV-94.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	418
그림 IV-95.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	421
그림 IV-96. 본인의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	423
그림 IV-97. 청년 빈곤의 영역별 중요도	426
그림 IV-98.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	429
그림 IV-99.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431
그림 IV-100.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434
그림 IV-101.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436
그림 IV-102.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 근로자인 경우	439
그림 IV-103.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	441
그림 IV-104.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등)에 거주하는 경우	444
그림 IV-105.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	446
그림 IV-106.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	448
그림 IV-107.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451
그림 IV-108.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453

그림 IV-109.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456
그림 IV-110.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458
그림 IV-111.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추세 여부	461
그림 IV-112.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	464
그림 IV-113.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	466
그림 IV-114.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469
그림 IV-115.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471
그림 IV-116.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474
그림 IV-117.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477
그림 IV-118.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479
그림 IV-119.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482
그림 IV-120.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484
그림 IV-121.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487
그림 IV-122.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490
그림 IV-123.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492
그림 IV-124.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495
그림 IV-125.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	498
그림 IV-12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01
그림 IV-127.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503
그림 V-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일(상위소득)	517
그림 V-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식 투자(상위소득)	522
그림 V-3.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상위소득)	530
그림 V-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상위소득)	534
그림 V-5.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상위소득)	537
그림 V-6.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경제적 소득의 적정성(하위소득)	545
그림 V-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부채 경험(하위소득)	548
그림 V-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지방대 청년 취업 가산점 제도(하위소득)	564

그림 V-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취업 경쟁의 공정성 및 기준(하위소득)	566
그림 V-10.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필요한 취업 지원 정책(하위소득)	570
그림 VI-1. 정책 비전 및 분야	581
그림 VI-2.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집단	582
그림 VI-3. 청년 경제적 지원 연계 종합 서비스 강화	583
그림 VI-4.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	584
그림 VI-5. 가구유형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586
그림 VI-6.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실업과 니트(NEET)비율	588
그림 VI-7. 청년 부채 발생 이유	590
그림 VI-8.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	596
그림 VI-9.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598
그림 VI-10. 비정규직 비율(2013~2020)	600
그림 VI-11.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	602
그림 VI-12.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604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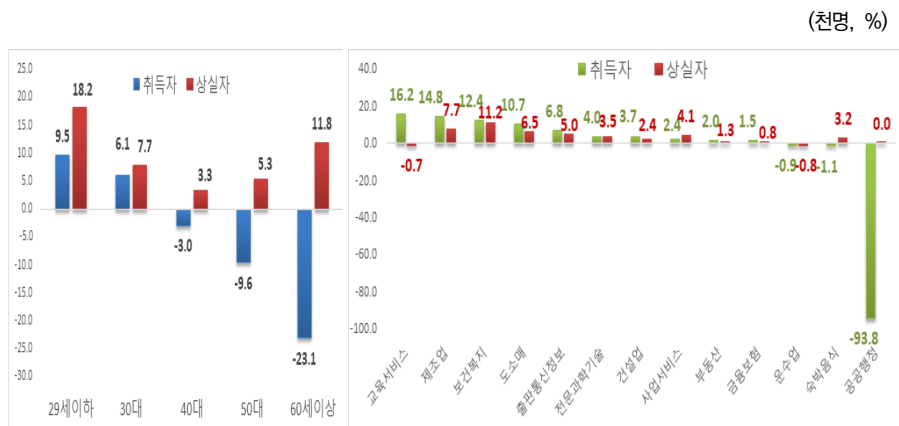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전통적으로 빈곤층은 노인, 아동이었으나, 서구국가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이 새로운 빈곤 위험집단으로 부상하였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청년을 빈곤정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아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청년의 어려움이 고용 측면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청년 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다른 연령대보다 빈곤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최근 수년간 생계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의 다수가 20대-30대였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저성장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이 이전세대와는 달리 자립기반 형성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위치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 구조적으로 강요된 빈곤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전경숙, 송영호, 채창균, 2019).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소득과 자산, 교육 등에서의 격차들이 증첩되고 체계화되어 나타나는 다층적인 격차가 청년 세대에서 집약적이고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누적된 불평등이 체계화된다는 것은 일단 한 영역에서 낙오하게 되면 다른 영역에서조차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전병유, 신진욱, 황규성, 이철승, 이재경, 오선영, 정준호, 정세은, 장지연, 강병익, 2016).

1)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고용충격은 노동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2021년 8월 고용보험 취득자는 5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 감소하였고, 상실자는 52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6천명 증가하였다. 취득자는 교육서비스, 제조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하였으나, 공공행정, 60세이상 등은 크게 감소하였고, 신규취득자, 경력취득자 모두 감소하였는데, 상실자는 29세이하, 60세이상 보건복지, 제조업 등 모든 연령과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21). 이와 같은 동향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한 빈곤가구 청년과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 청년들의 빈곤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 출처: 고용노동부(2021).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 8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3.15. p.3, p.19.

그림 1-1. 구직급여 신규신청 및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8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15~64세 고용률(OECD비교 기준)은 20대, 40대, 50대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하였는데, 이 중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2%로 전년동월대비 2.3%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한가운데 있었던 2020년에 비해 백신접종과 경기 회복 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청년들의 고용과 소득의 심각한 상황을 다소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통계청,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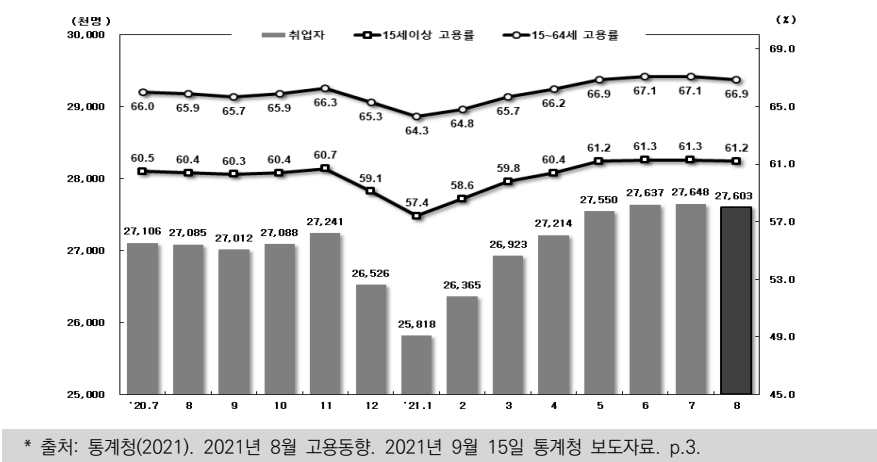


그림 1-2.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유엔개발계획이나 옥스퍼드의 빈곤과 인간개발계획 등을 중심으로 전체 연령대의 보편적 관점에서 다차원 빈곤지수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청년 세대에 초점을 둔 다차원 빈곤 연구는 거의 드문 상황이다. 국제 다차원 빈곤 지수는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빈곤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국제 척도로서, 전통적 소득 기반의 빈곤을 넘어 교육, 건강 및 생활 수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고 부모에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럽방식의 접근과는 다른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청년빈곤 특성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 및 자산불평등, 세대간 불평등 이전 등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빈곤가정의 자녀가 다시 빈곤해지는 빈곤의 악순환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김원정, 류진석, 2019). 청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이며 세대간 이전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빈곤청년은 계층이동 사다리와 공정한 출발선을 마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정책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 빈곤에 관한 연구는 근로빈곤(김태완, 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정희선, 2012), 주거빈곤(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다차원적 빈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등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이들 연구는 2차 자료를 이용한 청년들이 처한 실상의 외현적 빈곤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정책과 연구들은 청년 빈곤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살아가는 청년이 경험하는 빈곤 특성의 변화, 빈곤이행 경로와 위험·보호(예방)요인, 제도적 사각지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청년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고 빈곤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청년기 빈곤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빈곤 실태를 다층적으로 확인하고 빈곤경험 청년의 이질성을 고려해 청년 빈곤의 영역별로 빈곤상태에 놓인 청년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청년기 빈곤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과 빈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와 영향요인을 3년간 연속연구를 통해 누적적으로 파악하고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금년도 1차년도는 연속연구 첫해로서 청년 빈곤의 분류틀 및 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지표별 실태 및 유형 분석, 경제/소득 및 노동 빈곤의 인식과 정책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자립안전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청년 빈곤 실태 및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에 대한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며 연차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2021년)	<table> <tr> <td>목적</td><td>•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조사 및 유형 분석, 빈곤 주요영역(경제/소득, 노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육구 파악 등을 통한 자립안전망 기초 마련</td></tr> <tr> <td>내용</td><td> • 소득(경제), 교육 및 역량, 노동, 주거, 건강, 안정성 등 분류를 및 지표 개발,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청년층 유형 분석(통계청 승인통계 등 공인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경제/소득, 노동)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육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 정책육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td></tr> <tr> <td>방법</td><td>•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td></tr> </table>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조사 및 유형 분석, 빈곤 주요영역(경제/소득, 노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육구 파악 등을 통한 자립안전망 기초 마련	내용	• 소득(경제), 교육 및 역량, 노동, 주거, 건강, 안정성 등 분류를 및 지표 개발,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청년층 유형 분석(통계청 승인통계 등 공인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경제/소득, 노동)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육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 정책육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조사 및 유형 분석, 빈곤 주요영역(경제/소득, 노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육구 파악 등을 통한 자립안전망 기초 마련						
내용	• 소득(경제), 교육 및 역량, 노동, 주거, 건강, 안정성 등 분류를 및 지표 개발,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청년층 유형 분석(통계청 승인통계 등 공인된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경제/소득, 노동)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육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 정책육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2차년도 (2022년)	<table> <tr> <td>목적</td><td>•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조사,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td></tr> <tr> <td>내용</td><td>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생애주기 빈곤이행 경로 및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교육 및 역량, 주거)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육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의 정책육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td></tr> <tr> <td>방법</td><td>•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td></tr> </table>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조사,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내용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생애주기 빈곤이행 경로 및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교육 및 역량, 주거)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육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의 정책육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실태조사, 청년 빈곤의 이행경로 분석,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내용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생애주기 빈곤이행 경로 및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교육 및 역량, 주거)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육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빈곤 주요영역에 따른 청년층의 정책육구에 기반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도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3차년도 (2023년)	<table> <tr> <td>목적</td><td>•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를 파악하고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하여 국가적인 청년 자립안전망 구축 방안 도출</td></tr> <tr> <td>내용</td><td>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취약계층 청년의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건강, 안정성)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육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td></tr> <tr> <td>방법</td><td>•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td></tr> </table>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를 파악하고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하여 국가적인 청년 자립안전망 구축 방안 도출	내용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취약계층 청년의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건강, 안정성)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육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목적	•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를 파악하고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하여 국가적인 청년 자립안전망 구축 방안 도출						
내용	• 다차원적 청년 빈곤 실태,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빈곤 청년층 규모 추정, 취약계층 청년의 빈곤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 • 청년 빈곤 주요영역(건강, 안정성)에 관한 청년층 인식/정책 육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조사 •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제시						
방법	• 문헌연구, 실태조사, 2차 자료 분석, 심층면담조사, 전문가관과의 협동연구						

그림 1 -3.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3. 연구내용

전체 3개년 연구 중 첫째인 1차년도 연구에 해당하는 금년도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빈곤 주요영역에 대한 선행연구,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여기서는 청년 빈곤에 대해 사회적·정책적 개념화, 청년 빈곤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 등 선행연구 고찰, 청년 빈곤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정책 현황 분석, 청년 빈곤에 대한 국회 및 지방의회 최근 입법 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추진 동향 분석 등을 하였다.

둘째, 한국 청년의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2021년 한국 청년의 빈곤 실태를 제시하기 위해 소득, 자산, 주거, 물질적 결핍 등 청년 빈곤에 대한 분류 틀, 핵심지표에 대해 통계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다차원 빈곤집단 유형을 분석하고, 청년 빈곤 실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1차년도 청년 빈곤 중점영역인 경제/소득과 노동에 대한 상황, 인식, 전망 및 정책 욕구에 대한 조사이다. 즉, 청년 빈곤 분류틀에 따라 소득과 노동 영역에 대한 상황, 인식, 미래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청년 빈곤 영역별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청년 빈곤 관련 필요 정책에 대한 정책 욕구 조사, 청년 빈곤에 관한 인식 및 정책 욕구 조사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1차년도 청년 빈곤 중점영역인 경제/소득과 노동에 대한 청년층 심층면담 조사이다. 청년의 삶에 있어서 경제 및 소득,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빈곤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빈곤의 상태, 원인 및 경로, 그리고 빈곤위험성 등에 관한 청년 대상의 심층면담조사를 시행하였고, 심층면담조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정책방향 및 과제 도출이다. 실태 및 설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 비전 및 전략 도출, 자립안전망의 기반 조성 및 추진체계 제시, 세부 정책과제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방법

3개년 중 1차년도인 금년도 연구에서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조사연구, 질적 연구, 전문가 자문, 포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활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으로서 청년 빈곤에 대한 개념화 동향 및 최근 선행연구 고찰, 청년 빈곤에 대한 정책 및 법제도 최근 현황 분석, 해외 주요국의 청년 빈곤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문기관간 협동연구 추진으로서 본 1차년도에는 청년 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청년 빈곤 정책·법제도 분석과 청년 빈곤지표 분석 등을 공동연구하였다.

셋째, 2차 자료 분석으로서 청년 빈곤의 분류틀 및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청년의 소득, 자산, 주거, 물질적 결핍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대상으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통계적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층에 대한 다차원적인 빈곤 집단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넷째, 설문조사로서 만 19세~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법정 연령)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빈곤의 주요영역에 대한 상황, 인식, 전망, 정책 만족도, 정책욕구에 대한 조사 실시하는데, 전국 17개 시·도 대상 지역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표본 수 청년층 4,000명 내외에 대해서 비례유층표본(proportional sampling) 추출로 온라인조사를 시행하였다.

다섯째, 심층면담조사로서 청년 빈곤의 주요영역에 대한 청년층 삶의 깊이 있

는 분석을 위한 것으로서 청년들의 일과 삶을 중심으로 빈곤의 상태와 빈곤에 이르게 된 경로, 위험성 예측을 위해 20명 내외의 빈곤 청년 대상 심층면담조사 실시하였다.

여섯째, 전문가 자문 및 정책포럼으로서 청년 빈곤 동향 및 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조사결과 및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일곱째, 정책연구실무협의회로서 연구의 방향 및 정책적 수요 등에 대한 관련 부처 협의회 개최, 청년 빈곤에 대한 조사결과, 정책방안에 관한 부처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 제2장 청년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고찰

- 1. 청년 빈곤의 개념화 논의
- 2. 청년 빈곤 관련 선행연구 고찰
- 3. 청년 빈곤 정책 및 법제도 동향
- 4. 해외 청년 빈곤 정책 추진 동향

1. 청년 빈곤의 개념화 논의²⁾

청년 빈곤에 대한 개념을 논하기에 앞서 청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 2021b), 혹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자란 젊은 사람(한국어기초사전, 2021)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인으로 가는 과정의 생애 전환기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 연령대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대상을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2020년 초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단,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f).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다른 법령 상의 청년 연령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은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경우 애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였고, 고용정책기본법의 경우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15~29세로 하되 병영이행 시 최대 35세까지로 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34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39세 이하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도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법령들은 각자의

2) 이 절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정책 목표와 수혜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규정을 연령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표 II-1. 청년 관련 법령 상 청년의 범위

법령명	청년 정의	주요 내용	비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15 세 ~ 29세 (15세 ~ 34세)	취업지원 및 공공기관 고용의무	• 동법 시행령 2조 개정 (공공기관에 대해 34세로 확대) 2013.10.30. • 동법 시행령 8조의2 신설 (30 ~ 34세로 지원대상 확대) 2016.09.13.
고용정책 기본법	15세 ~ 29세 (15세 ~ 34세)	청년 고용촉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의를 준용
조세특례 제한법	15세 ~ 29세 (병역이행 시 최 대 35세)	청년고용기업 세액공제	• 동법 시행령 23조4항 개정 (청년 정의 포함) 2010.12.30. • 동법 시행령 23조8항 개정 (동법 27조1항에 따른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 한도 내에서 현재 연령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연령 적용) 2014.02.21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15세 ~ 34세	중소기업 취업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 동법 12조1항 개정 (종전 29세에서 34세로 연령범위 확대) 2017.01.17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 39세	청년 창업	• 동법 시행령 6조의2 신설 (청년 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 2017.05.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39세	청년 창업	• 동법 시행령 5조의4 신설 (청년창업자 범위를 39세까지로 정의) 2015.05.01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p.12 재인용.

그리고 일반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의 범위를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평균 19.6세에서 32.3세 사이를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 비교했을 때 상한-하한 연령 범위가 18세-19세에서 약 11.9세(상한 31.6세, 하한 19.7세), 30세-34세에서 약 13.3세(상한 32.8세, 하한 19.5세)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하한 연령은 낮아지고 상한 연령은 높아져 일반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를 보였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배진우, 2020).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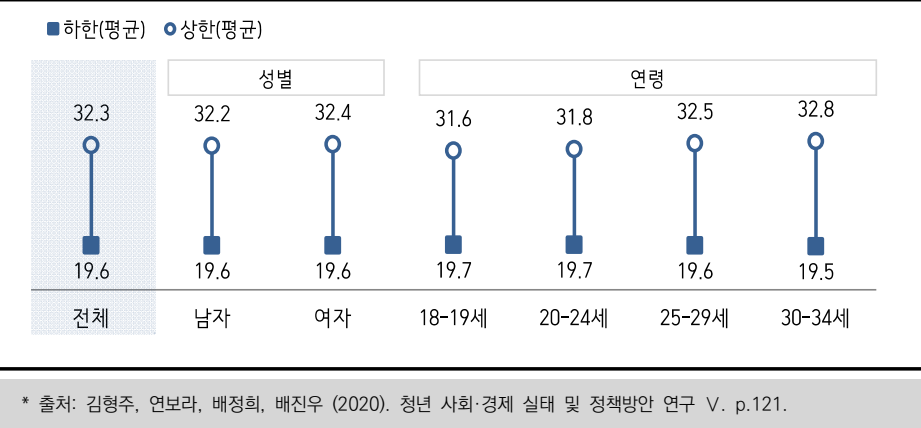


그림 II-1. 청년 연령규정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 등 법령상의 청년 정의와 청년층의 의견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성인으로 가는 생애전환기에 있는 19~34세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빈곤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어학사전에서는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혹은 ‘내용 따위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모자라서 텅 빈’을, 빈곤층은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운 계층 또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21a). 그리고 백과사전 상의 정의는 빈곤을 3가지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할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절대빈곤선

개념을 토대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하며,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삶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하므로,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주관적 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되며, 빈곤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정책, 기회평등대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두산백과사전, 2021).

장세훈(2006)은 빈곤에 대한 정의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하며, 이때 결핍되거나 부족한 자원은 빈곤화의 요인이 되며 빈곤층은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채 생계유지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청년 빈곤의 개념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앞서 장세훈(2006)의 정의를 빌려오자면 청년 빈곤이란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도 청년 빈곤은 일반적인 빈곤과 다른 개념인가 혹은 일반 성인의 빈곤과 다른 의미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이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이고 관습적인 정착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청년 빈곤을 일반적인 빈곤과 달리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지배적인 접근은 ‘일자리와 고용’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왔는데,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청년은 복지의 대상이 아니며 청년 빈곤 또한 독립적 성인으로서의 이행기에 발생하는 일시적 빈곤일 뿐이고, 실제로 청년기의 빈곤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독립하면서 잠시 나타났다가 감소 혹은 사라지는 일시적 빈곤의 특징을 보인다는 시각이다(김태완, 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정희선, 2012). 최상미, 유효은, 김한성(2019)은 청년 빈곤의 양태에 대하여 지금의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고용 없는 성장, 불안정한 노동시장, 비전형 노동의 확대로 최종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장이나 직업으로 연결되던 과거와는 다르다고 지적하며, 일자리의 수,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현재의 청년들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차원적인 어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안나, 홍현우(2018)는 청년 빈곤 개념과 관련하여 기존 학계의 연구는 청년의 빈곤현상에 대한 연구와 청년의 취약한 노동시장에서의 실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년층을 노동시장에 첫 발을 디디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간주하며 필요에 따라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공적 지원대상이라는 관점 하에 청년 문제가 청년고용의 문제만이 아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초기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채, 주거, 실업문제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부터 발생한 어려운 상황이란 시각이라 점을 강조하였다.

청년 빈곤을 불안정 노동으로 생애주기와 맞물리면서 청년 세대에 경제적 곤란의 폐해가 집중되는 것을 청년 빈곤의 구조로 규정하기도 한다(박권일, 2009). 이는 청년 문제를 IMF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노동 유연화,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등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급격한 변화의 산물로 보았으며, 이러한 흐름이 청년이란 특정 세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우석훈, 박권일, 2007).

청년 빈곤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청년 문제를 보는 최근 연구의 경향이

기도 한데, 청년 빈곤을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등으로 구분하여 단순히 경제적 곤란만을 빈곤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이 겪는 삶의 전반의 주제에 대하여 영역을 구분하고 이를 빈곤 지수로 산출하여 청년 빈곤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또한 전경숙, 송영호, 채창균(2019)은 청년 빈곤을 주거빈곤, 일자리 빈곤, 경제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청년세대는 주거비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여 주거빈곤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은 주거사다리를 붕괴시키며 이는 가구 형성을 지연시키거나 부모 부담이 연장되는 등 이행기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으로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의 영향으로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인 청년층에게 일자리 곤란을 발생하게 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며 이후 생애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혼과 출산과 같은 생애사건들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더불어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학자금 대출 등 과거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빈곤과 관련된 다차원적인 삶의 주제 중에서 사회적 배제란 키워드로 청년 빈곤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배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무엇으로 배제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경제적 자원의 배제, 제도로부터의 배제, 문화적 기회의 배제, 사회적 관계의 배제 등을 포함하며, 청년층 중에는 빈곤 가구, 한부모가구 등이 공공교육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사회제도로부터 낙오되기도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차지 못하거나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겪게 되는데 사회보험제도는 대부분 취업 상태,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 지위와 연계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하거나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층은 공공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이성균, 2009).

청년 빈곤을 직접적으로 정의한 경우도 있는데, 후지타 다카노리는 청년 세대를 빈곤세대라고 칭하면서, 빈곤세대란 ‘가동 연령층인 청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세대로, 평생 동안 빈곤상태로 지내야 할 숙명에 처한 사람들’ 즉, ‘평생 동안 빈곤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 청년들’을 가리키는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략 10대부터 30대(15~39세)까지의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태가 보편화·일반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성세대들에게는 복지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성인기 이행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결핍상태로만 여겨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대로 설명하고 있다(후지타 다카노리, 2016). 이러한 빈곤세대에 대한 정의는 일본 사회의 청년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청년 문제들 즉, 청년 노동자를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블랙기업이나 블랙아르바이트의 문제, 학자금 대출의 증가와 이의 상황 부담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회 정착의 어려움, 그리고 높은 주거비로 인한 불안정한 주거 등으로 사회 진출 이후 평생에 걸쳐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는 현상은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청년 실업률 증가와 열정페이 노동문제, 학자금 용자와 악성대출의 증가, 주택가격 급등에 의한 주거마련 기회 박탈 등 우리 청년들에게도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적인 빈곤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와 최근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한 청년 빈곤에 대한 연구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공통점은 많은 연구들이 청년 빈곤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거나 그 원인을 분석하는 접근들을 하고는 있으나 정작 청년 빈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에서 청년 빈곤의 정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의아하긴 하지만 이를 통해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 일단 청년빈곤을 청년세대의 최근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보기 보다는 기존 전통적인 빈곤 연구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이는 굳이 청년 빈곤을 별도로 정의를 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청년 빈곤을 기존 빈곤과 달리 특별히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일 것이다. 즉, 통시적 시각에서 보자면 그 이전과 달리 청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가 특별히 변해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변화를 규정하는 가정 자체가 또 다른 연구주제에 해당할 만큼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첫째는 청년 빈곤 실태에 대한 연구를 일반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다루는 것인지 혹은 이미 빈곤한 청년으로 규정된 층을 다룰 것인지 등 연구대상의 범위에 대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년들의 빈곤 문제, 즉, 일시적인 결핍이 아니라 평생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라는 시각에서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둘째는 청년 빈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인데,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을 경제적 곤란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을 탈피하여 청년의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청년 빈곤의 개념을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청년 빈곤 관련 선행연구 고찰³⁾

1) 청년 빈곤의 다차원성 논의

청년 빈곤 실태를 다루기에 앞서서 청년 빈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빈곤은 학문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로서, 청년 빈곤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바로 청년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갖기 때문이다(김윤태, 서재욱, 2015).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을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청년 빈곤을

3) 이 절은 연보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청년의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기실 기존 빈곤의 측정은 주로 소득에 따른 화폐적 방법(monetary)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빈곤을 단순화함으로써 빈곤의 규모를 비교하는 데에 이점을 지니지만 가구의 경제적 자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닌다(이현주, 정은희, 2014). 또, 청년 빈곤이 단순히 경제적 영역뿐만이 아닌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청년 빈곤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빈곤을 비화폐적 범주까지 확대하여 규명하고 있다.

청년 빈곤의 다차원성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소득) 빈곤뿐 아니라 고용(근로) 빈곤(김태완, 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정희선, 2012; 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변금선, 2012; 서종녀, 2016; 최상미, 2019), 주거 빈곤(김비오, 2019; 박애리, 심미승, 박지현, 2017;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최병숙, 최은영, 권지웅, 천현숙, 2013) 등 여러 일상 생활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박탈이나 박탈의 위험을 통해 빈곤을 파악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는 모습이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김태완, 최준영, 2017; 유지영, 2019; 이순미, 2018; 이주미, 김태완, 2016). 여성 청년이나 지방 중소도시 청년 등 특정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규명하고, 청년 대상 다차원 빈곤 지수를 개발한 연구는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2017)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다차원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은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한 입체적 접근으로서 Alkire와 Foster(2011)는 Sen(1992)의 ‘실현능력접근(Capabilities Approach)’을 활용하여 다차원적 빈곤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탐색하였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

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재인용). Sen의 실현능력접근에서 빈곤은 복지의 결핍으로 볼 수 있으며, 삶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상태와 행위를 선택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서 '최저 수준의 기본적 실현능력의 결핍(failure of basic capabilities)'으로 이해된다(서병수, 2007). 이때, 실현능력은 화폐적 요소뿐 아니라 비화폐적 요소를 포함하는 세트(capabilities set)로 규정될 수 있다(Nussbaum, 2000,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재인용).

대표적으로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2017)의 연구에서는 Alkire와 Foster(2011) 연구를 토대로 다차원 빈곤지수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와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청년 다차원 빈곤을 구성하는 영역으로 경제력, 주거, 건강, 고용, 사회문화적 자본, 안정성 등 6개를 선정하고 총 19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론적 근거와 규범적 판단에 따라 빈곤의 차원별 지표에 대한 빈곤선(cut-off)을 설정하였고,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청년들의 다차원 빈곤율을 산출하였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이순미(2018)는 지방 중소도시 청년들의 삶의 실태를 다차원적 빈곤으로 접근하였는데, 소득, 주거, 건강, 고용·노동, 사회적 관계·활동, 시간 빈곤 등 6개 차원의 11개 지표로 빈곤 차원 지표를 설정하였다. 유지영(2019)의 연구에서는 빈곤을 여성 청년으로 하여금 삶의 기본적인 가치 있는 상태와 행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가능성의 실패로 규정하고, 소득 빈곤과 함께 주거, 근로, 건강 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결핍을 주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년 빈곤은 다차원성을 지니고 있으며, 김윤태, 서재욱(2015)의 주장과 같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다층적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청년 빈곤의 실질적 생활 양상을 반영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공통으로 경제(소득), 고용(근로), 주거 영역을 청년 빈곤의 주요 차원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다차원적

빈곤 방법론을 적용한 입체적 결과가 가독성이 낮고, 이에 정책 활용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차원 지표의 결과를 가중치를 두어 단일 지수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들은 각 차원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원의 빈곤이 상대적으로 심각한지에 대한 정보를 잃게 되는 한계점을 지닌다(남수정, 2018). 즉, 어떤 집단이 어느 차원에서 얼마나 빈곤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다차원적 접근의 강점이며(이현주, 정은희,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빈곤의 다차원 분석의 기존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

2)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 고용(근로), 주거 등의 주요 영역에서 청년 빈곤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경제적 빈곤에 대하여 가처분소득 기준이 많이 활용되는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을 분석한 결과 청년 빈곤율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 빈곤율이나 노인 빈곤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다만,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다른 청년 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높았고,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년들이 동거하는 경우보다 빈곤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또, 경제적 영역으로서 전체가구의 자산 평균 대비 청년 가구(부모 동거 가구 제외)의 자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부부 및 청년 부부와 자녀가구는 전체가구의 자산 평균의 50-70% 수준, 청년 단독가구 자산은 40% 수준에 불과하였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김수정(2020)은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청년 빈곤을 살펴보았는데, LIS(Luxembourg Income Study) 자료와 가계동향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구 8개국 모두 30년 전보다 노인 빈곤율은 감소 청년 빈곤율을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우 청년 빈곤율의 뚜렷한 증가세를 찾기 어려웠는데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수치로서 전기 청년층은 9~10%, 후기 청년층은 6~8% 수준의 빈곤율을 보였다(김수정, 2020). 하지만 현재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과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청년이 빈곤 위험집단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8). 또, 현재 단독가구인 청년들의 빈곤율은 매우 높는데, 한국의 경우 경제적 이유 등으로 독립을 연기하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층 비율이 높아서 경제적 빈곤의 상당수가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년 빈곤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근로와 비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이 독자적 가구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 빈곤의 특징을 나타낸다면, 독립한 청년가구의 빈곤은 무직이나 저임금 상황에 놓인 근로 빈곤의 특징을 보인다(김수정, 2010). 청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 배제는 청년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핵심으로 여겨지기도 한다(Fahmy, 2002, 변금선, 2012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2017)의 연구에서는 빈곤의 주요 차원으로서 고용을 선정하고 실업, 근로지속가능성, 근로시간형태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청년 빈곤율을 살펴보았다. 2015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비교했을 때, 실업, 근로지속가능성, 근로시간형태 모두 청년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높은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실업을 제외하고 노인의 빈곤율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김태완, 최준영(2017)의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 빈곤(실업)과 불안정 고용을 비교하였는데, 청년

근로 빈곤(실업)율이 중·고령층보다 다소 낮은 양상을 보이지만, 패널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 빈곤(실업)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 중·고령층의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청년층의 불안정 노동시장 참여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이다(김태완, 최준영, 2017). 근래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면서 특히, 청년 취업자가 급감하고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근로 빈곤도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년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은데, 이는 청년의 주거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실태와도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 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9.4%로 일반 가구(5.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면적, 시설, 침실 등 모든 기준에서 일반가구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강미나, 김혜승, 김근용, 이수옥,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전성제, 조윤지, 우민아, 이진우, 권건우,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거 빈곤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주거비 부담,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정의할 수 있는데(임세희, 2010), 특히, 청년 주거 빈곤은 결혼, 출산 등 가구 형성을 지연시키거나 켄거루족과 같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야기시키고(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이러한 빈곤이 장년기와 노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지닌다(김비오, 2019).

이태진, 우선희, 최준영(2017)은 청년 주거 빈곤을 크게 경제적 측면의 주거 빈곤(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과 물리적 측면의 주거 빈곤(최저주거기준)으로 규정하였는데, (소득)빈곤 여부와 주거 빈곤율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 1인 가구나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2017)에서는 주거 영역에서 주거비 부담과 최저주거기준과 함께 물리적 측면에서 주거 설비, 주거 시설을 포함하여 주거 빈곤을 측정하였다. 지표별 빈곤율 분석 결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20.8%)과 최저주거기준(2.3%), 주거시설(1.9%)

은 전체 평균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주거 설비(10.1%)는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양상을 나타냈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다음으로 건강 영역에서는 청년 빈곤을 만성 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비 부담 정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질환(6개월 이상 투병, 투약 질병 여부 등)(8.0%)이나 주관적 건강상태(2.2%), 의료비 부담(7.4%) 빈곤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우울(6.7%)은 높게 나타나 청년들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지영(2019)의 연구에서는 여성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결핍을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안 좋다고 응답하거나 근로무능력의 사유가 중증장애, 질병, 부상 등인 경우로 보았는데, 여성청년의 10.4%가 건강 결핍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사회적 관계나 문화적 영역에서 빈곤에 대한 논의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부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빈곤(2.6%)은 중장년과 같은 빈곤율로 노인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만족도 빈곤(12.9%)과 문화비 지출 빈곤(17.0%)은 중장년과 노인보다 낮은 빈곤율을 나타냈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이순미(2018)의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관계·활동 빈곤율이 74.1%로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사회참여 결핍(63.8%)과 문화 및 관계적 여가 활동의 결핍(38.4%), 지지망 빈곤(1.3%) 정도를 확인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공적연금(1.3%), 고용보험(20.9%), 물질적 박탈(6.4%) 등의 안정성 영역에서도 청년 빈곤율이 중장년과 노인보다 높은 경향을 지녔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2017)는

전술한 다양한 차원 영역의 청년 빈곤 지표들을 종합하여 다차원 빈곤율을 산출하였는데, 2015년 19~34세 청년(경제활동인구)의 다차원 빈곤율 11.6%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3.8%보다 높았고, 이는 전체인구 다차원 빈곤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초기 청년(19~24세)과 청년 단독가구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 고용, 주거, 건강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청년 빈곤 실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기실 청년 다차원 빈곤은 영역 간의 연쇄적, 중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여성 청년 대상의 다차원 빈곤에 관한 연구에서 근로와 주거 결핍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소득 결핍과 주거 결핍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유지영, 2019). 일부 선행연구에서 청년 다차원 빈곤 지수 개발의 노력도 있었는데, 이는 지수 중심의 결과로서 빈곤의 다차원 영역별 결과와 해석이 손실되는 단선적인 이해의 한계점을 지닌다. 이에 청년 개인 중심의 다차원 빈곤 유형에 대한 분류와 집단별 특성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접근에서 빈곤 집단을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남수정, 2018; 이현주, 정은희, 2014)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차원 빈곤 유형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청년 다차원 빈곤의 입체적 지형을 밝히고, 시기별 분석을 통해 청년 빈곤의 지형 변화와 유형별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 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3. 청년 빈곤 정책 및 법제도 동향⁴⁾

1) 청년 빈곤 정책·사업 동향 및 시사점

(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햇살론 유스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와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표 II-2>에서 보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의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통해 적립된 자산으로 인해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저축의무와 보장기관의 지원금 적립, 중도해지의 사유를 시행령으로 제시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표 II-2. 자산형성지원제도 법적 근거

구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4 (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이 절은 정세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구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 여건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21조의3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을 하여야 한다. 1.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2.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3.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④ 보장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저축을 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증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기업 등에 채용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창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⑥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채무 관리,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재무설계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은 지원대상자가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3항 각 호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6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⑧ 보장기관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가구의 사업소득, 근로 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위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s://www.law.go.kr/ LSW/ lsInfoP.do?efYd=20200604&lsiSeq=211961#0000>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293#0000>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c).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31&lsiSeq=228323#0000>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현재 저소득층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제도는 ①희망키움통장 I(생계, 의료수급가구, 2010년 도입), ②희망키움통장 II(주거, 교육수급가구, 차상위계층, 2014년 도입), ③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2013년 도입), ④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2018년 도입), ⑤청년저축계좌(주거, 교육수급가구, 차상위계층, 2020년 도입)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통장별로 일부 상이하나 일하는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형성된 자산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하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에 대해서는 사용용도를 증빙하도록 되어있다(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a, p.7).

표 II-3.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

구분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도입	2010년	2014년	2013년	2018년	2020년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15~39세)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청년(만15세~39세)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 청년: 15세 ~39세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35만원 - 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695만원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원 - 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	본인 저축액 월 5, 10, 20만원, 정부 지원금 (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 단 20만원 저축액의 경우 1:0.5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 별 1:1, 1:0.5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	- 본인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청년소득비례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교육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2021a). 2021년 자활사업안내 II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참고로 <표 II-4>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다. 2021년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4,876,290원이며,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827,831원이며,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생계급여수급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II-4.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5,757,373	7,497,198
생계 급여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 급여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 급여	822,524	1,389,636	1,792,778	1,792,778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 급여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출처: 보건복지부(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0년 신설된 청년저축계좌를 제외한 네 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누적 참여자는 약 16만 명에 달한다(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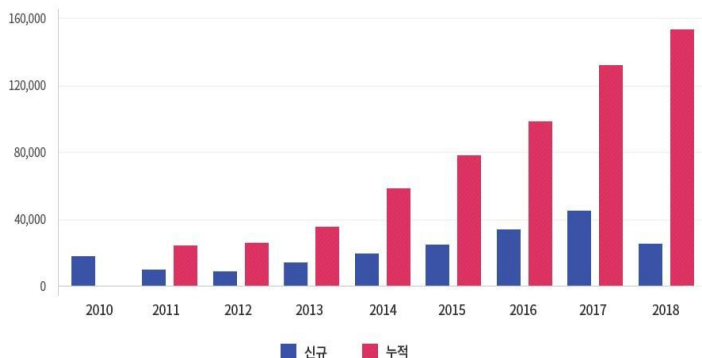


그림 II-2.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
신규 및 누적가입자

*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b). <https://www.kdissw.or.kr/menu.es?mid=a10208010000>에서
2021년 5월 24일 검색.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진입, 사업내용, 유지와 지급조건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진입의 경우, 대상 자격 판단이 쉽지 않아 수요자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희망키움통장 I 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자를 지원하지만 별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존재하여, 개인이 수급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희망키움통장II와 청년저축계좌는 소득기준은 같지만 전자는 개인 월 저축액 10만원에 정부가 10만원을 1:1 매칭 지원한다면, 후자는 동금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을 매칭 지원하고 있어 같은 금액에 대한 매칭 지원금이 상이한 상황이다. 유지와 지급조건에 있어서는 탈수급을 전제로 하거나, 희망키움통장II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중도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a, p.39).

이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청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를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현재의 통장사업을 목표-대상을 일치시켜, 가칭, 희망저축계좌 I, II 2개로 통합하며, ①청년의 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통장 유지 조건 완화, ②청년 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③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며(관계부처합동, 2020a), 개편된 제도의 골격은 8월 26일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에서 드러났다(국무조정실, 2021).

청년특별대책(국무조정실, 2021)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는 정부가 월 저축액의 1~3배를 매칭하여 3년 후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3600만 원 이하에는 최대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는 펀드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된다.

이러한 개편은 자산형성제도가 포괄하는 대상범위의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중도해지와 지급요건 등 향후 발표될 세부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 II-5. 2021.8.26. 청년특별대책의 자산형성지원제도 주요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혜택	납입한도	만기수령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축액(월 10만 원) 정부가 1~3배 매칭	연 120만 원 (3년만기)	(3년 후) 720~1,440만 원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저축장려금 최대 4% (1년2%→2년4%) 지급	연 600만 원 (2년 만기)	(2년 후) 1,200만 원 + 시중금리+ 저축장려금 36만 원 수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600만 원 (3~5년)	(3년 후) 1,800만 원 + 펀드수익 + 3년간 소득공제 최대 720만 원

* 출처: 국무조정실(2021). 청년세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 대책 87개 과제 필요. 2021년 8월 26일 보도자료.

청년층 자산형성제도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발표된 개편안을 기반으로 검토할 때, 중도해지 조건에 있어 이행기라는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 중도해지를 일정 기간 유예함으로써 제도가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나 가족구성단계로의 진입을 지체하지 않도록 설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견되는 청년층(10~30대)의 탈수급을 저하 추세(2017년 4.3%에서 2019년 2.3%)는(관계부처합동, 2020b), 청년빈곤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에 내재된 중도탈락이나 탈수급과 같은 조건들이 청년기의 핵심 과업인 이행과 사회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급 요건의 경우, 청년기 특성에 맞춘 다양한 성과(예: 자격증 취득, 상위 교육기관 진학, 계획한 경험달성)를 고려한 종합성과지표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이 쌓이고, 목적이 분명할 경우에는, 중도대출이나 일부 중도 출금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를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중도 대출과 중도 출금의 목적은 이행기임을 고려하여,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여행, 교육훈련과 같은 자기탐색이 인정될 경우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볼 수 있다.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의 취업준비생(대학(원)생, 미취업)과 중소기업 재직1년 이하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3.6~4.5%의 저금리로 최대 1천2백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우선, 2021년 하반기까지 기존 2,330억 원에서 3,330억 원으로 공급규모가 확대되었으며(국무조정실, 2021), 코로나19와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이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저소득 청년 한부모(25-34세)에 대한 월 5만원~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청년특별대책(국무조정실, 2021)에는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아동양육비 지급기간을 8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무조정실, 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을,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월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이전까지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제공하던 것(여성가족부, 2020, p.137)을 연령과 급여액 차원에서 확대한 것이다. 또한, 2021년에는 이전과 달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월 10만원)뿐 아니라 추가아동양육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여성가족부, 2021, p.159, p.163) 생계급여 대상자의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의 병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이 이뤄졌다.

저소득 한부모에게 추가 지급되는 양육비 금액은 계측된 최저생계비와 한부모 가구가 표준가구보다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계측하고, 이를 참고하여 결정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매 3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급여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급여적정성의 평가는 전물량방식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최저생계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소도시에 사는 4인 표준가구를 상정하여 이뤄지며, 노인, 한부모, 장애인에 대해서는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출을 보전하기 위하

여 추가비용을 계측한다.

저소득 청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추가지원 및 생계급여와의 병급인정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낮춰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정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저소득 청년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주거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조명받는 반면, 청년주거정책은 청년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신혼부부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또, 공공임대주택 진입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 이주비용지원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거비 완화와 주거 여건 개선, 취약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이 청년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김준형, 2020).

이에,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고시원과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적극적 주거지원 공급 계획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32만원)에서 70%수준인 185만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포함한 이주비용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한, 8월 발표된 청년특별대책(국무조정실, 2021)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특별지원의 한시 신설,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45% → 65%), 분리지급 연령기준 합리화(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의 변경), 월세대출 소득 기준 상향 및 무이자대출 신설, 청년주택 공급(22년

5만 4천호, 21년~25년 총 24만 3천호) 등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계획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영구임대주택,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고 소득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중앙SUNDAY, 2020.5.16.).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공공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임대주택을 일컬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통합은 다음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주택이 추가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셜믹스를 겨냥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의도가 현실가능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청년주거문제의 정책대안은 청년층 내의 다양성과 전체 인구집단에서의 우선순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청년층 내의 다양성 문제는 연령, 지역, 계층의 문제를 포함한다. 일례로 김준형(2020)은 청년주거정책은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테면, 월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료 부담과 자가주택 구입 능력에 차이가 있고 자산기준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자가주택 구입 가능 가구 비중이 높으므로, 각기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과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는 제언을 도출하였다.

사실상 주거 문제는 청년층만이 직면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생애주기상 노동시장 또는 가족구성과 같은 다음 과업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택공급의 우선순위에 있어 상대적 정당성을 청년이 일부 확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이 자산불평등을 낳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거 문제는 청년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거주 관점에서 보면, 공공주택 입주 물량이 한정된 상황

하에서는 여전히,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라던가, 장애인 가구 등과의 우선순위에서 청년이 먼저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집단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4) 저소득층 청년 대학등록금 지원

대학등록금에 대한 지원은 2012년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을 근거로 기존 저소득층 대상의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II유형으로 통합하면서 소득연계형 장학금제도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I 유형은 소득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최대450만원 내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II유형은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자율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설계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실상,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OECD 국가 중 국공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미국, 칠레, 일본, 캐나다, 호주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고, 사립대는 미국, 영국, 호주, 칠레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이러한 가운데,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은 국기초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80만원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으며,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학자금 저금리 대출 및 상환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상으로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근로장학금 수혜율은 2020년 기준 17.7%에서 2025년 20%로 2.3%p를 상향된다. 이는 국기초와 차상위계층 청년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년특별대책(국무조정실, 2021)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또한 최대 3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국기초와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은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발표한대로 지원한도가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국무조정실, 2021)

(5)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청년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확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8,000명에게 제공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는 2021년 15,000명으로 확대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확대여부를 결정한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국기초,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원(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게 1인당 35만원의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현재 청년의 교육/훈련, 더 나아가 노동문제와 연결해본다면, 고졸 청년과 실업 문제를 고려하여, 지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실업 조건 부과 등을 통해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 대한 청년특례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선정자의 49.7%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1,178개 중 566개(4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김기태, 김태완, 정세정, 이주미, 허대원, 2020),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수에 비례한 분포라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훈련 인프라 자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지자체 청년들의 낮은 교육훈련 접근성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 지방의 교육훈련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6) 기초·차상위계층 청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제1차 청년정책시행계획 및 청년특별대책(국무조정실, 2021)은 국기초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연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법적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4를 두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는 문화소외계층을 수급권자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을 포함하며, 그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문화누리카드는 2006년 3만원 상당에서 2007~2010년 5만원, 2017년 6만원, 2018년 7만원, 2019년 8만원, 2020년 9만원, 2021년 10만원으로 점진적 상향이 이뤄져 왔으며, 문화와 관광, 체육 영역의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도서, 음악, 영화, 공연 및 철도, 이동 관련 등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한국 문화예술위원회, 2021). 예산과 지급규모를 살펴보면,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2020년 1,033억 원(1인당 9만원)에서 2021년 1,261억 원(1인당 10만원)으로 228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원대상은 2020년 171만 명에서 2021년 177만 명으로 6만 명을 확대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0).

문화누리카드는 이용 분야와 가맹점 확대, 및 평생교육 바우처와 같이 지자체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TBS뉴스, 2019.9.20.) 이슈가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선결이 저소득 청년의 문화누리카드 지원 정책의 실효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6. 문화누리카드 지급의 법적 근거

구분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30.〉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d). 문화예술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o.do?efYd=20201222&lsiSeq=224589#0000>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표 II-7. 문화누리카드 지급의 법적 근거

구분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구분	내용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e).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5&lsiSeq=227075#0000>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7) 청년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그간의 청년정책이 일자리 중심이었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청년 고용 문제는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청년 빈곤에 대응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다른 영역보다 개입해야 할 대상이 다양하다. 이를테면, 학력의 차원에서 노동시장에서 취약성을 갖는 청년, 구직 단계, 취·창업 상태, 실직 상태에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청년은 각기 다른 조건의 불리함을 가지며, 서로 다른 해결방안을 요구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와 청년 노동권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추진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지속 확대하는 것, 근로여건 열악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었다(관계부처합동, 2020a).

가장 최근 발표된 청년특별대책(국무조정실, 2021)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민·관협력, 기업고용 인센티브 강화, 구직·취업·창업 등 단계별 정책 확대, 공공과 민간부문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과제를 포함했다(국무조정실, 2021). 이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연(年) 최대 960만 원, 14만 명)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지원 사업을 연장하여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고, 고용증대 세액공제(청년고용 1인당 500~1300만 원 공제)와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여 기업의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2021)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21). 더불어,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인원을 15만에서 17만 명으로 2만 명을 확대한다는 것과,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구직청년의 취업역량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8. 2021. 8. 26 청년특별대책의 고용 정책 주요 내용

(단위: 만원)

구분	내용
청년고용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1인당 年 960만원 인건비 지원 - 고용증대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시 일정금액 세액공제(3년간, 24년 12월 31일까지)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인당 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100% 공제(2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5년간 약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 중기재직자 임차보증금 대출 : 한도 1억원, 금리 연 1.2%(고정) - 산단 중기재직자 교통비 지원 : 월 5만원(年 60만원) - 내일채움공제 성과보상기금(기업기여금) 소득세 감면(중소 90%, 중견 50% 감면) -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근로소득세 90% 감면(5년간)
구직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 청년도전지원 사업 : 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인센티브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 취업 성공시 150만원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교육비 지원 (대기업, 공무원, 사립교원 등 제외, 모든국민 대상) - K-디지털 트레이닝 : 디지털 분야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22년 2.9만명) - 일경험 프로그램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만명)

구분	내용
창업청년	-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 : 1억 원, 선배 창업가 멘토링, 세무·회계 교육 - 테크스타 보증 지원 :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 5억 원까지 0.3% 고정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 청년 다시-Dream 프로그램 : 재창업자 전용 사업화자금(6천만 원), 멘토링

* 출처: 국무조정실 (2021). 청년세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필요. 2021년 8월 26일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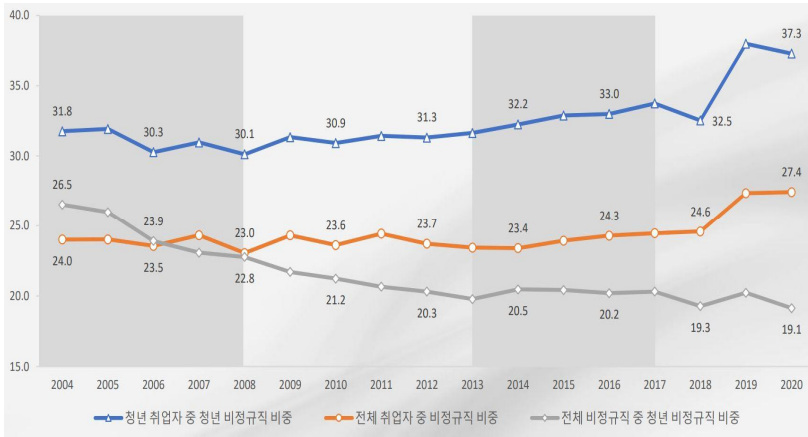


그림 II-3. 청년 비정규직 비중(2013년~2020년)

* 출처: 김유빈(2021).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방향. 2021 인구정책토론회 자료집. p.11.

한편, 2018년 32.5%였던 청년 비정규직 비중은 2019년 38%, 2020년 37.3%로 증가했으며(김유빈, 2021). 광역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는 17개 광역지자체 중 8개 지역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을, 17개 중 3개 지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국무조정실, 2021)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

제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임금격차 등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대한 중앙과 지자체의 적극적 대책 마련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

2) 청년 빈곤 법제도 동향

청년 빈곤을 다루는 법제도는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과 같이 청년을 포괄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청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정된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그리고 17개 광역 지자체의 청년조례에 국한하여 청년 빈곤 법제도 동향을 살펴본다.

먼저 지난해 제정(2020.2.4.), 시행(2020.8.5.)된 청년기본법은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인 이념형, 정책형, 대책형, 개혁추진형 중 이념형과 정책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없던 청년정책 영역에서 「청년기본법」은 지도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념과 원칙을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또 법의 제정배경을 감안할 때 이념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념과 원칙 외에도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정책형으로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제6조를 됴으로써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청년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청년과 관계된 다른 법률(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9. 기본법의 성격별 유형

구분	내용
이념형 (선언형)	- 제도·정책에 관한 기본·이념·원칙을 정하는 것 - 해당 분야의 지도법으로서 기본적인 이념·원칙 등을 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시
정책형	- 각 행정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제도의 목표·방향·대강 등을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정부에 대하여 시책의 추진을 촉구
대책형	- 일정한 행정상의 대책의 기본을 정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복지향상,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도모
개혁 추진형	- 특정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형식을 사용한 것으로서 개혁의 기본이념·기본방침을 명시하고 스스로 그 개혁의 프로그램을 정하거나 개혁추진을 위한 계획을 규정

* 출처: 김기태, 김태완, 정세정, 이주미, 허대원 (2020).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35.에서 재인용하여 재구성함. 원출처: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119~120.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빈곤과 관계된 내용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언급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8조는 청년 빈곤에 대한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취약 청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도 취약한 청년에 대한 정책은 기본법상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정세정, 최권호, 최보라, 2021). 따라서, 향후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는 표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영역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 등에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의 기본 틀에서 구분하는 정책 영역을 적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역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청년은 청년 조례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참고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 및 직업 지도 등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의 ①에서는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③에서 취업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됨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는 취업애로 청년은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이 해당된다.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계획은 제1장 총칙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의 6에서 국가는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 광역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는 2015년 서울을 필두로 2018년 인천을 마지막으로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제정되었다.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제정 당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전라남도는 2017년 6월 20일, 경상남도는 2019년 9월 26일 각각 청년 기본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다.

표 II-10. 17개 광역지자체의 청년 조례

구분	조례명	제정	시행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2015. 1. 2	2015. 1.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17. 5. 31.	2017. 5. 3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15.12. 30.	2015. 12. 3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18. 2. 26.	2018. 2. 2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2015. 12. 28.	2015. 12. 2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2016. 10. 20.	2016. 10. 20.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2017. 4. 27.	2017. 4. 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2016. 12. 20.	2016. 12. 20.
경기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2015. 8. 13.	2016. 1. 1.
강원도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2017. 11. 3.	2017. 11. 3..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2016. 5. 24.	2016. 5. 24.
충청남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2016. 2. 22.	2016. 2. 22.
전라북도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2017. 4. 14.	2017. 4. 14.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2015. 7. 23.	2015. 7. 23.
경상북도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2017. 12. 28.	2017. 12. 28.
경상남도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2016. 6. 9.	2016.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2016. 6. 22.	2016. 9. 23.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1h).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8월 27일 각 광역지자체별 청년 조례를 검색했으며, 광역지자체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일은 아래로부터 확인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625565&chrClsCd=010202&gubun=KLAW&nwYn=N&onDatGubunCd=undefined>.

[부산광역시]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88416&chrClsCd=010202&gubun=ELISnwYn=N&onDatGubunCd=undefined>.

[대구광역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08930&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인천광역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40632&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광주광역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09072&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0>.

[대전광역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59379&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0>.

[울산광역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87125&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68337&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0>.

[경기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83786&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강원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09682&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충청북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34355&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충청남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19031&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전라북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84371&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전라남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79194&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경상북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22564&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경상남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36513&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38580&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17개 광역지자체의 청년 기본 조례에서 취약한 청년, 또는 청년 빈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고용, 주거, 건강, 금융, 능력개발 영역별로 일부 찾아볼 수 있다.

고용의 경우에는 12개 지자체에서 취약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함이 언급되어 있다. 8개 지역은 비정규직의 차별 개선과 일자리 질 향상을, 3개 지역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소외·사회부적응·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으로 별도로 취약계층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경우, 6개 지역이 주거 취약 청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6개 지역 모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성,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등에 대한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별도로 추가 언급하고 있다.

건강의 경우에는 4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금융영역에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는 6개 지자체에서 기본 조례 상에 포함하고 있다. 4개 지역이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를 포함하고 있고, 3개 지역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취약 청년에 포함하고 청년의 부채경감과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함을 조례에 언급하고 있다.

한편, 10개 지자체는 능력개발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10개 지자체 중 8개가 '도'였다. 능력개발영역에서의 취약 청년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명시되어, 가장 포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17개 지자체에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고용(12개)영역이 가장 많이 명시되어 있고, 능력개발(10개), 주거(6개), 금융(6개), 건강(4개)의 순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용, 주거, 금융의 경우에는 대상이 비정규직, 최저주거기준 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 등과 같이 다소 분명한 반면, 건강과 능력개발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 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언급되어 있어 고용, 주거, 금융영역에 비해 보다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례는 자치법규라는 점에서 17개 광역지자체가 전 영역에 걸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를 포함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에 취약 청년과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도 기초지자체 조례에는 취약 청년과 관계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 규정된 취약 청년에 대한 대책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광역지자체와 취약한 청년에 대한 대책을 2개 이하의 영역에서 포함하 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의 의의와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고려할 때, 영역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청년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의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II-11. 광역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중 청년 빈곤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서울특별시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 <u>근로기준법</u> 」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 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고용 ① 비정규직 ② 「근로기준법」 미달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u>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u>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u>청년 1인가</u> 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주거 ③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주택 외의 거처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②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금융 ④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u>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u>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건강 ⑤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산광역시	제17조의2(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u>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u>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4.>	주거 ①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주택 외의 거처
	제17조의3(청년의 건강증진 지원)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u>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u>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4.]	건강 ②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분	내용	
대구광역시	관련 내용 없음	-
인천광역시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능력 개발 ①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고용 ② 비정규직 ③ 「근로기준법」 미달 금융 ④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광주광역시	제13조(고용 촉진 및 안정)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6조(청년의 생활 안정) ② 시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채경감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고용 ① 비정규직 ② 「근로기준법」 미달 금융(생활안정) ③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대전광역시	제20조(청년 고용확대 등) ③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고용차별을 개선하는 등 비정규직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근무하는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 ① 비정규직
울산광역시	제16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④ 시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비정규직 건강 ②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분	내용	
	제21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금융 ③ 금융 피해를 받은 청년 채무자
세종 특별 자치시	제22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④ 시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능력 개발 ①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고용 ② 비정규직
경기도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u>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u>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능력 개발 ①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주거 ②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주택 외의 거처
강원도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④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등)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u>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u>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능력 개발 ①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고용 ② 비정규직 주거 ③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충청 북도	제12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④ 도지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능력 개발 ①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고용 ② 비정규직
충청 남도	제20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능력 개발 ①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분	내용	
전라 북도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③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31.>] <개정 2020.12.31.>	능력 개발 ①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주거 ②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전라 남도	제14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 ②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③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능력 개발 ①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고용 ② 비정규직
경상 북도	제13조(청년의 고용촉진) ② 도지사는 소외·사회부적응·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 ① 소외·사회부적응·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
경상 남도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제13조(청년의 생활안정 및 부채경감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④ 도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능력 개발 ①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② 비정규직 금융 ③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분	내용	
제주 특별 자치도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⑤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능력 개발 ①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제15조의2(청년의 주거안정 등)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여성,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등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용 ② 비정규직
	제15조의3(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도지사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채경감 및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주거 ③ 성,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등 청년취약계층
	③ 도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2.]	금융 ④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⑤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
	제15조의4(청년의 건강증진) ① 도지사는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건강 ⑥ 여성,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취약계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8월 30일 각 광역지자체별 청년 조례를 검색했음.

[서울특별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064,20210720\)](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064,20210720))

[부산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6440,20210714\)](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6440,20210714))

[대구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청년기본조례/\(5472,20201005\)](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청년기본조례/(5472,20201005))

[인천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청년기본조례/\(6611,20210604\)](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청년기본조례/(6611,20210604))

[광주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청년기본조례/\(5647,20210225\)](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청년기본조례/(5647,20210225))
 [대전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청년기본조례/\(5675,20210730\)](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청년기본조례/(5675,20210730))
 [울산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2299,20201229\)](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2299,20201229))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1714,20210715\)](https://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1714,20210715))
 [경기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청년기본조례/\(7018,20210520\)](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청년기본조례/(7018,20210520))
 [강원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도청년기본조례/\(4530,20200306\)](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도청년기본조례/(4530,20200306))
 [충청북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청년기본조례/\(4571,20210701\)](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청년기본조례/(4571,20210701))
 [충청남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4858,20201230\)](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4858,20201230))
 [전라북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4929,20210528\)](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4929,20210528))
 [전라남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청년기본조례/\(5303,20210520\)](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청년기본조례/(5303,20210520))
 [경상북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청년기본조례/\(4475,20210401\)](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청년기본조례/(4475,20210401))
 [경상남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4958,20210503\)](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4958,20210503))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2607,20200812\)](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2607,20200812))

표 II-12. 광역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의 영역별 청년 빈곤 관련 내용 구분

구분	고용	주거	건강	금융	능력개발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미달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주택 외의 거처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	-
부산광역시	-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주택 외의 거처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	-
대구광역시	-	-	-	-	-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미달	-	-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분	고용	주거	건강	금융	능력개발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미달	-	-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	-	-	-
울산광역시	·비정규직	-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금융 피해를 받은 청년 채무자	-
세종 특별자치시	·비정규직	-	-	-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경기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주택 외의 거처	-	-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강원도	·비정규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	-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충청북도	·비정규직	-	-	-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 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충청남도	-	-	-	-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전라북도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	-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 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전라남도	·비정규직	-	-	-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분	고용	주거	건강	금융	능력개발
경상북도	·소외·사회부적응·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	-	-	-	-
경상남도	·비정규직	-	-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성,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등 청년취약계층	·여성,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취약계층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4. 해외 청년 빈곤 정책 추진 동향⁵⁾

1) 들어가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2015년 유엔이 상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8번째 목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을 명문화하며 여섯 번째 세부목표로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 비율의 대폭 감소'를 제시하였다(UN, 2015). 유럽연합의 국가들 또한 2012~2013년 청년실업이 23%의 최고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 유럽연합 차원에서 청년실업의 문제를 타개하기

5) 이 절은 김수혜 박사(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가 의뢰를 받아 번역 및 집필하였음

위한 정책적 대응을 함께 마련하는 중이다(European Commission, EC 2016).

전술한 청년실업은 청년 빈곤 문제의 뇌관으로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배제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청년 빈곤(youth poverty)은 단순히 경제적 자원의 결핍만이 아닌 사회참여 기회의 다차원적 박탈과도 긴밀히 연결된다(European Youth Forum, 2010).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 빈곤의 문제를 조기에 완화하는 것은 이후 생애경로에서 직면하게 될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 고리 형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지난 수십년 동안 유럽사회의 급속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청년층은 빈곤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인구학적 집단이 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청년 빈곤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촉구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매해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청년층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치를 산출한다.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은 빈곤 위험률(risk of poverty), 심각한 물질적 빈곤율(the severe material deprivation rate), 가구의 낮은 노동 강도(the share of households with very low work intensity)의 세 지표들 중 최소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례로 추정된다. 2021년 1월에 추산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한 16-29세 유럽 청년층은 25.1%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urostat, 2021a). 유럽연합의 청년 빈곤 관련 정책적 개입은 이처럼 유럽통계청(Eurostat)이 제시하는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관련 학술적 담론 또한 2000년 중반 이후 청년층을 유럽국가의 취약계층으로 간주하며 청년기 빈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중이다(Caliendo & Schmidl, 2016; Groh- Samberg & Voges, 2014; Kangas & Palme, 2000).

청년 빈곤 관련 국제비교연구는 국가별 복지모델을 바탕으로 그 실태와 제도적 개입의 양상에 주목한다. Esping-Andersen(1990, 1999)은 복지레짐론(welfare regime)을 주창하며 유럽 각국의 독특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차이가 다음과 같이 상이한 복지모델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먼저 영어권 앵글로색

은 국가인 영국, 아일랜드, 미국, 호주, 캐나다의 자유주의 모델(liberal social welfare models)은 사회복지 관련 국가예산이 낮고 사회보장의 심사가 엄격하며 사회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와 다르게 유럽대륙 국가들(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의 보수주의 모델(conservative social welfare models)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직종별로 집단적인 사회보장기금(collective occupational social insurance models)이 조성되어 상대적으로 강력한 사회보장을 특징으로 한다. 전술한 유럽대륙의 보수주의 레짐에서 청년 빈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 생애 주기별로 비교했을 때, 다른 연령 집단과의 빈곤규모 편차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논의된다(김수정, 2020). 또 다른 복지레짐인 북유럽 노르딕 국가(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사회민주주의 모델(social-democratic welfare models)은 적극적인 국가, 거대한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틀 안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제공을 보장한다. 이러한 노르딕 국가에서 전체 빈곤율 대비 청년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관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때문에 청년 빈곤의 지속 위험과 빈곤 청년층이 겪을 수 있는 “상처효과(scarring effects)” 또한 상대적으로 적다(Mendola, Busetta, & Aassve, 2009).

이에 본고에서는 각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국가별 청년 빈곤의 현황과 정책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자유주의 모델을 견지하는 영국의 청년 빈곤 현황과 관련 정책적 대응을 파악할 것이다. 이후 유럽대륙의 보수주의 모델을 근간으로 청년 빈곤의 문제를 제도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탐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청년 빈곤 관련 가장 적극적인 보장정책을 실행 중인 노르딕 국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자 한다.

2) 영국의 청년 빈곤 정책 추진 동향

(1) 영국 청년 빈곤 실태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빈곤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접근을 통해 빈곤을 측정하고 빈곤 현황을 다각도로 파악한다(이승영, 2020). 과거 절대적 빈곤을 측정했던 것에서 나아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통계는 평균소득 이하 가구(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HBAI) 자료로 보고된다. 평균소득 이하 가구(HBAI) 자료는 평균소득의 50% 또는 중위소득 60%라는 상대적 빈곤을 의미하는 빈곤선을 제시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관련 다양한 실증자료로서 활용된다. 이러한 빈곤 통계는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로서 주거비 지출 전(Before Housing Cost)과 주거비 지출 후(After Housing Cost) 빈곤율로 구분되기도 한다(Born & Aldridge, 2015). 주거비 지출 후 빈곤율은 런던과 같이 주거비 부담이 상당한 지역의 빈곤 현황을 더욱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지표로 볼 수 있다(이승영, 2020).

유럽연합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 빈곤지표인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60%)에 해당되는 영국의 빈곤 청년층(16-29세)의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20%에 이르며 남성(9.8%)보다 여성(12.9%) 청년층의 빈곤율이 더욱 높게 포착되었다(Eurostat, 2021a). 영국 청년층의 빈곤 현황 관련 2015년에 시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일제 근로자 부모의 부양자녀 청년층의 빈곤율이 10%로 가장 낮으며 시간제 근로자 및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부양자녀 청년층의 빈곤율은 38%, 무직 상태의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층의 빈곤율은 69%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다(Born & Aldridge, 2015).

청년 빈곤 및 사회적 배제와 관련 영국 사회는 청년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for Training, NEET)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권에서 사회적 배제 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 SEU)가 조성되며 보고서에서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며 비고용상태’에 처한 16-18세 청소년이 니트족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청년 니트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형성되는 중이다(Bynner & Parsons, 2002; Yates, Harris, Sabates, & Staff, 2011). 영국 정부는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 LFS) 자료를 통해 청년 니트족의 규모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추정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산된 16-24세 청년 니트족은 11.6%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그래프는 2010년-2020년 지난 10년 동안 영국 청년 니트족 비율의 변화로서 니트족 비율이 16.9%로 가장 높게 포착된 2011년 7월~9월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11%로 정체를 보이고 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1).



그림 II-4. 영국 청년 니트족 비율의 변화

*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1).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notinwork/unemployment/bulletins/youngpeoplenotineducationemploymentortrainingneet/march2021>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이처럼 영국에서 니트족은 개인의 생애 경로 이탈의 문제가 아닌 청년층이 직면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을 다각도로 마련하였다. 웨일스 정부는 니트위험성지수(a set of Risk of NEET Indicators, RONIs)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전 학령기에 니트 위험성이 높은 집단을 사전에 파악하여 니트족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Filmer-Sankey & McCrone, 2012). 이와 유사한 접근에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니트족을 추적하고 학교, 지자체, 대학, 고용연금국 등 관련 기관이 니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16+ data Hub를 구축하였다(Connelly & Duncalf, 2011). 다음 소절에서는 영국의 청년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관련 주요 정책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영국의 청년 빈곤 주요 정책

영국의 청년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정책인 ‘청년뉴딜 프로그램(New Deal for Youth People/New Deal 25 Plus)’과 최근 유럽연합 차원에서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와 궤를 함께 하는 ‘청년 계약(Youth Contract)’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① 청년뉴딜 프로그램⁶⁾

1998년 도입된 청년뉴딜 프로그램(New Deal for Youth People, NDYP)은 7개월 이상 구직자 수당을 신청한 18-24세 실업 청년들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정책이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된다.

6) B영국 노동연금부에서 발간한 보고서 Beale, I., Bloss, C., & Thomas, A.(2008). The longer-term impact of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내용을 토대로 번역·정리함.

- 1단계(Gateway): 최장 4개월 동안 취업을 위해 상담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집중면담을 실시함
- 2단계(Options): 구직에 실패한 경우 수당 및 훈련비 보조를 포함한 네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민간위탁사업자들도 일부 참여가 가능함
 - 임금보조 고용(최장 6개월): 1인당 매주 60파운드를 6개월 동안 보조하며 주중 하루 자격증을 위한 교육시간을 할애할 경우 750파운드를 추가 지원함
 - 교육 및 훈련실시(최장 12개월): 구직자 및 각종 수당을 수령하고 수당 자격을 유지함
 - 자원봉사기관 근무(최장 6개월)/환경개선 활동참여(최장 6개월): 프로그램 운영자로부터 임금이나 구직자수당(+400파운드) 중 자신에게 유리한 수당을 선택 수령함
- 3단계(Follow-Through): 최장 6개월 동안 2단계 미취업자에게 추가적인 취업지원을 제공하며 구직자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고 상담가를 통한 개별적인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추가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멘토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뉴딜정책의 실제적 효과는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De Giorgi(2005)에 따르면 참여자의 고용률이 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효과적인 노동연계 복지 정책(welfare-to-work policy)으로 평가받는다. 첫째,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취약계층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으며, 둘째 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르지 않은 참여자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제공하였고,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인적자본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높게 평가된다(Eichhorst & Rinne, 2016).

2009년 10월부터 청년뉴딜 정책은 유연 뉴딜(Flexible New Deal)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으며, 구직자 수당을 신청한 청년들은 첫 12개월 동안 Jobcentre Plus의 상담가로부터 구직 관련 보조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유연 뉴딜 프로그램 안에서 실직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12개월 후에도 민간위탁기관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기존의 청년뉴딜 프로그램이 신속한 구직활동을 돕는 데

방점을 두었다면, 유연 뉴딜 프로그램은 창출된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에 역량을 집중하였다(채준호, 2013). 유연 뉴딜은 프로그램 명칭 그대로 개인의 선택, 서비스 모듈의 선택을 확장하는 등 위탁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조하였지만 기존의 뉴딜 프로그램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2011년 6월 워크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채준호, 2013).

② 청년 계약(Youth Contract)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는 청년 니트족을 대상으로 EU차원에서 시행 중인 청년보장제도는 빈곤청년 감소를 위한 범국가적 정책적 대응이다. 청년보장제도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을 통해 지원되며 이후 국가별 자체 예산이 추가된다(European Commission, 2016). 하지만 브렉 시트(Brexit)를 단행하며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의 경우 전술한 EU의 청년보장 정책을 따르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가 권고하는 지침을 명확히 따르지 않으며 기존의 청년 니트족을 지원하는 ‘청년 계약(Youth Contract)’ 정책이 영국의 상황에 더욱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청년보장 정책의 목적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다. 유럽사회기금에서 제공되는 예산 또한 청년보장제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다(Bussi, 2014).

청년 계약은 지속적으로 높은 청년실업률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노동시장 정책이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18세-24세 청년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청년 니트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다(Employment Related Services Association, 2021).⁷⁾

7) <https://ersa.org.uk/policy-campaigns/employability-programmes/youth-contract>에서 2021년 7월 3일 인출.

- 임금 인센티브(Wage Incentive): 모든 고용주에게 2,275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특히 Work Program을 통해 청년을 모집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고용주를 위한 견습 보조금(Apprenticeship Grant for Employers, AGE): 청년 견습생을 고용하기 위한 사전 견습 교육 지원금으로서 최대 1,500파운드를 지원함
- 근로 경험(Work Experience): 18~24세 청년층이 업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8주 동안 업무 관련 부문에 배치되는 업무 아카데미 - 업무 중심 교육과 결합되며 업무 경험을 제공함

2015년 4월까지 고용주들은 총 16만 명의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았다. 한 명당 약 2,275파운드를 제공하는 이 인센티브는 정책 대상자인 18~24세의 청년층을 최소 26주간 고용하였을 때 수령이 가능하다. 임금 인센티브 효과와 관련 2014년 Coleman과 동료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19%는 인센티브로 인하여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으며, 15%는 실제 고용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고용주의 34%는 인센티브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지속하였음을 밝혔으며, 55%는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용과 고용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미래 고용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포착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의 86%는 프로그램 이후에도 정책 대상 청년층을 고용할 수 있음을 밝혔으며, 43%는 실업 청년층을 고용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영국 주요 청년 계약 정책 프로그램 사례⁸⁾

① Talent Match

이 프로그램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영국 전역 21개 지역의 기업 파트너십(LEP)

8) European Commission(2021). Youth Employment Support Platform에 게재된 청년보장정책 내용을 토대로 번역·정리함(<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327&langId=en>.에서 2021년 7월 3일 인출.).

영역에서 시행된다. Talent Match를 통해 청년 니트족과 일한 경험이 있는 자원 봉사 단체 또는 지역사회 단체의 파트너십이 조성되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 참여 청년층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프로그램 설계와 제공에 관여한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포부를 지지하고 취업을 위한 첫 단계에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갖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Big Lottery Fund로부터 1억 6백만 파운드(1억 2천 1백만 유로) 지원을 받았다. 2014년에서 2018년 5년 동안 21개의 파트너십에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이러한 파트너십 중 7개의 파트너십은 2023년까지 Big Lottery Fund로부터 추가 지원을 확보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1년 이상 니트 상태에 있는 18-24세 청년층이며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거나 힘든 생활과 고용에 여러 장벽이 있는 사례에 각별한 관심을 둔다. 프로그램 활동 관련 표준화된 접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트너십은 참여자들의 필요와 열망에 따라 개별화된 해결책을 제시한다. 모든 21개 파트너십은 현지 지역의 요구를 충족하고, 기존 현지 서비스를 보완하며, 현재 제공되는 지원 정도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프로그램 활동은 청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및 직장/고용 확보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2,230명 이상의 청년들을 참여시키고 지원했으며, 2018년 12월까지 5,700명의 청년들을 추가로 고용하였다. 또한 5,860명의 참여자가 자원봉사에 참여했으며, 그들 중 대부분(70%)은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그리고 1,490명의 참가자가 정규교육을 받았고, 844명이 견습 기간을 가졌으며, 1,780명이 기초 기술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260개 이상의 신규 사업체/자영업자를 포함하여 5,362개의 신규 일자리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된다.

전술한 수치상의 성과 이외에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가치관, 삶의 전망, 웰빙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밝혔는데, 프로그램 참여 6개월 이후 참여자의 절반 가까이(44%)가 불안감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가 멘토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기회를 확보하고 자신감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직업 세계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으로의 근접성 또한 향상시켰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서비스는 참여 청년들과 공동으로 설계 및 제공됨. 실제 청년들은 서비스를 설계하고,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며, 동등한 파트너로서 예산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프로젝트 직원을 모집하며, 직업 센터 직원을 교육하고, 서비스를 평가함.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크게 기여함
- 파트너십은 소외계층 청년층을 파악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지역 및 국가의 자선 단체에 의해 주도됨
- Talent Match는 고난한 삶을 영위하고 트라우마를 경험한 청년들의 참여가 선행적이지 않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경우, 약속 누락이나 진행 중인 업무 중단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음.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일부 파트너십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최소 12개월 동안 지원을 유연하게 제공함

② Movement to Work

영국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니트족에게 양질의 근로 경험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공공 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 PES)에 등록된 18-24세 청년 니트족이다. 자선적 차원에서 공공부문 고용주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직후에 이어서 민간 사업체가 최소 2주 일자리를 제공한다. 자선단체로 등록된 Movement to Work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운영 및 관리를 보조하는 직원까지 고용주가 재정지원을 부담한다.

프로그램 내 청년 니트족들은 현장직무 교육 훈련(on-the-job training)과 지원을 받는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수자의 50% 이상이 정규직으로 이동하여 청년 실업을 낮추는 데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참여 청년들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프로그램은 고용주들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고용주는 니트족에게 근로 경험과 직업훈련을 위한 일자리 배치를 제공하는데, 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일자리 배치는 최소 2주간 지속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4-6주 정도 진행된다
- 직업 및 고용기술 훈련 요소를 포함함
- 이상적으로 견습을 포함한 배치는 직무와 연결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곳이어야 함. 이는 청년실업 감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요소임
- 정규직 자리가 없는 경우 일자리 제공 기관은 참여자의 구직을 적극 지원해야 함

2017년 4월 집계에 따르면 59,000 배치가 달성되었으며, 250명의 고용주가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관련 조직의 91%는 고위 경영진들 간 비공식적 의사소통을 통해 동료 고용주에게 일자리 제공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2016/17년 동안 전체 배치의 54%가 긍정적 성과로 귀결됨. 참가자는 배치에 따라 직장 또는 교육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Movement to Work가 추진되었을 때 설정된 목표를 상회함
- 일부 기업의 경우 더 높은 성과를 거둠. 일례로, HSBC는 400개의 직책을 제공하였는데 63%가 은행 일자리로 전환되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청년들에게 Movement to Work 프로그램의 일자리를 제안할 가능성(54%)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2017년 추가로 10명의 고용주가 Movement to Work에 가입하였으며, 고용주들에게 프로그램의 인기를 실감하게 함

전술한 긍정적인 성과는 다음의 요인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보고된다.

-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조직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배치를 맞춤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함. 이러한 구조는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주에게 추가 일자리를 만들도록 권장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장에 기여함
-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예: 청년 계약)는 참여자들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함
- 공공 고용서비스(PES)와는 별도로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참여자의 수를 최대화함

3) 독일의 청년 빈곤 정책 추진 동향

(1) 독일 청년 빈곤 실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독일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논의된다(이호근, 2017; Groh-Samberg & Voges, 2014).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에 보고된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60%)에 해당되는 상대적 빈곤 지표에 따르면, 16-29세 독일 청년층의 빈곤율은 18.3%로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20%보다 낮은 수준이다(Eurostat, 2021a). 청년 남성의 빈곤율은 16.5%로 여성(2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청년 빈곤 문제의 핵심인 청년 니트족의 비율 또한 남성의 경우 7.3%로 유럽연합 청년 남성의 니트족 비율 평균인 12.2% 보다 낮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15.2%로 남성에 비해 니트족 비율이 높았지만 유럽연합 평균(20.8%)과 비교했을 때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Eurostat, 2021b).

이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독일의 청년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독일 연방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가 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청년층의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그림 II-5). 독일 내 청년 빈곤은 증가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적 학술적 관심이 적었으며, 이는 고등교육 팽창에 따른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Groh-Samberg & Voges, 2014). 독일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직업교육훈련 이원체제(dual system)로 인해 직업교육이 일종의 사회제도로써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의 직업교육 체계는 최근 인구수 감소와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독일 교육체제 내 계층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적 논의가 제기된다(Ebner, 2015; Protsch & Solga,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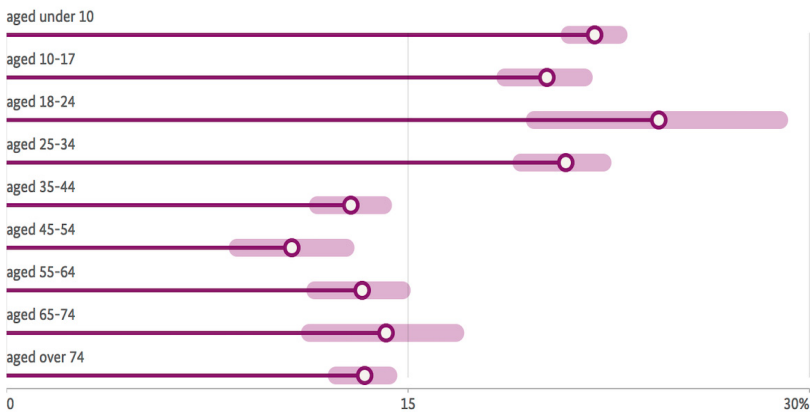


그림 II-5. 독일의 연령에 따른 빈곤율 현황

* 출처: The Federal Government (2016).

<https://www.gut-leben-in-deutschland.de/indicators/income/risk-of-poverty-rate/>에서 2021년 7월 7일 인출.

전술한 변화는 직업교육 체제의 변화와 함께 독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애사적 관점에서 Groh-Samberg & Voges (2014)는 독일 청년들의 성인기 진입 시기 또한 늦어지고 있으며 생애경로의 변화가 청년 빈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사회경제 패널자료(German Socio-Economic Panel Study, SOEP) 분석을 통해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실업 상태가 청년 빈곤의 위험을 높이는 기제임을 밝혔다. 시계열적 접근에서 청년 빈곤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기로의 진입에 있어 빈곤위험은 사회계층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에 기대어 Groh-Samberg & Voges(2014)는 독일 내 청년빈곤의 문제가 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러한 청년 빈곤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독일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정리하겠다.

(2) 독일의 청년 빈곤 주요 정책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독일에서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전통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이원체제가 잘 갖추어진 까닭에 청년실업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제도적 개입 또한 불평등의 관점에서 주로 취약계층 청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짙다(이호근, 2017). 무엇보다 견고한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강력한 사회법을 근간으로 25세 미만 청년층에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서비스를 제공한다(김기선, 오상호, 권준화, 2018). 독일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다양한 청년고용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정책들 중 본고에서는 앞서 검토한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과 유사한 독일의 JUMP(Jugend mit Perspektive)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이후 최근 도입된 독일의 청년보장 정책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① JUMP(Jugend mit Perspektive)⁹⁾

JUMP는 청년실업 감소를 위한 긴급 프로그램(Sofortprogramm zum Abbau der Jugendarbeitslosigkeit)으로 1998년 11월 26일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New Deal'이나 프랑스의 청년고용(lesemplois jeunes)과 'Trace' 프로그램 등의 영향을 받아 시행된 정책적 대응으로서 도입 당시 1999년 말까지 1년 동안 청년 10만 명에게 고용과 직업양성교육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JUMP는 청년층의 자격증 획득과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편입보조금 지급을 통해 신규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사업의 특징을 지닌다. 정책의 대상으로 장애인, 기술훈련능력이 부족한 청년층(특히, 외국인이나 독일 이민자 등)에 초점을 두어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두었다. 전술한 정책적 요소들은 2004년 도입된 Job-AQTIV 법률의 토대가 되었으며, 청년고용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기본 조치로서 현재 시행 중인 청년보장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3년 7월부터 후속 프로그램으로 JUMP PLUS가 도입되었으며, 새롭게 도입된 JUMP PLUS는 취업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청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만하임에서 시행된 JUMP PLUS는 청년고용 관련 우수 정책사례로서 만하임시와의 협력과 시의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성공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된다. 프로그램은 고용지원 서비스와 함께 개별적 집중 상담을 제공하며 참여자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프로그램에 등록함과 동시에 훈련, 직업, 인턴의 기회가 제공되며 참여 청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의 다수는 사회적 약자로서 전통적인 경로를 통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JUMP PLUS를 통해 근로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9) 김기선, 오상호, 권준화 (2018)의 '청년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해외사례 심층연구: 독일'과 Hörisch, F., Shore, J., Tosun, J., & Werner, C.(2014)의 'Labour market policies and youth unemployment'의 내용을 토대로 번역정리함.

② 청년보장 정책¹⁰⁾

독일의 청년보장 정책은 기존의 직업교육 훈련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청년보장 정책은 독일의 낮은 청년 실업률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이에 독일은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의 여러 단계에 있는 다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고용과 직업교육 및 훈련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책의 방향은 크게 조기개입과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활성화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먼저 조기개입과 관련하여 학교 내 저성취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일찍이 직업교육 지도를 제공하며 미래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The Apprenticeship (VET) Pact는 청년보장 제도로서 현재 “alliance for vocational training and further training” (Allianz für Aus- und Weiterbildung) 프로그램으로 지속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공공 고용서비스(PES)와 고용 서비스 기관들은 직업교육 및 훈련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에게 기초 훈련을 제공하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이민 청년층을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전술한 독일의 청년보장 정책이 매우 선진적이며 다양한 서비스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책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European Commission, 2020). 특히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독일 내 지역 편차가 존재하며 지방의 거버넌스 협력은 더욱 향상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독일의 청년보장 정책은 25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4개월의 서비스 기한을 제공하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노동사회부(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의 책임 하에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진행 중이다.

10) Bussi(2014)의 ‘The Youth Guarantee in Europe’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번역·정리함.

(3) 독일 청년보장 정책 프로그램 사례¹¹⁾

① Alliance for Initial and Further Training (Allianz für Aus- und Weiterbildung)

Alliance for Initial and Further Training은 다수의 고용주 연합(BDA, BDI, DIHK, ZDH, BFB), 노동조합(DGB, VERDI, IG-Metall, IG-BCE), 연방 정부 차원의 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Energy), 노동사회부(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교육연구부(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이민, 난민 통합 부처(Federal Government for Migration, Refugees and Integration), 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 16개 주정부 대표(Länder representatives)의 협력을 바탕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청년보장 정책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재정자원은 연방 예산,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주정부,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의 기부로부터 확보된다.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독일의 이원 직업교육훈련의 질과 매력 향상
- 졸업장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년 수 감소
- 직업교육 자격증을 부여하는 훈련에 참여자들이 가능한 빠르게 흥미를 갖도록 유도
- 지역과 직업적 측면에서 지원자와 회사 사이 미스매치 감소
- 훈련 장소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회사의 수 증가
- 직업훈련 코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기에 있는 청년 수 감소
- 더 많은 청년들이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강화

이원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11) European Commission(2021). Youth Employment Support platform에 게재된 청년보장정책 내용을 토대로 번역정리함(<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327&langId=en>.에서 2021년 7월 3일 인출).

일반교육 졸업자(academic qualifications), 취약계층, 이민자, 장애가 있는 청년층이 대상이다. 프로그램의 주된 활동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업적 성향 관련 명확한 개념 틀을 개발한다. 아울러 회사와 학생 모두에 가치 있는 양질의 인턴십을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티, 노동조합, 주 정부가 함께 프로그램 질에 관한 기준을 고안한다. 나아가 이원 직업 훈련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초기단계 자격(Einstiegsqualifizierung)을 제공한다. 아울러 더 많은 비율의 이민자 청년층이 이원 직업훈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이러한 장치는 노동조합, 이민자 협회 등의 지역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2015년 추가적으로 7,300개의 이원 직업훈련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2016년 그 숫자는 18,118개에 이르렀다. 2015년 참여자들에게 19,020개의 회사 내 직업훈련 배치를 제공하였고, 5,000명의 청년들이 같은 해 훈련에 참여하였다. 나아가 2016년에는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Week of Dual Vocational Training”을 개최하였다. 전술한 성과 이외에도 2015년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법안(Assistierte Ausbildung)을 확장하여 더 많은 이니셔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이원 직업훈련의 호감도를 향상시켰다. 아울러 프로그램 내 파트너들 사이에서 실행 경험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제고한 것 또한 성과로 평가된다.

② Career entry support by mentoring (Berufseinstiegsbegleitung)

연방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으로서 멘토와 지역의 이해관계자(사회복지사, 직업훈련 센터, 직업 상담가, 지역고용청 및 고용주 등)를 지명하는 학교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중등학교에서 직업훈련으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학교를 떠나기 2년 전부터 지원이 시작되고 직업훈련 코스가 시작된 이후 약 6개월 후에 종료된다. 만약 대상 청년이 직업훈련에 즉각적인 접근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업훈련으로의 이행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퇴학증명서 발급
- 직업 지도 및 오리엔테이션
- 직업훈련 장소 찾기
- 직업훈련의 성공적인 시작

입직 초기 단계에 있는 참여자를 지원하는 시범 계획은 2009년에 시작되었다. 현재 프로그램은 2014/2015년에서 2018/2019년 사이 시작하여 2022년 종료되는 5차년도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2014/2015년부터 2018/2019년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연방고용청이 10억 유로를 재정지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의 50%는 유럽사회 기금(European Social Fund)이 충당한다. 2009년 시작된 시범 이니셔티브는 약 1000개의 학교가 참여하였다. 2009년과 2013년 사이 프로그램 첫 단계에는 약 55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멘토링을 받았다. 그 이후 현재까지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대략 113,000명 학생들과 3,000 학교가 2022년까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평가에 따르면 학교를 마친 뒤 30개월 동안 64.5% 참여 청년들이 직업 훈련에 참여하며 24%는 6개월 안에 직업훈련을 받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참여자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시작한 이후 지원을 모두 받는 경우에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된다. 무엇보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직업세계와 직업훈련에 대해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 더욱 성공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참여자의 3분의 1일 정도는 직업으로의 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문제점은 청년층이 직면하는 문제와 연관되며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특히 이러한 비율은 여성 청년층에게 더욱 높게 나타나는데 대략 여성 청년층의 42%는 30개월 이후에

도 직업훈련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으로 멘토, 학교, 기타 기관 사이의 협력이 가장 결정적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코치, 학생, 학교, 학부모, 직업소개소를 포함한 모든 참여자들은 건설적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멘토링 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학교에서 직업훈련으로 이행기에도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멘토링은 학업적 문제 관련 지원 및 조언, 직업훈련에 대한 조언 및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원이 총체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프로그램 평가에 따르면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와 학생의 인간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빈번한 멘토 교체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 쉽다는 점에서 멘토와의 고용계약은 최소 2.5년을 보장하는 것이 관계의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4) 스웨덴의 청년 빈곤 정책 추진 동향

(1) 스웨덴 청년 빈곤 실태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통해 보편적 복지 정책의 기초를 견지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유럽 연합 평균(20%)을 상회하는 23.8%로 보고된다(Eurostat, 2021a). 다만 앞서 살펴본 영국과 독일의 실태와는 다르게 남성 빈곤율과(23.7%) 여성 빈곤율(23.8%)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빈곤율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노르딕 사회복지 시스템의 성과인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남녀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청년빈곤과 관련 주요 지표 중 하나인 니트족의 비율은 7.3%로 유럽연합 27개국 중 가장 낮게 보고되며, 성별에 따른 비율 또한 남성 6.3% 여성 8.4%로 영국 독일에 비해 성차가 비교적 적게 포착된다(Eurostat, 2021b). 정리해보면 스웨덴의 경우 다른 유럽연

합 국가와 비교했을 때, 청년 빈곤율은 높지만 청년보장제도의 성과지표인 니트족 비율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지는 소절에서는 스웨덴 정부가 추진해 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청년보장제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스웨덴 청년 빈곤 주요 정책

스웨덴의 청년 빈곤 주요 정책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청년보장 정책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13년 모든 회원국에게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고 청년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의 맥을 따르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YG)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였다. 이처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는 청년보장 정책은 1980년과 1990년 노르딕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스웨덴은 오랜 기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청년보장 정책을 시행한 국가로서 매우 다양한 정책 사례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¹²⁾

스웨덴은 노동시장 정책 관련 역사가 유구하다. 1948년 국가 노동시장 이사회(National Labour Market Board)가 조직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개입은 근본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과 완전고용을 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 스웨덴은 고용률이 13%가 하락하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겪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감행하였다.

전술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조치는 relief works 이다. 이 제도적 조치는 약 6개월 간 임시직을 제공하였으며,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마련되었지만 일부는 민간부문에서도 일

12) Calmfors, Forslund & Hemstrom (2002)의 연구논문을 토대로 번역정리함.

자리가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은 공공고용사무소로부터 참여자 고용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1990년대 이 프로그램은 work experience schemes로 대체되었으며,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실업보장급여를 제공받았다. 1984년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된 정책 프로그램은 youth teams이며 1992년 youth practice가 대대적으로 시행되며 더 많은 청년층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5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직업훈련을 제공하였다. 주된 목표는 참여 청년들에게 근로 경험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자가 일반 피고용인을 대체할 수 없게끔 원활한 배치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노동력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참여 청년들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② 청년보장 정책¹³⁾

스웨덴은 1984년 처음으로 청년보장 정책을 도입하며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넘어서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청년보장 정책은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인 청년층의 요구 사항을 진단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스웨덴은 90일 동안 고용이나 교육훈련을 보장한다. 주무부처는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이며 공공 고용서비스(PES)에 등록된 15-24세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용,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8년 25세 미만 청년 니트족의 40.2%가 청년보장 정책의 준비단계에 등록하였으며, 2014년 정책의 착수 이후 니트족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유럽연합의 평가에 따르면 스웨덴의 청년보장 정책은 보다 사회통합에 방점을 두며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European Commission, 2020). 특히 개별 구직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과 지방 자치제 단체들은 서로 협력하고 노동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역량을 기반으로 스웨덴 정부는 청년층의

13) Bussi (2014)의 'The Youth Guarantee in Europe'의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번역·정리함.

고용상태를 눈에 띄게 개선하였다.

최근 스웨덴 정부의 청년보장 정책은 기존의 정책 조치들 중 직업 보장(Job Guarantee)과 청년직업프로그램(Youth Job Programme)의 연장선상에서 시행 중이다. 직업보장 프로그램의 경우 당장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노동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층의 직업탐색을 적극 돕는다. 청년직업프로그램은 장기간 실업에 처한 청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들의 구직 활동을 보조하며 직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직에 실패한 청년들은 교육, 훈련, 견습 프로그램, 수준 높은 직업훈련과 같은 조치를 제공받는다. 상술한 제도적 수단과 함께 스웨덴 정부는 ‘활동보고서(activity report)’ 도입을 통해 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활동보고서는 구직자들이 실업의 첫 달과 14개월 사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펼친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청년층의 장기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 인센티브와 이동 수당을 제공하며 전술한 청년보장 정책의 조치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공 고용서비스(PES)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스웨덴의 청년보장 정책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스웨덴 청년보장 정책 사례¹⁴⁾

① Multi-competent teams (UngKOMP)

스웨덴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PES)가 주도적으로 시행 중인 프로그램으로서 지방 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단일 기관과 서비스를 통해 청년층에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사는 각각의 사례에 맞춰 개별 청년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 방법을 모색하며 그 과정에서

14) European Commission(2021). Youth Employment Support platform에 게재된 청년보장정책 내용을 토대로 번역정리함(<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327&langId=en>.에서 2021년 7월 3일 인출).

교도소 정신과 의사에서부터 국가 건강보험에 이르기까지 공공 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접근을 높이고 직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실업 수 감소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대상은 16-24세 장기실업이나 장기실업 위험에 처한 청년층이며 1천 800만 유로의 예산이 유럽사회기금(50%), 스웨덴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PES), 지자체로부터 지원된다.

프로그램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원 활동은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PES)의 사회복지사, 고용 상담가, 심리학자와 사회상담가, 지역의 직업 및 교육 전문가가 각자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팀을 이루며 진행된다. 이처럼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총체적이며 일관되고 개별화된 접근이 가능하며, 보다 신속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평균 프로젝트 참여 기간은 8개월이고 전체 팀은 차별과 접근성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둔다. 특히 성불평등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자원은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직업 및 학업 선택에 있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다.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8,584명의 청년층이 참여했으며, 남녀의 비율은 각각 60%와 40%이다. 참여자의 54%는 중등교육 미만의 학력을 갖추었고, 참여자의 29%는 장애가 있는 청년층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참여자의 63%는 고용이나 교육 기회를 찾아 프로그램을 마쳤으며 29%는 다른 이유로 프로그램을 떠났다. 프로그램 참여를 마친 뒤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PES)에 대한 불신은 28%에서 13%로 감소한 반면에 60%는 매우 높은 신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아래와 같다.

- 복잡한 기관의 망을 탐색할 필요가 없는 대신 청년의 고용과 모든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총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됨. 이 접근법은 노동시장 참여의지가 낮은 대상에게 특히 유용함
- 팀의 각 구성원이 청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특히 구성원의

전문적인 지원이 제공됨

- 팀의 자발적 참여와 편안한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팀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으며, 참여 청년은 예약 없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함. 열린 대화와 교류를 장려하는 환경의 조성은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임
- 팀은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하며, 이는 청년층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와도 직결됨

② The Delegation for the Employment of Young People and Newly Arrived Migrants (Delegationen för unga och nyanlända till arbete, Dua)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PES)와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서 The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 (SALAR) 또한 프로그램에 관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정부부처(PES)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 실업을 감소하고 이민자의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2014년 12월 지자체 수준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스웨덴 사회에 새롭게 편입된 이민자들까지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은 16-24세 청년 니트족과 새로운 이민자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공공 고용서비스(PES) 기관 사이의 협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목표 대상의 규모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구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단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체계는 개별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지역 루트를 통해 고용과 교육에 이르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다수의 사례에서 청년층을 위한 최적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부모 또한 의사소통에 참여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까닭에 재정 또한 주 정부에 의해 운용되며 2017년과 2018년 예산은 대략 1,500만 유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5년 가을 290개 스웨덴 지방 자치단체들 중 287개가 청년 실업 감소를 목표

로 삼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모델은 지역 고용주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을 따르며 스웨덴 언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술 학습을 포함한다. 2018년 스웨덴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고용서비스(PES)에 등록한 25세 미만 모든 실업 청년들이 실업 후 90일 안에 직업을 갖거나 고용이나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90일 보장(90-day guarantee)'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논의되는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PES)와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은 양쪽의 정책적 수단과 활동의 효과를 배가시킴
- 청년층과 새로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조치가 지역을 기반으로 제공될 때 더욱 효율적임
- 새로운 이민자가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역루트가 개발되어야 함

4)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 독일, 스웨덴의 청년 빈곤 정책의 추진 동향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 국가 모두 상대적 빈곤율과 같은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빈곤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니트족 비율의 추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엄정하게 탐색한다. 이러한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의 추진은 정책의 성과를 더욱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후속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유용한 접근이다. 영국, 독일, 스웨덴의 경우 국가 수준에서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과 니트족 비율을 산출하며 개별 국가의 통계지표는 유럽통계연구소(Eurostat)에 전달되어 청년빈곤 실태와 관련 정책의 성과가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분석된다. 특히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인구/가구에서부터 의료/복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범위의 행정자료를 통합하여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증거 기반 정책을 마련한다(유종성, 전병유, 신광영, 이도훈, 최성수, 2020). IT 강국으로서 전자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앞선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청년 빈곤 정책의 추진과 모니터링 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정책의 방향성은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세대 자체가 빈곤의 취약계층이라 보는 시각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위험에 놓인 특정 인구집단(여성, 저숙련, 지방, 소수민족 및 이민자)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EAPN, 2014). 여기에는 청년 빈곤이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물질적 결핍이 아닌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이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시각이 기저에 자리한다. 따라서 청년 빈곤의 문제를 개인적 수준이 아닌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방향성이 설정된다. 청년 빈곤 정책의 이러한 추진 동향은 청년실업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 사회 청년 빈곤 문제 해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에 따라 이민 배경을 지닌 청년층의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스웨덴의 청년보장 정책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업교육이 제도적으로 발전한 독일의 경우 이원 교육체계와 함께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8년 이상 지체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조기개입은 한국 사회 청년고용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상태의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사회인구 집단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 노동시장 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노사정의 긴밀한 협의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건설한 협력체제는 상호배제적 노사문화가 만연한 한국 노동시장 정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청년 빈곤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와 구조적 개혁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생산적인 고용 활동이 경제 역동성을 이끌고 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시각에서 빈곤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시안적 시각의 사후적 접근에서 청년 빈곤 정책을 마련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 제3장 청년 빈곤 실태 분석

- 1.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
- 2.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 3. 청년 다차원 빈곤 심층 분석

1.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¹⁵⁾

1) 분류 틀 및 지표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청년 빈곤 분류

여기에서는 청년 빈곤의 분류 틀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청년 빈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는 기존의 빈곤 접근으로는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세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점을 지닌다는 문제의식과 연관이 있다.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확한 빈곤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청년 빈곤의 개념은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로서, 전술한 개념적 범위 하에 청년 빈곤의 분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청년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한 논의는 앞서 다룬 바 있는데, 화폐적 방법으로서 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결핍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비화폐적 범주까지 청년 빈곤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15) 이 절은 연보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청년 빈곤의 실질적 생활 양상을 반영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경제, 고용, 주거 영역을 청년 빈곤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빈곤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분류 틀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영역은 주로 국내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나 옥스퍼드 빈곤과 인간개발계획(OPH)을 중심으로 전체 연령대의 보편적 관점에서 다차원 빈곤지수 관련 연구들은 수행되었으나 청년 세대에 초점을 둔 다차원 빈곤 연구는 거의 드문 상황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으로서 경제, 교육, 노동, 주거, 건강, 안전성, 사회·문화적 자본, 시간, 복지 등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경제 영역은 소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교육은 교육과 역량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노동은 근로나 고용의 영역으로 명명되기도 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활동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분류 영역의 명칭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세부 지표나 영역의 범위를 고려하여 크게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었다.

〈표 I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 노동, 주거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과 사회·문화적 자본의 영역도 3개 이상의 연구에서 주요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 외에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2017) 연구에서 분류한 안전성 영역의 세부 지표들은 변금선, 이혜림(2021) 연구의 복지 영역으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순미(2018)의 시간 영역도 변금선, 이혜림(2021) 연구의 교육 및 역량 영역 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역량) 영역은 변금선, 이혜림(2021)연구에서만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교육 및 훈련의 경험 기회의 결핍이 잠재적으로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 영역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1. 선행연구에서의 청년 빈곤 분류 영역

	경제	교육	노동	주거	건강	안전성	사회·문화적 자본	시간	복지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2017)	○		○	○	○	○	○		
김태완, 최준영(2017)	○		○	○					
유지영(2019)	○		○	○	○				
이순미(2018)	○		○	○	○		○	○	
변금선, 이해림(2021)	○	○	○	○	○		○		○

(2) 청년 빈곤 지표

전술한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분류에서 각 선행연구들이 영역별로 선정한 지표들을 정리하여 <표 III-2>에 제시하였다. 주요 영역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 영역의 경우 대부분은 (균등화)가처분소득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득 이외의 자산, 채무 등과 같은 경제적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변금선, 이해림(2021)의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 소득 이외의 개인 근로소득을 별도 지표로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노동 영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실업 등의 (장기)비경제활동 여부를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또는 고용안전성 등의 지표를 포함하

여 임시·일용직, 계약직 여부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 빈곤을 파악하고 있다.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비부담, 최저주거기준, 주거설비, 주거시설 등의 주거환경을 지표로 포함하고 있는데, 크게 재정적인 부담 정도와 물리적인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건강 영역에서는 중증 장애나 만성 질환 여부,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이나 자살 생각 등의 정신건강, 의료비 부담 등이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사회·문화적 자본으로서는 사회적 친분관계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등의 용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로서 관계에 대한 지표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그 외에 연구자에 따라 여가·문화비 지출 정도나 사회참여 등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 및 역량 영역은 변금선, 이혜림(2021)의 연구에서만 청년 빈곤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데, 니트(NEET), 교육중단 경험, 직업훈련 경험, 자아존중감, 시간 자원(재량시간) 등이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자원은 이순미(2018)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 영역의 지표로서 별도로 다루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정성 영역은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2017)에서 공적연금, 고용보험, 물질적 박탈 등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지표들은 변금선, 이혜림(2021)의 연구에서도 복지 영역으로서 다루고 있으며, 이 외에도 복지 영역으로 일과 생활 균형, 주관적 웰빙과 행복, 삶에 관한 전망이 포함하고 있다.

표 III-2. 선행연구에서의 청년 빈곤 분류 영역별 지표

	경제	교육	노동	주거	건강	안전성	사회문화적 자본	시간	복지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가처분 소득 ·순자산		·실업 ·근로지속 가능성 ·근로시간 형태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 기준 ·주거설비 ·주거시설	·만성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의료비 부담	·공적연금 ·고용보험 ·물질적 박탈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문화비 지출		
김태완, 최준영 (2017)	·균등화 경상소득		·실업 ·고용형태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 기준					
유지영 (2019)	·가처분 소득		·실업 ·고용형태	·주택형태	·중증 장애, 질환 ·주관적 건강상태				
이순미 (2018)	·가처분 소득		·실업 (노동 접근성) ·고용안정성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 기준	·주관적 건강상태 ·정신건강 ·결식 및 영양불균 형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 ·문화/ 관계적 여가	·재량시간	
변금선, 이혜림 (2021)	·상대적 소득빈곤 (가처분 소득) ·순자산 빈곤 ·고금리 부채 유무 ·과중채무 ·근로빈곤 (개인 근로소득)	·니트 (NEET) ·교육중단 경험 ·직업훈련 기회 ·자립준감 시간자원 (재량시간)	·실업 (장기) ·구직단념 자 ·고용안정 성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 기준 ·주거환경 적정성	·신체건강 (만성질환 , 장애) ·주관적 건강인식 ·우울증상 ·자살생각 ·미충족 의료 ·과부담 의료비		·사회적 자본 ·사회참여 ·여가· 문화비 지출 ·비공식 안정망		·일과 생활균형 ·사회안전망 ·주관적 웰빙과 행복 ·물질적 박탈 ·삶에 관한 전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분석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청년 빈곤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개념 정의와 조응하여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의 분류틀과 지표(안)을 선정하였다. 이어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선정한 청년 빈곤의 분류틀과 지표(안)을 검토한 후 두 차례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청년 빈곤의 개념, 분류 영역과 지표, 빈곤선에 대한 타당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청년 빈곤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개념 정의와 빈곤의 분류틀, 지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청년 및 교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최종 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Web survey)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회의 델파이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III-3. 델파이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청년 및 교육 분야 전문가
유효 표본	23명
표본 추출	연구진 추천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Web Survey)
조사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내용	- 청년 빈곤의 개념 타당도, 의견 및 보완사항 -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 타당도, 중요도, 추가해야 할 영역, 의견 및 보완사항 - 청년 빈곤의 영역별 지표 타당도, 중요도, 의견 및 보완사항 - 청년 빈곤의 지표별 빈곤선 타당도, 의견 및 보완사항
조사 기간	- 1차: 2021년 5월 3일 ~ 2021년 5월 13일 - 2차: 2021년 5월 24일 ~ 2021년 5월 31일

구체적으로 본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복지, 노동, 교육·훈련, 주거, 활동 등 청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학계, 현장 전문가로 총 23명이 선정되었다.

표 III-4. 델파이 참여 전문가

연번	이름	소속	분야
1	정○○	한국○○○○연구원	복지
2	김○○	한국○○○○연구원	복지
3	조○○	한국○○○○연구원	복지
4	이○○	한국○○연구원	노동
5	김○○	한국○○연구원	노동
6	변○○	○○연구원	복지
7	김○○	○○대학교	복지
8	전○○	○○시 ○○○○위원장	청년
9	강○○	○○○○대학교	청년
10	정○○	청년○○○	주거
11	정○○	○○○○○○○○연구소	청년
12	조○○	○○○○○○위원회	교육
13	김○○	○○○○○○위원회	교육
14	이○○	한국○○○○○○진흥원	활동
15	유○○	○○대학교	청년
16	정○○	한국○○○○○개발원	교육·훈련
17	채○○	한국○○○○○개발원	교육·훈련
18	정○○	한국○○○○○개발원	교육·훈련
19	남○○	한국○○○○○개발원	교육·훈련
20	강○○	한국○○연구원	청년
21	차○○	한국○○연구원	청년
22	임○○	한국○○연구원	청년
23	탁○○	한국○○연구원	청년

(2) 조사결과

1차 델파이조사에서 제시한 청년 빈곤의 개념은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이며, 청년 빈곤 분류 영역 및 영역별 지표(안)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은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자본 등 총 6개로 선정하였다. 경제 영역은 청년 가구/개인의 가처분 소득과 (순)자산을 주요 지표로 포함하였고, 노동 영역은 노동의 기회와 안정성 측면에서 실업, 고용안정성을 지표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주거 영역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 형태 및 주거 환경 등의 물리적 최저주거기준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장애 및 중증질환과 의료비 부담 정도를 주요 지표로 포함하였다.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기회 결핍 여부와 니트(NEET) 등의 지표로 구성하였고,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여가문화 활동 기회의 측면에서 여가·문화비 지출과 사회·문화 활동 시간(재량시간)을 포함하였다.

표 III-5. 청년 빈곤 분류 영역 및 영역별 지표(안)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지표 설명	빈곤선(cut-off)
[경제] - 가구/개인 소득과 (순)자산	1)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결핍	(가구)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 위 50% 미만 (개인) 개인 근로소득 임금근로 자 중위 2/3미만
	2) 순자산 (자산-채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결핍	(가구총자산-가구총부채)의 균 등화 값 중위 50% 미만
[노동] - 노동의 기회와 안정성	3) 실업	노동기회의 박탈	6개월 이상 실업(장기비경활자) 인 경우
	4) 고용안정성	노동안정성 결핍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 인 경우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지표 설명	빈곤선(cut-off)
[주거] - 주거비 부담과 주거의 질	5) 주거비 부담	주거비 과부담 위험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RIR)가 30%초과한 경우
	6)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최저 주거조건 결핍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 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
[건강] -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비 부담	7)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 의심 경우
	8) 의료비 부담	의료비 과부담 위험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 의료비 10% 초과 지출
[교육] - 교육 및 직업 훈련의 기회	9)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및 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등의 사유로 학 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그만둔 경우
	10)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교육/일/훈련 등 배제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 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회·문화자본] - 사회적 지지와 여가·문화 활동 기회	11)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의 결핍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12) 여가·문화비 지출	문화자본의 결핍	총 생활비 중 여가, 문화비 지출 수준이 중위 50% 미만
	13)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사회·문화활동 기회 결핍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 동, 학업/훈련, 가꾸유지, 개인 유지 시간을 뺀 시간)의 중위 50% 미만

먼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청년 빈곤의 개념에 대하여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1차는 4.04, 2차는 3.87로 소폭 하락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의 청년 빈곤 개념은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는데, 현재 빈곤 상태와 빈곤에 빠질 위험성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고, 일시적 빈곤 상태가 제외되는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한 청년 빈곤 개념인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Ⅲ-6. 청년 빈곤의 개념 타당성 평가

(n= 23, 단위: %, 점)

구분	전혀 타당하 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타당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1차(A)	0.0	8.7	4.3	60.9	26.1	8.7	87.0	2.00	5.00	0.82	4.04
2차(B)	0.0	8.7	13.0	60.9	17.4	8.7	78.3	2.00	5.00	0.81	3.87
GAP (B-A)	0.0	0.0	+8.7	0.0	-8.7	0.0	-8.7	0.00	0.00	-0.01	-0.17

청년 빈곤 분류 영역인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자본은 1차, 2차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청년 빈곤 분류 영역의 타당성과 중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보다 타당성과 중요성이 대체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의견으로서 주거 영역에서 가구의 형태(부모 동거, 1인가구, 쉼어하우스 등)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Ⅲ-7.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 타당성 평가

(n= 23, 단위: %, 점)

구분		전혀 타당하 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타당 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경제	1차(A)	0.0	0.0	0.0	47.8	52.2	0.0	100.0	4.00	5.00	0.51	4.52
	2차(B)	0.0	0.0	0.0	47.8	52.2	0.0	100.0	4.00	5.00	0.51	4.52
	GAP (B-A)	0.0	0.0	0.0	0.0	0.0	0.0	0.0	0.00	0.00	0.00	0.00
노동	1차(A)	0.0	4.3	0.0	43.5	52.2	4.3	95.7	2.00	5.00	0.73	4.43
	2차(B)	0.0	0.0	4.3	30.4	65.2	0.0	95.7	3.00	5.00	0.58	4.61
	GAP (B-A)	0.0	-4.3	+4.3	-13.1	+13.0	-4.3	0.0	+1.00	0.00	-0.15	+0.18

구분		전혀 타당하 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타당 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주거	1차(A)	0.0	0.0	4.3	47.8	47.8	0.0	95.7	3.00	5.00	0.59	4.43
	2차(B)	0.0	0.0	4.3	43.5	52.2	0.0	95.7	3.00	5.00	0.59	4.48
	GAP (B-A)	0.0	0.0	0.0	-4.3	+4.4	0.0	0.0	0.00	0.00	0.00	+0.05
건강	1차(A)	0.0	0.0	4.3	52.2	43.5	0.0	95.7	3.00	5.00	0.58	4.39
	2차(B)	0.0	0.0	4.3	47.8	47.8	0.0	95.7	3.00	5.00	0.59	4.43
	GAP (B-A)	0.0	0.0	0.0	-4.4	+4.3	0.0	0.0	0.00	0.00	+0.01	+0.04
교육	1차(A)	0.0	0.0	8.7	52.2	39.1	0.0	91.3	3.00	5.00	0.63	4.30
	2차(B)	0.0	0.0	4.3	52.2	43.5	0.0	95.7	3.00	5.00	0.58	4.39
	GAP (B-A)	0.0	0.0	-4.4	0.0	+4.4	0.0	+4.4	0.00	0.00	-0.05	+0.09
사회· 문화 자본	1차(A)	0.0	4.3	13.0	39.1	43.5	4.3	82.6	2.00	5.00	0.85	4.22
	2차(B)	0.0	4.3	17.4	34.8	43.5	4.3	78.3	2.00	5.00	0.89	4.17
	GAP (B-A)	0.0	0.0	+4.4	-4.3	0.0	0.0	-4.3	0.00	0.00	+0.04	-0.05

표 III-8.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 중요성 평가

(n= 23, 단위: %, 점)

구분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중요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경제	1차(A)	0.0	0.0	4.3	56.5	39.1	0.0	95.7	3.00	5.00	0.57	4.35
	2차(B)	0.0	0.0	0.0	43.5	56.5	0.0	100.0	4.00	5.00	0.51	4.57
	GAP (B-A)	0.0	0.0	-4.3	-13.0	+17.4	0.0	+4.3	+1.00	0.00	-0.06	+0.22
노동	1차(A)	0.0	0.0	0.0	26.1	73.9	0.0	100.0	4.00	5.00	0.45	4.74
	2차(B)	0.0	0.0	0.0	21.7	78.3	0.0	100.0	4.00	5.00	0.42	4.78
	GAP (B-A)	0.0	0.0	0.0	-4.4	+4.4	0.0	0.0	0.00	0.00	-0.03	+0.04

구분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중요 하지 않음	중요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주거	1차(A)	0.0	0.0	8.7	39.1	52.2	0.0	91.3	3.00	5.00	0.66	4.43
	2차(B)	0.0	0.0	4.3	39.1	56.5	0.0	95.7	3.00	5.00	0.59	4.52
	GAP (B-A)	0.0	0.0	-4.4	0.0	+4.3	0.0	+4.4	0.00	0.00	-0.07	+0.09
건강	1차(A)	0.0	0.0	13.0	60.9	26.1	0.0	87.0	3.00	5.00	0.63	4.13
	2차(B)	0.0	0.0	4.3	69.6	26.1	0.0	95.7	3.00	5.00	0.52	4.22
	GAP (B-A)	0.0	0.0	-8.7	+8.7	0.0	0.0	+8.7	0.00	0.00	-0.11	+0.09
교육	1차(A)	0.0	0.0	13.0	30.4	56.5	0.0	87.0	3.00	5.00	0.73	4.43
	2차(B)	0.0	0.0	4.3	34.8	60.9	0.0	95.7	3.00	5.00	0.59	4.57
	GAP (B-A)	0.0	0.0	-8.7	+4.4	+4.4	0.0	+8.7	0.00	0.00	-0.14	+0.14
사회 · 문화 자본	1차(A)	0.0	4.3	17.4	65.2	13.0	4.3	78.3	2.00	5.00	0.69	3.87
	2차(B)	0.0	4.3	17.4	52.2	26.1	4.3	78.3	2.00	5.00	0.80	4.00
	GAP (B-A)	0.0	0.0	0.0	-13.0	+13.1	0.0	0.0	0.00	0.00	+0.11	+0.13

다음으로 청년 빈곤의 영역별 지표 타당성 평가 결과를 표에 제시하였다.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 가처분 소득 기준 수정 및 순자산과 노동안정성,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의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고,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 여가·문화비 지출의 지표를 삭제하였다. 이에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보다 청년 빈곤 지표의 타당성과 중요성이 대체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의견으로서 니트에 대한 지표설명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9. 청년 빈곤의 지표 타당성 평가

(n= 23, 단위: %, 점)

영역별 지표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타당 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1차(A)	0.0	0.0	0.0	47.8	52.2	0.0	100.0	4.00	5.00	0.51	4.52
	2차(B)	0.0	0.0	0.0	52.2	47.8	0.0	100.0	4.00	5.00	0.51	4.48
	GAP (B-A)	0.0	0.0	0.0	+4.4	-4.4	0.0	0.0	0.00	0.00	0.00	-0.04
순자산 (자산-채무) (가구)	1차(A)	0.0	8.7	13.0	47.8	30.4	8.7	78.3	2.00	5.00	0.90	4.00
	2차(B)	0.0	0.0	13.0	60.9	26.1	0.0	87.0	3.00	5.00	0.63	4.13
	GAP (B-A)	0.0	-8.7	0.0	+13.1	-4.3	-8.7	+8.7	+1.00	0.00	-0.27	+0.13
실업	1차(A)	0.0	0.0	4.3	26.1	69.6	0.0	95.7	3.00	5.00	0.57	4.65
	2차(B)	0.0	0.0	4.3	30.4	65.2	0.0	95.7	3.00	5.00	0.58	4.61
	GAP (B-A)	0.0	0.0	0.0	+4.3	-4.4	0.0	0.0	0.00	0.00	+0.01	-0.04
노동안정성	1차(A)	0.0	0.0	13.0	47.8	39.1	0.0	87.0	3.00	5.00	0.69	4.26
	2차(B)	0.0	0.0	4.3	52.2	43.5	0.0	95.7	3.00	5.00	0.58	4.39
	GAP (B-A)	0.0	0.0	-8.7	+4.4	+4.4	0.0	+8.7	0.00	0.00	-0.11	+0.13
주거비부담	1차(A)	0.0	0.0	13.0	43.5	43.5	0.0	87.0	3.00	5.00	0.70	4.30
	2차(B)	0.0	0.0	8.7	43.5	47.8	0.0	91.3	3.00	5.00	0.66	4.39
	GAP (B-A)	0.0	0.0	-4.3	0.0	+4.3	0.0	+4.3	0.00	0.00	-0.04	+0.09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1차(A)	0.0	0.0	8.7	26.1	65.2	0.0	91.3	3.00	5.00	0.66	4.57
	2차(B)	0.0	0.0	0.0	47.8	52.2	0.0	100.0	4.00	5.00	0.51	4.52
	GAP (B-A)	0.0	0.0	-8.7	+21.7	-13.0	0.0	+8.7	+1.00	0.00	-0.15	-0.05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 질환	1차(A)	0.0	0.0	13.0	43.5	43.5	0.0	87.0	3.00	5.00	0.70	4.30
	2차(B)	0.0	0.0	8.7	56.5	34.8	0.0	91.3	3.00	5.00	0.62	4.26
	GAP (B-A)	0.0	0.0	-4.3	+13.0	-8.7	0.0	+4.3	0.00	0.00	-0.08	-0.04

영역별 지표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타당 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의료비 부담	1차(A)	0.0	0.0	17.4	56.5	26.1	0.0	82.6	3.00	5.00	0.67	4.09
	2차(B)	0.0	0.0	13.0	60.9	26.1	0.0	87.0	3.00	5.00	0.63	4.13
	GAP (B-A)	0.0	0.0	-4.4	+4.4	0.0	0.0	+4.4	0.00	0.00	-0.04	+0.04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1차(A)	0.0	0.0	8.7	43.5	47.8	0.0	91.3	3.00	5.00	0.66	4.39
	2차(B)	0.0	0.0	0.0	43.5	56.5	0.0	100.0	4.00	5.00	0.51	4.57
	GAP (B-A)	0.0	0.0	-8.7	0.0	+8.7	0.0	+8.7	+1.00	0.00	-0.15	+0.18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1차(A)	0.0	4.3	17.4	60.9	17.4	4.3	78.3	2.00	5.00	0.73	3.91
	2차(B)	0.0	4.3	13.0	52.2	30.4	4.3	82.6	2.00	5.00	0.79	4.09
	GAP (B-A)	0.0	0.0	-4.4	-8.7	+13.0	0.0	+4.3	0.00	0.00	+0.06	+0.18
사회적 지지	1차(A)	0.0	4.3	17.4	39.1	39.1	4.3	78.3	2.00	5.00	0.87	4.13
	2차(B)	0.0	4.3	17.4	47.8	30.4	4.3	78.3	2.00	5.00	0.82	4.04
	GAP (B-A)	0.0	0.0	0.0	+8.7	-8.7	0.0	0.0	0.00	0.00	-0.05	-0.09
여가·문화비 지출 ※지표 삭제	1차(A)	0.0	8.7	17.4	65.2	8.7	8.7	73.9	2.00	5.00	0.75	3.74
	2차(B)	0.0	8.7	21.7	43.5	26.1	8.7	69.6	2.00	5.00	0.92	3.87
	GAP (B-A)	0.0	0.0	+4.3	-21.7	+17.4	0.0	-4.3	0.00	0.00	+0.17	+0.13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1차(A)	0.0	4.3	30.4	43.5	21.7	4.3	65.2	2.00	5.00	0.83	3.83
	2차(B)	0.0	4.3	13.0	56.5	26.1	4.3	82.6	2.00	5.00	0.77	4.04
	GAP (B-A)	0.0	0.0	-17.4	+13.0	+4.4	0.0	+17.4	0.00	0.00	-0.06	+0.21

표 III-10. 청년 빈곤의 영역별 지표 중요성 평가

(n= 23, 단위: %, 점)

영역별 지표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1차(A)	0.0	0.0	0.0	39.1	60.9	0.0	100.0	4.00	5.00	0.50	4.61
	2차(B)	0.0	0.0	0.0	30.4	69.6	0.0	100.0	4.00	5.00	0.47	4.70
	GAP (B-A)	0.0	0.0	0.0	-8.7	+8.7	0.0	0.0	0.00	0.00	-0.03	+0.09
순자산 (자산-채무) (가구)	1차(A)	0.0	4.3	26.1	43.5	26.1	4.3	69.6	2.00	5.00	0.85	3.90
	2차(B)	0.0	0.0	26.1	43.5	30.4	0.0	73.9	3.00	5.00	0.77	4.04
	GAP (B-A)	0.0	-4.3	0.0	0.0	+4.3	-4.3	+4.3	+1.00	0.00	-0.08	+0.14
실업	1차(A)	0.0	0.0	0.0	21.7	78.3	0.0	100.0	4.00	5.00	0.42	4.80
	2차(B)	0.0	0.0	0.0	8.7	91.3	0.0	100.0	4.00	5.00	0.29	4.91
	GAP (B-A)	0.0	0.0	0.0	-13.0	+13.0	0.0	0.0	0.00	0.00	-0.13	+0.11
노동안정성	1차(A)	0.0	0.0	8.7	56.5	34.8	0.0	91.3	3.00	5.00	0.62	4.30
	2차(B)	0.0	0.0	4.3	39.1	56.5	0.0	95.7	3.00	5.00	0.59	4.52
	GAP (B-A)	0.0	0.0	-4.4	-17.4	+21.7	0.0	+4.4	0.00	0.00	-0.03	+0.22
주거비부담	1차(A)	0.0	0.0	17.4	34.8	47.8	0.0	82.6	3.00	5.00	0.76	4.30
	2차(B)	0.0	0.0	4.3	47.8	47.8	0.0	95.7	3.00	5.00	0.59	4.43
	GAP (B-A)	0.0	0.0	-13.1	+13.0	0.0	0.0	+13.1	0.00	0.00	-0.17	+0.13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1차(A)	0.0	0.0	13.0	21.7	65.2	0.0	87.0	3.00	5.00	0.73	4.50
	2차(B)	0.0	0.0	0.0	30.4	69.6	0.0	100.0	4.00	5.00	0.47	4.70
	GAP (B-A)	0.0	0.0	-13.0	+8.7	+4.4	0.0	+13.0	+1.00	0.00	-0.26	+0.20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 질환	1차(A)	0.0	0.0	17.4	34.8	47.8	0.0	82.6	3.00	5.00	0.76	4.30
	2차(B)	0.0	0.0	17.4	39.1	43.5	0.0	82.6	3.00	5.00	0.75	4.26
	GAP (B-A)	0.0	0.0	0.0	+4.3	-4.3	0.0	0.0	0.00	0.00	-0.01	-0.04

영역별 지표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의료비 부담	1차(A)	0.0	0.0	30.4	47.8	21.7	0.0	69.6	3.00	5.00	0.73	3.91
	2차(B)	0.0	0.0	21.7	65.2	13.0	0.0	78.3	3.00	5.00	0.60	3.91
	GAP (B-A)	0.0	0.0	-8.7	+17.4	-8.7	0.0	+8.7	0.00	0.00	-0.13	0.00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1차(A)	0.0	0.0	4.3	39.1	56.5	0.0	95.7	3.00	5.00	0.59	4.52
	2차(B)	0.0	0.0	0.0	34.8	65.2	0.0	100.0	4.00	5.00	0.49	4.65
	GAP (B-A)	0.0	0.0	-4.3	-4.3	+8.7	0.0	+4.3	+1.00	0.00	-0.10	+0.13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1차(A)	0.0	4.3	17.4	43.5	34.8	4.3	78.3	2.00	5.00	0.85	4.09
	2차(B)	0.0	4.3	4.3	56.5	34.8	4.3	91.3	2.00	5.00	0.74	4.22
	GAP (B-A)	0.0	0.0	-13.1	+13.0	0.0	0.0	+13.0	0.00	0.00	-0.11	+0.13
사회적 지지	1차(A)	0.0	4.3	26.1	34.8	34.8	4.3	69.6	2.00	5.00	0.90	4.00
	2차(B)	0.0	8.7	21.7	47.8	21.7	8.7	69.6	2.00	5.00	0.89	3.83
	GAP (B-A)	0.0	+4.4	-4.4	+13.0	-13.1	+4.4	0.0	0.00	0.00	-0.01	-0.17
사회·문화활동 시간(재량시 간)	1차(A)	0.0	8.7	26.1	52.2	13.0	8.7	65.2	2.00	5.00	0.82	3.70
	2차(B)	0.0	4.3	30.4	43.5	21.7	4.3	65.2	2.00	5.00	0.83	3.83
	GAP (B-A)	0.0	-4.4	+4.3	-8.7	+8.7	-4.4	0.0	0.00	0.00	+0.01	+0.13

마지막으로 청년 빈곤의 지표별 빈곤선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청년 빈곤의 각 지표별 빈곤선에 대하여 2차 조사에서 1차 조사보다 타당성이 대체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소득 빈곤의 경우 2차 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위 50%미만으로 기준을 수정하였는데, 타당도가 4.04로 상승하였다.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의 경우 2차 조사에서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로서 기준을 명확히 하였는데, 1차, 2차 모두 4.17의 높은 타당도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안정성의 빈곤선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이 노동불안을 대표하기에 사회적 고용 형태의 변화가 많이 진전된 상태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11. 청년 빈곤의 지표별 빈곤선 타당성 평가

(n= 23, 단위: %, 점)

빈곤선(cut-off)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타당 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가구) 균등화한 가처분 소득 중위 50% 미만	1차(A)	0.0	4.3	8.7	52.2	34.8	4.3	87.0	2.00	5.00	0.78	4.17
	2차(B)	0.0	4.3	8.7	39.1	47.8	4.3	87.0	2.00	5.00	0.82	4.30
	GAP (B-A)	0.0	0.0	0.0	-13.1	+13.0	0.0	0.0	0.00	0.00	+0.04	+0.13
(개인) 개인 근로소득 임 금근로자 중위 50%미만	1차(A)	0.0	4.3	21.7	56.5	17.4	4.3	73.9	2.00	5.00	0.76	3.87
	2차(B)	0.0	0.0	21.7	52.2	26.1	0.0	78.3	3.00	5.00	0.71	4.04
	GAP (B-A)	0.0	-4.3	0.0	-4.3	+8.7	-4.3	+4.4	+1.00	0.00	-0.05	+0.17
(가구총자산- 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50% 미만	1차(A)	0.0	4.3	21.7	47.8	26.1	4.3	73.9	2.00	5.00	0.82	3.96
	2차(B)	0.0	8.7	13.0	65.2	13.0	8.7	78.3	2.00	5.00	0.78	3.83
	GAP (B-A)	0.0	+4.4	-8.7	+17.4	-13.1	+4.4	+4.4	0.00	0.00	-0.04	-0.13
6개월 이상 실업(장기비 경활자)인 경우	1차(A)	4.3	0.0	26.1	34.8	34.8	4.3	69.6	1.00	5.00	1.02	3.96
	2차(B)	0.0	0.0	17.4	52.2	30.4	0.0	82.6	3.00	5.00	0.69	4.13
	GAP (B-A)	-4.3	0.0	-8.7	+17.4	-4.4	-4.3	+13.0	+2.00	0.00	-0.33	+0.17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 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1차(A)	0.0	4.3	30.4	43.5	21.7	4.3	65.2	2.00	5.00	0.83	3.83
	2차(B)	0.0	4.3	26.1	43.5	26.1	4.3	69.6	2.00	5.00	0.85	3.91
	GAP (B-A)	0.0	0.0	-4.3	0.0	+4.4	0.0	+4.4	0.00	0.00	+0.02	+0.08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 (RIR)가 30% 초과한 경 우	1차(A)	0.0	4.3	26.1	43.5	26.1	4.3	69.6	2.00	5.00	0.85	3.91
	2차(B)	0.0	4.3	17.4	52.2	26.1	4.3	78.3	2.00	5.00	0.80	4.00
	GAP (B-A)	0.0	0.0	-8.7	+8.7	0.0	0.0	+8.7	0.00	0.00	-0.05	+0.09

빈곤선(cut-off)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타당 하지 않음	타당함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하는 경우	1차(A)	0.0	0.0	4.3	56.5	39.1	0.0	95.7	3.00	5.00	0.57	4.35
	2차(B)	0.0	0.0	8.7	39.1	52.2	0.0	0.0	3.00	5.00	0.66	4.43
	GAP (B-A)	0.0	0.0	+4.4	-17.4	+13.1	0.0	-95.7	0.00	0.00	+0.09	+0.08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 의심 경우	1차(A)	0.0	0.0	30.4	34.8	34.8	0.0	69.6	3.00	5.00	0.82	4.04
	2차(B)	0.0	4.3	21.7	34.8	39.1	4.3	73.9	2.00	5.00	0.90	4.09
	GAP (B-A)	0.0	+4.3	-8.7	0.0	+4.3	+4.3	+4.3	-1.00	0.00	+0.08	+0.05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 의료비 10% 초과 지출	1차(A)	4.3	4.3	26.1	52.2	13.0	8.7	65.2	1.00	5.00	0.93	3.65
	2차(B)	0.0	8.7	26.1	43.5	21.7	8.7	65.2	2.00	5.00	0.90	3.78
	GAP (B-A)	-4.3	+4.4	0.0	-8.7	+8.7	0.0	0.0	+1.00	0.00	-0.03	+0.13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 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1차(A)	0.0	4.3	13.0	43.5	39.1	4.3	82.6	2.00	5.00	0.83	4.17
	2차(B)	0.0	4.3	13.0	43.5	39.1	4.3	82.6	2.00	5.00	0.83	4.17
	GAP (B-A)	0.0	0.0	0.0	0.0	0.0	0.0	0.0	0.00	0.00	0.00	0.00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차(A)	0.0	4.3	30.4	39.1	26.1	4.3	65.2	2.00	5.00	0.87	3.87
	2차(B)	0.0	4.3	21.7	60.9	13.0	4.3	73.9	2.00	5.00	0.72	3.83
	GAP (B-A)	0.0	0.0	-8.7	+21.8	-13.1	0.0	+8.7	0.00	0.00	-0.15	-0.04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1차(A)	0.0	4.3	13.0	52.2	30.4	4.3	82.6	2.00	5.00	0.79	4.09
	2차(B)	0.0	0.0	21.7	47.8	30.4	78.3	0.0	3.00	5.00	0.73	4.09
	GAP (B-A)	0.0	-4.3	+8.7	-4.4	0.0	+74.0	-82.6	+1.00	0.00	-0.06	0.00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 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의 중위 50% 미만	1차(A)	0.0	17.4	17.4	60.9	4.3	17.4	65.2	2.00	5.00	0.85	3.52
	2차(B)	0.0	8.7	43.5	30.4	17.4	8.7	47.8	2.00	5.00	0.90	3.57
	GAP (B-A)	0.0	-8.7	+26.1	-30.5	+13.1	-8.7	-17.4	0.00	0.00	+0.05	+0.05

전술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최종 확정된 청년 빈곤의 개념과 영역별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청년 빈곤의 개념(안)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

표 III-12. 청년 빈곤 분류 영역 및 영역별 지표(최종안)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지표 설명	빈곤선(cut-off)
경제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결핍	(가구)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개인) 개인 근로소득 임금근로자 중위 50%미만
	순자산 (자산-채무)(가구)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결핍	(가구총자산-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50% 미만
노동	실업	노동기회의 박탈	6개월 이상 실업(장기비경활자)인 경우
	노동안정성	노동안정성 결핍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주거	주거비 부담	주거비 과부담 위험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RIR)가 30%초과한 경우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최저 주거조건 결핍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
건강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 의심 경우
	의료비 부담	의료비 과부담 위험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10% 초과 지출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및 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교육/일/훈련 등 배제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회· 문화 자본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의 결핍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사회·문화활동 기회 결핍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의 중위 50% 미만

2. 우리나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¹⁶⁾

1) 분석배경 및 필요성

본 장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6개 영역 13개 지표를 이용해 청년 빈곤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행기 청년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년 삶의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의 이행기 변화에 관해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이행기 청년이 경험하는 다차원적 빈곤 분석방법을 마련하였다.

(1) 청년의 이행기 특성

청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인 변화하는 집단이다. 이행(transition)은 상태(state)에서 상태 혹은 특정한 지위(status)에서 다른 지위로의 변화를 모두 포괄한다. 생애과정 관점(Life-course perspective) 청년이 경험하는 이행기는 다른 연령집단이 경험하는 이행기와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청년의 이행기는 지위, 자격을 “상실하는 과정이 아니라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특성을 갖는다(장민선,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 2017). 청년기에 기대되는 사회적 과업은 교육자격의 획득, 노동시장에의 진입과 안착, 원가구(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의 가구)로부터의 물리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 새로운 가구의 형성(결혼과 출산)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기 청년은 이러한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인 지위와 상태를 획득하면서 청년기를 살아간다.

이와 더불어 청년의 이행기는 다층적이고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다른 연령집단의 이행보다 그 양상이 더 복잡하다. 다른 연령집단의 이행은 노년기 은퇴 혹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여성의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 이행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16) 이 절은 변금선 부연구위원(서울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그러나 청년의 이행은 노동시장 이행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자격의 획득과 노동시장 진입, 독립된 공간의 획득,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민으로서의 경제적 자립, 새로운 가구 형성을 통한 새로운 사회구성 단위의 형성 등 노동시장 이행 외의 다양한 차원의 이행을 경험한다(변금선, 2020).

마지막으로, 청년의 이행기는 점차 연장되어 청년집단 내 이질성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다음 <표 III-13>은 청년 이행기의 특성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청년의 생애과정은 특정 나이에 졸업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하는 등 표준적으로 구성되었다. 표준적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청년의 이행기는 일방향적이고, 단선적이며, 순차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 교육기회 확대, 성평등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는 청년의 생애과정을 탈표준적으로 변화시켰다(변금선, 2012). 20대 초중반에 관측되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연장되었고, 학교에 다니며 취업을 하거나 취업한 뒤에 다시 학교에 다니는 등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는 이행의 중첩성과 이행순서의 다양성이 커지기 시작했다(변금선, 2020).

표 III-13. 청년 이행기의 특성 변화

구분	과거 (산업사회, 생애과정의 표준화)	현재 (탈산업사회,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이행순서	표준화된 순서배열 일방향적 이행	탈표준화된 순서배열 역방향적 이행
이행 사건	대부분의 이행사건(과업)이 발생함 교육, 노동, 독립, 결혼, 출산	발생하지 않는 이행사건(과업)이 있음 선택적 과업의 수행
이행 시점	특정 시기에 집중	다양한 시기
이행 기간	평균적 분포에 수렴	길어지고, 늦어짐
이행의 특성	단선적 예) 교육 종료 후 노동 결혼 후 출산 결혼 후 독립	중첩성 예) 교육하면서 노동 결혼과 동시에 출산 혹은 비출산 결혼 후 비독립

*출처: 변금선(2020), <표 4> 발췌.

(2) 청년 이행기의 변화와 빈곤 위험

기존의 사회정책은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집단을 ‘아동(청소년)-성인-노인’을 구분하고, 각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해왔다. 그러나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연장되면서 ‘청년’이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저성장시대의 일자리 소멸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청년의 이행기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이 이행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도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의 삶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음 [그림 III-1]은 청년의 이행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과 그 결과로서의 빈곤을 도식화한 것이다.

사 회 적 과 업	교육자격 획득	구직과 일자리 이행		주거 분리(독립)	가족 형성
	교육자격	직업 정보	일자리	독립된 주거	새로운 가구 형성
위 험 요 인	학비 부담 일-학업 병행 학업중단	구직비용 부담 하향 취업 정보 비대칭 성(부정확한 채용정보)	저임금 불안정노동 위험한 일터환경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감정노 동, 산업재해)	주거비 부담 범죄 위험 노출 열악한 주거환경 주거 정보 부족	1인가구 위험 기증 가족돌봄으로 인한 소 독상실 경력단절
결 과	저학력 경제적 자립 역량 상실	실업 구직 포기	근로빈곤 찾은 이직 이직 포기	주거 빈곤 독립 포기	가족형성 포기 일·생활 포기
니트, 사회적 고립, 부채부담, 불건강 등					

*출처: 변금선·이혜림(2021), [그림 2-1] 발췌.

그림 III-1. 청년 이행기의 사회적 위험과 빈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이행기 변화와 그에 따른 빈곤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행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점에 따른 동일 연령집단의 빈곤율을 비교하여 청년기에 관측되던 빈곤이 이후 생애주기에 관측되는 ‘빈곤 위협의 전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 빈곤 실태 파악에 있어서 청년 이행기의 변화는 특정 연령에 관측되던 취약성이 청년 이후의 연령대로 전이되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 빈곤 위협의 변화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기에 청년기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청년의 빈곤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빈곤 위험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 현재 청년의 소득 빈곤 위험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주택가격 상승, 구직기간 연장 등으로 독립을 하기 어려워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증가한 것 때문일 수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경우,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청년의 소득 빈곤이 과소추정되기 때문이다.¹⁷⁾ 이와 더불어 자료의 한계로 본 장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이행기를 보내는 청년은 일자리, 교육, 정신건강 전반에 걸쳐서 빈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¹⁸⁾

따라서 본 장에서는 청년의 이행기 변화와 빈곤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다차원적 빈곤 지표의 연령대별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여, 과거보다 최근 청년에게서 이행기의 변화와 빈곤 특성이 변화하였는지 확인하였다.

17) 우리나라는 서구국가보다 18-25세 청년 빈곤율이 낮은 편인데, 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김수정, 2020; Byun, 2020).

18) 최근 주요 국제기구와 다양한 연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집단이 청년이라고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ILO(2020)는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채 남겨진’ 청년들이 단절되고 격리된, ‘락다운 세대(Lock down generation)’가 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였다(ILO, 2020; 변금선·이혜림, 2021 재인용).

2) 분석방법

(1) 분석 내용

집단의 특성과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준거를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의 준거로 시간과 연령을 활용하였다. 첫째, 시간적 차원에서 과거보다 현재의 청년에게서 어떤 차원의 빈곤 위험이 더 커지거나, 감소하였는지 확인하고, 둘째, 연령 차원에서 그러한 변화가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다음 <표 III-14>는 본 장의 분석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청년의 다차원 빈곤 추이와 다차원 빈곤 특성 변화를 중심으로 하였다. 첫째, 청년의 다차원 빈곤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확인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선정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지표를 토대로 통계청 승인 통계와 실증연구를 이용하여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지표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령대별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과거보다 최근에, 그리고 다른 연령집단보다 청년에게서 포착되는 다차원 빈곤의 특성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영역별 지표의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상대적 빈곤 위험을 산출하여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실태를 진단하였다.

표 III-14. 분석 내용

구분		분석 내용
청년의 다차원 빈곤 추이	■ 청년층의 6개 영역별 지표의 변화 추이 분석	■ (시간) 시계열 분석 - 19~34세 청년을 포괄하는 주요 지표에 관한 최근 10여년 이내의 변화 추이 분석
청년의 다차원 빈곤 특성 변화	■ 다른 연령집단과 청년집단의 6개 영역별 지표의 차이 분석	■ (연령) 연령 비교 분석 - 19~34세 청년과 전체, 다른 연령집단과의 지표별 차이 비교 분석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위험 변화	■ 지표별 상대적 빈곤 위험 비교 분석	■ (상대적 빈곤 위험) 전체 연령 대비 청년의 빈곤 위험을 산출하여 과거보다 현재 청년의 빈곤 위험의 증가 혹은 감소 경향 분석

(2) 분석자료

다음 <표 III-15>는 지표별 분석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시기는 최근 10년 이내에 각 지표 빈곤율 산출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 시기를 포괄해 분석하였으며, 청년 연령도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청년집단 변수의 연령을 이용하였다.

표 III-15. 분석자료 개요

영역	지표	청년 연령	시기	분석자료
경제	가구소득 빈곤	19~34세	2016~2019	빈곤통계연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근로소득 빈곤	19~34세	2005~20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순자산 빈곤	19~34세 가구주	2017~202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노동	실업 ¹⁾	15~29세	2010~20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 안정성	15~29세	2013~20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주거	주거비 부담	20~34세 가구주	2017~2019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			
건강	장애 및 정신건강 ²⁾	20~30대	2015~202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통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질병통계」

영역	지표	청년 연령	시기	분석자료
	의료비 부담	19~34세 가구주	2010,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한국복지패널조사」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³⁾	13~29세	2012~2020	통계청, 「사회조사」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비참여)	15~29세	2007,201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Society at a Glance」
사회· 문화자 본	사회적 지지	20~30대	2013~2020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문화활동 시간(재량 시간)	20~30대	2014	노혜진(2019)(「한국노동패널」)

주 : 1) 노동의 '실업' 원지표는 '6개월 이상 장기실업'이나, 연령대별로 장기실업을 측정하기 어려워 실업으로 측정함.
 2) 건강의 '장애 및 정신건강' 원지표는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이나, 장애, 질환, 정신건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이용해 장애인 비율과 우울증 환자 비율로 측정함.
 3) 교육의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원지표는 '경제적 혹은 신체적 사유로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이나, 직업훈련에 관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자료가 없어서 '교육기회 미충족 사유' 문항으로 측정함.

경제영역의 빈곤 지표는 가구소득, 근로소득, 순자산 빈곤으로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빈곤율이며, 자산소득은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로 모두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근로소득은 일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을 이용해 저임금 근로 여부로 측정하였다. 노동영역의 빈곤 지표인 실업과 노동 안정성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거영역의 빈곤 지표인 주거비 부담과 최저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분석단위는 가구주이다. 건강영역 빈곤지표인 장애 및 정신건강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통계와 건강보험 질병통계를 이용하였다. 교육영역 빈곤 지표 중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은 통계청 사회조사의 교육기회 충족 관련 문항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니트 비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였다.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빈곤지표 중 사회적 지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사회·문화활동 시간 지표는 한국노동패널분석자료를 이용해 시간 빈곤을 산출한 노혜진(2019)의 실증연구를 참고해 분석하였다.

3)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

(1) 경제영역 청년 빈곤 실태

경제영역의 청년 빈곤은 가구소득, 개인의 근로소득, 순자산 빈곤율을 통해 확인하였다.

1-1. 가구소득 빈곤

경제영역의 가구소득 빈곤은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하는 개인의 빈곤율인 상대적 빈곤율로 확인하였다. <표 III-16>과 [그림 III-2]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를 보여준다. 가계 금융복지조사는 2017년(소득은 2016년)부터 행정데이터로 자료를 보정하여, 그 이전 시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6년부터 2019년의 빈곤율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세-34세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연령의 상대적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6년 10.4%에서 2019년 8.9%로 1.5%p 감소하였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¹⁹⁾

19) OECD(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15-29세 청년 부모동거 비율은 89% 이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21).

표 III-16. 상대적 빈곤율(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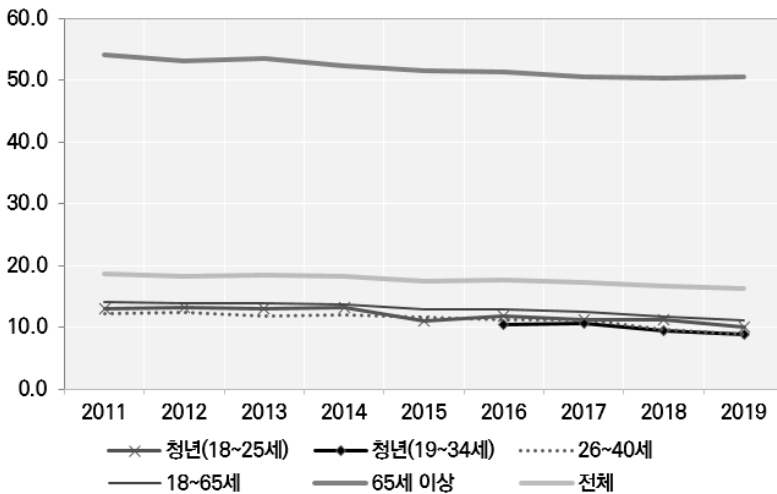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A)	2017	2018	2019(B)	B-A
18-25세	13.0	13.1	12.9	13.2	11.1	11.9	11.3	11.3	10.0	-1.9
19-34세	-	-	-	-	-	10.4	10.6	9.5	8.9	-1.5
26-40세	12.2	12.4	11.9	12.0	11.7	11.2	11.3	9.6	8.9	-2.3
18-65세	14.0	13.9	13.8	13.7	12.9	12.9	12.6	11.8	11.1	-1.8
전체	18.6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6.3	-0.8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6~2019), 「가계동향조사」(2011~2015),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19-34세 빈곤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a),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원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주 :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개인 빈곤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6~2019), 「가계동향조사」(2011~2015),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a),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원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그림 III-2. 상대적 빈곤율(2011~2019)

1-2. 근로소득 빈곤

근로소득 빈곤은 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경우로 측정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 확인하였다. <표 III-17>과 [그림 III-3]은 2005년, 2010년, 2015년, 2019-2020년까지의 연령대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2020년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5-19세가 5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20-24세 청년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34.4%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25세-29세의 저임금근로 비율은 12.0%로 15세 이상 전체 저임금근로 비율(16.3%)보다 낮았다. 이어서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05년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저임금근로 비율은 26.7%에서 2020년 16.3%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저임금근로 비율은 2019년보다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10대 청년의 낮은 고용율,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임금근로자 감소의 영향이 불안정 노동을 하는 저임금근로자에 집중된 것으로 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²⁰⁾

20) 25-29세 청년의 미취업 비율은 2019년 29.5%에서 33.0%로 증가하였으며, 15-19세 청년의 미취업 비율은 2005년 83.6%에서 2020년 93.1%로 증가하였다.

표 III-17. 저임금근로자 비율(2005, 2010, 2015, 201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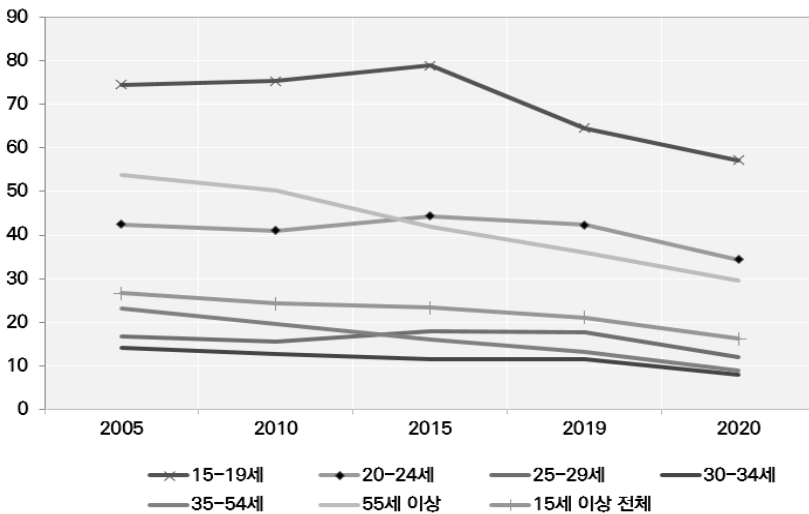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5(A)	2010	2015	2019	2020(B)	B-A
15-19세	74.4	75.3	78.8	64.5	57.1	-17.3
20-24세	42.5	41.0	44.3	42.3	34.4	-8.1
25-29세	16.7	15.6	17.9	17.8	12.0	-4.7
30-34세	14.2	12.7	11.5	11.5	8.1	-6.1
35-54세	23.2	19.7	16.1	13.2	9.0	-14.2
55세 이상	53.8	50.3	41.8	36.1	29.7	-24.1
15세 이상 전체	26.7	24.3	23.4	21.1	16.3	-1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주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금이 중위임금의 2/3에 못 미치는 근로자의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그림 III-3. 저임금근로자 비율(2005, 2010, 2015, 2019, 2020)

1-3. 순자산 빈곤

순자산 빈곤율은 가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로 측정하였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표 III-18>과 [그림 III-4]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가구주 연령별 순자산 빈곤율 변화를 보여준다. 2020년 기준 19-34세 청년가구의 순자산 빈곤율은 51.5%로 가구의 순자산 빈곤율 31.6%보다 19.9%p 높았으며, 가구주 연령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2017년 전체 가구주의 순자산 비율은 31.3%에서 2020년 31.6%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19-34세 청년 가구의 순자산 빈곤율은 47.6%에서 51.5%로 3.9%p 증가하였다. 이는 앞에서 가구소득 빈곤율이 감소한 것과 다른 결과이다. 청년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인한 분석단위의 차이일 수 있으나, 청년이 자산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III-18. 순자산 빈곤율(201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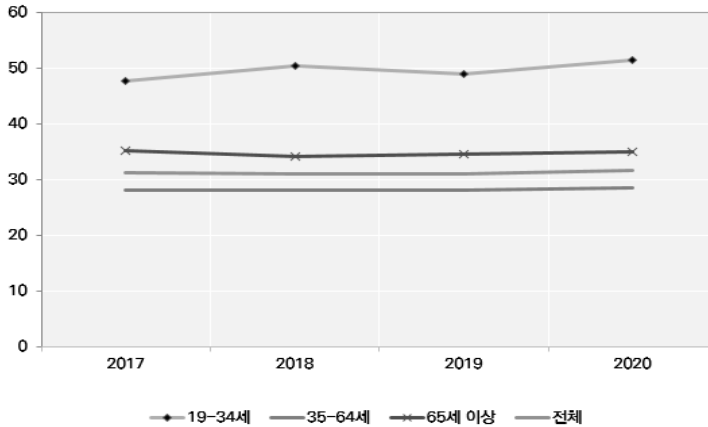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7(A)	2018	2019	2020(B)	B-A
19-34세	47.6	50.3	48.9	51.5	+3.9
35-64세	28.1	28.1	28.1	28.5	+0.4
65세 이상	35.2	34.1	34.6	34.9	-0.3
전체	31.3	31.0	31.0	31.6	+0.3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및 부채는 당해연도 기준,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함.
 2) 순자산 빈곤율은 가구주 대상으로 분석함. 가구균등화 순자산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 주 1)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및 부채는 당해연도 기준, 소득은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함.
2) 순자산 빈곤율은 가구주 대상으로 분석함. 가구균등화 순자산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

그림 III-4. 순자산 빈곤율(2017~2020)

(2) 노동영역 청년 빈곤 실태

노동영역의 청년 빈곤은 실업률, 비정규직 비율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2-1. 실업

먼저 실업은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일할 기회가 박탈된 청년의 빈곤을 반영한다. <표 III-19>와 [그림 III-5]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령별 실업률 변화를 보여준다. 2020년 기준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9.0%로 15세 이상 전체 연령의 실업률(4.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전체 집단의 실업률이

2010년 3.7%에서 2020년 4.0%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15-29세 청년의 실업률은 7.9%에서 9.0%로 1.1P 증가하였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의 청년을 위한 신규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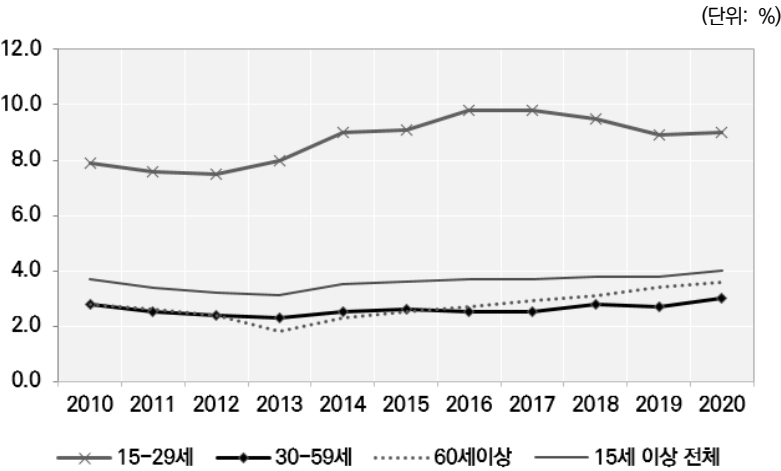
표 III-19. 실업률(2010~2020)

(단위: %)

구분	2010 (A)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B)	B-A
15-29세	7.9	7.6	7.5	8.0	9.0	9.1	9.8	9.8	9.5	8.9	9.0	+1.1
30-59세	2.8	2.5	2.4	2.3	2.5	2.6	2.5	2.5	2.8	2.7	3.0	+0.2
60세 이상	2.8	2.6	2.4	1.8	2.3	2.5	2.7	2.9	3.1	3.4	3.6	+0.8
15세 이상	3.7	3.4	3.2	3.1	3.5	3.6	3.7	3.7	3.8	3.8	4.0	+0.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주 :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비율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주 :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비율

그림 III-5. 연령별 실업률(2010~2020)

2-2. 노동 안정성 :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은 노동 안정성의 결핍을 보여주며,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등이 포함된 비정규직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표 III-20>과 [그림 III-6]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령별 비정규직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2020년 기준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9.9%로 15세 이상 전체 연령집단의 비정규직 비율(36.3%)보다 높았다. 2019년부터 한시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비정규직 비율을 측정하여 이전 시점의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측정 방식이 동일한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한 결과,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미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 안정성 결핍을 경험하는 청년의 비율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²¹⁾

표 III-20.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2013~2020)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B-A
15-29세	34.0	34.7	35.1	35.2	35.7	34.6	40.4	39.9	-0.48
15-19세	74.8	70.0	74.3	75.2	73.4	74.0	77.8	84.2	+6.31
20-29세	31.1	32.0	32.1	32.2	33.1	32.3	38.3	37.8	-0.56
30-39세	22.2	21.8	21.2	21.1	20.6	21.0	23.7	22.8	-0.87
15세 이상 전체	32.5	32.2	32.4	32.8	32.9	33.0	36.4	36.3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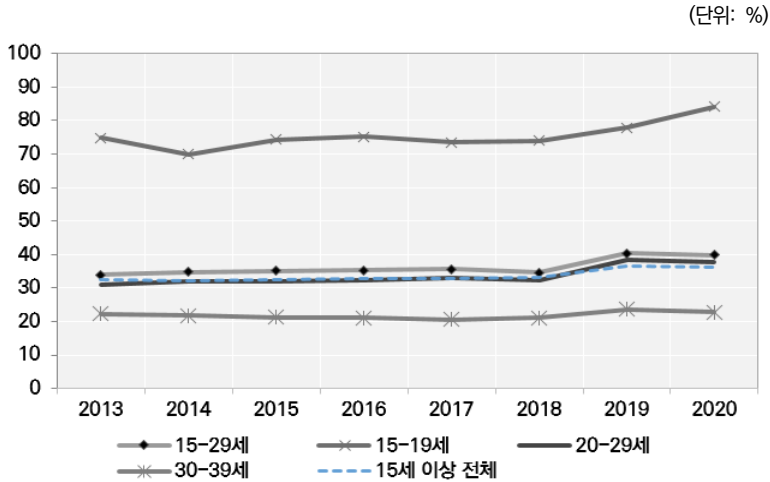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표 3-3> 수정, 발췌.

주 1) 각 연도 8월 말 기준

2) 2019년 자료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비교가 불가함.

21) 장지연과 동료들(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중 20-30대 비율은 49.8%로 절반에 가까운 플랫폼 노동자가 청년이었다(장지연, 이호근, 조임영, 박은정, 김근주, Enzo Weber, 202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표 3-3〉 수정, 발췌.

주 1) 각 연도 8월 말 기준

2) 2019년 자료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비교가 불가함.

그림 III-6. 비정규직 비율(2013~2020)

(3) 주거영역 청년 빈곤 실태

주거영역의 청년 빈곤은 주거비 과부담 위험과 최저 주거조건 결핍을 통해 확인하였다.

3-1. 주거비 부담 : 주거비 과부담 위험

주거비 과부담 위험은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RIR)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청년가구와 전체 일반가구의 RIR을 비교 분석하였다. <표 III-21> 과 [그림 III-7]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RIR 변화 추이이다. 2019년 기준 20-34세

청년 가구주의 RIR은 17.1(평균기준 21.0)로 일반가구(16.1, 평균기준 21.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청년 가구주의 RIR감소 수준은 일반 가구와 비슷했다.

표 III -21. 가구특성별 RIR(2017~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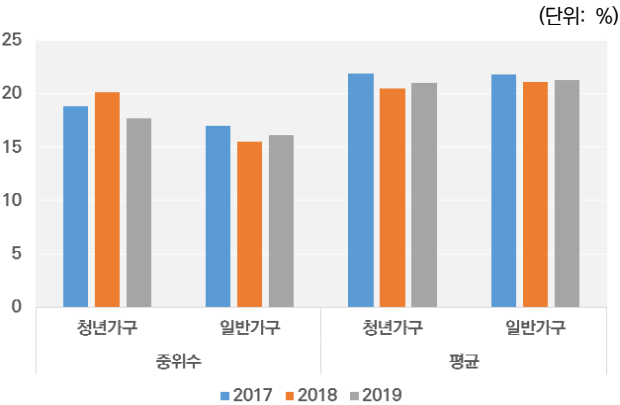
구분		2017(A)	2018	2019(B)	B-A
중위수	청년가구	18.8	20.1	17.7	-1.1
	일반가구	17.0	15.5	16.1	-0.9
평균	청년가구	21.9	20.5	21.0	-0.9
	일반가구	21.8	21.1	21.3	-0.5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327&hFormId=> 에서 2021. 8. 15. 인출.
 * 출처: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견우(2020). 표 II -24 일부 발췌.

- 주 1)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경우임.
 2) RIR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견우, 2020, p.47 주11 발췌).

$$RIR_t = \frac{median(R_{j,t})}{median(I_{j,t})} \text{ or } \frac{mean(R_{j,t})}{mean(I_{j,t})}$$

- 3) RIR 계산 시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17년 8월 6.40%, 2018년 9월 6.20% 2019년 6.10%를 적용(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견우, 2020).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327&hFormId=> 에서 2021. 8. 15. 인출.
 * 출처: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견우(2020). 표 II -24 일부 발췌.

그림 III -7. 가구특성별 RIR(2017~2019)

3-2. 주거 결핍 : 최저주거기준 미달 혹은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주거 결핍은 법정 최저주거기준 미달(방 혹은 면적 미달)과 고시원, 지하, 옥탑방 등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표 III-22>와 [그림 III-8]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 변화 추이이다. 2019년 기준 20~34세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9.0%로 일반가구(5.3%)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로 1.9%로 일반가구(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는 RIR과 유사하게 청년가구의 비율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주거영역의 청년 빈곤 수준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은 수준이나 최근 감소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거영역 빈곤 분석에서 활용한 주거실태조사는 청년이 가구주를 대상으로, 가구기준 비율을 산출한 것이므로 청년이 포함된 모든 가구 그리고 개인을 기준으로 주거 결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III-22.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2017~2019)

(단위: %)

구분		2017(A)	2018	2019(B)	B-A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5	9.4	9.0	-1.5
	일반가구	5.9	5.7	5.3	-0.6
비주택거주	청년가구	3.1	2.4	1.9	-1.2
	일반가구	2.3	1.9	1.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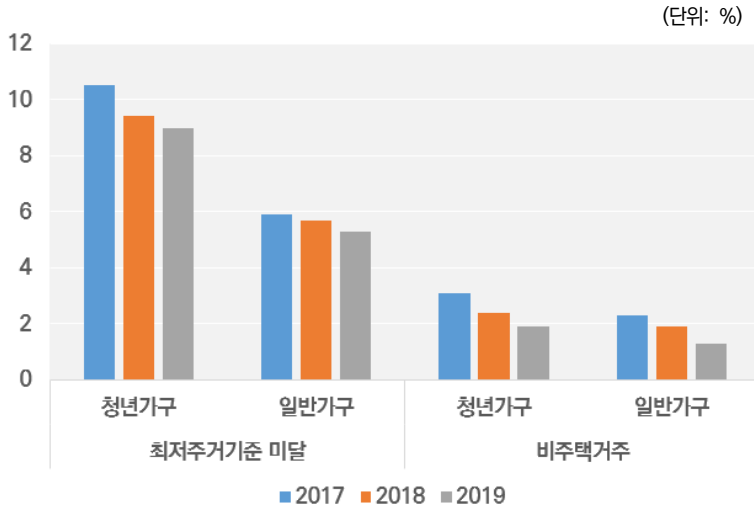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327&hFormId=> 에서 2021. 8. 15. 인출.

* 출처: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2020). 표 II-13 표 II-17 일부 발췌.

주 1)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경우임.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11.5.27)을 따름. 시설기준은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침실 및 면적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침실 수 및 주택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판단(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2020, p.37).

3) 비주택거주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임(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2020, p.33).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lId=327&hFormId=> 에서 2021. 8. 15. 인출.

*출처: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2020). 표 II-13 표 II-17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 도식화함.

- 주 1)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만 20~34세인 경우임.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11.5.27)을 따름. 시설기준은 전용 임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침실 및 면적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침실 수 및 주택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판단(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2020, p.37).
 3) 비주택거주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임(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2020, p.33)

그림 III-8.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비주택거주 가구 비율(2017~2019)

(4) 건강영역 청년 빈곤 실태

건강영역의 청년 빈곤은 신체적·정신적 불건강과 의료비 과부담 위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4-1.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 등록 장애인 비율 및 우울증 환자 비율

신체적·정신적 불건강은 청년인구 중 등록장애인 비율과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수의 비율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III-23>과 [그림 III-9]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등록장애인 수와 비율추이를 보여준다. 2020년 청년 인구의 장애인 비율은 0.6%~1.2%로 전체 인구의 장애인 비율(5.1%)보다 낮았다. 20대의 장애인 인구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장애인 인구 증가 수준보다는 낮았으며, 30대는 장애인 인구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시기로 알려진 청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II-23.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2015~2020)

(단위: %, 명)

구분		2015(A)	2016	2017	2018	2019	2020(B)	B-A
장애인 비율(%)	20~24세	1.10	1.16	1.20	1.22	1.20	1.18	+0.08
	25~29세	0.51	0.53	0.55	0.57	0.60	0.62	+0.11
	30~34세	1.48	1.33	1.20	1.13	1.12	1.13	-0.35
	전체	4.89	4.91	4.97	5.04	5.10	5.13	+0.24
장애인 수 (명)	20~24세	45,399	46,251	46,582	47,363	47,397	47,280	1,881
	25~29세	44,836	45,313	46,388	47,433	49,009	50,581	5,745
	30~34세	65,254	59,903	54,924	51,742	50,630	49,985	-15,269
	전체	2,490,406	2,511,051	2,545,637	2,585,876	2,618,918	2,633,026	142,620

*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통계(장애인현황)」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1. 8. 15.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https://umin.mois.go.kr/> 에서 2021. 8. 15. 인출).

주 : 등록장애인 비율은 주민등록통계 7월 1일 기준 인구수 중 등록장애인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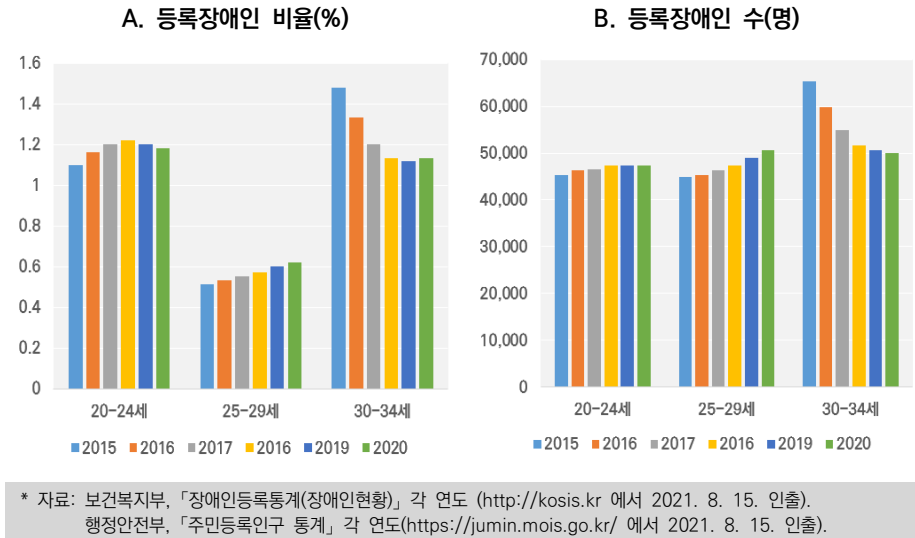


그림 III-9. 등록장애인 비율 및 장애인 수(2015~2020)

정신적 불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별 우울증 환자 비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표 III-24>와 [그림 III-10]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울증 환자 수와 비율 추이를 보여준다. 2020년 청년 중 우울증 환자 비율은 1.6%~2.1%로 15세 이상 인구 중 우울증 환자 비율(1.7%)보다 낮았으며, 특히 20-34세 우울증 환자 비율은 2016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변화 추이를 보면, 우울증 환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는데, 특히 청년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한편, 2016년 청년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15세 이상 우울증 환자 비율보다 낮았는데, 이후 청년의 우울증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험이 최근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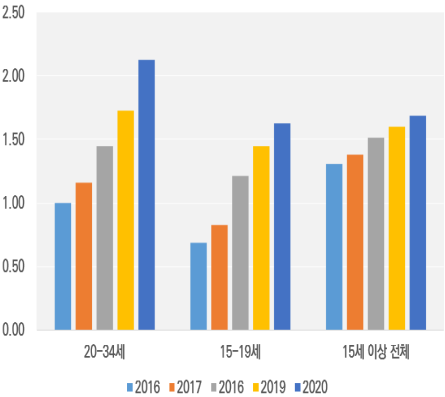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6(A)	2017	2018	2019	2020(B)	B-A
우울증 환자 비 율(%)	20~34세	1.00	1.16	1.45	1.73	2.13	+1.13
	15~19세	0.69	0.83	1.21	1.45	1.63	+0.94
	15세 이상 전체	1.31	1.38	1.52	1.60	1.69	+0.38
우울증 환자 수 (명)	20~34세	102,973	117,709	145,172	171,558	210,866	107,893
	15~19세	21,947	25,039	34,888	39,472	41,456	19,509
	15세 이상 전체	637,371	673,818	742,077	785,334	828,233	190,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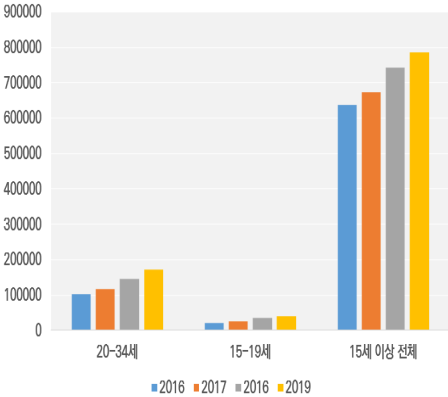
*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질병통계(관심질병통계)」 각 연도(<https://nhiss.nhis.or.kr/> 에서 2021. 8.15.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https://jumin.mois.go.kr/> 에서 2021. 8. 15. 인출).

주 : 우울증 환자 비율은 각 연도 7월 1일 주민등록인구 기준 각 연령 인구를 우울증 환자 수로 나눈 값임.

A. 우울증 환자 비율(%)



B. 우울증 환자 수(명)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질병통계(관심질병통계)」 각 연도(<https://nhiss.nhis.or.kr/> 에서 2021. 8.15.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https://jumin.mois.go.kr/> 에서 2021. 8. 15. 인출)

그림 III-10. 우울증 환자 비율 및 환자 수(2016~2020)

4-2. 의료서비스 박탈 :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

의료서비스의 박탈을 확인하기 위해 과부담 의료비 상태인 청년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표 III-25>와 [그림 III-11]은 2010년과 2019년의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을 보여준다.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은 월가처분소득 대비 보건 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며,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로 산출하였다(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2019년 19-34세 청년 중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은 8.8%, 재난적 의료비 지출 경험률은 10.5%로, 전체 연령대(과부담 의료비: 14.6%, 재난적 의료비: 18.3%)보다 낮았다. 그러나 19-34세의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은 2010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집단과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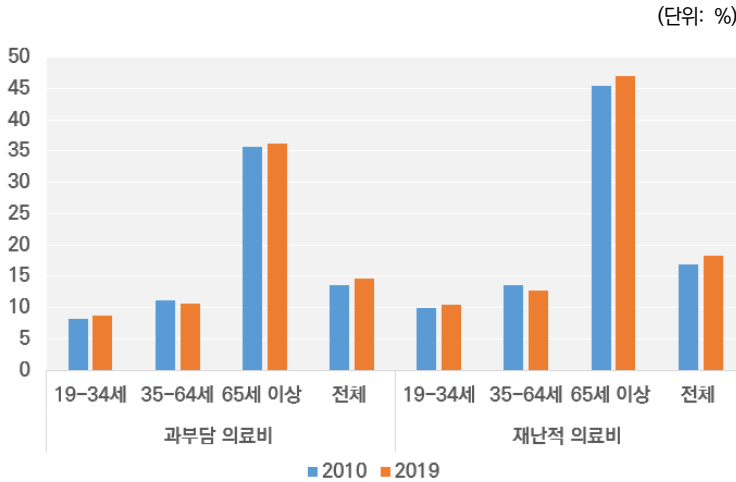
표 III-25.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2010, 2019)

(단위: %)

구분		2010(A)	2019(B)	B-A
과부담 의료비 경험률	19-34세	8.19	8.79	0.60
	35-64세	11.15	10.56	-0.59
	65세 이상	35.61	36.15	0.54
	전체	13.65	14.63	0.98
재난적 의료비 지출 경험률	19-34세	9.92	10.52	0.60
	35-64세	13.62	12.79	-0.83
	65세 이상	45.45	46.91	1.46
	전체	16.92	18.25	1.33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https://www.koweps.re.kr:442/main.do>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 주 1)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5차(2010년)와 6차연도 소득자료, 14차(2019년)와 15차연도 소득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과부담의료비는 월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며, 재난적 의료비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로 산출함(우경숙·박찬미·신영전, 2018).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https://www.koweps.re.kr:442/main.do>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 주 1)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5차(2010년)와 6차연도 소득자료, 14차(2019년)와 15차연도 소득자료를 이용해 분석함.
 2) 과부담의료비는 월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며, 재난적 의료비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로 산출함(우경숙·박찬미·신영전, 2018).

그림 III-11. 과부담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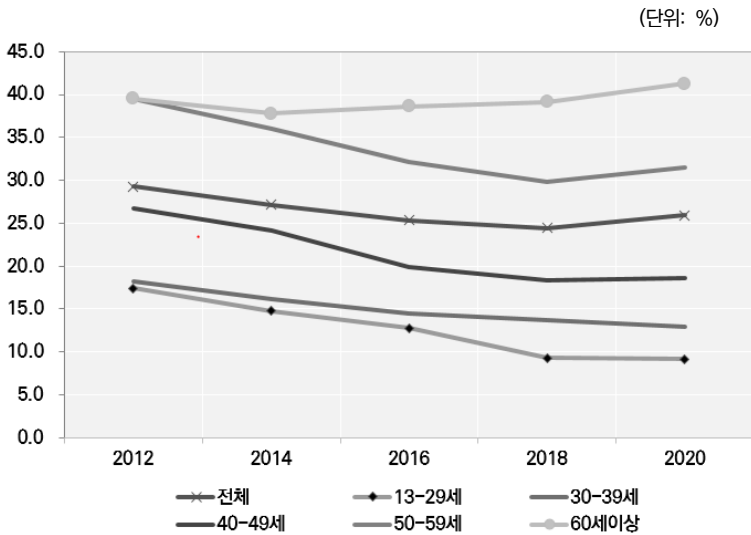
(5) 교육영역 청년 빈곤 실태

교육영역의 청년 빈곤은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과 니트 비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니트는 청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측정하기 위해 특화된 지표이므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지 않고 OECD 국가 청년 니트 비율과 비교하였다.

5-1. 교육기회 미충족

[그림 III-12]와 <표 III-26>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기회 미충족 비율 추이

이다. 교육기회 미충족은 교육기회가 미충족된 사유로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혹은 ‘질병 신체적 장애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2020년 13-29세, 30-39세의 미충족 비율은 각각 9.2%, 12.9%로 전체 연령의 비율(25.9%)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변화 추이를 보면, 2012년보다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13-29세의 미충족 비율은 2012년 17.4%에서 2020년 9.2%로 8.2%p, 약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교육기회 확충으로 교육기회에 있어서 청년이 경험하는 결핍은 과거보다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부분이 대학 등 원하는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 결핍을 경험하는 소수의 청년이 겪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과 불리함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그림 Ⅲ-12.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2012~2020)

표 III -26.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기회 미충족 경험률(2012-2020)

(단위: %)

구분		2012(A)	2014	2016	2018	2020(B)	B-A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기회 미충족 (a*(b+c/100))	전체	29.3	27.1	25.3	24.4	25.9	-3.4
	13-29세	17.4	14.8	12.8	9.3	9.2	-8.2
	30-39세	18.2	16.2	14.5	13.7	12.9	-5.3
	40-49세	26.7	24.1	19.9	18.4	18.6	-8.2
	50-59세	39.4	36.0	32.2	29.8	31.5	-7.9
	60세이상	39.5	37.8	38.6	39.1	41.2	1.7
(a)교육기회 미충족	전체	53.0	49.8	46.3	43.8	43.9	-9.1
	13-29세	34.2	31.2	27.4	22.3	20.3	-13.9
	30-39세	37.5	31.6	27.9	26.1	24.0	-13.5
	40-49세	48.1	44.2	38.5	35.5	35.3	-12.8
	50-59세	62.2	58.5	52.8	49.2	48.9	-13.3
	60세이상	74.6	72.5	70.5	67.8	67.5	-7.1
(b)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전체	54.0	53.4	53.6	54.5	57.9	3.9
	13-29세	49.1	45.3	44.7	39.7	42.5	-6.6
	30-39세	47.4	50.2	50.6	50.0	52.2	4.8
	40-49세	54.1	53.2	50.4	50.6	51.7	-2.4
	50-59세	62.1	60.4	59.6	59.4	63.4	1.3
	60세이상	52.1	51.4	54.1	56.8	60.2	8.1
(c) 질병, 신체적 장애	전체	1.2	1.1	1.1	1.3	1.1	-0.1
	13-29세	1.8	2.1	2.0	2.0	2.7	0.9
	30-39세	1.2	1.0	1.4	2.6	1.7	0.5
	40-49세	1.5	1.3	1.4	1.2	0.9	-0.6
	50-59세	1.3	1.2	1.3	1.1	1.0	-0.3
	60세이상	0.9	0.7	0.7	0.9	0.9	0.0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주 1) '교육기회 미충족' 은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2) b와 c는 교육기회가 미충족되었다고 응답한 경우, 주된 사유를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혹은 '질병, 신체적 장애 때문에' 라고 응답한 비율임.

5-2. 청년 니트 비율

청년 니트는 만15-29세 청년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표 III-27>과 [그림 III-13]은 2007년과 2017년 우리나라와 OECD의 니트 비율 변화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니트 비율은 18.4%로 OECD 국가 평균(13.4%)보다 3.9%p 더 높았다. 이는 2007년 18.2%에서 미미하게 증가한 것인데, OECD 국가의 평균 니트 비율이 2007년 13.8%에서 2017년 13.4%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구직 니트(실업자)보다 비구직 니트 비율이 높으며, 고학력 니트 비율 역시 높아 역량을 갖추고도 발휘하지 못하고 활력을 잃은 청년이 많다는 점에서 교육영역 빈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미희, 2017).

표 III-27. 청년 니트 비율(2007,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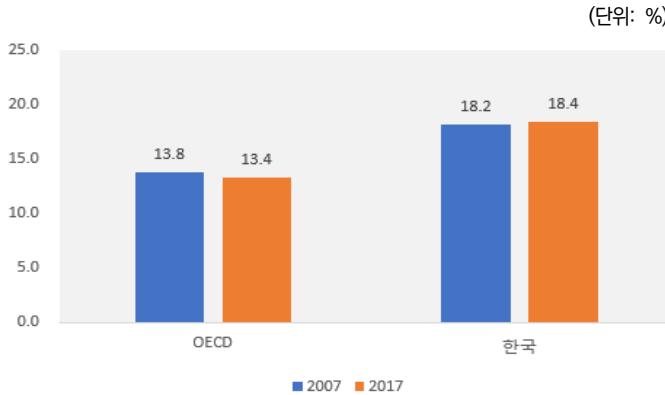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7(A)	2017(B)	B-A
한국	18.2	18.4	+0.2
OECD 평균	13.8	13.4	-0.4

* 자료: OECD (2021).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http://data.oecd.org/education/database.htm> 에서 2021. 8. 15. 인출.

* 출처: 유기영, 나도삼, 김원호, 조달호, 송인주, 이석민, 김인희, 양재섭, 남원석, 김승연, 윤민석, 손창우,반정화,오은주, 주재욱, 최유진, 정상혁, 김승준, 안기정, 신성일, 유경상, 변금선, 김진하, 이준영, 신가희, 임현정, 홍상연, 한영준, 양재환, 김고운, 김호기, 윤서연, 이보경, 안누리, 오찬섭(2020)의 p.62 결과를 표로 재구성함. (원자료 출처: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Figure 5.5.> More than one in seven young people are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의 일부 내용 발췌).

주 : 니트는 만15~29세 청년 중 현재 일, 공식적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비율임.



* 자료: OECD (2021),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http://data.oecd.org/education/database.htm> 에서 2021. 8. 15. 인출.

* 출처: 유기영, 나도삼, 김원호, 조달호, 송인주, 이석민, 김인희, 양재섭, 남원석, 김승연, 윤민석, 손창우, 방정화, 오은주, 주재욱, 최유진, 정상혁, 김승준, 안가정, 신성일, 유경상, 변금선, 김진하, 이준영, 신가희, 임현정, 홍상연, 한영준, 양재환, 김고운, 김호기, 윤서연, 이보경, 안누리, 오찬섭(2020)의 p.62 [그림 2-18] 발췌 (원자료 출처: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Figure 5.5.> More than one in seven young people are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의 일부 내용 발췌).

주 : 니트는 만15~29세 청년 중 현재 일, 공식적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비율임.

그림 Ⅲ-13. 청년 니트 비율 변화

(6) 사회·문화자본 영역 빈곤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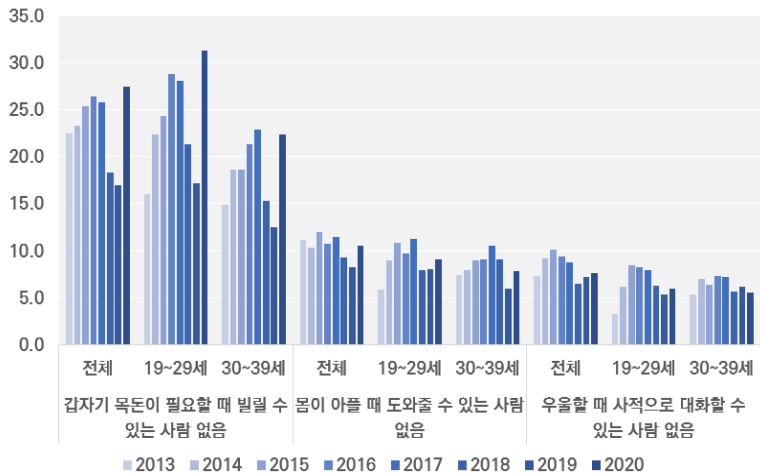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청년 빈곤은 사회적 지지 결핍과 사회·문화 활동의 결핍으로 확인하였다.

6-1. 사회적 지지 결핍률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경제적 도움, 신체적 돌봄, 정신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표 Ⅲ-28>과 [그림 Ⅲ-14]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적 지지 결핍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2020년 19-29세 청년 중 ‘목돈

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 없음' 비율은 31.3%였으며,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사람 없음'은 9.1%,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음' 비율은 6.0%였다. 경제적 지지 결핍은 전체 비율(27.4%)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돌봄과 정신적 지지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2013년부터 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적 지지가 결핍이 높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기초보장제도 수급률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청년이 경제적 지지 결핍률까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기 청년이 경험하는 소득불안정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사회보장체계뿐만 아니라 사적지원망 역시 작동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단위: %)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21. 8. 15. 인출).

주 : 2019년까지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응답자 현황임.

그림 Ⅲ-14.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2013~2019)

표 III-28. 사회적 지지 결핍률 변화(2013-2019)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B-A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 없음	전체	22.5	23.3	25.4	26.4	25.8	18.3	17.0	27.4	4.9
	19-29세	16.0	22.3	24.3	28.8	28.1	21.3	17.2	31.3	15.3
	30-39세	14.9	18.6	18.6	21.3	22.9	15.3	12.5	22.3	7.4
	40-49세	20.6	20.1	21.9	23.7	21.8	13.8	16.0	19.9	-0.7
	50-59세	28.3	24.8	29.8	27.6	26.7	18.0	16.5	23.6	-4.7
	60-69세	40.3	36.1	36.5	32.7	31.1	25.0	23.7	-	-16.6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음	전체	11.1	10.3	12.0	10.7	11.5	9.3	8.2	10.5	-0.6
	19-29세	5.9	9.0	10.8	9.7	11.3	7.9	8.0	9.1	3.2
	30-39세	7.4	7.9	9.0	9.1	10.5	9.1	6.0	7.8	0.4
	40-49세	10.1	9.8	11.1	10.9	10.5	7.8	7.5	10.1	0.0
	50-59세	16.5	10.5	13.5	11.9	10.6	10.9	8.1	9.9	-6.6
	60-69세	18.1	16.8	17.8	12.4	15.8	11.0	12.1	-	-6.0
우울할 때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없음	전체	7.3	9.2	10.1	9.4	8.8	6.5	7.2	7.6	0.3
	19-29세	3.3	6.2	8.4	8.2	7.9	6.3	5.3	6.0	2.7
	30-39세	5.3	7.0	6.4	7.3	7.2	5.6	6.2	5.5	0.2
	40-49세	6.4	8.3	8.1	9.4	8.8	5.5	7.4	7.5	1.1
	50-59세	10.3	9.8	13.0	11.0	9.0	7.2	7.4	7.2	-3.1
	60-69세	14.0	18.4	16.8	11.3	12.0	8.2	10.1	-	-3.9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http://kosis.kr> 에서 2021. 8. 15. 인출).

주 : 2019년까지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응답자 현황임.

6-2. 재량시간 빈곤율

사회·문화활동의 결핍은 시간 빈곤율로 확인하였다. <표 III-29>와 [그림 III-15]는 2014년 시간빈곤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이다(노혜진, 2019). 재량시간은 하루 총 시간에서 필수영역인 경제적 시간, 신체적 시간의 최솟값을 차감하여 산출하였으며, 재량시간이 중위값의 50% 이하인 경우 재량시간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노혜진, 2019, p.73). 2014년 20대의 재량시간 빈곤율은 2.3%, 30대는 2.2%였으며, 이는 전체 40대(4.9%)와 50대(5.4%)의 재량시간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청년의 경우 시간빈곤율은 청년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²²⁾

표 Ⅲ-29. 시간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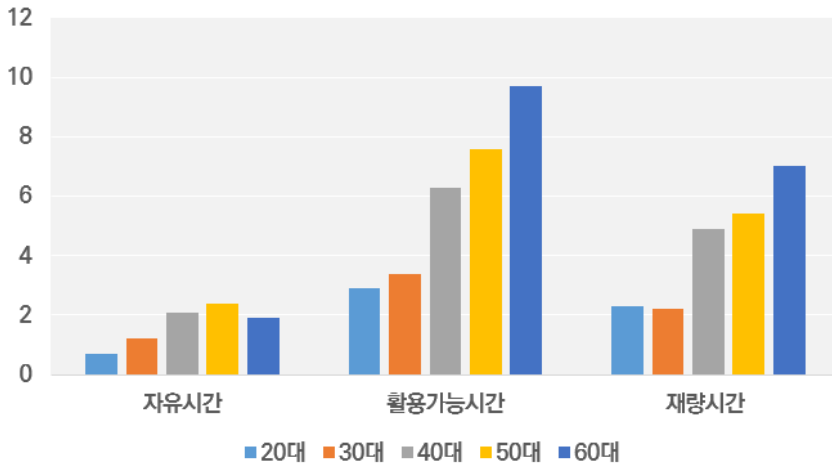
구분	자유시간	활용가능시간	재량시간
20대	0.7	2.9	2.3
30대	1.2	3.4	2.2
40대	2.1	6.3	4.9
50대	2.4	7.6	5.4
60대	1.9	9.7	7.0

* 자료: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 각 연도. <https://www.kli.re.kr/klips/index.do> 에서 2021. 8. 15. 인출.
 * 출처: 노혜진(2019)의 p.80 <표 5> 분석결과 일부 발췌.

- 주 1) '자유시간 빈곤율'은 자유시간은 하루 1,440분의 시간에서 필수 개인 유지 시간(수면시간, 개인 관리시간), 필수 유급노동(통근시간, 주된 취업활동, 부업시간), 필수 무급노동(자녀 돌봄, 자녀외 돌봄, 가사활동)을 차감한 시간이 총위 50% 미만인 경우임(노혜진, 2019, p.73).
- 2) '활용가능시간 빈곤율'은 총 시간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차감한 시간을 이상적 필수생활시간(1,066분)으로 나눈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노혜진, 2019, p.73).
- 3) '재량시간 빈곤율'은 하루 총 시간에서 필수영역인 경제적 시간, 사회적 시간, 신체적 시간의 최소값을 차감한 값이 재량시간 중위값의 50% 이하인 경우(노혜진, 2019, p.73).

22)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해 니트 청년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박미희와 조미라(2019)는 니트 청년이 시간사용 특성에 따라 돌봄, 취업과 진학 준비, 취업과 진학 몰입형, 은둔형, 주간활동, 야간활동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분석하고, 청년들의 새로운 삶의 형태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박미희, 조미라, 2019, p.193).

(단위: %)



* 자료: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 각 연도.
<https://www.kli.re.kr/klips/index.do> 에서 2021. 8. 15. 인출.

* 출처: 노혜진(2019)의 p.80 〈표 5〉 분석결과 일부 발췌.

- 1) '자유시간 빈곤율'은 자유시간은 하루 1,440분의 시간에서 필수 개인 유지 시간(수면시간, 개인관리시간), 필수 유급노동(통근시간, 주된 취업활동, 부업시간), 필수 무급노동(자녀돌봄, 자녀외돌봄, 가사활동)을 차감한 시간이 중위 50% 미만인 경우임(노혜진, 2019, p. 73).
- 2) '활용가능시간 빈곤율'은 총 시간에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차감한 시간을 이상적 필수생활시간(1,066분)으로 나눈 값이 1보다 작은 경우(노혜진, 2019, p. 73).
- 3) '재량시간 빈곤율'은 하루 총 시간에서 필수영역인 경제적 시간, 사회적 시간, 신체적 시간의 최소값을 차감한 값이 재량시간 중위값의 50% 이하인 경우(노혜진, 2019, p. 73).

그림 Ⅲ-15. 시간 빈곤율(2014)

지금까지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승인통계 등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의 빈곤 수준이 다른 연령대, 그리고 과거보다 최근에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이행기 청년의 빈곤 위험은 이행기라는 청년의 생애과정 변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빈곤 양상의 변화라는 두 축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대별 빈곤 수준과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함께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은 영역과 지표별로 다른 양상으로 분화되어

나타났으며, 영역과 지표의 수준은 청년 이행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의 이행기 주요 사회적 과업을 여겨지는 교육과 노동영역의 빈곤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년의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자산, 주거,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도 청년이 다른 연령집단보다 빈곤 수준이 더 높았다.

4) 소결

여기서는 앞에서 분석한 영역별 빈곤 실태를 상대적 빈곤 위험을 이용해 요약하여 비교하고, 이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1)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구성된 지표 측정단위와 분포 등을 고려해 지표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 빈곤 위험(relative poverty risk)은 각 지표의 전체 연령의 값으로 해당 연령집단의 값을 나누어, 해당 집단이 전체 집단과 비교하여 빈곤율이 높거나 낮은지를 보여준다(OECD, 2014). 다음 <표 III-30>은 영역별 빈곤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상대적 빈곤 위험을 정리한 것이다. 상대적 빈곤 위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별로 비교 가능한 가장 과거의 시점과 최근 시점의 빈곤 위험을 비교하였다. [그림 III-16]은 영역별 지표의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 Ⅲ-30.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변화

영역	지표	청년 연령	비교 시점 (t, t+1)	상대적 빈곤 위험		증감 (t+1)-t
				t	t+1	
경제	가구소득	19~34세	2016, 2019	0.59	0.55	-
	근로소득	25~29세	2005, 2020	0.63	0.74	+
	순자산	19~34세 가구주	2017, 2020	1.52	1.63	+
노동	실업	15~29세	2010, 2020	2.14	2.25	+
	비정규직 비율	15~29세	2019, 2020	1.11	1.10	-
주거	주거비 부담	20~34세 가구주	2017, 2019	1.11	1.10	-
	최저주거기준 미달			1.78	1.70	
	비주택거주			1.35	1.46	+
건강	장애	25~29세	2015, 2020	0.10	0.12	+
	정신건강	20~34세		0.76	1.26	+
	의료비 부담	19~34세	2010, 2019	0.60	0.60	0
교육	교육기회 결핍	13~29세	2012, 2020	0.59	0.36	-
	니트(NEET)	15~29세	2007, 2017	1.32	1.36	+
사회·문화 자본	사회적지지 (경제) 결핍	19~29	2013, 2020	0.71	1.14	+
	재량시간 빈곤	20대	2014		0.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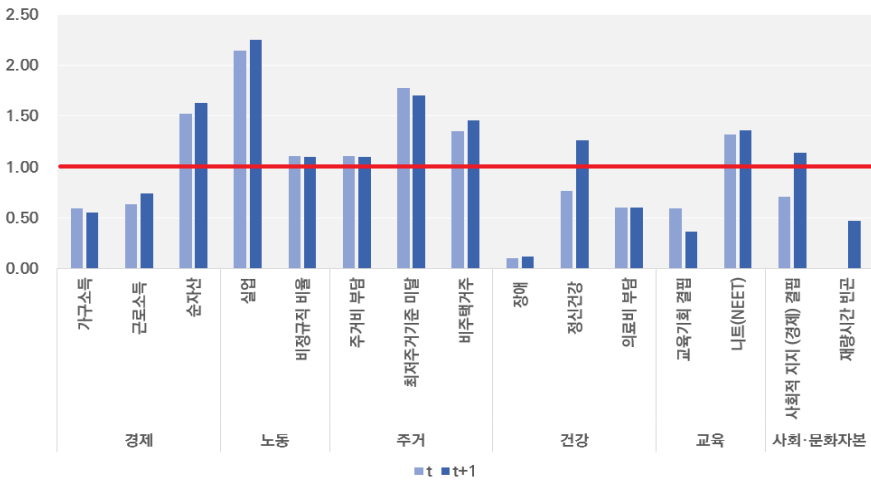
*자료: <표 Ⅲ-16>부터 <표 Ⅲ-29>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주 : 상대적 빈곤 위험은 각 지표의 전체 연령 해당 지표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임. 상대적 빈곤 위험 값이 1보다 크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크고, 1보다 작으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석함.

최근 시점(t+1)을 기준으로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높은 영역은 노동, 주거, 교육, 사회·문화자본 이었다. 특히 영역을 구성하는 지표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일관되게 높은 영역은 노동과 주거였다. 이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에서 청년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점유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이 전체 연령보다 빈곤율이 높은 지표의 상대적 빈곤 위험은 실업(2.25배), 최저주거기준 미달(1.70배), 자산(1.63배), 비주택거주(1.46배), 니트(1.36배), 정신건강(1.26배), 사회적 지지(1.14배), 노동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1.10) 순으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 위험의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 빈곤 위험이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영역은 건강이었으며, 그 외 모든 영역은 일부 지표의 상대적 빈곤 위험이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 위험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표는 정신건강이었다. 정신건강은 과거에는 전체 연령집단보다 빈곤율이 낮았지만(2015년 0.76), 2020년에는 1.26배로 증가하였다. 신체적으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불안정성 증대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청년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 결핍도 상대적 빈곤 위험이 증가하였는데, 2013년에는 전체 연령보다 결핍률이 낮았으나, 2020년에는 전체 연령보다 결핍률이 더 높게 변화하였다.



*자료: <표 Ⅲ-30>을 이용하여 도식화함.

주 : 상대적 빈곤 위험은 각 지표의 전체 연령 해당 지표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청년의 상대적 빈곤 위험임. 상대적 빈곤 위험 값이 1보다 크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크고, 1보다 작으면 전체 연령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석함.

그림 Ⅲ-16. 영역별 상대적 빈곤 위험

(2) 주요함의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요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별 지표의 빈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이행기 변화는 청년의 사회적 과업과 직결되는 영역의 빈곤 위험을 크게 만들고 있었다. 향후 노동과 교육에 관련해 결핍과 배제를 경험하는 빈곤 청년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장의 분석결과, 청년은 노동과 주거, 그리고 교육영역에서 빈곤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정착하는 것, 그리고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는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자원과 기회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과 교육영역 밖에서 일할 기회, 역량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배제된 청년, 그리고 이행기의 불안정성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한 안정적 공간으로서의 주거 자원이 결핍된 청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보다 최근의 청년은 경제영역 중 자산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청년의 순자산 빈곤율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으며, 그 경향도 최근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의 집단내 격차가 커지는 등의 청년 불평등 문제가 악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고, 청년의 집단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 청년은 빈곤연구에서 간과해온 비화폐적 영역인 건강과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하였다.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은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을 직접으로 보여주는 노동, 교육, 주거와 달리 청년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기초역량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 영역의 빈곤 위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청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소득지원만으로 청년 이행기의 배제, 박탈, 결핍을 완화하기 어려

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의 관계와 연결망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3. 청년 다차원 빈곤 심층 분석²³⁾

1)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청년 빈곤은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청년 빈곤의 실질적 양상을 반영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다차원 지표 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단일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각 차원의 독립적 의미가 약화되고, 각 차원의 정보를 잃게 되는 한계점을 지닌다(남수정, 2018). 또,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전체 영역 중 몇 개 이상의 영역에서 빈곤에 해당하면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수 중심적 접근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 하에 다차원 빈곤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청년 다차원 빈곤은 차원 간 연쇄적 또는 중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 중 어떠한 집단이 어느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빈곤 상황에 놓여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다차원 접근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이현주, 정은희,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지수 중심의 단선적인 청년 다차원 빈곤의 이해에서 벗어난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대상자 중심(person-centered approach)의 접근법

23) 이 절은 연보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을 활용하여 청년 내에 실재하는 다차원 빈곤의 하위 유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 분석의 기존 한계점을 극복하고, 청년 대상자 중심에서 다차원 빈곤의 입체적 지형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청년 다차원 빈곤을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실제 청년 다차원 빈곤의 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삶의 질과 정책수혜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도구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다차원 빈곤은 몇 개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하위 유형의 패턴은 어떠한가?

둘째, 청년 다차원 빈곤의 하위 유형은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가?

셋째,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삶의 질과 정책수혜경험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el) 15차년도 조사 자료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 규모 및 생활실태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형성 기여 및 정책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국내 수행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전국 조사로서, 표본추출 과정에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약 50%를 할당하여 추출하였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조사내용은 가구와 가구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제별로 크게 분류해보면, 가구원배경 및 개인사, 근로활동, 경제상황, 가구여건(복지욕구),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현황, 기타 영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최신의 자료로서 2020년 15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부분 조사 문항에서 응답에 대한 기준 시점은 2019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3) 분석 대상

2020년 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조사 대상인 6,460가구 중 총 6,029가구가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가운데 2019년 조사 응답 기준 시점에 청년인 가구원(가구주 포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 법정연령인 만19세부터 만34세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추출하였고, 청년 다차원 빈곤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종속변수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한 1,68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각 다차원 빈곤 지표에서 중위값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중위값 산출 과정에서 조사에 참여한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모수 추정을 위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 변인 설정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빈곤 지표 변수들은 설정하였다. 앞서 문헌분석과 델파이조사를 통해 확정된 청년 빈곤 분류 6개 영역의 각 지표 중,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조사 문항에서 가능한 변수들을 추출하였다.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 지표는 제외하거나 다른 지표로 대체하였다. 예컨대, 교육 영역에서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한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지표는 관련 문항이 부재함에 따라 제외하였고, 사회·문화활동 시간도 관련 문항이 부재함

에 따라 여가활동 지출을 통해 대리변수로서 대체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경제영역에서 소득빈곤의 경우 가구소득 또는 개인 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에 소득빈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가구 소득은 중위값 산출시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개인 횡단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후 개인 단위로 분석하였다. 개인 소득은 임금근로소득을 활용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전체 표본 대상의 횡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중위값을 산출하였다. 자산은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총 가구 자산에 대하여 균등화한 후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 자산빈곤 변수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노동 영역에서 실업은 4주간 구직자와 비경제활동자(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외) 중 구직활동포기자를 포함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노동의 불안정성으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였는데, 이 때 정규직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고용관계는 직접고용, 근로시간형태는 전일제,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한 노동자’로 분류하였으며, 비정규직은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 고용관계는 간접고용(특수고용도 포함), 근로시간 형태는 시간제,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져 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노동자’로 분류하였다.

주거 영역에서 주거비 과부담은 가구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Rent to Income Ratio, RIR)가 30%를 초과한 경우로 측정하였으며, 전세금과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기준금리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임대료에 포함하였다. 주거기준 미달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에 미달하거나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등)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변인을 설정하였다.

건강 영역에서 신체적/정신적 불건강은 중증장애가 있거나 우울이 의심되는 경우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CES-D

11개 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전체 20문항의 CES-D의 우울증 의심에 대한 임계치는 16점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11문항의 총점 8.8점은 20문항의 16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한국복지패널의 CES-D 11개 문항의 응답값을 0~3점으로 리코딩한 후 합이 8.8점이 넘는 경우 우울의심으로 판단하였다. 의료비 과부담은 생활비 중 월보건의료비가 월가처분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교육 영역에서는 니트(NEET)에 대한 변인을 구성하였는데, 비경제활동 청년 중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에서는 학원이나 민간기관 등의 비공식적인 교육 참여에 대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식교육으로서 정규교육기관에서 학업 중인 경우만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변수 설정에 한계가 있다.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 먼저 사회자본 빈곤의 경우 어려울 때 가족관계나 사회적 친분관계에 모두 불만족하는 경우로 변인을 설정하였으며, 즉, 어느 사회적 관계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자본 빈곤은 시간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교양오락 등 여가비 지출 금액이 전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로 변인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유형 변인을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연령은 초기 청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19-24세, 25세-34세로 구분하였다. 거주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변인을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대학(전문대, 4년제)재학, 대학졸업,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대학재학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최종 학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졸업과의 사회적 의미와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혼인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 및 사별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가구유형은 청년부부가구, 청년독립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로 구분

하여 변인을 설정하였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삶의 질과 정책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인도 함께 구성하였다.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문항인 8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가족의 수입 만족도, 직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건강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대체로 만족, 3=그저 그렇다, 4=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로 측정된 문항을 그대로 구성하였다. 삶의 사다리 인식은 0부터 10까지 사다리 칸에서 10은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0은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낼 때, 현재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는지 물어본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삶의 사다리 인식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 생각은 ‘지금까지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질문에 예, 아니요로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정책 경험은 빈곤계층 대상의 주요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개인 단위의 수급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가구에서 가구원 전부 또는 일부 수급인 경우에 급여 수급으로 판단하였다. 생계급여는 일반수급가구, 조건부수급가구, 특례가구 모두 포함하였으며,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 무료 진료를 포함하였고, 주거급여는 임차급여(특례포함) 또는 수선유지급여(특례포함)를 받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교육급여도 가구원 중 1명이라도 받는 경우 수급자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모든 취업 및 미취업 응답자를 대상으로 2019년 1년간 정부가 제공하는 아래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총 12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는데, 청년이 지원 불가능한 노인일자리와,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회적일자

리, 직장체험연수, 실업자직업훈련, 창업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인턴제도, 근로자능력개발, 취업성공패키지 10개 항목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여부를 더미변인으로 구성하였다.

(5)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다차원 빈곤의 입체적 지형을 밝히고자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11개 지표를 토대로 청년 다차원 빈곤의 잠재 계층을 도출하고, 그 패턴을 살펴보았다. 이후 청년 다차원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요인을 검증하고, 이러한 청년 다차원 빈곤에 따라 삶의 질과 정책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통계적으로 다양한 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잠재 계층의 수를 결정한다. 먼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와 같은 정보준거지수(information criterion indices)를 이용하여 잠재 계층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잠재 계층의 수를 증가하며 모형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조정된 차이 검증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과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주로 활용한다. 모형 비교는 잠재 계층의 수가 k개인 모형이 k-1개인 모형과 비교했을 때 차이 검증의 p값이 유의하면 k개 모형을 선택하게 된다(Muthén, 2004; 권재기, 2011 재인용). 이 외에도 분류의 질(Entropy)은 .8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Muthén, 2004; 노연경, 2019 재인용).

아울러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를 살펴

보기 위해 기초적으로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항로지스틱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삶의 질과 정책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함께 수행하였다. 전체 분석 모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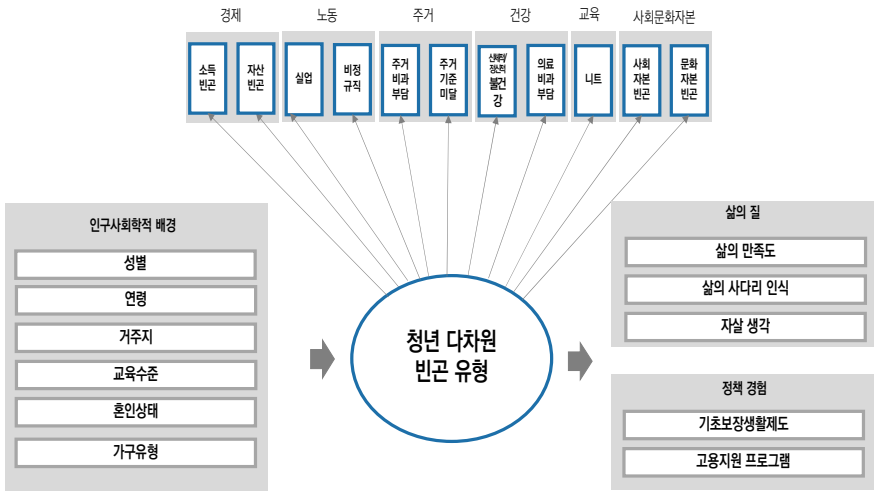


그림 Ⅲ-17. 청년 다차원 빈곤 심층 분석 모형

2) 분석 결과

(1)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CA)을 적용하였다. 청년 다차원 빈곤의 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정보준거지수와 χ^2 검증, 분류의 질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 -31.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유형 분류 기준

구분			잠재유형의 수				
			1-class	2-class	3-class	4-class	5-class
분류기준	정보준거 지수	AIC	13690.945	13432.220	13108.044	13067.524	13060.608
		BIC	13750.683	13557.126	13298.119	13322.767	13381.019
		SABIC	13715.738	13484.058	13186.929	13173.454	13193.584
	χ^2 검증	LMR LRT	NA	0.000	0.000	0.000	0.505
		BLRT	NA	0.000	0.000	0.000	0.000
	분류의질	Entropy	1.000	0.581	0.853	0.788	0.685
잠재유형 분류율(%)	1		100.000	0.251	0.614	0.065	0.134
	2			0.749	0.121	0.120	0.062
	3				0.266	0.203	0.544
	4					0.612	0.126
	5						0.134

정보준거지수는 AIC, BIC, SABIC를 살펴보았으며, 다음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잠재유형의 수가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로 늘어남에 따라 정보준거지수인 AIC, BIC, SABIC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잠재유형의 수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할 때 BIC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에서 5개로 증가할 때에도 BIC와 SABIC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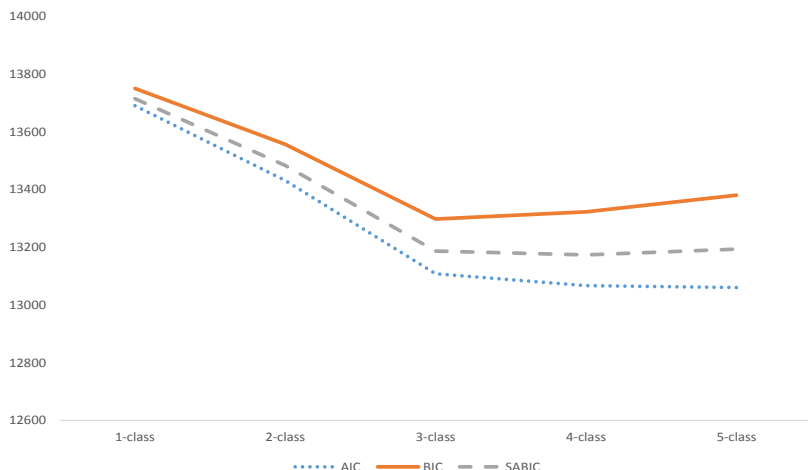


그림 III-18.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유형 정보준거지수(AIC, BIC, SABIC)

이어서 잠재유형 집단 간의 χ^2 검증 결과인 LMR LRT와 BLRT를 살펴보았다. LMR LRT는 잠재유형의 수가 4개인 모형까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잠재유형의 수가 5개인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BLRT는 잠재유형의 수가 5개인 모형까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류의 질(Entropy)을 비교한 결과 잠재유형의 수가 3개인 모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 이상의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청년 다차원 빈곤의 잠재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보준거지수(AIC, BIC, SABIC)와 χ^2 검증(LMR LRT, BLRT), 분류의 질(Entropy)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준거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잠재유형의 수가 3개인 모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잠재유형이 3개인 모형은 2개 모형에 비하여 정보준거지수가 모두 작게 나타났고, 잠재유형이 4개인 모형보다는 BIC가 더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χ^2 검증에서는 잠재유형이 2개인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에 잠재유형이 3개인 모형을 지지하였으며, 분류의 질도 .853으로 다른 모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의 입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차원 빈곤 유형을 3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청년 다차원 빈곤의 3개 유형에 대하여 각 빈곤지표별 평균값을 다음의 그림과 표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한국복지패널은 조사목적에 고려하여 저소득층 가구가 과대표집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 다차원 빈곤 집단의 지표별 평균값과 유형별 구성 비율은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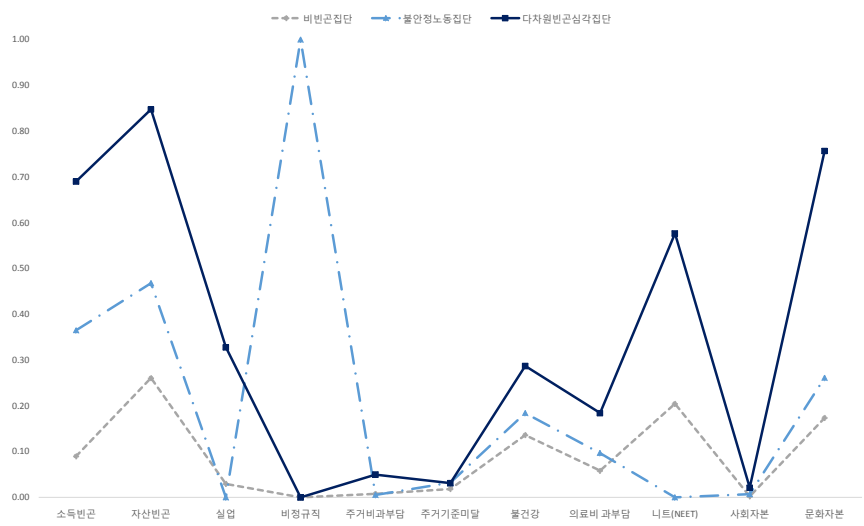


그림 III-19.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유형(3개 집단)

표 III -32.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유형(3개 집단)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참여 유형			청년 평균
		비빈곤 집단	불안정노동 집단	다차원빈곤심각 집단	
경제	1) 소득빈곤	0.09	0.36	0.69	0.22
	2) 자산빈곤	0.26	0.47	0.85	0.37
노동	3) 실업	0.03	0.00	0.33	0.05
	4) 비정규직	0.00	1.00	0.00	0.25
주거	5) 주거비 과부담	0.01	0.01	0.05	0.01
	6) 주거기준미달	0.02	0.03	0.03	0.02
건강	7)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0.14	0.18	0.29	0.16
	8) 의료비 과부담	0.06	0.10	0.18	0.08
교육	9) 니트(NEET)	0.20	0.00	0.58	0.19
사회·문화자본	10) 사회자본빈곤	0.00	0.01	0.02	0.01
	11) 문화자본빈곤	0.17	0.26	0.76	0.26

청년 다차원 빈곤 집단은 영역별로 지표의 평균값이 상이하였으며, 그 패턴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잠재 집단은 각 빈곤 영역별 지표의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 영역에서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지표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고, 주거기준미달,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의료비 과부담, 사회·문화자본빈곤의 평균값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실업과 주거비과부담, 니트(NEET) 지표에서 두 번째 잠재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청년 평균보다 모두 낮은 양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집단을 종합적으로 빈곤의 영역별 수준을 고려하여 ‘비빈곤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개인 횡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체 청년 가운데 64.3%가 ‘비빈곤 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류된 잠재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청년들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다차원 빈곤의 두 번째 잠재유형은 노동영역에서 다른 집단과 뚜렷이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잠재유형 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노동의 불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잠재유형 집단을 ‘불안정노동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해당 집단은 불안정한 노동 상황으로 인해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의 지표별 평균값이 앞서 분류한 ‘비빈곤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정신적 불건강과 의료비 과부담, 사회·문화적 자본 빈곤 지표값 모두 ‘비빈곤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비정규직 지표뿐 아니라 주거기준미달도 3개 잠재유형 집단 중에서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업과 니트(NEET) 지표는 현재 노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전체 청년 가운데 25.5%가 해당 집단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 가운데 4명 중 1명은 불안정한 노동 상황으로 인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청년 다차원 빈곤의 잠재유형 집단은 대부분 빈곤 지표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집단의 대부분이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업 지표와 니트(NEET) 평균값도 매우 높게 나타나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빈곤의 어려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지표는 두 번째 집단인 ‘불안정 노동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노동의 안정성이 일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주거비 과부담 측면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빈곤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기준미달 지표의 평균값은 두 번째 집단보다 다소 낮았으나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 빈곤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영역과 사회·문화적 자본 영역의 지표에서도 모두 여타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지막 집단은 전반적인 빈곤 영역에서 다중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정도도 다른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집단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모집단 규모의 추정을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전체 청년의 약 10.2%가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다차원 빈곤의 잠재 유형 중에서는 가장 낮은 구성 비율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년 10명 중 1명이 이처럼 다중적이고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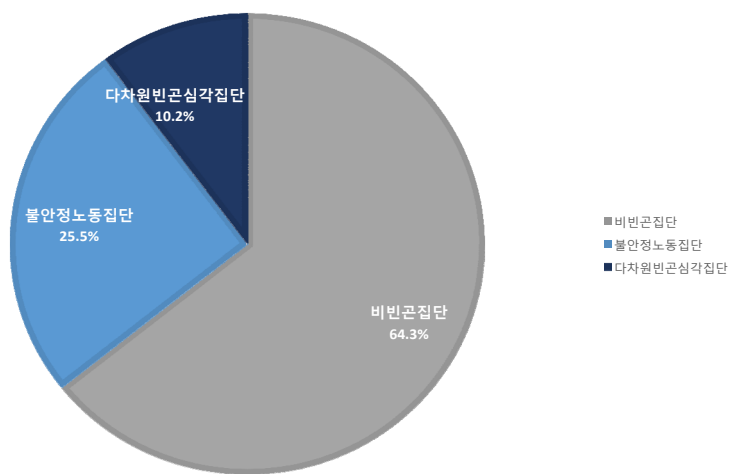


그림 Ⅲ-20. 청년 다차원 빈곤 잠재유형 모집단 추정 비율

청년 다차원 빈곤의 심각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전체 연령대에 해당하는 지표별 빈곤율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다차원 빈곤의 잠재유형 가운데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지표별 빈곤율과 전체 연령대의 빈곤율을 비교하였다. 아울러 빈곤 정책 대상자로서 주요 집단인 노인 연령대의 빈곤율도 함께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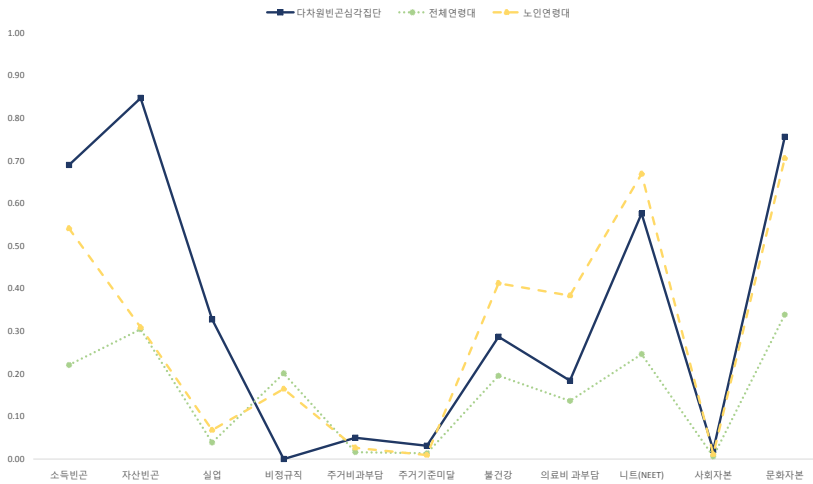


그림 Ⅲ-21.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과 전체 연령대 빈곤율 비교

표 Ⅲ-33.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과 전체 연령대 빈곤율 비교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	전체 연령대	노인 연령대
경제	1) 소득빈곤	0.69	0.22	0.54
	2) 자산빈곤	0.85	0.30	0.31
노동	3) 실업	0.33	0.04	0.07
	4) 비정규직	0.00	0.20	0.16
주거	5) 주거비 과부담	0.05	0.02	0.03
	6) 주거기준미달	0.03	0.01	0.01
건강	7)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0.29	0.20	0.41
	8) 의료비 과부담	0.18	0.14	0.38
교육	10) 니트(NEET)	0.58	0.25	0.67
사회·문화자본	11) 사회자본빈곤	0.02	0.01	0.01
	12) 문화자본빈곤	0.76	0.34	0.71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빈곤율이 전체 연령대의 지표별 빈곤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지표를 제외한 모든 빈곤 지표에서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실업 지표(0.33)의 경우 전체 연령대 평균값(0.04)에 비해 8.5배 높게 나타났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은 실업과 저임금 노동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자본 등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빈곤이 예상되며, 그 심각성은 전 연령대의 모집단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빈곤 정책의 주요 대상인 노인 집단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나 니트(NEET) 지표에서는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이 노인 집단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 지표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비경제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노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건강 영역을 제외하고 경제, 주거,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 노인 집단에 비해 지표별 평균값이 모두 높게 나타나 해당 집단이 상대적으로 다중적인 빈곤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술한 결과는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인 접근에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2)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의 특성

여기에서는 앞서 분류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삶의 질, 정책 경험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①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유형)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3개 집단에 따라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유형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각 항목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분석에서는 모수 추정을 위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집단 별로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I-34.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단위: %)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 수준			
		남성	여성	19-24세	25-34세	수도권	비수도권	고졸 이하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다차원 빈곤 유형	비빈곤 집단	50.0	50.0	65.3	34.7	52.2	47.8	12.2	31.2	53.2	3.3
	불안정노동 집단	54.2	45.8	66.3	33.7	62.4	37.6	23.6	27.8	44.7	3.9
	다차원빈곤심각집단	55.4	44.6	54.0	46.0	40.0	60.0	32.6	32.9	31.1	3.5
χ^2		19257.089***		54575.274***		160541.635***		403329.461***			

***p<.001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성별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비빈곤 집단’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50.0%로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불안정노동 집단’은 남성(54.2%)의 비율이 여성 (45.8%) 비율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도 남성(55.4%)이

여성(44.6%)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술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빈곤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안정노동 집단’이나 ‘다차원빈곤 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다소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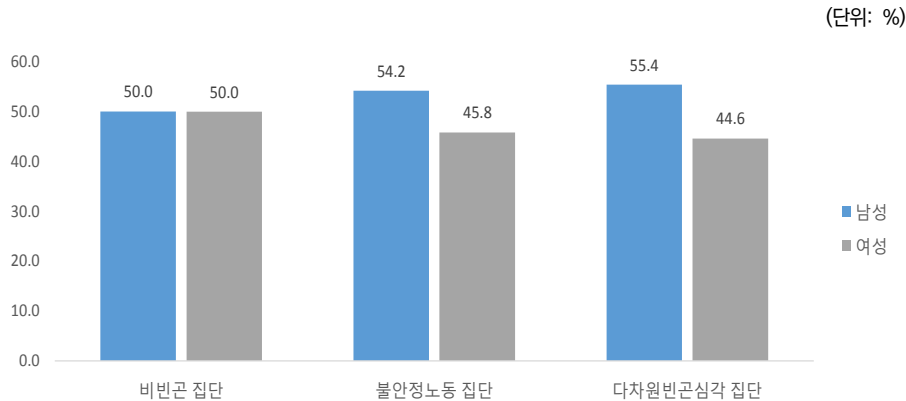


그림 Ⅲ-22. 성별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별로 연령 구성비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초기 청년기(19-24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제시된 바와 같이 ‘비빈곤 집단’과 ‘불안정노동 집단’의 경우 19-24세의 비율이 65.3%, 66.3%로 높은 특징을 지녔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은 19-24세 비율이 54.0%, 25-34세 비율이 46.0%로 초기 청년의 비중이 약간 높았지만 그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청년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노동 상태일 수도 있으나,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부모와 동거하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 비교적 다중적인 빈곤의 어려움이 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대에 따라 다차원 빈곤의 위험 정도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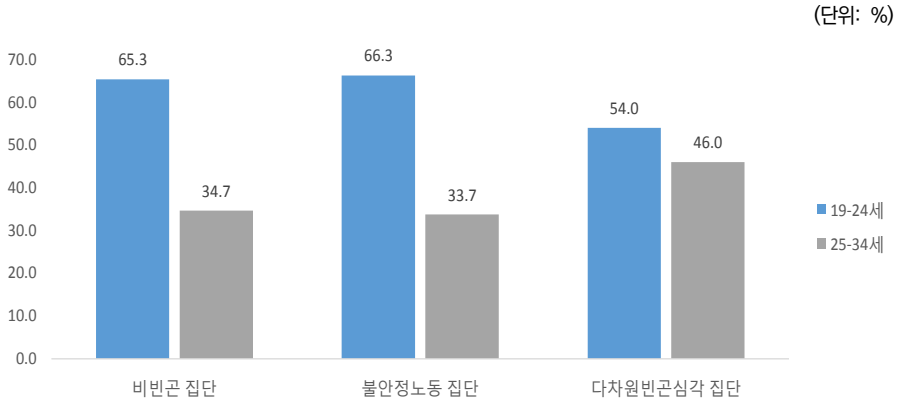


그림 III-23. 연령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거주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거주지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비빈곤 집단’의 경우 수도권 52.2%, 비수도권 47.8%로 수도권이 다소 많았으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한편, ‘불안정노동 집단’은 수도권(62.4%)의 비율이 비수도권(37.6%)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은 수도권(40.0%)이 비수도권(60.0%)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자리는 많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청년들이 불안정 고용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인 영역에서 심각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일자리는 부족하고, 비경제활동의 비율도 높으며 다중적 빈곤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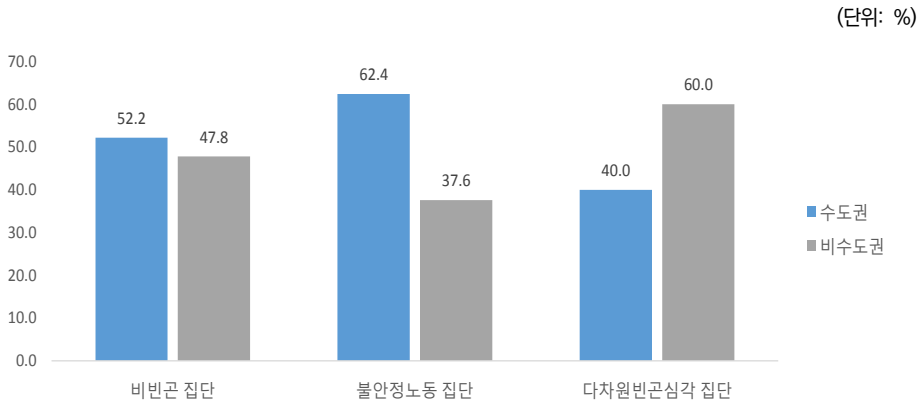


그림 Ⅲ-24. 거주지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별로 교육수준도 다소 상이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대학재학, 대학(전문대, 4년제)졸업, 대학원(석사, 박사)졸업 등 4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학재학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최종 학력으로 보면 고졸로 분류할 수 있으나, 현재 교육 이수 과정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졸업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별로 대학재학의 비율을 살펴보면, ‘비빈곤 집단’(31.2%), ‘불안정노동 집단’(27.8%), ‘다차원빈곤심각 집단’(32.9%)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대학을 재학하고 있는 청년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재학 청년 집단의 경우 개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차원 빈곤 유형에도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졸과 대학졸업의 경우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구성비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비빈곤 집단’의 고졸이하 비율은 12.2%로 다른 다차원 빈곤 유형에 비해 가장 낮았고, 대학졸업 비율은 53.2%로 가장 높은 특징을 지녔다. 이어서 ‘불안정노동 집단’의 경우 고졸이하의 비율이 23.6%였으며, 대학졸업은

44.7%로 확인되었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은 고졸이하 비율이 32.6%로 여타 다차원 빈곤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졸업의 비율은 31.1%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른 다차원 빈곤 유형의 격차는 고졸이하와 대학졸업 집단 사이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났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실업과 저임금 노동 등으로 인한 심각한 다중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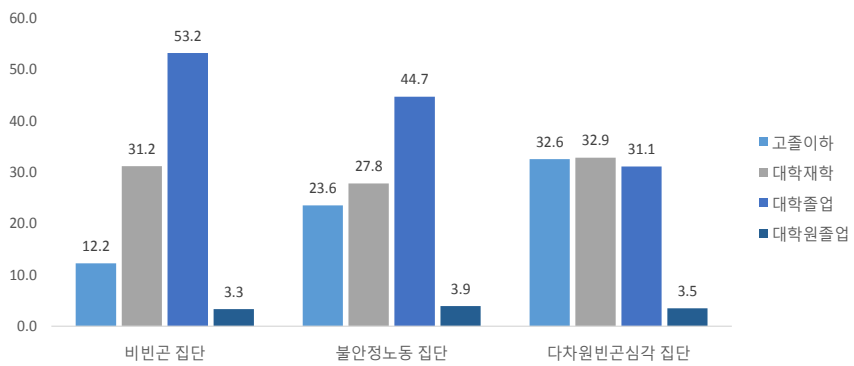


그림 III-25. 교육수준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다음으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별로 혼인상태와 가구유형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35. 인구사회학적 배경(혼인상태, 가구유형)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단위: %)

		혼인상태			가구유형			
		미혼	기혼	이혼 및 사별	청년부부 가구	청년독립 가구	부모동거 가구	기타동거 가구
다차원 빈곤 유형	비빈곤 집단	79.3	20.2	0.5	17.8	12.4	69.4	0.4
	불안정노동 집단	84.5	15.3	0.2	14.6	12.5	71.6	1.2
	다차원빈곤 심각집단	88.7	11.3	0.0	9.1	7.7	82.0	1.3
χ^2		74404.452***			104725.331***			

*** $p < .001$

혼인상태는 미혼과 기혼, 이혼 및 사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혼 및 사별의 비중이 매우 낮아 해당 집단에 대한 해석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혼과 기혼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비빈곤 집단’은 미혼의 비율은 79.3%로 다차원 빈곤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고, 기혼의 비율은 20.2%로 가장 높은 특징을 지녔다. ‘불안정노동 집단’은 미혼의 비율이 84.5%로 ‘비빈곤 집단’보다 높았고, 기혼의 비율은 15.3%로 ‘비빈곤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은 미혼 비율이 88.7%로 전체 다차원 빈곤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혼 비율은 11.3%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안정한 일자리나 경제적 어려움 등 다중적인 빈곤 상황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청년이 많지 않은 것은 어쩌면 자명한 일일 것이다. 전술한 결과는 혼인상태에 따른 빈곤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미혼 청년이 기혼 청년에 비해 ‘불안정노동 집단’이나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다소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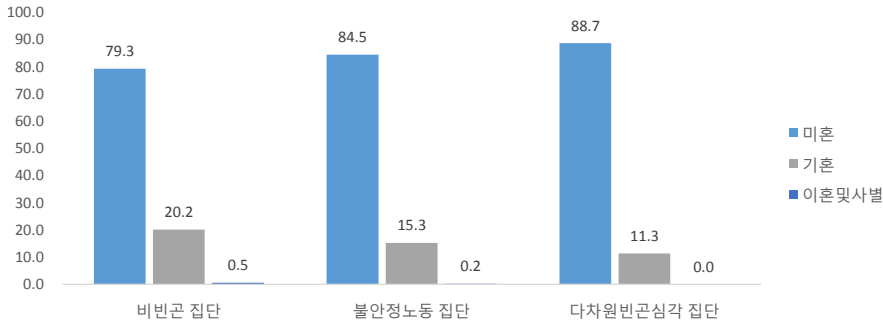


그림 III-26. 혼인상태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가구유형은 청년부부가구, 청년독립가구, 부모동거가구, 기타동거가구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가구유형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비빈곤 집단’의 경우 청년부부가구는 17.8%로 다른 다차원 빈곤 유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모동거가구는 6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빈곤 집단’의 청년 독립가구는 12.4%로 ‘불안정노동 집단’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불안정노동 집단’은 청년부부가구(14.6%), 청년독립가구(12.5%), 부모동거가구(71.6%)로 확인되었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은 청년부부가구의 비율이 9.1%, 청년 독립가구의 비율이 7.7%로 각각 전체 다차원 빈곤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부모동거가구 비율은 82.0%로 여타 다차원 빈곤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유형에 따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격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동거가구는 청년부부가구나 청년독립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을 경험하거나 다중적인 빈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기실 혼인을 통한 분가나 독립 과정에서 청년들은 일자리나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중에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여건 개선, 정서적 안정감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 이외의 개인의 소득과 실업, 비정규직, 니트(NEET) 등의 다각적 측면에서 빈곤 상황을 파악한 결과 부모동거가구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중적인 빈곤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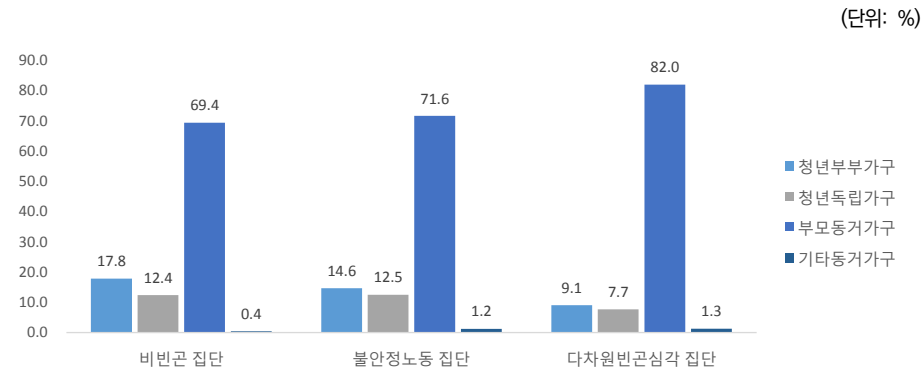


그림 Ⅲ-27. 가구유형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전술한 인구사회학적 배경 요인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다른 배경변인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로서 해석에 주의가 요한다. 이에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빈곤 집단’ 참조집단으로 두었으며, ‘불안정노동 집단’과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대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 가운데 혼인상태와 가구유형 변인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가구유형 변인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II-36.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빈곤 집단 vs 불안정고용 집단			비빈곤 집단 vs 다차원빈곤 심각 집단			
		β	S.E	Exp(β)	β	S.E	Exp(β)	
절편		-0.652***	0.002		-0.415***	0.003		
인구사회학적 배경	성별(남성=1)	0.082***	0.002	1.086	0.007**	0.002	1.007	
	연령(25세 이상=1)	0.230***	0.002	1.259	0.028***	0.003	1.028	
	거주지(수도권=1)	0.386***	0.002	1.471	-0.598***	0.002	0.550	
	교육 수준 (참조: 고졸이하)	대학재학	-0.705***	0.002	0.494	-1.095***	0.003	0.334
		대학졸업	-0.862***	0.002	0.422	-1.495***	0.003	0.224
		대학원졸업	-0.599***	0.004	0.549	-0.735***	0.006	0.479
	가구유형 (참조: 부모동거가구)	부부가구	-0.241***	0.002	0.786	-0.791***	0.004	0.453
		청년독립 가구	-0.009***	0.002	0.991	-0.626***	0.004	0.535
		기타동거 가구	0.923***	0.008	2.517	0.730***	0.011	2.074

p<.01, *p<.001

교차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가구유형 모두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비빈곤 집단’보다는 ‘불안정고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빈곤 집단’보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앞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른 성별 구성비를 비교했을 때, ‘비빈곤 집단’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유사하였으나, ‘불안정고용 집단’과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과 상응하는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의 격차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은 25-34세 청년은 19-24세 청년에 비해 ‘비빈곤 집단’보다는 ‘불안정

고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빈곤 집단'보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미치는 연령의 효과는 교육수준과 가구유형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 청년(19-24세)의 경우 대학 재학 이외에도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중적 빈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불안정한 일자리라 할지라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더 많을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지도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집단 간의 비교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비빈곤 집단'보다 '불안정고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 집단'보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는 앞서 '불안정고용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비중이 높고,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즉,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청년들의 다차원 빈곤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교육 수준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참조 집단을 고졸 이하로 두었을 때, 대학재학인 경우 '비빈곤 집단'보다 '불안정고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비빈곤 집단'보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대학졸업과 대학원졸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두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비빈곤 집단'보다 '불안정고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고, '비빈곤 집단'보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를 역으로 해석해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빈곤 집단’보다 ‘불안정고용 집단’이나 ‘다차원 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교육수준의 격차가 청년 빈곤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일수록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거나 심각한 다중적인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유형도 청년의 다차원 빈곤 유형을 결정하는 데 의미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부모동거가구를 참조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청년부부가구의 경우 부모동거가구에 비해 ‘비빈곤 집단’보다 ‘불안정고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비빈곤 집단’보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독립가구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부모동거가구에 비해 ‘비빈곤 집단’보다 ‘불안정고용 집단’이나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개연성이 낮았다. 역으로 살펴보면, 부모동거가구의 경우 청년독립가구나 부모동거에 비해 ‘비빈곤 집단’보다 ‘불안정고용 집단’이나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불안정고용 집단’과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경우 부모동거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기존 가구소득 위주로 빈곤 실태를 파악한 연구에서는 부모동거가구 청년들의 빈곤율이 작게 포착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영역에서 청년의 빈곤의 입체적 양상을 분석한 결과, 부모동거가구 청년들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노동 빈곤이나 다중적인 빈곤 위험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삶의 질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별로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삶의 사다리 인식, 자살 생각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복지패널 15차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는 8가지로 조사되었으며, 가족의 수입 만족도, 직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건강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8가지 만족도 관련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비빈곤 집단’의 경우 ‘불안정노동 집단’과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비해 가족의 수입 만족도, 직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건강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 집단’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불안정노동 집단’으로 확인되었는데, 건강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았다. 건강 만족도의 경우 ‘불안정노동 집단’이 ‘비빈곤 집단’뿐 아니라 ‘다차원빈곤심각 집단’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의 수입 만족도, 직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에서 여타 다차원 빈곤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는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경제적 여건이나 노동에 대한 만족도 뿐 아니라 주거, 사회적 관계,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 -37. 삶의 만족도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삶의 만족도							
		가족의 수입 만족도	직업 만족도	주거 환경 만족도	건강 만족도	가족 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 관계 만족도	여가 생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다차원 빈곤 유형	비빈곤 집단	3.53	3.62	3.76	3.95	4.05	3.86	3.56	3.82
	불안정노동 집단	3.22	3.43	3.63	3.76	3.94	3.79	3.52	3.69
	다차원빈곤 심각집단	2.72	3.02	3.42	3.78	3.76	3.61	3.13	3.38
전체		3.37	3.51	3.69	3.88	4.00	3.82	3.51	3.74
F		76623.3 14***	527207. 648***	102592. 629***	111158. 008***	300099. 444***	87689.6 62***	138367. 226***	291337. 253***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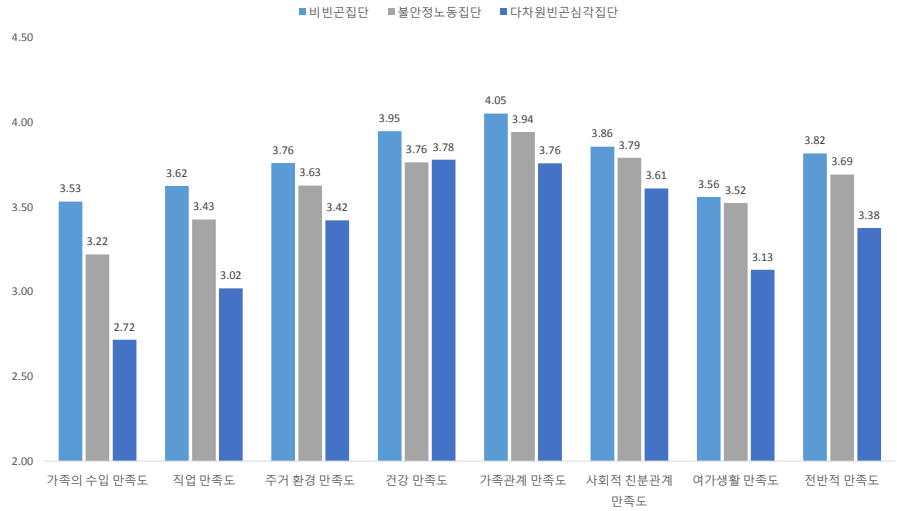


그림 III -28. 삶의 만족도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삶의 사다리 인식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사다리 인식은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최악의 상태 0점부터 최선의 상태 10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삶의 사다리 인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삶의 사다리 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비빈곤 집단’으로 평균값이 7.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불안정노동 집단’이 6.8로 높게 나타났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경우 삶의 사다리 인식이 6.1로 나타나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응답값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표 III-38. 삶의 사다리 인식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삶의 사다리 인식 (0점: 최악의 상태 ~ 10점: 최상의 상태)
다차원 빈곤 유형	비빈곤 집단	7.1
	불안정노동 집단	6.8
	다차원빈곤심각 집단	6.1
전체		6.9
F		235254.78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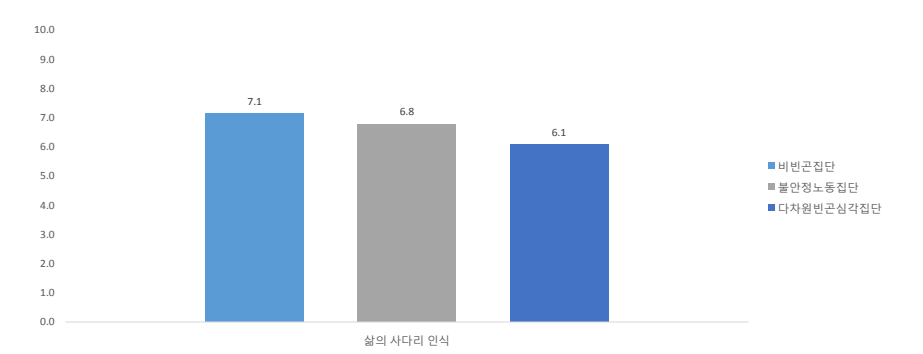


그림 III-29. 삶의 사다리 인식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여부도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경우 3.3%의 청년들이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다차원 빈곤 유형의 집단보다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불안정노동 집단’의 경우 1.0%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빈곤 집단’의 경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앞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중적인 심각한 빈곤이 자살 생각의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39. 자살 생각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자살 생각 여부	
		없음	있음
다차원 빈곤 유형	비빈곤 집단	99.5	0.5
	불안정노동 집단	99.0	1.0
	다차원빈곤심각 집단	96.7	3.3
χ^2		69465.627***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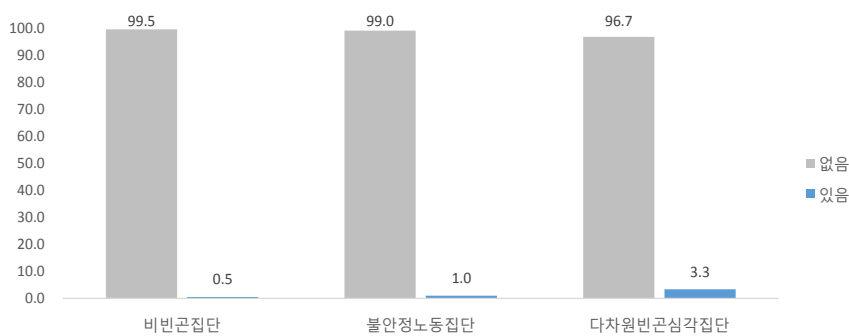


그림 III-30. 자살 생각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③ 정책 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다음으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정책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정책 경험은 빈곤계층 대상의 주요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지원 프로그램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경험과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 직장체험연수, 실업자직업훈련, 창업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인턴제도, 근로자능력개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경험 이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다음의 표에 제시하였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에 차이가 있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생계급여 수급 경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불안정노동 집단’, ‘비빈곤 집단’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생계급여 수급 경험률은 15.5%였으며, 그 다음으로 ‘불안정빈곤 집단’이 4.2%로 높게 나타났다. ‘비빈곤 집단’의 생계급여 수급 경험률은 1.0%, 3개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 III-40.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단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비수급	수급	비수급	수급	비수급	수급	비수급	수급
다차원 빈곤 유형	비빈곤 집단	99.0	1.0	98.0	2.0	98.1	1.9	100.0	0.0
	불안정노동 집단	95.8	4.2	94.0	6.0	93.2	6.8	98.0	2.0
	다차원빈곤 심각집단	84.5	15.5	82.5	17.5	82.3	17.7	96.2	3.8
χ^2		597744.895***		505355.497***		520244.929***		188785.652***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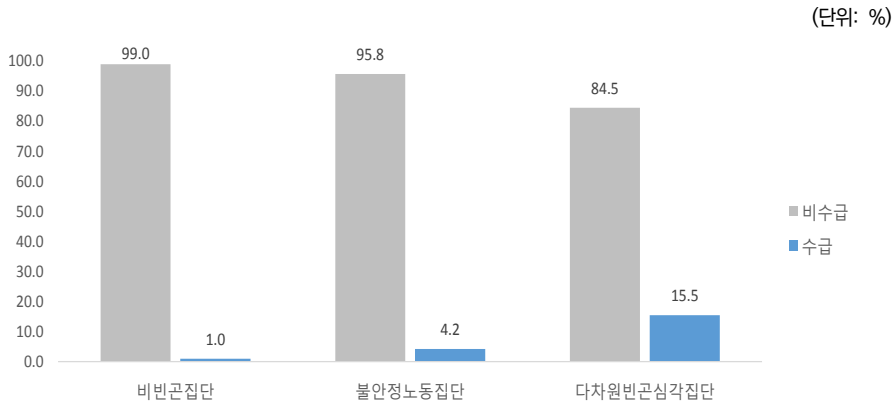


그림 III-31. 생계급여 수급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의료급여 수급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수급 경험률이 17.5%로 여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불안정빈곤 집단’의 의료급여 수급 경험률은 6.0%로 나타났으며, ‘비빈곤 집단’의 의료급여 수급 경험률은 2.0% 순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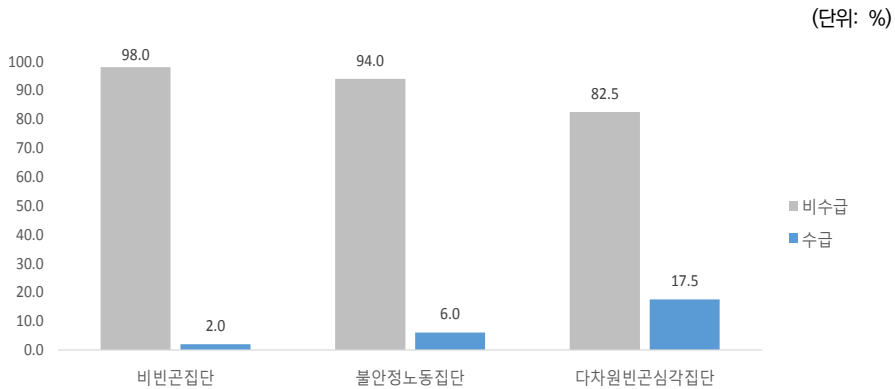


그림 III-32. 의료급여 수급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이러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률의 차이는 주거급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주거급여 수급 경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이었으며, 이어서 ‘불안정노동 집단’, ‘비빈곤 집단’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주거급여 수급 경험률은 17.7%였으며, ‘불안정빈곤 집단’의 주거급여 수급 경험률은 6.8%, ‘비빈곤 집단’의 주거급여 수급 경험률은 1.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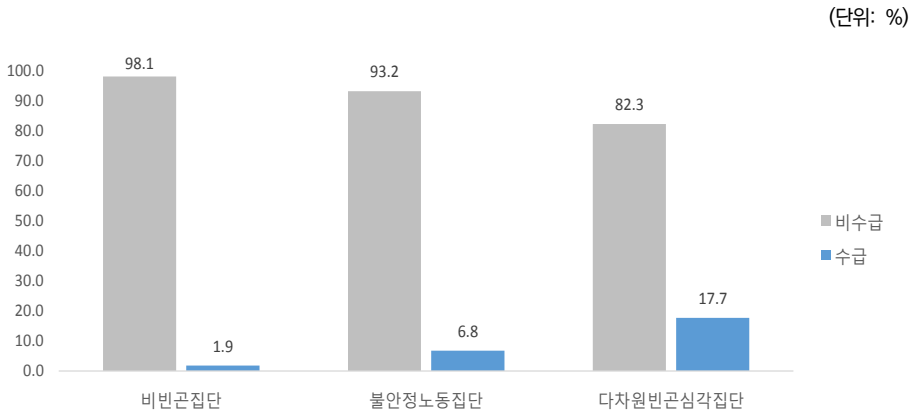


그림 Ⅲ-33. 주거급여 수급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수급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에 비해 수급 경험률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 경험률 차이는 일관성 있게 나타났는데,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수급 경험률이 3.8%로 여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불안정빈곤 집단’의 교육급여 수급 경험률은 2.0%로 나타났으며, ‘비빈곤 집단’의 교육급여 수급 경험률은 0.0% 순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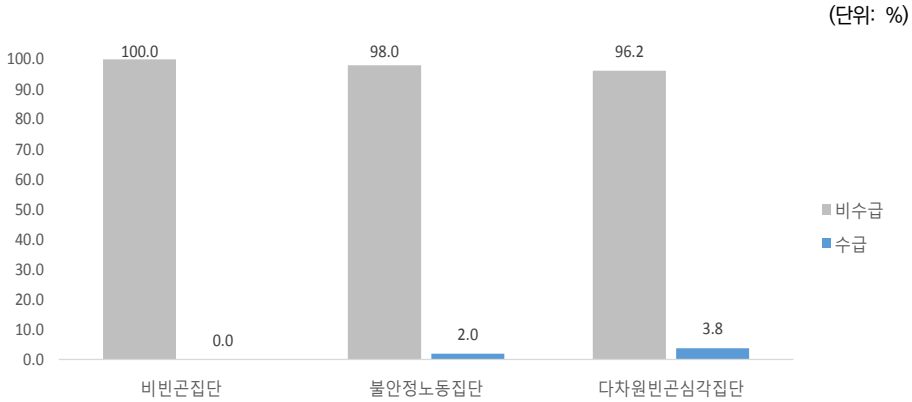


그림 Ⅲ-34. 교육급여 수급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일부 상이하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에 따라 선정된다. 앞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도 빈곤 지표로서 경제적 영역인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을 고려하였다. 실제 도출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서 경제적 영역 지표에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빈곤과 자산빈곤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불안정빈곤 집단', '비빈곤 집단' 순이었다. 전술한 결과는 다차원 빈곤 유형 간에 경제적 영역 지표에 따라 실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 수급 경험에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일자리, 실업자직업훈련, 창업지원, 청년인턴제도, 근로자능력개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경험에서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근로, 자활근로, 직장체험연수, 지역 공동체일자리 항목에서는 3개 집단 모두 참여 경험률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1.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단위: %)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		직장체험연수		실업자직업훈련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다차원 빈곤 유형	비빈곤 집단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99.8	0.2
	불안정노동 집단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0.0	98.9	1.1
	다차원빈곤 심각집단	100.0	0.0	100.0	0.0	99.8	0.2	100.0	0.0	98.9	1.1
χ^2		-		-		6472.654***		-		39479.964***	
		창업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인턴제도		근로자능력개발		취업성공패키지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다차원 빈곤 유형	비빈곤 집단	99.9	0.1	100.0	0.0	100.0	0.0	99.9	0.1	99.7	0.3
	불안정노동 집단	100.0	0.0	100.0	0.0	99.1	0.9	99.9	0.1	99.7	0.3
	다차원빈곤 심각집단	100.0	0.0	100.0	0.0	100.0	0.0	97.8	2.2	96.7	3.3
χ^2		1840.773***		-		70197.099***		122195.509***		142363.188***	

***p<.001

사회적일자리는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경우 참여 경험률이 0.2%로 ‘불안정노동 집단’(0.0%)과 ‘비빈곤 집단’(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직업훈련의 참여 경험은 ‘불안정노동 집단’(1.1%)과 ‘다차원빈곤심각 집단’(1.1%)이 ‘비빈곤 집단’(0.2%)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능력개발 참여경험 역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2.2%)이 ‘불안정노동 집단’(0.1%)과 ‘비빈곤 집단’(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참여율은 3.3%로 가장 높았으며, ‘불안정노동 집단’과 ‘비빈곤 집단’의 참여율은 각각 0.3%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참여율이 ‘불안정노동 집단’과 ‘비빈곤 집

단'의 참여율보다 높은 경향성이 있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창업지원의 경우 '비빈곤 집단'의 참여율이 0.1%로 나타났으며, 여타 집단의 경우 참여율이 0.0%로 확인되었다. 청년인턴제도는 '불안정노동 집단'의 참여율이 0.9%로 나타나 '비빈곤 집단'이나 '다차원빈곤심각 집단'보다 높았다. 청년인턴제도를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특성 상 불안정한 노동 상태로 분류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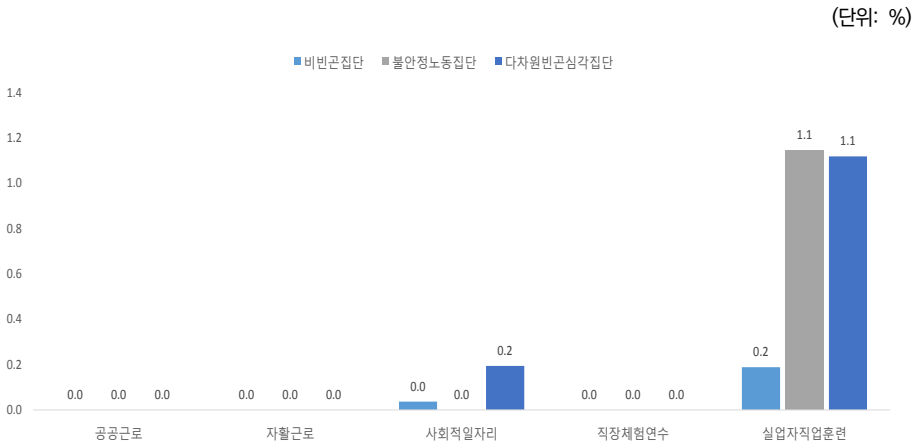


그림 Ⅲ-35. 고용지원 프로그램(공공근로,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직장 체험연수, 실업자직업훈련) 참여 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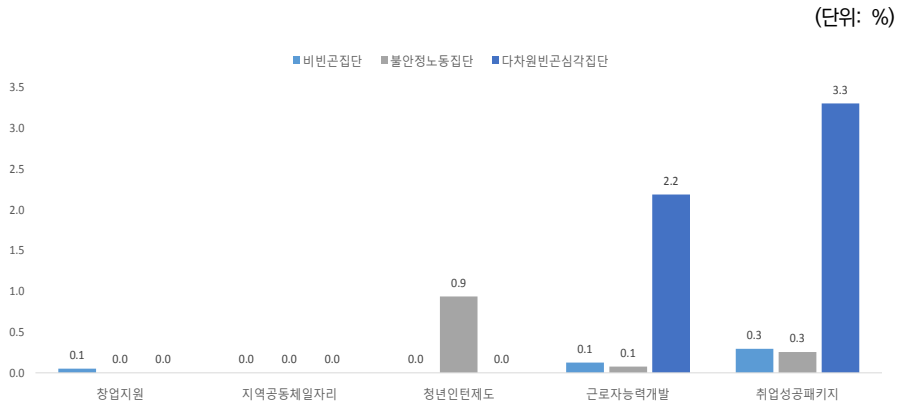


그림 III-36. 고용지원 프로그램(창업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인턴제도, 근로자능력개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경험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앞서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공근로, 자활근로, 직장체험연수, 지역 공동체일자리 항목의 경우 3개 집단 모두 참여율이 0.0%로 저조하였다. 집단별 참여 경험률도 가장 높은 경우가 3.3%에 불과하였다. 청년 실업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참여율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청년 대상자 중심(person-centered approach)의 잠재계층분석(LCA) 방법을 활용하여 청년 내에 실재하는 다차원 빈곤의 하위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저소득층 대상 정책 및 빈곤 연구에 적합한 한국복지패널 15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 빈곤 분석의 단선적 이해에서 벗어나 청년 다차원 빈곤의 입체적 지형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사점을 지닌다.

경제, 고용,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자본 등 6개 영역에서 11개 청년 빈곤 지표를 통해 청년 다차원 빈곤의 3가지 잠재 유형을 도출하였다. 해당 유형의 패턴을 고려하여 ‘비빈곤 집단’, ‘불안정노동 집단’,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비빈곤 집단’으로 전체 청년의 64.3%가 속하였고, 각 빈곤 영역별 지표의 평균값이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집단인 ‘불안정노동 집단’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노동 불안정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청년의 25.5%가 속한 집단이다. ‘불안정노동 집단’은 ‘비빈곤 집단’ 다음으로 각 빈곤 영역별 지표의 평균값이 대체로 낮은 특징을 지닌다. 세 번째 집단인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은 집단은 대부분 지표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 다중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정도도 다른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경제활동의 어려움뿐 아니라 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소득 및 자산빈곤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청년의 약 10.2%가 이러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집단의 빈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집단과 노인 집단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이처럼 다중적이고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서 성별, 연령, 거주지, 교육수준, 가구유형 모두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비빈곤 집단’보다는 ‘불안정고용 집단’이나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기 청년보다는 높은 연령대의 청년들이 ‘비빈곤 집단’보다는 ‘불안정 고용 집단’이나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청년들의 다차원 빈곤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비빈곤 집단’보다 ‘불안정고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 집단’보다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의 경우 대학교 재학이나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빈곤 집단’보다 ‘불안정고용 집단’이나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수준의 격차가 청년 빈곤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증적 근거로서,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거나 심각한 다중적인 빈곤의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동거가구의 경우 청년독립가구나 부모동거에 비해 ‘비빈곤 집단’보다 ‘불안정고용 집단’이나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가구소득 위주의 빈곤 분석에서 부모동거가구 청년들의 빈곤율이 작게 포착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는데, 실제 다차원적인 접근에서 청년 빈곤을 살펴본 결과, 부모동거가구 청년들이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노동 빈곤이나 다중적인 빈곤 위험에 놓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른 삶의 질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차원 빈곤심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8개 항목의 만족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삶의 만족도 격차는 경제적 여건이나 노동에 대한 만족도 뿐 아니라 주거, 사회적 관계,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삶의 사다리 인식도 ‘다차원 빈곤심각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살에 대한 생각의 경험률도 ‘다차원 빈곤심각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다중적인 심각한 빈곤이 자살 생각의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에 차이가 있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수급 경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이었으며, 이어서 ‘불안정노동 집단’, ‘비빈곤 집단’ 순이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다차원 빈곤 유형 간에 경제적 영역 지표 수준에 따라 실제 급여 수급 경험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에 따라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이 ‘불안정노동 집단’과 ‘비빈곤 집단’의 참여율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앞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율뿐 아니라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률도 대부분의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경우에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다차원 빈곤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단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이나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제4장 청년 빈곤 관련 의식, 전망, 정책욕구에 관한 조사

- 1. 조사 개요
- 2. 청년의 소득
- 3. 청년의 노동
- 4. 청년 빈곤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

1. 조사 개요

1) 모집단 및 조사 설계

본 조사의 모집단은 우리나라의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청년기본법 상의 청년의 법정연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선 예비조사를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여 연간소득 등 응답금액의 오류기입 수정, 상위 질문항목의 논리적 불일치 조정, 응답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문장 표현 교정 등이 이루어졌다. 본조사 설계를 살펴보면 유효표본은 4,114명이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 구축 후 온라인 패널(R패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조사하였다. 표본추출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1차년도 연구의 중점 조사영역인 청년의 경제적 소득과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우선 청년의 소득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소득, 청년의 소득 상황 및 전망, 재산, 금융 자산, 부채, 소비지출, 소득 관련 정부정책 인식 및 정책욕구를, 청년의 노동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노동,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전망(취업, 창업), 일자리 관련 정부정책 인식 및 정책욕구를, 그리고 청년 빈곤 실태 일반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24)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연보라 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2) 응답자 특성

본 조사 대상자인 만 19~34세 청년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V-1. 응답자 특성표

구분		사례수 [명]	%
전체		4,114	100.0%
연령	만19~24세	1,201	29.2%
	만25~29세	1,503	36.5%
	만30~34세	1,410	34.3%
성별	남자	1,945	47.3%
	여자	2,169	52.7%
혼인상태	미혼	3,272	79.5%
	기혼	824	20.0%
	사별 및 이혼	18	0.4%
최종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7.7%
	대학교전문대 포함	3,195	77.7%
	대학원 이상	190	4.6%
현재 취업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2.3%
	비정규직 취업	1,045	25.4%
	정규직 취업	1,679	40.8%
	자영업, 창업 등	60	1.5%
가구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8.4%
	청년 독립가구	1,007	24.5%
	부모 동거가구	2,316	56.3%
	기타	33	0.8%
지역	수도권	2,276	55.3%
	충청권	410	10.0%
	전라권	364	8.8%
	경상권	923	22.4%
	강원/제주권	141	3.4%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9.3%
	비빈곤층	3,733	90.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0.7%
	비슷	2,252	54.7%
	분배 중요	597	14.5%

2. 청년의 소득

1) 소득 상황 및 전망

(1) 총 연간소득

가.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0~4,000만원 미만’ 응답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2,000만원 미만’(29.5%), ‘0원’(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은 평균 1,95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 19~24세: 813만원, 만25~29세: 2,032만원, 만30~34세: 2,847만원)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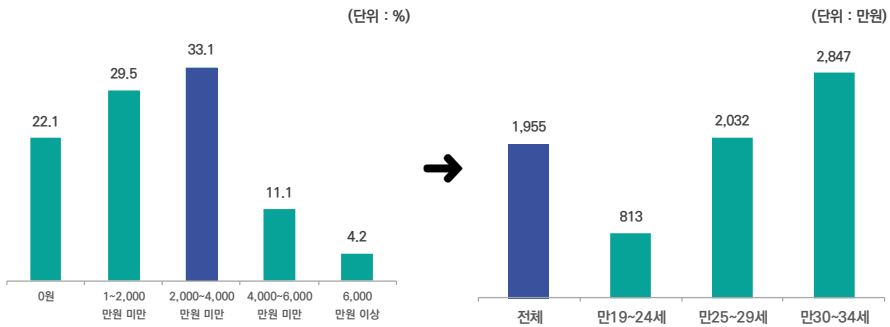


그림 IV-1.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

표 IV-2.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22.1	29.5	33.1	11.1	4.2	1,955	-
만19~24세	1,201	40.1	42.7	13.7	2.4	1.0	813	289.701***
만25~29세	1,503	18.1	28.3	40.5	9.3	3.8	2,032	
만30~34세	1,410	11.0	19.4	41.8	20.4	7.4	2,847	

*p<.05, **p<.01, ***p<.001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1,791만원), 미혼(1,656만원), 고등학교 이하(1,155만원), 미취업/구직중(775만원), 부모 동거가구(1,417만원), 강원/제주권(1,589만원), 빈곤층(1,370만원), 복지인식 분배중요(1,829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3.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22.1	29.5	33.1	11.1	4.2	1,955	-
성별	남자	1,945	20.4	29.0	30.4	15.1	5.1	4.825***
	여자	2,169	23.6	29.9	35.5	7.6	3.4	

구분		사례수 [명]	0원	1~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혼인 상태	미혼	3,272	25.9	31.1	32.7	7.9	2.4	1,656	146.127***
	기혼	824	7.3	22.3	35.2	23.8	11.4	3,140	
	사별 및 이혼	18	5.6	55.6	16.7	16.7	5.6	2,05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36.4	36.4	20.9	4.7	1.8	1,155	72.095***
	대학교	3,195	19.7	28.0	36.0	12.0	4.3	2,072	
	대학원 이상	190	7.9	27.4	31.1	21.1	12.6	3,055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54.5	29.6	10.6	3.7	1.6	775	381.838***
	비정규직취업	1,045	13.0	53.8	27.0	4.4	1.8	1,421	
	정규직취업	1,679	2.5	14.4	54.6	21.1	7.4	3,189	
	자영업, 창업 등	60	10.0	25.0	38.3	13.3	13.3	2,91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7.3	21.8	34.7	24.7	11.6	3,188	135.360***
	청년 독립가구	1,007	11.5	28.0	41.6	14.8	4.1	2,295	
	부모 동거가구	2,316	31.3	32.6	29.1	5.1	1.9	1,417	
	기타	33	42.4	30.3	18.2	6.1	3.0	1,071	
지역별	수도권	2,276	20.1	29.5	33.8	11.9	4.7	2,050	2.911*
	충청권	410	22.2	28.0	34.6	11.5	3.7	1,899	
	전라권	364	25.8	31.3	30.8	7.7	4.4	1,739	
	경상권	923	24.8	28.9	32.2	10.4	3.7	1,888	
	강원/제주권	141	26.2	31.9	29.1	11.3	1.4	1,58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8.1	34.6	33.9	1.8	1.6	1,370	-5.990***
	비빈곤층	3,733	21.5	29.0	33.0	12.1	4.5	2,01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7.5	31.1	34.0	12.6	4.8	2,141	6.091**
	비슷	2,252	25.4	27.4	32.5	10.7	4.0	1,884	
	분배 중요	597	19.6	34.0	33.3	9.5	3.5	1,829	

*p<.05, **p<.01, ***p<.001

나.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200만원 미만’(20.6%), ‘200~500만원 미만’(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은 평균 26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355만원, 만25~29세: 250만원, 만30~34세: 212만원)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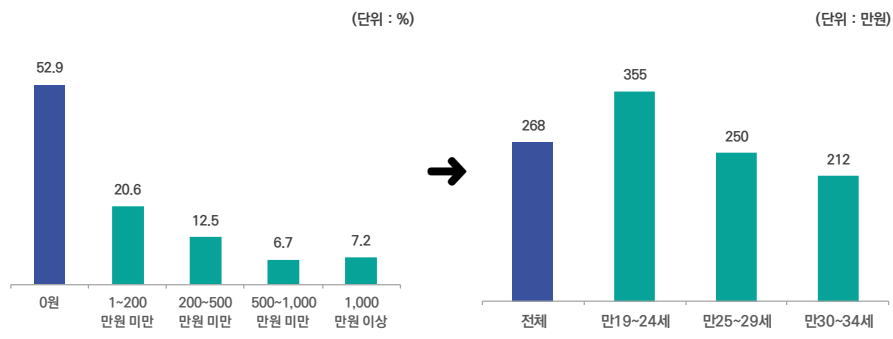


그림 IV-2.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

표 IV-4.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52.9	20.6	12.5	6.7	7.2	268	-
만19~24세	1,201	29.1	29.5	22.2	12.0	7.2	355	8.660***
만25~29세	1,503	55.2	20.7	11.4	5.3	7.5	250	
만30~34세	1,410	70.9	13.0	5.5	3.8	6.8	212	

*p<.05, **p<.01, ***p<.001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234만원), 미혼(254만원), 청년 독립가구(186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5.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52.9	20.6	12.5	6.7	7.2	268	-
성별	남자	1,945	52.6	19.5	12.2	6.6	9.1	306	2.550*
	여자	2,169	53.3	21.6	12.9	6.8	5.5	234	
혼인 상태	미혼	3,272	50.8	22.2	13.8	7.1	6.2	254	19.523***
	기혼	824	62.3	14.2	7.5	5.2	10.8	293	
	사별 및 이혼	18	22.2	33.3	11.1	11.1	22.2	1,56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45.3	24.8	16.6	8.0	5.3	252	0.664
	대학교	3,195	54.1	19.9	12.0	6.5	7.5	275	
	대학원 이상	190	62.6	16.8	6.8	5.3	8.4	20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7.7	27.3	18.6	8.8	7.7	292	2.579
	비정규직취업	1,045	41.2	24.8	17.6	8.4	7.9	310	
	정규직취업	1,679	71.8	13.0	4.7	4.2	6.3	226	
	자영업,창업 등	60	68.3	11.7	10.0	1.7	8.3	164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63.5	14.0	7.9	4.9	9.8	287	3.829**
	청년 독립가구	1,007	63.4	16.7	7.5	6.0	6.5	186	
	부모 동거가구	2,316	45.0	24.4	16.3	7.6	6.7	298	
	기타	33	51.5	27.3	9.1	9.1	3.0	203	

구분		사례수 [명]	0원	1~200 만원 미만	200~ 500 만원 미만	500~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지역별	수도권	2,276	53.3	19.7	12.0	6.9	8.1	293	1.227
	충청권	410	56.3	18.8	11.5	8.3	5.1	251	
	전라권	364	53.0	19.2	14.6	7.1	6.0	238	
	경상권	923	50.2	23.7	13.8	5.5	6.8	239	
	강원/제주권	141	56.0	24.1	10.6	5.7	3.5	17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61.9	17.8	11.0	3.4	5.8	200	-1.549
	비빈곤층	3,733	52.0	20.9	12.7	7.0	7.3	27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50.4	20.5	12.6	8.1	8.4	307	1.716
	비슷	2,252	54.7	20.3	12.6	5.6	6.8	252	
	분배 중요	597	51.6	22.1	12.2	7.9	6.2	245	

*p<.05, **p<.01, ***p<.001

다. 총 연간소득

‘총 연간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0만원 미만’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2,000~4,000만원 미만’(32.4%), ‘4,000~6,000만원 미만’(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총 연간소득은 평균 2,22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총 연간소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1,168만원, 만25~29세: 2,282만원, 만30~34세: 3,059만원) 총 연간소득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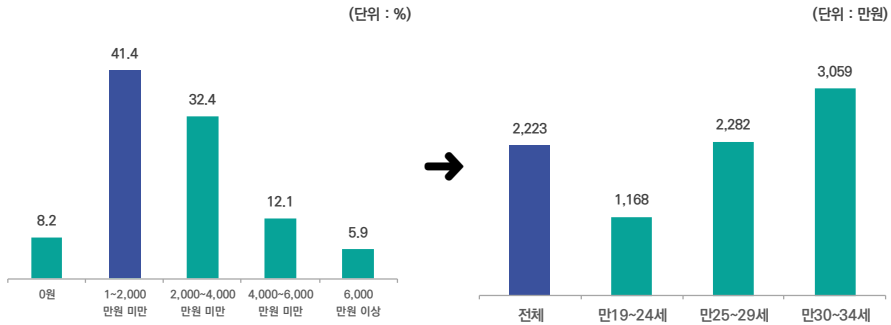


그림 IV-3. 총 연간소득

표 IV-6. 총 연간소득(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만 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8.2	41.4	32.4	12.1	5.9	2,223	—
만19~24세	1,201	11.7	67.9	14.9	3.1	2.5	1,168	192.222***
만25~29세	1,503	7.1	37.5	39.2	10.8	5.5	2,282	
만30~34세	1,410	6.5	23.0	40.0	21.2	9.4	3,059	

*p<.05, **p<.01, ***p<.001

총 연간소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2,024만원), 미혼(1,910만원), 고등학교 이하 학력(1,407만원), 미취업/구직중(1,067만원), 부모 동거가구(1,715만원), 강원/제주권(1,760만원), 빈곤층(1,569만원), 복지인식 분배중요(2,074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총 연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7. 총 연간소득(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8.2	41.4	32.4	12.1	5.9	2,223	-
성별	남자	1,945	7.1	39.8	29.2	16.2	7.6	2,444	5.230***
	여자	2,169	9.2	42.7	35.2	8.4	4.5	2,024	
혼인 상태	미혼	3,272	9.0	46.0	32.4	8.9	3.7	1,910	125.179***
	기혼	824	5.0	22.8	32.9	24.9	14.4	3,434	
	사별 및 이혼	18	5.6	55.6	11.1	11.1	16.7	3,62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5.1	55.8	20.9	5.1	3.2	1,407	57.403***
	대학교	3,195	6.9	38.9	35.0	13.2	6.0	2,348	
	대학원 이상	190	4.7	27.9	32.6	20.0	14.7	3,26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9.5	62.3	11.3	4.2	2.8	1,067	268.220***
	비정규직취업	1,045	5.4	57.8	28.1	5.1	3.6	1,731	
	정규직취업	1,679	1.1	15.2	51.5	22.7	9.5	3,415	
	자영업, 창업 등	60	8.3	25.0	38.3	13.3	15.0	3,076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5.0	22.7	31.8	26.0	14.5	3,474	101.662***
	청년 독립가구	1,007	4.6	33.2	41.7	15.1	5.5	2,481	
	부모 동거가구	2,316	10.5	51.1	28.7	6.3	3.3	1,715	
	기타	33	30.3	39.4	18.2	6.1	6.1	1,274	
지역별	수도권	2,276	7.4	39.9	33.0	13.0	6.7	2,343	3.623**
	충청권	410	9.0	40.2	33.4	11.2	6.1	2,150	
	전라권	364	9.6	45.6	30.2	9.6	4.9	1,977	
	경상권	923	8.9	43.3	31.4	11.4	5.0	2,127	
	강원/제주권	141	11.3	44.0	31.2	11.3	2.1	1,76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7.1	42.5	34.4	3.1	2.9	1,569	-6.199***
	비빈곤층	3,733	7.3	41.3	32.2	13.0	6.2	2,29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5.5	40.4	33.1	14.1	6.9	2,448	7.131***
	비슷	2,252	9.7	41.5	31.7	11.5	5.7	2,136	
	분배 중요	597	8.4	43.0	33.3	10.4	4.9	2,074	

*p<.05, **p<.01, ***p<.001

(2) 총 연간소득 만족도

‘총 연간소득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이 48.6%(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0% + 만족하지 않는다: 33.6%)로 ‘만족’ 응답 16.2%(매우 만족한다: 1.7% + 만족한다: 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총 연간소득 만족도 평균은 2.54점으로 조사되었다.

총 연간소득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 19~24세: 40.3%, 만25~29세: 51.2%, 만30~34세: 53.0%) 불만족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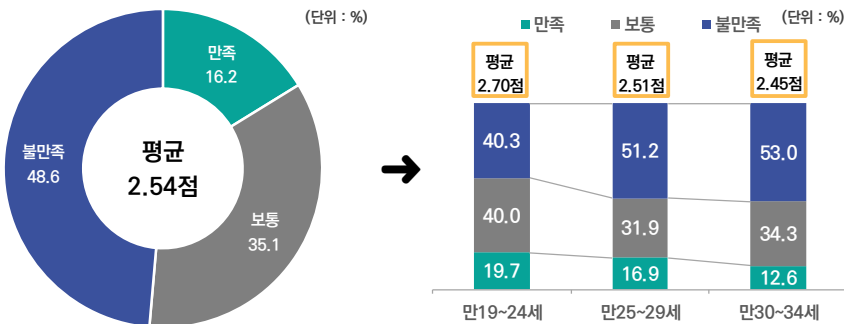


그림 IV-4. 총 연간소득 만족도

표 IV-8. 총 연간소득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15.0	33.6	35.1	14.5	1.7	2.54	-
만19~24세	1,201	11.5	28.8	40.0	17.4	2.2	2.70	24.144***
만25~29세	1,503	17.1	34.1	31.9	15.0	1.9	2.51	
만30~34세	1,410	15.8	37.2	34.3	11.6	1.0	2.45	

*p<.05, **p<.01, ***p<.001

불만족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50.6%), 미혼(50.8%), 청년독립가구(51.9%), 빈곤층(75.6%), 복지인식 분배중요(58.3%)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 총 연간소득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15.0	33.6	35.1	14.5	1.7	2.54	-
성별	남자	1,945	15.6	30.8	36.0	15.6	2.0	2.58	2.033*
	여자	2,169	14.5	36.1	34.3	13.6	1.5	2.51	
혼인 상태	미혼	3,272	16.6	34.3	34.4	13.2	1.7	2.49	23.167***
	기혼	824	9.0	31.2	38.2	19.7	1.9	2.74	
	사별 및 이혼	18	11.1	27.8	33.3	27.8	0.0	2.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5.2	27.3	41.4	13.6	2.5	2.61	2.609
	대학교	3,195	15.0	35.2	33.7	14.5	1.6	2.52	
	대학원 이상	190	14.7	31.1	34.2	18.9	1.1	2.6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9.5	26.6	39.2	13.2	1.4	2.51	1.392
	비정규직취업	1,045	14.4	35.7	32.7	15.5	1.6	2.54	
	정규직취업	1,679	11.7	38.4	33.2	14.8	2.0	2.57	
	자영업,창업 등	60	18.3	20.0	40.0	20.0	1.7	2.6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8.8	32.3	37.5	19.5	1.8	2.73	12.235***
	청년 독립가구	1,007	16.9	35.1	33.2	13.5	1.4	2.47	
	부모 동거가구	2,316	16.1	33.6	35.0	13.5	1.8	2.51	
	기타	33	21.2	21.2	48.5	6.1	3.0	2.48	
지역별	수도권	2,276	15.3	34.0	34.7	14.6	1.4	2.53	1.8880
	충청권	410	14.9	37.3	33.2	13.2	1.5	2.49	
	전라권	364	14.3	30.5	37.1	15.7	2.5	2.62	
	경상권	923	14.2	32.7	35.5	15.2	2.4	2.59	
	강원/제주권	141	18.4	31.2	39.7	9.9	0.7	2.43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43.3	32.3	19.2	4.2	1.0	1.87	-14.476***
	비빈곤층	3,733	12.1	33.8	36.8	15.6	1.8	2.6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5.0	32.4	30.8	19.0	2.8	2.62	9.187***
	비슷	2,252	14.4	32.4	40.0	12.3	0.9	2.53	
	분배 중요	597	17.4	40.9	26.1	13.4	2.2	2.42	

*p<.05, **p<.01, ***p<.001

(3)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0~4,000만원 미만’ 응답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4,000~6,000만원 미만’(25.7%), ‘2,000만원 미만’(2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 평균은 4,72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만19~24세: 3,590만원, 만25~29세: 4,572만원, 만30~34세: 5,865만원)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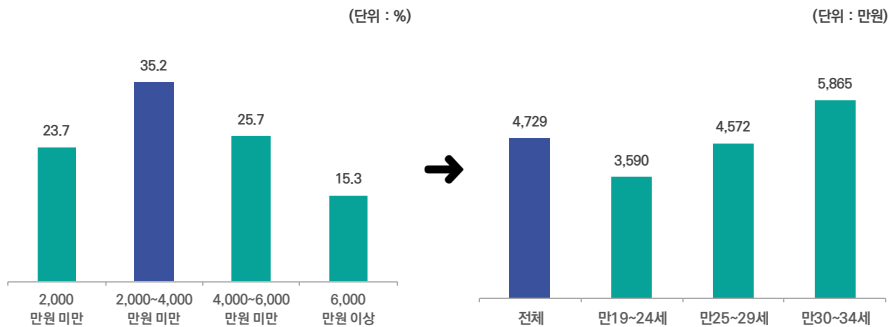


그림 IV-5.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

표 IV-10.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000만원 미만	2,000~ 4,000만원 미만	4,000~ 6,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23.7	35.2	25.7	15.3	4,729	-
만19~24세	1,201	43.7	35.0	13.2	8.2	3,590	15.428***
만25~29세	1,503	18.9	40.5	28.0	12.6	4,572	
만30~34세	1,410	11.9	29.8	34.0	24.3	5,865	

*p<.05, **p<.01, ***p<.001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4,382만원), 미혼(4,223만원), 미취업/구직중(3,883만원), 부모 동거가구(3,924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1.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23.7	35.2	25.7	15.3	4,729	-
성별	남자	1,945	22.8	29.0	28.1	5,115	2.223*
	여자	2,169	24.6	40.8	23.7	4,382	
혼인 상태	미혼	3,272	26.2	38.3	24.1	4,223	19.238***
	기혼	824	13.7	23.4	32.2	6,759	
	사별 및 이혼	18	38.9	11.1	38.9	3,74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41.6	34.4	15.1	4,356	2.969
	대학교	3,195	20.3	36.5	27.5	4,712	
	대학원 이상	190	14.2	17.4	36.8	6,444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40.6	35.6	14.1	9.6	3,883	9.688***
	비정규직취업	1,045	30.6	42.4	18.5	8.5	4,093	
	정규직취업	1,679	6.3	31.0	39.1	23.6	5,769	
	자영업,창업 등	60	20.0	20.0	35.0	25.0	5,436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3.3	22.8	32.3	31.5	6,881	15.328***
	청년 독립가구	1,007	16.3	36.2	30.3	17.2	4,933	
	부모 동거가구	2,316	30.0	38.9	21.9	9.2	3,924	
	기타	33	51.5	27.3	6.1	15.2	5,489	
지역별	수도권	2,276	21.4	34.5	26.4	17.7	4,991	1.039
	충청권	410	23.9	37.1	25.4	13.7	4,861	
	전라권	364	29.9	36.8	21.7	11.5	4,212	
	경상권	923	26.9	34.3	26.5	12.2	4,278	
	강원/제주권	141	24.8	42.6	21.3	11.3	4,40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4.7	42.8	23.4	9.2	4,944	0.419
	비빈곤층	3,733	23.7	34.4	26.0	15.9	4,70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22.0	30.6	27.7	19.8	5,276	2.636
	비슷	2,252	25.3	36.4	25.3	13.1	4,547	
	분배 중요	597	21.8	40.7	23.3	14.2	4,255	

*p<.05, **p<.01, ***p<.001

(4) 연령대별로 예측되는 연간소득

가. 연령대별로 예측되는 연간소득 비교 (40~70대)

연령대별(40~70대)로 예측되는 연간소득을 비교해본 결과,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이 6,18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60대 5,285만원, 40대 5,211만원, 70대 3,87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40~70대) 예측되는 연간소득을 청년의 연령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구간(만19~24세, 만25~29세, 만30~34세)에서 40대에서 50대로 올라 갈수

록 연간소득이 증가하다가 50대에서 60대로, 60대에서 70대로 갈수록 연간소득이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청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만19~24세 < 만25~29세 < 만30~34세), 각 연령대(40~70대)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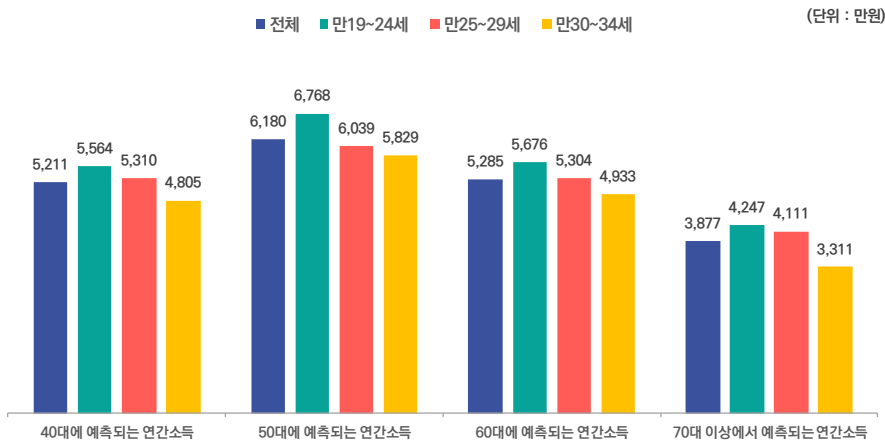


그림 IV-6. 연령대별 예측되는 연간소득

나.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00~6,000만원 미만’ 응답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2,000~4,000만원 미만’(24.6%), ‘6,000만원 이상’(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은 평균 5,21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564만원, 만25~29세: 5,310만원, 만30~34세: 4,805만원)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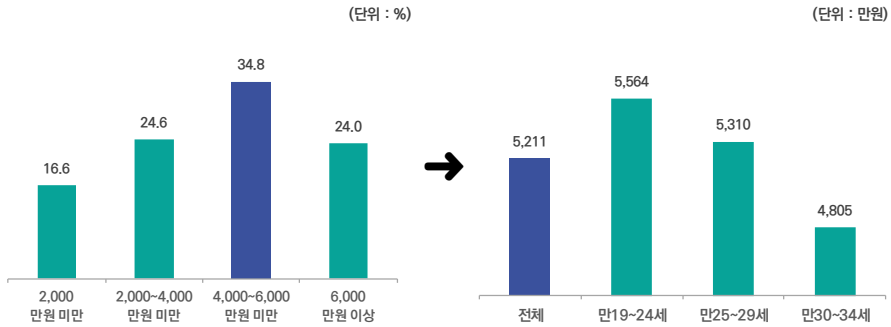


그림 IV-7.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표 IV-12.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16.6	24.6	34.8	24.0	5,211	-
만19~24세	1,201	21.4	23.5	31.1	24.0	5,564	2.157
만25~29세	1,503	16.0	24.2	37.5	22.2	5,310	
만30~34세	1,410	13.1	25.9	35.1	25.9	4,805	

*p<.05, **p<.01, ***p<.001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3. 4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16.6	24.6	34.8	24.0	5,211	-
성별	남자	1,945	16.6	18.3	36.0	29.2	5,395	1.163
	여자	2,169	16.6	30.2	33.7	19.4	5,047	
혼인 상태	미혼	3,272	17.3	25.6	34.8	22.2	5,174	1.199
	기혼	824	13.5	20.5	35.2	30.8	5,285	
	사별 및 이혼	18	33.3	16.7	22.2	27.8	8,63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8.9	27.6	25.9	17.6	5,119	0.708
	대학교	3,195	14.1	24.7	36.5	24.7	5,185	
	대학원 이상	190	11.6	11.1	40.5	36.8	6,01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7.4	24.1	28.6	19.9	4,995	2.521
	비정규직취업	1,045	19.7	29.1	33.4	17.8	4,738	
	정규직취업	1,679	6.0	22.3	40.8	30.9	5,630	
	자영업,창업 등	60	18.3	20.0	31.7	30.0	6,521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2.9	19.8	35.4	31.9	5,398	0.634
	청년 독립가구	1,007	12.3	24.3	36.4	26.9	5,445	
	부모 동거가구	2,316	19.3	26.4	34.0	20.3	5,037	
	기타	33	45.5	12.1	30.3	12.1	6,043	
지역별	수도권	2,276	14.6	21.8	36.3	27.3	5,495	1.674
	충청권	410	16.6	26.6	33.4	23.4	5,448	
	전라권	364	18.1	31.0	28.6	22.3	4,838	
	경상권	923	20.7	27.1	33.9	18.3	4,679	
	강원/제주권	141	18.4	29.8	37.6	14.2	4,38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6.0	34.9	24.4	14.7	5,341	0.202
	비빈곤층	3,733	15.6	23.5	35.9	24.9	5,198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4.5	20.2	35.6	29.7	5,634	2.233
	비슷	2,252	18.0	26.6	33.6	21.9	5,111	
	분배 중요	597	15.7	26.5	38.0	19.8	4,691	

*p<.05, **p<.01, ***p<.001

다.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 ‘6,000만원 이상’ 응답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4,000~6,000만원 미만’(30.5%), ‘2,000~4,000만원 미만’(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은 평균 6,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6,768만원, 만25~29세: 6,039만원, 만30~34세: 5,829만원)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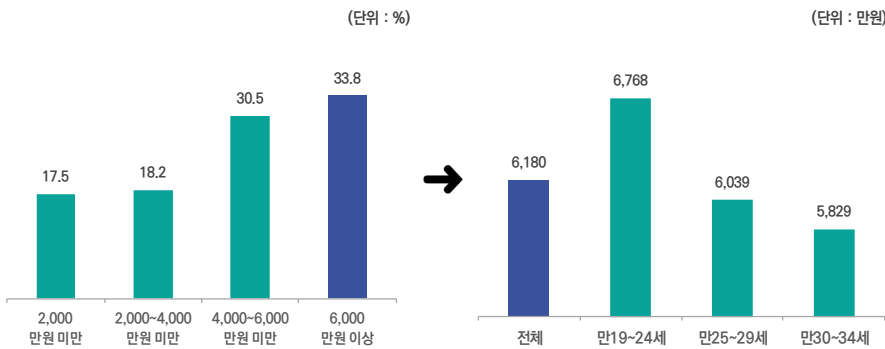


그림 IV-8.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표 IV-14.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17.5	18.2	30.5	33.8	6,180	-
만19~24세	1,201	21.7	17.8	28.6	31.9	6,768	2.420
만25~29세	1,503	17.3	17.6	31.4	33.7	6,039	
만30~34세	1,410	14.0	19.1	31.3	35.5	5,829	

*p<.05, **p<.01, ***p<.001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복지인식,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5,706만원), 강원/제주권(5,167만원), 복지인식 분배중요(5,323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5. 5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17.5	18.2	30.5	33.8	6,180	-
성별	남자	1,945	16.5	12.9	28.2	42.4	6,709	2.843**
	여자	2,169	18.3	23.0	32.6	26.1	5,706	
혼인 상태	미혼	3,272	18.0	19.1	30.9	32.0	6,189	0.726
	기혼	824	14.8	14.8	29.4	41.0	6,078	
	사별 및 이혼	18	38.9	11.1	22.2	27.8	9,3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30.3	21.0	26.6	22.1	6,044	0.886
	대학교	3,195	14.8	18.1	31.6	35.6	6,148	
	대학원 이상	190	13.7	9.5	27.4	49.5	7,23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8.0	19.2	25.1	27.7	5,936	1.216
	비정규직취업	1,045	19.5	23.2	29.8	27.6	5,881	
	정규직취업	1,679	7.8	14.5	35.3	42.3	6,511	
	자영업,창업 등	60	20.0	10.0	30.0	40.0	7,531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4.5	14.5	29.0	42.0	6,225	0.129
	청년 독립가구	1,007	13.0	17.9	31.2	37.9	6,309	
	부모 동거가구	2,316	20.0	19.7	30.8	29.5	6,099	
	기타	33	45.5	6.1	24.2	24.2	6,875	
지역별	수도권	2,276	15.8	15.9	31.4	36.9	6,602	2.748*
	충청권	410	16.6	19.5	33.4	30.5	6,615	
	전라권	364	19.2	21.7	26.1	33.0	5,319	
	경상권	923	20.8	21.2	28.5	29.5	5,441	
	강원/제주권	141	21.3	21.3	32.6	24.8	5,167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6.8	24.9	27.3	21.0	5,808	-0.674
	비빈곤층	3,733	16.5	17.5	30.9	35.1	6,218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4.7	16.0	27.7	41.6	7,064	6.241**
	비슷	2,252	19.0	19.1	30.9	31.0	5,911	
	분배 중요	597	17.6	19.4	35.2	27.8	5,323	

*p<.05, **p<.01, ***p<.001

라.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0만원 미만’ 응답이 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2,000~4,000만원 미만’(26.1%), ‘6,000만원 이상’(2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은 평균 5,28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19~24세: 5,676만원, 만25~29세: 5,304만원, 만30~34세: 4,933만원)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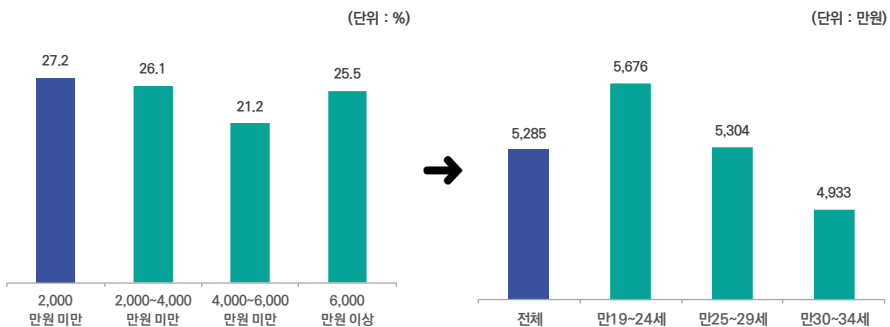


그림 IV-9.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표 IV-16.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27.2	26.1	21.2	25.5	5,285	-
만19~24세	1,201	31.1	26.6	19.4	23.0	5,676	1.403
만25~29세	1,503	27.3	25.5	21.3	25.9	5,304	
만30~34세	1,410	23.8	26.4	22.6	27.2	4,933	

*p<.05, **p<.01, ***p<.001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복지인식, 성별,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4,812만원), 대학교 학력(5,091만원), 복지인식 분배중요 (4,122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7. 60대에 예측되는 연간소득 (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27.2	26.1	21.2	25.5	5,285	-
성별	남자	1,945	24.3	22.7	21.6	31.4	2.833**
	여자	2,169	29.8	29.2	20.8	20.1	
혼인 상태	미혼	3,272	27.9	26.4	21.0	24.7	2.591
	기혼	824	23.8	25.1	22.3	28.8	
	사별 및 이혼	18	50.0	16.7	11.1	22.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39.5	28.1	15.2	17.1	3.251*
	대학교	3,195	24.6	26.3	22.7	26.4	
	대학원 이상	190	23.2	15.3	18.9	42.6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6.8	24.5	16.8	21.8	4,938	1.628
	비정규직취업	1,045	31.1	27.5	21.9	19.5	5,035	
	정규직취업	1,679	17.1	26.7	24.2	32.0	5,656	
	자영업,창업 등	60	28.3	21.7	21.7	28.3	6,96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24.0	24.9	22.3	28.8	5,131	2.383
	청년 독립가구	1,007	21.7	26.0	21.6	30.6	6,098	
	부모 동거가구	2,316	30.3	26.7	20.8	22.2	4,975	
	기타	33	48.5	18.2	9.1	24.2	5,783	
지역별	수도권	2,276	24.6	25.4	23.1	26.9	5,622	2.297
	충청권	410	28.0	26.3	20.2	25.4	5,921	
	전라권	364	31.9	25.3	19.2	23.6	4,401	
	경상권	923	30.2	28.1	18.1	23.6	4,632	
	강원/제주권	141	34.0	27.7	19.1	19.1	4,56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8.3	26.8	19.4	15.5	5,623	0.457
	비빈곤층	3,733	26.1	26.1	21.4	26.5	5,25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23.7	23.2	22.5	30.6	6,425	10.590***
	비슷	2,252	28.7	27.0	20.2	24.1	4,953	
	분배 중요	597	29.0	28.8	22.4	19.8	4,122	

*p<.05, **p<.01, ***p<.001

마.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0만원 미만’ 응답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2,000~4,000만원 미만’(30.2%), ‘4,000~6,000만원 미만’(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은 평균 3,87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만19~24세: 4,247만원, 만25~29세: 4,111만원, 만30~34세: 3,311만원)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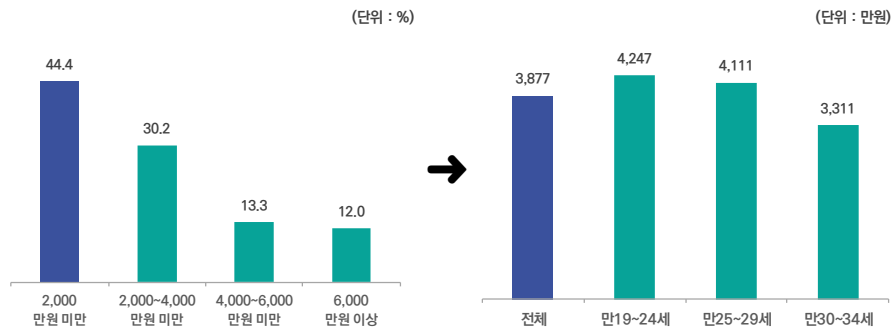


그림 IV-10.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

표 IV-18.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44.4	30.2	13.3	12.0	3,877	-
만19~24세	1,201	47.4	29.5	11.4	11.7	4,247	2.992
만25~29세	1,503	44.5	29.5	13.3	12.6	4,111	
만30~34세	1,410	41.8	31.6	15.0	11.6	3,311	

*p<.05, **p<.01, ***p<.001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성별,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403만원), 기혼(3,271만원), 강원/제주권(2,883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9. 70대 이상에서 예측되는 연간소득(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2,000 만원 미만	2,000~ 4,000 만원 미만	4,000~ 6,000 만원 미만	6,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44.4	30.2	13.3	12.0	3,877	-
성별	남자	1,945	39.9	30.0	15.0	15.1	4,405	2.948**
	여자	2,169	48.5	30.5	11.8	9.3	3,403	
혼인 상태	미혼	3,272	45.2	30.4	12.8	11.6	3,983	6.997***
	기혼	824	41.3	29.9	15.4	13.5	3,271	
	사별 및 이혼	18	50.0	16.7	16.7	16.7	12,35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55.4	26.5	8.2	9.9	4,281	1.553
	대학교	3,195	42.2	31.2	14.4	12.2	3,728	
	대학원 이상	190	39.5	28.9	14.7	16.8	4,83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52.9	24.8	11.6	10.7	3,915	2.464
	비정규직취업	1,045	48.3	30.1	10.9	10.6	3,419	
	정규직취업	1,679	35.4	34.8	16.2	13.6	4,017	
	자영업,창업 등	60	40.0	25.0	13.3	21.7	7,06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40.8	29.9	16.0	13.3	3,350	2.398
	청년 독립가구	1,007	40.3	31.7	13.8	14.2	4,616	
	부모 동거가구	2,316	47.3	29.8	12.2	10.7	3,716	
	기타	33	54.5	24.2	15.2	6.1	4,665	
지역별	수도권	2,276	41.5	31.4	13.9	13.2	4,091	3.100*
	충청권	410	48.0	26.8	13.4	11.7	5,117	
	전라권	364	51.1	25.0	13.2	10.7	3,170	
	경상권	923	46.3	31.4	12.1	10.2	3,226	
	강원/제주권	141	51.8	27.7	12.1	8.5	2,88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57.2	24.4	9.2	9.2	4,775	1.183
	비빈곤층	3,733	43.1	30.8	13.7	12.3	3,78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9.1	31.0	16.3	13.6	4,354	2.760
	비슷	2,252	46.4	29.6	12.0	12.0	3,811	
	분배 중요	597	48.2	31.0	12.1	8.7	3,114	

*p<.05, **p<.01, ***p<.001

(5)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 여부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응답이 47.4%(매우 그렇다: 9.6% + 그렇다: 37.8%)로 ‘그렇지 않다’ 응답 20.6%(전혀 그렇지 않다: 6.5% + 그렇지 않다: 1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은 평균 3.30점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9.2%, 만25~29세: 49.0%, 만30~34세: 35.7%) 긍정적 응답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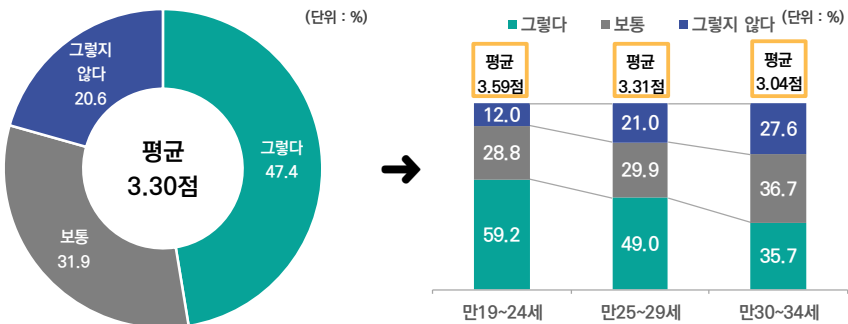


그림 IV-11.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 여부

표 IV-20.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 여부(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6.5	14.1	31.9	37.8	9.6	3.30	-
만19~24세	1,201	2.7	9.3	28.8	45.2	14.0	3.59	92.009***
만25~29세	1,503	7.2	13.8	29.9	39.0	10.0	3.31	
만30~34세	1,410	9.1	18.4	36.7	30.1	5.5	3.04	

*p<.05, **p<.01, ***p<.001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인식, 복지인식, 최종학력, 가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교 학력(3.28점), 청년 부부가구(3.24점), 빈곤층(2.73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17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표 IV-21. 본인의 미래 소득 상황 개선 가능성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6.5	14.1	31.9	37.8	9.6	3.30	-
성별	남자	1,945	7.6	13.0	32.5	37.0	10.0	3.29	-0.647
	여자	2,169	5.6	15.1	31.4	38.5	9.4	3.31	
혼인 상태	미혼	3,272	6.9	13.8	30.9	37.9	10.6	3.31	2.001
	기혼	824	5.1	15.5	35.9	37.5	5.9	3.24	
	사별 및 이혼	18	0.0	11.1	44.4	33.3	11.1	3.4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7.3	11.2	35.1	35.3	11.1	3.32	4.265*
	대학교	3,195	6.4	15.0	31.7	38.0	9.0	3.28	
	대학원 이상	190	6.8	10.0	24.2	43.7	15.3	3.5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7.5	10.9	33.9	37.4	10.3	3.32	1.498
	비정규직취업	1,045	5.3	16.7	29.8	36.9	11.3	3.32	
	정규직취업	1,679	6.6	15.1	31.8	38.8	7.8	3.26	
	자영업,창업 등	60	6.7	11.7	30.0	33.3	18.3	3.4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4.9	15.8	35.9	37.3	6.1	3.24	3.041*
	청년 독립가구	1,007	7.8	13.6	32.4	36.6	9.5	3.26	
	부모 동거가구	2,316	6.4	13.8	30.3	38.6	10.9	3.34	
	기타	33	15.2	9.1	42.4	24.2	9.1	3.03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지역별	수도권	2,276	6.4	12.8	32.2	39.0	9.5	3.32	0.972
	충청권	410	6.3	16.8	29.5	34.9	12.4	3.30	
	전라권	364	4.7	16.8	32.7	37.9	8.0	3.28	
	경상권	923	8.0	14.6	32.1	35.2	10.1	3.25	
	강원/제주권	141	4.3	16.3	31.9	42.6	5.0	3.28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2.8	21.3	24.1	23.1	8.7	2.73	-9.204***
	비빈곤층	3,733	4.9	13.4	32.7	39.3	9.8	3.36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5.6	14.5	25.4	42.1	12.3	3.41	12.565***
	비슷	2,252	6.5	12.4	37.0	35.9	8.2	3.27	
	분배 중요	597	8.7	19.6	26.6	35.7	9.4	3.17	

*p<.05, **p<.01, ***p<.001

2) 재산

(6)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니오’ 응답이 63.9%로 ‘예’ 응답 36.1%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만19~24세: 20.6%, 만25~29세: 37.1%, 만30~34세: 48.3%)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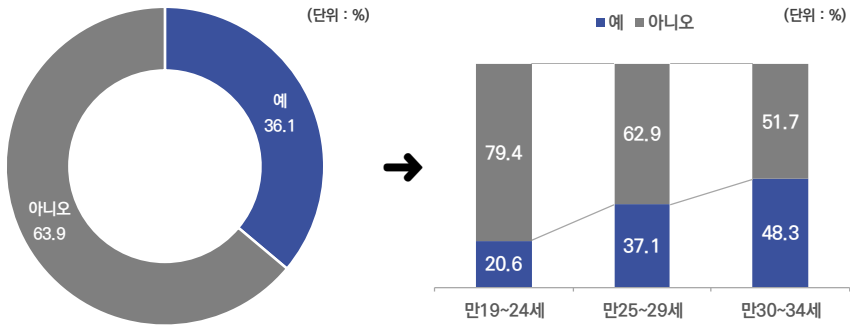


그림 IV-12.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여부

표 IV-22.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여부(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4,114	36.1	63.9	-
만19~24세	1,201	20.6	79.4	217.184***
만25~29세	1,503	37.1	62.9	
만30~34세	1,410	48.3	51.7	

*p<.05, **p<.01, ***p<.001

본인 명의 거주 주택을 소유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 취업상태,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67.8%), 미혼(71.5%), 고등학교 이하 학력(73.9%), 미취업/구직중(80.8%), 부모 동거가구(85.7%), 강원/제주권(72.3%), 복지인식 성장·분배 비슷(6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3.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4,114	36.1	63.9	-
성별	남자	1,945	40.4	59.6	29.779***
	여자	2,169	32.2	67.8	
혼인 상태	미혼	3,272	28.5	71.5	401.934***
	기혼	824	66.0	34.0	
	사별 및 이혼	18	44.4	55.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6.1	73.9	76.024***
	대학교	3,195	37.0	63.0	
	대학원 이상	190	58.9	41.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9.2	80.8	297.219***
	비정규직취업	1,045	35.7	64.3	
	정규직취업	1,679	49.5	50.5	
	자영업,창업 등	60	43.3	56.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65.3	34.7	1,119.192***
	청년 독립가구	1,007	64.7	35.3	
	부모 동거가구	2,316	14.3	85.7	
	기타	33	21.2	78.8	
지역별	수도권	2,276	37.2	62.8	10.352*
	충청권	410	37.6	62.4	
	전라권	364	30.8	69.2	
	경상권	923	36.2	63.8	
	강원/제주권	141	27.7	72.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3.9	66.1	0.912
	비빈곤층	3,733	36.3	63.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42.0	58.0	27.618***
	비슷	2,252	33.3	66.7	
	분배 중요	597	34.3	65.7	

*p<.05, **p<.01, ***p<.001

(6-1)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형태

본인 명의 거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n=1,485)의 주택 소유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가’ 응답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전세’ (32.8%), ‘보증금 있는 월세’(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형태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 (37.7%)는 ‘보증금 있는 월세’ 응답이, 만25~29세(36.4%)와 만30~34세(43.9%)는 ‘자가’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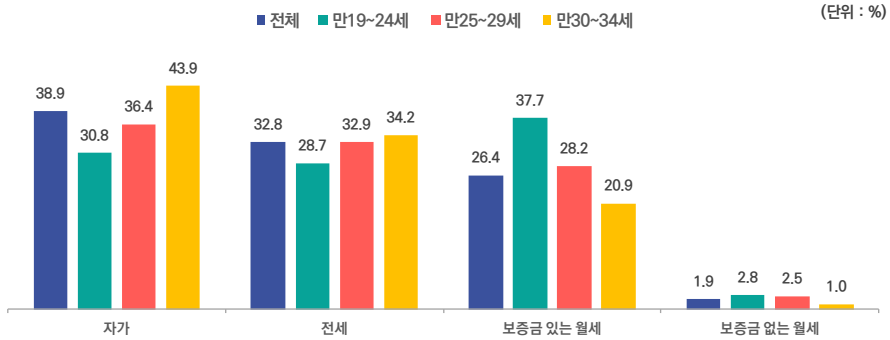


그림 IV-13.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형태

표 IV-24.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형태(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χ^2
전체	1,485	38.9	32.8	26.4	1.9	—
만19~24세	247	30.8	28.7	37.7	2.8	36.558***
만25~29세	557	36.4	32.9	28.2	2.5	
만30~34세	681	43.9	34.2	20.9	1.0	

*p<.05, **p<.01, ***p<.001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형태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가’ 응답은 기혼(56.1%), 대학원 이상 학력(48.2%), 정규직 취업(40.8%), 부모 동거가구(57.7%) 및 청년 부부가구(57.6%), 비빈곤층(41.3%)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 응답은 미혼(34.6%), 고등학교 이하 학력(40.5%), 비정규직 취업(33.8%), 청년 독립가구(40.8%), 빈곤층(55.8%)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 본인 명의 거주 주택 소유 형태(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χ^2
전체		1,485	38.9	32.8	26.4	1.9	-
성별	남자	786	40.8	32.6	24.6	2.0	3.950
	여자	699	36.8	33.0	28.5	1.7	
혼인 상태	미혼	933	29.0	33.9	34.6	2.5	142.294***
	기혼	544	56.1	31.1	12.1	0.7	
	사별 및 이혼	8	25.0	25.0	37.5	12.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90	31.1	23.7	40.5	4.7	42.992***
	대학교	1,183	39.3	35.0	24.4	1.3	
	대학원 이상	112	48.2	25.0	23.2	3.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55	35.7	26.3	33.7	4.3	47.641***
	비정규직취업	373	36.5	28.7	33.8	1.1	
	정규직취업	831	40.8	37.1	20.7	1.4	
	자영업,창업 등	26	46.2	19.2	30.8	3.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495	57.6	31.3	10.7	0.4	339.811***
	청년 독립가구	652	15.3	41.3	40.8	2.6	
	부모 동거가구	331	57.7	18.1	22.1	2.1	
	기타	7	28.6	42.9	0.0	28.6	

구분		사례수 [명]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χ^2
지역별	수도권	846	39.2	34.9	24.1	1.8	19.567
	충청권	154	29.2	38.3	31.8	0.6	
	전라권	112	42.0	26.8	27.7	3.6	
	경상권	334	41.9	27.5	28.4	2.1	
	강원/제주권	39	35.9	28.2	33.3	2.6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29	14.0	24.8	55.8	5.4	81.082***
	비빈곤층	1,356	41.3	33.6	23.6	1.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531	41.4	31.5	25.2	1.9	6.318
	비슷	749	38.3	33.6	26.6	1.5	
	분배 중요	205	34.6	33.2	28.8	3.4	

*p<.05, **p<.01, ***p<.001

(6-2) 거주 주택 비용 마련 방법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한(보증금 없는 월세 제외) 응답자(n=1,457)의 ‘거주 주택 비용 마련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부 본인 스스로’ 응답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26.5%),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 비용 마련 방법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47.0%) 및 만30~34세(51.9%)는 ‘전부 본인 스스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만19~24세는 ‘전부 본인 스스로’(28.8%) 및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28.3%) 및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주시고’(20.8%) 응답이 비교적 골고루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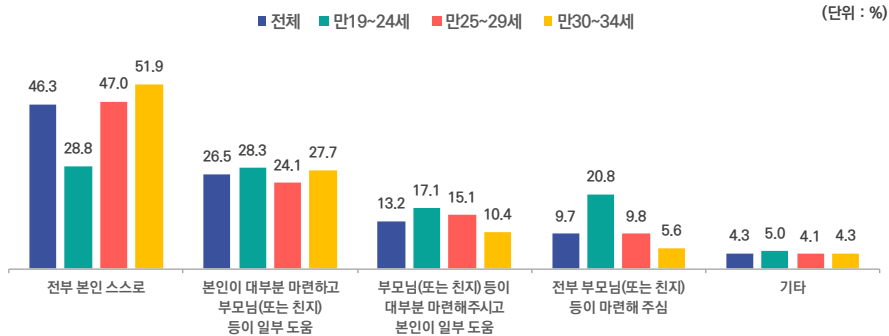


그림 IV-14. 거주 주택 비용 마련 방법

표 IV-26. 거주 주택 비용 마련 방법(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부 본인 스스로	본인이 대 부분 마련 하고 부모 님(또는 친 지) 등이 일부 도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 련해주시고 본인이 일 부 도움	전부 부모님 (또는 친지) 등이 마련 해 주심	기타	χ^2
전체	1,457	46.3	26.5	13.2	9.7	4.3	—
만19~24세	240	28.8	28.3	17.1	20.8	5.0	73.323***
만25~29세	543	47.0	24.1	15.1	9.8	4.1	
만30~34세	674	51.9	27.7	10.4	5.6	4.3	

*p<.05, **p<.01, ***p<.001

거주 주택 비용 마련 방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부 본인 스스로' 응답은 남성(47.8%), 기혼(47.6%), 정규직 취업(53.2%), 청년 독립가구(53.9%), 빈곤층(65.6%)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거주 주택 비용 마련 방법(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전부 본인 스스로	본인이 대 부분 마련 하고 부모 님(또는 친지) 등 이 일부 도움	부모님(또 는 친지) 등이 대부 분 마련해 주시고 본 인이 일부 도움	전부 부모 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 해 주심	기타	χ^2
전체		1,457	46.3	26.5	13.2	9.7	4.3	-
성별	남자	770	47.8	27.0	14.2	8.4	2.6	15.851**
	여자	687	44.5	25.9	12.2	11.1	6.3	
혼인 상태	미혼	910	45.7	21.9	15.2	13.4	3.8	76.092***
	기혼	540	47.6	34.4	9.6	3.1	5.2	
	사별 및 이혼	7	14.3	14.3	42.9	28.6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81	54.7	17.7	12.7	11.0	3.9	12.307
	대학교	1,168	44.9	27.7	13.4	9.8	4.2	
	대학원 이상	108	46.3	28.7	12.0	6.5	6.5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44	32.4	25.0	17.6	19.7	5.3	68.520***
	비정규직취업	369	39.6	31.2	14.9	10.3	4.1	
	정규직취업	819	53.2	24.8	11.4	6.5	4.2	
	자영업,창업 등	25	52.0	28.0	8.0	8.0	4.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493	47.3	36.1	9.1	2.4	5.1	146.320***
	청년 독립가구	635	53.9	18.9	12.3	10.2	4.7	
	부모 동거가구	324	29.6	26.9	21.6	19.4	2.5	
	기타	5	60.0	20.0	0.0	20.0	0.0	
지역별	수도권	831	46.7	25.6	14.3	8.5	4.8	19.363
	충청권	153	43.8	28.8	11.1	11.8	4.6	
	전라권	108	51.9	27.8	13.9	6.5	0.0	
	경상권	327	43.1	28.4	11.3	12.8	4.3	
	강원/제주권	38	57.9	15.8	13.2	7.9	5.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22	65.6	11.5	10.7	6.6	5.7	24.701***
	비빈곤층	1,335	44.5	27.9	13.5	10.0	4.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521	46.8	28.8	12.3	9.0	3.1	9.471
	비슷	738	45.8	26.3	12.9	9.9	5.1	
	분배 중요	198	46.5	21.2	17.2	10.6	4.5	

*p<.05, **p<.01, ***p<.001

(7)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000~10,000만원 미만’(6.0%), ‘10,000~50,000만원 미만’(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은 평균 10,57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가 평균 8,04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만30~34세가 평균 13,206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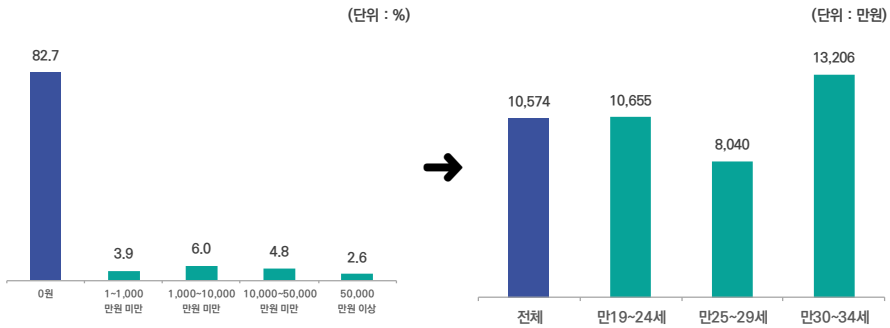


그림 IV-15.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

표 IV-28.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10,000 만원 미만	10,000~ 50,000 만원 미만	50,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82.7	3.9	6.0	4.8	2.6	10,574	—
만19~24세	1,201	87.5	3.6	4.7	2.0	2.2	10,655	1.332
만25~29세	1,503	81.8	5.3	6.1	4.8	2.0	8,040	
만30~34세	1,410	79.6	2.7	7.0	7.1	3.6	13,206	

*p<.05, **p<.01, ***p<.001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성별,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7,478만원), 미혼(7,378만원), 부모 동거가구(6,827만원), 빈곤층(3,379만원), 복지인식 성장·분배 비슷(8,029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29. (거주용 집을 제외한) 부동산 재산(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10,000 만원 미만	10,000 ~50,000 만원 미만	50,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82.7	3.9	6.0	4.8	2.6	10,574	-
성별	남자	1,945	77.9	4.8	7.6	6.1	3.5	14,028	2.417*
	여자	2,169	87.0	3.1	4.5	3.6	1.8	7,478	
혼인 상태	미혼	3,272	86.7	3.4	4.6	3.6	1.7	7,378	11.341***
	기혼	824	68.0	5.6	11.2	9.2	6.1	22,811	
	사별 및 이혼	18	38.9	16.7	22.2	11.1	11.1	31,42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4.6	5.9	4.8	2.5	2.2	9,991	0.877
	대학교	3,195	83.2	3.1	6.1	5.2	2.4	10,232	
	대학원 이상	190	68.4	10.0	8.9	5.8	6.8	18,57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86.1	5.1	3.6	3.1	2.1	10,301	1.506
	비정규직취업	1,045	79.6	6.3	8.6	2.9	2.6	12,358	
	정규직취업	1,679	82.4	1.4	6.1	7.3	2.7	8,950	
	자영업,창업 등	60	71.7	5.0	8.3	5.0	10.0	31,02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69.3	5.0	10.9	9.0	5.8	22,901	7.552***
	청년 독립가구	1,007	82.0	4.7	6.3	5.1	2.0	9,218	
	부모 동거가구	2,316	87.4	3.2	4.3	3.3	1.8	6,827	
	기타	33	87.9	3.0	3.0	0.0	6.1	31,849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10,000 만원 미만	10,000 ~50,000 만원 미만	50,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지역별	수도권	2,276	82.9	3.4	5.8	4.7	3.2	11,841	1.800
	충청권	410	84.4	4.9	4.6	5.1	1.0	6,711	
	전라권	364	85.4	3.0	6.9	3.8	0.8	2,055	
	경상권	923	80.1	4.9	7.3	5.1	2.7	13,647	
	강원/제주권	141	86.5	5.0	2.1	5.0	1.4	3,245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88.5	5.5	3.9	1.3	0.8	3,379	-2.637**
	비빈곤층	3,733	82.2	3.8	6.2	5.1	2.8	11,30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77.2	5.0	8.4	6.2	3.2	15,537	3.173*
	비슷	2,252	85.5	3.1	4.8	4.4	2.3	8,029	
	분배 중요	597	83.9	4.7	5.5	3.4	2.5	9,661	

*p<.05, **p<.01, ***p<.001

(8) 본인 명의 자가 마련 희망 여부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응답자(n=2,629)를 대상으로 ‘본인 명의 자가 마련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 응답이 87.0%로 ‘아니오’ 응답 1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 명의 자가 마련 희망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만19~24세: 88.8%, 만25~29세: 86.8%, 만30~34세: 85.0%) ‘예’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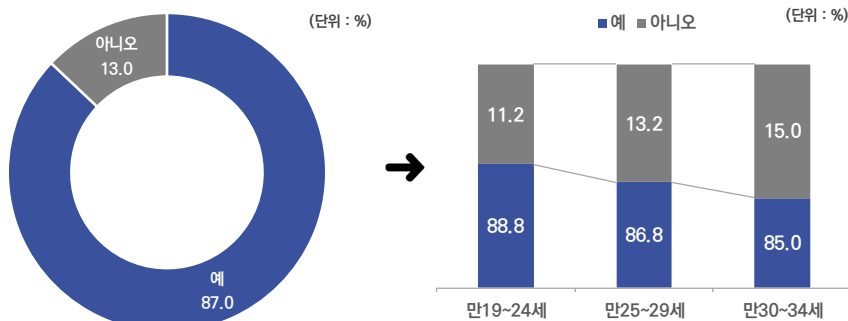


그림 IV-16. 본인 명의 자가 마련 희망 여부

표 IV-30. 본인 명의 자가 마련 희망 여부(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2,629	87.0	13.0	-
만19~24세	954	88.8	11.2	5.187
만25~29세	946	86.8	13.2	
만30~34세	729	85.0	15.0	

*p<.05, **p<.01, ***p<.001

본인 명의 자가 마련을 희망한다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지역, 혼인상태,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87.9%), 대학교 학력(88.6%), 정규직 취업(92.3%), 청년 독립 가구(89.3%), 수도권(88.9%), 복지인식 성장중요(90.7%)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31. 본인 명의 자가 마련 희망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2,629	87.0	13.0	-
성별	남자	1,159	86.6	13.4	0.298
	여자	1,470	87.3	12.7	
혼인 상태	미혼	2,339	87.9	12.1	13.757**
	기혼	280	80.0	20.0	
	사별 및 이혼	10	90.0	1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539	81.6	18.4	18.532***
	대학교	2,012	88.6	11.4	
	대학원 이상	78	84.6	15.4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075	81.4	18.6	59.573***
	비정규직취업	672	89.9	10.1	
	정규직취업	848	92.3	7.7	
	자영업,창업 등	34	76.5	23.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263	80.2	19.8	17.686***
	청년 독립가구	355	89.3	10.7	
	부모 동거가구	1,985	87.7	12.3	
	기타	26	73.1	26.9	
지역별	수도권	1,430	88.9	11.1	20.572***
	충청권	256	87.9	12.1	
	전라권	252	79.0	21.0	
	경상권	589	86.2	13.8	
	강원/제주권	102	83.3	16.7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252	84.5	15.5	1.550
	비빈곤층	2,377	87.3	12.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734	90.7	9.3	12.399**
	비슷	1,503	85.6	14.4	
	분배 중요	392	85.7	14.3	

*p<.05, **p<.01, ***p<.001

(8-1) 기대하는 본인 명의 자가 마련 시기

본인 명의 자가 마련을 희망하는 응답자(n=2,288)의 ‘기대하는 본인 명의 자가 마련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년 초과 20년 이내’ 응답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5년 초과 10년 이내’(27.8%), ‘마련이 불가능함’(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하는 본인 명의 자가 마련 시기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36.4%)는 ‘10년 초과 20년 이내’ 응답이, 만25~29세(28.1%) 및 만30~34세(26.9%)는 ‘5년 초과 10년 이내’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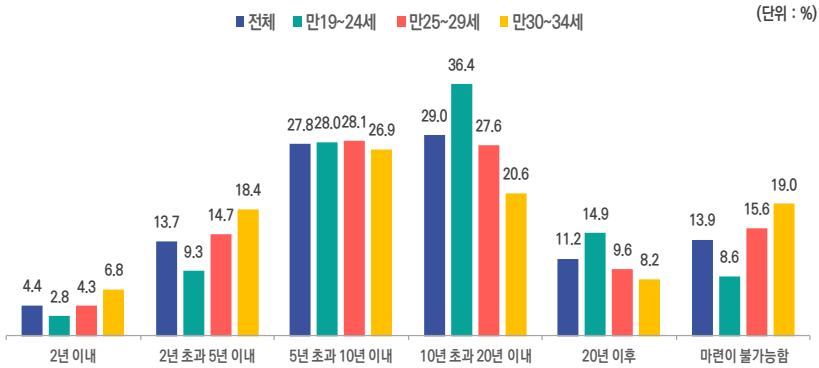


그림 IV-17. 기대하는 본인 명의 자가 마련 시기

표 IV-32. 기대하는 본인 명의 자가 마련 시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2년 이내	2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 과 20년 이내	20년 이후	마련이 불가능함	χ^2
전체	2,288	4.4	13.7	27.8	29.0	11.2	13.9	-
만19~24세	847	2.8	9.3	28.0	36.4	14.9	8.6	113.835***
만25~29세	821	4.3	14.7	28.1	27.6	9.6	15.6	
만30~34세	620	6.8	18.4	26.9	20.6	8.2	19.0	

*p<.05, **p<.01, ***p<.001

기대하는 본인 명의 자가 마련 시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 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지역,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5년 초과 10년 이내’ 응답은 기혼(29.9%), 대학원 이상 학력(33.3%), 정규직 취업(31.9%), 청년 부부가구(30.8%), 경상권(29.3%)에서, ‘10년 초과 20년 이내’ 응답은 미혼(29.8%), 고등학교 이하 학력(34.3%), 비정규직 취업(33.4%), 부모 동거가구(30.6%), 수도권(31.1%), 비빈곤층(29.7%), 복지인식 성장중요(29.7%)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3. 기대하는 본인 명의 자가 마련 시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2년 이내	2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20년 이내	20년 이후	마련이 불가능 함	χ^2
전체		2,288	4.4	13.7	27.8	29.0	11.2	13.9	-
성별	남자	1,004	5.2	13.4	25.3	29.7	12.0	14.4	7.915
	여자	1,284	3.8	13.9	29.7	28.4	10.6	13.6	
혼인 상태	미혼	2,055	3.7	13.1	27.4	29.8	11.7	14.4	57.567***
	기혼	224	9.8	19.6	29.9	22.8	7.1	10.7	
	사별 및 이혼	9	33.3	11.1	55.6	0.0	0.0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440	3.4	10.9	23.4	34.3	13.4	14.5	38.058***
	대학교	1,782	4.3	14.4	28.6	28.1	10.9	13.8	
	대학원 이상	66	15.2	15.2	33.3	18.2	4.5	13.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875	3.8	8.2	25.0	31.2	14.7	17.0	112.132***
	비정규직취업	604	2.3	14.2	26.5	33.4	11.1	12.4	
	정규직취업	783	6.4	19.4	31.9	23.4	7.3	11.6	
	자영업,창업 등	26	15.4	15.4	23.1	19.2	11.5	15.4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211	10.4	19.4	30.8	23.2	5.7	10.4	60.323***
	청년 독립가구	317	7.3	15.5	26.5	24.0	9.5	17.4	
	부모 동거가구	1,741	3.1	12.8	27.6	30.6	12.2	13.7	
	기타	19	10.5	5.3	26.3	26.3	10.5	21.1	

구분		사례수 [명]	2년 이내	2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20년 이내	20년 이후	마련이 불가능 함	χ^2
지역별	수도권	1,271	3.9	12.4	26.9	31.1	11.1	14.7	33.780*
	충청권	225	6.2	16.9	28.9	24.0	7.6	16.4	
	전라권	199	4.5	19.1	29.1	26.6	12.1	8.5	
	경상권	508	4.9	14.0	29.3	27.2	11.0	13.6	
	강원/제주권	85	4.7	11.8	24.7	27.1	21.2	10.6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213	1.4	9.4	12.2	22.1	17.8	37.1	131.890***
	비빈곤층	2,075	4.7	14.2	29.3	29.7	10.5	11.6	
복지 인식	성장 중요	666	6.0	14.6	29.6	29.7	8.7	11.4	23.063*
	비슷	1,286	4.0	13.8	27.0	29.2	11.5	14.5	
	분배 중요	336	2.7	11.9	27.1	26.5	14.9	17.0	

*p<.05, **p<.01, ***p<.001

(9) 본인이 보유한 총 부동산의 가격 변화 예측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n=1,746)의 총 부동산 가격 변화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상승’ 응답이 47.6%(매우 상승할 것이다: 8.7% + 대체로 상승할 것이다: 38.9%)로 ‘하락’ 응답 16.6%(매우 하락할 것이다: 3.4% + 대체로 하락할 것이다: 13.2%)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이 보유한 총 부동산 가격 변화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43.8%, 만25~29세: 47.9%, 만30~34세: 48.8%) 본인이 보유한 총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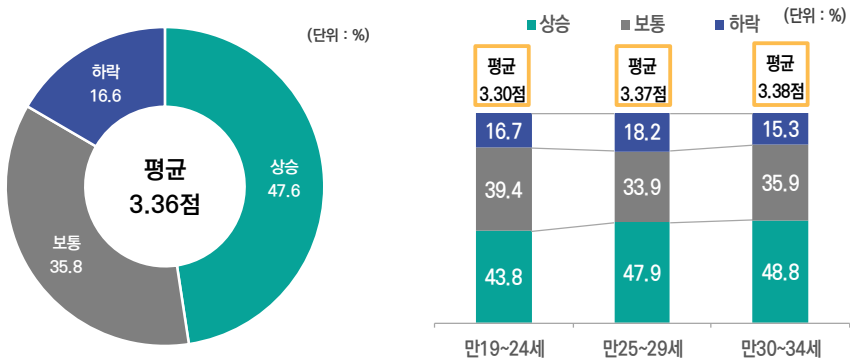


그림 IV-18. 본인이 보유한 총 부동산의 가격 변화 예측

표 IV-34. 본인이 보유한 총 부동산의 가격 변화 예측(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하락할 것이다	대체로 하락할 것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상승할 것이다	매우 상승할 것이다	5점 평균	F
전체	1,746	3.4	13.2	35.8	38.9	8.7	3.36	-
만19~24세	317	3.8	12.9	39.4	36.9	6.9	3.30	0.836
만25~29세	649	4.0	14.2	33.9	36.7	11.2	3.37	
만30~34세	780	2.7	12.6	35.9	41.5	7.3	3.38	

*p<.05, **p<.01, ***p<.001

본인이 보유한 총 부동산의 가격 변화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43점), 정규직 취업(3.45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부동산 가격 변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5. 본인이 보유한 총 부동산의 가격 변화 예측(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하락할 것이다	대체로 하락할 것이다	보통 이다	대체로 상승할 것이다	매우 상승할 것이다	5점 평균	F/t
전체		1,746	3.4	13.2	35.8	38.9	8.7	3.36	-
성별	남자	932	4.0	15.1	35.8	36.2	8.9	3.31	-2.607**
	여자	814	2.7	11.1	35.7	42.0	8.5	3.43	
혼인 상태	미혼	1,132	3.3	12.2	38.2	37.6	8.7	3.36	0.218
	기혼	603	3.6	15.1	31.5	41.3	8.5	3.36	
	사별 및 이혼	11	0.0	18.2	27.3	36.4	18.2	3.5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42	6.6	10.3	42.6	31.8	8.7	3.26	2.693
	대학교	1,378	2.8	13.9	35.3	39.6	8.4	3.37	
	대학원 이상	126	4.0	11.9	27.8	44.4	11.9	3.4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368	4.6	11.4	43.2	30.7	10.1	3.30	6.111***
	비정규직취업	434	5.1	18.0	32.9	36.9	7.1	3.23	
	정규직취업	911	2.2	11.5	34.4	43.0	8.9	3.45	
	자영업,창업 등	33	0.0	18.2	30.3	42.4	9.1	3.4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48	3.5	15.1	31.9	40.1	9.3	3.37	0.416
	청년 독립가구	701	2.7	10.6	41.4	36.1	9.3	3.39	
	부모 동거가구	490	4.3	14.9	32.0	41.4	7.3	3.33	
	기타	7	0.0	14.3	42.9	42.9	0.0	3.29	
지역별	수도권	982	3.7	12.8	33.6	40.4	9.5	3.39	0.731
	충청권	180	0.6	20.0	34.4	36.7	8.3	3.32	
	전라권	135	3.0	15.6	37.8	35.6	8.1	3.30	
	경상권	401	4.2	11.5	40.1	36.2	8.0	3.32	
	강원/제주권	48	2.1	4.2	43.8	47.9	2.1	3.44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51	8.6	9.9	37.1	29.8	14.6	3.32	-0.531
	비빈곤층	1,595	2.9	13.5	35.7	39.7	8.2	3.3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623	4.8	17.0	28.7	40.1	9.3	3.32	1.969
	비소득	880	2.3	10.1	43.5	36.9	7.2	3.37	
	분배 중요	243	3.7	14.8	25.9	42.8	12.8	3.46	

*p<.05, **p<.01, ***p<.001

(10) 본인 명의 자동차 소유 여부

‘본인 명의 자동차 소유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니오’ 응답이 68.7%로 ‘예’ 응답 31.3%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 명의 자동차 소유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19~24세: 12.3%, 만25~29세: 31.0%, 만30~34세: 47.7%) 본인 명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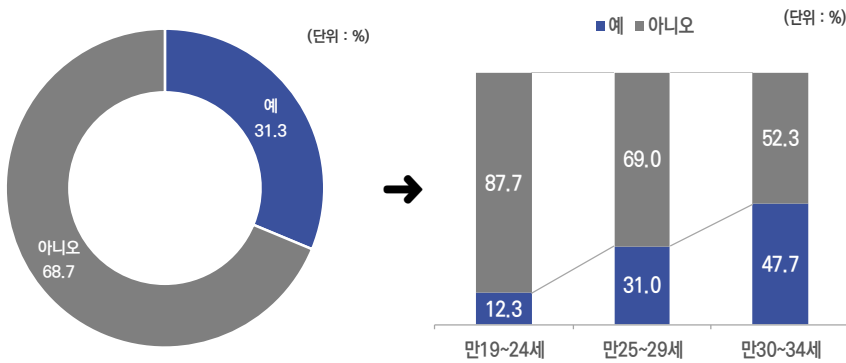


그림 IV-19. 본인 소유의 자동차 소유 여부

표 IV-36. 본인 소유의 자동차 소유 여부(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4,114	31.3	68.7	-
만19~24세	1,201	12.3	87.7	376.958***
만25~29세	1,503	31.0	69.0	
만30~34세	1,410	47.7	52.3	

*p<.05, **p<.01, ***p<.001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지역,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74.8%), 미혼(77.2%), 고등학교 이하 학력(80.9%), 미취업/구직중(86.3%), 부모 동거가구(80.7%), 수도권(71.4%), 빈곤층(81.6%), 복지인식 분배중요(71.4%)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7. 본인 소유의 자동차 소유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4,114	31.3	68.7	-
성별	남자	1,945	38.0	62.0	79.088***
	여자	2,169	25.2	74.8	
혼인 상태	미혼	3,272	22.8	77.2	535.762***
	기혼	824	64.6	35.4	
	사별 및 이혼	18	44.4	55.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9.1	80.9	96.087***
	대학교	3,195	32.7	67.3	
	대학원 이상	190	53.2	46.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3.7	86.3	396.524***
	비정규직취업	1,045	27.6	72.4	
	정규직취업	1,679	47.0	53.0	
	자영업,창업 등	60	45.0	55.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65.6	34.4	572.756***
	청년 독립가구	1,007	33.3	66.7	
	부모 동거가구	2,316	19.3	80.7	
	기타	33	18.2	81.8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지역별	수도권	2,276	28.6	71.4	25.764***
	충청권	410	39.5	60.5	
	전라권	364	36.8	63.2	
	경상권	923	31.5	68.5	
	강원/제주권	141	33.3	66.7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8.4	81.6	32.449***
	비빈곤층	3,733	32.6	67.4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6.9	63.1	27.217***
	비슷	2,252	28.8	71.2	
	분배 중요	597	28.6	71.4	

*p<.05, **p<.01, ***p<.001

(10-1) 자동차 배기량

본인 명의 자동차를 소유한 응답자(n=1,286)를 대상으로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형(2,000cc 미만)' 응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소형(1,600cc 미만)'(31.7%), '경차(~1,000cc)'(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 자동차의 배기량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는 '소형(1,600cc 미만)'(38.5%) 응답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고, 만30~34세는 '중형(2,000cc 미만)'(48.7%)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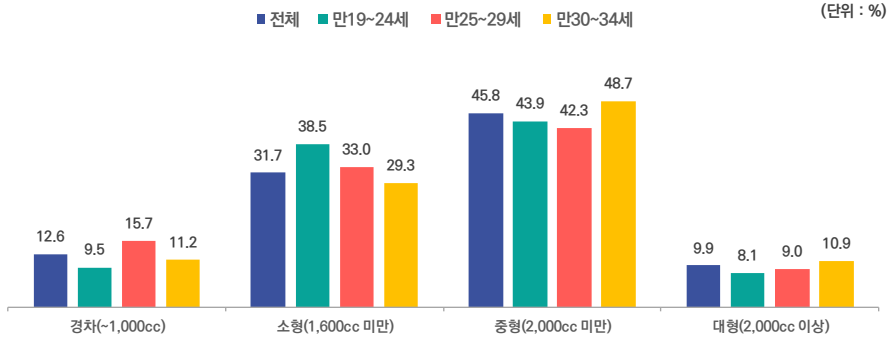


그림 IV-20. 자동차 배기량

표 IV-38. 자동차 배기량(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차 (~1,000cc)	소형(1,600cc 미만)	중형(2,000cc 미만)	대형(2,000cc 이상)	χ^2
전체	1,286	12.6	31.7	45.8	9.9	—
만19~24세	148	9.5	38.5	43.9	8.1	13.438*
만25~29세	466	15.7	33.0	42.3	9.0	
만30~34세	672	11.2	29.3	48.7	10.9	

*p<.05, **p<.01, ***p<.001

자동차 배기량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가구유형, 최종학력, 취업상태,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형(2,000cc 미만)' 응답은 남성(47.0%), 기혼(52.1%), 대학원 이상 학력(57.4%), 정규직 취업(48.5%), 청년 부부가구(53.1%), 비빈곤층(46.5%)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9. 자동차 배기량(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차 (~1,000cc)	소형 (1,600cc 미만)	중형 (2,000cc 미만)	대형 (2,000cc 이상)	χ^2
전체		1,286	12.6	31.7	45.8	9.9	-
성별	남자	740	8.6	33.1	47.0	11.2	26.365***
	여자	546	17.9	29.9	44.1	8.1	
혼인 상태	미혼	746	14.7	35.7	41.3	8.3	29.458***
	기혼	532	9.8	26.3	52.1	11.8	
	사별 및 이혼	8	0.0	25.0	50.0	25.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39	12.2	39.6	37.4	10.8	19.856**
	대학교	1,046	13.3	31.7	45.8	9.2	
	대학원 이상	101	5.9	20.8	57.4	15.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82	14.3	29.1	45.6	11.0	21.703**
	비정규직취업	288	15.6	37.5	39.6	7.3	
	정규직취업	789	11.2	30.3	48.5	10.0	
	자영업,창업 등	27	11.1	29.6	33.3	25.9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497	9.3	26.0	53.1	11.7	35.175***
	청년 독립가구	335	13.7	39.1	40.0	7.2	
	부모 동거가구	448	15.6	32.8	41.7	9.8	
	기타	6	0.0	16.7	66.7	16.7	
지역별	수도권	652	11.8	29.3	48.8	10.1	16.063
	충청권	162	13.0	34.6	42.6	9.9	
	전라권	134	15.7	32.8	45.5	6.0	
	경상권	291	11.3	35.7	40.9	12.0	
	강원/제주권	47	21.3	27.7	46.8	4.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70	25.7	35.7	32.9	5.7	14.488**
	비빈곤층	1,216	11.8	31.5	46.5	10.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467	12.0	30.6	46.9	10.5	3.587
	비슷	648	12.3	33.5	44.4	9.7	
	분배 중요	171	15.2	28.1	48.0	8.8	

*p<.05, **p<.01, ***p<.001

(10-2) 전기자동차 여부

본인 명의 자동차를 소유한 응답자(n=1,286)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인지예 대해 조사한 결과, ‘아니오’ 응답이 89.6%로 ‘예’ 응답 1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기자동차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82.4%, 만25~29세: 85.6%, 만30~34세: 93.9%) 전기자동차가 아니라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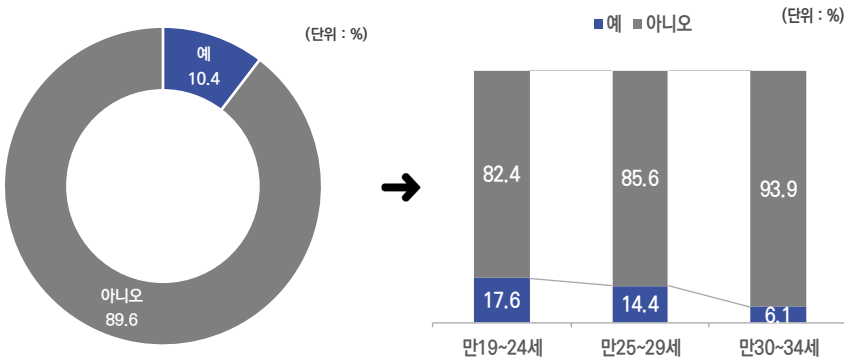


그림 IV-21. 전기자동차 여부

표 IV-40. 전기자동차 여부(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1,286	10.4	89.6	-
만19~24세	148	17.6	82.4	29.348***
만25~29세	466	14.4	85.6	
만30~34세	672	6.1	93.9	

*p<.05, **p<.01, ***p<.001

전기자동차가 아니라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 혼인상태, 최종학력,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92.1%), 대학교 학력(91.0%), 미취업/구직중(95.6%), 복지인식 성장·분배 비슷(92.1%)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1. 전기자동차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1,286	10.4	89.6	-
성별	남자	740	11.1	88.9	0.816
	여자	546	9.5	90.5	
혼인 상태	미혼	746	7.9	92.1	13.075**
	기혼	532	13.7	86.3	
	사별 및 이혼	8	25.0	75.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39	15.1	84.9	13.195**
	대학교	1,046	9.0	91.0	
	대학원 이상	101	18.8	81.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82	4.4	95.6	73.947***
	비정규직취업	288	24.0	76.0	
	정규직취업	789	7.0	93.0	
	자영업, 창업 등	27	7.4	92.6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497	12.9	87.1	5.986
	청년 독립가구	335	9.6	90.4	
	부모 동거가구	448	8.5	91.5	
	기타	6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52	11.2	88.8	3.155
	충청권	162	7.4	92.6	
	전라권	134	9.7	90.3	
	경상권	291	11.3	88.7	
	강원/제주권	47	6.4	93.6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70	5.7	94.3	1.756
	비빈곤층	1,216	10.7	89.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467	13.9	86.1	10.639**
	비슷	648	7.9	92.1	
	분배 중요	171	10.5	89.5	

*p<.05, **p<.01, ***p<.001

(11-1)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희망 여부

본인 명의 자동차가 없는 응답자(n=2,828)에게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희망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 응답이 67.9%로 ‘아니오’ 응답 32.1%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희망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만19~24세: 74.7%, 만25~29세: 65.2%, 만30~34세: 61.9%)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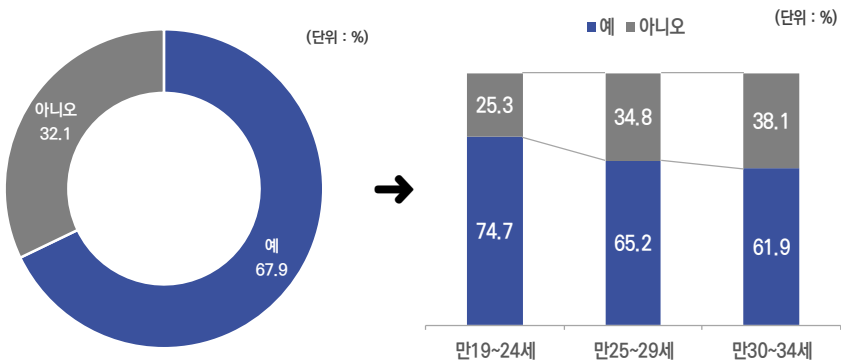


그림 IV-22.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희망 여부

표 IV-42.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희망 여부(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2,828	67.9	32.1	-
만19~24세	1,053	74.7	25.3	38.181***
만25~29세	1,037	65.2	34.8	
만30~34세	738	61.9	38.1	

*p<.05, **p<.01, ***p<.001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을 희망한다는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최종학력, 복지인식,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69.2%), 대학교 학력(69.7%), 비정규직 취업(75.2%), 부모 동거가구(71.5%), 전라권(76.5%), 복지인식 성장중요(72.9%)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3.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희망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2,828	67.9	32.1	-
성별	남자	1,205	68.5	0.414
	여자	1,623	67.4	
혼인 상태	미혼	2,526	69.2	21.011***
	기혼	292	57.2	
	사별 및 이혼	10	4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590	62.4	12.843**
	대학교	2,149	69.7	
	대학원 이상	89	61.8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148	62.8	37.2	36.455***
	비정규직취업	757	75.2	24.8	
	정규직취업	890	68.9	31.1	
	자영업,창업 등	33	51.5	48.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261	57.1	42.9	45.554***
	청년 독립가구	672	63.5	36.5	
	부모 동거가구	1,868	71.5	28.5	
	기타	27	33.3	66.7	
지역별	수도권	1,624	67.5	32.5	10.054*
	충청권	248	66.1	33.9	
	전라권	230	76.5	23.5	
	경상권	632	67.4	32.6	
	강원/제주권	94	61.7	38.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11	66.2	33.8	0.439
	비빈곤층	2,517	68.1	31.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798	72.9	27.1	12.974**
	비슷	1,604	65.8	34.2	
	분배 중요	426	66.2	33.8	

*p<.05, **p<.01, ***p<.001

(11-2) 향후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시기

본인 명의 자동차 마련을 희망하는 응답자(n=1,920)의 ‘향후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시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2년 초과 5년 이내’ 응답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5년 초과 10년 이내’(32.2%), ‘2년 이내’(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시기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40.2%)는 ‘5년 초과 10년 이내’ 응답이, 만25~29세(37.6%) 및 만30~34세(37.2%)는 ‘2년 초과 5년 이내’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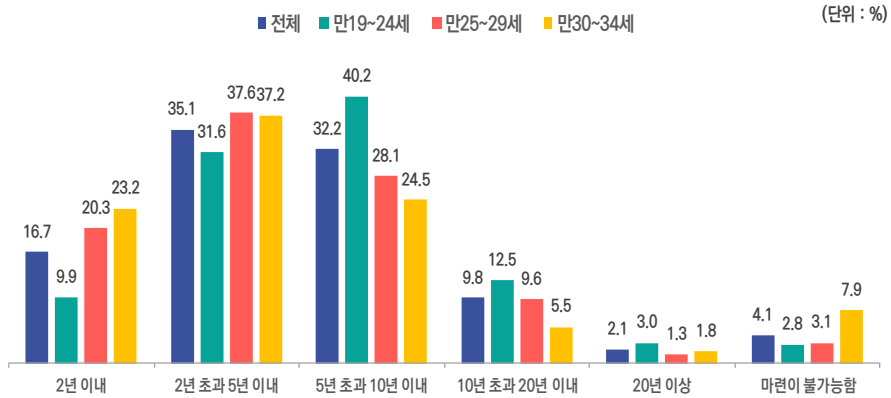


그림 IV-23. 향후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시기

표 IV-44. 향후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시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2년 이내	2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 과 20년 이내	20년 이상	마련이 불가능함	χ^2
전체	1,920	16.7	35.1	32.2	9.8	2.1	4.1	-
만19~24세	787	9.9	31.6	40.2	12.5	3.0	2.8	110.789***
만25~29세	676	20.3	37.6	28.1	9.6	1.3	3.1	
만30~34세	457	23.2	37.2	24.5	5.5	1.8	7.9	

*p<.05, **p<.01, ***p<.001

향후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시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년 초과 5년 이내’ 응답은 대학교 학력(36.9%), 정규직 취업(40.5%), 청년 부부가구(38.3%), 비빈곤층(3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5. 향후 본인 소유 자동차 마련 시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2년 이내	2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20년 이내	20년 이상	마련이 불가능 함	χ^2
전체		1,920	16.7	35.1	32.2	9.8	2.1	4.1	-
성별	남자	826	16.6	35.8	31.2	9.3	2.2	4.8	2.885
	여자	1,094	16.8	34.5	32.9	10.1	2.1	3.6	
혼인 상태	미혼	1,749	16.1	34.8	32.8	9.9	2.3	4.2	15.615
	기혼	167	23.4	38.9	24.6	9.0	0.6	3.6	
	사별 및 이혼	4	25.0	0.0	75.0	0.0	0.0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68	12.5	27.7	34.8	14.7	4.9	5.4	43.614***
	대학교	1,497	17.8	36.9	31.4	8.7	1.5	3.7	
	대학원 이상	55	16.4	34.5	36.4	7.3	0.0	5.5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721	11.4	29.0	36.6	13.7	3.2	6.1	133.260***
	비정규직취업	569	13.0	37.3	36.9	8.6	1.8	2.5	
	정규직취업	613	25.6	40.5	23.0	6.4	1.3	3.3	
	자영업,창업 등	17	47.1	23.5	17.6	5.9	0.0	5.9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49	24.2	38.3	24.8	8.1	0.7	4.0	70.346***
	청년 독립가구	427	23.9	36.8	29.3	5.4	0.2	4.4	
	부모 동거가구	1,335	13.7	34.1	34.1	11.2	2.9	4.0	
	기타	9	0.0	44.4	11.1	44.4	0.0	0.0	
지역별	수도권	1,096	15.4	35.0	32.8	10.4	1.7	4.6	25.110
	충청권	164	17.7	41.5	27.4	9.1	1.2	3.0	
	전라권	176	25.0	35.8	26.7	6.3	3.4	2.8	
	경상권	426	16.4	33.1	33.6	9.9	2.8	4.2	
	강원/제주권	58	15.5	29.3	39.7	10.3	3.4	1.7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206	12.1	24.8	28.2	10.7	6.3	18.0	137.593***
	비빈곤층	1,714	17.3	36.3	32.7	9.7	1.6	2.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582	16.5	35.2	32.3	9.5	2.9	3.6	10.405
	비슷	1,056	17.9	34.4	32.4	9.2	1.9	4.3	
	분배 중요	282	12.8	37.2	31.2	12.8	1.4	4.6	

*p<.05, **p<.01, ***p<.001

3) 금융(금융상품,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

(12) 금융재산 현황

가. 금융상품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재산 중 ‘금융상품(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등)’의 규모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00만원 미만’ 응답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000~3,000만원 미만’(22.4%), ‘0원’(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금융 재산 중 금융상품 규모는 평균 2,58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상품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1,330만원, 만25~29세: 2,628만원, 만30~34세: 3,619만원) 금융상품의 규모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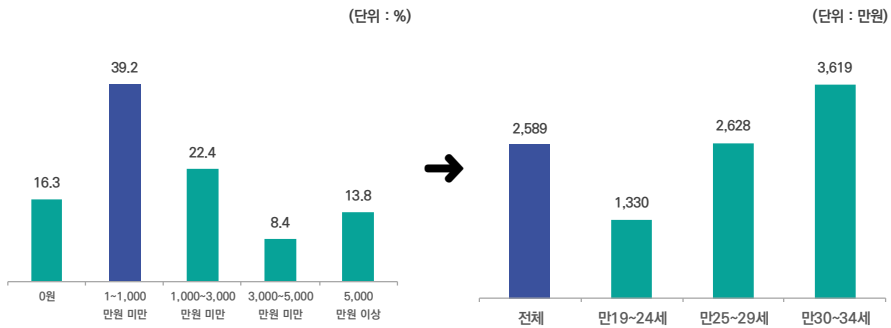


그림 IV-24. 금융상품

표 IV-46. 금융상품(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3,000 만원 미만	3,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16.3	39.2	22.4	8.4	13.8	2,589	-
만19~24세	1,201	21.4	53.6	16.9	3.7	4.4	1,330	20.488***
만25~29세	1,503	14.0	39.8	23.0	10.1	13.2	2,628	
만30~34세	1,410	14.3	26.3	26.4	10.5	22.5	3,619	

*p<.05, **p<.01, ***p<.001

금융상품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2,084만원), 고등학교 이하 학력(1,585만원), 미취업/구직중(1,192만원), 부모 동거가구(2,066만원), 빈곤층(1,014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금융상품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47. 금융상품(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 1,000 만원 미만	1,000~ 3,000 만원 미만	3,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16.3	39.2	22.4	8.4	13.8	2,589	-
성별	남자	1,945	19.1	36.8	21.9	7.8	14.4	0.261
	여자	2,169	13.7	41.4	22.8	8.9	13.3	
혼인 상태	미혼	3,272	17.2	41.0	22.2	7.9	11.7	25.024***
	기혼	824	12.6	31.6	23.2	10.4	22.2	
	사별 및 이혼	18	11.1	55.6	16.7	5.6	1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7.3	48.3	15.1	3.8	5.5	5.347**
	대학교	3,195	14.0	37.5	24.2	9.0	15.3	
	대학원 이상	190	11.6	33.2	20.0	15.3	20.0	

구분		사례수 [명]	0원	1~ 1,000 만원 미만	1,000~ 3,000 만원 미만	3,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6.2	48.3	16.6	4.2	4.7	1,192	23.453***
	비정규직취업	1,045	15.8	46.8	22.5	6.3	8.6	2,179	
	정규직취업	1,679	8.6	27.6	26.7	12.9	24.2	3,877	
	자영업,창업 등	60	18.3	31.7	25.0	10.0	15.0	4,62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2.3	30.7	23.2	10.8	23.0	4,427	13.237***
	청년 독립가구	1,007	14.0	37.9	25.9	8.9	13.2	2,460	
	부모 동거가구	2,316	18.3	42.6	20.6	7.4	11.1	2,066	
	기타	33	33.3	36.4	18.2	3.0	9.1	968	
지역별	수도권	2,276	16.2	37.7	22.1	8.6	15.5	2,699	0.322
	충청권	410	15.9	40.7	23.7	7.8	12.0	2,437	
	전라권	364	16.5	40.9	24.5	6.9	11.3	2,561	
	경상권	923	16.6	40.8	21.8	9.3	11.5	2,343	
	강원/제주권	141	16.3	44.7	20.6	4.3	14.2	2,914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0.2	45.1	13.9	6.8	3.9	1,014	-5.568***
	비빈곤층	3,733	14.8	38.6	23.2	8.5	14.8	2,74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4.5	38.9	23.0	8.6	15.0	2,871	1.300
	비슷	2,252	17.7	38.6	21.7	8.3	13.7	2,545	
	분배 중요	597	14.7	42.2	23.6	7.9	11.6	2,154	

*p<.05, **p<.01, ***p<.001

나. 주식, 채권, 펀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펀드’의 규모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1,000만원 미만’(32.0%), ‘1,000~3,000만원 미만’(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금융 재산 중 주식, 채권, 펀드 규모는 평균 1,15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주식, 채권, 펀드 규모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 19~24세: 530만원, 만25~29세: 1,044만원, 만30~34세: 1,793만원) 주식, 채

권, 펀드의 규모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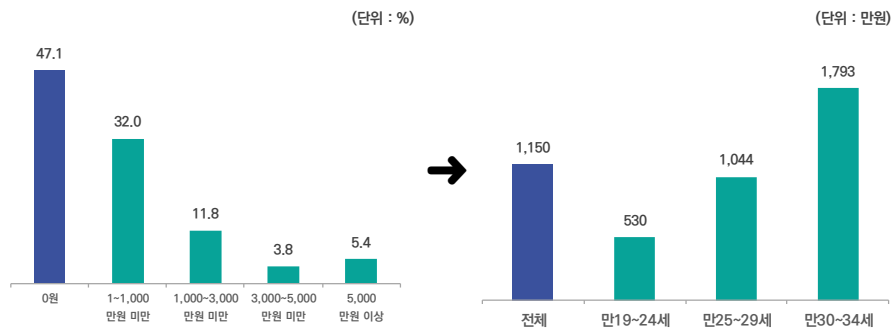


그림 IV-25. 주식, 채권, 펀드

표 IV-48. 주식, 채권, 펀드(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3,000 만원 미만	3,000~5,000 만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47.1	32.0	11.8	3.8	5.4	1,150	-
만19~24세	1,201	54.7	35.9	6.7	1.3	1.4	530	14.679***
만25~29세	1,503	44.0	33.1	12.8	4.5	5.5	1,044	
만30~34세	1,410	43.8	27.4	15.0	5.2	8.7	1,793	

*p<.05, **p<.01, ***p<.001

주식, 채권, 펀드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780만원), 미혼(983만원), 고등학교 이하 학력(884만원), 미취업/구직중(502만원), 부모 동거가구(899만원), 빈곤층(611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주식, 채권, 펀드의 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49. 주식, 채권, 펀드(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3,000 만원 미만	3,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47.1	32.0	11.8	3.8	5.4	1,150	-
성별	남자	1,945	44.5	28.4	13.5	5.0	8.5	1,563	4.113***
	여자	2,169	49.3	35.2	10.2	2.7	2.6	780	
혼인 상태	미혼	3,272	49.8	31.4	10.6	3.4	4.8	983	13.687***
	기혼	824	36.8	33.9	16.4	5.2	7.8	1,684	
	사별 및 이혼	18	22.2	50.0	5.6	11.1	11.1	7,21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61.6	28.9	5.3	1.6	2.5	884	7.055***
	대학교	3,195	44.8	32.5	12.7	4.2	5.8	1,119	
	대학원 이상	190	29.5	34.7	20.0	5.8	10.0	2,70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60.5	30.1	5.7	1.8	1.9	502	22.358***
	비정규직취업	1,045	50.0	36.1	9.2	1.6	3.2	857	
	정규직취업	1,679	34.8	31.3	18.0	6.6	9.4	1,682	
	자영업,창업 등	60	41.7	21.7	16.7	8.3	11.7	5,76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6.4	33.6	17.0	5.3	7.7	1,591	4.589**
	청년 독립가구	1,007	41.5	31.5	14.6	4.4	8.0	1,321	
	부모 동거가구	2,316	52.8	31.8	8.9	3.1	3.5	899	
	기타	33	60.6	24.2	6.1	0.0	9.1	3,464	
지역별	수도권	2,276	43.7	33.2	12.9	4.0	6.2	1,205	0.478
	충청권	410	50.2	31.0	9.8	4.6	4.4	959	
	전라권	364	53.3	29.4	8.8	2.5	6.0	1,079	
	경상권	923	49.5	31.9	11.7	3.5	3.5	1,051	
	강원/제주권	141	60.3	22.7	7.1	4.3	5.7	1,66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64.0	25.2	7.3	1.3	2.1	611	-2.060*
	비빈곤층	3,733	45.3	32.7	12.2	4.0	5.7	1,20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40.6	31.5	14.8	5.4	7.7	1,385	1.386
	비중요	2,252	51.5	31.2	10.0	3.0	4.4	1,039	
	분배 중요	597	44.1	36.0	12.1	3.4	4.5	1,072	

*p<.05, **p<.01, ***p<.001

다.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300만원 미만'(13.3%), '1,000만원 이상'(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금융 재산 중 암호화폐는 평균 33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암호화폐 규모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198만원, 만25~29세: 273만원, 만30~34세: 529만원) 암호화폐 규모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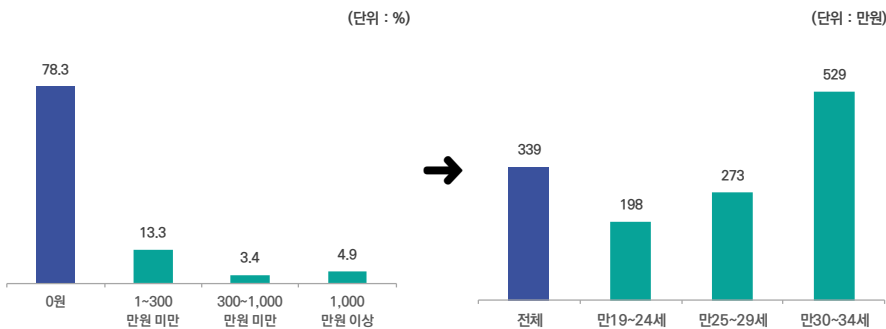


그림 IV-26. 암호화폐

표 IV-50. 암호화폐(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0만원 미만	300~1,000 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78.3	13.3	3.4	4.9	339	-
만19~24세	1,201	83.0	12.3	2.7	1.9	198	2.930
만25~29세	1,503	75.0	15.4	4.3	5.3	273	
만30~34세	1,410	77.9	12.0	3.0	7.0	529	

*p<.05, **p<.01, ***p<.001

암호화폐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혼인상태, 취업상태, 성별, 가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199만원), 미혼(298원), 미취업/구직중(130만원), 부모 동거 가구(183만원), 빈곤층(37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암호화폐 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51. 암호화폐(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0 만원 미만	300~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78.3	13.3	3.4	4.9	339	-
성별	남자	1,945	73.9	13.8	4.7	7.7	495	2.489*
	여자	2,169	82.3	13.0	2.3	2.4	199	
혼인 상태	미혼	3,272	80.4	12.8	3.0	3.8	298	6.591**
	기혼	824	71.0	14.9	5.0	9.1	436	
	사별 및 이혼	18	33.3	44.4	11.1	11.1	3,4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2.3	13.7	2.5	1.5	221	2.481
	대학교	3,195	78.0	13.4	3.4	5.3	333	
	대학원 이상	190	69.5	11.6	7.9	11.1	895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84.1	11.9	1.7	2.3	130	4.889**
	비정규직취업	1,045	76.7	14.5	3.7	5.1	382	
	정규직취업	1,679	74.8	13.9	4.6	6.7	425	
	자영업,창업 등	60	78.3	10.0	3.3	8.3	1,82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70.8	15.0	5.0	9.1	452	3.613*
	청년 독립가구	1,007	76.9	14.2	3.3	5.7	623	
	부모 동거가구	2,316	81.3	12.5	3.0	3.2	183	
	기타	33	90.9	9.1	0.0	0.0	0	
지역별	수도권	2,276	77.8	12.9	4.0	5.3	429	0.906
	충청권	410	79.3	12.4	3.7	4.6	215	
	전라권	364	80.8	13.2	1.6	4.4	161	
	경상권	923	77.8	15.2	2.9	4.1	224	
	강원/제주권	141	81.6	11.3	2.1	5.0	459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0 만원 미만	300~ 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83.7	11.5	3.1	1.6	37	-5.142***
	비빈곤층	3,733	77.8	13.5	3.5	5.2	37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71.9	15.8	5.5	6.8	324	0.222
	비슷	2,252	81.1	12.3	2.3	4.2	369	
	분배 중요	597	81.4	11.9	3.4	3.4	258	

*p<.05, **p<.01, ***p<.001

라. 기타(빌려준 돈, 갚돈 등)

‘금융 재산 중 기타(빌려준 돈, 갚돈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8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300만원 미만’(10.0%), ‘1,000만원 이상’(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금융 재산 중 기타(빌려준 돈, 갚돈 등)는 평균 23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금융 재산 중 기타(빌려준 돈, 갚돈 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가 평균 273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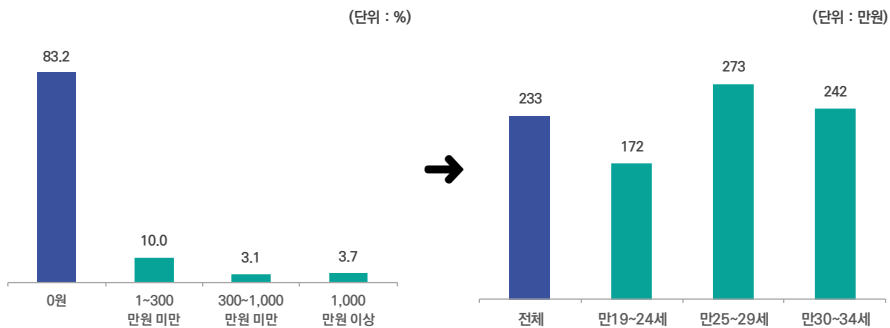


그림 IV-27. 기타(빌려준돈, 갚돈 등)

표 IV-52. 기타(빌려준돈, 갚돈 등)(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0만원 미만	300~1,000 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83.2	10.0	3.1	3.7	233	-
만19~24세	1,201	86.0	9.7	1.9	2.4	172	0.331
만25~29세	1,503	81.0	11.8	3.7	3.5	273	
만30~34세	1,410	83.2	8.2	3.5	5.0	242	

*p<.05, **p<.01, ***p<.001

금융 재산 중 기타(빌려준돈, 갚돈 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116만원), 미혼(188만원), 대학교 학력(172만원), 비정규직 취업(104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기타 금융재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53. 기타(빌려준돈, 갚돈 등)(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0 만원 미만	300~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83.2	10.0	3.1	3.7	233	-
성별	남자	1,945	82.9	9.7	3.3	4.1	2.294*
	여자	2,169	83.5	10.2	2.9	3.4	
혼인 상태	미혼	3,272	83.8	9.5	3.1	3.5	3.488*
	기혼	824	81.7	11.2	2.9	4.2	
	사별 및 이혼	18	44.4	38.9	5.6	1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5.5	9.1	2.3	3.2	3.232*
	대학교	3,195	83.2	10.0	3.0	3.8	
	대학원 이상	190	74.7	12.6	7.4	5.3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0 만원 미만	300~1,000 만원 미만	1,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87.1	8.8	1.6	2.5	246	5.781***
	비정규직취업	1,045	80.8	13.4	2.9	3.0	104	
	정규직취업	1,679	81.8	8.8	4.5	5.0	243	
	자영업,창업 등	60	78.3	10.0	3.3	8.3	1,90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82.1	11.1	2.8	4.1	261	1.107
	청년 독립가구	1,007	80.4	10.1	4.8	4.7	381	
	부모 동거가구	2,316	84.7	9.6	2.5	3.2	162	
	기타	33	90.9	6.1	0.0	3.0	31	
지역별	수도권	2,276	84.6	8.8	2.7	3.9	313	0.852
	충청권	410	80.2	11.5	4.9	3.4	218	
	전라권	364	83.5	10.7	2.2	3.6	106	
	경상권	923	80.2	12.1	3.9	3.8	106	
	강원/제주권	141	87.9	8.5	1.4	2.1	14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84.0	10.2	2.1	3.7	191	-0.263
	비빈곤층	3,733	83.1	9.9	3.2	3.7	23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81.0	11.2	3.2	4.5	243	0.245
	비중	2,252	84.6	9.2	2.8	3.4	250	
	분배 중요	597	82.6	10.1	4.0	3.4	147	

*p<.05, **p<.01, ***p<.001

마. 금융재산 총합

‘금융재산 총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00만원 미만’ 응답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000~3,000만원 미만’(23.0%), ‘5,000만원 이상’(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금융재산 총합은 평균 4,31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재산 총합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2,230만원, 만25~29세: 4,218만원, 만30~34세: 6,183만원) 금융재산도 합

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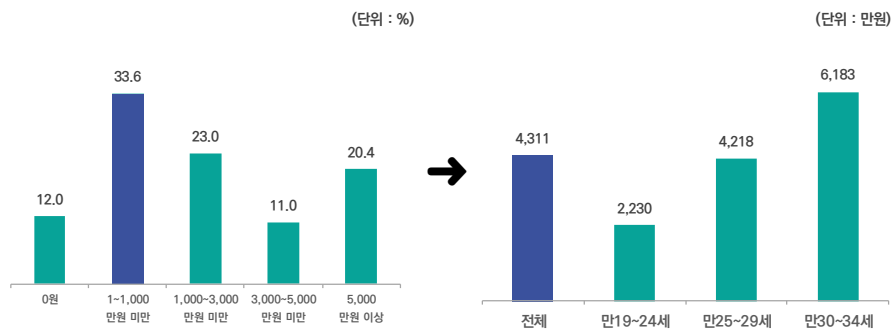


그림 IV-28. 금융재산 총합

표 IV-54. 금융재산 총합(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3,000 만원 미만	3,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12.0	33.6	23.0	11.0	20.4	4,311	-
만19~24세	1,201	16.3	50.0	21.6	5.2	6.8	2,230	25.000***
만25~29세	1,503	10.0	32.4	24.1	13.0	20.6	4,218	
만30~34세	1,410	10.4	21.0	23.1	13.8	31.7	6,183	

*p<.05, **p<.01, ***p<.001

금융재산 총합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 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성별,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649만원), 미혼(3,553만원), 고등학교 이하 학력(3,201만원), 미취업/구직중(2,070만원), 부모 동거가구(3,310만원), 빈곤층(1,853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금융재산의 총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55. 금융재산 총합(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3,000 만원 미만	3,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12.0	33.6	23.0	11.0	20.4	4,311	-
성별	남자	1,945	13.7	28.8	22.3	11.0	24.2	5,049	3.096**
	여자	2,169	10.4	37.9	23.7	11.0	17.0	3,649	
혼인 상태	미혼	3,272	12.9	36.1	22.9	10.1	18.0	3,553	29.101***
	기혼	824	8.3	24.0	23.3	14.4	30.0	6,996	
	사별 및 이혼	18	11.1	33.3	33.3	5.6	16.7	19,18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1.9	44.9	18.2	6.0	8.9	3,201	4.953**
	대학교	3,195	10.0	31.7	24.0	12.0	22.3	4,421	
	대학원 이상	190	7.4	22.6	25.8	13.2	31.1	6,713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0.8	45.8	19.5	5.9	8.0	2,070	31.924***
	비정규직취업	1,045	12.2	41.3	25.5	8.6	12.3	3,522	
	정규직취업	1,679	4.6	19.6	24.5	16.3	35.0	6,226	
	자영업,창업 등	60	15.0	23.3	20.0	15.0	26.7	14,109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8.3	23.4	23.2	14.4	30.7	6,732	11.417***
	청년 독립가구	1,007	10.3	30.4	23.4	12.0	23.8	4,784	
	부모 동거가구	2,316	13.6	38.4	23.0	9.5	15.5	3,310	
	기타	33	33.3	33.3	12.1	6.1	15.2	4,463	
지역별	수도권	2,276	11.5	32.0	23.3	11.3	21.9	4,646	1.016
	충청권	410	12.7	33.9	22.4	12.0	19.0	3,829	
	전라권	364	12.4	36.0	24.7	6.9	20.1	3,906	
	경상권	923	12.5	35.9	22.1	11.8	17.8	3,725	
	강원/제주권	141	12.8	39.0	22.7	7.8	17.7	5,184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3,000 만원 미만	3,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3.1	43.0	16.8	8.7	8.4	1,853	-5.564***
	비빈곤층	3,733	10.8	32.7	23.7	11.2	21.6	4,56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9.5	31.8	22.4	11.5	24.9	4,823	1.541
	비슷	2,252	13.5	34.2	22.6	10.8	19.0	4,203	
	분배 중요	597	11.4	35.5	26.3	10.7	16.1	3,631	

*p<.05, **p<.01, ***p<.001

(13)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유

고위험 상품(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응답자(n=2,323)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기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응답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위해서’(30.2%), ‘투자 경험을 쌓기 위해서’(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장기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만30~34세(34.6%)는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위해서’ 응답이, 만19~24세(25.8%)는 ‘투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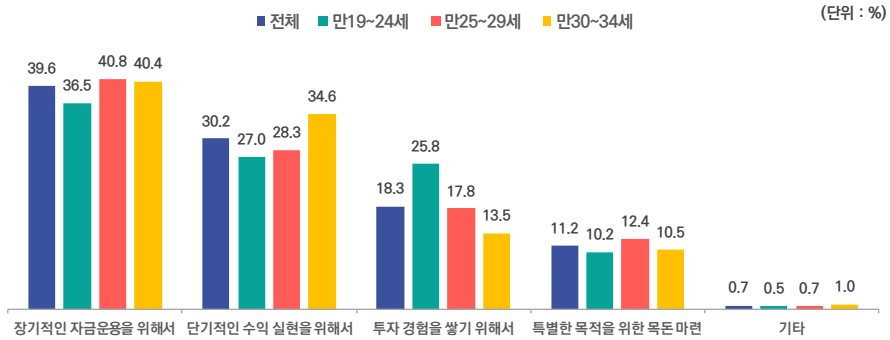


그림 IV-29.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유

표 IV-56.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유(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장기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	단기적인 수익 실현 을 위해서	투자 경험 을 쌓기 위 해서	특별한 목 적을 위한 목돈 마련	기타	χ^2
전체	2,323	39.6	30.2	18.3	11.2	0.7	-
만19~24세	586	36.5	27.0	25.8	10.2	0.5	41.737***
만25~29세	902	40.8	28.3	17.8	12.4	0.7	
만30~34세	835	40.4	34.6	13.5	10.5	1.0	

*p<.05, **p<.01, ***p<.001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 응답은 남성(43.4%), 기혼(41.1%), 정규직 취업(42.7%), 청년 독립가구(43.0%), 복지인식 성장중요(42.4%)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57.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유(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장기적인 자금운용 을 위해서	단기적인 수익 실현 을 위해서	투자 경험 을 쌓기 위해서	특별한 목 적을 위한 목돈 마련	기타	χ^2
전체		2,323	39.6	30.2	18.3	11.2	0.7	-
성별	남자	1,156	43.4	28.1	15.2	12.6	0.6	28.669***
	여자	1,167	35.7	32.3	21.3	9.8	0.9	
혼인 상태	미혼	1,760	39.3	29.4	20.2	10.5	0.7	34.778***
	기혼	548	41.1	33.4	11.3	13.3	0.9	
	사별 및 이혼	15	20.0	13.3	46.7	20.0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1	36.7	31.8	20.3	11.3	0.0	5.594
	대학교	1,874	40.1	30.1	17.9	11.2	0.8	
	대학원 이상	138	39.1	28.3	19.6	11.6	1.4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574	32.2	28.6	27.0	11.3	0.9	49.585***
	비정규직취업	565	40.4	29.6	17.9	11.7	0.5	
	정규직취업	1,148	42.7	31.4	14.2	11.0	0.7	
	자영업,창업 등	36	44.4	27.8	16.7	8.3	2.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08	41.5	33.5	11.2	12.8	1.0	47.009***
	청년 독립가구	623	43.0	28.3	16.9	11.1	0.8	
	부모 동거가구	1,179	36.6	30.0	22.1	10.7	0.5	
	기타	13	61.5	15.4	15.4	0.0	7.7	
지역별	수도권	1,357	40.5	29.7	17.8	11.1	0.8	10.923
	충청권	217	35.5	33.2	16.6	13.8	0.9	
	전라권	185	38.9	33.5	18.4	8.6	0.5	
	경상권	499	39.5	29.3	19.2	11.6	0.4	
	강원/제주권	65	35.4	29.2	26.2	7.7	1.5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53	35.9	33.3	20.9	8.5	1.3	3.485
	비빈곤층	2,170	39.8	30.0	18.1	11.4	0.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805	42.4	30.4	14.2	12.8	0.2	27.231***
	비중요	1,170	38.4	29.7	20.4	10.2	1.3	
	분배 중요	348	37.1	31.3	20.7	10.9	0.0	

*p<.05, **p<.01, ***p<.001

(14)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고위험 상품(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응답자(n=2,323)의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30% 미만’ 응답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0~10% 미만’(36.8%), ‘30~100% 미만’(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은 평균 23.6%로 조사되었다.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의 평균 수익률은 27.1%로 만25~29세(22.6%) 및 만 30~34세(22.2%)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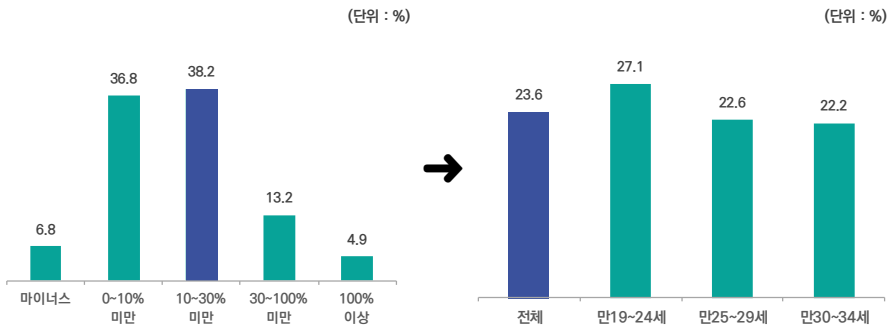


그림 IV-30.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표 IV-58.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마이너스	0~10% 미만	10~30% 미만	30~100% 미만	100% 이상	평균(%)	F
전체	2,323	6.8	36.8	38.2	13.2	4.9	23.58	-
만19~24세	586	5.3	35.3	38.9	16.7	3.8	27.13	0.629
만25~29세	902	6.8	36.8	37.4	13.1	6.0	22.60	
만30~34세	835	8.0	38.0	38.7	10.8	4.6	22.15	

*p<.05, **p<.01, ***p<.001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19.3%), 정규직 취업(19.5%)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59. 최근 1년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마이 너스	0~10% 미만	10~ 30% 미만	30~ 100% 미만	100% 이상	평균 (%)	F/t
전체		2,323	6.8	36.8	38.2	13.2	4.9	23.58	-
성별	남자	1,156	8.0	31.3	40.6	14.1	6.0	27.92	2.337*
	여자	1,167	5.7	42.3	35.9	12.3	3.9	19.29	
혼인 상태	미혼	1,760	7.3	37.4	38.2	12.2	4.9	24.61	0.590
	기혼	548	5.3	35.2	38.7	16.2	4.6	20.09	
	사별 및 이혼	15	6.7	33.3	20.0	20.0	20.0	30.9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1	7.1	39.2	34.1	15.1	4.5	28.65	0.675
	대학교	1,874	6.9	36.9	39.0	12.4	4.8	22.57	
	대학원 이상	138	5.1	31.2	37.7	18.8	7.2	25.94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574	6.8	39.2	36.2	12.7	5.1	26.97	3.228*
	비정규직취업	565	6.4	35.0	34.7	18.2	5.7	26.27	
	정규직취업	1,148	7.3	37.0	40.9	10.6	4.1	19.45	
	자영업,창업 등	36	0.0	22.2	38.9	22.2	16.7	59.3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08	5.5	35.0	39.0	15.9	4.5	20.17	0.523
	청년 독립가구	623	7.7	37.1	36.9	11.1	7.2	26.40	
	부모 동거가구	1,179	7.0	37.4	38.6	13.1	3.9	23.69	
	기타	13	7.7	46.2	38.5	7.7	0.0	12.77	
지역별	수도권	1,357	5.8	36.1	40.5	13.6	4.0	23.31	0.106
	충청권	217	8.8	41.0	34.6	10.1	5.5	20.96	
	전라권	185	8.1	40.5	31.4	13.0	7.0	24.63	
	경상권	499	7.4	36.1	36.7	13.6	6.2	24.53	
	강원/제주권	65	13.8	33.8	33.8	12.3	6.2	27.74	

구분		사례수 [명]	마이 너스	0~10% 미만	10~ 30% 미만	30~ 100% 미만	100% 이상	평균 (%)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53	9.8	49.0	30.1	5.2	5.9	17.48	-0.878
	비빈곤층	2,170	6.6	36.0	38.8	13.7	4.8	24.0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805	6.6	31.2	40.6	16.3	5.3	25.19	0.923
	비슷	1,170	7.4	40.3	36.6	11.3	4.4	21.24	
	분배 중요	348	5.5	38.5	38.2	12.4	5.5	27.75	

*p<.05, **p<.01, ***p<.001

(15)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

고위험 상품(주식,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응답자(n=2,323)의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30% 미만’ 응답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0~10% 미만’(28.9%), ‘30~100% 미만’(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치는 평균 38.1%로 조사되었다.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 30~34세(40.6%), 만19~24세(39.8%), 만25~29세(34.8%) 순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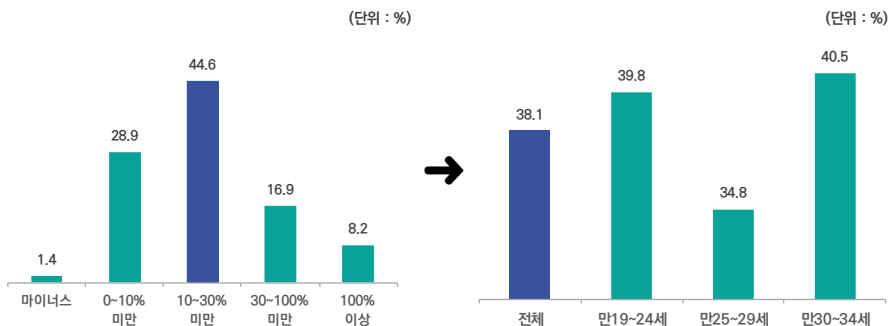


그림 IV-31.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

표 IV-60.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마이너스	0~10% 미만	10~30% 미만	30~100% 미만	100% 이상	평균(%)	F
전체	2,323	1.4	28.9	44.6	16.9	8.2	38.13	-
만19~24세	586	1.5	24.7	44.5	21.2	8.0	39.75	0.560
만25~29세	902	1.6	29.2	44.1	16.9	8.3	34.83	
만30~34세	835	1.2	31.6	45.0	14.0	8.1	40.55	

*p<.05, **p<.01, ***p<.001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0.9%)은 남성(45.4%)에 비해 수익률을 낮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1. 향후 보유한 고위험 상품의 수익률 전망(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마이너스	0~10% 미만	10~30% 미만	30~100% 미만	100% 이상	평균 (%)	F/t
전체	2,323	1.4	28.9	44.6	16.9	8.2	38.13	-
성별	남자	1,156	1.6	25.3	47.9	15.7	9.5	2.890**
	여자	1,167	1.2	32.6	41.2	18.2	6.9	
혼인 상태	미혼	1,760	1.5	29.0	44.7	16.4	8.4	0.799
	기혼	548	1.1	28.5	44.5	18.6	7.3	
	사별 및 이혼	15	0.0	40.0	26.7	20.0	1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1	1.3	27.3	43.4	17.7	10.3	0.795
	대학교	1,874	1.4	29.1	45.1	16.7	7.7	
	대학원 이상	138	1.4	30.4	39.9	18.1	10.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574	1.4	31.4	41.6	17.1	8.5	0.381
	비정규직취업	565	1.2	27.1	41.9	20.4	9.4	
	정규직취업	1,148	1.6	29.0	47.2	15.0	7.2	
	자영업,창업 등	36	0.0	16.7	47.2	22.2	13.9	

구분		사례수 [명]	마이 너스	0~10% 미만	10~30% 미만	30~ 100% 미만	100% 이상	평균 (%)	F/t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08	1.2	27.4	45.1	18.7	7.7	33.88	0.432
	청년 독립가구	623	1.1	29.7	45.4	14.6	9.1	41.40	
	부모 동거가구	1,179	1.7	29.0	44.0	17.4	7.9	38.39	
	기타	13	0.0	46.2	30.8	15.4	7.7	23.15	
지역별	수도권	1,357	1.1	28.5	46.2	17.1	7.1	35.45	1.158
	충청권	217	1.8	27.2	42.4	18.9	9.7	45.13	
	전라권	185	2.7	31.4	41.1	13.0	11.9	49.58	
	경상권	499	1.8	29.1	43.7	16.6	8.8	35.82	
	강원/제주권	65	0.0	35.4	33.8	20.0	10.8	55.64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53	2.6	36.6	39.2	7.2	14.4	68.43	1.964
	비빈곤층	2,170	1.3	28.4	44.9	17.6	7.7	35.9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805	1.6	24.0	47.5	18.5	8.4	42.94	1.076
	비슷	1,170	1.5	31.9	41.9	16.5	8.2	36.29	
	분배 중요	348	0.6	30.5	46.8	14.7	7.5	33.16	

*p<.05, **p<.01, ***p<.001

4) 부채

(16) 부채 현황

가. 은행 부채

‘은행 부채’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1,000미만’(12.0%), ‘1,000~5,000미만’(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은행 부채는 평균 1,64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은행 부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369만원, 만25~29세: 1,265만원, 만30~34세: 3,146만원) 은행 부채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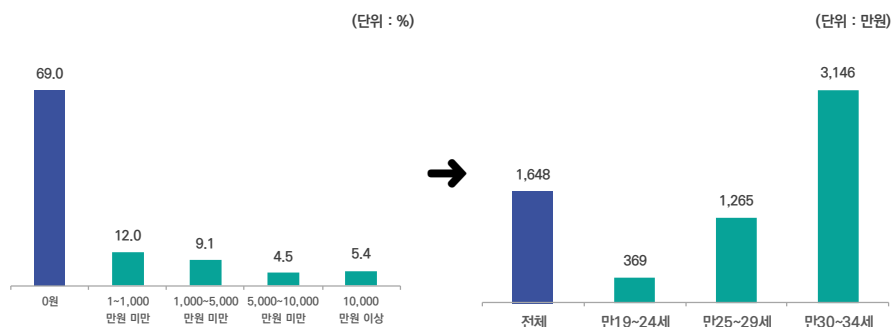


그림 IV-32. 은행 부채

표 IV-62. 은행 부채(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5,000 만원 미만	5,000~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69.0	12.0	9.1	4.5	5.4	1,648	-
만19~24세	1,201	79.9	12.6	6.0	0.8	0.7	369	88.535***
만25~29세	1,503	68.0	14.8	9.0	4.5	3.8	1,265	
만30~34세	1,410	60.9	8.4	11.8	7.8	11.1	3,146	

*p<.05, **p<.01, ***p<.001

은행 부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1,932만원), 기혼(4,644만원), 대학원 이상 학력(4,161만원), 정규직 취업(2,916만원) 및 자영업, 창업 등(3,892만원), 청년 부부가구(4,783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은행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63. 은행 부채(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5,000 만원 미만	5,000~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69.0	12.0	9.1	4.5	5.4	1,648	-
성별	남자	1,945	65.9	12.4	10.6	4.8	6.4	1,932	3.049**
	여자	2,169	71.9	11.6	7.7	4.3	4.5	1,393	
혼인 상태	미혼	3,272	74.9	11.4	8.3	2.9	2.5	897	158.042***
	기혼	824	46.2	13.7	12.3	11.0	16.7	4,644	
	사별 및 이혼	18	44.4	33.3	16.7	0.0	5.6	1,03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76.8	14.7	4.8	1.8	1.9	711	29.809***
	대학교	3,195	68.2	11.3	10.0	4.9	5.6	1,712	
	대학원 이상	190	53.2	12.6	10.5	8.9	14.7	4,16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79.7	11.0	6.1	1.7	1.6	640	56.876***
	비정규직취업	1,045	68.5	18.3	8.8	2.4	2.0	766	
	정규직취업	1,679	61.5	8.8	11.3	8.2	10.2	2,916	
	자영업,창업 등	60	51.7	11.7	20.0	5.0	11.7	3,89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46.2	12.9	12.0	11.5	17.4	4,783	119.244***
	청년 독립가구	1,007	61.9	13.7	12.2	6.7	5.6	1,833	
	부모 동거가구	2,316	79.5	10.9	6.9	1.3	1.3	533	
	기타	33	78.8	9.1	0.0	6.1	6.1	2,227	
지역별	수도권	2,276	67.8	11.7	10.1	4.3	6.0	1,795	0.957
	충청권	410	71.0	11.0	8.5	4.9	4.6	1,402	
	전라권	364	67.6	15.1	7.7	5.5	4.1	1,407	
	경상권	923	71.1	12.0	7.6	4.1	5.2	1,536	
	강원/제주권	141	73.0	10.6	7.1	7.1	2.1	1,34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71.4	16.8	8.1	2.1	1.6	779	-4.365***
	비빈곤층	3,733	68.8	11.5	9.2	4.8	5.8	1,73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63.2	13.9	11.3	5.0	6.6	1,917	2.768
	비중요	2,252	73.0	10.2	7.7	4.1	5.0	1,591	
	분배 중요	597	66.5	14.4	9.7	5.2	4.2	1,293	

*p<.05, **p<.01, ***p<.001

나. 2금융권 부채

‘2금융권 부채’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1,000미만’(6.7%), ‘1,000~5,000미만’(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2금융권 부채는 평균 19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금융권 부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2만원, 만25~29세: 226만원, 만30~34세: 286만원) 2금융권 부채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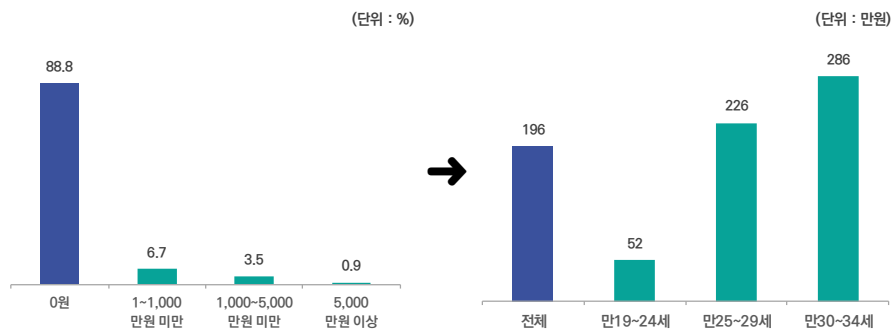


그림 IV-33. 2금융권 부채

표 IV-64. 2금융권 부채(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5,000 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88.8	6.7	3.5	0.9	196	—
만19~24세	1,201	93.1	5.8	0.8	0.2	52	10.559***
만25~29세	1,503	87.1	8.2	3.6	1.1	226	
만30~34세	1,410	87.0	6.0	5.7	1.3	286	

*p<.05, **p<.01, ***p<.001

2금융권 부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 유형,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375만원), 비정규직 취업(266만원), 청년 부부가구(310만원), 복지인식 성장중요(270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2금융권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65. 2금융권 부채(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88.8	6.7	3.5	0.9	196	-
성별	남자	1,945	87.1	7.6	4.3	1.0	228	1.470
	여자	2,169	90.4	5.9	2.8	0.9	166	
혼인 상태	미혼	3,272	91.1	5.6	2.6	0.7	145	16.147***
	기혼	824	80.5	10.7	7.0	1.8	375	
	사별 및 이혼	18	55.6	33.3	5.6	5.6	1,30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8.6	8.2	2.3	0.8	193	1.273
	대학교	3,195	89.6	6.0	3.5	0.9	187	
	대학원 이상	190	76.8	13.7	7.9	1.6	347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92.9	5.3	1.4	0.5	89	4.332**
	비정규직취업	1,045	83.4	10.6	4.7	1.2	266	
	정규직취업	1,679	89.4	5.3	4.1	1.2	236	
	자영업,창업 등	60	76.7	11.7	11.7	0.0	234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81.8	10.0	6.7	1.5	310	3.506*
	청년 독립가구	1,007	86.7	8.5	3.7	1.1	234	
	부모 동거가구	2,316	91.9	5.0	2.4	0.7	144	
	기타	33	100.0	0.0	0.0	0.0	0	
지역별	수도권	2,276	89.1	6.3	3.7	0.9	190	0.802
	충청권	410	89.3	6.8	2.9	1.0	172	
	전라권	364	88.2	8.0	3.0	0.8	152	
	경상권	923	87.9	7.4	3.6	1.2	254	
	강원/제주권	141	90.8	6.4	2.8	0.0	89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5,000 만원 미만	5,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86.6	8.9	2.6	1.8	310	1.319
	비빈곤층	3,733	89.0	6.5	3.6	0.9	184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85.1	9.3	4.2	1.4	270	3.073*
	비슷	2,252	90.9	5.3	3.0	0.8	171	
	분배 중요	597	89.1	6.5	4.0	0.3	130	

*p<.05, **p<.01, ***p<.001

다. 대부업체 부채

‘대부업체 부채’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9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500만원 미만’(3.5%), ‘500만원 이상’(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대부업체 부채는 평균 2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대부업체 부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25만원), 만30~34세(24만원), 만19~24세(9만원) 순으로 부채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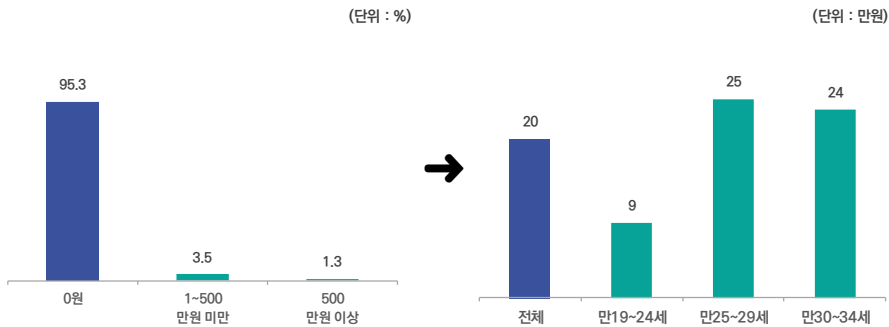


그림 IV-34. 대부업체 부채

표 IV-66. 대부업체 부채(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95.3	3.5	1.3	20	-
만19~24세	1,201	96.2	3.3	0.5	9	3.771*
만25~29세	1,503	93.7	4.7	1.6	25	
만30~34세	1,410	96.2	2.2	1.6	24	

*p<.05, **p<.01, ***p<.001

대부업체 부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 유형, 성별,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29만원), 기혼(45만원), 비정규직 취업(37만원) 및 자영업, 창업 등(45만원), 청년 부부가구(44만원), 복지인식 성장중요(30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대부업체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67. 대부업체 부채(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95.3	3.5	1.3	20	-
성별	남자	1,945	93.8	4.4	1.8	3.175**
	여자	2,169	96.6	2.6	0.8	
혼인 상태	미혼	3,272	96.5	2.7	0.8	32.117***
	기혼	824	91.3	5.8	2.9	
	사별 및 이혼	18	61.1	27.8	1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93.8	4.7	1.5	0.609
	대학교	3,195	95.9	2.9	1.2	
	대학원 이상	190	90.5	8.4	1.1	

구분		사례수 [명]	0원	1~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96.2	3.1	0.7	11	5.789***
	비정규직취업	1,045	92.1	5.6	2.3	37	
	정규직취업	1,679	96.6	2.4	1.0	16	
	자영업,창업 등	60	93.3	3.3	3.3	4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91.6	5.8	2.6	44	7.172***
	청년 독립가구	1,007	95.1	3.8	1.1	17	
	부모 동거가구	2,316	96.5	2.6	0.9	14	
	기타	33	100.0	0.0	0.0	0	
지역별	수도권	2,276	95.4	3.4	1.2	19	0.638
	충청권	410	95.4	2.7	2.0	26	
	전라권	364	95.3	4.1	0.5	11	
	경상권	923	94.5	4.2	1.3	24	
	강원/제주권	141	98.6	0.0	1.4	21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95.0	3.4	1.6	25	0.561
	비빈곤층	3,733	95.3	3.5	1.2	2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93.1	5.0	1.9	30	3.870*
	비슷	2,252	96.6	2.4	1.0	15	
	분배 중요	597	94.8	4.4	0.8	20	

*p<.05, **p<.01, ***p<.001

라. 기타 부채

‘기타 부채’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9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500미만’(1.8%), ‘500이상’(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기타 부채는 평균 2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부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26만원), 만19~24세(22만원), 만30~34세(21만원) 순으로 부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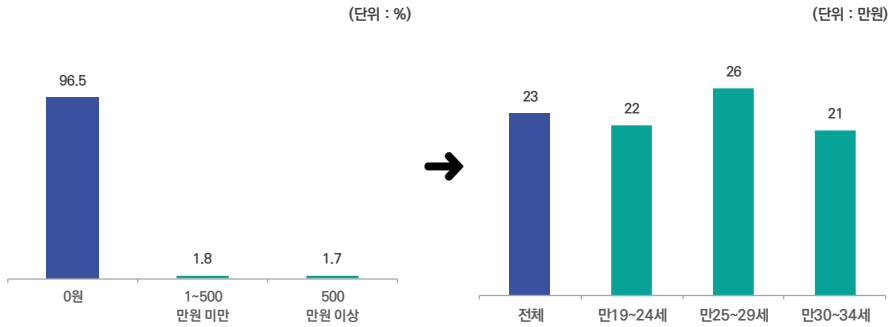


그림 IV-35. 기타 부채

표 IV-68. 기타 부채(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96.5	1.8	1.7	23	—
만19~24세	1,201	96.9	1.4	1.7	22	0.385
만25~29세	1,503	95.0	2.9	2.1	26	
만30~34세	1,410	97.6	1.0	1.4	21	

*p<.05, **p<.01, ***p<.001

기타 부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69. 기타 부채(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96.5	1.8	1.7	23	-
성별	남자	1,945	96.4	2.0	1.6	23	-0.034
	여자	2,169	96.5	1.7	1.8	23	
혼인 상태	미혼	3,272	96.8	1.5	1.7	22	1.235
	기혼	824	95.5	2.9	1.6	25	
	사별 및 이혼	18	83.3	5.6	11.1	8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95.3	3.2	1.5	26	0.295
	대학교	3,195	96.7	1.5	1.8	22	
	대학원 이상	190	95.8	2.6	1.6	30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96.1	2.3	1.7	21	0.713
	비정규직취업	1,045	95.0	2.8	2.2	30	
	정규직취업	1,679	97.6	0.9	1.5	21	
	자영업,창업 등	60	96.7	1.7	1.7	2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96.0	2.5	1.5	25	0.083
	청년 독립가구	1,007	96.3	2.0	1.7	25	
	부모 동거가구	2,316	96.6	1.6	1.8	22	
	기타	33	97.0	0.0	3.0	20	
지역별	수도권	2,276	96.8	1.3	1.8	23	0.189
	충청권	410	95.4	2.4	2.2	25	
	전라권	364	96.4	2.5	1.1	16	
	경상권	923	95.9	2.6	1.5	25	
	강원/제주권	141	97.2	1.4	1.4	2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94.0	3.1	2.9	40	1.476
	비빈곤층	3,733	96.7	1.7	1.6	2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95.4	2.9	1.7	23	0.207
	비슷	2,252	97.1	1.2	1.7	22	
	분배 중요	597	96.3	1.7	2.0	27	

*p<.05, **p<.01, ***p<.001

마. 부채 총합

‘부채 총합’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1,000미만’(13.0%), ‘1,000~5,000미만’(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부채 총합은 평균 1,88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부채 총합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452만원, 만25~29세: 1,542만원, 만30~34세: 3,477만원) 부채 총합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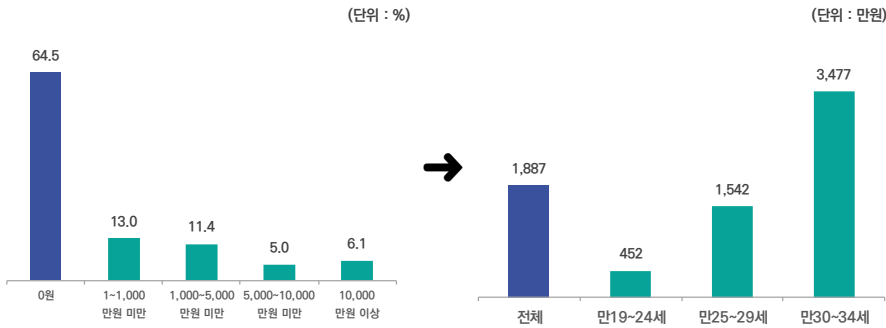


그림 IV-36. 부채 총합

표 IV-70. 부채 총합(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5,000 만원 미만	5,000~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64.5	13.0	11.4	5.0	6.1	1,887	-
만19~24세	1,201	76.0	14.7	7.7	0.7	0.8	452	93.713***
만25~29세	1,503	63.7	15.2	11.4	4.9	4.7	1,542	
만30~34세	1,410	55.5	9.2	14.5	8.6	12.2	3,477	

*p<.05, **p<.01, ***p<.001

부채 총합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성별,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2,213만원), 기혼(5,090만원), 대학원 이상 학력(4,567만원), 정규직 취업(3,188만원) 및 자영업, 창업 등(4,191만원), 청년 부부가구(5,162만원), 비빈곤층(1,962만원), 복지인식 성장중요(2,241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부채 총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71. 부채 총합(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5,000 만원 미만	5,000~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64.5	13.0	11.4	5.0	6.1	1,887	-
성별	남자	1,945	61.0	13.6	13.0	4.9	7.5	2,213	3.327**
	여자	2,169	67.6	12.5	9.9	5.0	5.0	1,595	
혼인 상태	미혼	3,272	70.1	12.8	10.8	3.4	2.9	1,076	165.394***
	기혼	824	42.5	13.5	13.8	11.3	18.9	5,090	
	사별 및 이혼	18	44.4	33.3	11.1	5.6	5.6	2,67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70.2	16.5	8.6	1.9	2.7	954	29.392***
	대학교	3,195	64.1	12.2	11.9	5.6	6.2	1,941	
	대학원 이상	190	48.4	13.2	13.7	6.3	18.4	4,567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75.5	13.1	7.6	2.0	1.9	760	54.964***
	비정규직취업	1,045	63.2	19.5	11.5	2.7	3.2	1,099	
	정규직취업	1,679	57.2	9.1	13.7	8.8	11.2	3,188	
	자영업,창업 등	60	46.7	8.3	28.3	5.0	11.7	4,191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43.0	12.5	13.2	11.9	19.4	5,162	118.818***
	청년 독립가구	1,007	55.6	14.9	16.1	7.0	6.5	2,110	
	부모 동거가구	2,316	75.2	12.4	8.9	1.8	1.7	713	
	기타	33	75.8	12.1	0.0	6.1	6.1	2,246	

구분		사례수 [명]	0원	1~1,000 만원 미만	1,000~ 5,000 만원 미만	5,000~ 10,000 만원 미만	10,0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지역별	수도권	2,276	63.7	12.3	12.4	4.8	6.8	2,027	0.955
	충청권	410	65.9	13.7	10.0	5.4	5.1	1,624	
	전라권	364	64.0	15.4	9.9	6.0	4.7	1,585	
	경상권	923	65.8	13.3	10.3	4.4	6.2	1,840	
	강원/제주권	141	66.7	14.2	9.9	6.4	2.8	1,47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60.9	21.5	11.5	3.7	2.4	1,154	-3.260**
	비빈곤층	3,733	64.9	12.2	11.4	5.1	6.5	1,96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58.8	14.0	14.2	5.5	7.5	2,241	4.049*
	비슷	2,252	68.1	11.8	9.9	4.5	5.7	1,799	
	분배 중요	597	63.0	15.7	11.1	5.4	4.9	1,470	

*p<.05, **p<.01, ***p<.001

(17) 부채 발생 이유

부채가 발생한 응답자(n=1,461)의 ‘부채 발생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거비 마련’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생활비 마련’(26.1%), ‘학자금 마련’(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 발생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37.8%)는 ‘학자금 마련’ 응답이, 만25~29세(35.5%) 및 만30~34세(49.0%)는 ‘주거비 마련’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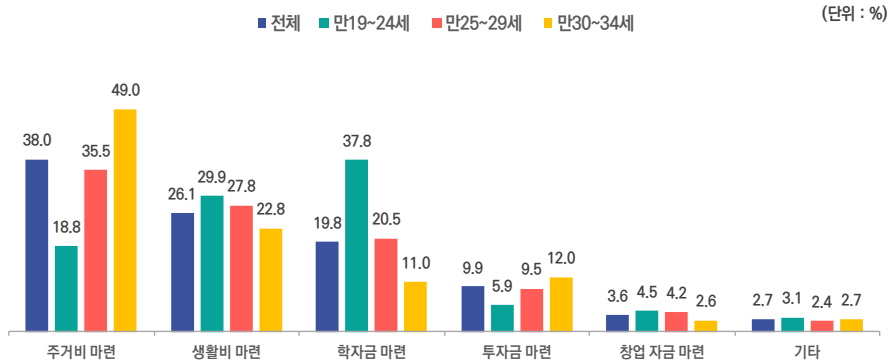


그림 IV-37. 부채 발생 이유

표 IV-72. 부채 발생 이유(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	학자금 마련	투자금 마련	창업 자금 마련	기타	χ^2
전체	1,461	38.0	26.1	19.8	9.9	3.6	2.7	-
만19~24세	288	18.8	29.9	37.8	5.9	4.5	3.1	136.467***
만25~29세	546	35.5	27.8	20.5	9.5	4.2	2.4	
만30~34세	627	49.0	22.8	11.0	12.0	2.6	2.7	

*p<.05, **p<.01, ***p<.001

부채 발생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 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성별,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거비 마련’ 응답은 여성(39.4%), 기혼(57.8%), 대학원 이상 학력(45.9%), 정규직 취업(52.2%), 청년부부가구(58.6%), 비빈곤층(39.5%), 복지인식 성장중요(4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생활비 마련’ 응답은 여성(28.4%), 미혼(30.1%), 고등학교 이하 학력(33.6%), 비정규직 취업(34.3%), 부모동거가구(33.3%), 빈곤층(41.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V-73. 부채 발생 이유(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주거비 마련	생활비 마련	학자금 마련	투자금 마련	창업 자금 마련	기타	χ^2
전체		1,461	38.0	26.1	19.8	9.9	3.6	2.7	-
성별	남자	758	36.7	23.9	20.1	12.5	4.5	2.4	19.430**
	여자	703	39.4	28.4	19.6	7.0	2.6	3.0	
혼인 상태	미혼	977	28.6	30.1	25.4	10.0	3.3	2.7	176.585***
	기혼	474	57.8	17.9	8.9	9.5	3.4	2.5	
	사별 및 이혼	10	20.0	20.0	0.0	10.0	40.0	1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17	28.1	33.6	17.5	12.0	2.8	6.0	31.714***
	대학교	1,146	39.2	25.3	20.5	9.6	3.5	1.9	
	대학원 이상	98	45.9	18.4	17.3	8.2	6.1	4.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326	21.8	31.6	28.2	9.8	6.7	1.8	242.403***
	비정규직취업	385	25.5	34.3	30.1	3.6	3.9	2.6	
	정규직취업	718	52.2	19.2	11.1	13.2	1.1	3.1	
	자영업,창업 등	32	34.4	25.0	6.3	9.4	21.9	3.1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432	58.6	16.9	8.8	10.0	3.2	2.5	226.468***
	청년 독립가구	447	45.4	26.0	16.8	8.1	2.7	1.1	
	부모 동거가구	574	16.6	33.3	30.3	11.3	4.5	4.0	
	기타	8	50.0	12.5	37.5	0.0	0.0	0.0	
지역별	수도권	827	40.1	25.0	20.3	9.7	3.0	1.8	28.247
	충청권	140	38.6	31.4	12.9	9.3	2.9	5.0	
	전라권	131	32.1	29.0	20.6	12.2	4.6	1.5	
	경상권	316	34.8	24.1	21.5	10.8	5.1	3.8	
	강원/제주권	47	36.2	34.0	19.1	2.1	2.1	6.4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49	24.8	41.6	24.8	6.0	0.7	2.0	31.592***
	비빈곤층	1,312	39.5	24.3	19.3	10.3	3.9	2.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521	41.8	23.4	17.9	11.9	3.5	1.5	24.539**
	비슷	719	36.4	27.5	21.8	8.3	2.6	3.2	
	분배 중요	221	33.9	27.6	18.1	10.0	6.8	3.6	

*p<.05, **p<.01, ***p<.001

(18) 부채 부담 정도

부채가 발생한 응답자(n=1,461)의 '부채 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담된다' 응답이 47.5%(매우 부담된다: 14.5% + 부담된다: 33.0%)로 '부담되지 않는다' 응답 23.3%(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8.6% + 부담되지 않는다: 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부채 부담 정도는 평균 3.30점으로 나타났다.

부채 부담 정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41.7%, 만25~29세: 48.4%, 만30~34세: 49.4%) 부채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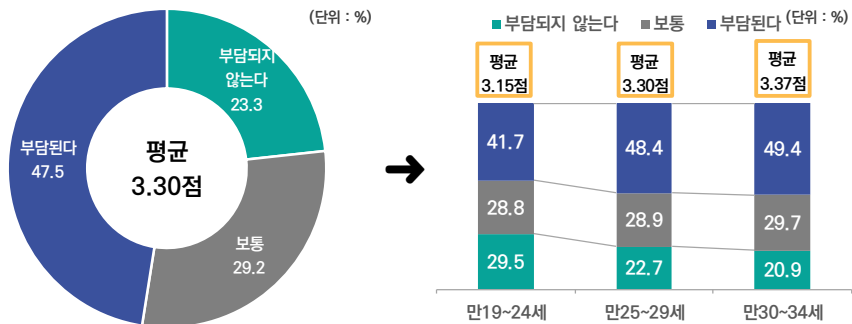


그림 IV-38. 부채 부담 정도

표 IV-74. 부채 부담 정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5점 평균	F
전체	1,461	8.6	14.7	29.2	33.0	14.5	3.30	-
만19~24세	288	10.1	19.4	28.8	29.2	12.5	3.15	3.858*
만25~29세	546	9.2	13.6	28.9	34.4	13.9	3.30	
만30~34세	627	7.3	13.6	29.7	33.5	15.9	3.37	

*p<.05, **p<.01, ***p<.001

부채 부담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성별,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40점), 미취업/구직중(3.45점) 및 자영업, 창업 등(3.47점), 빈곤층(3.77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51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75. 부채 부담 정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부담 되지 않는다	부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부담 된다	매우 부담 된다	5점 평균	F/t
전체		1,461	8.6	14.7	29.2	33.0	14.5	3.30	-
성별	남자	758	10.3	14.5	32.2	29.7	13.3	3.21	-3.112**
	여자	703	6.7	14.9	26.0	36.6	15.8	3.40	
혼인 상태	미혼	977	9.6	14.6	27.8	32.0	15.9	3.30	0.043
	기혼	474	6.3	14.8	32.7	34.4	11.8	3.31	
	사별 및 이혼	10	10.0	20.0	0.0	60.0	10.0	3.4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17	10.1	18.0	27.2	30.9	13.8	3.20	1.179
	대학교	1,146	8.4	13.4	29.9	33.8	14.5	3.33	
	대학원 이상	98	7.1	22.4	25.5	28.6	16.3	3.24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326	5.8	10.1	33.4	34.0	16.6	3.45	3.004*
	비정규직취업	385	8.3	19.0	27.8	32.2	12.7	3.22	
	정규직취업	718	9.7	14.8	28.4	33.0	14.1	3.27	
	자영업,창업 등	32	12.5	9.4	21.9	31.3	25.0	3.4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432	6.5	13.7	32.4	35.2	12.3	3.33	0.640
	청년 독립가구	447	9.4	14.1	27.5	31.8	17.2	3.33	
	부모 동거가구	574	9.2	16.2	28.6	32.1	13.9	3.25	
	기타	8	25.0	0.0	0.0	50.0	25.0	3.50	
지역별	수도권	827	8.2	14.6	28.1	33.9	15.2	3.33	0.779
	충청권	140	7.9	15.7	23.6	37.1	15.7	3.37	
	전라권	131	8.4	16.8	32.1	28.2	14.5	3.24	
	경상권	316	9.5	14.2	33.2	30.7	12.3	3.22	
	강원/제주권	47	10.6	10.6	31.9	34.0	12.8	3.28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부담 되지 않는다	부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부담 된다	매우 부담 된다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49	7.4	10.7	15.4	30.2	36.2	3.77	5.340***
	비빈곤층	1,312	8.7	15.2	30.8	33.3	12.0	3.2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521	12.1	17.3	27.1	29.0	14.6	3.17	7.695***
	비슷	719	7.1	13.6	31.4	34.4	13.5	3.34	
	분배 중요	221	5.0	12.2	27.1	38.0	17.6	3.51	

*p<.05, **p<.01, ***p<.001

(19) 예상하는 부채 완전상환 기간

부채가 발생한 응답자(n=1,461)의 ‘예상하는 부채 완전상환 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년 초과 5년 이내’ 응답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5년 초과 10년 이내’(29.4%), ‘1년 이내’(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하는 부채 완전상환 기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1년 초과 5년 이내’ 응답이 만15~24세(41.0%), 만25~29세(34.8%), 만30~34세(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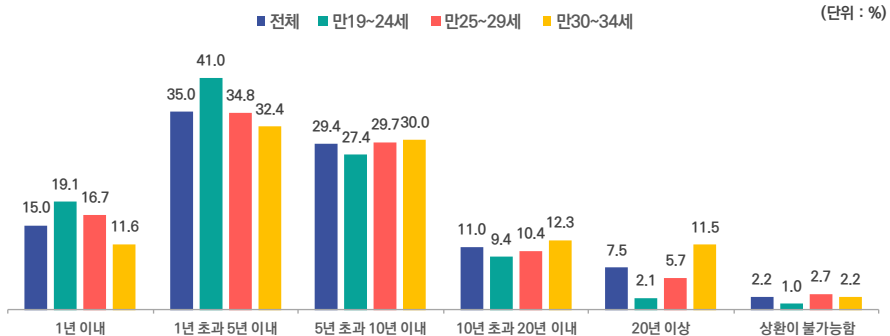


그림 IV-39. 예상하는 부채 완전상환 기간

표 IV-76. 예상하는 부채 완전상환 기간(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20년 이내	20년 이상	상환이 불가능함	χ^2
전체	1,461	15.0	35.0	29.4	11.0	7.5	2.2	-
만19~24세	288	19.1	41.0	27.4	9.4	2.1	1.0	44.974***
만25~29세	546	16.7	34.8	29.7	10.4	5.7	2.7	
만30~34세	627	11.6	32.4	30.0	12.3	11.5	2.2	

*p<.05, **p<.01, ***p<.001

예상하는 부채 완전상환 기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최종학력, 주관적 계층의식,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년 초과 5년 이내’ 응답은 미혼(37.4%), 고등학교 이하 학력(37.3%), 비정규직 취업(39.2%) 및 차영업, 창업 등(40.6%), 청년 독립가구(38.9%), 비빈곤층(3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5년 초과 10년 이내’ 응답은 기혼(32.5%), 대학원 이상 학력(37.8%), 청년 부부가구(33.1%), 빈곤층(32.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V-77. 예상하는 부채 완전상환 기간(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20년 이내	20년 이상	상환이 불가능 함	χ^2
전체		1,461	15.0	35.0	29.4	11.0	7.5	2.2	—
성별	남자	758	14.1	33.5	29.2	12.0	8.3	2.9	8.358
	여자	703	15.9	36.6	29.6	10.0	6.5	1.4	
혼인 상태	미혼	977	18.7	37.4	28.0	9.0	4.7	2.1	85.574***
	기혼	474	7.4	30.4	32.5	14.6	13.1	2.1	
	사별 및 이혼	10	10.0	20.0	10.0	40.0	10.0	10.0	

구분		사례수 [명]	1년 이내	1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20년 이내	20년 이상	상환이 불가능 함	χ^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17	21.7	37.3	26.3	9.2	3.2	2.3	25.107**
	대학교	1,146	14.2	35.3	29.2	11.3	7.9	2.0	
	대학원 이상	98	9.2	25.5	37.8	12.2	11.2	4.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326	15.3	31.0	29.1	14.1	6.1	4.3	29.617*
	비정규직취업	385	15.3	39.2	30.1	10.1	4.2	1.0	
	정규직취업	718	14.6	34.3	29.1	10.3	9.7	1.9	
	자영업, 창업 등	32	15.6	40.6	28.1	6.3	9.4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432	6.7	29.9	33.1	15.3	13.2	1.9	80.992***
	청년 독립가구	447	16.1	38.9	26.6	9.8	5.6	2.9	
	부모 동거가구	574	20.4	35.5	28.7	8.9	4.5	1.9	
	기타	8	12.5	50.0	25.0	0.0	12.5	0.0	
지역별	수도권	827	14.1	36.6	30.0	9.8	6.9	2.5	28.020
	충청권	140	15.7	35.7	28.6	7.9	9.3	2.9	
	전라권	131	19.8	29.8	23.7	17.6	5.3	3.8	
	경상권	316	14.6	33.5	28.8	13.3	9.2	0.6	
	강원/제주권	47	17.0	27.7	40.4	8.5	6.4	0.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49	17.4	30.9	32.2	10.1	3.4	6.0	17.041**
	비빈곤층	1,312	14.7	35.4	29.0	11.1	7.9	1.8	
복지 인식	성장 중요	521	15.0	33.4	29.0	13.4	7.5	1.7	11.267
	비슷	719	16.1	35.7	29.8	8.8	7.1	2.5	
	분배 중요	221	11.3	36.2	29.0	12.7	8.6	2.3	

*p<.05, **p<.01, ***p<.001

(20)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담된다’ 응답이 74.4%(매우 부담된다: 28.0% + 부담된다: 46.4%)로 ‘부담되지 않는다’ 응답 5.9%(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7% + 부담되지 않는다: 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는 평균 3.95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73.4%, 만25~29세: 73.9%, 만30~34세: 75.8%) 부채가 부담된다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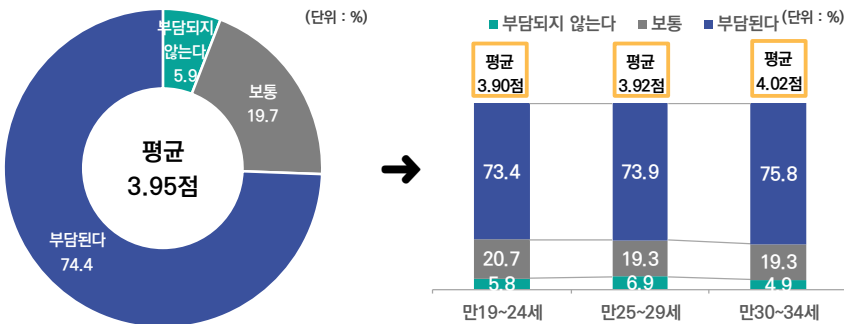


그림 IV-40.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

표 IV-78.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1.7	4.2	19.7	46.4	28.0	3.95	-
만19~24세	1,201	1.2	4.7	20.7	49.9	23.6	3.90	7.638***
만25~29세	1,503	2.3	4.6	19.3	46.9	26.9	3.92	
만30~34세	1,410	1.5	3.4	19.3	43.0	32.8	4.02	

*p<.05, **p<.01, ***p<.001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4.01점), 미혼(3.97점), 빈곤층(4.25점), 복지인식 분배중요(4.09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부채 부담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79. 한국사회 청년들의 부채 부담 정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부담 되지 않는다	부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부담 된다	매우 부담 된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1.7	4.2	19.7	46.4	28.0	3.95	-
성별	남자	1,945	2.6	5.2	22.1	42.1	28.0	3.88	-4.748***
	여자	2,169	0.9	3.3	17.6	50.3	27.9	4.01	
혼인 상태	미혼	3,272	1.5	3.5	18.9	48.3	27.8	3.97	7.384***
	기혼	824	2.5	7.0	22.5	39.1	28.9	3.85	
	사별 및 이혼	18	0.0	0.0	44.4	38.9	16.7	3.7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6	4.4	21.3	44.9	26.9	3.89	2.429
	대학교	3,195	1.3	4.1	19.4	47.4	27.9	3.96	
	대학원 이상	190	4.7	5.8	18.9	36.3	34.2	3.89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4	3.4	21.5	46.1	27.6	3.95	2.159
	비정규직취업	1,045	1.6	6.0	18.8	48.3	25.3	3.90	
	정규직취업	1,679	1.9	3.8	18.8	46.0	29.5	3.97	
	자영업,창업 등	60	1.7	3.3	21.7	31.7	41.7	4.0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2.2	6.1	21.6	40.6	29.4	3.89	1.611
	청년 독립가구	1,007	2.5	4.5	19.7	41.8	31.6	3.96	
	부모 동거가구	2,316	1.2	3.5	19.0	50.5	25.8	3.96	
	기타	33	0.0	0.0	27.3	36.4	36.4	4.09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부담 되지 않는다	부담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부담 된다	매우 부담 된다	5점 평균	F/t
지역별	수도권	2,276	2.0	4.2	20.8	45.0	28.0	3.93	1.152
	충청권	410	1.2	4.1	16.6	49.0	29.0	4.00	
	전라권	364	0.8	4.1	22.3	47.3	25.5	3.93	
	경상권	923	1.6	4.4	17.8	47.6	28.6	3.97	
	강원/제주권	141	0.0	3.5	17.7	51.8	27.0	4.0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1	1.8	11.5	33.3	50.1	4.25	6.623***
	비빈곤층	3,733	1.5	4.4	20.5	47.8	25.7	3.9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2	6.3	18.0	45.0	27.5	3.87	11.802***
	비슷	2,252	0.9	3.2	22.5	46.3	27.0	3.95	
	분배 중요	597	1.3	3.5	12.7	49.9	32.5	4.09	

*p<.05, **p<.01, ***p<.001

5) 소비지출

(21) 소비지출 현황

가.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외식비 포함)’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0만원 미만’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30~50만원 미만’(23.5%), ‘50~100만원 미만’(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외식비 포함)는 월 평균 4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외식비 포함)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32만원, 만25~29세: 39만원, 만30~34세: 48만원) 식료품비 지출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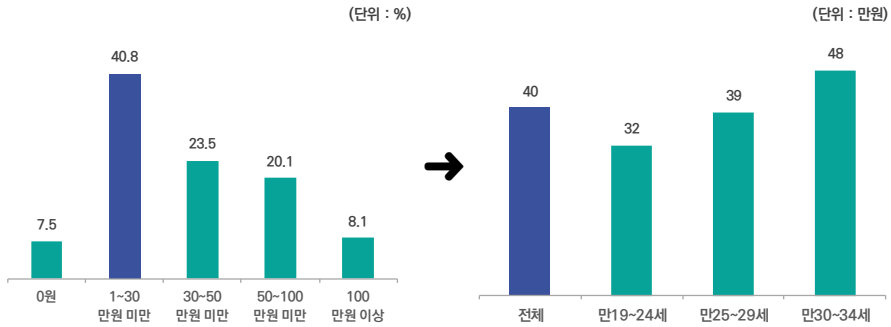


그림 IV-41.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표 IV-80. 식료품비(외식비 포함)(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OF
전체	4,114	7.5	40.8	23.5	20.1	8.1	40	-
만19~24세	1,201	11.7	53.5	19.9	10.3	4.6	32	14,749***
만25~29세	1,503	5.9	43.6	24.3	19.1	7.2	39	
만30~34세	1,410	5.8	27.0	25.7	29.4	12.1	48	

*p<.05, **p<.01, ***p<.001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외식비 포함)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 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67만원), 대학원 이상 학력(66만원), 자영업, 창업 등(64만원), 청년 부부가구(67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식료품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1. 식료품비(외식비 포함)(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7.5	40.8	23.5	20.1	8.1	40	-
성별	남자	1,945	8.9	41.2	22.5	18.8	8.6	40	0.180
	여자	2,169	6.3	40.4	24.3	21.2	7.7	39	
혼인 상태	미혼	3,272	8.5	47.1	24.6	15.5	4.3	32	83.410***
	기혼	824	3.4	16.4	19.1	38.2	22.9	67	
	사별 및 이혼	18	16.7	22.2	16.7	16.7	27.8	11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3.4	48.8	17.8	13.4	6.4	34	13.915***
	대학교	3,195	6.3	39.9	24.7	21.3	7.9	39	
	대학원 이상	190	5.8	25.3	25.3	24.7	18.9	6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5.5	52.1	16.5	11.1	4.8	30	13.218***
	비정규직취업	1,045	6.3	44.5	24.3	16.6	8.3	42	
	정규직취업	1,679	2.0	30.1	28.3	29.4	10.2	45	
	자영업, 창업 등	60	8.3	25.0	30.0	16.7	20.0	64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2.8	15.6	19.3	39.3	23.1	67	46.591***
	청년 독립가구	1,007	3.3	34.5	32.2	23.3	6.8	41	
	부모 동거가구	2,316	10.6	51.8	21.3	12.4	3.8	30	
	기타	33	30.3	42.4	6.1	15.2	6.1	24	
지역별	수도권	2,276	7.1	39.1	23.9	21.6	8.3	41	1.996
	충청권	410	9.3	38.0	24.9	18.3	9.5	46	
	전라권	364	6.6	46.2	22.5	16.8	8.0	34	
	경상권	923	7.7	45.2	21.2	18.6	7.3	37	
	강원/제주권	141	10.6	34.0	29.8	17.7	7.8	34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9.7	47.5	22.3	17.1	3.4	30	-3.406**
	비빈곤층	3,733	7.3	40.1	23.6	20.4	8.6	4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5.7	38.9	24.7	21.2	9.6	43	3.555*
	비중요	2,252	8.7	41.9	22.3	19.8	7.2	37	
	분배 중요	597	6.9	40.9	25.3	18.4	8.5	43	

*p<.05, **p<.01, ***p<.001

나. 주거비

‘소비 지출 중 주거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30만원 미만’(24.3%), ‘30~50만원 미만’(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소비 지출 중 주거비는 월 평균 2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 지출 중 주거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 19~24세: 14만원, 만25~29세: 23만원, 만30~34세: 28만원) 주거비 지출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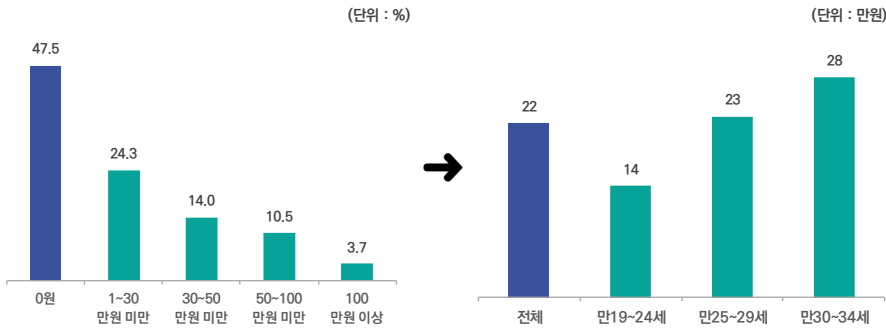


그림 IV-42. 주거비

표 IV-82. 주거비(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47.5	24.3	14.0	10.5	3.7	22	—
만19~24세	1,201	64.9	15.9	10.1	7.2	2.0	14	15.733***
만25~29세	1,503	44.9	26.7	14.8	10.0	3.6	23	
만30~34세	1,410	35.5	28.9	16.6	13.9	5.2	28	

*p<.05, **p<.01, ***p<.001

소비 지출 중 주거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 성별, 지역,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25만원), 기혼(43만원), 대학원 이상 학력(49만원), 비정규직 취업(30만원) 및 자영업, 창업 등(33만원), 청년 부부가구(42만원), 충청권(31만원), 복지인식 성장중요(28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주거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3. 주거비(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47.5	24.3	14.0	10.5	3.7	22	-
성별	남자	1,945	45.3	25.8	13.8	10.7	4.3	25	2.457*
	여자	2,169	49.4	22.9	14.2	10.3	3.1	20	
혼인 상태	미혼	3,272	55.1	22.4	12.7	8.0	1.9	16	74.167***
	기혼	824	17.7	31.8	19.5	20.5	10.4	43	
	사별 및 이혼	18	22.2	27.8	11.1	16.7	22.2	9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58.3	18.9	11.2	8.9	2.6	16	21.040***
	대학교	3,195	46.0	25.4	14.6	10.6	3.4	22	
	대학원 이상	190	31.1	26.3	15.8	14.7	12.1	49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66.0	16.1	9.5	6.2	2.2	13	15.712***
	비정규직취업	1,045	50.0	20.0	15.0	10.9	4.0	30	
	정규직취업	1,679	31.6	33.5	17.1	13.6	4.3	24	
	자영업, 창업 등	60	38.3	23.3	10.0	15.0	13.3	3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7.5	31.4	20.1	20.8	10.2	42	61.639***
	청년 독립가구	1,007	11.0	41.7	27.6	16.5	3.2	32	
	부모 동거가구	2,316	72.8	14.5	6.3	4.7	1.7	11	
	기타	33	72.7	15.2	6.1	0.0	6.1	11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지역별	수도권	2,276	46.9	23.0	13.7	12.6	3.9	22	3.164*
	충청권	410	48.5	22.9	16.1	9.0	3.4	31	
	전라권	364	48.6	25.8	15.1	6.6	3.8	17	
	경상권	923	47.2	27.7	13.7	7.8	3.6	21	
	강원/제주권	141	53.2	22.7	13.5	9.9	0.7	14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41.2	23.9	23.1	10.0	1.8	18	-2.501*
	비빈곤층	3,733	48.1	24.3	13.1	10.6	3.9	2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41.6	25.6	15.3	12.5	5.1	28	8.445***
	비슷	2,252	51.0	22.7	13.7	9.7	2.8	19	
	분배 중요	597	46.7	27.5	12.6	9.4	3.9	21	

*p<.05, **p<.01, ***p<.001

다. 교육비(보육료 포함)

‘소비 지출 중 교육비(보육료 포함)’에 대해 조사한 결과, ‘0원’ 응답이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1~30만원 미만’(24.8%), ‘30~50만원 미만’(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소비 지출 중 교육비(보육료 포함)는 월 평균 1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 지출 중 교육비(보육료 포함)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20만원), 만30~34세(12만원), 만25~29세(11만원) 순으로 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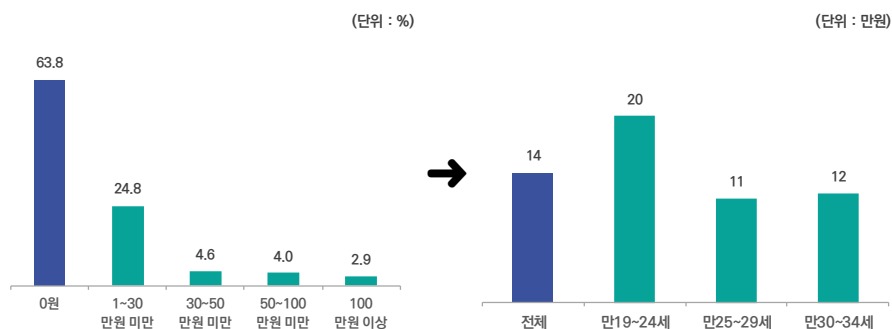


그림 IV-43. 교육비(보육료 포함)

표 IV-84. 교육비(보육료 포함)(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63.8	24.8	4.6	4.0	2.9	14	—
만19~24세	1,201	59.5	26.5	5.2	4.0	4.7	20	9.238***
만25~29세	1,503	64.1	26.0	3.9	3.7	2.3	11	
만30~34세	1,410	67.1	22.0	4.8	4.2	2.0	12	

*p<.05, **p<.01, ***p<.001

소비 지출 중 교육비(보육료 포함)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24만원), 대학원 이상 학력(26만원), 비정규직 취업(22만원) 및 자영업, 창업 등(22만원), 청년 부부가구(23만원), 빈곤층(15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5. 교육비(보육료 포함)(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63.8	24.8	4.6	4.0	2.9	14	-
성별	남자	1,945	64.6	23.4	4.8	4.3	2.9	14	0.514
	여자	2,169	63.1	26.0	4.4	3.6	2.9	13	
혼인 상태	미혼	3,272	67.6	24.3	3.2	2.5	2.4	11	32.641***
	기혼	824	49.5	26.7	9.7	9.6	4.5	24	
	사별 및 이혼	18	33.3	22.2	11.1	5.6	27.8	8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70.2	19.2	4.9	3.2	2.5	13	4.843**
	대학교	3,195	63.0	25.8	4.4	4.0	2.7	13	
	대학원 이상	190	52.6	28.4	5.8	5.8	7.4	2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66.5	23.1	3.9	3.2	3.3	14	11.555***
	비정규직취업	1,045	55.4	28.4	5.3	6.0	4.9	22	
	정규직취업	1,679	66.9	24.1	4.5	3.2	1.2	9	
	자영업,창업 등	60	63.3	16.7	8.3	5.0	6.7	2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49.5	26.5	9.8	10.0	4.2	23	8.349***
	청년 독립가구	1,007	63.9	27.6	3.2	3.0	2.4	11	
	부모 동거가구	2,316	68.4	23.0	3.5	2.5	2.7	12	
	기타	33	69.7	21.2	6.1	0.0	3.0	7	
지역별	수도권	2,276	62.7	24.6	4.8	4.7	3.2	15	1.548
	충청권	410	66.6	19.8	6.1	4.6	2.9	16	
	전라권	364	64.6	26.4	3.0	2.2	3.8	12	
	경상권	923	63.5	27.5	4.0	2.9	2.1	11	
	강원/제주권	141	73.8	20.6	3.5	1.4	0.7	7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69.0	25.5	2.6	1.8	1.0	6	-5.881***
	비빈곤층	3,733	63.3	24.7	4.8	4.2	3.1	1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58.9	27.1	5.1	5.1	3.7	16	1.706
	비슷	2,252	68.1	21.9	3.9	3.6	2.6	12	
	분배 중요	597	58.1	30.7	6.0	2.8	2.3	14	

*p<.05, **p<.01, ***p<.001

라. 의료비

‘소비 지출 중 의료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0만원 미만’ 응답이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0원’(36.0%), ‘30~50만원 미만’(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소비 지출 중 의료비는 월 평균은 1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 지출 중 의료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 19~24세: 9만원, 만25~29세: 12만원, 만30~34세: 13만원) 의료비 지출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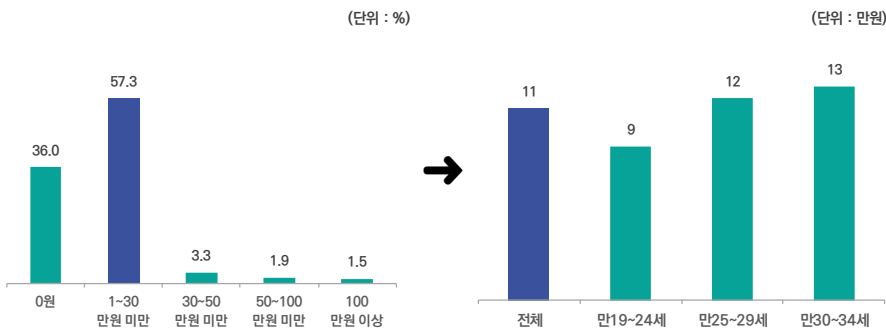


그림 IV-44. 의료비

표 IV-86. 의료비(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36.0	57.3	3.3	1.9	1.5	11	-
만19~24세	1,201	45.8	49.2	2.2	1.4	1.4	9	1.539
만25~29세	1,503	34.7	58.1	3.8	1.7	1.7	12	
만30~34세	1,410	29.1	63.5	3.7	2.4	1.3	13	

*p<.05, **p<.01, ***p<.001

소비 지출 중 의료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20만원), 대학원 이상 학력(23만원), 비정규직 취업(18만원), 청년 부부가구(19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7. 의료비(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36.0	57.3	3.3	1.9	1.5	11	-
성별	남자	1,945	41.0	51.5	3.3	2.2	2.0	13	1.828
	여자	2,169	31.6	62.6	3.3	1.6	1.0	10	
혼인 상태	미혼	3,272	40.4	54.7	2.4	1.3	1.2	9	27.553***
	기혼	824	18.7	68.0	6.8	4.1	2.4	20	
	사별 및 이혼	18	27.8	44.4	5.6	5.6	16.7	7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46.6	46.6	3.2	1.9	1.6	12	4.698**
	대학교	3,195	34.4	59.5	3.2	1.8	1.2	11	
	대학원 이상	190	22.6	62.6	5.8	3.7	5.3	23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49.2	46.2	2.3	0.9	1.4	8	6.749***
	비정규직취업	1,045	34.4	56.4	3.7	2.9	2.7	18	
	정규직취업	1,679	26.4	67.0	3.8	2.0	0.8	10	
	자영업,창업 등	60	40.0	51.7	3.3	3.3	1.7	1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7.7	69.0	6.9	4.2	2.2	19	6.725***
	청년 독립가구	1,007	31.9	62.9	2.6	1.5	1.2	9	
	부모 동거가구	2,316	43.6	51.3	2.5	1.3	1.3	10	
	기타	33	51.5	45.5	0.0	0.0	3.0	8	
지역별	수도권	2,276	35.6	57.1	3.4	2.3	1.6	12	1.104
	충청권	410	32.9	59.3	4.1	2.0	1.7	13	
	전라권	364	44.2	51.4	3.0	0.5	0.8	7	
	경상권	923	36.4	58.1	2.5	1.4	1.6	11	
	강원/제주권	141	27.7	66.0	5.0	1.4	0.0	7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8.6	56.7	1.8	1.6	1.3	10	-0.548
	비빈곤층	3,733	35.8	57.4	3.4	1.9	1.5	1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1.9	59.7	4.1	2.3	2.1	14	2.858
	비슷	2,252	38.9	55.4	2.8	1.6	1.3	10	
	분배 중요	597	34.0	59.8	3.4	1.8	1.0	12	

*p<.05, **p<.01, ***p<.001

마. 교통비

‘소비 지출 중 교통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0만원 미만’ 응답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0원’(13.2%), ‘30~50만원 미만’(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소비 지출 중 교통비는 월 평균 1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 지출 중 교통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30~34세(17만원), 만19~24세(16만원), 만25~29세(15만원) 순으로 교통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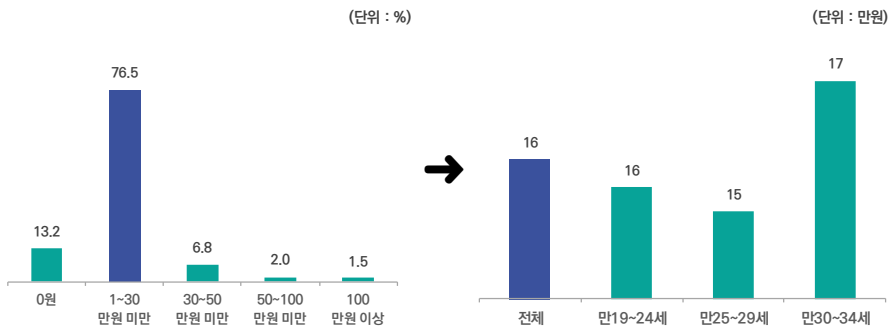


그림 IV-45. 교통비

표 IV-88. 교통비(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13.2	76.5	6.8	2.0	1.5	16	-
만19~24세	1,201	16.8	77.4	2.6	1.5	1.7	16	0.340
만25~29세	1,503	12.4	77.2	6.6	2.2	1.5	15	
만30~34세	1,410	10.9	75.0	10.6	2.2	1.3	17	

*p<.05, **p<.01, ***p<.001

소비 지출 중 교통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복지인식, 최종학력, 가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22만원), 대학원 이상 학력(28만원), 청년 부부가구(23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교통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89. 교통비(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13.2	76.5	6.8	2.0	1.5	16	-
성별	남자	1,945	14.2	72.4	8.6	2.8	1.9	18	1.578
	여자	2,169	12.3	80.2	5.2	1.2	1.2	15	
혼인 상태	미혼	3,272	14.4	78.5	4.7	1.4	1.1	14	33.176***
	기혼	824	8.5	69.3	15.3	4.1	2.8	22	
	사별 및 이혼	18	16.7	50.0	0.0	16.7	16.7	13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1.0	70.2	4.8	1.8	2.2	18	4.176*
	대학교	3,195	11.6	78.4	6.8	2.1	1.1	15	
	대학원 이상	190	10.0	69.5	13.7	1.6	5.3	28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3.8	70.3	3.2	1.1	1.7	14	1.602
	비정규직취업	1,045	10.8	78.3	5.6	2.9	2.5	20	
	정규직취업	1,679	6.0	80.9	10.2	2.0	0.8	15	
	자영업,창업 등	60	21.7	60.0	11.7	6.7	0.0	14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7.4	69.1	16.6	4.0	2.9	23	3.716*
	청년 독립가구	1,007	9.9	80.0	6.5	2.5	1.1	14	
	부모 동거가구	2,316	16.3	77.6	3.7	1.2	1.2	15	
	기타	33	27.3	63.6	6.1	0.0	3.0	9	
지역별	수도권	2,276	11.9	78.3	6.1	2.2	1.4	16	1.852
	충청권	410	15.1	70.2	9.8	2.9	2.0	23	
	전라권	364	15.7	77.7	3.8	1.9	0.8	10	
	경상권	923	13.3	75.7	8.1	1.0	1.8	16	
	강원/제주권	141	21.3	67.4	7.8	2.8	0.7	11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7.1	75.1	6.6	0.8	0.5	12	-1.211
	비빈곤층	3,733	12.8	76.7	6.8	2.1	1.6	16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0.4	76.3	8.8	2.3	2.2	20	6.566**
	비슷	2,252	14.8	76.8	5.4	2.0	1.0	13	
	분배 중요	597	13.1	76.0	7.7	1.2	2.0	20	

*p<.05, **p<.01, ***p<.001

바. 통신비

‘소비 지출 중 통신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0만원 미만’ 응답이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0원’(11.3%), ‘30~50만원 미만’(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소비 지출 중 통신비는 월 평균 1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 지출 중 통신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 19~24세: 11만원, 만25~29세: 12만원, 만30~34세: 13만원) 통신비 지출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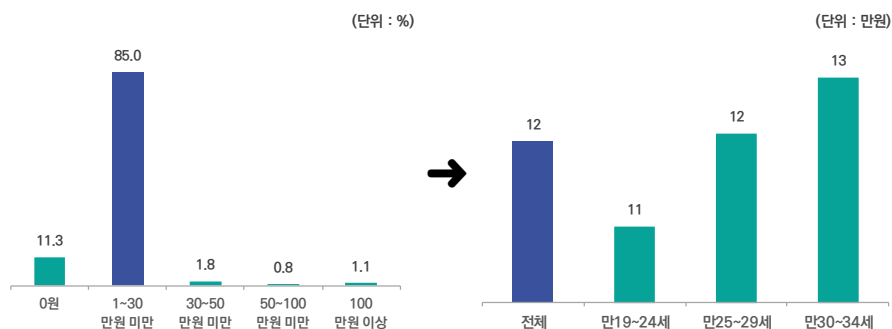


그림 IV-46. 통신비

표 IV-90. 통신비(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11.3	85.0	1.8	0.8	1.1	12	-
만19~24세	1,201	21.5	75.6	1.4	0.4	1.1	11	0.225
만25~29세	1,503	7.9	88.2	1.8	0.9	1.3	12	
만30~34세	1,410	6.4	89.5	2.2	0.9	1.0	13	

*p<.05, **p<.01, ***p<.001

소비 지출 중 통신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19만원), 청년 부부가구(19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통신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1. 통신비(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11.3	85.0	1.8	0.8	1.1	12	-
성별	남자	1,945	10.7	85.2	1.6	1.0	1.5	13	0.940
	여자	2,169	11.9	84.8	2.0	0.5	0.8	11	
혼인 상태	미혼	3,272	13.0	84.5	1.1	0.5	0.9	10	9.620***
	기혼	824	4.7	86.9	4.9	1.7	1.8	19	
	사별 및 이혼	18	5.6	77.8	0.0	5.6	11.1	4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0.6	73.4	3.0	1.5	1.5	14	0.602
	대학교	3,195	9.5	87.6	1.4	0.6	0.9	12	
	대학원 이상	190	5.8	85.3	4.7	1.1	3.2	14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1.0	76.0	1.4	0.5	1.1	11	0.636
	비정규직취업	1,045	12.2	83.1	1.8	1.3	1.5	14	
	정규직취업	1,679	3.2	93.3	2.1	0.5	0.8	12	
	자영업,창업 등	60	10.0	83.3	1.7	1.7	3.3	16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4.1	87.7	5.1	1.3	1.7	19	3.662*
	청년 독립가구	1,007	5.9	91.4	1.0	0.5	1.3	11	
	부모 동거가구	2,316	15.8	81.6	1.1	0.6	0.8	11	
	기타	33	27.3	66.7	0.0	3.0	3.0	10	
지역별	수도권	2,276	11.0	85.1	1.8	0.9	1.1	13	1.247
	충청권	410	10.2	85.1	2.9	0.2	1.5	15	
	전라권	364	14.0	84.3	0.8	0.3	0.5	7	
	경상권	923	10.2	85.9	1.7	0.8	1.4	12	
	강원/제주권	141	19.9	77.3	2.1	0.7	0.0	8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2.6	83.5	1.8	1.3	0.8	11	-0.470
	비빈곤층	3,733	11.2	85.1	1.8	0.7	1.2	1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7.7	88.0	2.1	0.6	1.6	14	1.401
	비슷	2,252	13.7	82.9	1.8	0.8	0.8	11	
	분배 중요	597	10.1	86.3	1.3	1.0	1.3	13	

*p<.05, **p<.01, ***p<.001

사. 기타

‘소비 지출 중 기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0만원 미만’ 응답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30~50만원 미만’(15.4%), ‘0원’(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소비 지출 중 기타는 월 평균 2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 지출 중 기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 19~24세: 22만원, 만25~29세: 24만원, 만30~34세: 29만원) 기타 지출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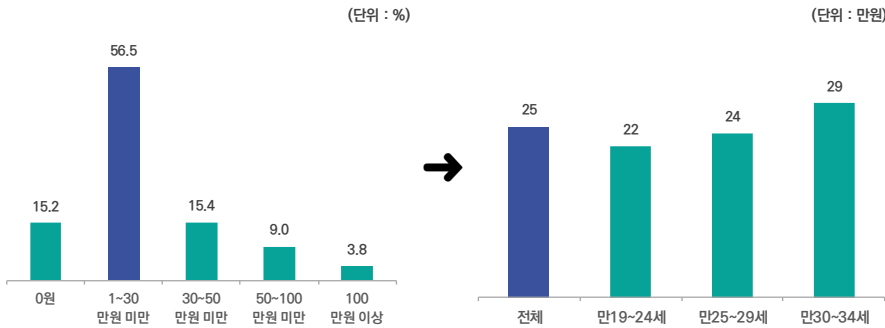


그림 IV-47. 기타

표 IV-92. 기타(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15.2	56.5	15.4	9.0	3.8	25	-
만19~24세	1,201	18.6	61.9	11.9	4.7	2.8	22	3.338*
만25~29세	1,503	13.3	58.3	15.4	9.8	3.1	24	
만30~34세	1,410	14.5	50.0	18.4	11.8	5.4	29	

*p<.05, **p<.01, ***p<.001

소비 지출 중 기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최종학력,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35만원), 대학원 이상 학력(37만원), 정규직 취업(29만원), 청년 부부가구(36만원), 충청권(33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기타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3. 기타(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15.2	56.5	15.4	9.0	3.8	25	-
성별	남자	1,945	19.5	54.1	14.0	8.9	3.5	24	-0.667
	여자	2,169	11.4	58.7	16.6	9.1	4.1	26	
혼인 상태	미혼	3,272	15.6	59.4	14.9	7.3	2.7	22	17.852***
	기혼	824	13.8	45.1	17.4	15.7	8.0	35	
	사별 및 이혼	18	11.1	50.0	5.6	22.2	11.1	7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1.4	55.4	12.2	6.6	4.4	26	3.604*
	대학교	3,195	13.9	57.5	15.9	9.3	3.4	24	
	대학원 이상	190	13.7	45.3	19.5	13.7	7.9	37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4.8	61.7	6.9	4.3	2.3	19	6.930***
	비정규직취업	1,045	13.3	58.9	16.4	7.7	3.7	27	
	정규직취업	1,679	8.8	51.3	21.7	13.4	4.8	29	
	자영업,창업 등	60	16.7	46.7	10.0	15.0	11.7	2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3.2	45.4	17.2	16.2	8.0	36	9.186***
	청년 독립가구	1,007	12.4	56.3	18.2	8.9	4.2	26	
	부모 동거가구	2,316	16.9	60.4	13.6	6.8	2.3	22	
	기타	33	33.3	45.5	18.2	3.0	0.0	13	
지역별	수도권	2,276	15.5	55.1	16.0	9.3	4.1	26	2.415*
	충청권	410	14.4	53.2	17.1	10.7	4.6	33	
	전라권	364	15.4	62.1	13.2	6.3	3.0	20	
	경상권	923	15.5	57.6	14.7	9.1	3.0	24	
	강원/제주권	141	11.3	67.4	10.6	6.4	4.3	18	

구분		사례수 [명]	0원	1~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2.3	52.5	14.4	7.9	2.9	21	-1.311
	비빈곤층	3,733	14.5	57.0	15.5	9.1	3.9	26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3.9	54.4	18.5	9.0	4.2	27	1.108
	비슷	2,252	16.8	56.4	13.8	9.2	3.8	24	
	분배 중요	597	12.2	61.5	14.9	8.4	3.0	26	

*p<.05, **p<.01, ***p<.001

아. 소비 지출 총합

‘소비 지출 총합’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0~200만원 미만’ 응답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50~100만원 미만’(28.6%), ‘1~50만원 미만’(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소비 지출 총합은 월 평균 14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비 지출 총합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124만원, 만25~29세: 136만원, 만30~34세: 158만원) 소비 지출 총합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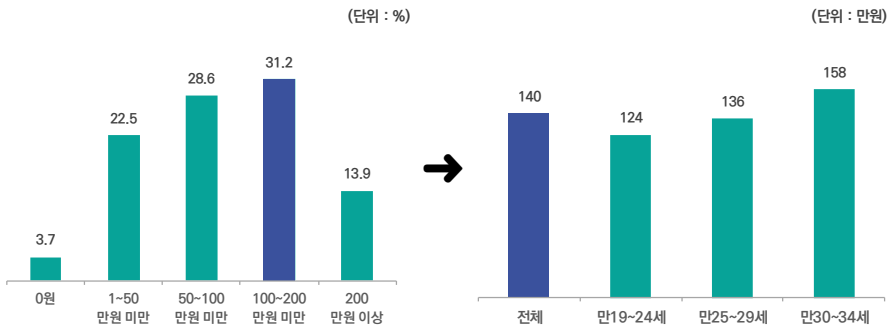


그림 IV-48. 소비 지출 총합

표 IV-94. 소비 지출 총합(연령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F
전체	4,114	3.7	22.5	28.6	31.2	13.9	140	-
만19~24세	1,201	5.2	35.0	31.1	19.2	9.5	124	3.394*
만25~29세	1,503	2.7	22.8	30.0	32.4	12.1	136	
만30~34세	1,410	3.5	11.6	25.0	40.2	19.6	158	

*p<.05, **p<.01, ***p<.001

소비 지출 총합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 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 지역,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230만원), 대학원 이상 학력(245만원), 비정규직 취업(172만원) 및 자영업, 창업 등(191만원), 청년 부부가구(229만원), 충청권(177만원), 비빈곤층(143만원), 복지인식 성장중요(163만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소비 지출 총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5. 소비 지출 총합(배경변인별)

(단위: %, 만원)

구분	사례수 [명]	0원	1~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전체	4,114	3.7	22.5	28.6	31.2	13.9	140	-
성별	남자	1,945	4.9	21.9	27.9	30.7	14.6	1.195
	여자	2,169	2.7	23.0	29.3	31.7	13.3	
혼인 상태	미혼	3,272	4.1	27.1	32.7	28.3	7.8	56.119***
	기혼	824	2.3	4.1	13.0	43.3	37.3	
	사별 및 이혼	18	5.6	16.7	5.6	16.7	55.6	

구분		사례수 [명]	0원	1~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평균 (만원)	F/t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7.0	32.1	28.0	21.4	11.5	133	9.113***
	대학교	3,195	3.1	21.0	29.2	33.1	13.6	136	
	대학원 이상	190	2.1	10.0	22.1	37.9	27.9	245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7.6	39.8	25.9	17.9	8.9	108	7.150***
	비정규직취업	1,045	3.4	22.1	30.8	28.8	14.8	172	
	정규직취업	1,679	0.8	9.2	29.7	43.6	16.7	144	
	자영업, 창업 등	60	5.0	16.7	23.3	23.3	31.7	191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8	4.2	12.3	43.5	38.1	229	23.358***
	청년 독립가구	1,007	2.3	8.5	32.2	45.0	12.0	145	
	부모 동거가구	2,316	4.7	34.4	32.7	21.3	7.0	110	
	기타	33	24.2	30.3	12.1	27.3	6.1	82	
지역별	수도권	2,276	4.0	20.4	28.0	32.4	15.2	145	2.693*
	충청권	410	3.4	22.2	27.1	33.2	14.1	177	
	전라권	364	3.0	24.5	32.4	29.1	11.0	107	
	경상권	923	3.6	26.1	29.1	28.7	12.5	132	
	강원/제주권	141	2.1	28.4	30.5	28.4	10.6	9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5.2	22.3	31.2	32.8	8.4	108	-2.388*
	비빈곤층	3,733	3.6	22.5	28.4	31.1	14.5	14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2.4	17.2	28.7	35.5	16.3	163	5.121**
	비슷	2,252	4.4	25.5	28.5	28.7	12.9	125	
	분배 중요	597	4.0	22.3	29.0	31.8	12.9	149	

*p<.05, **p<.01, ***p<.001

6) 소득 관련 정부정책 인식 및 정책욕구

(22) 소득 관련 정부 정책 인지도

가.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인지도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47.0%(매우 잘 알고 있다: 7.7% + 알고 있다: 39.3%)로 ‘모른다’ 응답 25.2%(전혀 모른다: 10.0% + 모른다: 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인지도는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 25~29세(49.3%), 만19~24세(46.2%), 만30~34세(45.1%) 순으로 ‘알고 있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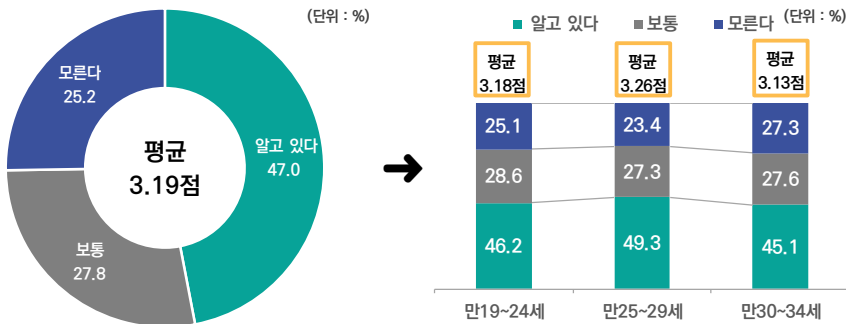


그림 IV-49.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인지도

표 IV-96.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인지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10.0	15.2	27.8	39.3	7.7	3.19	-
만19~24세	1,201	10.7	14.4	28.6	38.1	8.2	3.18	5.092**
만25~29세	1,503	8.3	15.0	27.3	40.9	8.4	3.26	
만30~34세	1,410	11.3	16.0	27.6	38.6	6.5	3.13	

*p<.05, **p<.01, ***p<.00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인지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최종학력, 취업상태, 복지인식, 혼인상태, 가구유형,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28점), 미혼(3.20점), 대학교 학력(3.23점), 정규직 취업(3.36점), 청년 독립가구(3.24점), 수도권(3.25점), 복지인식 성장중요(3.27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7.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인지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10.0	15.2	27.8	39.3	7.7	3.19	-
성별	남자	1,945	11.9	16.2	29.8	34.1	7.9	-5.221***
	여자	2,169	8.3	14.3	26.0	43.9	7.5	
혼인 상태	미혼	3,272	10.1	15.3	27.1	39.6	7.9	3.069*
	기혼	824	9.7	14.4	30.3	38.5	7.0	
	사별 및 이혼	18	16.7	27.8	38.9	16.7	0.0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t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1.9	17.0	31.3	32.9	6.9	3.06	8.139***
	대학교	3,195	9.4	14.7	27.2	40.7	7.9	3.23	
	대학원 이상	190	13.2	16.3	24.7	39.5	6.3	3.09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4.4	17.4	32.0	30.6	5.6	2.95	34.498***
	비정규직취업	1,045	8.0	15.8	28.3	40.2	7.7	3.24	
	정규직취업	1,679	7.9	12.9	24.1	46.0	9.2	3.36	
	자영업, 창업 등	60	8.3	18.3	31.7	28.3	13.3	3.2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9.8	14.1	29.2	39.8	7.1	3.20	2.647*
	청년 독립가구	1,007	9.2	14.9	28.4	37.9	9.5	3.24	
	부모 동거가구	2,316	10.3	15.7	27.1	39.8	7.2	3.18	
	기타	33	24.2	12.1	30.3	33.3	0.0	2.73	
지역별	수도권	2,276	9.3	14.5	27.0	40.5	8.7	3.25	3.102*
	충청권	410	9.8	14.9	31.0	39.0	5.4	3.15	
	전라권	364	11.0	18.7	25.0	40.4	4.9	3.10	
	경상권	923	11.9	14.8	29.8	35.4	8.0	3.13	
	강원/제주권	141	7.8	20.6	25.5	42.6	3.5	3.1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5.7	15.5	23.4	33.3	12.1	3.10	-1.458
	비빈곤층	3,733	9.5	15.2	28.3	39.9	7.2	3.2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0.2	13.3	25.5	41.3	9.6	3.27	5.977**
	비슷	2,252	10.2	15.6	30.8	36.7	6.7	3.14	
	분배 중요	597	9.2	17.6	21.3	44.6	7.4	3.23	

*p<.05, **p<.01, ***p<.001

나.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인지도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른다’ 응답이 47.8%(전혀 모른다: 17.9% + 모른다: 29.9%)로 ‘알고 있다’ 응답 24.3% (매우 잘 알고 있다: 4.0% + 알고 있다: 2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의 인지도는 평균 2.63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의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30~34세(49.9%), 만25~29세(47.3%), 만19~24세(46.0%) 순으로 비인지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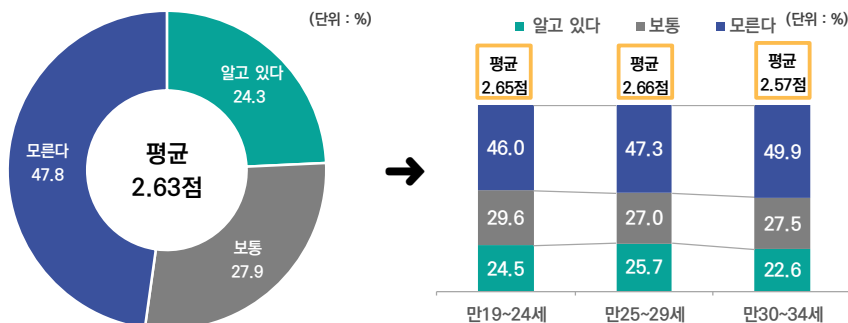


그림 IV-50.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인지도

표 IV-98.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인지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17.9	29.9	27.9	20.3	4.0	2.63	-
만19~24세	1,201	17.7	28.2	29.6	20.2	4.2	2.65	2.543
만25~29세	1,503	17.2	30.1	27.0	21.2	4.5	2.66	
만30~34세	1,410	18.8	31.1	27.5	19.4	3.2	2.57	

*p<.05, **p<.01, ***p<.001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의 인지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2.83점), 비정규직 취업(2.72점) 및 자영업, 창업 등(2.77점), 청년 부부가구(2.84점), 비빈곤층(2.64점), 복지인식 성장중요(2.71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99.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인지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17.9	29.9	27.9	20.3	4.0	2.63	-
성별	남자	1,945	18.5	28.2	28.6	20.2	4.5	2.64	0.816
	여자	2,169	17.4	31.4	27.3	20.4	3.5	2.61	
혼인 상태	미혼	3,272	19.0	31.3	26.9	19.1	3.8	2.57	17.957***
	기혼	824	13.8	23.9	32.2	25.4	4.7	2.83	
	사별 및 이혼	18	11.1	44.4	27.8	11.1	5.6	2.5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8.7	28.5	31.8	17.1	3.8	2.59	0.471
	대학교	3,195	17.6	30.4	26.9	21.1	3.9	2.63	
	대학원 이상	190	20.5	25.8	30.0	18.4	5.3	2.6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1.7	30.4	29.2	16.0	2.7	2.48	12.351***
	비정규직취업	1,045	15.8	29.1	27.5	22.5	5.2	2.72	
	정규직취업	1,679	16.3	30.1	27.2	22.3	4.1	2.68	
	자영업,창업 등	60	16.7	26.7	28.3	20.0	8.3	2.7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3.9	24.5	30.7	25.9	5.0	2.84	12.177***
	청년 독립가구	1,007	19.2	28.7	28.1	19.7	4.4	2.61	
	부모 동거가구	2,316	18.6	32.0	27.0	18.8	3.5	2.57	
	기타	33	24.2	36.4	21.2	18.2	0.0	2.33	
지역별	수도권	2,276	17.5	30.3	27.0	20.5	4.7	2.65	0.551
	충청권	410	16.1	32.2	28.0	21.0	2.7	2.62	
	전라권	364	18.1	32.1	27.7	19.0	3.0	2.57	
	경상권	923	20.3	26.1	29.6	20.7	3.4	2.61	
	강원/제주권	141	13.5	35.5	32.6	15.6	2.8	2.5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6.2	27.0	24.4	15.2	7.1	2.50	-2.138*
	비빈곤층	3,733	17.1	30.2	28.3	20.8	3.7	2.64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7.2	28.5	25.4	23.4	5.5	2.71	5.725**
	비중요	2,252	18.3	30.2	30.1	18.2	3.4	2.58	
	분배 중요	597	18.1	31.7	25.3	21.8	3.2	2.60	

*p<.05, **p<.01, ***p<.001

다. 청년기본소득 인지도

‘청년기본소득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35.9%(매우 잘 알고 있다: 7.5% + 알고 있다: 28.4%)로 ‘모른다’ 응답 33.5%(전혀 모른다: 12.3% + 모른다: 2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의 인지도는 평균 2.97점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의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40.0%), 만 19~24세(36.9%), 만30~34세(30.6%)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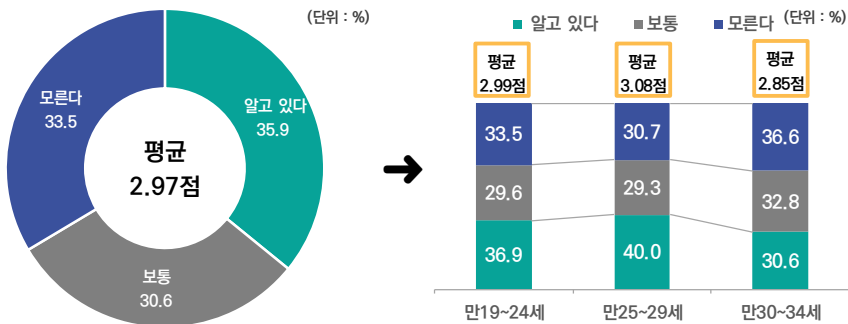


그림 IV-51. 청년기본소득 인지도

표 IV-100. 청년기본소득 인지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12.3	21.2	30.6	28.4	7.5	2.97	-
만19~24세	1,201	12.7	20.8	29.6	28.3	8.6	2.99	15.499***
만25~29세	1,503	10.8	19.9	29.3	30.5	9.5	3.08	
만30~34세	1,410	13.6	23.0	32.8	26.3	4.3	2.85	

*p<.05, **p<.01, ***p<.001

청년기본소득의 인지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 지역,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3.02점), 기혼(3.06점), 대학원 이상 학력(3.03점), 비정규직 취업(3.06점), 수도권(3.17점), 비빈곤층(3.00점), 복지인식 성장중요(3.08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1. 청년기본소득 인지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12.3	21.2	30.6	28.4	7.5	2.97	-
성별	남자	1,945	12.8	19.0	30.6	28.9	8.7	3.02	2.263*
	여자	2,169	11.9	23.2	30.5	28.0	6.4	2.94	
혼인 상태	미혼	3,272	12.8	22.1	29.6	28.0	7.5	2.96	4.157*
	기혼	824	10.4	17.7	34.2	30.5	7.2	3.06	
	사별 및 이혼	18	16.7	27.8	44.4	5.6	5.6	2.5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3.7	22.6	33.3	23.5	6.9	2.87	3.770*
	대학교	3,195	11.8	21.4	29.7	29.5	7.5	3.00	
	대학원 이상	190	15.3	12.6	34.7	28.9	8.4	3.03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5.6	23.0	30.8	24.3	6.3	2.83	11.444***
	비정규직취업	1,045	10.6	20.0	30.7	30.0	8.7	3.06	
	정규직취업	1,679	10.7	20.7	30.3	30.9	7.4	3.04	
	자영업, 창업 등	60	15.0	18.3	31.7	23.3	11.7	2.9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0.9	17.7	33.6	30.2	7.5	3.06	2.091
	청년 독립가구	1,007	12.9	21.0	32.5	26.6	7.1	2.94	
	부모 동거가구	2,316	12.4	22.5	28.9	28.5	7.7	2.97	
	기타	33	18.2	24.2	21.2	36.4	0.0	2.76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t
지역별	수도권	2,276	9.7	16.9	29.5	34.1	9.8	3.17	40.947***
	충청권	410	13.9	26.3	31.7	22.2	5.9	2.80	
	전라권	364	15.7	29.7	29.4	21.7	3.6	2.68	
	경상권	923	17.0	24.8	32.8	20.6	4.8	2.71	
	강원/제주권	141	10.6	30.5	32.6	23.4	2.8	2.77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1.5	23.1	28.1	19.4	7.9	2.69	-4.782***
	비빈곤층	3,733	11.4	21.0	30.8	29.3	7.4	3.0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1.9	19.9	26.8	31.1	10.3	3.08	8.510***
	비슷	2,252	12.6	21.2	33.8	26.6	5.7	2.92	
	분배 중요	597	12.2	24.0	26.5	29.3	8.0	2.97	

*p<.05, **p<.01, ***p<.001

(23-1) 소득 관련 정부 정책 참여 경험

가.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참여 경험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참여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 경험 없음’ 응답이 86.8%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 1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참여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 25~29세(14.4%), 만 19~24세(12.6%), 만 30~34세(12.4%) 순으로 ‘참여 경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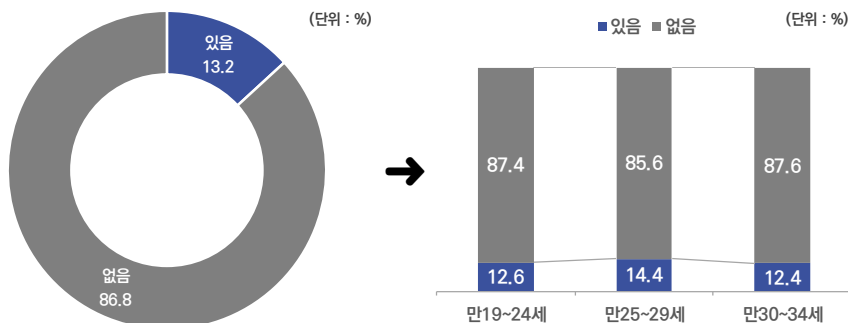


그림 IV-52.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참여 경험

표 IV-102.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참여 경험(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6.8	13.2	—
만19~24세	1,201	87.4	12.6	3.188
만25~29세	1,503	85.6	14.4	
만30~34세	1,410	87.6	12.4	

*p<.05, **p<.01, ***p<.00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참여 경험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기혼(17.8%), 비정규직 취업(14.7%) 및 정규직 취업(14.8%), 청년 부부가구(17.8%), 복지인식 성장중요(15.2%)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3.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참여 경험(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6.8	13.2	-
성별	남자	1,945	86.2	13.8	1.084
	여자	2,169	87.3	12.7	
혼인 상태	미혼	3,272	87.9	12.1	20.035***
	기혼	824	82.2	17.8	
	사별 및 이혼	18	94.4	5.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7.1	12.9	0.074
	대학교	3,195	86.7	13.3	
	대학원 이상	190	86.8	13.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89.8	10.2	17.281***
	비정규직취업	1,045	85.3	14.7	
	정규직취업	1,679	85.2	14.8	
	자영업,창업 등	60	91.7	8.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82.2	17.8	29.886***
	청년 독립가구	1,007	84.9	15.1	
	부모 동거가구	2,316	89.0	11.0	
	기타	33	97.0	3.0	
지역별	수도권	2,276	86.2	13.8	3.827
	충청권	410	89.3	10.7	
	전라권	364	88.5	11.5	
	경상권	923	86.6	13.4	
	강원/제주권	141	85.8	14.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84.0	16.0	2.897
	비빈곤층	3,733	87.1	12.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84.8	15.2	10.106**
	비슷	2,252	88.3	11.7	
	분배 중요	597	85.3	14.7	

*p<.05, **p<.01, ***p<.001

나.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참여 경험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의 참여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 경험 없음’ 응답이 89.6%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 1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의 참여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11.1%), 만30~34세(10.4%), 만19~24세(9.5%) 순으로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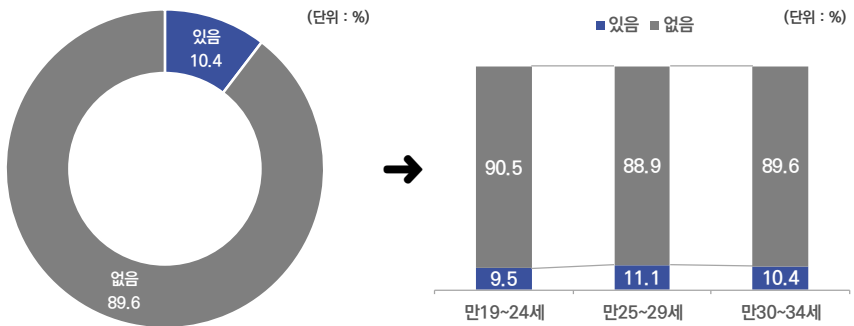


그림 IV-53.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참여 경험

표 IV-104.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참여 경험(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9.6	10.4	-
만19~24세	1,201	90.5	9.5	1.878
만25~29세	1,503	88.9	11.1	
만30~34세	1,410	89.6	10.4	

*p<.05, **p<.01, ***p<.001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의 참여 경험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남성(12.1%), 기혼(17.0%), 비정규직 취업(14.4%), 청년 부부가구(17.2%), 비빈곤층(10.7%), 복지인식 성장중요(12.9%)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5.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참여 경험(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9.6	10.4	-
성별	남자	1,945	87.9	12.1	11.154***
	여자	2,169	91.1	8.9	
혼인 상태	미혼	3,272	91.4	8.6	54.987***
	기혼	824	83.0	17.0	
	사별 및 이혼	18	72.2	2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9.8	10.2	1.081
	대학교	3,195	89.7	10.3	
	대학원 이상	190	87.4	12.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91.7	8.3	28.342***
	비정규직취업	1,045	85.6	14.4	
	정규직취업	1,679	90.2	9.8	
	자영업,창업 등	60	96.7	3.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82.8	17.2	45.664***
	청년 독립가구	1,007	91.1	8.9	
	부모 동거가구	2,316	91.1	8.9	
	기타	33	93.9	6.1	
지역별	수도권	2,276	89.3	10.7	1.561
	충청권	410	88.8	11.2	
	전라권	364	90.7	9.3	
	경상권	923	90.4	9.6	
	강원/제주권	141	89.4	10.6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92.7	7.3	4.203*
	비빈곤층	3,733	89.3	10.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87.1	12.9	12.751**
	비슷	2,252	90.9	9.1	
	분배 중요	597	89.8	10.2	

* $p < .05$, ** $p < .01$, *** $p < .001$

다. 청년기본소득 참여 경험

‘청년기본소득의 참여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 경험 없음’ 응답이 85.0%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 1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의 참여 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20.2%), 만19~24세(14.3%), 만30~34세(10.1%) 순으로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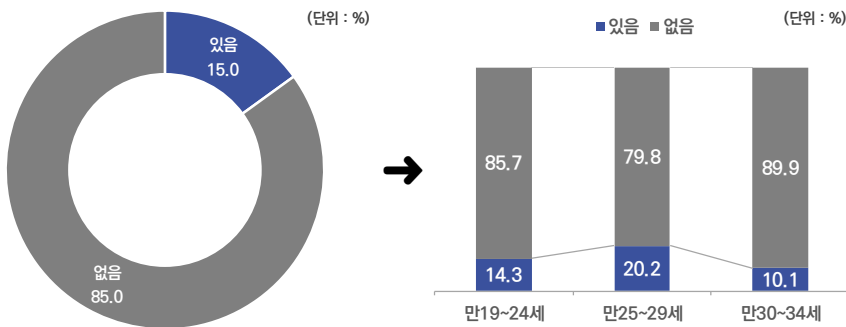


그림 IV-54. 청년기본소득 참여 경험

표 IV-106. 청년기본소득 참여 경험(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5.0	15.0	-
만19~24세	1,201	85.7	14.3	57.846***
만25~29세	1,503	79.8	20.2	
만30~34세	1,410	89.9	10.1	

*p<.05, **p<.01, ***p<.001

청년기본소득의 참여 경험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 지역, 복지인식, 혼인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경험 있다' 응답은 기혼(18.9%), 비정규직 취업(19.4%), 청년 부부가구(18.9%), 수도권(19.1%), 비빈곤층(15.5%), 복지인식 성장중요(17.4%)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7. 청년기본소득 참여 경험(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5.0	15.0	-
성별	남자	1,945	84.1	2.162
	여자	2,169	85.8	
혼인 상태	미혼	3,272	85.9	13.362**
	기혼	824	81.1	
	사별 및 이혼	18	94.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6.4	1.498
	대학교	3,195	84.6	
	대학원 이상	190	85.3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87.2	12.8	23.105***
	비정규직취업	1,045	80.6	19.4	
	정규직취업	1,679	85.8	14.2	
	자영업,창업 등	60	90.0	1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81.1	18.9	12.334**
	청년 독립가구	1,007	86.7	13.3	
	부모 동거가구	2,316	85.4	14.6	
	기타	33	90.9	9.1	
지역별	수도권	2,276	80.9	19.1	66.594***
	충청권	410	90.7	9.3	
	전라권	364	91.2	8.8	
	경상권	923	89.5	10.5	
	강원/제주권	141	87.9	12.1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89.8	10.2	7.533**
	비빈곤층	3,733	84.5	15.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82.6	17.4	14.411***
	비슷	2,252	86.9	13.1	
	분배 중요	597	82.7	17.3	

*p<.05, **p<.01, ***p<.001

(23-2)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만족도

가.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만족도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n=543)의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50.3%(매우 만족한다: 15.1% + 만족한다: 35.2%)로 ‘불만족’ 응답 9.2%(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9% + 만족하지 않는다: 5.3%)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만족도는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

25~29세(53.0%), 만30~34세(48.6%), 만19~24세(48.3%) 순으로 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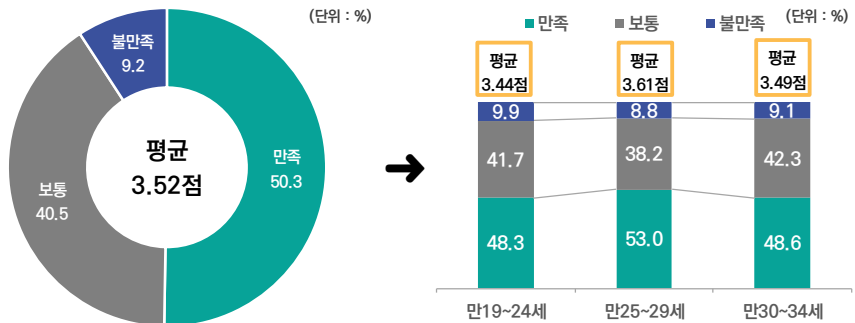


그림 IV-55.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만족도

표 IV-108.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 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543	3.9	5.3	40.5	35.2	15.1	3.52	-
만19~24세	151	5.3	4.6	41.7	37.1	11.3	3.44	1.557
만25~29세	217	3.7	5.1	38.2	32.7	20.3	3.61	
만30~34세	175	2.9	6.3	42.3	36.6	12.0	3.49	

*p<.05, **p<.01, ***p<.00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가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년 부부가구(3.69점)에서는 청년 독립가구(3.49점) 및 부모 동거 가구(3.46점)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9.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전체		543	3.9	5.3	40.5	35.2	15.1	3.52	-
성별	남자	268	4.5	5.6	40.7	34.7	14.6	3.49	-0.742
	여자	275	3.3	5.1	40.4	35.6	15.6	3.55	
혼인 상태	미혼	395	4.1	5.6	42.5	33.9	13.9	3.48	1.665
	기혼	147	3.4	4.8	34.7	38.8	18.4	3.64	
	사별 및 이혼	1	0.0	0.0	100.0	0.0	0.0	3.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94	2.1	8.5	43.6	29.8	16.0	3.49	1.154
	대학교	424	4.2	5.0	40.6	35.6	14.6	3.51	
	대학원 이상	25	4.0	0.0	28.0	48.0	20.0	3.80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6	5.1	3.7	49.3	30.1	11.8	3.40	1.275
	비정규직취업	154	3.2	5.2	35.1	40.3	16.2	3.61	
	정규직취업	248	3.6	6.5	39.1	34.3	16.5	3.54	
	자영업,창업 등	5	0.0	0.0	40.0	60.0	0.0	3.6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35	3.0	4.4	32.6	40.7	19.3	3.69	4.237**
	청년 독립가구	152	3.9	6.6	40.1	34.9	14.5	3.49	
	부모 동거가구	255	3.9	5.1	45.1	32.5	13.3	3.46	
	기타	1	100.0	0.0	0.0	0.0	0.0	1.00	
지역별	수도권	313	4.5	6.1	38.3	35.1	16.0	3.52	0.852
	충청권	44	4.5	4.5	54.5	29.5	6.8	3.30	
	전라권	42	0.0	11.9	35.7	33.3	19.0	3.60	
	경상권	124	3.2	2.4	41.9	37.1	15.3	3.59	
	강원/제주권	20	5.0	0.0	45.0	40.0	10.0	3.5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61	6.6	6.6	31.1	29.5	26.2	3.62	0.740
	비빈곤층	482	3.5	5.2	41.7	35.9	13.7	3.5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92	4.2	6.3	37.5	32.3	19.8	3.57	0.462
	비중요	263	3.4	4.9	43.3	36.1	12.2	3.49	
	분배 중요	88	4.5	4.5	38.6	38.6	13.6	3.52	

*p<.05, **p<.01, ***p<.001

나.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만족도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에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n=428)의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40.0%(매우 만족한다: 8.9% + 만족한다: 31.1%)로 ‘불만족’ 응답 15.4%(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8% + 만족하지 않는다: 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만족도는 평균 3.28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의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46.1%), 만30~34세(36.1%), 만19~24세(36.0%) 순으로 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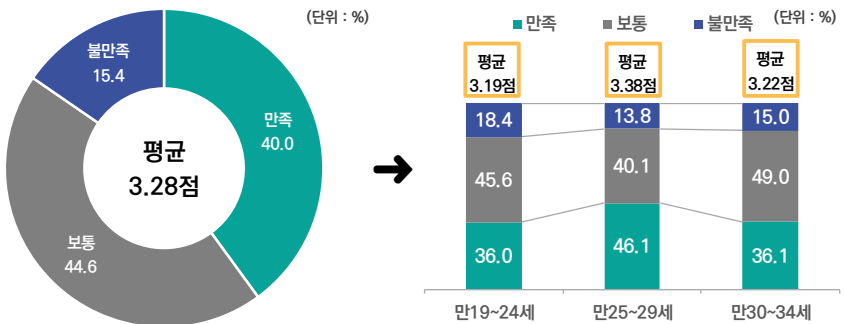


그림 IV-56.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만족도

표 IV-110.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428	5.8	9.6	44.6	31.1	8.9	3.28	-
만19~24세	114	6.1	12.3	45.6	28.1	7.9	3.19	1.571
만25~29세	167	5.4	8.4	40.1	35.3	10.8	3.38	
만30~34세	147	6.1	8.8	49.0	28.6	7.5	3.22	

*p<.05, **p<.01, ***p<.001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11.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전체		428	5.8	9.6	44.6	31.1	8.9	3.28	-
성별	남자	235	6.4	9.4	43.4	32.3	8.5	3.27	-0.080
	여자	193	5.2	9.8	46.1	29.5	9.3	3.28	
혼인 상태	미혼	283	6.4	9.2	47.3	29.3	7.8	3.23	1.337
	기혼	140	5.0	10.0	38.6	35.0	11.4	3.38	
	사별 및 이혼	5	0.0	20.0	60.0	20.0	0.0	3.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8.1	16.2	45.9	20.3	9.5	3.07	2.125
	대학교	330	5.2	8.2	45.2	32.4	9.1	3.32	
	대학원 이상	24	8.3	8.3	33.3	45.8	4.2	3.29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11	7.2	7.2	51.4	28.8	5.4	3.18	2.534
	비정규직취업	151	7.3	11.9	44.4	28.5	7.9	3.18	
	정규직취업	164	3.7	9.1	40.9	34.1	12.2	3.42	
	자영업,창업 등	2	0.0	0.0	0.0	100.0	0.0	4.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30	5.4	10.8	37.7	33.8	12.3	3.37	0.926
	청년 독립가구	90	6.7	6.7	43.3	35.6	7.8	3.31	
	부모 동거가구	206	5.8	9.7	50.0	27.7	6.8	3.20	
	기타	2	0.0	50.0	0.0	0.0	50.0	3.50	
지역별	수도권	244	6.1	10.7	43.4	32.0	7.8	3.25	0.544
	충청권	46	6.5	6.5	47.8	26.1	13.0	3.33	
	전라권	34	2.9	8.8	52.9	23.5	11.8	3.32	
	경상권	89	6.7	9.0	42.7	34.8	6.7	3.26	
	강원/제주권	15	0.0	6.7	46.7	26.7	20.0	3.60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28	10.7	3.6	50.0	25.0	10.7	3.21	-0.350
	비빈곤층	400	5.5	10.0	44.3	31.5	8.8	3.28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63	6.1	11.7	38.0	33.1	11.0	3.31	1.017
	비슷	204	4.9	8.3	47.5	30.9	8.3	3.29	
	분배 중요	61	8.2	8.2	52.5	26.2	4.9	3.11	

*p<.05, **p<.01, ***p<.001

다.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청년기본소득에 경험이 있는 응답자(n=618)의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53.6%(매우 만족한다: 15.2% + 만족한다: 38.3%)로 ‘불만족’ 응답 12.3%(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9% + 만족하지 않는다: 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평균은 3.53점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의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58.4%), 만19~24세(57.6%), 만30~34세(38.5%) 순으로 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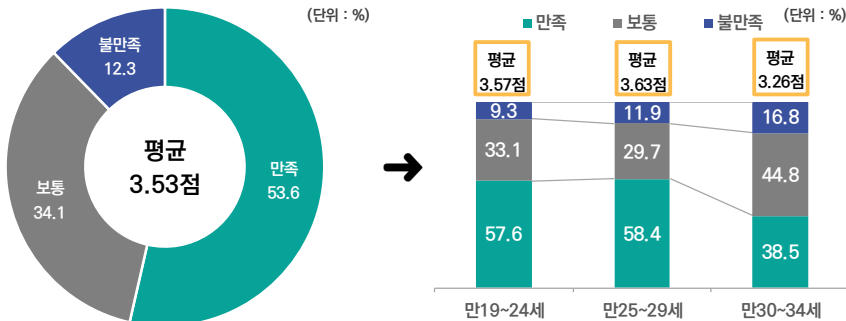


그림 IV-57.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표 IV-112.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618	3.9	8.4	34.1	38.3	15.2	3.53	-
만19~24세	172	4.1	5.2	33.1	44.8	12.8	3.57	7.275***
만25~29세	303	3.0	8.9	29.7	39.3	19.1	3.63	
만30~34세	143	5.6	11.2	44.8	28.7	9.8	3.26	

*p<.05, **p<.01, ***p<.001

청년기본소득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취업(3.63점)에서는 미취업/구직중(3.48점) 및 정규직 취업(3.45점)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3. 청년기본소득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전체	618	3.9	8.4	34.1	38.3	15.2	3.53	-
성별	남자	309	3.9	8.7	35.3	37.9	14.2	-0.699
	여자	309	3.9	8.1	33.0	38.8	16.2	
혼인 상태	미혼	461	4.3	8.2	35.1	36.9	15.4	0.410
	기혼	156	2.6	9.0	31.4	42.3	14.7	
	사별 및 이혼	1	0.0	0.0	0.0	100.0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99	4.0	10.1	37.4	31.3	17.2	1.764
	대학교	491	3.5	7.7	33.6	40.3	14.9	
	대학원 이상	28	10.7	14.3	32.1	28.6	14.3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70	3.5	7.6	38.8	37.1	12.9	3.48	2.784*
	비정규직취업	203	4.4	6.9	28.6	41.4	18.7	3.63	
	정규직취업	239	3.8	10.5	36.4	36.0	13.4	3.45	
	자영업,창업 등	6	0.0	0.0	0.0	66.7	33.3	4.3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43	2.8	7.7	31.5	42.0	16.1	3.61	0.933
	청년 독립가구	134	3.7	11.2	37.3	35.1	12.7	3.42	
	부모 동거가구	338	4.4	7.7	33.7	38.2	16.0	3.54	
	기타	3	0.0	0.0	66.7	33.3	0.0	3.33	
지역별	수도권	434	3.9	7.4	31.8	40.6	16.4	3.58	1.811
	충청권	38	2.6	13.2	50.0	31.6	2.6	3.18	
	전라권	32	0.0	12.5	43.8	31.3	12.5	3.44	
	경상권	97	6.2	10.3	33.0	35.1	15.5	3.43	
	강원/제주권	17	0.0	5.9	47.1	29.4	17.6	3.5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9	7.7	7.7	41.0	25.6	17.9	3.38	-0.932
	비빈곤층	579	3.6	8.5	33.7	39.2	15.0	3.54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20	4.5	10.5	32.7	36.8	15.5	3.48	0.347
	비슷	295	3.4	6.1	36.6	40.0	13.9	3.55	
	분배 중요	103	3.9	10.7	30.1	36.9	18.4	3.55	

*p<.05, **p<.01, ***p<.001

(24)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응답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청년기본소득’ (39.3%),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46.3%)는 ‘청년기본소득’ 응답이 만25~29세(43.6%) 및 만30~34세(42.1%)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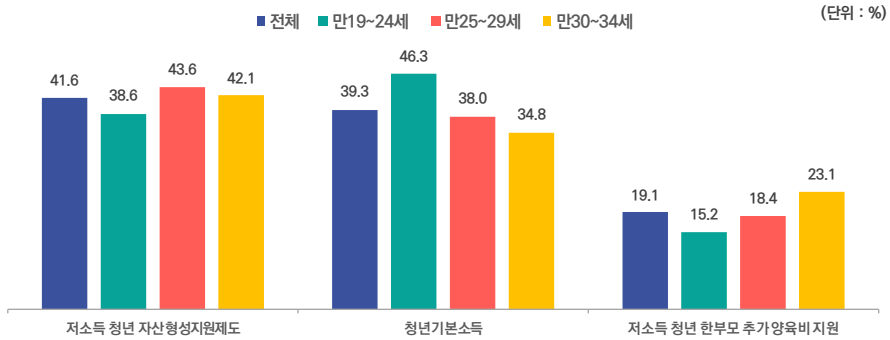


그림 IV-58.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

표 IV-114.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청년기본소득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χ^2
전체	4,114	41.6	39.3	19.1	-
만19~24세	1,201	38.6	46.3	15.2	49.244***
만25~29세	1,503	43.6	38.0	18.4	
만30~34세	1,410	42.1	34.8	23.1	

*p<.05, **p<.01, ***p<.001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응답은 비정규직 취업(44.3%), 청년독립가구(42.0%), 빈곤층(44.1%), 복지인식 성장중요(4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청년기본소득’ 응답은 미혼(42.1%), 고등학교 이하 학력(43.2%), 미취업/구직중(45.4%), 부모 동거가구(42.6%), 복지인식 분배중요(4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5.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 제도	청년기본소득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χ^2
전체		4,114	41.6	39.3	19.1	-
성별	남자	1,945	41.0	39.8	19.1	0.564
	여자	2,169	42.1	38.9	19.0	
혼인 상태	미혼	3,272	41.7	42.1	16.2	97.424***
	기혼	824	41.1	28.8	30.1	
	사별 및 이혼	18	44.4	27.8	2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39.5	43.2	17.3	23.407***
	대학교	3,195	42.4	38.8	18.7	
	대학원 이상	190	36.3	32.6	31.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7.3	45.4	17.3	46.187***
	비정규직취업	1,045	44.3	39.3	16.4	
	정규직취업	1,679	43.4	34.5	22.2	
	자영업,창업 등	60	41.7	40.0	18.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40.5	29.0	30.5	94.481***
	청년 독립가구	1,007	42.0	39.8	18.2	
	부모 동거가구	2,316	41.7	42.6	15.7	
	기타	33	48.5	30.3	21.2	
지역별	수도권	2,276	41.3	39.4	19.3	6.016
	충청권	410	40.0	39.3	20.7	
	전라권	364	46.2	36.8	17.0	
	경상권	923	41.7	39.4	18.9	
	강원/제주권	141	39.0	44.7	16.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44.1	42.3	13.6	7.982*
	비빈곤층	3,733	41.4	39.0	19.6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45.1	31.8	23.2	53.503***
	비슷	2,252	41.2	41.8	17.0	
	분배 중요	597	35.8	45.9	18.3	

*p<.05, **p<.01, ***p<.001

3. 청년의 노동

1) 취업(일자리 상황 및 전망)

(1) 지난주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

‘지난주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 응답이 67.7%로 ‘아니오’ 응답 3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주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1.4%, 만25~29세: 71.9%, 만30~34세: 77.1%) 일하였다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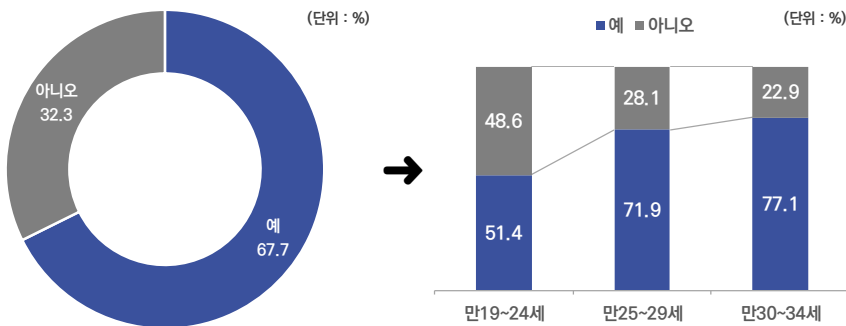


그림 IV-59. 지난주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

표 IV-116. 지난주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4,114	67.7	32.3	-
만19~24세	1,201	51.4	48.6	215.045***
만25~29세	1,503	71.9	28.1	
만30~34세	1,410	77.1	22.9	

*p<.05, **p<.01, ***p<.001

지난주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 응답은 미혼(34.9%), 고등학교 이하 학력(47.5%), 부모 동거가구(40.8%), 전라권(38.2%), 빈곤층(40.2%)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7. 지난주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4,114	67.7	32.3	-
성별	남자	1,945	68.3	0.729
	여자	2,169	67.1	
혼인 상태	미혼	3,272	65.1	50.706***
	기혼	824	78.0	
	사별 및 이혼	18	61.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52.5	95.968***
	대학교	3,195	70.6	
	대학원 이상	190	76.8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0.0	100.0	4,114.000***
	비정규직취업	1,045	100.0	0.0	
	정규직취업	1,679	100.0	0.0	
	자영업,창업 등	60	100.0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79.0	21.0	192.696***
	청년 독립가구	1,007	79.4	20.6	
	부모 동거가구	2,316	59.2	40.8	
	기타	33	45.5	54.5	
지역별	수도권	2,276	69.6	30.4	12.893*
	충청권	410	67.8	32.2	
	전라권	364	61.8	38.2	
	경상권	923	65.9	34.1	
	강원/제주권	141	62.4	37.6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59.8	40.2	11.763***
	비빈곤층	3,733	68.5	31.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73.1	26.9	24.813***
	비슷	2,252	65.2	34.8	
	분배 중요	597	65.3	34.7	

*p<.05, **p<.01, ***p<.001

(2) 지난 4주내 구직 여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n=1,330)의 ‘지난 4주내 구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해 보지 않았음’ 응답이 73.4%로 ‘구해 보았음’ 응답 2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주내 구직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31.2%), 만 30~34세(30.3%), 만19~24세(21.2%) 순으로 구해보았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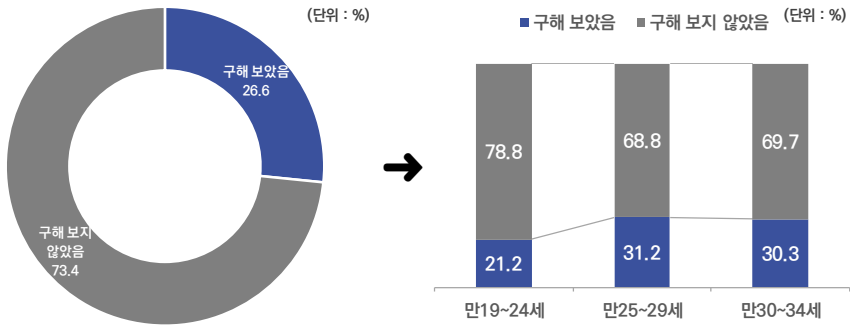


그림 IV-60. 지난 4주내 구직 여부

표 IV-118. 지난 4주내 구직 여부(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구해 보았음	구해 보지 않았음	χ^2
전체	1,330	26.6	73.4	—
만19~24세	584	21.2	78.8	15.520***
만25~29세	423	31.2	68.8	
만30~34세	323	30.3	69.7	

*p<.05, **p<.01, ***p<.001

지난 4주내 구직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복지인식,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해보았다’ 응답은 빈곤층(33.3%), 복지인식 성장중요(32.6%)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9. 지난 4주내 구직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구해 보았음	구해 보지 않았음	χ^2
전체		1,330	26.6	73.4	-
성별	남자	616	26.3	73.7	0.059
	여자	714	26.9	73.1	
혼인 상태	미혼	1,142	26.9	73.1	0.340
	기혼	181	24.9	75.1	
	사별 및 이혼	7	28.6	71.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46	22.0	78.0	5.900
	대학교	940	28.5	71.5	
	대학원 이상	44	22.7	77.3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6.6	73.4	-
	비정규직취업	-	-	-	
	정규직취업	-	-	-	
	자영업,창업 등	-	-	-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59	25.8	74.2	3.111
	청년 독립가구	207	30.9	69.1	
	부모 동거가구	946	26.0	74.0	
	기타	18	16.7	83.3	
지역별	수도권	691	26.0	74.0	2.768
	충청권	132	31.1	68.9	
	전라권	139	28.8	71.2	
	경상권	315	26.0	74.0	
	강원/제주권	53	20.8	79.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53	33.3	66.7	3.993*
	비빈곤층	1,177	25.7	74.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340	32.6	67.4	10.603**
	비슷	783	23.5	76.5	
	분배 중요	207	28.5	71.5	

*p<.05, **p<.01, ***p<.001

(3) 지난주 직장에서의 지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n=2,784)의 ‘지난주 직장에서의 지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규직’ 응답이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비정규직_시간제 노동’(17.2%), ‘비정규직_한시적노동’(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직장에서의 지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41.2%)는 ‘비정규직_시간제노동’ 응답이, 만25~29세(63.6%) 및 만30~34세(74.1%)는 ‘정규직’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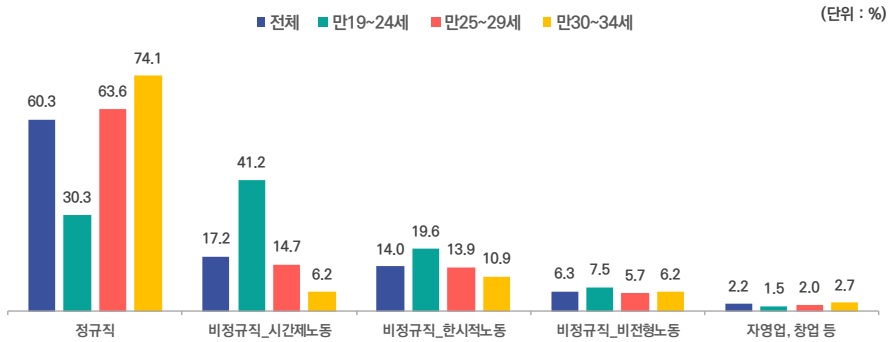


그림 IV-61. 지난주 직장에서의 지위

표 IV-120. 지난주 직장에서의 지위(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_시간제 노동	비정규직_한시적 노동	비정규직_비전형 노동	자영업, 창업 등	χ^2
전체	2,784	60.3	17.2	14.0	6.3	2.2	-
만19~24세	617	30.3	41.2	19.6	7.5	1.5	440.063***
만25~29세	1,080	63.6	14.7	13.9	5.7	2.0	
만30~34세	1,087	74.1	6.2	10.9	6.2	2.7	

*p<.05, **p<.01, ***p<.001

지난주 직장에서의 지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응답은 남성(61.9%), 기혼(70.8%), 대학교(62.7%) 및 대학원 이상 학력(68.5%), 청년 부부가구(71.8%), 비빈곤층(61.5%)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21. 지난주 직장에서의 지위(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_시간제 노동	비정규직 _한시적 노동	비정규직 _비전형 노동	자영업, 창업 등	χ^2
전체		2,784	60.3	17.2	14.0	6.3	2.2	-
성별	남자	1,329	61.9	14.8	13.2	7.8	2.3	19.588***
	여자	1,455	58.8	19.5	14.7	4.9	2.1	
혼인 상태	미혼	2,130	57.2	20.1	14.6	5.9	2.1	73.904***
	기혼	643	70.8	7.8	12.0	7.2	2.3	
	사별 및 이혼	11	45.5	9.1	9.1	27.3	9.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83	43.3	31.6	13.6	9.4	2.1	88.865***
	대학교	2,255	62.7	15.4	13.9	5.9	2.1	
	대학원 이상	146	68.5	7.5	17.1	4.1	2.7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	-	-	5,568.000***
	비정규직취업	1,045	0.0	45.9	37.3	16.7	0.0	
	정규직취업	1,679	100.0	0.0	0.0	0.0	0.0	
	자영업, 창업 등	60	0.0	0.0	0.0	0.0	10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99	71.8	7.7	11.4	7.2	2.0	130.886***
	청년 독립가구	800	67.0	12.3	13.5	5.0	2.3	
	부모 동거가구	1,370	51.4	24.3	15.5	6.6	2.1	
	기타	15	60.0	20.0	6.7	6.7	6.7	

구분		사례수 [명]	정규직	비정규직 _시간제 노동	비정규직 _한시적 노동	비정규직 _비전형 노동	자영업, 창업 등	χ^2
지역별	수도권	1,585	61.9	17.5	12.8	5.6	2.2	28.333*
	충청권	278	60.1	19.8	11.2	7.9	1.1	
	전라권	225	59.1	18.2	15.6	5.3	1.8	
	경상권	608	57.6	16.0	16.1	7.7	2.6	
	강원/제주권	88	54.5	10.2	26.1	6.8	2.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228	47.4	23.7	19.7	6.1	3.1	19.664***
	비빈곤층	2,556	61.5	16.7	13.5	6.3	2.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925	60.2	15.8	13.5	8.1	2.4	12.966
	비슷	1,469	60.1	17.4	14.8	5.5	2.2	
	분배 중요	390	61.3	20.0	12.3	4.9	1.5	

*p<.05, **p<.01, ***p<.001

(4) 과거(2018~2021년)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n=1,330)의 ‘과거(2018~2021년)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 응답이 56.2%로 ‘아니오’ 응답 4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거(2018~2021년)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58.4%), 만30~34세(57.3%), 만19~24세(54.1%) 순으로 일을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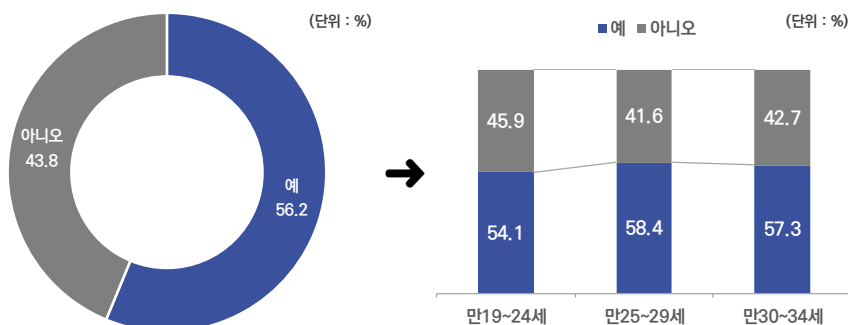


그림 IV-62. 과거(2018~2021년)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

표 IV-122. 과거(2018~2021년)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1,330	56.2	43.8	—
만19~24세	584	54.1	45.9	2.014
만25~29세	423	58.4	41.6	
만30~34세	323	57.3	42.7	

*p<.05, **p<.01, ***p<.001

과거(2018~2021년)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성별,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을 했다’ 응답은 여성(59.4%), 미혼(57.5%), 강원/제주권 (67.9%) 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23. 과거(2018~2021년) 수입 목적 노동(1시간 이상)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1,330	56.2	43.8	-
성별	남자	616	52.6	47.4	6.188*
	여자	714	59.4	40.6	
혼인 상태	미혼	1,142	57.5	42.5	12.385**
	기혼	181	50.3	49.7	
	사별 및 이혼	7	0.0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46	51.4	48.6	4.968
	대학교	940	58.2	41.8	
	대학원 이상	44	52.3	47.7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56.2	43.8	-
	비정규직취업	-	-	-	
	정규직취업	-	-	-	
	자영업,창업 등	-	-	-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59	52.8	47.2	2.219
	청년 독립가구	207	58.5	41.5	
	부모 동거가구	946	56.6	43.4	
	기타	18	44.4	55.6	
지역별	수도권	691	57.9	42.1	9.730*
	충청권	132	58.3	41.7	
	전라권	139	56.8	43.2	
	경상권	315	49.5	50.5	
	강원/제주권	53	67.9	32.1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53	58.2	41.8	0.261
	비빈곤층	1,177	56.0	44.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340	60.0	40.0	3.072
	비슷	783	54.4	45.6	
	분배 중요	207	57.0	43.0	

*p<.05, **p<.01, ***p<.001

(5)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

과거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n=748)의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_시간제노동’ 응답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정규직’(23.0%), ‘비정규직_한시적노동’(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72.5%) 및 만25~29세(34.8%)는 ‘비정규직_시간제노동’ 응답이, 만30~34세(43.2%)는 ‘정규직’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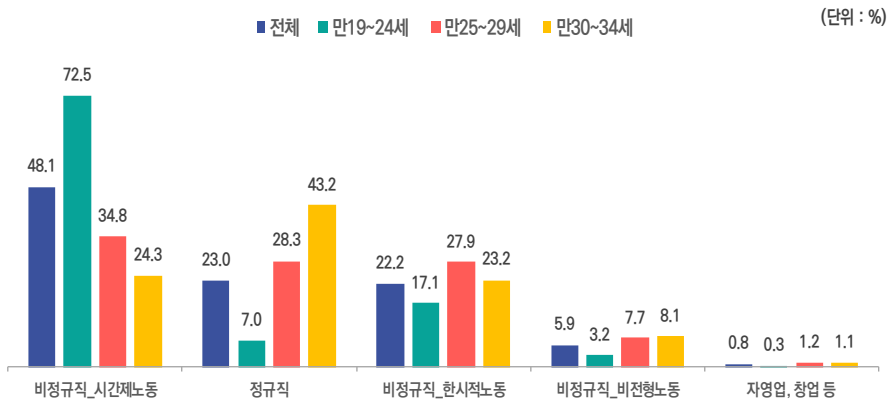


그림 IV-63.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

표 IV-124.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비정규직_시간제 노동	정규직	비정규직_한시적 노동	비정규직_비전형 노동	자영업, 창업 등	χ^2
전체	748	48.1	23.0	22.2	5.9	0.8	-
만19~24세	316	72.5	7.0	17.1	3.2	0.3	157.157***
만25~29세	247	34.8	28.3	27.9	7.7	1.2	
만30~34세	185	24.3	43.2	23.2	8.1	1.1	

*p<.05, **p<.01, ***p<.001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가구유형,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_시간제 노동’ 응답은 미혼(52.8%), 고등학교 이하 학력(60.1%), 부모 동거가구(53.6%), 수도권(5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정규직’ 응답은 기혼(60.4%), 대학원 이상 학력(52.2%), 청년 부부가구(5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25. 과거 직장에서의 지위(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비정규직_시간제 노동	정규직	비정규직_한시적 노동	비정규직_비전형 노동	자영업, 창업 등	χ^2
전체	748	48.1	23.0	22.2	5.9	0.8	-
성별	남자	324	49.1	20.1	23.5	6.2	4.071
	여자	424	47.4	25.2	21.2	5.7	
혼인 상태	미혼	657	52.8	17.8	22.7	5.9	88.544***
	기혼	91	14.3	60.4	18.7	5.5	
	사별 및 이혼	-	-	-	-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78	60.1	16.3	16.9	5.6	33.866***
	대학교	547	45.7	23.9	24.1	5.7	
	대학원 이상	23	13.0	52.2	17.4	13.0	

구분		사례수 [명]	비정규직 _시간제 노동	정규직	비정규직 _한시적 노동	비정규직 _비전형 노동	자영업, 창업 등	χ^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748	48.1	23.0	22.2	5.9	0.8	-
	비정규직취업	-	-	-	-	-	-	
	정규직취업	-	-	-	-	-	-	
	자영업,창업 등	-	-	-	-	-	-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84	15.5	59.5	17.9	6.0	1.2	84.432***
	청년 독립가구	121	46.3	26.4	20.7	6.6	0.0	
	부모 동거가구	535	53.6	16.6	23.2	5.6	0.9	
	기타	8	50.0	12.5	25.0	12.5	0.0	
지역별	수도권	400	52.0	19.8	21.3	6.0	1.0	31.471*
	충청권	77	39.0	32.5	19.5	9.1	0.0	
	전라권	79	48.1	24.1	24.1	2.5	1.3	
	경상권	156	48.7	26.3	18.6	5.8	0.6	
	강원/제주권	36	22.2	22.2	50.0	5.6	0.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89	43.8	22.5	22.5	11.2	0.0	6.138
	비빈곤층	659	48.7	23.1	22.2	5.2	0.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04	43.1	27.9	20.1	8.3	0.5	11.821
	비슷	426	50.2	22.5	21.6	4.7	0.9	
	분배 중요	118	49.2	16.1	28.0	5.9	0.8	

*p<.05, **p<.01, ***p<.001

(6) 직장(일)에 대한 만족도

가. 수입 만족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n=2,784)의 ‘현재 직장 수입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이 41.7%(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2.1% + 만족하지 않는다: 29.6%)로 ‘만족’ 응답 21.3%(매우 만족한다: 2.5% + 만족한다: 18.8%)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직장 수입 만족도는 평균 2.70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의 수입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19~24세: 25.9%, 만25~29세: 21.8%, 만30~34세: 18.2%) 만족 응답은 하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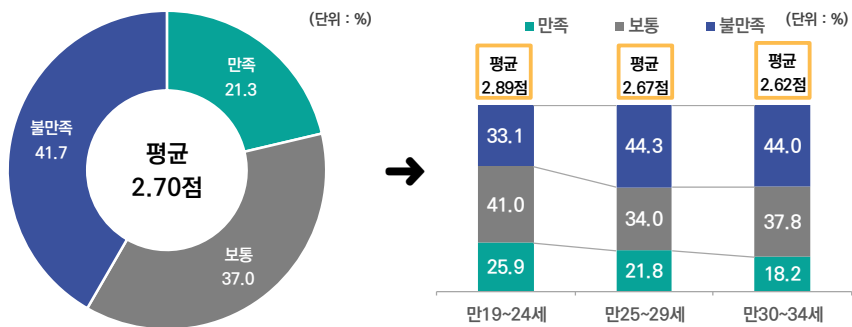


그림 IV-64. 수입 만족도

표 IV-126. 수입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2,784	12.1	29.6	37.0	18.8	2.5	2.70	-
만19~24세	617	7.0	26.1	41.0	23.0	2.9	2.89	15.056***
만25~29세	1,080	14.0	30.3	34.0	18.2	3.5	2.67	
만30~34세	1,087	13.1	30.9	37.8	17.0	1.2	2.62	

*p<.05, **p<.01, ***p<.001

현재 직장의 수입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혼인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2.67점), 청년 독립가구(2.66점), 빈곤층(2.11점), 복지인식 분배중요(2.64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27. 수입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전체		2,784	12.1	29.6	37.0	18.8	2.5	2.70	-
성별	남자	1,329	12.1	27.6	39.0	18.0	3.3	2.73	1.387
	여자	1,455	12.0	31.4	35.3	19.6	1.7	2.68	
혼인 상태	미혼	2,130	13.1	30.0	36.3	18.1	2.5	2.67	5.418**
	기혼	643	8.6	28.3	39.3	21.5	2.3	2.81	
	사별 및 이혼	11	27.3	18.2	45.5	9.1	0.0	2.3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83	10.2	26.6	39.7	19.6	3.9	2.80	2.452
	대학교	2,255	12.4	29.9	36.7	18.8	2.2	2.68	
	대학원 이상	146	11.6	32.9	34.9	17.1	3.4	2.6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	-	-	-	2.122
	비정규직취업	1,045	11.2	28.4	37.7	20.0	2.7	2.75	
	정규직취업	1,679	12.5	30.7	36.5	18.1	2.3	2.67	
	자영업,창업 등	60	15.0	20.0	41.7	18.3	5.0	2.7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99	8.7	28.5	38.7	21.7	2.3	2.80	3.037*
	청년 독립가구	800	13.9	27.9	38.9	17.4	2.0	2.66	
	부모 동거가구	1,370	12.3	31.2	35.3	18.5	2.8	2.68	
	기타	15	26.7	20.0	33.3	13.3	6.7	2.53	
지역별	수도권	1,585	11.9	30.3	36.8	18.5	2.5	2.69	1.097
	충청권	278	11.5	30.9	37.4	18.3	1.8	2.68	
	전라권	225	14.2	23.6	34.2	26.2	1.8	2.78	
	경상권	608	12.5	30.4	37.0	17.3	2.8	2.67	
	강원/제주권	88	8.0	22.7	47.7	18.2	3.4	2.86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228	32.5	33.3	25.9	7.9	0.4	2.11	-9.646***
	비빈곤층	2,556	10.3	29.3	38.0	19.8	2.7	2.7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925	13.0	26.5	34.8	21.9	3.8	2.77	3.703*
	비슷	1,469	11.6	30.1	39.4	17.4	1.6	2.67	
	분배 중요	390	11.8	35.1	33.3	16.9	2.8	2.64	

*p<.05, **p<.01, ***p<.001

나. 직업안정성 만족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n=2,784)의 ‘현재 직장 직업안정성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35.1%(매우 만족한다: 7.4% + 만족한다: 27.7%)로 ‘불만족’ 응답 30.2%(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0.1% + 만족하지 않는다: 20.1%)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직장 직업안정성 만족도는 평균 3.02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의 직업안정성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30~34세(35.9%), 만19~24세(35.0%), 만25~29세(34.4%) 순으로 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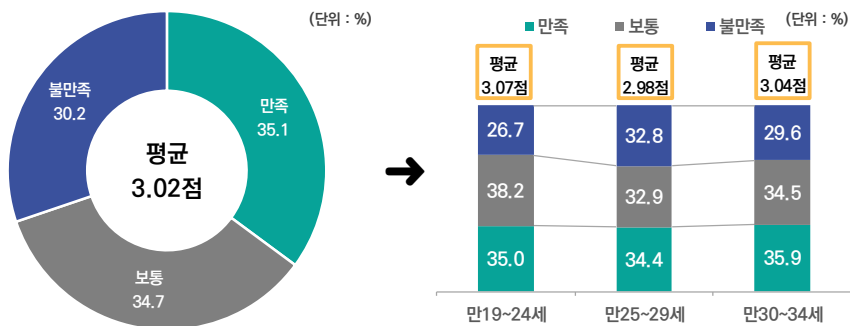


그림 IV-65. 직업안정성 만족도

표 IV-128. 직업안정성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2,784	10.1	20.1	34.7	27.7	7.4	3.02	-
만19~24세	617	6.6	20.1	38.2	29.2	5.8	3.07	1.760
만25~29세	1,080	11.9	20.9	32.9	26.4	8.0	2.98	
만30~34세	1,087	10.3	19.3	34.5	28.2	7.7	3.04	

*p<.05, **p<.01, ***p<.001

현재 직장의 직업안정성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2.98점), 비정규직 취업(2.72점), 부모 동거가구(2.95점), 빈곤층(2.39점), 복지인식 분배중요(2.91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29. 직업안정성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전체		2,784	10.1	20.1	34.7	27.7	7.4	3.02	-
성별	남자	1,329	10.7	19.0	33.7	27.4	9.2	3.05	1.460
	여자	1,455	9.6	21.1	35.6	28.0	5.8	2.99	
혼인 상태	미혼	2,130	10.8	21.5	34.1	26.8	6.9	2.98	7.832***
	기혼	643	7.9	15.7	36.7	30.8	8.9	3.17	
	사별 및 이혼	11	9.1	18.2	36.4	27.3	9.1	3.0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83	11.7	21.7	34.5	25.1	7.0	2.94	2.621
	대학교	2,255	10.0	20.0	34.9	27.6	7.5	3.03	
	대학원 이상	146	6.8	17.8	32.9	35.6	6.8	3.1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	-	-	-	71.372***
	비정규직취업	1,045	14.6	25.6	36.4	19.5	3.8	2.72	
	정규직취업	1,679	7.1	16.4	33.8	32.9	9.7	3.22	
	자영업,창업 등	60	13.3	26.7	31.7	23.3	5.0	2.8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99	7.7	15.9	36.9	30.7	8.8	3.17	7.050***
	청년 독립가구	800	9.6	20.1	34.8	27.3	8.3	3.04	
	부모 동거가구	1,370	11.2	22.0	33.7	26.9	6.2	2.95	
	기타	15	33.3	13.3	33.3	6.7	13.3	2.53	
지역별	수도권	1,585	9.7	19.5	35.8	27.9	7.0	3.03	0.271
	충청권	278	9.4	22.3	32.0	26.6	9.7	3.05	
	전라권	225	10.7	18.7	36.4	27.1	7.1	3.01	
	경상권	608	11.5	21.1	32.2	27.8	7.4	2.99	
	강원/제주권	88	8.0	21.6	35.2	27.3	8.0	3.06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228	28.1	24.6	30.7	14.0	2.6	2.39	-9.023***
	비빈곤층	2,556	8.5	19.7	35.1	28.9	7.8	3.08	
복지 인식	성장 중요	925	11.2	17.8	31.2	30.4	9.3	3.09	3.785*
	비슷	1,469	8.8	20.5	37.6	27.2	6.0	3.01	
	분배 중요	390	12.3	24.1	32.1	23.3	8.2	2.91	

*p<.05, **p<.01, ***p<.001

다.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n=2,784)의 ‘현재 직장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31.7%(매우 만족한다: 6.5% + 만족한다: 25.3%)로 ‘불만족’ 응답 28.3%(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6% + 만족하지 않는다: 18.7%)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직장의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는 평균 3.00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의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33.7%), 만25~29세(31.6%), 만30~34세(30.7%) 순으로 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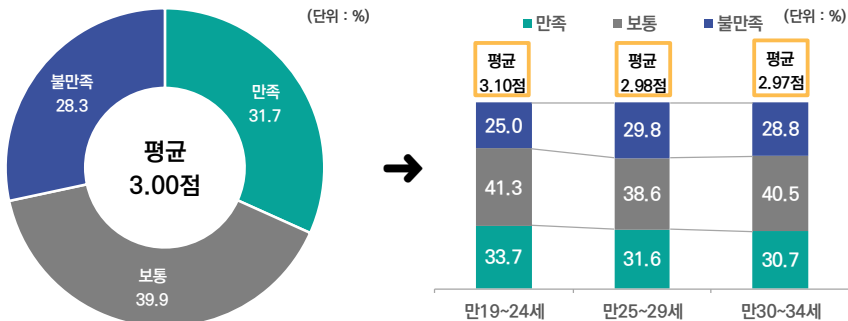


그림 IV-66.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

표 IV-130.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2,784	9.6	18.7	39.9	25.3	6.5	3.00	-
만19~24세	617	6.8	18.2	41.3	25.4	8.3	3.10	3.721*
만25~29세	1,080	10.3	19.5	38.6	24.9	6.7	2.98	
만30~34세	1,087	10.6	18.2	40.5	25.5	5.2	2.97	

*p<.05, **p<.01, ***p<.001

현재 직장의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 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2.95점), 청년 독립가구(2.94점), 빈곤층(2.41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31. 근로조건 전반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전체	2,784	9.6	18.7	39.9	25.3	6.5	3.00	-
성별	남자	1,329	10.3	18.1	39.1	25.5	6.9	0.187
	여자	1,455	9.0	19.2	40.7	25.0	6.0	
혼인 상태	미혼	2,130	10.3	20.1	39.6	23.9	6.0	12.987***
	기혼	643	7.2	13.8	41.2	29.9	7.9	
	사별 및 이혼	11	27.3	27.3	27.3	9.1	9.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83	9.9	18.3	41.0	22.7	8.1	1.917
	대학교	2,255	9.8	18.9	39.7	25.7	5.9	
	대학원 이상	146	6.2	17.1	41.1	25.3	10.3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	-	-	-	1.427
	비정규직취업	1,045	10.3	19.1	41.7	21.7	7.1	2.96	
	정규직취업	1,679	9.2	18.3	39.1	27.3	6.1	3.03	
	자영업,창업 등	60	10.0	23.3	31.7	30.0	5.0	2.9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99	7.0	14.0	40.7	29.9	8.3	3.19	8.409***
	청년 독립가구	800	10.9	18.6	40.9	25.0	4.6	2.94	
	부모 동거가구	1,370	9.8	20.9	39.1	23.5	6.6	2.96	
	기타	15	33.3	6.7	33.3	13.3	13.3	2.67	
지역별	수도권	1,585	9.4	18.9	40.6	24.5	6.6	3.00	1.116
	충청권	278	7.2	20.1	37.8	25.9	9.0	3.09	
	전라권	225	9.8	18.2	38.2	26.7	7.1	3.03	
	경상권	608	11.5	17.8	40.0	26.2	4.6	2.95	
	강원/제주권	88	8.0	19.3	38.6	26.1	8.0	3.07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228	27.2	24.1	32.9	12.3	3.5	2.41	-8.445***
	비빈곤층	2,556	8.1	18.2	40.6	26.4	6.7	3.06	
복지 인식	성장 중요	925	10.6	17.4	36.6	26.8	8.5	3.05	2.034
	비슷	1,469	8.6	18.4	43.5	24.6	4.9	2.99	
	분배 중요	390	11.3	22.8	34.4	24.1	7.4	2.94	

*p<.05, **p<.01, ***p<.001

(7) 이직 의향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n=2,784)의 ‘이직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예’ 응답이 65.1%로 ‘아니오’ 응답 34.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직 의향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70.5%, 만25~29세: 70.0%, 만30~34세: 57.1%) 이직 의향 있음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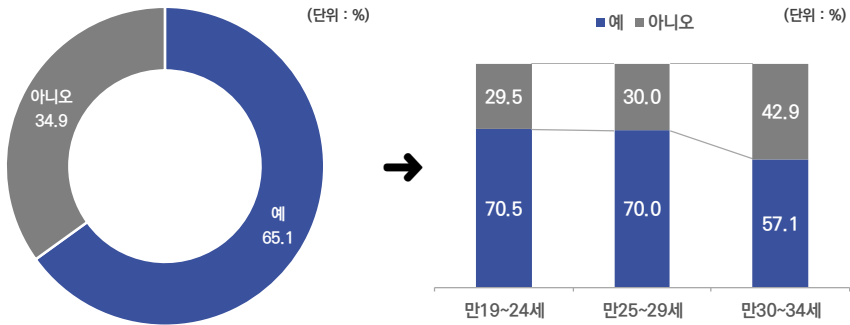


그림 IV-67. 이직 의향

표 IV-132. 이직 의향(연령별)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2,784	65.1	34.9	-
만19~24세	617	70.5	29.5	49.723***
만25~29세	1,080	70.0	30.0	
만30~34세	1,087	57.1	42.9	

*p<.05, **p<.01, ***p<.001

이직 의향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가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66.9%), 비정규직 취업(75.4%), 부모 동거가구(67.2%), 빈곤층(76.3%)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33. 이직 의향 (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2,784	65.1	34.9	-
성별	남자	1,329	63.3	36.7	3.648
	여자	1,455	66.7	33.3	
혼인 상태	미혼	2,130	66.9	33.1	13.935***
	기혼	643	59.1	40.9	
	사별 및 이혼	11	54.5	45.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83	63.4	36.6	0.712
	대학교	2,255	65.5	34.5	
	대학원 이상	146	63.7	36.3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78.828***
	비정규직취업	1,045	75.4	24.6	
	정규직취업	1,679	59.0	41.0	
	자영업,창업 등	60	55.0	45.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99	59.1	40.9	12.695**
	청년 독립가구	800	65.9	34.1	
	부모 동거가구	1,370	67.2	32.8	
	기타	15	73.3	26.7	
지역별	수도권	1,585	66.4	33.6	4.248
	충청권	278	60.8	39.2	
	전라권	225	62.2	37.8	
	경상권	608	64.8	35.2	
	강원/제주권	88	64.8	35.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228	76.3	23.7	13.781***
	비빈곤층	2,556	64.1	35.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925	65.6	34.4	1.136
	비슷	1,469	64.3	35.7	
	분배 중요	390	66.9	33.1	

*p<.05, **p<.01, ***p<.001

(7-1) 이직 희망의 주된 이유

이직을 희망하는 응답자(n=1,812)의 ‘이직 희망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응답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더 나은 근무환경’(16.3%),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 희망의 주된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만 19~24세: 45.7%, 만25~29세: 54.2%, 만30~34세: 59.3%) ‘보수/복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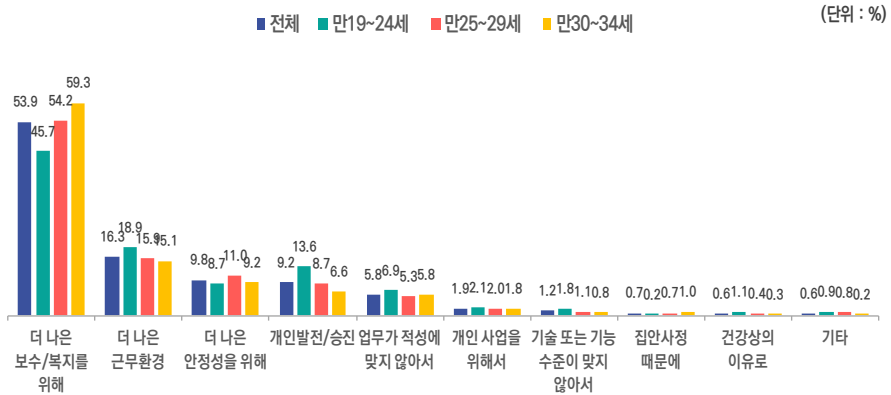


그림 IV-68. 이직 희망의 주된 이유

표 IV-134. 이직 희망의 주된 이유(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보수/ 복지	근무 환경	안정 성	개인 발전/ 승진	업무 부적 합	개인 사업	기술 격차	집안 사정	건강 상의 이유	기타	χ^2
전체	1,812	53.9	16.3	9.8	9.2	5.8	1.9	1.2	0.7	0.6	0.6	-
만19~24세	435	45.7	18.9	8.7	13.6	6.9	2.1	1.8	0.2	1.1	0.9	39.454**
만25~29세	756	54.2	15.9	11.0	8.7	5.3	2.0	1.1	0.7	0.4	0.8	
만30~34세	621	59.3	15.1	9.2	6.6	5.8	1.8	0.8	1.0	0.3	0.2	

*p<.05, **p<.01, ***p<.001

이직 희망의 주된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가구유형,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복지’ 응답은 미혼(55.6%), 대학교 학력(56.0%), 정규직 취업(59.3%), 청년 독립가구(57.7%), 전라권(60.0%), 빈곤층(62.6%)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35. 이직 희망의 주된 이유(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보수 / 복지	근무 환경	안정 성	개인 발전 / 승진	업무 부적 합	개인 사업	기술 격차	집안 사정	건강 상의 이유	기타	χ^2
전체		1,812	53.9	16.3	9.8	9.2	5.8	1.9	1.2	0.7	0.6	0.6	-
성별	남자	841	53.0	15.7	11.1	9.3	5.6	1.9	1.7	0.8	0.4	0.6	8.507
	여자	971	54.7	16.9	8.8	9.1	6.1	2.0	0.7	0.5	0.7	0.6	
혼인 상태	미혼	1,426	55.6	15.4	9.5	9.3	5.7	1.9	0.9	0.4	0.5	0.8	62.831***
	기혼	380	47.9	19.7	11.1	8.9	6.3	2.1	1.8	1.6	0.5	0.0	
	사별 및 이혼	6	33.3	16.7	0.0	0.0	16.7	0.0	16.7	0.0	16.7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43	42.4	19.8	9.5	11.9	5.3	4.9	1.2	1.6	1.2	2.1	49.887***
	대학교	1,476	56.0	16.0	9.4	8.7	6.0	1.4	1.1	0.5	0.4	0.4	
	대학원 이상	93	51.6	12.9	17.2	8.6	4.3	2.2	2.2	0.0	1.1	0.0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	-	-	-	-	-	-	-	54.292***
	비정규직취업	788	47.5	16.4	12.8	10.3	6.9	2.3	1.3	0.6	0.9	1.1	
	정규직취업	991	59.3	16.5	7.0	8.3	4.8	1.7	1.1	0.7	0.3	0.2	
	자영업,창업 등	33	45.5	9.1	24.2	9.1	12.1	0.0	0.0	0.0	0.0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354	49.7	19.2	10.5	9.3	5.9	1.7	1.7	1.7	0.3	0.0	43.739*
	청년 독립가구	527	57.7	14.2	8.5	9.1	6.3	1.5	1.3	0.2	0.6	0.6	
	부모 동거가구	920	53.6	16.3	10.4	8.9	5.7	2.3	0.9	0.5	0.5	0.9	
	기타	11	36.4	27.3	0.0	27.3	0.0	0.0	0.0	0.0	9.1	0.0	

구분		사례수 [명]	보수 / 복지	근무 환경	안정 성	개인 발전 / 승진	업무 부적 합	개인 사업	기술 격차	집안 사정	건강 상의 이유	기타	χ^2
지역별	수도권	1,052	54.0	17.7	8.5	10.5	5.1	1.9	1.2	0.5	0.5	0.2	55.184*
	충청권	169	50.9	17.8	14.8	5.9	6.5	2.4	0.0	0.0	0.6	1.2	
	전라권	140	60.0	14.3	10.0	5.0	5.7	1.4	2.9	0.7	0.0	0.0	
	경상권	394	53.0	14.5	10.4	8.1	7.1	1.8	1.0	1.5	1.0	1.5	
	강원/제주권	57	52.6	5.3	15.8	12.3	8.8	3.5	0.0	0.0	0.0	1.8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74	62.6	14.9	6.3	2.3	8.0	2.9	0.6	0.6	0.0	1.7	23.322**
	비빈곤층	1,638	53.0	16.5	10.2	9.9	5.6	1.8	1.2	0.7	0.6	0.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607	51.7	17.5	9.4	11.2	6.3	1.8	1.2	0.3	0.5	0.2	17.581
	비슷	944	55.1	14.8	10.0	8.4	6.0	2.0	1.4	0.8	0.5	1.0	
	분배 중요	261	54.8	19.2	10.3	7.3	4.2	1.9	0.4	0.8	0.8	0.4	

*p<.05, **p<.01, ***p<.001

(8) 취업을 원하는 기관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현재 일을 하지만 이직 의향이 있는 응답자(n=3,142)의 ‘취업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응답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대기업’(20.1%), ‘일반 중소기업’(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만19~24세: 37.8%, 만25~29세: 35.3%, 만30~34세: 35.9%) ‘공공기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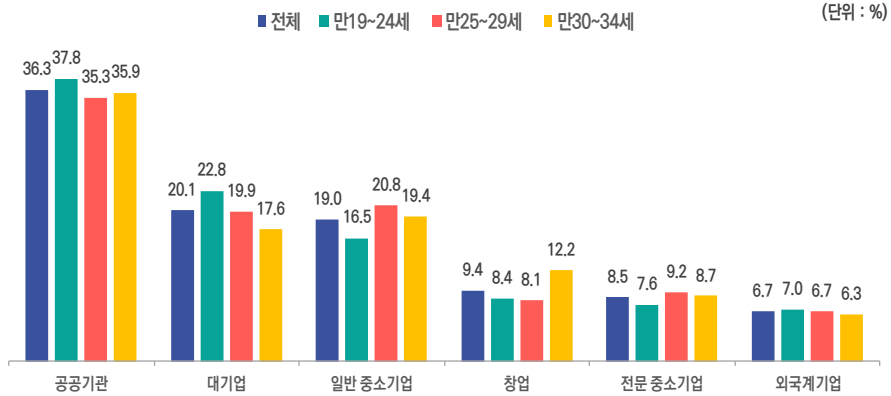


그림 IV-69. 취업을 원하는 기관

표 IV-136. 취업을 원하는 기관(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공공 기관	대기업	일반 중소기업	창업	전문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	χ^2
전체	3,142	36.3	20.1	19.0	9.4	8.5	6.7	-
만19~24세	1,019	37.8	22.8	16.5	8.4	7.6	7.0	26.263**
만25~29세	1,179	35.3	19.9	20.8	8.1	9.2	6.7	
만30~34세	944	35.9	17.6	19.4	12.2	8.7	6.3	

*p<.05, **p<.01, ***p<.001

취업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최종 학력, 취업상태, 지역,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가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응답은 미혼(37.6%), 대학교 학력(38.1%), 비정규직 취업(41.1%), 부모 동거가구(38.7%), 전라권(45.5%), 복지인식 분배중요(41.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 응답은 남성(24.1%), 대학원 이상 학력(27.0%), 정규직 취업(25.0%), 수도권(24.2%), 복지인식 성장중요(24.4%)에서,

‘일반중소기업’ 응답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25.5%), 미취업/구직중(23.5%), 빈곤층(24.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V-137. 취업을 원하는 기관(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공공 기관	대기업	일반 중소 기업	창업	전문 중소 기업	외국계 기업	χ^2
전체		3,142	36.3	20.1	19.0	9.4	8.5	6.7	-
성별	남자	1,457	37.8	24.1	16.1	8.6	7.3	6.0	42.386***
	여자	1,685	35.0	16.7	21.4	10.1	9.6	7.2	
혼인 상태	미혼	2,568	37.6	20.1	18.4	9.2	8.8	5.9	30.533***
	기혼	561	30.8	20.0	21.4	10.5	7.3	10.0	
	사별 및 이혼	13	7.7	38.5	30.8	7.7	0.0	15.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589	28.5	18.3	25.5	13.8	8.5	5.4	66.703***
	대학교	2,416	38.1	20.2	17.9	8.4	8.8	6.5	
	대학원 이상	137	37.2	27.0	9.5	8.0	4.4	13.9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6.0	16.5	23.5	10.2	8.0	5.7	104.293***
	비정규직취업	788	41.1	20.2	14.0	8.0	8.0	8.8	
	정규직취업	991	33.1	25.0	17.2	8.5	9.9	6.4	
	자영업, 창업 등	33	27.3	18.2	9.1	39.4	3.0	3.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13	29.8	20.9	21.8	10.7	7.6	9.2	36.956**
	청년 독립가구	734	35.3	23.2	18.1	10.1	6.9	6.4	
	부모 동거가구	1,866	38.7	18.7	18.5	8.6	9.3	6.1	
	기타	29	20.7	24.1	17.2	20.7	13.8	3.4	
지역별	수도권	1,743	32.2	24.2	17.8	9.2	8.5	8.0	77.335***
	충청권	301	41.5	12.3	20.3	10.0	8.3	7.6	
	전라권	279	45.5	14.7	21.9	8.6	6.8	2.5	
	경상권	709	39.2	16.4	19.9	10.2	9.3	5.1	
	강원/제주권	110	43.6	15.5	20.9	9.1	8.2	2.7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27	35.2	17.4	24.8	12.2	8.0	2.4	20.847***
	비빈곤층	2,815	36.4	20.5	18.3	9.1	8.6	7.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947	34.0	24.4	16.4	9.7	7.3	8.2	41.279***
	비슷	1,727	36.1	18.7	21.1	9.8	8.4	5.8	
	분배 중요	468	41.5	16.9	16.5	7.3	11.5	6.4	

*p<.05, **p<.01, ***p<.001

(8-1) 해당 기관의 취업 가능성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현재 일을 하지만 이직 의향이 있는 응답자(n=3,142)의 ‘해당 기관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능’ 응답이 39.3%(매우 가능하다: 7.5% + 가능하다: 31.8%)로 ‘불가능’ 응답 15.8%(매우 불가능하다: 3.7% + 불가능하다: 12.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해당 기관 취업 가능성은 평균 3.27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19~24세: 45.8%, 만25~29세: 40.8%, 만30~34세: 30.5%) 가능하다 응답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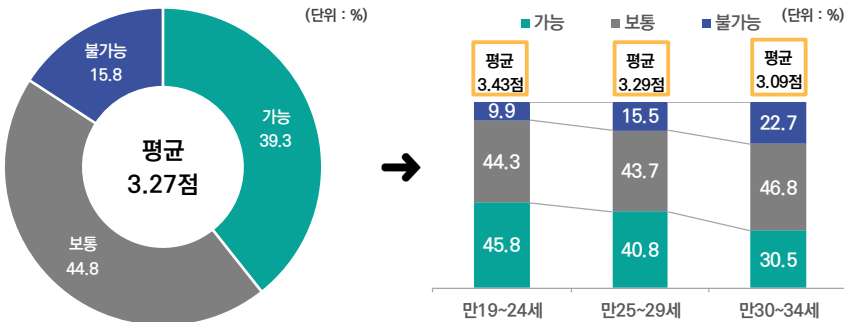


그림 IV-70. 해당 기관의 취업 가능성

표 IV-138. 해당 기관의 취업 가능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가능 하다	불가능 하다	보통이다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5점 평균	F
전체	3,142	3.7	12.2	44.8	31.8	7.5	3.27	-
만19~24세	1,019	2.3	7.7	44.3	36.6	9.2	3.43	36.588***
만25~29세	1,179	3.6	12.0	43.7	33.6	7.2	3.29	
만30~34세	944	5.3	17.4	46.8	24.5	6.0	3.09	

*p<.05, **p<.01, ***p<.001

해당 기관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성별, 취업상태, 가구유형,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3.23점), 기혼(3.23점), 고등학교 이하 학력(3.09점), 미취업/구직중(3.22점), 청년 부부가구(3.23점), 빈곤층(2.78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23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취업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표 IV-139. 해당 기관의 취업 가능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가능 하다	불가능 하다	보통 이다	가능 하다	매우 가능 하다	5점 평균	F/t
전체	3,142	3.7	12.2	44.8	31.8	7.5	3.27	-
성별	남자	1,457	4.9	13.2	43.4	31.2	7.3	-2.635**
	여자	1,685	2.6	11.3	46.1	32.4	7.7	
혼인 상태	미혼	2,568	3.9	11.4	45.1	31.5	8.1	3.747*
	기혼	561	2.3	15.7	43.9	33.3	4.8	
	사별 및 이혼	13	15.4	23.1	38.5	23.1	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가능 하다	불가능 하다	보통 이다	가능 하다	매우 가능 하다	5점 평균	F/t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589	5.4	15.1	50.1	23.4	5.9	3.09	16.684***
	대학교	2,416	3.1	11.6	44.2	33.5	7.5	3.31	
	대학원 이상	137	5.1	9.5	32.8	38.7	13.9	3.47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5.5	10.5	47.9	28.9	7.2	3.22	3.938**
	비정규직취업	788	2.4	13.1	43.9	34.5	6.1	3.29	
	정규직취업	991	2.1	14.1	41.5	33.8	8.5	3.32	
	자영업,창업 등	33	6.1	3.0	42.4	24.2	24.2	3.5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513	2.3	16.2	42.7	33.9	4.9	3.23	4.095**
	청년 독립가구	734	3.4	11.2	45.9	29.7	9.8	3.31	
	부모 동거가구	1,866	3.9	11.5	44.8	32.4	7.4	3.28	
	기타	29	17.2	10.3	55.2	13.8	3.4	2.76	
지역별	수도권	1,743	3.8	11.8	43.4	33.0	8.0	3.30	1.112
	충청권	301	3.7	14.0	46.8	31.6	4.0	3.18	
	전라권	279	2.5	12.5	46.2	31.9	6.8	3.28	
	경상권	709	3.9	12.1	46.7	29.1	8.2	3.25	
	강원/제주권	110	2.7	12.7	45.5	31.8	7.3	3.28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27	15.0	21.4	39.4	18.7	5.5	2.78	-8.811***
	비빈곤층	2,815	2.3	11.1	45.4	33.4	7.7	3.3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947	3.5	11.9	37.6	37.6	9.4	3.37	8.632***
	비슷	1,727	3.4	11.3	50.7	27.9	6.6	3.23	
	분배 중요	468	4.9	15.8	37.6	34.6	7.1	3.23	

*p<.05, **p<.01, ***p<.001

(9)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악화’ 응답이 43.6%(매우 악화될 것이다: 15.6% + 약간 악화될 것이다: 28.0%)로 ‘개선’ 응답 18.1%(매우 개선될 것이다: 1.5% + 개선될 것이다: 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 점수는 평균 2.60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19~24세: 42.0%, 만25~29세: 43.0%, 만30~34세: 45.4%) 악화된다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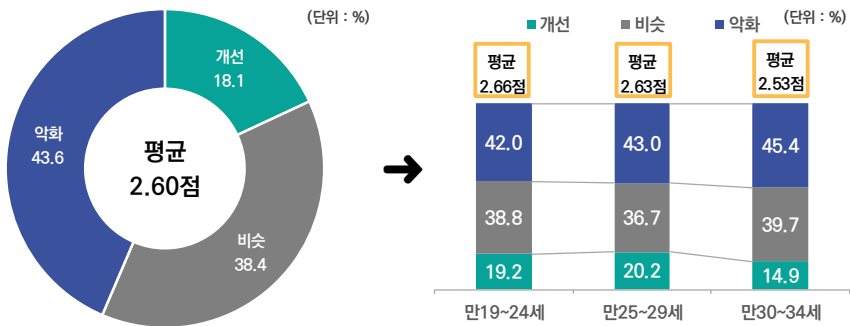


그림 IV-71.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

표 IV-140.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악화될 것이다	약간 악화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매우 개선될 것이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15.6	28.0	38.4	16.6	1.5	2.60	-
만19~24세	1,201	12.6	29.5	38.8	17.5	1.7	2.66	6.657**
만25~29세	1,503	16.2	26.9	36.7	18.3	1.9	2.63	
만30~34세	1,410	17.5	27.9	39.7	14.0	0.9	2.53	

*p<.05, **p<.01, ***p<.001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2.56점), 부모 동거가구(2.55점), 빈곤층(2.12점), 복지인식 분배 중요(2.49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개선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1.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악화될 것이다	약간 악화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매우 개선될 것이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15.6	28.0	38.4	16.6	1.5	2.60	-
성별	남자	1,945	18.0	25.8	36.7	17.8	1.8	2.60	-0.498
	여자	2,169	13.4	30.0	39.9	15.5	1.2	2.61	
혼인 상태	미혼	3,272	16.7	29.0	37.7	15.1	1.5	2.56	18.353***
	기혼	824	11.3	24.4	40.5	22.3	1.5	2.78	
	사별 및 이혼	18	16.7	5.6	50.0	22.2	5.6	2.9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5.2	27.6	43.1	12.8	1.4	2.57	2.640
	대학교	3,195	15.6	28.7	37.3	16.9	1.5	2.60	
	대학원 이상	190	17.4	17.9	37.9	25.3	1.6	2.7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7.4	25.9	41.2	13.9	1.5	2.56	1.329
	비정규직취업	1,045	14.2	30.5	36.0	18.2	1.1	2.62	
	정규직취업	1,679	14.9	28.2	37.3	17.9	1.7	2.63	
	자영업,창업 등	60	16.7	21.7	46.7	11.7	3.3	2.6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2.0	24.5	39.4	22.7	1.3	2.77	9.643***
	청년 독립가구	1,007	15.6	27.7	38.2	17.0	1.5	2.61	
	부모 동거가구	2,316	16.6	29.4	37.9	14.5	1.6	2.55	
	기타	33	24.2	18.2	48.5	9.1	0.0	2.42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악화될 것이다	약간 악화될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개선될 것이다	매우 개선될 것이다	5점 평균	F/t
지역별	수도권	2,276	15.2	28.5	37.7	17.0	1.6	2.61	0.380
	충청권	410	14.6	27.6	40.7	16.1	1.0	2.61	
	전라권	364	14.8	28.0	38.2	17.9	1.1	2.62	
	경상권	923	17.8	26.1	39.3	15.0	1.8	2.57	
	강원/제주권	141	12.1	33.3	35.5	18.4	0.7	2.6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7.8	24.4	27.8	8.1	1.8	2.12	-9.431***
	비빈곤층	3,733	13.3	28.3	39.4	17.4	1.5	2.6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7.4	28.3	32.3	19.8	2.2	2.61	4.817**
	비슷	2,252	13.5	26.4	44.6	14.7	0.9	2.63	
	분배 중요	597	19.8	33.2	27.6	17.1	2.3	2.49	

*p<.05, **p<.01, ***p<.001

(10)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 개선 여부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 개선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 응답이 33.4%(전혀 그렇지 않다: 9.4% + 그렇지 않다: 24.0%)로 ‘그렇다’ 응답 26.4%(매우 그렇다: 3.7% + 그렇다: 22.6%)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래의 본인 일자리 상황 개선도 점수는 평균 2.87점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 개선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29.1%, 만25~29세: 28.8%, 만30~34세: 21.4%) 긍정적인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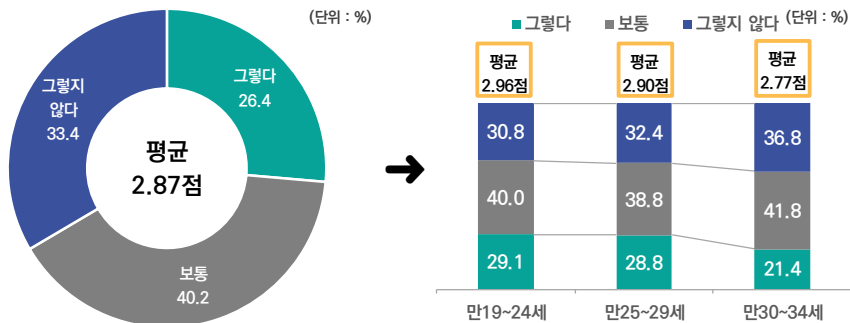


그림 IV-72.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 개선 여부

표 IV-142.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 개선 여부(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9.4	24.0	40.2	22.6	3.7	2.87	—
만19~24세	1,201	6.5	24.3	40.0	25.2	3.9	2.96	13.628***
만25~29세	1,503	10.2	22.2	38.8	24.6	4.3	2.90	
만30~34세	1,410	11.1	25.7	41.8	18.4	3.0	2.77	

*p<.05, **p<.01, ***p<.001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 개선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2.84점), 미혼(2.84점), 고등학교 이하 학력(2.76점), 미취업/구직중(2.76점), 부모 동거가구(2.82점), 빈곤층(2.30점), 복지인식 분배중요(2.77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개선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3.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 개선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9.4	24.0	40.2	22.6	3.7	2.87	-
성별	남자	1,945	10.9	20.4	40.2	24.3	4.3	2.91	2.061*
	여자	2,169	8.1	27.2	40.2	21.2	3.3	2.84	
혼인 상태	미혼	3,272	10.0	24.9	39.5	21.9	3.6	2.84	7.369***
	기혼	824	7.4	20.6	42.6	25.4	4.0	2.98	
	사별 및 이혼	18	5.6	11.1	50.0	22.2	11.1	3.2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1.0	26.9	39.6	19.9	2.6	2.76	12.587***
	대학교	3,195	9.0	24.0	40.5	22.9	3.6	2.88	
	대학원 이상	190	10.5	13.2	37.4	27.9	11.1	3.1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2.6	24.1	41.5	18.6	3.2	2.76	11.277***
	비정규직취업	1,045	8.7	25.6	36.4	25.8	3.4	2.90	
	정규직취업	1,679	7.4	23.4	41.4	23.6	4.1	2.94	
	자영업,창업 등	60	8.3	10.0	43.3	26.7	11.7	3.2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7.8	21.4	41.4	25.5	4.0	2.96	5.847***
	청년 독립가구	1,007	9.0	21.4	41.9	23.0	4.7	2.93	
	부모 동거가구	2,316	10.1	26.1	38.9	21.7	3.3	2.82	
	기타	33	15.2	18.2	51.5	12.1	3.0	2.70	
지역별	수도권	2,276	9.2	23.5	41.3	22.7	3.4	2.88	0.313
	충청권	410	8.3	25.6	40.2	21.2	4.6	2.88	
	전라권	364	6.6	28.6	36.8	24.2	3.8	2.90	
	경상권	923	12.0	22.8	38.4	22.6	4.2	2.84	
	강원/제주권	141	7.1	24.8	43.3	22.0	2.8	2.8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9.9	28.6	25.2	13.6	2.6	2.30	-10.565***
	비빈곤층	3,733	7.3	23.5	41.7	23.5	3.9	2.9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9.6	23.2	34.9	26.3	5.9	2.96	8.554***
	비슷	2,252	8.2	23.7	45.3	20.6	2.3	2.85	
	분배 중요	597	13.9	27.0	32.0	22.6	4.5	2.77	

*p<.05, **p<.01, ***p<.001

2) 창업(일자리 상황 및 전망)

(11) 현재 창업 여부

‘현재 창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니오’ 응답이 98.5%로 ‘예’ 응답 1.5%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창업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0.7%, 만25~29세: 1.5%, 만30~34세: 2.1%) ‘창업 중이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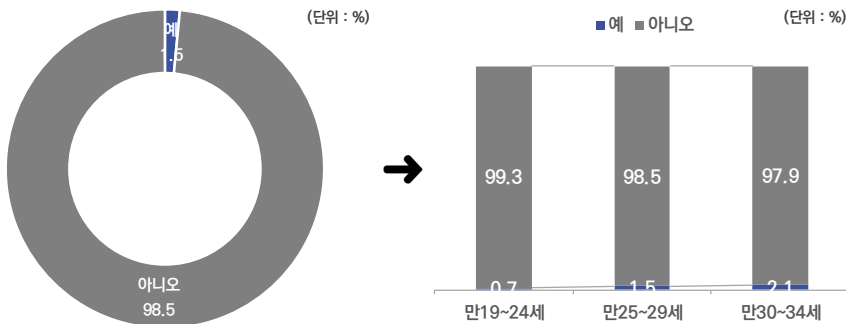


그림 IV-73. 현재 창업 여부

표 IV-144. 현재 창업 여부(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4,114	1.5	98.5	—
만19~24세	1,201	0.7	99.3	7.714*
만25~29세	1,503	1.5	98.5	
만30~34세	1,410	2.1	97.9	

*p<.05, **p<.01, ***p<.001

현재 창업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45. 현재 창업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전체		4,114	1.5	98.5	-
성별	남자	1,945	1.5	98.5	0.181
	여자	2,169	1.4	98.6	
혼인 상태	미혼	3,272	1.3	98.7	3.148
	기혼	824	1.8	98.2	
	사별 및 이혼	18	5.6	94.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1	98.9	1.257
	대학교	3,195	1.5	98.5	
	대학원 이상	190	2.1	97.9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0.0	100.0	-
	비정규직취업	1,045	0.0	100.0	
	정규직취업	1,679	0.0	100.0	
	자영업,창업 등	60	100.0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6	98.4	2.094
	청년 독립가구	1,007	1.8	98.2	
	부모 동거가구	2,316	1.3	98.7	
	기타	33	3.0	97.0	
지역별	수도권	2,276	1.5	98.5	2.421
	충청권	410	0.7	99.3	
	전라권	364	1.1	98.9	
	경상권	923	1.7	98.3	
	강원/제주권	141	1.4	98.6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8	98.2	0.419
	비빈곤층	3,733	1.4	98.6	

구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χ^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7	98.3	1.570
	비슷	2,252	1.4	98.6	
	분배 중요	597	1.0	99.0	

*p<.05, **p<.01, ***p<.001

(12) 창업 유형

현재 창업 중인 응답자(n=60)의 ‘창업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스스로 창업하였다’ 응답이 66.7%로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았다’ 응답 3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업 유형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44.4%, 만25~29세: 59.1%, 만30~34세: 79.3%) ‘스스로 창업하였다’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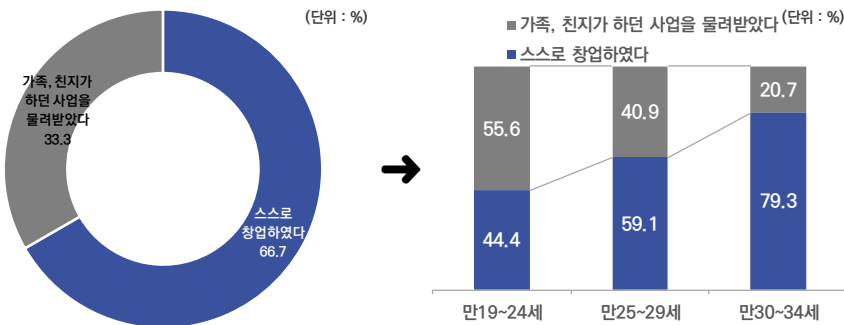


그림 IV-74. 창업 유형

표 IV-146. 창업 유형(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스스로 창업하였다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았다	χ^2
전체	60	66.7	33.3	-
만19~24세	9	44.4	55.6	4.654
만25~29세	22	59.1	40.9	
만30~34세	29	79.3	20.7	

*p<.05, **p<.01, ***p<.001

창업 유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교 학력(75.0%)은 ‘스스로 창업하였다’ 응답이, 고등학교 이하(62.5%) 및 대학원 이상(75.0%)은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았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47. 창업 유형(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스스로 창업하였다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았다	χ^2
전체	60	66.7	33.3	-
성별	남자	30	70.0	0.300
	여자	30	63.3	
혼인 상태	미혼	44	68.2	2.045
	기혼	15	66.7	
	사별 및 이혼	1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8	37.5	7.688*
	대학교	48	75.0	
	대학원 이상	4	25.0	

구분		사례수 [명]	스스로 창업하였다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았다	χ^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
	비정규직취업	-	-	-	
	정규직취업	-	-	-	
	자영업, 창업 등	60	66.7	33.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2	66.7	33.3	3.276
	청년 독립가구	18	77.8	22.2	
	부모 동거가구	29	62.1	37.9	
	기타	1	0.0	100.0	
지역별	수도권	35	71.4	28.6	4.607
	충청권	3	66.7	33.3	
	전라권	4	75.0	25.0	
	경상권	16	62.5	37.5	
	강원/제주권	2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7	71.4	28.6	0.081
	비빈곤층	53	66.0	34.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2	63.6	36.4	0.857
	비슷	32	65.6	34.4	
	분배 중요	6	83.3	16.7	

*p<.05, **p<.01, ***p<.001

(13) 창업의 주된 동기

현재 창업 중인 응답자(n=60)의 ‘창업의 주된 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응답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18.3%),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의 주된 동기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22.2%) 및 만 25~29세(18.2%)는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응답이, 만30~34세(24.1%)는 ‘누군

가의 간섭이 싫어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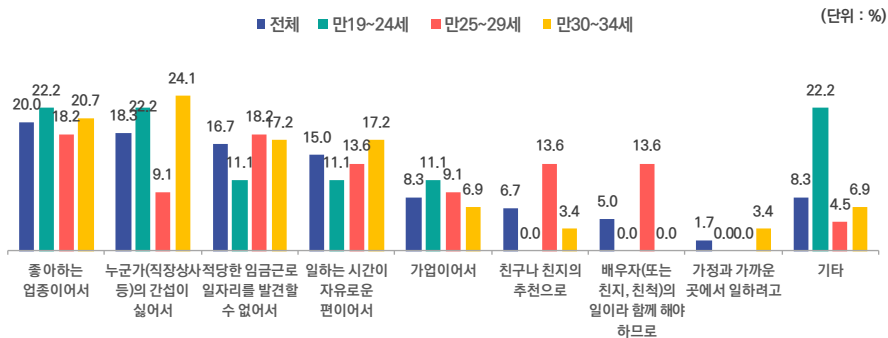


그림 IV-75. 창업의 주된 동기

표 IV-148. 창업의 주된 동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좋아 하는 업종	간섭이 싫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자유 로운 근무 시간	가업	친구나 친지의 추천	지인의 일	가정 과의 근접성	기타	χ^2
전체	60	20.0	18.3	16.7	15.0	8.3	6.7	5.0	1.7	8.3	-
만19~24세	9	22.2	22.2	11.1	11.1	11.1	0.0	0.0	0.0	22.2	13.724
만25~29세	22	18.2	9.1	18.2	13.6	9.1	13.6	13.6	0.0	4.5	
만30~34세	29	20.7	24.1	17.2	17.2	6.9	3.4	0.0	3.4	6.9	

*p<.05, **p<.01, ***p<.001

창업의 주된 동기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27.3%)은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응답이, 기혼(40.0%)는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49. 창업의 주된 동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좋아 하는 업종	간섭 이 싫어 서	일자 리가 없어 서	자유 로운 근무 시간	가업	친구 나 친지 의 추천	지인 의 일	가정 과의 근접 성	기타	χ^2
전체		60	20.0	18.3	16.7	15.0	8.3	6.7	5.0	1.7	8.3	-
성별	남자	30	20.0	26.7	16.7	6.7	0.0	10.0	6.7	0.0	13.3	14.184
	여자	30	20.0	10.0	16.7	23.3	16.7	3.3	3.3	3.3	3.3	
혼인 상태	미혼	44	27.3	11.4	18.2	15.9	6.8	9.1	2.3	0.0	9.1	27.744*
	기혼	15	0.0	40.0	13.3	13.3	6.7	0.0	13.3	6.7	6.7	
	사별 및 이혼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8	12.5	25.0	12.5	37.5	0.0	12.5	0.0	0.0	0.0	21.072
	대학교	48	22.9	16.7	18.8	12.5	6.3	6.3	4.2	2.1	10.4	
	대학원 이상	4	0.0	25.0	0.0	0.0	50.0	0.0	25.0	0.0	0.0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	-	-	-	-	-	-	-
	비정규직취업	-	-	-	-	-	-	-	-	-	-	
	정규직취업	-	-	-	-	-	-	-	-	-	-	
	자영업,창업 등	60	20.0	18.3	16.7	15.0	8.3	6.7	5.0	1.7	8.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2	0.0	41.7	8.3	16.7	8.3	0.0	8.3	8.3	8.3	32.308
	청년 독립가구	18	38.9	11.1	22.2	11.1	11.1	0.0	0.0	0.0	5.6	
	부모 동거가구	29	17.2	13.8	17.2	17.2	6.9	13.8	6.9	0.0	6.9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35	22.9	20.0	14.3	11.4	8.6	8.6	2.9	2.9	8.6	25.062
	충청권	3	33.3	0.0	33.3	33.3	0.0	0.0	0.0	0.0	0.0	
	전라권	4	25.0	0.0	25.0	25.0	25.0	0.0	0.0	0.0	0.0	
	경상권	16	12.5	25.0	18.8	18.8	0.0	0.0	12.5	0.0	12.5	
	강원/제주권	2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7	28.6	0.0	28.6	28.6	0.0	0.0	0.0	0.0	14.3	5.445
	비빈곤층	53	18.9	20.8	15.1	13.2	9.4	7.5	5.7	1.9	7.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2	22.7	18.2	13.6	13.6	13.6	0.0	4.5	0.0	13.6	25.719
	비슷	32	21.9	21.9	18.8	15.6	6.3	6.3	0.0	3.1	6.3	
	분배 중요	6	0.0	0.0	16.7	16.7	0.0	33.3	33.3	0.0	0.0	

*p<.05, **p<.01, ***p<.001

(14) 창업에 대한 만족도

현재 창업 중인 응답자(n=60)의 ‘창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40.0%(매우 만족한다: 10.0% + 만족한다: 30.0%)로 ‘불만족’ 응답 18.3%(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0% + 만족하지 않는다: 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평균 3.27점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족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만19~24세: 77.8%, 만25~29세: 36.4%, 만30~34세: 31.0%)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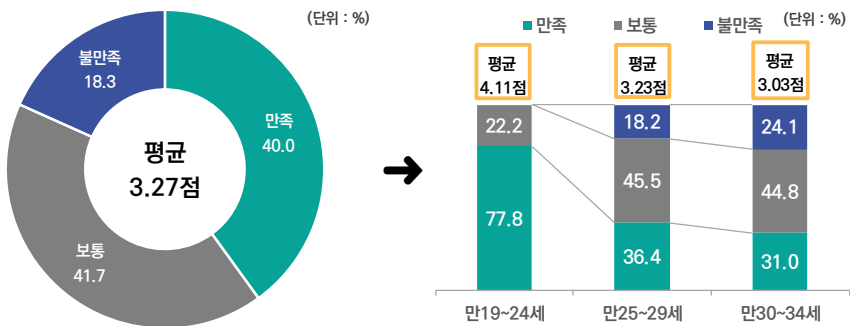


그림 IV-76. 창업에 대한 만족도

표 IV-150. 창업에 대한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60	5.0	13.3	41.7	30.0	10.0	3.27	-
만19~24세	9	0.0	0.0	22.2	44.4	33.3	4.11	4.595*
만25~29세	22	4.5	13.6	45.5	27.3	9.1	3.23	
만30~34세	29	6.9	17.2	44.8	27.6	3.4	3.03	

*p<.05, **p<.01, ***p<.001

창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복지인식 성장중요(3.73점)는 복지인식 분배중요(2.83점)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51. 창업에 대한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전체		60	5.0	13.3	41.7	30.0	10.0	3.27	-
성별	남자	30	3.3	16.7	40.0	26.7	13.3	3.30	0.259
	여자	30	6.7	10.0	43.3	33.3	6.7	3.23	
혼인 상태	미혼	44	4.5	18.2	40.9	25.0	11.4	3.20	0.489
	기혼	15	6.7	0.0	46.7	40.0	6.7	3.40	
	사별 및 이혼	1	0.0	0.0	0.0	100.0	0.0	4.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8	0.0	12.5	75.0	0.0	12.5	3.13	0.188
	대학교	48	6.3	14.6	35.4	33.3	10.4	3.27	
	대학원 이상	4	0.0	0.0	50.0	50.0	0.0	3.50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	-	-	-	-
	비정규직취업	-	-	-	-	-	-	-	
	정규직취업	-	-	-	-	-	-	-	
	자영업, 창업 등	60	5.0	13.3	41.7	30.0	10.0	3.2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2	8.3	0.0	33.3	50.0	8.3	3.50	0.819
	청년 독립가구	18	11.1	5.6	27.8	38.9	16.7	3.44	
	부모 동거가구	29	0.0	24.1	51.7	17.2	6.9	3.07	
	기타	1	0.0	0.0	100.0	0.0	0.0	3.00	
지역별	수도권	35	2.9	8.6	48.6	31.4	8.6	3.34	0.391
	충청권	3	0.0	33.3	33.3	33.3	0.0	3.00	
	전라권	4	25.0	25.0	0.0	50.0	0.0	2.75	
	경상권	16	6.3	18.8	37.5	18.8	18.8	3.25	
	강원/제주권	2	0.0	0.0	50.0	50.0	0.0	3.50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7	14.3	28.6	28.6	14.3	14.3	2.86	-1.169
	비빈곤층	53	3.8	11.3	43.4	32.1	9.4	3.3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2	0.0	9.1	27.3	45.5	18.2	3.73	4.299*
	비슷	32	9.4	15.6	43.8	25.0	6.3	3.03	
	분배 중요	6	0.0	16.7	83.3	0.0	0.0	2.83	

*p<.05, **p<.01, ***p<.001

(15) 창업 유지 의향 여부

현재 창업 중인 응답자(n=60)의 ‘창업 유지 의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응답이 46.7%(매우 그렇다: 11.7% + 그렇다: 35.0%)로 ‘그렇지 않다’ 응답 15.0%(전혀 그렇지 않다: 1.7% + 그렇지 않다: 1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업 유지 의향 점수는 평균 3.42점으로 나타났다.

창업 유지 의향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그렇다’ 응답은 만 19~24세 55.6%, 만30~34세 48.3%, 만25~29세는 40.9%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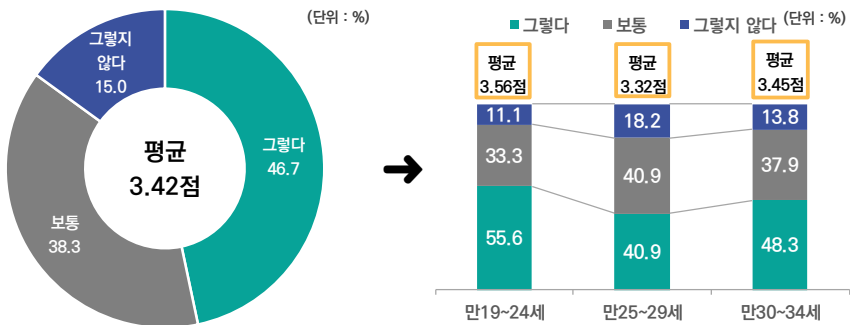


그림 IV-77. 창업 유지 의향 여부

표 IV-152. 창업 유지 의향 여부 (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
전체	60	1.7	13.3	38.3	35.0	11.7	3.42	-
만19~24세	9	0.0	11.1	33.3	44.4	11.1	3.56	0.236
만25~29세	22	0.0	18.2	40.9	31.8	9.1	3.32	
만30~34세	29	3.4	10.3	37.9	34.5	13.8	3.45	

*p<.05, **p<.01, ***p<.001

창업 유지 의향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복지인식,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3.70점), 복지인식 성장중요(3.86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창업 유지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53. 창업 유지 의향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전체	60	1.7	13.3	38.3	35.0	11.7	3.42	-
성별	남자	30	0.0	6.7	33.3	43.3	16.7	2.471*
	여자	30	3.3	20.0	43.3	26.7	6.7	
혼인 상태	미혼	44	0.0	15.9	40.9	31.8	11.4	1.514
	기혼	15	6.7	6.7	33.3	46.7	6.7	
	사별 및 이혼	1	0.0	0.0	0.0	0.0	10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8	0.0	25.0	50.0	12.5	12.5	1.199
	대학교	48	2.1	12.5	37.5	37.5	10.4	
	대학원 이상	4	0.0	0.0	25.0	50.0	25.0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	-	-	-	-
	비정규직취업	-	-	-	-	-	-	-	
	정규직취업	-	-	-	-	-	-	-	
	자영업,창업 등	60	1.7	13.3	38.3	35.0	11.7	3.4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2	8.3	8.3	25.0	50.0	8.3	3.42	0.126
	청년 독립가구	18	0.0	22.2	22.2	38.9	16.7	3.50	
	부모 동거가구	29	0.0	10.3	51.7	27.6	10.3	3.38	
	기타	1	0.0	0.0	100.0	0.0	0.0	3.00	
지역별	수도권	35	0.0	11.4	37.1	42.9	8.6	3.49	0.617
	충청권	3	0.0	0.0	33.3	66.7	0.0	3.67	
	전라권	4	0.0	25.0	50.0	25.0	0.0	3.00	
	경상권	16	6.3	18.8	37.5	18.8	18.8	3.25	
	강원/제주권	2	0.0	0.0	50.0	0.0	50.0	4.0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7	0.0	42.9	28.6	14.3	14.3	3.00	-1.273
	비빈곤층	53	1.9	9.4	39.6	37.7	11.3	3.4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2	0.0	13.6	9.1	54.5	22.7	3.86	5.886**
	비슷	32	3.1	9.4	53.1	28.1	6.3	3.25	
	분배 중요	6	0.0	33.3	66.7	0.0	0.0	2.67	

*p<.05, **p<.01, ***p<.001

(15-1)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이유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n=9)의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및 ‘성공하기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직장이나 학교생활과 병행하기가 어려워서’(22.2%)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능력/경험이 부족해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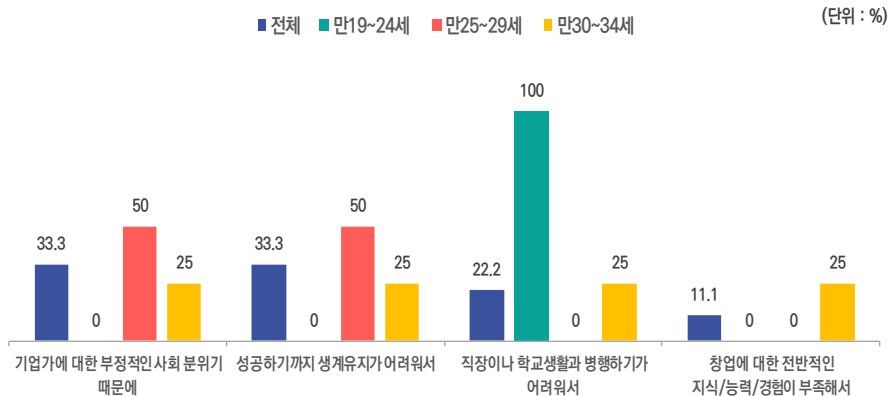


그림 IV-78.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이유

표 IV-154.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이유(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성공하기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직장이나 학교 생활과 병행하 기가 어려워서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능력/경험이 부족해서	χ^2
전체	9	33.3	33.3	22.2	11.1	6.375
만19~24세	1	0.0	0.0	100.0	0.0	
만25~29세	4	50.0	50.0	0.0	0.0	
만30~34세	4	25.0	25.0	25.0	25.0	

*p<.05, **p<.01, ***p<.001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수를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55.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이유(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성공하기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직장이나 학교생활과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능력/경 험이 부족해서	χ^2
전체		9	33.3	33.3	22.2	11.1	-
성별	남자	2	50.0	50.0	0.0	0.0	1.286
	여자	7	28.6	28.6	28.6	14.3	
혼인 상태	미혼	7	28.6	42.9	28.6	0.0	5.143
	기혼	2	50.0	0.0	0.0	50.0	
	사별 및 이혼	-	-	-	-	-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	0.0	50.0	0.0	50.0	5.143
	대학교	7	42.9	28.6	28.6	0.0	
	대학원 이상	-	-	-	-	-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	-	-	-	-	-
	비정규직취업	-	-	-	-	-	
	정규직취업	-	-	-	-	-	
	자영업,창업 등	9	33.3	33.3	22.2	11.1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2	50.0	0.0	0.0	50.0	8.000
	청년 독립가구	4	25.0	25.0	50.0	0.0	
	부모 동거가구	3	33.3	66.7	0.0	0.0	
	기타	-	-	-	-	-	
지역별	수도권	4	25.0	50.0	25.0	0.0	5.250
	충청권	-	-	-	-	-	
	전라권	1	0.0	100.0	0.0	0.0	
	경상권	4	50.0	0.0	25.0	25.0	
	강원/제주권	-	-	-	-	-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	0.0	33.3	66.7	0.0	6.000
	비빈곤층	6	50.0	33.3	0.0	16.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3	0.0	0.0	66.7	33.3	9.000
	비슷	4	50.0	50.0	0.0	0.0	
	분배 중요	2	50.0	50.0	0.0	0.0	

*p<.05, **p<.01, ***p<.001

(16) 창업 의향 여부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응답자(n=3,863)의 ‘창업 의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 응답이 49.2%(전혀 그렇지 않다: 22.1% + 그렇지 않다: 27.1%)로 ‘그렇다’ 응답 23.2%(매우 그렇다: 3.6% + 그렇다: 1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업 의향에 대한 점수는 평균 2.56점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향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24.6%, 만25~29세: 23.5%, 만30~34세: 21.8%) 의향 있음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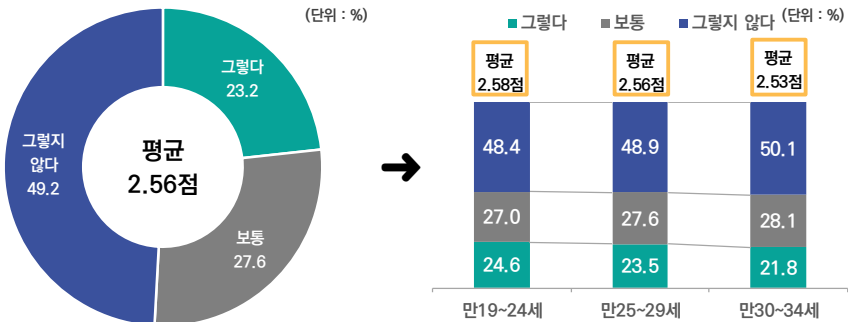


그림 IV-79. 창업 의향 여부

표 IV-156. 창업 의향 여부 (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
전체	3,863	22.1	27.1	27.6	19.7	3.6	2.56	-
만19~24세	1,155	22.2	26.2	27.0	20.8	3.8	2.58	0.490
만25~29세	1,393	22.0	26.9	27.6	20.3	3.2	2.56	
만30~34세	1,315	22.2	27.9	28.1	18.0	3.8	2.53	

*p<.05, **p<.01, ***p<.001

창업 의향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지역, 복지인식,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2.52점), 미취업/구직중(2.49점), 부모 동거가구(2.49점), 강원/제주권(2.28점), 복지인식 분배중요(2.37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창업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57. 창업 의향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전체		3,863	22.1	27.1	27.6	19.7	3.6	2.56	-
성별	남자	1,799	22.1	26.7	28.7	18.5	4.0	2.56	0.017
	여자	2,064	22.1	27.3	26.6	20.7	3.2	2.56	
혼인 상태	미혼	3,113	23.1	28.1	26.2	18.8	3.7	2.52	8.521***
	기혼	739	18.1	22.3	33.2	23.3	3.1	2.71	
	사별 및 이혼	11	0.0	45.5	36.4	18.2	0.0	2.7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692	21.4	25.6	29.0	19.1	4.9	2.61	1.514
	대학교	3,010	22.0	27.4	27.5	19.8	3.3	2.55	
	대학원 이상	161	26.7	27.3	23.6	19.9	2.5	2.44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286	24.2	25.1	31.5	16.0	3.2	2.49	5.710**
	비정규직취업	954	19.6	26.2	27.9	21.9	4.4	2.65	
	정규직취업	1,623	21.9	29.1	24.3	21.3	3.4	2.55	
	자영업,창업 등	-	-	-	-	-	-	-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685	18.4	22.9	32.0	23.5	3.2	2.70	7.886***
	청년 독립가구	939	23.2	24.1	26.1	22.7	3.9	2.60	
	부모 동거가구	2,207	22.8	29.9	26.7	17.2	3.4	2.49	
	기타	32	21.9	9.4	37.5	21.9	9.4	2.88	
지역별	수도권	2,142	20.6	25.9	28.0	21.8	3.7	2.62	6.118***
	충청권	389	22.1	31.9	25.4	17.2	3.3	2.48	
	전라권	344	24.4	29.4	30.2	14.0	2.0	2.40	
	경상권	854	23.2	27.0	27.4	18.4	4.0	2.53	
	강원/제주권	134	33.6	26.1	22.4	14.9	3.0	2.28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67	26.2	22.3	27.0	15.5	9.0	2.59	0.528
	비빈곤층	3,496	21.7	27.5	27.7	20.1	3.0	2.5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168	20.5	25.2	25.2	24.2	4.9	2.68	14.275***
	비슷	2,132	21.3	27.0	31.2	17.7	2.8	2.54	
	분배 중요	563	28.4	31.3	18.8	17.6	3.9	2.37	

*p<.05, **p<.01, ***p<.001

(16-1)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

향후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n=1,899)의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땅한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어서’ 응답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21.5%),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능력/경험이 부족해서’(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34.5%), 만19~24세(33.6%), 만30~34세(31.1%) 순으로 ‘마땅한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어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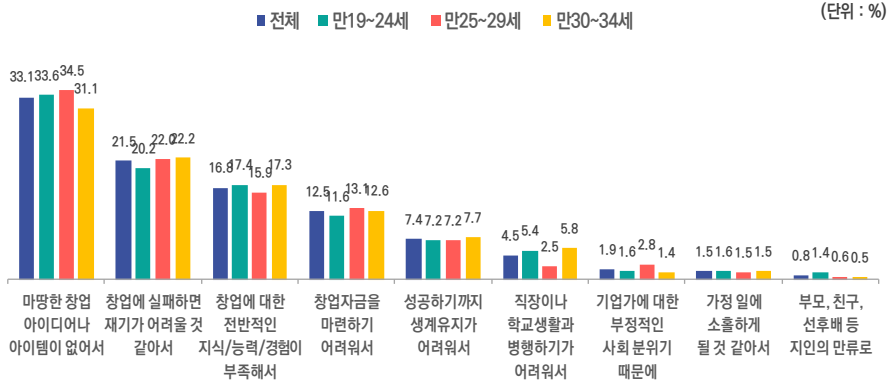


그림 IV-80.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

표 IV-158.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아이디 어가 없어서	실패 시 재 기의 어려움	지식의 부족	창업자 금 마 련의 어려움	생계유 지의 어려움	직장 또는 학교와 병행의 어려움	기업 가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	가정 일에 소홀 할까봐	지인의 만류	χ^2
전체	1,899	33.1	21.5	16.8	12.5	7.4	4.5	1.9	1.5	0.8	-
만19~24세	559	33.6	20.2	17.4	11.6	7.2	5.4	1.6	1.6	1.4	20.753
만25~29세	681	34.5	22.0	15.9	13.1	7.2	2.5	2.8	1.5	0.6	
만30~34세	659	31.1	22.2	17.3	12.6	7.7	5.8	1.4	1.5	0.5	

*p<.05, **p<.01, ***p<.001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 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땅한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어서’ 응답은 여성(36.6%), 미혼(34.4%), 미취업/구직중(34.4%), 청년 독립가구(34.7%), 비빈곤층(33.8%)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59.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아이 디어 가 없 어서	실패 시 재 기의 어려 움	자식 의 부 족	창업 자금 마련 의 어 려움	생계 유지 의 어 려움	직장 또는 학교 와 병 행의 어려 움	기업 가에 대한 부정 적 사 회 분 위기	가정 일에 소홀 예상	지인 의 만 류	χ^2
전체		1,899	33.1	21.5	16.8	12.5	7.4	4.5	1.9	1.5	0.8	-
성별	남자	878	28.9	23.7	16.2	12.9	7.1	5.6	2.6	2.2	0.9	25.643**
	여자	1,021	36.6	19.7	17.3	12.1	7.6	3.5	1.4	1.0	0.7	
혼인 상태	미혼	1,595	34.4	21.5	16.9	12.6	7.3	4.0	1.5	0.9	0.9	75.425***
	기혼	299	26.4	21.7	16.4	11.4	8.0	7.0	4.3	4.7	0.0	
	사별 및 이혼	5	0.0	20.0	20.0	40.0	0.0	0.0	0.0	0.0	2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325	29.5	23.1	14.8	15.4	6.2	3.7	3.1	2.5	1.8	26.242
	대학교	1,487	33.8	21.2	17.4	12.2	7.5	4.4	1.7	1.2	0.6	
	대학원 이상	87	33.3	21.8	13.8	6.9	10.3	8.0	2.3	3.4	0.0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634	34.4	18.0	16.4	13.6	8.8	3.6	1.6	2.5	1.1	57.046***
	비정규직취업	437	30.9	23.1	14.9	17.4	4.6	3.2	3.9	1.1	0.9	
	정규직취업	828	33.2	23.4	18.1	9.1	7.7	5.8	1.2	1.0	0.5	
	자영업, 창업 등	-	-	-	-	-	-	-	-	-	-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283	26.9	21.9	16.6	10.2	7.8	7.4	4.6	4.6	0.0	66.216***
	청년 독립가구	444	34.7	23.6	14.0	12.8	7.4	5.0	0.7	1.1	0.7	
	부모 동거가구	1,162	33.8	20.7	18.1	12.8	7.3	3.5	1.8	0.9	1.0	
	기타	10	50.0	10.0	0.0	20.0	0.0	10.0	0.0	10.0	0.0	
지역별	수도권	995	32.5	21.7	18.1	12.2	7.5	3.6	2.0	1.3	1.1	26.747
	충청권	210	36.2	23.8	11.4	11.4	5.7	6.7	1.4	2.9	0.5	
	전라권	185	33.0	20.5	20.0	10.3	7.0	5.9	1.1	1.6	0.5	
	경상권	429	33.6	20.0	14.5	15.2	7.9	4.7	2.3	1.4	0.5	
	강원/제주권	80	30.0	23.8	20.0	10.0	7.5	5.0	2.5	1.3	0.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78	25.8	23.6	14.0	22.5	8.4	1.7	2.8	1.1	0.0	26.307***
	비빈곤층	1,721	33.8	21.3	17.1	11.4	7.3	4.8	1.9	1.6	0.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534	29.4	21.7	17.0	13.7	7.1	5.4	3.0	1.9	0.7	20.243
	비중요	1,029	36.2	21.7	15.5	11.8	6.9	4.2	1.7	1.5	0.8	
	분배 중요	336	29.5	20.8	20.5	12.8	9.2	3.9	1.2	1.2	0.9	

*p<.05, **p<.01, ***p<.001

(16-2) 창업하려는 이유

향후 창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n=898)의 ‘창업하려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응답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좋아하는 업종이어서’(21.0%),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하려는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는 ‘좋아하는 업종이어서’(24.6%) 응답이, 만25~29세(21.7%)와 만30~34세(25.8%)는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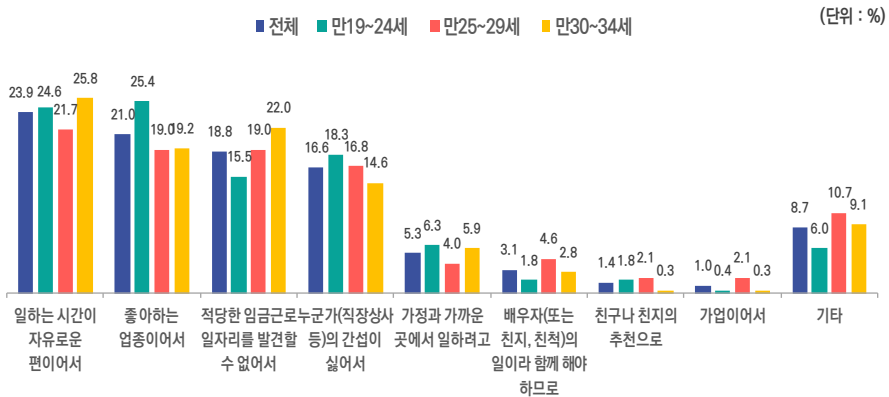


그림 IV-81. 창업하려는 이유

표 IV-160. 창업하려는 이유(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자유 로운 근무 시간	좋아 하는 업종	일자 리가 없어 서	간섭 이 싫어 서	가정 과의 근접 성	지인 의 일	친구 나 친 지의 추천	가업	기타	χ^2
전체	898	23.9	21.0	18.8	16.6	5.3	3.1	1.4	1.0	8.7	-
만19~24세	284	24.6	25.4	15.5	18.3	6.3	1.8	1.8	0.4	6.0	29.331*
만25~29세	327	21.7	19.0	19.0	16.8	4.0	4.6	2.1	2.1	10.7	
만30~34세	287	25.8	19.2	22.0	14.6	5.9	2.8	0.3	0.3	9.1	

*p<.05, **p<.01, ***p<.001

창업하려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최종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응답은 대학원 이상 학력(33.3%), 비빈곤층(2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누군가의 간섭이 싫어서’ 응답은 고등학교 이하 학력(24.7%)에서,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응답은 빈곤층(31.1%)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V-161. 창업하려는 이유(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자유 로운 근무 시간	좋아 하는 업종	일자 리가 없어 서	간섭 이 싫어 서	가정 과의 근접 성	지인 의 일	친구 나 친지 의 추천	가업	기타	χ^2
전체		898	23.9	21.0	18.8	16.6	5.3	3.1	1.4	1.0	8.7	-
성별	남자	404	25.2	20.8	18.3	13.6	6.7	3.0	1.5	1.0	9.9	8.338
	여자	494	22.9	21.3	19.2	19.0	4.3	3.2	1.4	1.0	7.7	
혼인 상태	미혼	701	23.1	22.5	19.1	16.4	4.1	2.4	1.6	1.1	9.6	25.824
	기혼	195	27.2	15.9	17.4	16.9	9.7	5.6	1.0	0.5	5.6	
	사별 및 이혼	2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구분		사례수 [명]	자유 로운 근무 시간	좋아 하는 업종	일자 리가 없어 서	간섭 이 싫어 서	가정 과의 근접 성	지인 의 일	친구 나 친지 의 추천	가업	기타	χ^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66	25.3	19.9	13.3	24.7	4.2	3.6	1.8	1.2	6.0	30.088*
	대학교	696	23.1	21.8	20.5	14.5	5.6	2.6	1.4	0.9	9.5	
	대학원 이상	36	33.3	11.1	11.1	19.4	5.6	11.1	0.0	2.8	5.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47	20.6	21.9	17.4	15.0	9.3	2.4	2.8	1.2	9.3	25.220
	비정규직취업	251	24.7	23.9	19.5	15.9	4.4	4.0	1.2	0.4	6.0	
	정규직취업	400	25.5	18.8	19.3	18.0	3.5	3.0	0.8	1.3	10.0	
	자영업,창업 등	-	-	-	-	-	-	-	-	-	-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83	27.3	15.8	18.0	16.4	9.8	5.5	1.1	0.5	5.5	35.875
	청년 독립가구	250	22.8	19.2	23.6	16.8	4.0	2.8	1.6	1.2	8.0	
	부모 동거가구	455	23.5	24.2	16.5	16.7	4.2	2.4	1.3	1.1	10.1	
	기타	10	10.0	20.0	20.0	10.0	10.0	0.0	10.0	0.0	20.0	
지역별	수도권	548	24.6	19.2	19.0	18.1	4.9	2.6	1.1	0.9	9.7	32.718
	충청권	80	18.8	30.0	13.8	12.5	6.3	5.0	1.3	0.0	12.5	
	전라권	55	29.1	18.2	25.5	16.4	1.8	3.6	1.8	0.0	3.6	
	경상권	191	23.0	25.1	17.3	13.6	6.8	3.7	2.6	2.1	5.8	
	강원/제주권	24	20.8	8.3	29.2	20.8	8.3	4.2	0.0	0.0	8.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90	13.3	17.8	31.1	20.0	1.1	1.1	1.1	2.2	12.2	21.590**
	비빈곤층	808	25.1	21.4	17.5	16.2	5.8	3.3	1.5	0.9	8.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340	26.5	21.8	15.9	15.6	7.1	2.9	0.6	0.6	9.1	18.984
	비슷	437	21.1	20.8	21.5	17.4	4.3	2.7	2.1	0.9	9.2	
	분배 중요	121	27.3	19.8	17.4	16.5	4.1	5.0	1.7	2.5	5.8	

*p<.05, **p<.01, ***p<.001

(16-3)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

향후 창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n=898)의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능’ 응답이 49.8%(매우 가능하다: 6.7% + 가능하다: 43.1%)로 ‘불가능’ 응답 7.8%(매우 불가능하다: 1.6% + 불가능하다: 6.2%)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 점수는 평균 3.47점으로 나타났다.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3.9%, 만25~29세: 51.4%, 만30~34세: 43.9%) 가능하다 응답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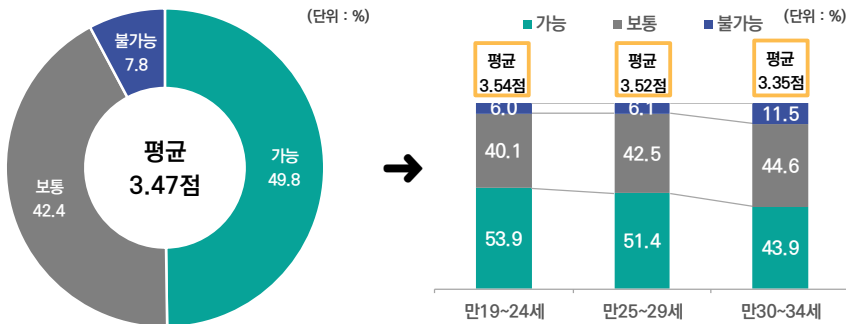


그림 IV-82.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

표 IV-162.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가능 하다	불가능 하다	보통이다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5점 평균	F
전체	898	1.6	6.2	42.4	43.1	6.7	3.47	-
만19~24세	284	0.4	5.6	40.1	47.2	6.7	3.54	5.404**
만25~29세	327	0.9	5.2	42.5	44.0	7.3	3.52	
만30~34세	287	3.5	8.0	44.6	38.0	5.9	3.35	

*p<.05, **p<.01, ***p<.001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곤층(3.26점)에서는 비빈곤층(3.50점)에 비해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3.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가능 하다	불가능 하다	보통 이다	가능 하다	매우 가능 하다	5점 평균	F/t
전체		898	1.6	6.2	42.4	43.1	6.7	3.47	-
성별	남자	404	2.0	6.7	40.6	42.1	8.7	3.49	0.572
	여자	494	1.2	5.9	43.9	43.9	5.1	3.46	
혼인 상태	미혼	701	1.7	6.8	42.9	41.4	7.1	3.45	0.806
	기혼	195	1.0	4.1	40.5	49.2	5.1	3.53	
	사별 및 이혼	2	0.0	0.0	50.0	50.0	0.0	3.5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66	2.4	7.2	44.0	39.2	7.2	3.42	2.317
	대학교	696	1.4	6.3	42.2	43.7	6.3	3.47	
	대학원 이상	36	0.0	0.0	38.9	50.0	11.1	3.7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47	2.0	4.9	48.2	39.3	5.7	3.42	1.063
	비정규직취업	251	0.4	6.4	41.0	45.4	6.8	3.52	
	정규직취업	400	2.0	7.0	39.8	44.0	7.3	3.48	
	자영업,창업 등	-	-	-	-	-	-	-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83	1.1	4.4	39.9	49.7	4.9	3.53	0.637
	청년 독립가구	250	2.8	6.8	42.8	40.0	7.6	3.43	
	부모 동거가구	455	1.1	6.6	43.3	42.0	7.0	3.47	
	기타	10	0.0	10.0	40.0	50.0	0.0	3.40	
지역별	수도권	548	1.1	6.0	42.7	44.2	6.0	3.48	0.892
	충청권	80	2.5	8.8	43.8	40.0	5.0	3.36	
	전라권	55	0.0	5.5	41.8	45.5	7.3	3.55	
	경상권	191	3.1	5.2	40.3	41.9	9.4	3.49	
	강원/제주권	24	0.0	12.5	50.0	33.3	4.2	3.29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불가능 하다	불가능 하다	보통 이다	가능 하다	매우 가능 하다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90	7.8	10.0	43.3	26.7	12.2	3.26	-2.097*
	비빈곤층	808	0.9	5.8	42.3	44.9	6.1	3.5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340	1.8	5.0	36.2	49.7	7.4	3.56	3.896*
	비슷	437	1.4	6.6	48.3	37.8	5.9	3.40	
	분배 중요	121	1.7	8.3	38.8	43.8	7.4	3.47	

*p<.05, **p<.01, ***p<.001

(17)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렵다’ 응답이 56.1%(매우 어렵다: 14.9% + 어렵다: 41.3%)로 ‘어렵지 않다’ 응답 11.8%(전혀 어렵지 않다: 1.2% + 어렵지 않다: 10.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 점수는 평균 2.42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어렵다’ 응답은 만 30~34세(59.1%), 만19~24세(55.3%), 만25~29세(54.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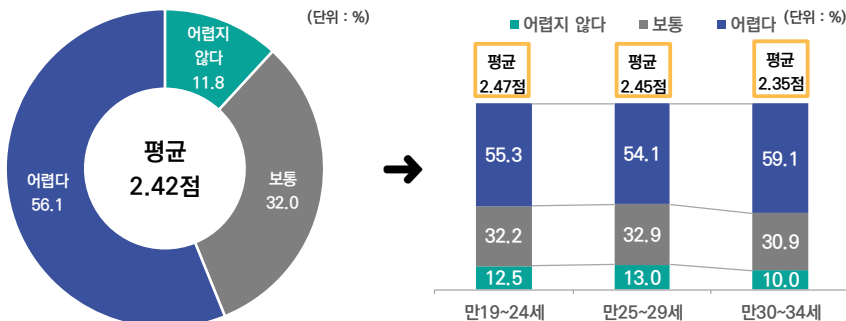


그림 IV-83.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

표 IV-164.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14.9	41.3	32.0	10.7	1.2	2.42	-
만19~24세	1,201	11.7	43.6	32.2	11.5	1.0	2.47	6.687**
만25~29세	1,503	15.6	38.5	32.9	11.4	1.7	2.45	
만30~34세	1,410	16.8	42.3	30.9	9.2	0.8	2.35	

*p<.05, **p<.01, ***p<.001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취업상태,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2.38점), 미취업/구직중 및 정규직취업(2.39점), 부모 동거가구(2.38점), 빈곤층(2.11점), 복지인식 분배중요(2.33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창업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표 IV-165. 한국사회의 청년 창업 환경(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 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14.9	41.3	32.0	10.7	1.2	2.42	-
성별	남자	1,945	17.3	39.5	30.7	11.1	1.4	-1.506
	여자	2,169	12.7	42.9	33.1	10.3	1.0	
혼인 상태	미혼	3,272	15.3	42.8	31.1	10.0	0.9	14.203***
	기혼	824	13.0	35.8	35.3	13.5	2.4	
	사별 및 이혼	18	11.1	22.2	55.6	11.1	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 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5점 평균	F/t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3.6	42.7	33.6	9.2	1.0	2.41	1.802
	대학교	3,195	14.9	41.7	31.6	10.6	1.2	2.41	
	대학원 이상	190	18.4	30.0	32.6	16.8	2.1	2.54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4.8	41.4	34.7	8.2	0.9	2.39	3.986**
	비정규직취업	1,045	13.3	40.8	31.1	13.3	1.5	2.49	
	정규직취업	1,679	15.8	41.9	30.4	10.9	1.0	2.39	
	자영업, 창업 등	60	15.0	31.7	35.0	13.3	5.0	2.6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3.3	36.5	35.1	12.7	2.4	2.54	6.758***
	청년 독립가구	1,007	16.7	39.9	30.9	11.4	1.1	2.40	
	부모 동거가구	2,316	14.7	43.5	31.4	9.6	0.8	2.38	
	기타	33	6.1	39.4	36.4	18.2	0.0	2.67	
지역별	수도권	2,276	15.2	41.0	31.5	11.3	1.0	2.42	1.369
	충청권	410	15.9	44.1	31.7	7.1	1.2	2.34	
	전라권	364	11.8	41.8	34.1	11.3	1.1	2.48	
	경상권	923	15.6	39.9	32.0	11.2	1.4	2.43	
	강원/제주권	141	9.9	45.4	36.2	5.7	2.8	2.46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1.2	34.6	27.0	5.8	1.3	2.11	-6.973***
	비빈곤층	3,733	13.2	42.0	32.5	11.2	1.2	2.4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5.3	41.2	27.2	14.3	2.0	2.46	4.218*
	비슷	2,252	13.2	41.2	37.0	7.9	0.7	2.42	
	분배 중요	597	20.1	42.0	23.5	13.2	1.2	2.33	

*p<.05, **p<.01, ***p<.001

3) 일자리 관련 정부정책 인식 및 정책욕구

(18)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인지도

가.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인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41.3%(매우 잘 알고 있다: 9.2% + 알고 있다: 32.1%)로 ‘모른다’ 응답 32.6%(전혀 모른다: 13.1% + 모른다: 19.5%)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도 점수는 평균 3.05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의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 25~29세(46.8%), 만30~34세(39.9%), 만19~24세(36.1%) 순으로 ‘알고 있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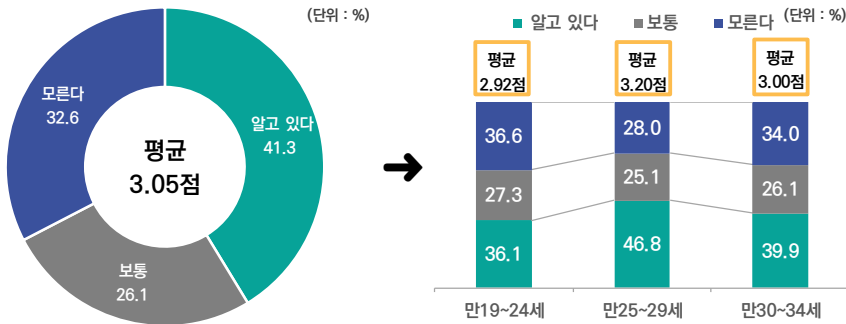


그림 IV-84.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인지도

표 IV-166.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인지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13.1	19.5	26.1	32.1	9.2	3.05	-
만19~24세	1,201	14.5	22.1	27.3	28.8	7.2	2.92	20.381***
만25~29세	1,503	10.7	17.3	25.1	35.1	11.7	3.20	
만30~34세	1,410	14.3	19.7	26.1	31.6	8.2	3.00	

*p<.05, **p<.01, ***p<.001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의 인지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최종학력, 취업상태,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19점), 미혼(3.08점), 대학교 학력(3.11점), 정규직 취업(3.12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67.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인지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13.1	19.5	26.1	32.1	9.2	3.05	-
성별	남자	1,945	16.0	21.7	27.2	27.3	7.8	-8.140***
	여자	2,169	10.4	17.6	25.1	36.4	10.5	
혼인 상태	미혼	3,272	12.7	19.4	25.1	33.1	9.7	6.202**
	기혼	824	14.3	19.8	30.1	28.3	7.5	
	사별 및 이혼	18	16.7	38.9	27.8	16.7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7.6	21.7	27.3	26.1	7.4	19.086***
	대학교	3,195	11.8	18.7	25.9	33.8	9.7	
	대학원 이상	190	16.8	25.3	24.2	26.3	7.4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6.5	19.8	26.9	29.2	7.7	2.92	8.442***
	비정규직취업	1,045	11.5	19.3	26.6	32.7	9.9	3.10	
	정규직취업	1,679	11.3	19.5	24.9	34.2	10.1	3.12	
	자영업, 창업 등	60	13.3	20.0	33.3	25.0	8.3	2.9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4.1	19.8	29.0	29.6	7.5	2.97	1.861
	청년 독립가구	1,007	11.9	19.5	25.9	32.5	10.2	3.10	
	부모 동거가구	2,316	13.0	19.7	25.2	32.8	9.3	3.06	
	기타	33	24.2	6.1	30.3	27.3	12.1	2.97	
지역별	수도권	2,276	12.6	19.7	25.7	33.0	8.9	3.06	0.745
	충청권	410	13.9	19.0	26.1	32.9	8.0	3.02	
	전라권	364	13.2	22.5	28.6	26.9	8.8	2.96	
	경상권	923	13.9	17.6	26.5	31.5	10.5	3.07	
	강원/제주권	141	12.1	23.4	22.7	31.9	9.9	3.04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6.3	16.3	23.9	28.3	15.2	3.10	0.811
	비빈곤층	3,733	12.7	19.9	26.3	32.5	8.6	3.04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3.4	19.8	25.5	31.3	10.0	3.05	0.180
	비슷	2,252	13.0	18.6	27.8	32.5	8.2	3.04	
	분배 중요	597	12.4	22.8	21.1	32.3	11.4	3.08	

*p<.05, **p<.01, ***p<.001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지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46.3% (매우 잘 알고 있다: 10.3% + 알고 있다: 36.0%)로 ‘모른다’ 응답 27.3%(전혀 모른다: 10.7% + 모른다: 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인지도 점수는 평균 3.19점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 (52.2%), 만30~34세(46.0%), 만19~24세(39.1%) 순으로 ‘알고 있다’ 응답이 높

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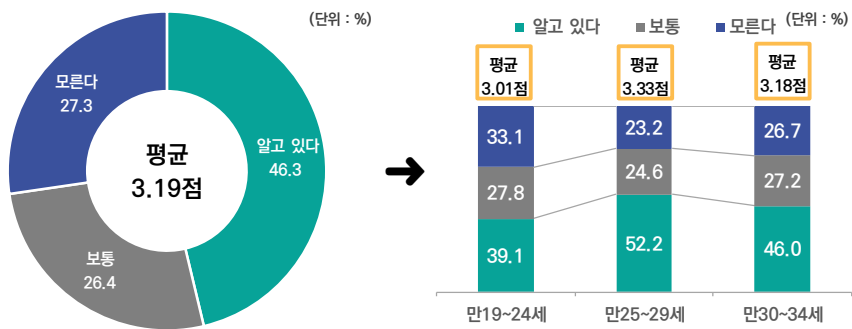


그림 IV-85.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지도

표 IV-168.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지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10.7	16.6	26.4	36.0	10.3	3.19	-
만19~24세	1,201	13.1	20.0	27.8	31.1	8.1	3.01	26.658***
만25~29세	1,503	8.8	14.4	24.6	39.0	13.2	3.33	
만30~34세	1,410	10.8	16.0	27.2	36.9	9.1	3.18	

*p<.05, **p<.01, ***p<.00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인지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29점), 대학교 학력(3.25점), 정규직 취업(3.48점), 청년 독립가구(3.29점), 비빈곤층(3.20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69.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지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10.7	16.6	26.4	36.0	10.3	3.19	-
성별	남자	1,945	13.0	18.5	27.4	31.1	10.1	3.07	-6.213***
	여자	2,169	8.7	14.8	25.6	40.3	10.6	3.29	
혼인 상태	미혼	3,272	11.0	16.7	25.6	35.9	10.7	3.19	2.296
	기혼	824	9.5	15.5	29.4	36.8	8.9	3.20	
	사별 및 이혼	18	11.1	38.9	33.3	11.1	5.6	2.6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5.5	20.7	28.7	27.7	7.4	2.91	26.038***
	대학교	3,195	9.6	15.6	26.1	37.8	10.9	3.25	
	대학원 이상	190	11.6	16.3	23.2	36.8	12.1	3.2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5.8	21.1	29.5	28.0	5.6	2.87	76.195***
	비정규직취업	1,045	9.7	19.2	28.9	33.8	8.4	3.12	
	정규직취업	1,679	7.3	11.3	22.5	43.6	15.3	3.48	
	자영업,창업 등	60	11.7	16.7	26.7	36.7	8.3	3.1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9.4	15.6	29.2	36.9	9.0	3.21	5.805***
	청년 독립가구	1,007	8.6	15.1	27.2	36.9	12.1	3.29	
	부모 동거가구	2,316	11.8	17.7	25.1	35.3	10.1	3.14	
	기타	33	27.3	9.1	33.3	27.3	3.0	2.70	
지역별	수도권	2,276	10.8	15.9	26.2	36.2	10.9	3.21	1.347
	충청권	410	9.0	16.1	27.1	36.1	11.7	3.25	
	전라권	364	9.9	17.9	30.8	34.6	6.9	3.11	
	경상권	923	12.1	17.0	24.7	36.1	10.1	3.15	
	강원/제주권	141	7.8	22.7	28.4	33.3	7.8	3.11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6.3	18.6	23.9	31.2	10.0	3.00	-3.081**
	비빈곤층	3,733	10.2	16.4	26.7	36.4	10.4	3.2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0.9	15.9	24.2	36.8	12.2	3.23	1.890
	비슷	2,252	10.6	16.5	28.6	35.4	9.0	3.16	
	분배 중요	597	10.7	18.4	23.1	36.2	11.6	3.19	

*p<.05, **p<.01, ***p<.001

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지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 응답이 43.1%(매우 잘 알고 있다: 8.1% + 알고 있다: 35.0%)로 ‘모른다 응답 27.8%(전혀 모른다: 11.1% + 모른다: 16.7%)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지도 점수는 평균 3.12점으로 나타났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인지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49.6%), 만19~24세(42.1%), 만30~34세(37.0%) 순으로 ‘알고 있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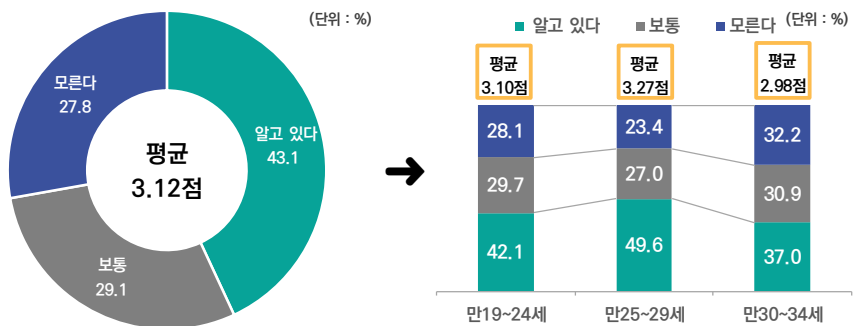


그림 IV-8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지도

표 IV-170.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지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11.1	16.7	29.1	35.0	8.1	3.12	-
만19~24세	1,201	11.7	16.4	29.7	34.0	8.2	3.10	24.340***
만25~29세	1,503	9.0	14.4	27.0	39.7	9.9	3.27	
만30~34세	1,410	12.8	19.4	30.9	30.8	6.2	2.98	

*p<.05, **p<.01, ***p<.00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인지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최종 학력, 취업상태, 혼인상태, 가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22점), 미혼(3.15점), 대학교 학력(3.17점), 비정규직 취업(3.22점), 청년 독립가구(3.17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7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인지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11.1	16.7	29.1	35.0	8.1	3.12	-
성별	남자	1,945	13.8	18.0	29.2	31.3	7.8	3.01	-5.974***
	여자	2,169	8.7	15.5	29.0	38.3	8.4	3.22	
혼인 상태	미혼	3,272	10.9	16.5	28.4	35.3	8.9	3.15	4.352*
	기혼	824	11.8	17.5	32.0	33.6	5.1	3.03	
	사별 및 이혼	18	16.7	22.2	27.8	27.8	5.6	2.8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5.0	18.2	33.5	27.6	5.8	2.91	16.869***
	대학교	3,195	10.1	16.4	27.9	36.9	8.6	3.17	
	대학원 이상	190	13.2	15.3	32.1	31.1	8.4	3.0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14.1	17.4	30.6	30.2	7.7	3.00	8.319***
	비정규직취업	1,045	9.2	15.3	29.6	36.7	9.3	3.22	
	정규직취업	1,679	10.1	16.9	27.7	37.6	7.7	3.16	
	자영업,창업 등	60	8.3	20.0	28.3	35.0	8.3	3.1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12.1	17.4	31.7	33.9	4.9	3.02	3.485*
	청년 독립가구	1,007	9.7	16.4	29.7	35.8	8.3	3.17	
	부모 동거가구	2,316	11.2	16.7	28.1	34.9	9.1	3.14	
	기타	33	24.2	12.1	24.2	33.3	6.1	2.85	
지역별	수도권	2,276	11.3	16.1	29.1	36.1	7.4	3.12	0.145
	충청권	410	10.7	16.1	31.7	33.2	8.3	3.12	
	전라권	364	10.4	16.8	33.2	30.5	9.1	3.11	
	경상권	923	11.4	17.4	27.1	35.6	8.5	3.12	
	강원/제주권	141	8.5	22.7	24.8	29.1	14.9	3.19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8.1	15.0	25.2	31.0	10.8	3.01	-1.786
	비빈곤층	3,733	10.4	16.9	29.5	35.4	7.8	3.1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1.5	16.0	27.7	35.2	9.6	3.15	1.322
	비슷	2,252	11.0	17.1	30.2	34.6	7.1	3.10	
	분배 중요	597	10.7	16.6	28.0	35.7	9.0	3.16	

*p<.05, **p<.01, ***p<.001

(19-1) 취업 및 창업 관련 정책 참여경험

가.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 경험 없음’ 응답이 80.2%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 19.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24.9%), 만30~34세(19.4%), 만19~24세(14.1%) 순으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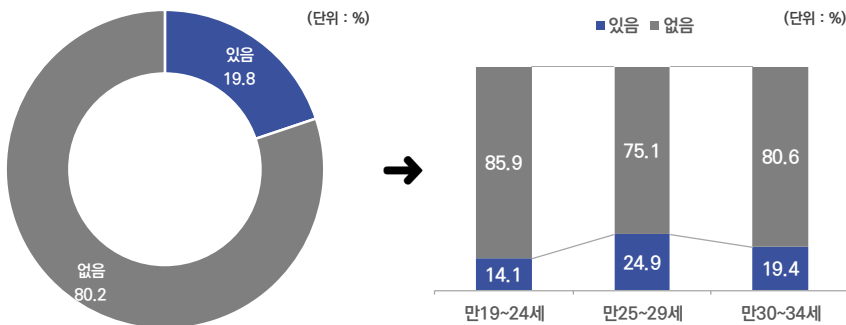


그림 IV-87.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험

표 IV-172.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험(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0.2	19.8	-
만19~24세	1,201	85.9	14.1	49.380***
만25~29세	1,503	75.1	24.9	
만30~34세	1,410	80.6	19.4	

*p<.05, **p<.01, ***p<.001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경험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은 대학교 학력(20.7%)이 고등학교 이하(16.6%) 및 대학원 이상(17.9%)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73.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경험(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0.2	19.8	-
성별	남자	1,945	81.4	3.470
	여자	2,169	79.1	
혼인 상태	미혼	3,272	80.1	0.895
	기혼	824	80.3	
	사별 및 이혼	18	88.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3.4	6.718*
	대학교	3,195	79.3	
	대학원 이상	190	82.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81.3	3.497
	비정규직취업	1,045	79.7	
	정규직취업	1,679	79.3	
	자영업,창업 등	60	86.7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81.0	19.0	1.235
	청년 독립가구	1,007	79.0	21.0	
	부모 동거가구	2,316	80.4	19.6	
	기타	33	81.8	18.2	
지역별	수도권	2,276	80.3	19.7	0.959
	충청권	410	79.3	20.7	
	전라권	364	81.0	19.0	
	경상권	923	79.6	20.4	
	강원/제주권	141	82.3	17.7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78.0	22.0	1.293
	비빈곤층	3,733	80.4	19.6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79.7	20.3	1.839
	비슷	2,252	80.9	19.1	
	분배 중요	597	78.6	21.4	

*p<.05, **p<.01, ***p<.001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경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 경험 없음’ 응답이 84.0%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 16.0%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19.4%), 만30~34세(16.4%), 만19~24세(11.3%) 순으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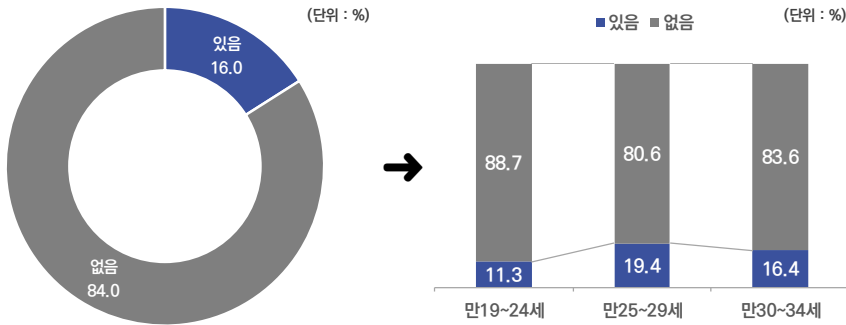


그림 IV-88.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경험

표 IV-174.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경험(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4.0	16.0	—
만19~24세	1,201	88.7	11.3	32.802***
만25~29세	1,503	80.6	19.4	
만30~34세	1,410	83.6	16.4	

*p<.05, **p<.01, ***p<.00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경험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 주관적 계층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은 기혼(22.1%), 대학원 이상 학력(19.5%), 정규직 취업(21.3%), 청년 부부가구(22.3%), 비빈곤층(16.4%), 복지인식 성장중요(19.4%)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75.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경험(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4.0	16.0	-
성별	남자	1,945	83.0	17.0	2.465
	여자	2,169	84.8	15.2	
혼인 상태	미혼	3,272	85.6	14.4	30.583***
	기혼	824	77.9	22.1	
	사별 및 이혼	18	72.2	2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8.8	11.2	15.869***
	대학교	3,195	83.1	16.9	
	대학원 이상	190	80.5	19.5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89.6	10.4	68.353***
	비정규직취업	1,045	85.1	14.9	
	정규직취업	1,679	78.7	21.3	
	자영업,창업 등	60	88.3	11.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77.7	22.3	41.350***
	청년 독립가구	1,007	81.9	18.1	
	부모 동거가구	2,316	86.8	13.2	
	기타	33	93.9	6.1	
지역별	수도권	2,276	83.0	17.0	7.342
	충청권	410	82.7	17.3	
	전라권	364	86.5	13.5	
	경상권	923	85.3	14.7	
	강원/제주권	141	88.7	11.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88.2	11.8	5.525*
	비빈곤층	3,733	83.6	16.4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80.6	19.4	15.961***
	비슷	2,252	85.5	14.5	
	분배 중요	597	85.4	14.6	

*p<.05, **p<.01, ***p<.001

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경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참여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 경험 없음’ 응답이 85.6%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 1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참여경험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18.8%), 만30~34세(12.3%), 만19~24세(11.4%) 순으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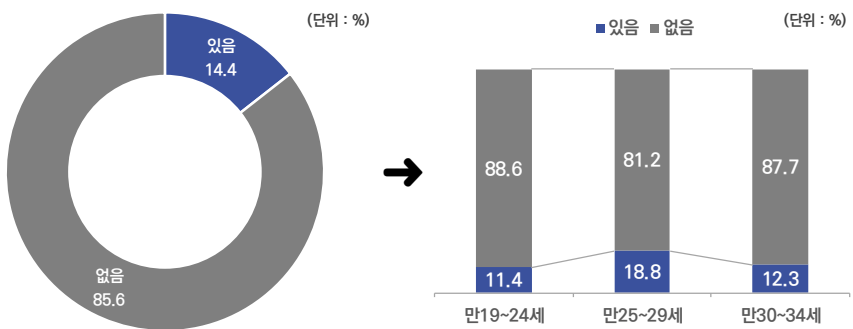


그림 IV-8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경험

표 IV-176.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경험(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5.6	14.4	-
만19~24세	1,201	88.6	11.4	37.410***
만25~29세	1,503	81.2	18.8	
만30~34세	1,410	87.7	12.3	

*p<.05, **p<.01, ***p<.00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참여경험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최종학력, 혼인상태, 취업상태, 복지인식,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 경험 있음’ 응답은 기혼(16.7%), 대학원 이상 학력(18.9%), 비정규직 취업(17.4%), 강원/제주권(22.0%), 복지인식 분배중요(17.6%)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7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경험(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전체		4,114	85.6	14.4	-
성별	남자	1,945	84.7	15.3	2.327
	여자	2,169	86.4	13.6	
혼인 상태	미혼	3,272	86.2	13.8	10.003**
	기혼	824	83.3	16.7	
	사별 및 이혼	18	66.7	3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9.8	10.2	15.279***
	대학교	3,195	84.9	15.1	
	대학원 이상	190	81.1	18.9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85.0	15.0	14.565**
	비정규직취업	1,045	82.6	17.4	
	정규직취업	1,679	87.7	12.3	
	자영업,창업 등	60	88.3	11.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84.2	15.8	4.394
	청년 독립가구	1,007	84.3	15.7	
	부모 동거가구	2,316	86.6	13.4	
	기타	33	84.8	15.2	

구분		사례수 [명]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χ^2
지역별	수도권	2,276	86.4	13.6	11.504*
	충청권	410	82.9	17.1	
	전라권	364	87.6	12.4	
	경상권	923	85.0	15.0	
	강원/제주권	141	78.0	22.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85.8	14.2	0.024
	비빈곤층	3,733	85.5	14.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84.4	15.6	10.063**
	비슷	2,252	87.0	13.0	
	분배 중요	597	82.4	17.6	

* $p < .05$, ** $p < .01$, *** $p < .001$

(19-2)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만족도

가.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n=816$)의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51.0%(매우 만족한다: 11.8% + 만족한다: 39.2%)로 ‘불만족’ 응답 16.4%(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1% + 만족하지 않는다: 11.3%)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만족도 점수는 평균 3.41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의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9.8%, 만25~29세: 52.1%, 만30~34세: 44.0%) 만족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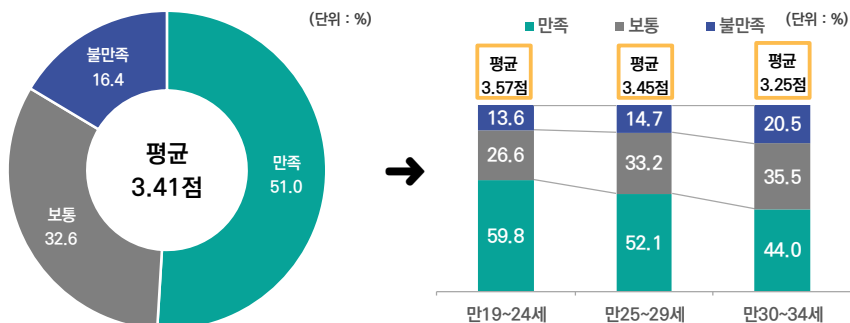


그림 IV-90.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

표 IV-178.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816	5.1	11.3	32.6	39.2	11.8	3.41	-
만19~24세	169	4.1	9.5	26.6	44.4	15.4	3.57	6.012**
만25~29세	374	4.8	9.9	33.2	39.3	12.8	3.45	
만30~34세	273	6.2	14.3	35.5	35.9	8.1	3.25	

*p<.05, **p<.01, ***p<.001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곤층(3.08점)이 비빈곤층(3.45점)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79.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전체		816	5.1	11.3	32.6	39.2	11.8	3.41	-
성별	남자	362	7.5	11.0	29.6	40.3	11.6	3.38	-0.903
	여자	454	3.3	11.5	35.0	38.3	11.9	3.44	
혼인 상태	미혼	652	4.9	11.0	33.3	38.3	12.4	3.42	0.963
	기혼	162	5.6	12.3	30.2	42.6	9.3	3.38	
	사별 및 이혼	2	50.0	0.0	0.0	50.0	0.0	2.5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21	2.5	9.9	34.7	38.8	14.0	3.52	0.859
	대학교	661	5.6	11.3	32.7	38.7	11.6	3.39	
	대학원 이상	34	5.9	14.7	23.5	50.0	5.9	3.35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49	4.4	11.6	34.1	39.0	10.8	3.40	0.873
	비정규직취업	212	7.5	12.3	30.7	38.2	11.3	3.33	
	정규직취업	347	4.0	10.7	32.3	40.3	12.7	3.47	
	자영업,창업 등	8	12.5	0.0	50.0	25.0	12.5	3.2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44	6.3	13.2	28.5	42.4	9.7	3.36	0.779
	청년 독립가구	211	5.2	13.3	33.2	36.5	11.8	3.36	
	부모 동거가구	455	4.8	9.9	33.6	39.3	12.3	3.44	
	기타	6	0.0	0.0	33.3	50.0	16.7	3.83	
지역별	수도권	449	4.7	11.4	34.1	38.5	11.4	3.41	0.276
	충청권	85	5.9	9.4	31.8	41.2	11.8	3.44	
	전라권	69	4.3	14.5	33.3	36.2	11.6	3.36	
	경상권	188	5.9	12.2	28.7	41.5	11.7	3.41	
	강원/제주권	25	8.0	0.0	36.0	36.0	20.0	3.6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84	13.1	15.5	35.7	21.4	14.3	3.08	-2.666**
	비빈곤층	732	4.2	10.8	32.2	41.3	11.5	3.4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57	8.2	11.3	26.8	41.2	12.5	3.39	0.168
	비슷	431	3.5	10.4	37.8	37.4	10.9	3.42	
	분배 중요	128	4.7	14.1	26.6	41.4	13.3	3.45	

*p<.05, **p<.01, ***p<.001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족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n=659)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48.4%(매우 만족한다: 13.4% + 만족한다: 35.1%)로 ‘불만족’ 응답 14.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8% + 만족하지 않는다: 10.3%)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족도 점수는 3.44점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52.4%), 만19~24세(46.3%), 만30~34세(44.6%) 순으로 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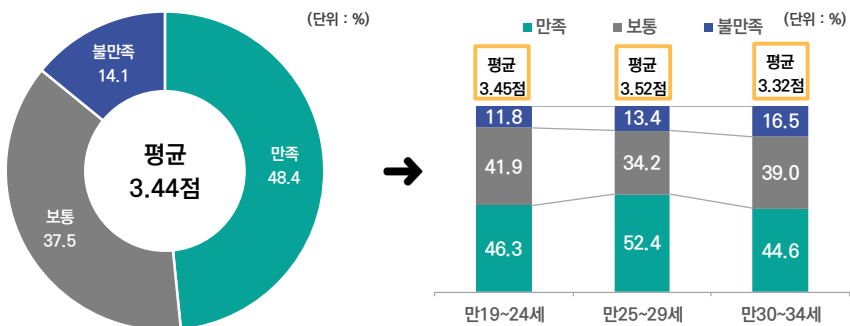


그림 IV-9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족도

표 IV-18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659	3.8	10.3	37.5	35.1	13.4	3.44	-
만19~24세	136	2.9	8.8	41.9	33.1	13.2	3.45	2.723
만25~29세	292	3.4	9.9	34.2	35.6	16.8	3.52	
만30~34세	231	4.8	11.7	39.0	35.5	9.1	3.32	

*p<.05, **p<.01, ***p<.00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 성별,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3.33점), 기혼(3.29점), 비정규직 취업(3.09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8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전체		659	3.8	10.3	37.5	35.1	13.4	3.44	-
성별	남자	330	5.8	10.0	40.9	32.1	11.2	3.33	-2.873**
	여자	329	1.8	10.6	34.0	38.0	15.5	3.55	
혼인 상태	미혼	472	2.8	9.5	37.1	35.6	15.0	3.51	6.163**
	기혼	182	6.0	12.1	37.9	34.6	9.3	3.29	
	사별 및 이혼	5	20.0	20.0	60.0	0.0	0.0	2.4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82	1.2	12.2	48.8	29.3	8.5	3.32	1.253
	대학교	540	3.5	10.6	35.7	36.1	14.1	3.47	
	대학원 이상	37	13.5	2.7	37.8	32.4	13.5	3.30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8	4.3	10.9	49.3	28.3	7.2	3.23	16.603***
	비정규직취업	156	7.1	16.0	42.9	28.8	5.1	3.09	
	정규직취업	358	2.2	7.8	29.9	40.8	19.3	3.67	
	자영업,창업 등	7	0.0	0.0	71.4	14.3	14.3	3.4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69	5.9	12.4	35.5	36.1	10.1	3.32	2.156
	청년 독립가구	182	3.3	7.1	45.6	31.9	12.1	3.42	
	부모 동거가구	306	2.9	11.1	34.0	36.3	15.7	3.51	
	기타	2	0.0	0.0	0.0	50.0	50.0	4.50	
지역별	수도권	387	3.4	11.4	34.4	35.7	15.2	3.48	0.761
	충청권	71	5.6	9.9	39.4	28.2	16.9	3.41	
	전라권	49	6.1	8.2	46.9	32.7	6.1	3.24	
	경상권	136	2.9	8.1	42.6	36.8	9.6	3.42	
	강원/제주권	16	6.3	12.5	31.3	43.8	6.3	3.31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45	4.4	15.6	46.7	22.2	11.1	3.20	-1.704
	비빈곤층	614	3.7	9.9	36.8	36.0	13.5	3.46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46	3.3	9.8	37.8	36.6	12.6	3.46	0.465
	비슷	326	2.5	11.7	36.8	36.5	12.6	3.45	
	분배 중요	87	10.3	6.9	39.1	25.3	18.4	3.34	

*p<.05, **p<.01, ***p<.001

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족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n=594)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이 55.6%(매우 만족한다: 16.5% + 만족한다: 39.1%)로 ‘불만족’ 응답 10.8%(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2% + 만족하지 않는다: 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족도 점수는 평균 3.57점으로 나타났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만족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60.8%), 만19~24세(54.7%), 만30~34세(47.7%) 순으로 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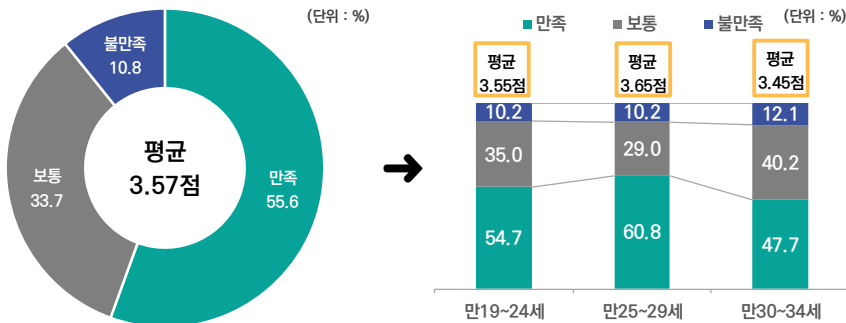


그림 IV-9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족도

표 IV-18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족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F
전체	594	4.2	6.6	33.7	39.1	16.5	3.57	-
만19~24세	137	5.1	5.1	35.0	38.7	16.1	3.55	2.402
만25~29세	283	3.5	6.7	29.0	42.4	18.4	3.65	
만30~34세	174	4.6	7.5	40.2	33.9	13.8	3.45	

*p<.05, **p<.01, ***p<.00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3.29점), 청년 부부가구(3.29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45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18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만족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전체		594	4.2	6.6	33.7	39.1	16.5	3.57	-
성별	남자	298	5.0	5.7	34.6	39.6	15.1	3.54	-0.759
	여자	296	3.4	7.4	32.8	38.5	17.9	3.60	
혼인 상태	미혼	450	2.9	4.9	32.7	41.8	17.8	3.67	9.805***
	기혼	138	8.0	11.6	37.0	30.4	13.0	3.29	
	사별 및 이혼	6	16.7	16.7	33.3	33.3	0.0	2.8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4	5.4	8.1	41.9	31.1	13.5	3.39	1.876
	대학교	484	3.9	6.4	31.8	40.7	17.1	3.61	
	대학원 이상	36	5.6	5.6	41.7	33.3	13.9	3.44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5점 평균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99	5.0	7.0	34.2	36.7	17.1	3.54	0.795
	비정규직취업	182	6.0	5.5	31.9	40.1	16.5	3.55	
	정규직취업	206	1.9	7.3	33.0	41.3	16.5	3.63	
	자영업, 창업 등	7	0.0	0.0	85.7	14.3	0.0	3.14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20	7.5	12.5	35.8	31.7	12.5	3.29	4.523**
	청년 독립가구	158	2.5	8.2	33.5	40.5	15.2	3.58	
	부모 동거가구	311	3.9	3.5	32.8	41.2	18.6	3.67	
	기타	5	0.0	0.0	40.0	40.0	20.0	3.80	
지역별	수도권	310	4.5	7.1	32.3	40.6	15.5	3.55	0.321
	충청권	70	4.3	7.1	37.1	30.0	21.4	3.57	
	전라권	45	2.2	4.4	31.1	44.4	17.8	3.71	
	경상권	138	4.3	7.2	35.5	35.5	17.4	3.54	
	강원/제주권	31	3.2	0.0	35.5	51.6	9.7	3.65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54	1.9	5.6	40.7	29.6	22.2	3.65	0.609
	비빈곤층	540	4.4	6.7	33.0	40.0	15.9	3.56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97	6.1	8.6	34.0	34.5	16.8	3.47	3.726*
	비슷	292	1.4	3.8	37.3	40.4	17.1	3.68	
	분배 중요	105	8.6	10.5	22.9	43.8	14.3	3.45	

*p<.05, **p<.01, ***p<.001

(20)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응답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33.8%), ‘청년구직활동지원금’(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39.6%) 응답이, 만25~29세는 ‘청년내일채움공제’(37.1%) 응답이, 만30~34세는 ‘국민취업지원제도’(37.7%)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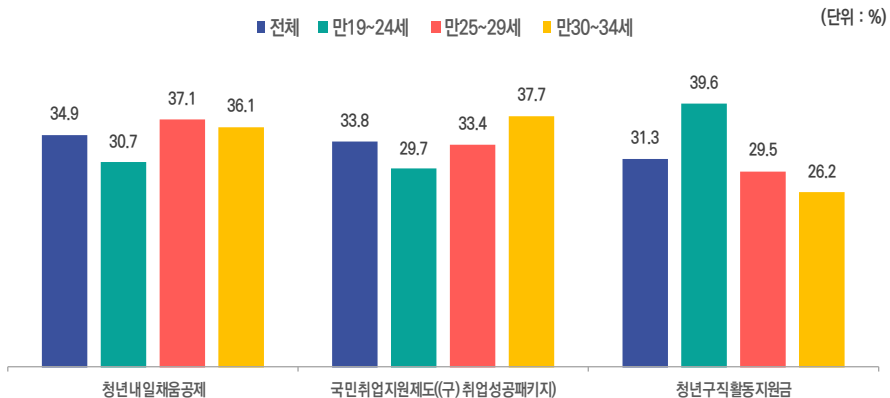


그림 IV-93.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

표 IV-184.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χ^2
전체	4,114	34.9	33.8	31.3	-
만19~24세	1,201	30.7	29.7	39.6	60.718***
만25~29세	1,503	37.1	33.4	29.5	
만30~34세	1,410	36.1	37.7	26.2	

*p<.05, **p<.01, ***p<.001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응답은 대학원 이상 학력(38.4%), 정규직취업(42.2%), 청년 독립가구(39.2%), 충청권(38.3%), 복지인식 성장중요(39.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응답은 기혼(40.0%), 자영업, 창업 등(35.0%), 청년 부부가구(40.4%), 경상권(37.1%)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응답은 미혼(34.0%), 고등학교 이하 학력(39.0%), 미취업/구직중(41.1%), 부모 동거가구(36.0%), 복지인식 분배중요(36.9%)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85.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χ^2
전체		4,114	34.9	33.8	31.3	-
성별	남자	1,945	35.7	33.6	30.7	1.195
	여자	2,169	34.2	34.0	31.8	
혼인 상태	미혼	3,272	33.7	32.3	34.0	55.937***
	기혼	824	39.2	40.0	20.8	
	사별 및 이혼	18	50.0	22.2	2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8.8	32.2	39.0	27.571***
	대학교	3,195	36.1	34.1	29.8	
	대학원 이상	190	38.4	34.7	26.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7.0	31.9	41.1	135.539***
	비정규직취업	1,045	33.3	34.0	32.7	
	정규직취업	1,679	42.2	35.2	22.6	
	자영업,창업 등	60	33.3	35.0	31.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8.9	40.4	20.7	73.699***
	청년 독립가구	1,007	39.2	32.3	28.5	
	부모 동거가구	2,316	31.8	32.3	36.0	
	기타	33	30.3	39.4	30.3	
지역별	수도권	2,276	36.6	32.7	30.7	19.561*
	충청권	410	38.3	32.2	29.5	
	전라권	364	31.3	36.8	31.9	
	경상권	923	30.1	37.1	32.8	
	강원/제주권	141	37.6	27.7	34.8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0.2	35.2	34.6	4.428
	비빈곤층	3,733	35.4	33.7	30.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9.4	34.1	26.5	29.029***
	비슷	2,252	33.7	33.8	32.5	
	분배 중요	597	30.0	33.2	36.9	

*p<.05, **p<.01, ***p<.001

4. 청년 빈곤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

1) 청년 빈곤 실태에 대한 인식

(1)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응답이 42.6%(매우 그렇다: 10.2% + 그렇다: 32.4%)로 ‘그렇지 않다’ 응답 19.2%(전혀 그렇지 않다: 3.1% + 그렇지 않다: 1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도 점수는 평균 3.31점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46.0%), 만30~34세(40.7%), 만19~24세(40.6%) 순으로 그렇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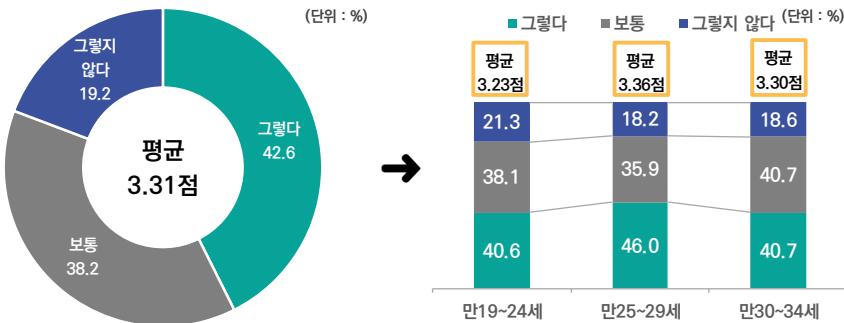


그림 IV-94.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

표 IV-186.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3.1	16.2	38.2	32.4	10.2	3.31	-
만19~24세	1,201	3.7	17.7	38.1	33.0	7.7	3.23	6.266**
만25~29세	1,503	3.0	15.2	35.9	34.3	11.6	3.36	
만30~34세	1,410	2.6	16.0	40.7	29.9	10.9	3.30	

*p<.05, **p<.01, ***p<.001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인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3.34점), 비정규직 취업(3.44점), 청년 독립가구(3.37점), 빈곤층(4.23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43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빈곤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87. 본인의 주관적 빈곤 인식(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3.1	16.2	38.2	32.4	10.2	3.31	-
성별	남자	1,945	3.2	16.3	38.6	31.2	10.7	-0.416
	여자	2,169	3.0	16.0	37.8	33.5	9.8	
혼인 상태	미혼	3,272	3.0	15.9	37.2	32.5	11.4	8.009***
	기혼	824	3.4	17.5	41.9	31.7	5.6	
	사별 및 이혼	18	5.6	5.6	38.9	50.0	0.0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3.4	15.4	42.5	27.8	10.8	3.27	0.517
	대학교	3,195	2.9	16.3	37.4	33.4	10.0	3.31	
	대학원 이상	190	4.7	16.8	33.7	33.2	11.6	3.30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6	14.9	39.8	29.9	11.7	3.31	11.209***
	비정규직취업	1,045	1.9	12.4	37.4	36.6	11.7	3.44	
	정규직취업	1,679	3.3	19.7	37.0	31.9	8.1	3.22	
	자영업, 창업 등	60	5.0	10.0	45.0	30.0	10.0	3.3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3	18.3	40.8	31.8	5.8	3.18	5.766***
	청년 독립가구	1,007	2.3	16.2	36.1	32.7	12.7	3.37	
	부모 동거가구	2,316	3.3	15.5	38.0	32.6	10.5	3.32	
	기타	33	6.1	9.1	48.5	21.2	15.2	3.30	
지역별	수도권	2,276	2.9	16.2	37.7	33.2	10.1	3.31	0.846
	충청권	410	2.0	20.0	35.1	34.4	8.5	3.28	
	전라권	364	3.0	17.9	37.4	32.1	9.6	3.27	
	경상권	923	4.0	14.5	40.7	29.9	10.8	3.29	
	강원/제주권	141	2.8	11.3	40.4	31.2	14.2	3.4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6	2.4	16.3	30.7	49.1	4.23	20.807***
	비빈곤층	3,733	3.2	17.6	40.4	32.6	6.2	3.2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8	17.8	31.6	36.2	10.6	3.32	7.710***
	비슷	2,252	3.0	15.4	43.5	28.8	9.4	3.26	
	분배 중요	597	1.8	15.7	32.0	38.0	12.4	3.43	

*p<.05, **p<.01, ***p<.001

(1-1)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

현재 빈곤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791)의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낮다’ 응답이 58.9%(매우 낮다: 17.1% + 낮다: 41.8%)로 ‘높다’ 응답 8.3%(매우 높다: 1.4% + 높다: 7.0%)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 점수는 2.34점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30~34세(62.2%), 만 19~24세(59.4%), 만25~29세(55.3%) 순으로 ‘낮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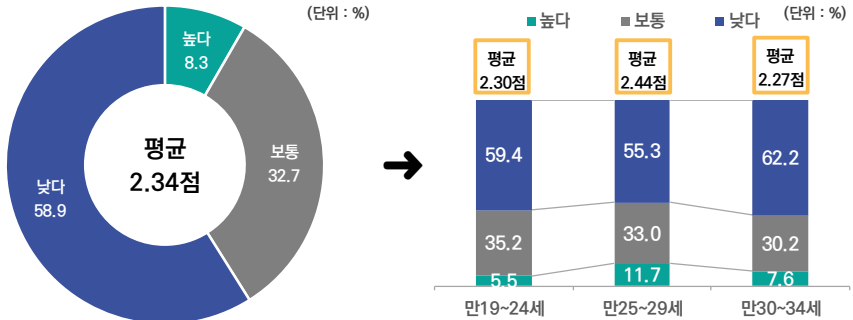


그림 IV-95.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

표 IV-188.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F
전체	791	17.1	41.8	32.7	7.0	1.4	2.34	-
만19~24세	256	17.2	42.2	35.2	4.7	0.8	2.30	2.819
만25~29세	273	15.0	40.3	33.0	9.2	2.6	2.44	
만30~34세	262	19.1	43.1	30.2	6.9	0.8	2.27	

*p<.05, **p<.01, ***p<.001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복지인식 분배중요(2.52점)가 복지인식 성장중요(2.21점)에 비해 빈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89. 본인의 향후 빈곤 가능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F/t
전체		791	17.1	41.8	32.7	7.0	1.4	2.34	-
성별	남자	380	17.4	43.4	30.0	6.8	2.4	2.33	-0.102
	여자	411	16.8	40.4	35.3	7.1	0.5	2.34	
혼인 상태	미혼	617	16.5	41.3	33.9	6.6	1.6	2.35	1.212
	기혼	172	19.2	44.2	27.9	8.1	0.6	2.27	
	사별 및 이혼	2	0.0	0.0	100.0	0.0	0.0	3.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37	16.1	38.0	36.5	7.3	2.2	2.42	0.659
	대학교	613	17.0	43.6	31.3	6.9	1.3	2.32	
	대학원 이상	41	22.0	29.3	41.5	7.3	0.0	2.34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46	19.9	39.4	31.3	7.3	2.0	2.32	1.020
	비정규직취업	150	12.0	42.0	37.3	6.7	2.0	2.45	
	정규직취업	386	17.1	43.8	31.6	6.7	0.8	2.30	
	자영업,창업 등	9	22.2	22.2	44.4	11.1	0.0	2.44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64	18.3	43.9	29.3	8.5	0.0	2.28	0.426
	청년 독립가구	186	14.5	42.5	34.4	7.0	1.6	2.39	
	부모 동거가구	436	17.7	40.6	33.7	6.4	1.6	2.34	
	기타	5	20.0	60.0	0.0	0.0	20.0	2.40	
지역별	수도권	434	16.8	41.2	35.3	5.8	0.9	2.33	0.633
	충청권	90	16.7	43.3	27.8	10.0	2.2	2.38	
	전라권	76	18.4	43.4	30.3	6.6	1.3	2.29	
	경상권	171	17.0	40.9	30.4	9.4	2.3	2.39	
	강원/제주권	20	20.0	50.0	30.0	0.0	0.0	2.1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15	20.0	26.7	13.3	6.7	33.3	3.07	1.767
	비빈곤층	776	17.0	42.1	33.1	7.0	0.8	2.3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73	20.1	47.6	24.2	7.0	1.1	2.21	5.406**
	비슷	413	15.7	39.5	37.3	6.8	0.7	2.37	
	분배 중요	105	14.3	36.2	37.1	7.6	4.8	2.52	

*p<.05, **p<.01, ***p<.001

(1-2) 본인의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

현재 빈곤하다고 답변한 응답자(n=1,753)의 ‘본인의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낮다’ 응답이 34.3%(매우 낮다: 10.4% + 낮다: 23.8%)로 ‘높다’ 응답 28.5%(매우 높다: 5.9% + 높다: 22.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25.0%, 만25~29세: 34.6%, 만30~34세: 41.8%) ‘빈곤 탈출 가능성이 낮다’ 응답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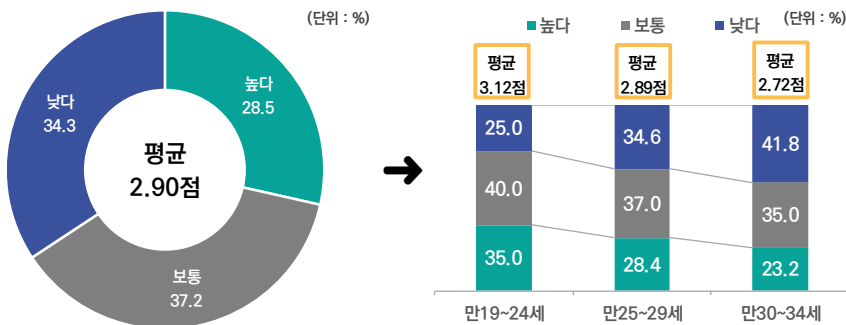


그림 IV-96. 본인의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

표 IV-190. 본인의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F
전체	1,753	10.4	23.8	37.2	22.6	5.9	2.90	-
만19~24세	488	5.1	19.9	40.0	28.3	6.8	3.12	19.182***
만25~29세	691	11.1	23.4	37.0	22.0	6.4	2.89	
만30~34세	574	14.1	27.7	35.0	18.5	4.7	2.72	

*p<.05, **p<.01, ***p<.001

본인의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2.84점), 고등학교 이하 학력(2.81점), 부모 동거가구(2.83점), 빈곤층(2.31점), 복지인식 분배중요(2.69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빈곤 탈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표 IV-191. 본인의 향후 빈곤 탈출 가능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F/t
전체		1,753	10.4	23.8	37.2	22.6	5.9	2.90	-
성별	남자	815	12.9	22.5	35.1	22.9	6.6	2.88	-0.646
	여자	938	8.3	25.1	39.0	22.3	5.3	2.91	
혼인 상태	미혼	1,437	11.8	25.1	36.7	20.4	6.1	2.84	12.288***
	기혼	307	4.6	18.2	39.1	32.9	5.2	3.16	
	사별 및 이혼	9	0.0	22.2	44.4	22.2	11.1	3.2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282	12.1	24.1	39.4	19.9	4.6	2.81	3.520*
	대학교	1,386	10.2	24.4	36.9	22.3	6.2	2.90	
	대학원 이상	85	9.4	14.1	34.1	36.5	5.9	3.15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낮다	낮다	보통 이다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554	12.3	18.4	43.7	20.2	5.4	2.88	2.423
	비정규직취업	504	9.3	23.4	34.1	26.4	6.7	2.98	
	정규직취업	671	10.0	28.8	34.1	21.6	5.5	2.84	
	자영업,창업 등	24	4.2	20.8	37.5	25.0	12.5	3.21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285	4.6	18.2	39.3	33.0	4.9	3.15	7.067***
	청년 독립가구	457	12.5	24.9	32.8	21.4	8.3	2.88	
	부모 동거가구	999	11.2	24.9	38.5	20.1	5.2	2.83	
	기타	12	8.3	25.0	41.7	25.0	0.0	2.83	
지역별	수도권	985	10.1	24.2	37.6	23.1	5.1	2.89	1.535
	충청권	176	8.0	27.3	40.9	18.8	5.1	2.86	
	전라권	152	6.6	20.4	40.1	23.7	9.2	3.09	
	경상권	376	13.8	23.4	33.5	22.6	6.6	2.85	
	강원/제주권	64	12.5	20.3	35.9	21.9	9.4	2.95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04	33.9	23.7	26.0	10.9	5.6	2.31	-9.721***
	비빈곤층	1,449	5.5	23.9	39.5	25.1	6.0	3.0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592	9.3	19.4	35.6	27.7	7.9	3.06	13.023***
	비슷	860	10.2	24.5	39.7	20.2	5.3	2.86	
	분배 중요	301	13.3	30.6	33.2	19.3	3.7	2.69	

*p<.05, **p<.01, ***p<.001

(2) 청년 빈곤의 영역별 중요도

청년 빈곤 영역별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주거’영역에 대한 중요도가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제’(3.95점), ‘노동’(3.91점), ‘건강’(3.8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문화 자본’ 영역은 중요도가 3.57점으로 타 영역 대비 낮게 조사되었다.

연령별 청년 빈곤 영역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에서 ‘주거’, ‘경제’, ‘노동’, ‘건강’ 영역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연령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경제’, ‘건강’, ‘교육’, ‘사회·문화 자본’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동’, ‘주거’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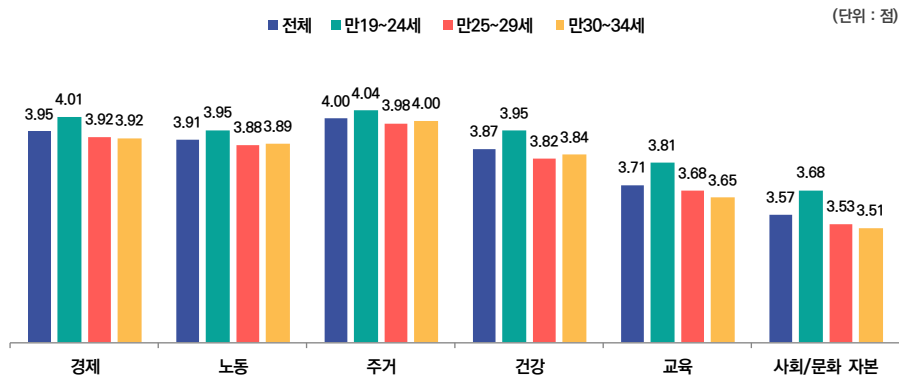


그림 IV-97. 청년 빈곤의 영역별 중요도

표 IV-192. 청년 빈곤의 영역별 중요도(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 자본
F	-	4.042*	2.277	1.385	7.246***	11.041***	13.191***
전체	4,114	3.95	3.91	4.00	3.87	3.71	3.57
만19~24세	1,201	4.01	3.95	4.04	3.95	3.81	3.68
만25~29세	1,503	3.92	3.88	3.98	3.82	3.68	3.53
만30~34세	1,410	3.92	3.89	4.00	3.84	3.65	3.51

*p<.05, **p<.01, ***p<.001

청년 빈곤의 영역별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청년 빈곤의 전 영역은 공통적으로 성별, 혼인상태, 가구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계층의식이 빈곤층인 집단, 성별이 여성인 집단, 가구유형이 부모동거가구인 집단, 혼인상태가 미혼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청년 빈곤의 각 영역별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표 IV-193. 청년 빈곤의 영역별 중요도(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 문화 자본
전체		4,114	3.95	3.91	4.00	3.87	3.71	3.57
성별	남자	1,945	3.85	3.79	3.92	3.76	3.63	3.51
	여자	2,169	4.04	4.01	4.08	3.97	3.78	3.62
혼인 상태	미혼	3,272	4.01	3.97	4.05	3.92	3.75	3.61
	기혼	824	3.71	3.69	3.83	3.67	3.57	3.45
	사별 및 이혼	18	2.89	2.72	3.17	2.56	2.61	2.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3.90	3.83	3.94	3.85	3.68	3.52
	대학교	3,195	3.97	3.94	4.03	3.88	3.72	3.59
	대학원 이상	190	3.71	3.66	3.78	3.66	3.49	3.3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92	3.87	3.95	3.85	3.75	3.55
	비정규직취업	1,045	3.91	3.89	3.98	3.86	3.71	3.60
	정규직취업	1,679	4.00	3.95	4.07	3.88	3.67	3.57
	자영업,창업 등	60	3.90	3.88	3.85	3.87	3.65	3.5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75	3.73	3.85	3.69	3.57	3.47
	청년 독립가구	1,007	3.94	3.88	4.00	3.80	3.61	3.50
	부모 동거가구	2,316	4.02	3.98	4.06	3.95	3.79	3.63
	기타	33	3.88	3.91	4.09	3.94	3.64	3.67
지역별	수도권	2,276	3.97	3.91	4.03	3.89	3.71	3.58
	충청권	410	3.94	3.92	4.05	3.91	3.71	3.61
	전라권	364	3.86	3.90	3.90	3.80	3.68	3.54
	경상권	923	3.92	3.89	3.97	3.82	3.69	3.54
	강원/제주권	141	4.01	3.98	4.04	3.89	3.78	3.58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4.16	4.07	4.19	4.03	3.83	3.66
	비빈곤층	3,733	3.92	3.89	3.99	3.85	3.69	3.56

구분		사례수 [명]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 문화 자본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92	3.86	3.99	3.86	3.69	3.52
	비슷	2,252	3.94	3.92	4.00	3.87	3.72	3.59
	분배 중요	597	4.01	3.94	4.05	3.88	3.68	3.61

*p<.05, **p<.01, ***p<.001

(3-1)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

- 경제1 :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 경제2 :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 노동1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 노동2 : 비정규직근로자인 경우
- 주거1 :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
- 주거2 :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건강1 :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
- 건강2 :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
- 교육1 :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 교육2 :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사회/문화 자본1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 사회/문화 자본2 : 개인 재량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사회/문화 자본1’과 ‘주거2’의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가 각각 3.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육1’(3.45점), ‘건강1’(3.3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2’(3.05점), ‘노동2’(3.18점)는 타당도가 타 영역별 기준 대비 낮게 조사되었다.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를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경제1’, ‘사회/문화 자본2’는 1% 유의수준에서, ‘경제2’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의 기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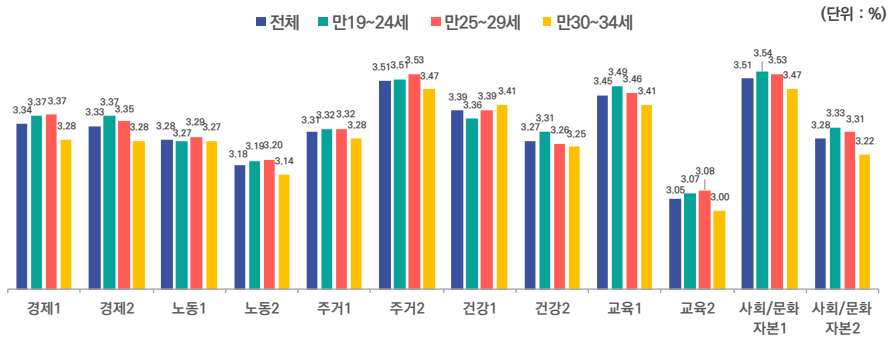


그림 IV-98.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

표 IV-194.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제 1	경제 2	노동 1	노동 2	주거 1	주거 2	건강 1	건강 2	교육 1	교육 2	사회/문화 자본1	사회/문화 자본2
F	-	4.845*	4.209†	0.094	1.365	0.702	1.484	0.940	1.253	2.084	2.586	2.035	5.552**
전체	4,114	3.34	3.33	3.28	3.18	3.31	3.51	3.39	3.27	3.45	3.05	3.51	3.28
만19~24세	1,201	3.37	3.37	3.27	3.19	3.32	3.51	3.36	3.31	3.49	3.07	3.54	3.33
만25~29세	1,503	3.37	3.35	3.29	3.20	3.32	3.53	3.39	3.26	3.46	3.08	3.53	3.31
만30~34세	1,410	3.28	3.28	3.27	3.14	3.28	3.47	3.41	3.25	3.41	3.00	3.47	3.22

*p<.05, **p<.01, ***p<.001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빈곤층인 집단, 복지 인식이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에서는 각 영역별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표 IV-195. 청년 빈곤층 정의 기준 타당도(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경제 1	경제 2	노동 1	노동 2	주거 1	주거 2	건강 1	건강 2	교육 1	교육 2	사회/ 문화 자본 1	사회/ 문화 자본 2
전체		4,114	3.34	3.33	3.28	3.18	3.31	3.51	3.39	3.27	3.45	3.05	3.51	3.28
성별	남자	1,945	3.29	3.29	3.29	3.16	3.30	3.44	3.41	3.26	3.41	3.11	3.42	3.28
	여자	2,169	3.39	3.37	3.27	3.19	3.31	3.56	3.38	3.28	3.49	3.00	3.60	3.29
혼인 상태	미혼	3,272	3.37	3.36	3.30	3.20	3.31	3.55	3.41	3.28	3.48	3.06	3.54	3.31
	기혼	824	3.23	3.24	3.23	3.11	3.29	3.37	3.33	3.24	3.35	3.04	3.41	3.20
	사별 및 이혼	18	2.72	2.94	2.61	2.78	2.78	2.61	2.67	2.61	2.94	2.78	3.17	2.8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3.35	3.34	3.26	3.15	3.25	3.47	3.38	3.31	3.44	3.06	3.60	3.29
	대학교	3,195	3.35	3.34	3.29	3.19	3.33	3.52	3.41	3.27	3.47	3.06	3.51	3.29
	대학원 이상	190	3.05	3.16	3.08	3.03	3.18	3.33	3.21	3.14	3.27	2.88	3.31	3.1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36	3.34	3.33	3.20	3.33	3.52	3.41	3.29	3.47	3.09	3.54	3.29
	비정규직취업	1,045	3.36	3.31	3.31	3.30	3.36	3.54	3.40	3.35	3.46	3.10	3.55	3.33
	정규직취업	1,679	3.32	3.34	3.22	3.09	3.27	3.48	3.38	3.21	3.43	3.00	3.48	3.24
	자영업,창업 등	60	3.37	3.27	3.33	3.03	3.13	3.22	3.30	3.18	3.42	2.95	3.35	3.3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25	3.26	3.23	3.12	3.29	3.38	3.33	3.26	3.35	3.02	3.42	3.18
	청년 독립가구	1,007	3.31	3.31	3.27	3.17	3.34	3.50	3.44	3.27	3.46	3.07	3.49	3.29
	부모 동거가구	2,316	3.39	3.37	3.30	3.20	3.30	3.55	3.39	3.28	3.48	3.06	3.56	3.31
	기타	33	3.09	3.15	3.27	3.15	3.55	3.52	3.48	3.21	3.33	3.09	3.52	3.42
지역별	수도권	2,276	3.35	3.33	3.27	3.19	3.32	3.53	3.40	3.28	3.45	3.06	3.50	3.28
	충청권	410	3.41	3.37	3.29	3.18	3.27	3.52	3.37	3.29	3.51	3.01	3.54	3.30
	전라권	364	3.27	3.31	3.23	3.12	3.28	3.46	3.37	3.24	3.38	3.02	3.46	3.28
	경상권	923	3.31	3.30	3.30	3.18	3.29	3.46	3.38	3.24	3.43	3.06	3.55	3.29
	강원/제주권	141	3.37	3.40	3.40	3.16	3.35	3.57	3.47	3.43	3.56	3.06	3.66	3.31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48	3.45	3.51	3.41	3.47	3.62	3.45	3.36	3.60	3.16	3.68	3.44
	비빈곤층	3,733	3.33	3.32	3.26	3.15	3.29	3.49	3.38	3.26	3.44	3.04	3.50	3.2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30	3.32	3.26	3.11	3.29	3.46	3.36	3.25	3.44	3.01	3.45	3.25
	비슷	2,252	3.35	3.33	3.28	3.18	3.28	3.50	3.40	3.28	3.44	3.05	3.52	3.27
	분배 중요	597	3.39	3.36	3.32	3.31	3.45	3.64	3.43	3.32	3.52	3.16	3.64	3.41

*p<.05, **p<.01, ***p<.001

(3-2) 청년 빈곤의 정의 기준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가.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691)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응답이 51.8%로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 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50.6%)는 ‘빈곤 기준 강화’ 응답이, 만25~29세(53.2%) 및 만30~34세(52.0%)는 ‘빈곤기준 완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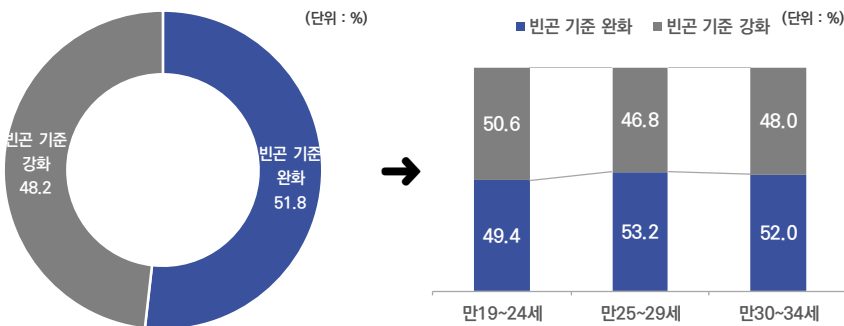


그림 IV-99.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표 IV-196.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691	51.8	48.2	-
만19~24세	170	49.4	50.6	0.590
만25~29세	250	53.2	46.8	
만30~34세	271	52.0	48.0	

*p<.05, **p<.01, ***p<.001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97.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691	51.8	48.2	-
성별	남자	363	53.2	0.566
	여자	328	50.3	
혼인 상태	미혼	504	49.2	5.246
	기혼	181	59.1	
	사별 및 이혼	6	5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1	56.8	1.297
	대학교	521	50.9	
	대학원 이상	59	50.8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93	53.9	46.1	5.679
	비정규직취업	174	57.5	42.5	
	정규직취업	316	47.2	52.8	
	자영업,창업 등	8	62.5	37.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61	56.5	43.5	1.981
	청년 독립가구	177	51.4	48.6	
	부모 동거가구	345	49.9	50.1	
	기타	8	50.0	50.0	
지역별	수도권	396	53.0	47.0	1.518
	충청권	59	47.5	52.5	
	전라권	65	55.4	44.6	
	경상권	151	49.0	51.0	
	강원/제주권	20	50.0	50.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56	50.0	50.0	0.080
	비빈곤층	635	52.0	48.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65	50.6	49.4	1.035
	비슷	308	53.9	46.1	
	분배 중요	118	49.2	50.8	

*p<.05, **p<.01, ***p<.001

나.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700)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이 54.7%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함’ 응답 45.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50.6%)는 ‘빈곤

기준 완화’ 응답이, 만25~29세(56.1%) 및 만30~34세(56.8%)는 ‘빈곤기준 강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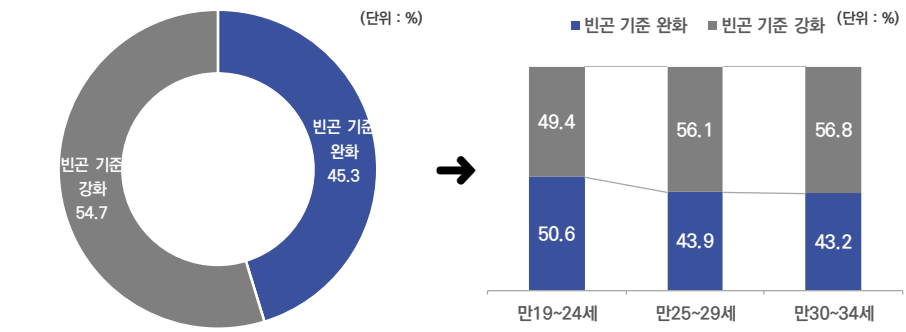


그림 IV-100.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표 IV-198.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700	45.3	54.7	-
만19~24세	172	50.6	49.4	2.607
만25~29세	255	43.9	56.1	
만30~34세	273	43.2	56.8	

*p<.05, **p<.01, ***p<.001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99.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700	45.3	54.7	-
성별	남자	375	44.0	56.0	0.539
	여자	325	46.8	53.2	
혼인 상태	미혼	533	46.0	54.0	3.248
	기혼	162	42.0	58.0	
	사별 및 이혼	5	80.0	2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16	48.3	51.7	0.505
	대학교	533	44.7	55.3	
	대학원 이상	51	45.1	54.9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00	50.0	50.0	4.688
	비정규직취업	187	46.0	54.0	
	정규직취업	301	41.2	58.8	
	자영업,창업 등	12	58.3	41.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44	41.7	58.3	1.220
	청년 독립가구	195	46.7	53.3	
	부모 동거가구	353	46.2	53.8	
	기타	8	37.5	62.5	
지역별	수도권	411	45.3	54.7	1.846
	충청권	65	50.8	49.2	
	전라권	51	47.1	52.9	
	경상권	153	43.8	56.2	
	강원/제주권	20	35.0	65.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65	43.1	56.9	0.141
	비빈곤층	635	45.5	54.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59	45.2	54.8	0.942
	비슷	323	44.0	56.0	
	분배 중요	118	49.2	50.8	

*p<.05, **p<.01, ***p<.001

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881)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이 67.3%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응답 32.7%보다 높게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64.8%, 만25~29세: 66.7%, 만30~34세: 70.1%) ‘빈곤 기준 강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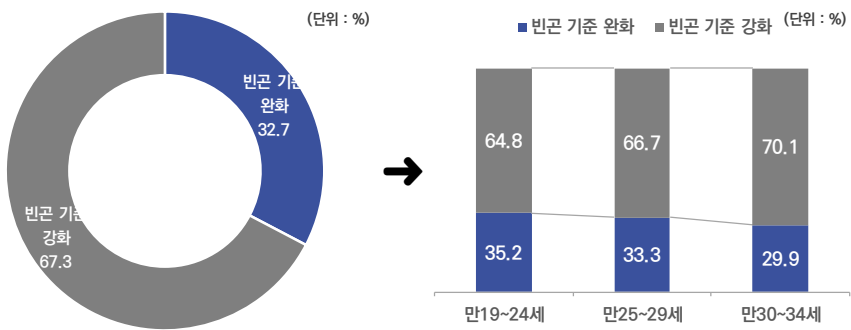


그림 IV-101.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표 IV-200.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881	32.7	67.3	-
만19~24세	253	35.2	64.8	1.822
만25~29세	324	33.3	66.7	
만30~34세	304	29.9	70.1	

*p<.05, **p<.01, ***p<.001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혼인상태,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응답은 기혼(36.2%), 고등학교 이하 학력(41.6%), 미취업/구직중(41.0%), 빈곤층(49.3%)에서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01.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881	32.7	67.3	-
성별	남자	396	33.1	66.9	0.050
	여자	485	32.4	67.6	
혼인 상태	미혼	698	31.4	68.6	6.248*
	기혼	174	36.2	63.8	
	사별 및 이혼	9	66.7	3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61	41.6	58.4	7.316*
	대학교	666	30.5	69.5	
	대학원 이상	54	33.3	66.7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44	41.0	59.0	13.450**
	비정규직취업	202	32.2	67.8	
	정규직취업	422	27.7	72.3	
	자영업,창업 등	13	46.2	53.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61	34.8	65.2	3.230
	청년 독립가구	216	34.3	65.7	
	부모 동거가구	499	31.7	68.3	
	기타	5	0.0	100.0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지역별	수도권	497	31.4	68.6	2.805
	충청권	91	28.6	71.4	
	전라권	81	35.8	64.2	
	경상권	191	36.6	63.4	
	강원/제주권	21	33.3	66.7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67	49.3	50.7	9.042**
	비빈곤층	814	31.3	68.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301	30.2	69.8	1.269
	비슷	437	34.1	65.9	
	분배 중요	143	33.6	66.4	

*p<.05, **p<.01, ***p<.001

라.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가 빈
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897)를 대상으로 타당하
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이 63.0%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응답 37.0%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가 빈곤
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
세(64.8%), 만30~34세(62.9%), 만19~24세(60.7%) 순으로 ‘빈곤 기준 강화’ 응
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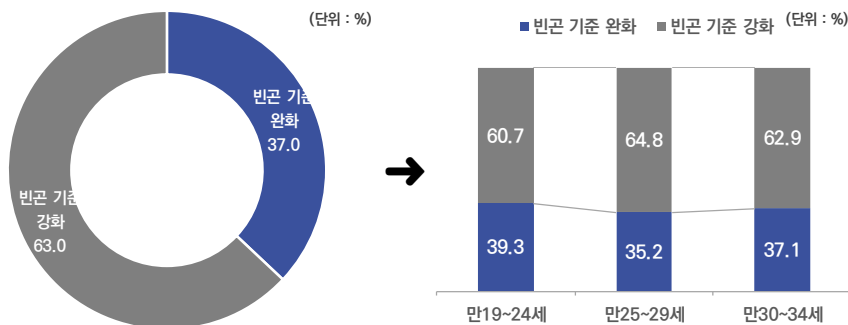


그림 IV-102.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표 IV-202.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897	37.0	63.0	-
만19~24세	257	39.3	60.7	1.054
만25~29세	327	35.2	64.8	
만30~34세	313	37.1	62.9	

*p<.05, **p<.01, ***p<.001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 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03.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897	37.0	63.0	-
성별	남자	437	38.2	61.8	0.529
	여자	460	35.9	64.1	
혼인 상태	미혼	687	36.1	63.9	2.934
	기혼	204	39.2	60.8	
	사별 및 이혼	6	66.7	3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65	42.4	57.6	2.858
	대학교	676	35.5	64.5	
	대학원 이상	56	39.3	60.7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65	43.0	57.0	7.269
	비정규직취업	183	37.7	62.3	
	정규직취업	434	32.9	67.1	
	자영업,창업 등	15	40.0	6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87	38.0	62.0	0.125
	청년 독립가구	223	37.2	62.8	
	부모 동거가구	479	36.5	63.5	
	기타	8	37.5	62.5	
지역별	수도권	507	37.5	62.5	5.773
	충청권	89	29.2	70.8	
	전라권	86	41.9	58.1	
	경상권	189	39.2	60.8	
	강원/제주권	26	23.1	76.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67	46.3	53.7	2.661
	비빈곤층	830	36.3	63.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333	39.0	61.0	2.851
	비슷	432	34.3	65.7	
	분배 중요	132	40.9	59.1	

*p<.05, **p<.01, ***p<.001

마.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729)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이 59.9%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응답 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4.6%, 만25~29세: 61.7%, 만30~34세: 62.2%) ‘빈곤 기준 강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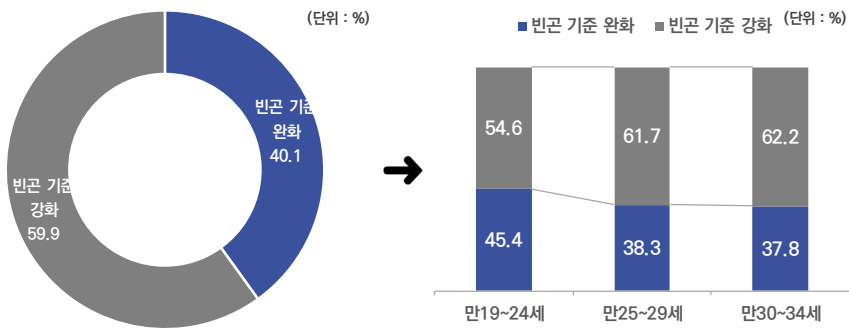


그림 IV-103.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

표 IV-204.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729	40.1	59.9	-
만19~24세	196	45.4	54.6	3.213
만25~29세	274	38.3	61.7	
만30~34세	259	37.8	62.2	

*p<.05, **p<.01, ***p<.001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05. 소득대비(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729	40.1	59.9	-
성별	남자	354	41.8	58.2	0.881
	여자	375	38.4	61.6	
혼인 상태	미혼	568	38.7	61.3	4.548
	기혼	156	43.6	56.4	
	사별 및 이혼	5	80.0	2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26	44.4	55.6	1.281
	대학교	555	39.3	60.7	
	대학원 이상	48	37.5	62.5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98	48.0	52.0	7.704
	비정규직취업	170	37.1	62.9	
	정규직취업	346	36.7	63.3	
	자영업,창업 등	15	46.7	53.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43	42.7	57.3	5.561
	청년 독립가구	180	44.4	55.6	
	부모 동거가구	402	37.6	62.4	
	기타	4	0.0	100.0	
지역별	수도권	408	42.6	57.4	3.395
	충청권	79	32.9	67.1	
	전라권	58	36.2	63.8	
	경상권	162	38.9	61.1	
	강원/제주권	22	36.4	63.6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56	42.9	57.1	0.198
	비빈곤층	673	39.8	60.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69	37.9	62.1	1.380
	비슷	359	40.4	59.6	
	분배 중요	101	44.6	55.4	

*p<.05, **p<.01, ***p<.001

바.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등)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528)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이 54.4%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응답 4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0.0%, 만25~29세: 54.5%, 만30~34세: 57.7%) ‘빈곤 기준 강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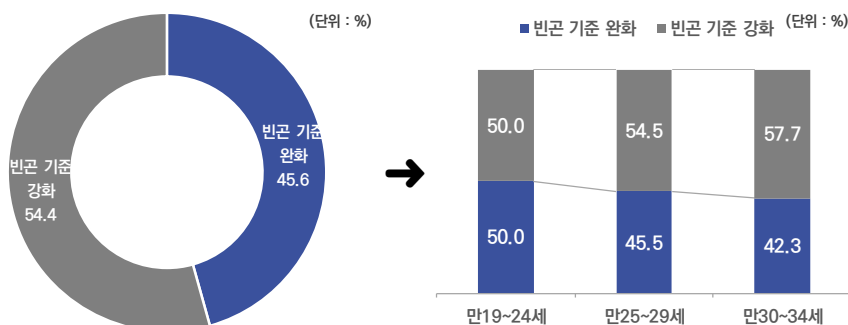


그림 IV-104.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등)에 거주하는 경우

표 IV-206.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등)에 거주하는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528	45.6	54.4	-
만19~24세	150	50.0	50.0	1.986
만25~29세	189	45.5	54.5	
만30~34세	189	42.3	57.7	

*p<.05, **p<.01, ***p<.001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등)에 거주하는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 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07.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등)에 거주하는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528	45.6	54.4	-
성별	남자	284	46.1	53.9	0.058
	여자	244	45.1	54.9	
혼인 상태	미혼	396	44.4	55.6	0.921
	기혼	124	49.2	50.8	
	사별 및 이혼	8	50.0	5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95	52.6	47.4	3.562
	대학교	391	43.2	56.8	
	대학원 이상	42	52.4	47.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59	53.5	46.5	9.063*
	비정규직취업	130	48.5	51.5	
	정규직취업	226	39.4	60.6	
	자영업,창업 등	13	30.8	69.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12	47.3	52.7	0.944
	청년 독립가구	133	46.6	53.4	
	부모 동거가구	279	44.8	55.2	
	기타	4	25.0	75.0	
지역별	수도권	295	44.7	55.3	0.755
	충청권	50	48.0	52.0	
	전라권	54	46.3	53.7	
	경상권	118	47.5	52.5	
	강원/제주권	11	36.4	63.6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47	55.3	44.7	1.947
	비빈곤층	481	44.7	55.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97	41.1	58.9	2.640
	비슷	252	48.0	52.0	
	분배 중요	79	49.4	50.6	

*p<.05, **p<.01, ***p<.001

사.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701)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 함’ 응답이 56.3%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응답 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57.7%), 만30~34세(57.3%), 만19~24세(53.8%) 순으로 ‘빈곤 기준 강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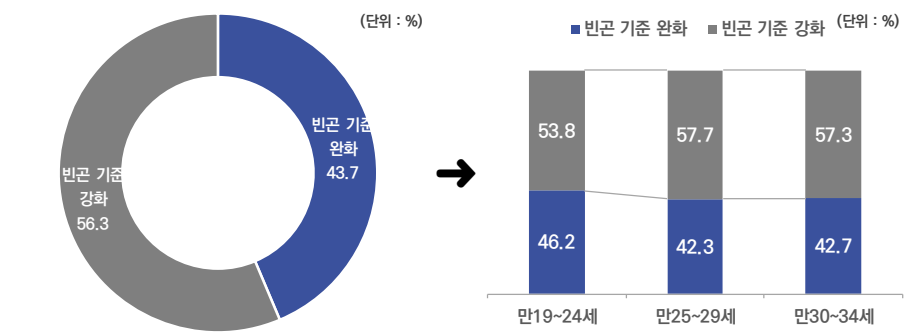


그림 IV-105.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

표 IV-208.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x ²
전체	701	43.7	56.3	-
만19~24세	221	46.2	53.8	0.831
만25~29세	253	42.3	57.7	
만30~34세	227	42.7	57.3	

*p<.05, **p<.01, ***p<.001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응답은 여성(59.9%)이 남성(5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09.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701	43.7	56.3	-
성별	남자	312	48.1	51.9	4.476*
	여자	389	40.1	59.9	
혼인 상태	미혼	542	42.8	57.2	2.269
	기혼	150	45.3	54.7	
	사별 및 이혼	9	66.7	3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29	46.5	53.5	0.664
	대학교	525	43.2	56.8	
	대학원 이상	47	40.4	59.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22	50.0	50.0	6.047
	비정규직취업	165	38.2	61.8	
	정규직취업	301	42.2	57.8	
	자영업,창업 등	13	38.5	61.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37	43.1	56.9	4.026
	청년 독립가구	150	50.7	49.3	
	부모 동거가구	411	41.4	58.6	
	기타	3	33.3	66.7	
지역별	수도권	386	44.6	55.4	2.455
	충청권	85	37.6	62.4	
	전라권	54	38.9	61.1	
	경상권	159	46.5	53.5	
	강원/제주권	17	41.2	58.8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69	40.6	59.4	0.294
	비빈곤층	632	44.0	56.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54	44.5	55.5	0.133
	비슷	339	43.4	56.6	
	분배 중요	108	42.6	57.4	

*p<.05, **p<.01, ***p<.001

아.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742)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이 57.7%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응답 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61.1%), 만 30~34세(57.2%), 만19~24세(53.6%) 순으로 ‘빈곤 기준 강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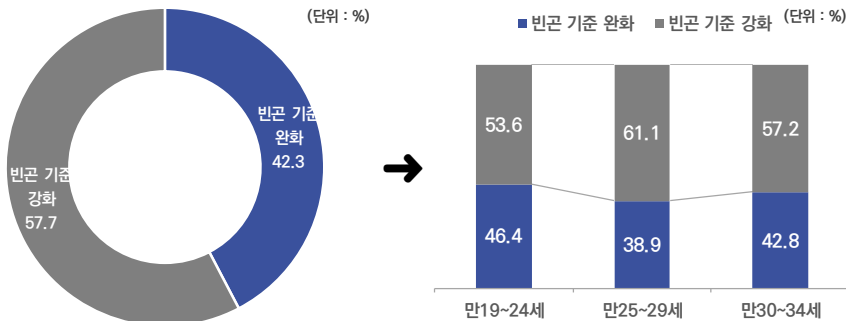


그림 IV-106.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

표 IV-210.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742	42.3	57.7	-
만19~24세	196	46.4	53.6	2.692
만25~29세	275	38.9	61.1	
만30~34세	271	42.8	57.2	

*p<.05, **p<.01, ***p<.001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규직 취업(62.6%)은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응답이, 미취업/구직중(50.2%)은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11.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742	42.3	57.7	-
성별	남자	371	45.0	2.208
	여자	371	39.6	
혼인 상태	미혼	568	42.1	1.350
	기혼	166	42.2	
	사별 및 이혼	8	62.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21	47.9	2.173
	대학교	578	41.5	
	대학원 이상	43	37.2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17	50.2	49.8	8.996*
	비정규직취업	163	42.3	57.7	
	정규직취업	350	37.4	62.6	
	자영업,창업 등	12	41.7	58.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52	41.4	58.6	0.558
	청년 독립가구	176	40.3	59.7	
	부모 동거가구	407	43.5	56.5	
	기타	7	42.9	57.1	
지역별	수도권	418	43.3	56.7	3.770
	충청권	76	39.5	60.5	
	전라권	65	47.7	52.3	
	경상권	166	41.0	59.0	
	강원/제주권	17	23.5	76.5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66	48.5	51.5	1.129
	비빈곤층	676	41.7	58.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74	38.3	61.7	4.970
	비슷	351	42.7	57.3	
	분배 중요	117	50.4	49.6	

*p<.05, **p<.01, ***p<.001

자.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550)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이 54.9%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응답 45.1%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3.6%, 만25~29세: 54.2%, 만30~34세:

56.5%) ‘빈곤 기준 강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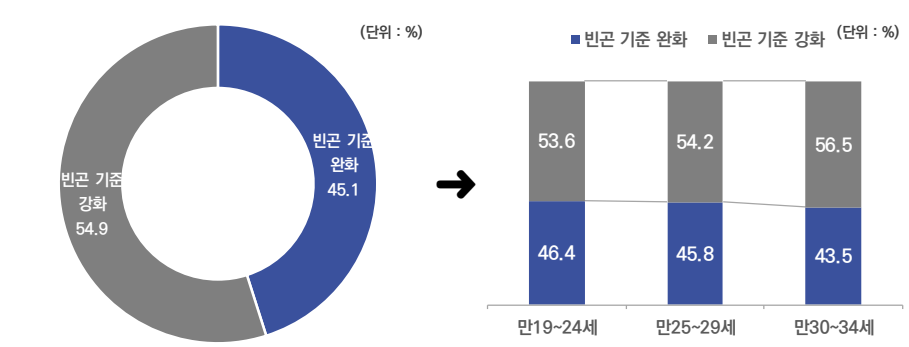


그림 IV-107.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표 IV-212.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550	45.1	54.9	-
만19~24세	151	46.4	53.6	0.358
만25~29세	192	45.8	54.2	
만30~34세	207	43.5	56.5	

*p<.05, **p<.01, ***p<.001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13.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550	45.1	54.9	-
성별	남자	274	47.8	52.2	1.631
	여자	276	42.4	57.6	
혼인 상태	미혼	411	43.1	56.9	2.697
	기혼	133	51.1	48.9	
	사별 및 이혼	6	50.0	5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95	44.2	55.8	2.107
	대학교	412	46.4	53.6	
	대학원 이상	43	34.9	65.1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63	42.3	57.7	2.987
	비정규직취업	134	45.5	54.5	
	정규직취업	247	47.4	52.6	
	자영업,창업 등	6	16.7	83.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21	51.2	48.8	2.482
	청년 독립가구	130	42.3	57.7	
	부모 동거가구	294	43.9	56.1	
	기타	5	40.0	60.0	
지역별	수도권	316	48.1	51.9	9.403
	충청권	50	34.0	66.0	
	전라권	47	44.7	55.3	
	경상권	126	45.2	54.8	
	강원/제주권	11	9.1	90.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40	45.0	55.0	0.000
	비빈곤층	510	45.1	54.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01	46.3	53.7	1.352
	비슷	265	46.0	54.0	
	분배 중요	84	39.3	60.7	

*p<.05, **p<.01, ***p<.001

차.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1,097)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이 66.6%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응답 3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19~24세: 64.4%, 만25~29세: 66.3%, 만30~34세: 68.6%) ‘빈곤 기준 강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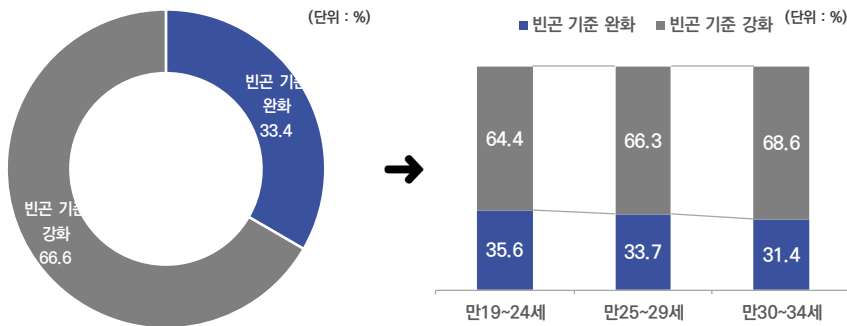


그림 IV-108.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표 IV-214.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1,097	33.4	66.6	-
만19~24세	309	35.6	64.4	1.430
만25~29세	374	33.7	66.3	
만30~34세	414	31.4	68.6	

*p<.05, **p<.01, ***p<.001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한다’ 응답은 여성(70.0%), 정규직 취업(70.6%)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15.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1,097	33.4	66.6	-
성별	남자	480	37.7	7.246**
	여자	617	30.0	
혼인 상태	미혼	862	32.0	5.504
	기혼	229	37.6	
	사별 및 이혼	6	66.7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76	36.9	1.623
	대학교	852	32.4	
	대학원 이상	69	36.2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316	38.0	62.0	8.327*
	비정규직취업	259	34.4	65.6	
	정규직취업	503	29.4	70.6	
	자영업,창업 등	19	47.4	52.6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220	36.4	63.6	2.604
	청년 독립가구	262	32.4	67.6	
	부모 동거가구	607	32.9	67.1	
	기타	8	12.5	87.5	
지역별	수도권	619	33.6	66.4	9.389
	충청권	114	28.1	71.9	
	전라권	91	27.5	72.5	
	경상권	242	39.3	60.7	
	강원/제주권	31	19.4	80.6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91	31.9	68.1	0.100
	비빈곤층	1,006	33.5	66.5	
복지 인식	성장 중요	379	34.6	65.4	0.397
	비슷	566	32.9	67.1	
	분배 중요	152	32.2	67.8	

*p<.05, **p<.01, ***p<.001

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493)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이 53.8%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함’ 응답 4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 19~24세: 50.0%, 만25~29세: 54.4%, 만30~34세: 55.8%) ‘빈곤 기준 강화’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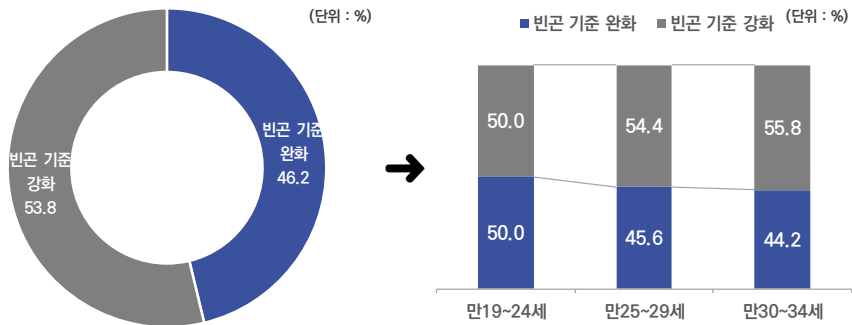


그림 IV-109.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표 IV-216.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493	46.2	53.8	-
만19~24세	130	50.0	50.0	1.072
만25~29세	182	45.6	54.4	
만30~34세	181	44.2	55.8	

*p<.05, **p<.01, ***p<.001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각 변인을 구성하는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17.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493	46.2	53.8	-
성별	남자	273	48.7	51.3	1.502
	여자	220	43.2	56.8	
혼인 상태	미혼	369	45.0	55.0	5.095
	기혼	120	48.3	51.7	
	사별 및 이혼	4	100.0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	56.9	43.1	4.404
	대학교	383	43.9	56.1	
	대학원 이상	38	50.0	50.0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47	51.0	49.0	4.532
	비정규직취업	103	44.7	55.3	
	정규직취업	231	42.9	57.1	
	자영업,창업 등	12	66.7	33.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09	48.6	51.4	2.003
	청년 독립가구	123	45.5	54.5	
	부모 동거가구	259	45.9	54.1	
	기타	2	0.0	100.0	
지역별	수도권	301	46.8	53.2	2.724
	충청권	44	43.2	56.8	
	전라권	43	51.2	48.8	
	경상권	96	45.8	54.2	
	강원/제주권	9	22.2	77.8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42	52.4	47.6	0.695
	비빈곤층	451	45.7	54.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03	43.3	56.7	2.207
	비슷	221	46.6	53.4	
	분배 중요	69	53.6	46.4	

*p<.05, **p<.01, ***p<.001

타.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n=660)를 대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응답이 60.0%로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응답 40.0%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62.9%), 만19~24세(59.5%) 만30~34세(57.5%)순으로 ‘빈곤 기준 강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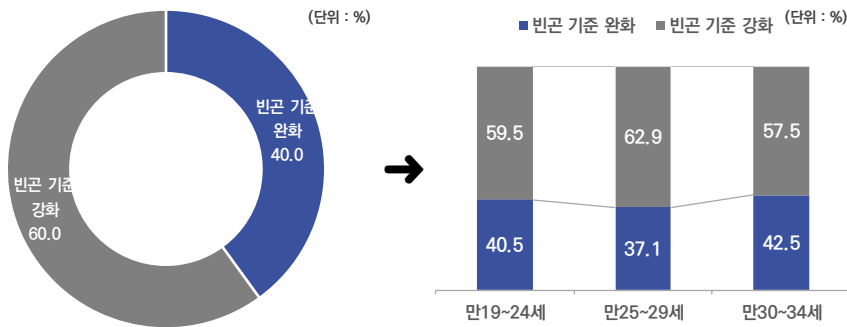


그림 IV-110.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표 IV-218.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연령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660	40.0	60.0	-
만19~24세	168	40.5	59.5	1.502
만25~29세	240	37.1	62.9	
만30~34세	252	42.5	57.5	

*p<.05, **p<.01, ***p<.001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가 빈곤층 정의의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64.4%)이 남성(54.7%)에 비해, 정규직 취업(63.6%)이 미취업/구직중(5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19.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배경변인별)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전체	660	40.0	60.0	-
성별	남자	300	45.3	6.519*
	여자	360	35.6	

구분		사례수 [명]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χ^2
혼인 상태	미혼	494	38.5	61.5	2.013
	기혼	160	44.4	55.6	
	사별 및 이혼	6	50.0	5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109	45.0	55.0	2.529
	대학교	506	38.3	61.7	
	대학원 이상	45	46.7	53.3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206	43.7	56.3	10.279*
	비정규직취업	147	40.1	59.9	
	정규직취업	302	36.4	63.6	
	자영업,창업 등	5	100.0	0.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148	43.2	56.8	1.280
	청년 독립가구	159	40.3	59.7	
	부모 동거가구	349	38.7	61.3	
	기타	4	25.0	75.0	
지역별	수도권	374	40.9	59.1	5.754
	충청권	68	33.8	66.2	
	전라권	56	44.6	55.4	
	경상권	141	41.8	58.2	
	강원/제주권	21	19.0	81.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53	50.9	49.1	2.876
	비빈곤층	607	39.0	61.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243	36.2	63.8	2.650
	비슷	328	41.5	58.5	
	분배 중요	89	44.9	55.1	

*p<.05, **p<.01, ***p<.001

(4)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추세 여부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추세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 응답이 71.1%(매우 그렇다: 16.5% + 그렇다: 54.6%)로 ‘그렇지 않다’ 응답 3.4%(전혀

그렇지 않다: 0.5% + 그렇지 않다: 3.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인식 점수는 평균 3.84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추세 여부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73.7%, 만25~29세: 72.1%, 만30~34세: 67.9%) ‘그렇다’ 응답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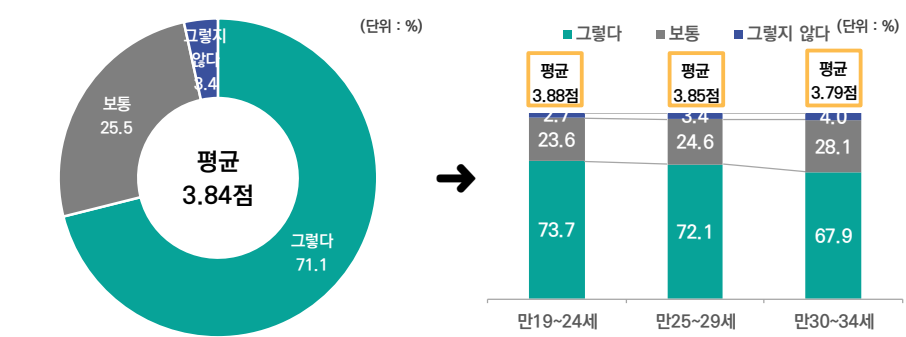


그림 IV-111.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추세 여부

표 IV-220.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추세 여부(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0.5	3.0	25.5	54.6	16.5	3.84	—
만19~24세	1,201	0.2	2.5	23.6	56.8	16.9	3.88	4.381*
만25~29세	1,503	0.5	2.9	24.6	55.4	16.6	3.85	
만30~34세	1,410	0.6	3.4	28.1	51.8	16.0	3.79	

*p<.05, **p<.01, ***p<.001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추세 여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최종학력,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3.87점), 대학교 학력(3.85점), 비정규직 취업(3.90점), 청년 독립가구 및 부모 동거가구(3.87점), 빈곤층(4.16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99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빈곤층 증가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1.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증가 추세 여부(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0.5	3.0	25.5	54.6	16.5	3.84	-
성별	남자	1,945	0.8	2.4	28.1	50.8	17.9	3.83	-0.888
	여자	2,169	0.1	3.5	23.1	58.0	15.3	3.85	
혼인 상태	미혼	3,272	0.5	2.5	24.1	55.2	17.7	3.87	16.857***
	기혼	824	0.5	4.7	30.5	52.2	12.1	3.71	
	사별 및 이혼	18	0.0	0.0	44.4	50.0	5.6	3.61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0.4	2.3	29.5	52.0	15.8	3.80	3.654*
	대학교	3,195	0.4	3.1	24.3	55.5	16.8	3.85	
	대학원 이상	190	1.6	3.7	30.5	49.5	14.7	3.7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0.5	2.1	29.0	51.1	17.3	3.82	3.626*
	비정규직취업	1,045	0.4	2.1	22.6	56.8	18.1	3.90	
	정규직취업	1,679	0.5	4.2	24.2	56.5	14.7	3.81	
	자영업,창업 등	60	0.0	3.3	33.3	41.7	21.7	3.8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0.5	4.9	29.3	53.3	12.0	3.71	8.804***
	청년 독립가구	1,007	0.7	2.7	24.5	53.5	18.6	3.87	
	부모 동거가구	2,316	0.3	2.5	24.4	55.8	17.0	3.87	
	기타	33	0.0	3.0	42.4	30.3	24.2	3.76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F/t
지역별	수도권	2,276	0.5	2.8	25.3	55.0	16.4	3.84	0.652
	충청권	410	0.5	2.7	23.9	55.6	17.3	3.87	
	전라권	364	0.8	2.7	28.6	53.0	14.8	3.78	
	경상권	923	0.1	3.6	25.7	53.3	17.3	3.84	
	강원/제주권	141	0.7	2.8	24.1	57.4	14.9	3.8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6	1.6	17.3	38.6	40.9	4.16	7.620***
	비빈곤층	3,733	0.3	3.1	26.3	56.2	14.0	3.8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0.7	4.0	22.5	55.7	17.2	3.85	16.282***
	비슷	2,252	0.2	2.6	29.4	53.3	14.5	3.79	
	분배 중요	597	0.8	2.3	16.9	57.1	22.8	3.99	

*p<.05, **p<.01, ***p<.001

(5)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심각하다’ 응답이 68.2%(매우 심각하다: 19.0% + 심각하다: 49.2%)로 ‘심각하지 않다’ 응답 3.5% (전혀 심각하지 않다: 0.5% + 심각하지 않다: 3.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 점수는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70.6%, 만25~29세: 68.5%, 만30~34세: 66.0%) 심각하다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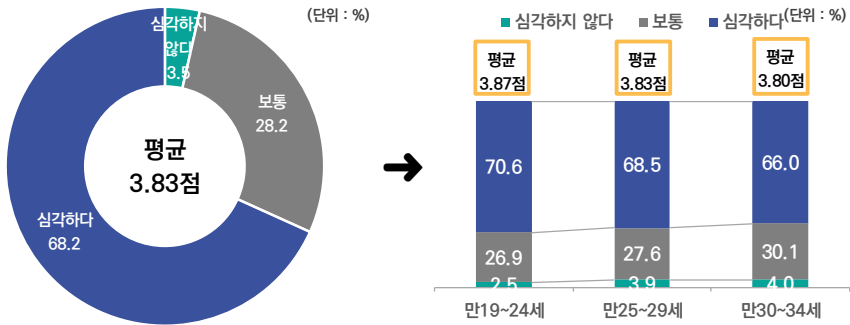


그림 IV-112.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

표 IV-222.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0.5	3.0	28.2	49.2	19.0	3.83	—
만19~24세	1,201	0.2	2.3	26.9	51.5	19.1	3.87	2.562
만25~29세	1,503	0.5	3.5	27.6	49.3	19.2	3.83	
만30~34세	1,410	0.8	3.2	30.1	47.1	18.9	3.80	

*p<.05, **p<.01, ***p<.001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3.87점), 비정규직 취업(3.91점), 부모 동거가구(3.88점), 빈곤층(4.19점), 복지인식 분배중요(4.02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3. 한국사회 청년 빈곤 문제 심각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보통 이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0.5	3.0	28.2	49.2	19.0	3.83	-
성별	남자	1,945	0.6	3.4	29.1	46.5	20.4	3.83	-0.488
	여자	2,169	0.4	2.7	27.5	51.6	17.8	3.84	
혼인 상태	미혼	3,272	0.4	2.7	26.8	49.8	20.4	3.87	20.026***
	기혼	824	0.7	4.5	33.4	47.6	13.8	3.69	
	사별 및 이혼	18	0.0	5.6	61.1	22.2	11.1	3.3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0.4	3.0	30.3	47.1	19.2	3.82	1.201
	대학교	3,195	0.4	3.2	27.5	49.8	19.1	3.84	
	대학원 이상	190	2.6	0.5	32.1	47.9	16.8	3.7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0.3	2.5	29.3	48.4	19.5	3.84	7.347***
	비정규직취업	1,045	0.1	2.5	24.8	51.2	21.4	3.91	
	정규직취업	1,679	0.9	3.8	29.5	48.9	16.9	3.77	
	자영업,창업 등	60	0.0	5.0	28.3	40.0	26.7	3.8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0.7	4.5	32.5	48.4	14.0	3.71	9.575***
	청년 독립가구	1,007	0.7	3.4	29.4	45.7	20.9	3.83	
	부모 동거가구	2,316	0.3	2.4	26.3	51.2	19.8	3.88	
	기타	33	3.0	3.0	36.4	33.3	24.2	3.73	
지역별	수도권	2,276	0.6	2.9	28.6	49.1	18.8	3.83	1.659
	충청권	410	0.2	2.4	22.9	54.1	20.2	3.92	
	전라권	364	0.0	3.3	31.9	47.0	17.9	3.79	
	경상권	923	0.5	3.6	28.4	48.4	19.1	3.82	
	강원/제주권	141	0.0	3.5	27.0	47.5	22.0	3.88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0.8	3.1	15.2	38.1	42.8	4.19	8.559***
	비빈곤층	3,733	0.5	3.0	29.6	50.3	16.6	3.8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0.7	5.2	23.7	49.9	20.5	3.84	22.727***
	비슷	2,252	0.4	1.9	33.5	48.1	16.2	3.78	
	분배 중요	597	0.5	2.7	18.1	51.9	26.8	4.02	

*p<.05, **p<.01, ***p<.001

(6)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가능’ 응답이 30.7%(전혀 가능하지 않다: 6.0% + 가능하지 않다: 24.7%)로 ‘가능’ 응답 25.6%(매우 가능하다: 3.4% + 가능하다: 22.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 탈출 가능성 점수는 평균 2.92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28.3%, 만25~29세: 30.3%, 만30~34세: 33.2%) 탈출 불가능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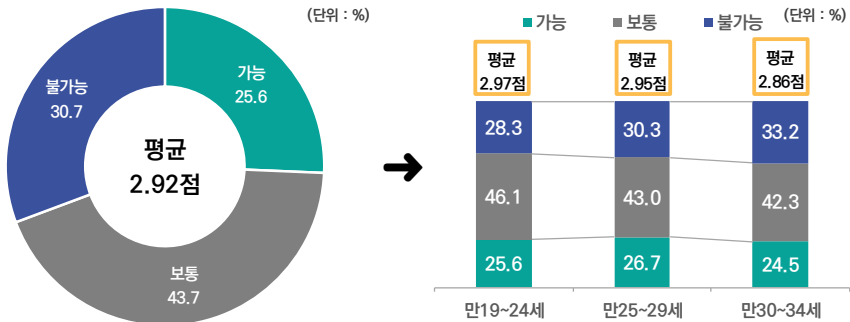


그림 IV-113.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

표 IV-224.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보통이다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5점 평균	F
전체	4,114	6.0	24.7	43.7	22.2	3.4	2.92	-
만19~24세	1,201	3.3	25.0	46.1	22.3	3.2	2.97	5.568**
만25~29세	1,503	6.4	23.9	43.0	22.2	4.5	2.95	
만30~34세	1,410	7.7	25.5	42.3	22.2	2.3	2.86	

*p<.05, **p<.01, ***p<.001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2.87점), 부모 동거가구(2.87점), 빈곤층(2.58점), 복지인식 분배중요(2.83)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빈곤 탈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225. 한국사회 청년 빈곤층의 빈곤 탈출 가능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가능 하지 않다	가능 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 하다	매우 가능 하다	5점 평균	F/t
전체		4,114	6.0	24.7	43.7	22.2	3.4	2.92	-
성별	남자	1,945	8.0	24.0	40.5	23.2	4.3	2.92	-0.407
	여자	2,169	4.1	25.4	46.5	21.4	2.6	2.93	
혼인 상태	미혼	3,272	6.4	26.3	43.9	20.2	3.1	2.87	25.807***
	기혼	824	4.2	18.4	42.4	30.3	4.6	3.13	
	사별 및 이혼	18	0.0	22.2	55.6	16.7	5.6	3.0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5.3	25.2	47.2	20.0	2.2	2.88	2.866
	대학교	3,195	6.0	24.9	43.4	22.2	3.5	2.92	
	대학원 이상	190	7.9	20.5	34.7	31.1	5.8	3.06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5.9	24.1	47.6	19.3	3.0	2.89	1.516
	비정규직취업	1,045	5.7	24.0	41.8	24.6	3.8	2.97	
	정규직취업	1,679	6.1	26.0	41.5	23.0	3.5	2.92	
	자영업,창업 등	60	6.7	16.7	48.3	25.0	3.3	3.0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4.4	18.9	42.1	30.2	4.5	3.12	15.055***
	청년 독립가구	1,007	7.1	25.0	41.8	21.9	4.2	2.91	
	부모 동거가구	2,316	5.9	26.6	44.8	19.9	2.8	2.87	
	기타	33	15.2	18.2	54.5	12.1	0.0	2.64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가능 하지 않다	가능 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 하다	매우 가능 하다	5점 평균	F/t
지역별	수도권	2,276	6.0	25.5	42.6	22.5	3.5	2.92	1.164
	충청권	410	5.9	27.3	42.0	21.7	3.2	2.89	
	전라권	364	4.4	21.7	48.4	21.2	4.4	2.99	
	경상권	923	6.8	23.6	44.3	22.4	2.8	2.91	
	강원/제주권	141	4.3	19.9	49.6	22.0	4.3	3.02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1.8	26.5	29.7	16.0	6.0	2.58	-6.156***
	비빈곤층	3,733	4.3	24.6	45.1	22.9	3.1	2.96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5.8	24.6	38.4	26.7	4.5	3.00	7.658***
	비슷	2,252	5.2	22.7	50.2	19.4	2.4	2.91	
	분배 중요	597	9.0	32.7	30.0	23.3	5.0	2.83	

*p<.05, **p<.01, ***p<.001

(7) 청년 빈곤의 원인

가.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53.8%(매우 중요함: 15.7% + 중요함: 38.1%)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13.8%(전혀 중요하지 않음: 3.9% + 중요하지 않음: 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57.0%), 만30~34세(52.5%), 만25~29세(52.4%) 순으로 중요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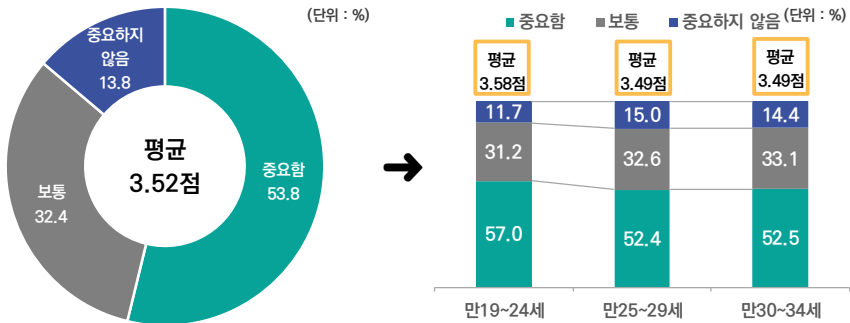


그림 IV-114.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표 IV-226.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3.9	9.9	32.4	38.1	15.7	3.52	-
만19~24세	1,201	3.3	8.4	31.2	40.8	16.2	3.58	3.573*
만25~29세	1,503	4.0	11.0	32.6	36.9	15.6	3.49	
만30~34세	1,410	4.3	10.1	33.1	37.2	15.3	3.49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최종학력, 취업상태, 복지인식, 성별, 가구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57점), 미혼(3.54점), 고등학교 이하 학력(3.60점), 정규직 취업(3.58점), 부모 동거가구(3.56점), 복지인식 성장중요(3.62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7.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3.9	9.9	32.4	38.1	15.7	3.52	-
성별	남자	1,945	5.4	10.6	32.4	35.2	16.3	3.46	-3.332**
	여자	2,169	2.5	9.3	32.3	40.8	15.1	3.57	
혼인 상태	미혼	3,272	3.3	9.8	32.0	39.2	15.7	3.54	11.842***
	기혼	824	5.8	10.1	34.3	33.7	16.0	3.44	
	사별 및 이혼	18	27.8	22.2	16.7	33.3	0.0	2.5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4.0	7.7	32.4	36.6	19.3	3.60	11.025***
	대학교	3,195	3.5	10.1	32.6	39.1	14.8	3.52	
	대학원 이상	190	11.1	15.8	29.5	27.9	15.8	3.2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4.5	11.6	35.0	35.0	14.0	3.42	6.404***
	비정규직취업	1,045	4.2	8.8	32.3	39.0	15.6	3.53	
	정규직취업	1,679	3.2	9.3	30.6	40.0	17.0	3.58	
	자영업,창업 등	60	5.0	10.0	26.7	40.0	18.3	3.5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5.3	9.8	33.4	34.8	16.8	3.48	3.028*
	청년 독립가구	1,007	4.5	10.9	34.7	34.7	15.3	3.45	
	부모 동거가구	2,316	3.2	9.5	31.1	40.7	15.5	3.56	
	기타	33	9.1	9.1	27.3	36.4	18.2	3.45	
지역별	수도권	2,276	4.0	10.3	32.5	37.9	15.3	3.50	1.005
	충청권	410	2.7	10.0	32.0	37.8	17.6	3.58	
	전라권	364	2.7	8.5	30.8	43.4	14.6	3.59	
	경상권	923	5.1	9.3	33.0	36.0	16.6	3.50	
	강원/제주권	141	2.1	10.6	31.2	43.3	12.8	3.54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5.0	9.7	33.3	29.7	22.3	3.55	0.543
	비빈곤층	3,733	3.8	9.9	32.3	39.0	15.0	3.5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4.1	8.8	27.8	40.1	19.2	3.62	11.051***
	비중요	2,252	2.9	9.8	36.1	37.6	13.7	3.49	
	분배 중요	597	7.4	12.9	28.1	35.8	15.7	3.40	

*p<.05, **p<.01, ***p<.001

나.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52.9%(매우 중요함: 17.2% + 중요함: 35.7%)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15.0%(전혀 중요하지 않음: 3.4% + 중요하지 않음: 1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54.3%), 만30~34세(52.6%), 만25~29세(52.0%) 순으로 중요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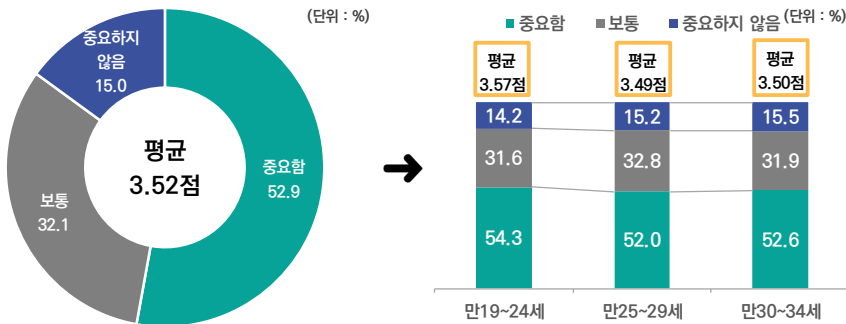


그림 IV-115.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표 IV-228.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3.4	11.6	32.1	35.7	17.2	3.52	-
만19~24세	1,201	2.7	11.4	31.6	35.0	19.3	3.57	2.120
만25~29세	1,503	3.5	11.6	32.8	36.3	15.7	3.49	
만30~34세	1,410	3.7	11.8	31.9	35.6	17.0	3.50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복지인식, 최종 학력,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56점), 미혼(3.52점), 고등학교 이하 학력(3.56점), 정규직 취업(3.59점) 및 자영업, 창업 등(3.68점), 복지인식 성장중요(3.62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9.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3.4	11.6	32.1	35.7	17.2	3.52	-
성별	남자	1,945	4.1	13.5	31.1	33.7	17.7	-2.534*
	여자	2,169	2.7	10.0	33.1	37.5	16.7	
혼인 상태	미혼	3,272	3.2	11.6	32.4	35.5	17.4	8.200***
	기혼	824	3.6	11.3	31.7	37.0	16.4	
	사별 및 이혼	18	22.2	38.9	11.1	16.7	11.1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3	12.2	32.0	34.0	19.5	3.56	5.967**
	대학교	3,195	3.3	11.2	32.2	36.6	16.7	3.52	
	대학원 이상	190	7.4	17.4	31.6	27.4	16.3	3.2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9	13.7	34.3	33.7	14.4	3.41	8.596***
	비정규직취업	1,045	3.1	11.4	34.1	33.3	18.2	3.52	
	정규직취업	1,679	3.0	10.4	29.4	38.7	18.5	3.59	
	자영업, 창업 등	60	5.0	6.7	26.7	38.3	23.3	3.6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4	10.9	30.6	38.0	17.0	3.54	0.608
	청년 독립가구	1,007	4.2	11.3	34.3	32.7	17.6	3.48	
	부모 동거가구	2,316	3.0	12.0	31.7	36.4	16.9	3.52	
	기타	33	3.0	15.2	33.3	21.2	27.3	3.55	
지역별	수도권	2,276	3.3	12.6	31.4	34.6	18.1	3.52	0.300
	충청권	410	3.4	11.5	32.9	37.6	14.6	3.49	
	전라권	364	3.0	10.4	31.3	40.7	14.6	3.53	
	경상권	923	4.0	9.9	33.4	36.2	16.6	3.51	
	강원/제주권	141	0.7	12.1	35.5	31.2	20.6	3.5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6.6	10.5	28.9	31.5	22.6	3.53	0.239
	비빈곤층	3,733	3.0	11.8	32.5	36.1	16.6	3.52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7	10.0	27.7	37.6	21.0	3.62	16.132***
	비슷	2,252	2.4	11.2	35.3	35.7	15.4	3.50	
	분배 중요	597	6.2	16.8	29.6	31.5	15.9	3.34	

*p<.05, **p<.01, ***p<.001

다.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39.4%(매우 중요함: 10.6% + 중요함: 28.8%)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20.6%(전혀 중요하지 않음: 4.0% + 중요하지 않음: 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 3.25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42.0%), 만25~29세(38.8%), 만 30~34세(37.9%) 순으로 중요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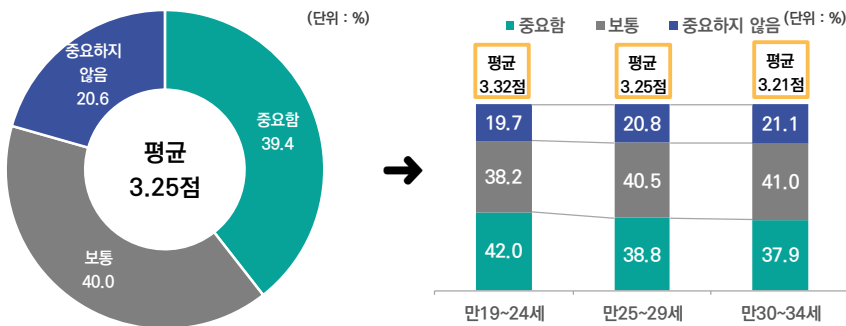


그림 IV-116.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표 IV-230.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4.0	16.6	40.0	28.8	10.6	3.25	-
만19~24세	1,201	3.1	16.7	38.2	29.4	12.7	3.32	4.265*
만25~29세	1,503	4.2	16.6	40.5	27.7	11.0	3.25	
만30~34세	1,410	4.5	16.6	41.0	29.4	8.4	3.21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복지인식, 혼인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3.26점), 복지인식 성장중요(3.37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31.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4.0	16.6	40.0	28.8	10.6	3.25	-
성별	남자	1,945	4.6	15.9	37.7	30.1	11.6	3.28
	여자	2,169	3.4	17.2	42.0	27.6	9.8	
혼인 상태	미혼	3,272	3.9	16.8	39.7	28.4	11.3	4.141*
	기혼	824	4.0	15.8	41.3	30.7	8.3	
	사별 및 이혼	18	22.2	16.7	38.9	22.2	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4.1	15.8	39.8	27.3	13.0	0.752
	대학교	3,195	3.8	16.7	40.3	29.1	10.0	
	대학원 이상	190	5.8	18.4	35.3	28.9	11.6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4.5	17.1	41.5	26.5	10.4	3.21	1.319
	비정규직취업	1,045	4.1	15.9	39.4	29.3	11.3	3.28	
	정규직취업	1,679	3.5	16.9	38.8	30.3	10.5	3.27	
	자영업,창업 등	60	5.0	8.3	48.3	30.0	8.3	3.2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6	16.0	40.9	31.4	8.2	3.25	0.336
	청년 독립가구	1,007	5.2	16.7	39.7	26.5	11.9	3.23	
	부모 동거가구	2,316	3.6	16.9	39.6	29.1	10.8	3.27	
	기타	33	3.0	9.1	54.5	18.2	15.2	3.33	
지역별	수도권	2,276	3.6	17.0	39.4	28.7	11.2	3.27	0.640
	충청권	410	4.6	17.6	41.0	27.6	9.3	3.19	
	전라권	364	4.9	14.8	38.5	30.8	11.0	3.28	
	경상권	923	4.2	16.1	40.3	29.4	10.0	3.25	
	강원/제주권	141	3.5	14.2	48.2	25.5	8.5	3.21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5.2	16.8	32.8	27.3	17.8	3.36	1.901
	비빈곤층	3,733	3.9	16.6	40.7	29.0	9.9	3.24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6	14.9	36.0	32.3	13.2	3.37	15.098***
	비상	2,252	3.2	16.4	43.8	27.5	9.1	3.23	
	분배 중요	597	7.9	20.9	34.0	26.3	10.9	3.11	

*p<.05, **p<.01, ***p<.001

라.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54.8%(매우 중요함: 19.3% + 중요함: 35.6%)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13.3%(전혀 중요하지 않음: 3.2% + 중요하지 않음: 1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 3.58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의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56.0%), 만30~34세(54.8%), 만25~29세(54.0%) 순으로 중요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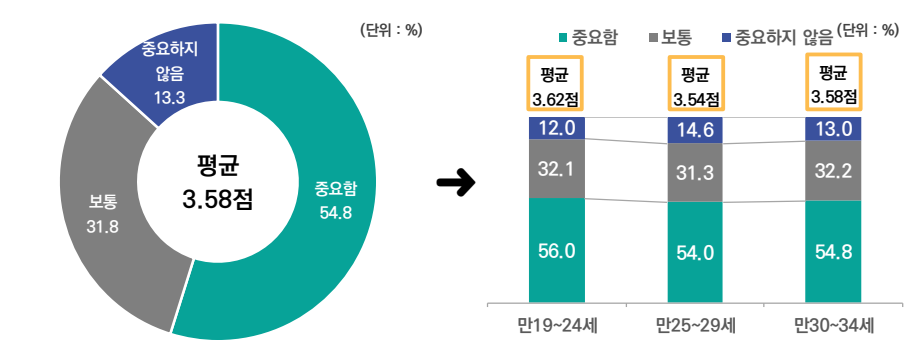


그림 IV-117.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표 IV-232.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3.2	10.2	31.8	35.6	19.3	3.58	-
만19~24세	1,201	2.7	9.3	32.1	35.0	21.0	3.62	2.500
만25~29세	1,503	3.5	11.1	31.3	36.3	17.7	3.54	
만30~34세	1,410	3.2	9.9	32.2	35.2	19.5	3.58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취업상태,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63점), 미혼(3.59점), 고등학교 이하 학력(3.64점), 정규직

취업(3.66점) 및 자영업, 창업 등(3.73점), 복지인식 성장중요(3.68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33.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3.2	10.2	31.8	35.6	19.3	3.58	-
성별	남자	1,945	4.1	11.0	32.4	34.3	18.2	3.52	-3.637***
	여자	2,169	2.3	9.5	31.4	36.7	20.2	3.63	
혼인 상태	미혼	3,272	3.1	10.0	31.6	35.3	20.1	3.59	10.671***
	기혼	824	3.3	10.6	32.6	37.1	16.4	3.53	
	사별 및 이혼	18	16.7	27.8	38.9	16.7	0.0	2.5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9	8.0	32.9	34.7	21.5	3.64	2.175
	대학교	3,195	3.2	10.6	31.4	36.2	18.7	3.57	
	대학원 이상	190	3.7	11.6	35.8	28.9	20.0	3.50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7	11.2	35.9	32.0	17.1	3.48	8.901***
	비정규직취업	1,045	3.2	10.1	32.1	37.2	17.4	3.56	
	정규직취업	1,679	2.7	9.4	28.5	37.7	21.7	3.66	
	자영업, 창업 등	60	3.3	8.3	31.7	25.0	31.7	3.7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2	10.2	32.5	36.8	17.4	3.55	0.735
	청년 독립가구	1,007	3.6	10.4	30.8	37.3	17.9	3.56	
	부모 동거가구	2,316	3.0	10.1	32.0	34.5	20.6	3.60	
	기타	33	3.0	9.1	42.4	30.3	15.2	3.45	
지역별	수도권	2,276	3.1	10.1	31.6	35.6	19.6	3.58	0.160
	충청권	410	3.4	10.2	33.9	32.7	19.8	3.55	
	전라권	364	3.3	9.1	31.6	38.2	17.9	3.58	
	경상권	923	3.5	10.3	31.9	35.3	19.1	3.56	
	강원/제주권	141	1.4	12.1	30.5	37.6	18.4	3.6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6.3	8.7	30.4	28.9	25.7	3.59	0.258
	비빈곤층	3,733	2.8	10.3	32.0	36.2	18.6	3.57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2	8.9	28.1	36.7	23.1	3.68	11.789***
	비슷	2,252	2.5	10.0	34.5	35.6	17.5	3.56	
	분배 중요	597	5.7	13.4	29.8	33.0	18.1	3.44	

*p<.05, **p<.01, ***p<.001

마.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51.2%(매우 중요함: 15.4% + 중요함: 35.8%)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12.5%(전혀 중요하지 않음: 2.7% + 중요하지 않음: 9.8%)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 3.51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의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19~24세(53.0%), 만25~29세(50.5%), 만30~34세(50.4%) 순으로 중요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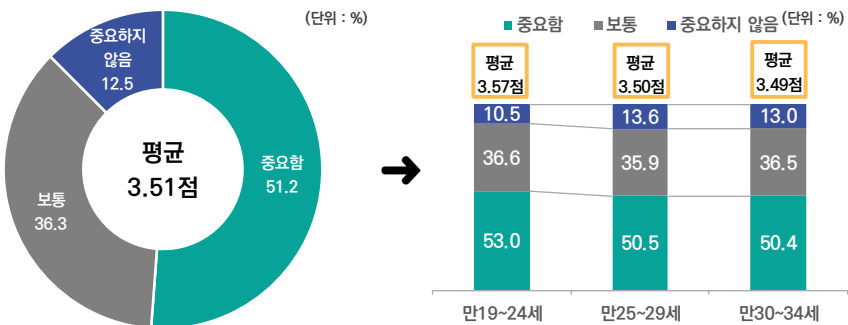


그림 IV-118.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표 IV-234.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2.7	9.8	36.3	35.8	15.4	3.51	-
만19~24세	1,201	2.0	8.5	36.6	36.6	16.3	3.57	2.664
만25~29세	1,503	3.1	10.5	35.9	34.7	15.8	3.50	
만30~34세	1,410	2.8	10.2	36.5	36.2	14.3	3.49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가구유형,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57점), 미혼(3.54점), 부모 동거가구(3.56점), 빈곤층(3.67점), 복지인식 성장중요(3.57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35.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2.7	9.8	36.3	35.8	15.4	3.51	-
성별	남자	1,945	3.4	11.1	37.1	33.4	15.0	3.45	-3.839***
	여자	2,169	2.0	8.7	35.6	37.9	15.8	3.57	
혼인 상태	미혼	3,272	2.5	9.5	35.9	35.9	16.2	3.54	12.285***
	기혼	824	3.2	10.4	38.1	35.4	12.9	3.44	
	사별 및 이혼	18	16.7	33.3	27.8	22.2	0.0	2.56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7	10.8	37.7	31.8	16.9	3.49	1.084
	대학교	3,195	2.6	9.4	36.2	36.8	15.1	3.52	
	대학원 이상	190	4.2	13.7	32.6	33.7	15.8	3.43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6	9.8	38.8	33.0	15.7	3.49	0.472
	비정규직취업	1,045	3.3	9.1	36.2	35.7	15.7	3.51	
	정규직취업	1,679	2.3	10.3	34.5	37.8	15.1	3.53	
	자영업, 창업 등	60	1.7	8.3	35.0	40.0	15.0	3.58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2.8	10.4	37.1	36.8	12.9	3.47	3.262*
	청년 독립가구	1,007	3.3	10.7	37.1	34.4	14.5	3.46	
	부모 동거가구	2,316	2.3	9.3	35.7	36.0	16.7	3.56	
	기타	33	9.1	3.0	39.4	36.4	12.1	3.39	
지역별	수도권	2,276	2.7	9.7	36.2	35.6	15.8	3.52	1.496
	충청권	410	2.4	12.4	35.1	34.1	15.9	3.49	
	전라권	364	2.7	9.1	34.6	38.7	14.8	3.54	
	경상권	923	3.0	9.2	38.9	34.7	14.2	3.48	
	강원/제주권	141	0.7	9.9	29.1	41.8	18.4	3.67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1	8.9	31.5	30.4	26.0	3.67	3.087**
	비빈곤층	3,733	2.6	9.9	36.8	36.3	14.4	3.5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2.2	10.7	33.2	35.7	18.2	3.57	3.651*
	비슷	2,252	2.4	8.7	39.4	35.6	13.9	3.50	
	분배 중요	597	4.7	12.4	31.2	36.5	15.2	3.45	

*p<.05, **p<.01, ***p<.001

바.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38.8%(매우 중요함: 9.6% + 중요함: 29.2%)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21.1%(전혀 중요하지 않음: 4.7% + 중요하지 않음: 16.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 3.23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의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40.0%, 만25~29세: 39.6%, 만30~34세: 37.0%) 중요함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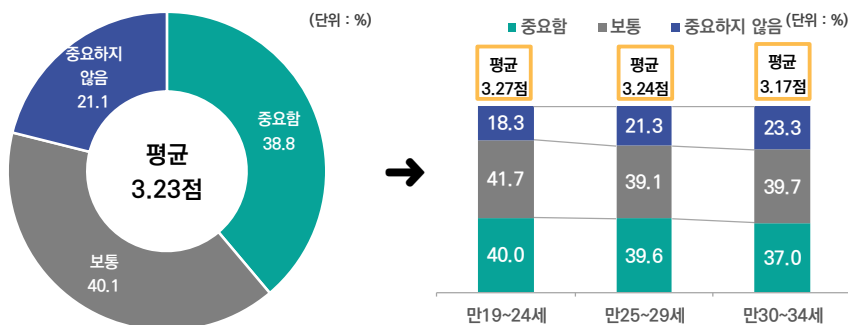


그림 IV-119.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표 IV-236.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4.7	16.4	40.1	29.2	9.6	3.23	-
만19~24세	1,201	4.1	14.2	41.7	30.2	9.7	3.27	3.759*
만25~29세	1,503	4.6	16.7	39.1	29.1	10.5	3.24	
만30~34세	1,410	5.2	18.0	39.7	28.4	8.6	3.17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곤층(3.37점), 복지인식 성장중요(3.27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37.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4.7	16.4	40.1	29.2	9.6	3.23	-
성별	남자	1,945	5.5	16.8	37.3	30.4	10.0	3.23	-0.035
	여자	2,169	3.9	16.1	42.6	28.1	9.3	3.23	
혼인 상태	미혼	3,272	4.7	16.3	40.0	29.0	10.0	3.23	2.105
	기혼	824	4.4	17.1	40.3	29.9	8.4	3.21	
	사별 및 이혼	18	16.7	16.7	38.9	27.8	0.0	2.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4.7	15.0	40.5	30.3	9.6	3.25	0.860
	대학교	3,195	4.5	16.5	40.3	29.2	9.5	3.23	
	대학원 이상	190	7.4	20.5	34.7	24.7	12.6	3.15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4.4	16.4	41.2	27.9	10.2	3.23	0.443
	비정규직취업	1,045	4.7	15.6	39.7	30.9	9.1	3.24	
	정규직취업	1,679	4.8	17.0	39.5	29.1	9.6	3.22	
	자영업, 창업 등	60	8.3	16.7	38.3	30.0	6.7	3.1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4.1	17.3	40.1	29.9	8.6	3.22	1.400
	청년 독립가구	1,007	5.9	17.5	37.6	29.2	9.8	3.20	
	부모 동거가구	2,316	4.4	15.8	41.1	29.0	9.7	3.24	
	기타	33	3.0	9.1	42.4	24.2	21.2	3.52	
지역별	수도권	2,276	4.4	16.3	40.1	29.2	9.9	3.24	0.754
	충청권	410	5.1	16.6	42.9	28.5	6.8	3.15	
	전라권	364	4.9	18.1	34.6	31.9	10.4	3.25	
	경상권	923	5.1	15.9	41.3	27.5	10.2	3.22	
	강원/제주권	141	3.5	16.3	37.6	34.8	7.8	3.27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5.8	12.6	37.3	27.8	16.5	3.37	2.693**
	비빈곤층	3,733	4.6	16.8	40.4	29.3	8.9	3.2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4.7	16.8	36.1	31.1	11.2	3.27	3.282*
	비슷	2,252	3.9	15.5	43.8	28.3	8.5	3.22	
	분배 중요	597	7.5	19.3	34.3	28.3	10.6	3.15	

*p<.05, **p<.01, ***p<.001

사.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63.3%(매우 중요함: 25.2% + 중요함: 38.2%)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7.6%(전혀 중요하지 않음: 1.8% + 중요하지 않음: 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 3.79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의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64.5%), 만19~24세(64.4%), 만30~34세(61.2%) 순으로 중요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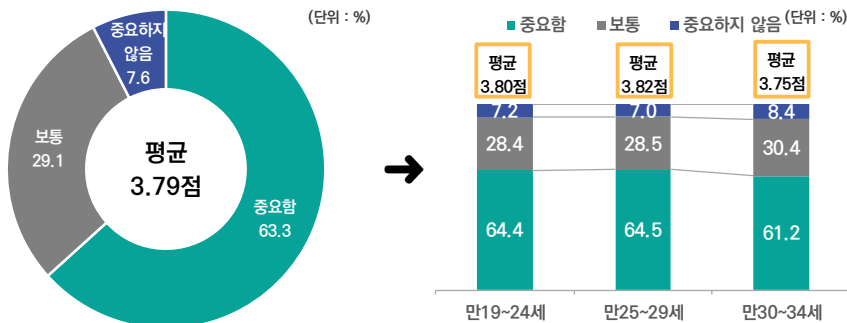


그림 IV-120.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표 IV-238.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1.8	5.8	29.1	38.2	25.2	3.79	-
만19~24세	1,201	1.3	5.9	28.4	40.5	23.9	3.80	1.830
만25~29세	1,503	1.9	5.1	28.5	38.0	26.5	3.82	
만30~34세	1,410	2.1	6.3	30.4	36.4	24.8	3.75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최종학력,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87점), 미혼(3.84점), 대학교 학력(3.82점), 비정규직 취업(3.83점), 부모 동거가구(3.85점), 빈곤층(3.96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94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39.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1.8	5.8	29.1	38.2	25.2	3.79	-
성별	남자	1,945	2.3	7.1	31.2	36.3	23.1	3.71	-5.352***
	여자	2,169	1.4	4.5	27.2	39.8	27.0	3.87	
혼인 상태	미혼	3,272	1.4	5.2	27.8	38.7	26.9	3.84	29.483***
	기혼	824	2.8	8.1	34.1	36.2	18.8	3.60	
	사별 및 이혼	18	22.2	5.6	33.3	33.3	5.6	2.94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1.9	5.9	31.7	37.3	23.2	3.74	6.725**
	대학교	3,195	1.7	5.5	28.4	38.5	25.9	3.82	
	대학원 이상	190	3.7	9.5	31.1	36.3	19.5	3.5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1	6.4	31.4	37.3	22.9	3.72	3.920**
	비정규직취업	1,045	1.3	5.2	28.4	38.9	26.2	3.83	
	정규직취업	1,679	1.8	5.5	27.8	38.3	26.6	3.82	
	자영업, 창업 등	60	1.7	8.3	30.0	41.7	18.3	3.6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2.5	8.2	33.2	36.9	19.1	3.62	11.808***
	청년 독립가구	1,007	2.2	5.1	30.2	36.1	26.4	3.80	
	부모 동거가구	2,316	1.4	5.3	27.0	39.7	26.6	3.85	
	기타	33	3.0	3.0	51.5	18.2	24.2	3.58	
지역별	수도권	2,276	2.0	6.0	29.1	37.3	25.6	3.78	0.912
	충청권	410	1.0	5.9	28.3	39.0	25.9	3.83	
	전라권	364	1.4	5.5	29.9	38.7	24.5	3.79	
	경상권	923	1.8	5.2	30.6	38.9	23.5	3.77	
	강원/제주권	141	1.4	6.4	20.6	42.6	29.1	3.91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1	3.4	25.2	30.7	37.5	3.96	3.682***
	비빈곤층	3,733	1.7	6.0	29.5	38.9	23.9	3.7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2.3	7.6	28.6	38.3	23.2	3.72	10.726***
	비슷	2,252	1.2	5.0	31.7	37.9	24.2	3.79	
	분배 중요	597	3.0	4.7	20.4	38.9	33.0	3.94	

*p<.05, **p<.01, ***p<.001

아.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51.3%(매우 중요함: 15.6% + 중요함: 35.8%)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12.8%(전혀 중요하지 않음: 2.7% + 중요하지 않음: 1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 3.51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5.0%, 만25~29세: 51.6%, 만30~34세: 47.9%) 중요함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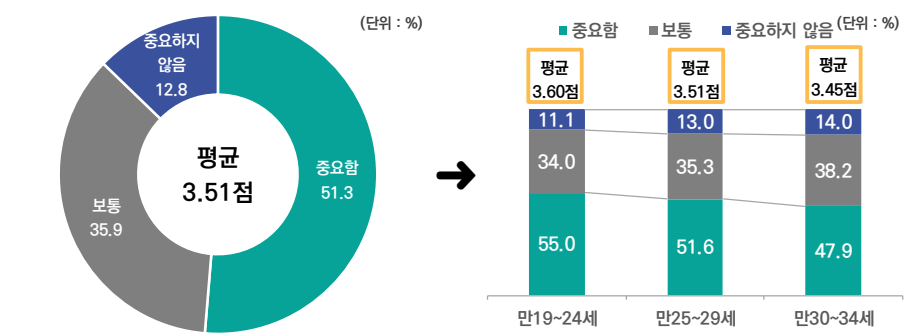


그림 IV-121.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표 IV-240.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2.7	10.1	35.9	35.8	15.6	3.51	—
만19~24세	1,201	2.2	8.9	34.0	36.3	18.7	3.60	8.826***
만25~29세	1,503	3.0	10.0	35.3	36.6	15.0	3.51	
만30~34세	1,410	2.8	11.2	38.2	34.4	13.5	3.45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성별, 최종학력,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56점), 미혼(3.54점), 고등학교 이하 학력(3.55점), 비정규직 취업(3.62점), 부모 동거가구(3.57점), 빈곤층(3.63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62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41.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2.7	10.1	35.9	35.8	15.6	3.51	-
성별	남자	1,945	3.7	10.9	35.5	35.5	14.4	3.46	-3.306**
	여자	2,169	1.8	9.4	36.2	36.0	16.6	3.56	
혼인 상태	미혼	3,272	2.6	9.4	35.9	35.4	16.7	3.54	11.127***
	기혼	824	2.7	12.5	35.9	37.6	11.3	3.42	
	사별 및 이혼	18	16.7	27.8	33.3	11.1	11.1	2.72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6	8.6	36.8	35.5	16.5	3.55	4.270*
	대학교	3,195	2.5	10.2	35.7	36.3	15.4	3.52	
	대학원 이상	190	5.8	14.7	36.3	27.9	15.3	3.32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7	11.5	36.7	33.8	15.3	3.48	5.509***
	비정규직취업	1,045	1.7	8.8	33.5	37.9	18.1	3.62	
	정규직취업	1,679	3.2	9.9	36.5	36.2	14.2	3.48	
	자영업,창업 등	60	3.3	6.7	45.0	30.0	15.0	3.4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2.9	12.8	35.0	38.0	11.3	3.42	7.511***
	청년 독립가구	1,007	3.6	11.4	38.1	31.0	15.9	3.44	
	부모 동거가구	2,316	2.2	8.8	35.1	37.2	16.7	3.57	
	기타	33	3.0	3.0	42.4	30.3	21.2	3.64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지역별	수도권	2,276	2.4	10.3	36.3	35.1	15.9	3.52	0.871
	충청권	410	1.5	10.7	34.6	37.3	15.9	3.55	
	전라권	364	3.6	11.5	35.4	35.2	14.3	3.45	
	경상권	923	3.8	9.3	35.3	36.5	15.1	3.50	
	강원/제주권	141	1.4	7.1	38.3	37.6	15.6	3.5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1	9.7	32.0	31.5	23.6	3.63	2.237*
	비빈곤층	3,733	2.6	10.2	36.3	36.2	14.7	3.50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7	11.7	32.4	37.5	14.7	3.48	4.602*
	비슷	2,252	2.0	9.3	39.3	34.6	14.7	3.51	
	분배 중요	597	2.8	9.7	30.5	36.5	20.4	3.62	

*p<.05, **p<.01, ***p<.001

자.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64.5%(매우 중요함: 26.0% + 중요함: 38.5%)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7.9%(전혀 중요하지 않음: 1.8% + 중요하지 않음: 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3.81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68.4%, 만25~29세: 63.3%, 만30~34세: 62.6%) 중요함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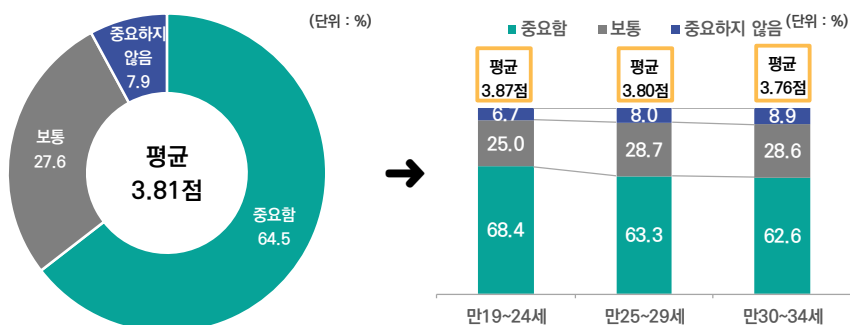


그림 IV-122.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표 IV-242.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1.8	6.1	27.6	38.5	26.0	3.81	-
만19~24세	1,201	1.8	4.8	25.0	41.2	27.1	3.87	4.084*
만25~29세	1,503	1.7	6.3	28.7	36.7	26.5	3.80	
만30~34세	1,410	1.7	7.2	28.6	38.1	24.5	3.76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89점), 미혼(3.87점), 대학교 학력(3.83점), 부모 동거가구(3.90점), 빈곤층(4.01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90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43.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1.8	6.1	27.6	38.5	26.0	3.81	-
성별	남자	1,945	2.6	7.2	30.3	35.6	24.3	3.72	-5.840***
	여자	2,169	1.0	5.2	25.1	41.1	27.6	3.89	
혼인 상태	미혼	3,272	1.5	5.5	26.0	38.8	28.2	3.87	37.067***
	기혼	824	2.4	8.4	33.5	38.1	17.6	3.60	
	사별 및 이혼	18	16.7	22.2	38.9	11.1	11.1	2.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1	5.1	30.9	34.7	27.3	3.80	8.395***
	대학교	3,195	1.5	6.2	26.4	39.9	25.9	3.83	
	대학원 이상	190	5.3	8.9	34.7	28.9	22.1	3.54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1	5.7	28.2	36.5	27.5	3.82	2.352
	비정규직취업	1,045	1.8	5.0	25.2	41.1	26.9	3.86	
	정규직취업	1,679	1.5	7.0	28.4	38.7	24.4	3.77	
	자영업,창업 등	60	0.0	11.7	33.3	31.7	23.3	3.67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2.4	8.4	33.0	38.5	17.7	3.61	20.622***
	청년 독립가구	1,007	2.1	7.1	29.7	36.0	25.1	3.75	
	부모 동거가구	2,316	1.3	5.1	24.7	39.8	29.1	3.90	
	기타	33	6.1	3.0	39.4	21.2	30.3	3.67	
지역별	수도권	2,276	1.6	6.9	26.4	39.3	25.8	3.81	0.446
	충청권	410	1.0	6.3	27.6	38.0	27.1	3.84	
	전라권	364	2.2	4.4	33.5	35.7	24.2	3.75	
	경상권	923	2.4	5.3	27.5	38.0	26.8	3.81	
	강원/제주권	141	1.4	3.5	31.9	36.9	26.2	3.83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6	4.7	23.4	32.3	38.1	4.01	4.247***
	비빈곤층	3,733	1.8	6.3	28.0	39.1	24.8	3.79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2.6	7.1	28.7	37.3	24.3	3.74	6.901**
	비슷	2,252	1.1	5.4	29.2	38.6	25.8	3.83	
	분배 중요	597	2.5	7.0	19.1	40.7	30.7	3.90	

*p<.05, **p<.01, ***p<.001

차.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53.5%(매우 중요함: 16.9% + 중요함: 36.6%)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11.6%(전혀 중요하지 않음: 2.9% + 중요하지 않음: 8.7%)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3.56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6.2%, 만25~29세: 54.2%, 만30~34세: 50.6%) 중요함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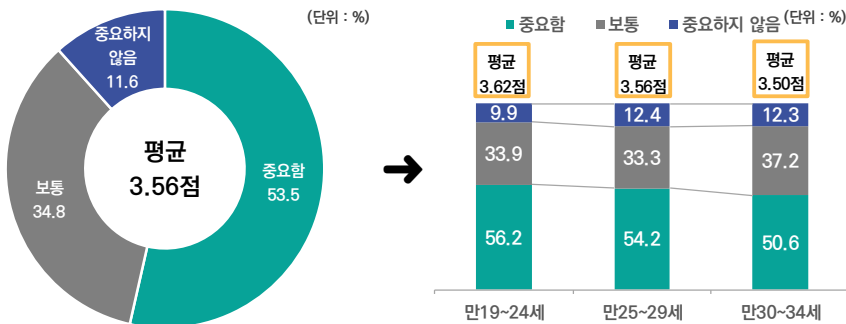


그림 IV-123.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표 IV-244.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2.9	8.7	34.8	36.6	16.9	3.56	-
만19~24세	1,201	2.8	7.1	33.9	37.4	18.8	3.62	5.328**
만25~29세	1,503	2.5	9.9	33.3	37.1	17.1	3.56	
만30~34세	1,410	3.5	8.8	37.2	35.5	15.1	3.50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가구유형, 복지인식, 최종학력, 주관적 계층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64점), 미혼(3.59점), 고등학교 이하 학력(3.60점), 부모 동거가구(3.61점), 빈곤층(3.71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70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45.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2.9	8.7	34.8	36.6	16.9	3.56	-
성별	남자	1,945	4.0	10.7	35.3	34.8	15.2	-5.871***
	여자	2,169	2.0	6.9	34.3	38.3	18.4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혼인 상태	미혼	3,272	2.7	8.3	34.0	37.0	18.0	3.59	14.654***
	기혼	824	3.6	9.8	38.3	35.6	12.6	3.44	
	사별 및 이혼	18	16.7	33.3	16.7	22.2	11.1	2.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7	8.6	34.3	34.4	19.9	3.60	5.487**
	대학교	3,195	2.8	8.3	35.0	37.6	16.3	3.56	
	대학원 이상	190	5.8	15.8	33.2	28.9	16.3	3.34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9	8.4	36.5	35.3	16.9	3.55	2.218
	비정규직취업	1,045	2.3	8.1	34.2	36.3	19.1	3.62	
	정규직취업	1,679	3.3	9.0	33.9	38.2	15.5	3.54	
	자영업,창업 등	60	3.3	16.7	33.3	30.0	16.7	3.40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4	9.5	38.1	35.9	13.1	3.46	6.161***
	청년 독립가구	1,007	3.6	10.5	34.9	33.2	17.9	3.51	
	부모 동거가구	2,316	2.5	7.7	33.5	38.6	17.7	3.61	
	기타	33	3.0	6.1	51.5	18.2	21.2	3.48	
지역별	수도권	2,276	2.9	8.5	35.4	35.9	17.3	3.56	1.372
	충청권	410	2.0	8.8	33.7	38.5	17.1	3.60	
	전라권	364	1.9	9.6	33.5	37.4	17.6	3.59	
	경상권	923	4.1	8.9	34.8	36.9	15.3	3.50	
	강원/제주권	141	1.4	8.5	32.6	38.3	19.1	3.65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4.2	7.6	28.6	32.5	27.0	3.71	2.834**
	비빈곤층	3,733	2.8	8.8	35.4	37.0	15.9	3.54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4.6	11.5	31.7	35.9	16.3	3.48	10.699***
	비슷	2,252	2.0	6.8	39.4	35.9	15.9	3.57	
	분배 중요	597	2.8	9.9	24.1	41.0	22.1	3.70	

*p<.05, **p<.01, ***p<.001

카.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51.3%(매우 중요함: 16.4% + 중요함: 34.9%)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11.5%(전혀 중요하지 않음: 3.1% + 중요하지 않음: 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 3.53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의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52.6%, 만25~29세: 52.4%, 만30~34세: 49.0%) 중요함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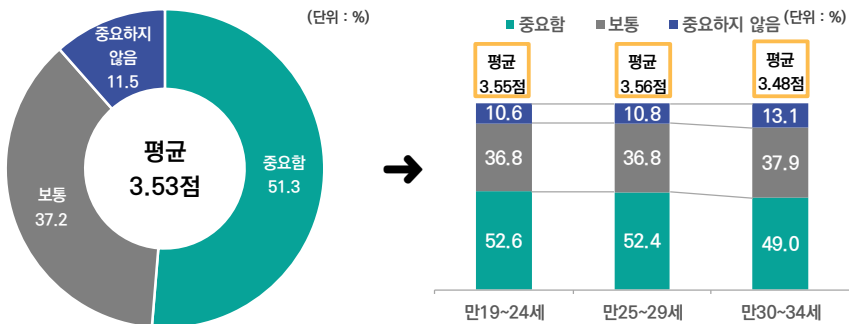


그림 IV-124.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표 IV-246.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3.1	8.4	37.2	34.9	16.4	3.53	-
만19~24세	1,201	3.0	7.6	36.8	36.7	15.9	3.55	2.600
만25~29세	1,503	2.4	8.4	36.8	35.7	16.8	3.56	
만30~34세	1,410	4.0	9.1	37.9	32.5	16.5	3.48	

*p<.05, **p<.01, ***p<.001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의 중요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 주관적 계층의식, 가구유형, 복지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3.60점), 미혼(3.56점), 대학교 학력(3.55점), 부모 동거가구(3.58점), 빈곤층(3.77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64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47.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3.1	8.4	37.2	34.9	16.4	3.53	-
성별	남자	1,945	4.1	9.4	38.3	33.6	14.8	3.46	-4.716***
	여자	2,169	2.3	7.5	36.2	36.1	17.9	3.60	
혼인 상태	미혼	3,272	2.9	7.8	37.3	34.8	17.2	3.56	7.248***
	기혼	824	3.8	10.7	36.7	35.3	13.6	3.44	
	사별 및 이혼	18	16.7	16.7	27.8	27.8	11.1	3.00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5점 평균	F/t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3.6	8.6	37.6	32.6	17.6	3.52	8.900***
	대학교	3,195	2.7	8.0	37.3	35.6	16.4	3.55	
	대학원 이상	190	8.9	13.7	33.2	32.1	12.1	3.25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2	7.7	40.0	32.6	16.5	3.52	0.819
	비정규직취업	1,045	2.7	8.2	35.8	36.7	16.7	3.56	
	정규직취업	1,679	3.3	9.0	36.5	35.3	16.0	3.52	
	자영업, 창업 등	60	6.7	10.0	18.3	43.3	21.7	3.63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6	10.6	36.7	36.3	12.9	3.44	4.266**
	청년 독립가구	1,007	3.6	9.6	38.4	30.8	17.6	3.49	
	부모 동거가구	2,316	2.8	7.3	36.5	36.4	17.0	3.58	
	기타	33	3.0	0.0	54.5	18.2	24.2	3.61	
지역별	수도권	2,276	2.9	8.0	36.7	34.8	17.5	3.56	1.524
	충청권	410	2.7	10.2	36.8	35.9	14.4	3.49	
	전라권	364	2.5	9.6	37.1	35.2	15.7	3.52	
	경상권	923	4.3	8.5	37.5	34.8	15.0	3.48	
	강원/제주권	141	2.1	5.7	43.3	32.6	16.3	3.55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4	6.6	32.3	29.4	29.4	3.77	4.809***
	비빈곤층	3,733	3.2	8.6	37.7	35.4	15.1	3.5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3.9	10.5	35.4	34.5	15.7	3.48	5.750**
	비슷	2,252	2.6	7.1	39.7	35.3	15.2	3.53	
	분배 중요	597	3.5	8.5	31.2	34.2	22.6	3.64	

*p<.05, **p<.01, ***p<.001

(8) 청년 빈곤 정책에 대한 의견

가.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동의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함’ 응답이 49.8%(매우 동의함: 12.0% + 동의함: 37.8%)로 ‘동의하지 않음’ 응답 13.0%(전혀 동의하지 않음: 3.2% + 동의하지 않음: 9.7%)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점수는 평균 3.46점으로 나타났다.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동의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만25~29세(50.9%), 만20~24세(50.7%), 만30~34세(47.9%) 순으로 동의함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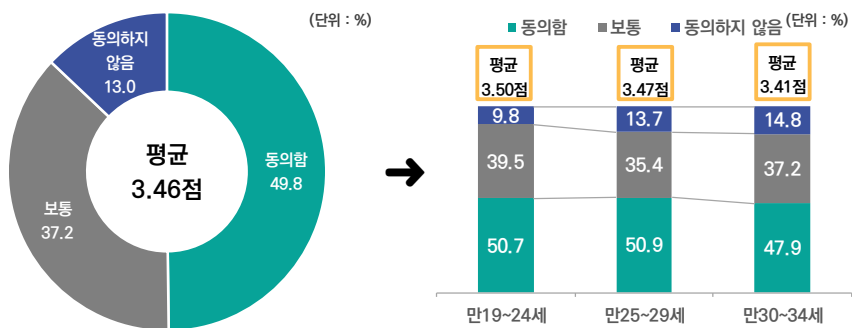


그림 IV-125.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

표 IV-248.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3.2	9.7	37.2	37.8	12.0	3.46	—
만19~24세	1,201	2.3	7.5	39.5	39.3	11.4	3.50	3.418*
만25~29세	1,503	3.5	10.2	35.4	37.7	13.2	3.47	
만30~34세	1,410	3.7	11.1	37.2	36.7	11.2	3.41	

*p<.05, **p<.01, ***p<.001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에 대한 동의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최종학력, 취업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3.50점), 대학교 학력(3.48점), 비정규직 취업(3.51점) 및 자영업, 창업 등(3.52점), 부모 동거가구(3.51점), 빈곤층(3.70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67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49.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3.2	9.7	37.2	37.8	12.0	3.46	-
성별	남자	1,945	4.5	11.1	35.2	34.9	14.3	3.43	-1.369
	여자	2,169	2.1	8.5	39.0	40.5	9.9	3.48	
혼인 상태	미혼	3,272	2.7	8.8	36.9	38.9	12.7	3.50	28.020***
	기혼	824	5.0	13.0	38.2	34.3	9.5	3.30	
	사별 및 이혼	18	27.8	22.2	38.9	11.1	0.0	2.3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4.3	9.5	40.1	34.4	11.8	3.40	5.470**
	대학교	3,195	2.7	9.6	36.7	38.8	12.1	3.48	
	대학원 이상	190	7.9	12.1	34.2	35.3	10.5	3.28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3.1	9.2	38.4	35.9	13.5	3.47	2.927*
	비정규직취업	1,045	2.6	8.9	36.5	39.1	12.9	3.51	
	정규직취업	1,679	3.7	10.7	36.8	38.8	10.0	3.41	
	자영업, 창업 등	60	5.0	8.3	35.0	33.3	18.3	3.52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4.9	13.1	37.7	34.7	9.6	3.31	8.302***
	청년 독립가구	1,007	3.6	9.8	37.5	35.9	13.1	3.45	
	부모 동거가구	2,316	2.5	8.7	36.8	39.9	12.2	3.51	
	기타	33	9.1	3.0	42.4	27.3	18.2	3.42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평균	F/t
지역별	수도권	2,276	3.0	10.4	36.6	37.9	12.2	3.46	0.952
	충청권	410	3.9	6.1	37.8	39.8	12.4	3.51	
	전라권	364	2.7	11.5	39.6	37.1	9.1	3.38	
	경상권	923	3.9	8.9	37.6	37.4	12.2	3.45	
	강원/제주권	141	2.1	9.9	37.6	36.9	13.5	3.50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3.4	8.1	29.1	33.9	25.5	3.70	4.797***
	비빈곤층	3,733	3.2	9.9	38.0	38.3	10.6	3.43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4.3	13.4	31.8	38.3	12.3	3.41	18.185***
	비슷	2,252	2.8	8.2	43.1	35.7	10.3	3.43	
	분배 중요	597	2.8	7.9	26.6	44.9	17.8	3.67	

*p<.05, **p<.01, ***p<.001

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있다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있다에 대한 동의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하지 않음’ 응답이 31.5%(전혀 동의하지 않음: 9.2% + 동의하지 않음: 22.3%)로 ‘동의함’ 응답 29.2%(매우 동의함: 6.5% + 동의함: 2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점수는 2.95점으로 나타났다.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있다에 대한 동의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30.5%, 만25~29세: 30.7%, 만30~34세: 33.3%) 동의하지 않음 응답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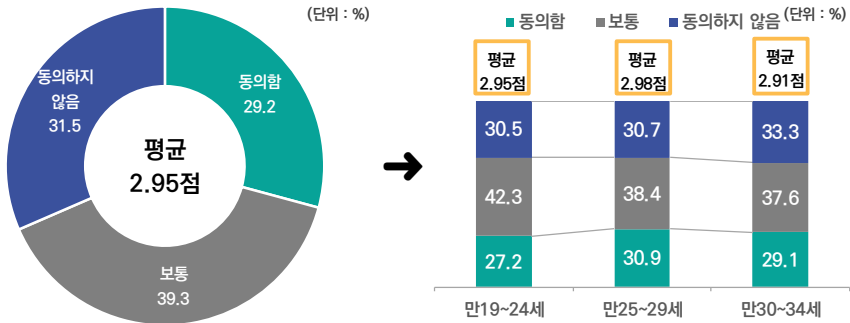


그림 IV-12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250.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9.2	22.3	39.3	22.7	6.5	2.95	-
만19~24세	1,201	8.4	22.1	42.3	20.2	7.0	2.95	1.934
만25~29세	1,503	8.1	22.7	38.4	24.5	6.4	2.98	
만30~34세	1,410	11.2	22.1	37.6	22.9	6.2	2.91	

*p<.05, **p<.01, ***p<.001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있다는 데 대한 동의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혼인상태,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혼(3.01점), 대학교 학력(2.97점), 비빈곤층(2.97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1.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9.2	22.3	39.3	22.7	6.5	2.95	-
성별	남자	1,945	11.9	21.4	36.6	22.6	7.5	2.92	-1.559
	여자	2,169	6.8	23.1	41.7	22.8	5.6	2.97	
혼인 상태	미혼	3,272	9.9	22.4	38.6	22.4	6.7	2.94	3.883*
	기혼	824	6.4	21.5	42.4	23.9	5.8	3.01	
	사별 및 이혼	18	22.2	33.3	22.2	22.2	0.0	2.44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8.4	24.3	42.8	18.8	5.8	2.89	4.103*
	대학교	3,195	9.1	21.7	38.7	23.8	6.7	2.97	
	대학원 이상	190	14.2	24.7	35.8	18.4	6.8	2.79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9.3	24.2	41.1	18.8	6.6	2.89	2.368
	비정규직취업	1,045	8.8	21.8	38.8	23.3	7.4	2.99	
	정규직취업	1,679	9.4	21.1	38.0	25.5	6.0	2.98	
	자영업,창업 등	60	11.7	20.0	43.3	21.7	3.3	2.8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6.6	21.5	41.8	24.0	6.1	3.01	2.596
	청년 독립가구	1,007	10.4	19.9	38.4	23.2	8.0	2.99	
	부모 동거가구	2,316	9.7	23.6	38.6	22.3	5.9	2.91	
	기타	33	3.0	24.2	51.5	6.1	15.2	3.06	
지역별	수도권	2,276	9.3	21.6	38.5	23.6	7.0	2.98	1.351
	충청권	410	9.5	24.9	39.3	18.8	7.6	2.90	
	전라권	364	9.1	20.9	39.6	25.3	5.2	2.97	
	경상권	923	9.6	23.7	39.8	21.3	5.5	2.89	
	강원/제주권	141	5.7	20.6	47.5	21.3	5.0	2.99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18.6	22.6	32.8	13.9	12.1	2.78	-2.802**
	비빈곤층	3,733	8.3	22.3	39.9	23.6	5.9	2.97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11.9	20.9	35.3	24.8	7.0	2.94	0.226
	비슷	2,252	7.7	22.2	43.4	20.9	5.8	2.95	
	분배 중요	597	9.2	25.5	32.2	25.0	8.2	2.97	

*p<.05, **p<.01, ***p<.001

다.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함’ 응답이 62.7%(매우 동의함: 20.6% + 동의함: 42.1%)로 ‘동의하지 않음’ 응답 7.9%(전혀 동의하지 않음: 2.3% + 동의하지 않음: 5.6%)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점수는 3.73점으로 나타났다.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도에 대해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만19~24세: 66.7%, 만25~29세: 62.7%, 만 30~34세: 59.4%) 동의함 응답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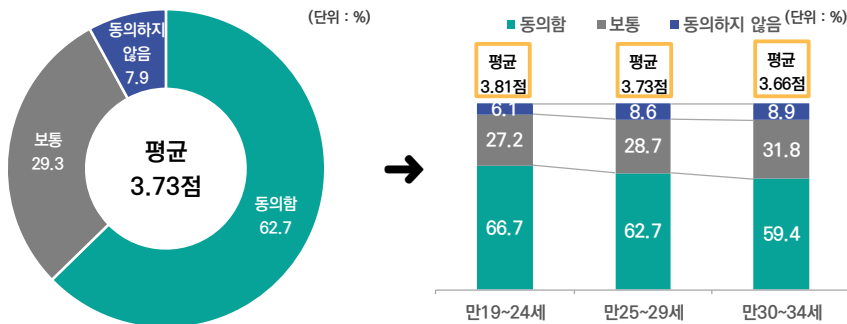


그림 IV-127.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표 IV-252.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연령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평균	F
전체	4,114	2.3	5.6	29.3	42.1	20.6	3.73	-
만19~24세	1,201	1.9	4.2	27.2	44.1	22.6	3.81	8.605***
만25~29세	1,503	2.1	6.5	28.7	41.7	21.0	3.73	
만30~34세	1,410	2.9	6.0	31.8	40.8	18.6	3.66	

*p<.05, **p<.01, ***p<.001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에 대한 동의도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혼인상태, 취업상태, 가구유형, 주관적 계층의식, 복지인식, 최종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혼(3.79점), 대학교 학력(3.75점), 비정규직 취업(3.81점), 부모동거가구(3.81점), 빈곤층(3.98점), 복지인식 분배중요(3.92점)에서 각 변인을 구성하는 타 집단에 비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53.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배경변인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평균	F/t
전체	4,114	2.3	5.6	29.3	42.1	20.6	3.73	-
성별	남자	1,945	2.8	6.3	29.7	40.3	20.9	-1.916
	여자	2,169	1.9	5.0	29.0	43.7	20.4	
혼인 상태	미혼	3,272	2.0	4.9	27.7	43.2	22.3	40.198***
	기혼	824	3.4	8.3	36.0	38.0	14.3	
	사별 및 이혼	18	22.2	16.7	27.8	33.3	0.0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5점 평균	F/t
최종 학력	고등학교 이하	729	2.9	5.8	30.6	40.3	20.4	3.70	5.574**
	대학교	3,195	2.0	5.5	28.7	42.9	20.8	3.75	
	대학원 이상	190	5.8	6.3	35.3	34.2	18.4	3.53	
현재 취업 상태	미취업/구직중	1,330	2.0	4.9	30.4	40.1	22.7	3.77	6.662***
	비정규직취업	1,045	1.8	5.1	26.8	43.3	23.1	3.81	
	정규직취업	1,679	2.9	6.6	29.8	43.2	17.5	3.66	
	자영업,창업 등	60	3.3	5.0	36.7	33.3	21.7	3.65	
가구 유형	청년 부부가구	758	3.6	8.2	35.1	38.8	14.4	3.52	19.059***
	청년 독립가구	1,007	2.8	5.7	30.9	38.2	22.4	3.72	
	부모 동거가구	2,316	1.7	4.7	26.5	45.2	21.9	3.81	
	기타	33	3.0	6.1	51.5	18.2	21.2	3.48	
지역별	수도권	2,276	2.2	6.1	28.9	42.4	20.4	3.73	0.519
	충청권	410	1.7	3.9	30.7	42.4	21.2	3.78	
	전라권	364	2.2	5.5	28.0	42.9	21.4	3.76	
	경상권	923	3.3	5.0	30.1	41.3	20.4	3.71	
	강원/제주권	141	0.7	7.1	31.2	38.3	22.7	3.75	
주관적 계층의식	빈곤층	381	2.9	5.0	19.9	35.4	36.7	3.98	5.559***
	비빈곤층	3,733	2.3	5.7	30.3	42.8	19.0	3.71	
복지 인식	성장 중요	1,265	4.3	8.5	28.1	39.9	19.1	3.61	24.153***
	비중요	2,252	1.5	3.8	32.5	42.5	19.6	3.75	
	분배 중요	597	1.2	6.2	19.9	44.9	27.8	3.92	

*p<.05, **p<.01, ***p<.001

○ — 제5장 청년 빈곤의식 심층면담

- 1. 면담조사 개요
-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 3. 소결 및 시사점

1. 면담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금년도 1차년도 연구의 중점 조사영역인 청년 경제적 소득 및 노동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소득형태 및 취업형태를 지니는 3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상황과 인식, 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노동 상황과 인식,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등에 대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1) 면담조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을 파악하기 위하여 20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는 1인 가구, 대학 졸업 여부, 성별, 연령, 지역, 근로형태, 소득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근로형태는 미취업,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별하였으며, 소득형태는 중위소득인 1,827,831원을 기준으로 상위소득, 하위소득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 성별(남/여), 연령(20대/30대), 지역(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면담조사 참여자는 총 30명으로, 대학 졸업자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먼저 상위소득 15명, 하위소득자 15명이었으며, 취업형태에 따라 미취업 8명,

25)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연보라 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정규직 15명, 비정규직 7명 모집하였다.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성 15명, 여성 15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6명, 30세-34세 14명으로 구성하였다. 거주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16명, 비수도권 14명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면담조사 참여자의 세부 프로파일은 다음과 같다.

표 V-1. 면담조사 참여자 특성

연번	소득 형태	응답자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취업형태	가구 형태	최종 학력
1	상위 소득	A	여성	30대	수도권	정규직	1인가구	대학 졸업
2		B	남성	30대	비수도권	정규직		
3		C	여성	20대	수도권	정규직		
4		D	여성	30대	비수도권	정규직		
5		E	여성	20대	수도권	정규직		
6		F	남성	20대	비수도권	정규직		
7		G	여성	30대	수도권	비정규직		
8		H	여성	30대	비수도권	미취업		
9		I	여성	20대	비수도권	정규직		
10		J	남성	30대	수도권	정규직		
11		K	남성	20대	수도권	정규직		
12		L	여성	20대	비수도권	비정규직		
13		M	남성	30대	수도권	비정규직		
14		N	남성	20대	비수도권	정규직		
15		O	남성	20대	수도권	정규직		
16	하위 소득	A	남성	20대	수도권	비정규직	1인가구	대학 졸업
17		B	여성	20대	비수도권	미취업		
18		C	남성	30대	수도권	미취업		
19		D	여성	30대	수도권	미취업		
20		E	남성	20대	수도권	미취업		
21		F	여성	20대	비수도권	정규직		
22		G	여성	30대	비수도권	비정규직		
23		H	남성	20대	비수도권	비정규직		
24		I	남성	30대	비수도권	비정규직		
25		J	여성	20대	수도권	미취업		
26		K	여성	30대	수도권	정규직		
27		L	남성	30대	수도권	정규직		
28		M	여성	20대	수도권	정규직		
29		N	남성	30대	비수도권	미취업		
30		O	남성	20대	비수도권	미취업		

2) 면담조사 내용

청년빈곤에 대한 조사 내용은 크게 1) 소득 상황과 인식, 2) 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3) 노동 상황과 인식, 4)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2. 청년 빈곤 의식 면담조사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1) 소득 상황과 인식	① 현재 소득 정도 ② 현재 소득 만족 정도 ③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출 영역 ④ 소득의 저축정도 ⑤ 향후 원하는 만큼의 소득 발생 시, 하고 싶은 영역 ⑥ 부채 경험 ⑦ 주식/가상화폐 투자 경험 ⑧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몰두하는 청년에 대한 시각 ⑨ 결혼 시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⑩ 빈곤경험 여부 ⑪ 세대 중 가장 가난한 세대 ⑫ 부모의 경제적 소득에 따라 청년의 경제적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⑬ 향후 소득향상 가능성
2) 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① 청년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인지 여부 ② 청년의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여부 및 개선 사항
3) 노동 상황과 인식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지 여부 ② 현재 고용형태 ③ 향후 이직 의향 ④ 일자리 만족 정도 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차이 찬반 정도 ⑥ 부모의 경제적 소득이 자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⑦ 출신 대학교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⑧ 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 ⑨ 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한 생각 ⑩ 비수도권 대학 출신 청년 취업 가산점 제도 찬반 여부 ⑪ 청년 고용할당제 인지 여부 및 청년고용할당 정책 찬반 여부 ⑫ 취업 경쟁 공정 여부 ⑬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 여부
4)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①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인지 여부 ② 청년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여부 및 개선 사항

3) 면담조사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년의 전반적인 빈곤 의식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면담조사지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먼저, 관련 연구와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 내용(안)을 개발하였고, 연구진 협의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후, 청년 빈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받아 개발하였다.

이후 1인 가구, 대학 졸업 여부, 성별, 연령, 지역, 근로형태, 소득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우선적으로 조사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적합한 면담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면담 참여에 동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구성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2021년 7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주로 개별심층면담(In-Depth Interviews)(30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조사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해당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반복 읽기를 통해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고, 또한, 면담 조사의 분석방법으로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의 일종으로서 최소 의미를 지닌 형태소를 분석하고, 해당 빈도에 따라 문자의 크기를 시각화하여 직관적으로 텍스트의 키워드와 빈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한무명초, 김양석, 이충권, 2017). 구체적으로 전사된 텍스트 파일을 형태소분석기를 통해 분리하고, NIA사전으로 단어를 인식한 후, 명사를 추출하여 단어별 빈도표를 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상위 3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시각화하였다. 전술한 워드클라우드 분석에는 R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2. 면담조사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위소득, 하위소득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여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소득형태에 따라 청년들의 빈곤 상황 및 빈곤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소득상위, 소득하위로 대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상위소득

(1) 소득 상황과 인식

“현재 경제적인 소득: 소득대비 지출이 적어 만족”

상위소득자의 경우, 하위소득자에 비해 현재 소득 만족 정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현재의 소득만으로 주거, 식비, 저축, 문화생활비용 등을 감당할 수 있어 현재 소득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주거비용 지출에서 월세 대신 전세에 살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고정 지출이 줄어 저축의 비율을 높이거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 현재 소득 정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당장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거주비는 전세라서 관리비 나오니까 한 5%” (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그냥 저 혼자 사는 데는 많지는 않은 데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사실은 월세 이런 게 나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월세가 나간다고 했으면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 데 월세가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적당합니다. 전세는 부모님이 해 주셨어요.” (3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D)

“식비 지출도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식비로 나가는 돈이 월급의 15에서 20% 정도인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책을 사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일 것 같긴 해요 문화생활이나 옷 사는 것” (3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D)

“아껴서 생활한다면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할 수 있고, 적지만 저축도 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걱정할 것 같습니다.” (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E)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취준 할 때는 연봉 협상할 때 3천만원 아래로 받았었

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500이거든요 초년생치고 높다고 생각해요 비교적 지출은 많은데 약간 에버리지보다 많이 받으니까 만족하는 거지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 소득_ N)

“소득 대비 높은 지출로 현재 소득에 불만족, 지출 영역이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용”

반면, 상위소득자임에도 현재의 경제적 소득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주거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었다. 1인 가구 청년들은 월급의 약 15% ~ 30% 가량을 주거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소득의 많은 부분이 주거비용으로 지출되어 저축의 비율을 줄이거나, 생활비를 아껴 써야 하는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주거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급여 소득만으로 미래를 대비하기가 어려워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소득만으로 주거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과, 주거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는 높은 고정 지출 때문에 저축 비율이 줄어 미래를 위한 대비가 어려워 불안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부족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저축 비율을 줄이고 소일거리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미생활을 포기하면서 부족한 주거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비용은 월세로 월급의 20-25% 정도 나가요. 주거 비용은 부담스럽긴 한데 필수적인 거라 최대한 타협하고 있어요. 최대한 식비를 아끼려고 노력하고, 제가 취미로 신발을 모으는데 사서 되파는 재테크를 해요, (중략)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생활비가 늘어나면 제가 저축하거나 모을 수 있는 게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적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월세는 한 15% 정도 차지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달마다 고정 지출이 있는데 고정 지출을 쓰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남아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I)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

은 없는데 풍족하게 살기에는 제가 지금 받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거나,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고 있지요 취미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월세 낼 때”(3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J)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영원히 일해도 미래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집이라도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O)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을 하고 여유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생활을 하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대출이자도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소비의 25-35%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시간이 날 때 다른 소일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3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M)

“월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월세와 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과 월세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월세로는) 월급의 30% 정도요.”(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C)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주거 마련”

대부분 1인 가구 상위소득자 청년들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생기면 주거 마련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로 꼽았다. 첫 번째로 경제적 안정감을 위해 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매달 지출되고 있는 월세 비용 및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마련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월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가를 소유하거나, 전세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가 두드러졌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사를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주거를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급등하는 전세 가격 때문에 매물을 찾기 힘들어 자가를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거비라는 것 자체가 1인가구를 비롯해서 청년 세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저도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바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하고 싶은 건 보증금 대출부터 갖고 싶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잔여 빚,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빚을 갖고 싶어요.”(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C)

“일단 집이 가장 사고 싶거든요. 주거는 계속 옮겨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도 올해 말까지 전세대출 만기가 올해 끝나요. 그래서 연장할지 이사할지 말지 정해야 되고 주거는 안정되지 못하게 옮겨 다녀야 되고 알아봐야 된다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느끼거든요.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니까 제가 주식을 한다 해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 하겠고 현금을 확보해 놓아야 보증금으로 쓴다든지 해서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L)

“전세 값이 너무 올라서 당장 매번 구하러 다닐 수도 없고 여유자금을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소득 청년이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하여 주거, 대출, 전세, 월세 등의 단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안정감을 갖고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마련을 꿈꾸는 청년 세대가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1.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일(상위소득)

“주거(전세)는 결혼의 최소한의 조건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결혼하지 않을 의향”

청년들의 대다수는 결혼을 위해서는 주거 공간 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거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리적·경제적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최소한 전세 정도의 주거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정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주거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은 결혼조차 꿈꿀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혼하려면 자가로 집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위를 보면 집이 없으면 그만큼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더라고요. (중략) 이제는 대출도 자가를 살 정도로 못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제는 거의 결혼을 못하는 거지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안정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세 정도의 집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아파트 전세 대출을 갚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전세 자금 대출을 갚을 능력 정도의 월 소득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을 의향도 있는 것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D)

“한 4억에서 5억짜리 돈은 있어야 이런 전세를 소형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그나마 결혼을 꿈꿔볼 수 있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3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M)

“결혼을 하려면 일단 집이 하나 있어야겠죠.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다음은 그래도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자가가 있는 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면 부부간에 사이도 좋아지고 아이가 생기면 또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O)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벌이 필수,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맞벌이 필수”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 후 맞벌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혼자만의 소득으로 2인가구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맞벌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커 맞벌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한편, 여성 응답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 해소 뿐 아니라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맞벌이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혼자 일하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물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혼자 벌어서는 부담도 되고 향후에 주거비 식비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둘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혼자보다는 둘이 벌어서 모으는 게 모으는 것도 빠르고 집을 사거나 전세 대출 이런 부분에서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혼자보다는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사람은 일이 있어야 생기가 도는 것 같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이 있어야 삶이 영위가 되잖아요. 어쨌든 하는 일은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2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E)

“혼자 벌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 젊어서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서.”

(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혼자 벌어서는 물가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못살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I)

“수도권에서 혼자 외벌이 해서 살아남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가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K)

“맞벌이를 해야 제 커리어라든지 집안 일만 하고 있을 성격이 아니라 제 커리어를 쌓는 것에 있어서도 맞벌이를 할 것 같고, 요새는 다 평등을 추구하니까 같이 일을 하고 집안일도 분담하면서 결혼을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L)

“소득의 40~60% 저축, 저축 방식으로는 예/적금, 주택청약, 주식으로 나타나”

상위소득자의 경우 하위소득자에 비해 저축의 비율이 높았고, 소득의 약 40%~60% 사이로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하는 방식은 주로 예/적금 주택 청약, 주식으로 나타났다. 하위소득자는 소득의 약 10%~20% 가량을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하위소득자의 경우 주식 보다는 원금을 보호 할 수 있는 예/적금에 투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위소득자의 경우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예/적금에 넣을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60% 정도, 70% 미만까지는 저축하는 것 같아요. 청약도 최소 금액으로 하고 있고 예금”(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지금 50~60%를 저축합니다. 적금과 청약하고 있습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50% 정도. 저는 월급의 반은 항상 저축하려고 노력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일단 갖고 있고, 현금으로 적금을 넣는 게 있고, 요즘 주식을 많이 하나까 작은 금액이지만 주식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2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E)

“백만 원씩 하고 있어요. 예/적금 방식 주로하고 주택 청약은 하고 있긴 한데 돈을 안 넣은

지 좀 오래 됐어요. 제가 넣는다고 해도 청약과 먼 얘기인 것 같고, 듣기로 그걸 깨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40% 정도요. 주택 청약도 하고 예/적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K)

“예/적금에 넣을 돈을 주식에 넣고 있어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N)

“예/적금 보다 주식이 합리적인 투자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

청년 1인 가구 상위소득자에게 주식은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응답자들은 주식투자가 예/적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자산 증식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던 방식과 달리, 매달 꾸준히 소득의 일정 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다수 있었다. 소득의 약 15% 정도는 매달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며 많게는 소득 대비 35%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 예/적금의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예/적금에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해라는 의견도 있었다.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예/적금만으로는 자산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주식에 많은 부분을 투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증식을 위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식에 투자한다는 응답자가 있었던 반면, 주식의 위험성 때문에 소액만 투자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얻은 투자 이익으로 취미 생활을 위해 지출 하거나, 지인의 선물을 사는 등 추가적인 소득의 개념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은행 이율도 너무 낮고 근로소득 외에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취미랄까.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주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E)

“위험성은 조금 크지만 예/적금보다 확실히 수익률이 높으니까 (소득의) 15% 정도. 집 마련하는 것도 생각하고, 재투자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K)

“예/적금은 요즘 금리가 0%, 1%대라서 예/적금을 그대로 부으면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자산들 오르는 속도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서 그나마 주식이 조금 예/적금으로 굴리는 것 보다는 자산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여서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3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M)

“소득 대비 35% (주식예) 투자해요, 적금보다 뭔가 연 이자율이 더 높다거나 그런 이유도 있어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N)

“적은 자산이지만 (주식으로) 조금이라도 불려서 눈덩이를 만들려고 합니다.”(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O)

“갖고 싶은 신발을 사려고 시작하게 됐어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남자 친구 생일이나 친구 생일이나. 그래서 추가소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뭔가 나의 사적인 곳에 쓰는 개념이에요. 꾸준히는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소득의 10% 정도 투자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I)

이와 같이 상위소득 청년세대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기대수익이 낮은 예/적금 대신 주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도 적금이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다. 이와 함께 안정, 자산, 생활비, 친구, 재미 등의 단어가 주로 언급되었다. 이는 상위소득 청년에게 주식은 안정적인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친구의 추천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2.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주식 투자(상위소득)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형성이 어려워 주식, 가상화폐에 몰두하는 청년들”

상위소득자 청년 1인가구는 주식 및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경제적 참여 측면이라는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의견은 근로소득만으로 재산형성이 어려운 상황과 연관이 있었다. 낮은 금리 때문에 예/적금으로 자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임금 인상이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주식 및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 경제적 참여 측면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집값이라는 부동산도 커졌고 그런데 그건 돈이 금액대가 커야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요새 금리가 오르네 마네 하지만 대출도 막혀 있는 수준이고 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금리도 너무 낮으니까 적금 예금으로서는 항상 뒤처지는 일이 되더라고요. 물가는 훨씬 많이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이고 이자율은 낮다 보니까 사실상 돈을 까먹는 행위인 것 같아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요즘은 아무래도 근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잖아요. 그리고 매달 임금 상승폭이

큰 것도 아니고 조금씩 상승되니까. 그래서 이 월급으로 내가 언제 집을 사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을 하는 게 아닐까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I)

“일반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버는 근로 소득 말고는 소득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 주식이 그나마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여유자금을 가지고 불리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은행 이율보다는 확실히 좀 더 많이 더 하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투자.”(3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D)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소량이라도 이런 걸 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나쁘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생활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2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E)

하지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몰두하는 청년들에 대해 투기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하였다. 특히 투기라는 시각은 가상화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상화폐의 경우 등락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는 점과, 주변의 권유나 성공사례만 보고 대비 없이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투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벼락 성공을 위해 빚을 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청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많이들 하는데, 너무 양극단의 경우를 많이 봐서. 좋은 경우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누구는 2012년에 사서 10억 벌고 누구는 1억 까먹고 그런 걸 보니까 솔직히 후자가 더 많더라고요. 가상화폐는 투자라고 보기는 많이 어렵고(투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3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G)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건 돈을 잃는 경우를 더 많이 봐서 그렇게 하는 건 위험부담이 큰 것 같아요.”(3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상위소득_ H)

“청년들 빚내서 투자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청년들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뇌리에 꽂히지 않나 생각”(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K)

“주식은 조금 더 투자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투기라고 말씀 드린 건 요즘 빚투라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더라고요.”(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O)

“과거에 비해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

지금의 청년들은 경제적·기술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먹고 사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환경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세대” 혹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세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 성장 시기에 청년 시기를 보냈던 기성세대는 지금의 청년세대에 비해 비교적 원하는 곳에 취업이 가능했고, 근로소득만으로 주거를 마련하거나 결혼을 꿈꿀 수 있었던 세대라는 응답이 두드러진 반면, 현재는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청년들은 근로소득만으로 주거를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한 응답자의 경우,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을 꿈꾸는 것이 가능한 세대였지만 현재는 근로소득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희망적 미래를 꿈꾸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모든 게 청년도 노력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대였는데 저희 때는 희망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조금 더 잘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력을 해서 극복이 안 되는 세대 같아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취업 상황도 힘들다 보니까 경제와 취업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였다면 80-90년대일 텐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였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분위기가긴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길 본인들은 본인 힘으로 일을 하면 본인의 집 한 채는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에 비해서 저희는 조금

넉넉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C)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만으로 집 마련은 어려운 것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D)

“옛날에는 별면 집도 살 수 있었고, 차도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고. 사실 경험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다 하셨다면 지금 옛날보다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N)

“높은 대학진학을 대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빈곤 증가”

현재는 경제 발전 속도가 더더 충분한 일자리가 없고, 높아진 교육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스펙이 상향평준화 되었지만 이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경쟁이 과열되어 구직난을 겪으면서 과거에 비해 청년의 빈곤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어렵거나 힘든 일을 기피하는 청년세대의 특징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교육수준이 높아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회사만을 선호하면서, 경쟁이 과열되어 구직난이 심화되고 빈곤한 청년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저희는 경쟁도 너무 심하고, 보는 눈도 높아져서 저희가 많이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그때는 그때의 시대상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 더 높아진 게 문제예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개별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가 훨씬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스펙이 확실히 컴퓨터나 영어 실력이 상향평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월 200만 원짜리 작은 일자리이고 비정규직이어도 상대적으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준화가 됐는데도 거기에서 또 특별한 점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L)

“그때는 내가 대졸이면 대졸에 맞는 데에 가고 고졸이면 고졸에 맞는 게 가는데 딱히 불만이 없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나누어지는데도 없고 나는 대학을 나왔는데 예전 같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나이의 애들이 눈이 높아진 게 아닐 까요? 일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눈이 높아진 거지요.

일자리는 있는데 쥐도 안 간다는 생각인 거지요. 다들.”(3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G)

“일자리도 더 많은 것 같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런 부분들.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3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상위소득_ H)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향후 미래에 청년들이 지금보다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 힘들 것”

향후 미래에 우리 사회 청년들은 지금보다 돈을 충분히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청년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격차가 심해질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산뿐만 아니라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까지 세습되어 빈부격차가 더욱더 고착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일수록 향후 미래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부의 세습 및 빈부격차의 사회 구조적 문제는 쉽게 변하지 않아 청년들은 향후 미래에 돈을 충분히 더 많이 벌 것이라는 의견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빈부격차가 훨씬 심해지겠지요. 자산이나 그런 경제관념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유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은 아무래도 부모님들 세대의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재테크에 대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안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이 바탕이 되고 그래서 밑에 자식들도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이걸 해 봐야 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부동산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아서 그 친구도 저희와 비슷한 길을 겪을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격차 심화되고, 교육 수준의 차이가 취업에 영향”

부모님의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청년시기의 경제적인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정도가 달라져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격차는 대학입학에 이어 취업에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다.

“특히 사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들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부모님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도 훨씬 더 많고, 저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 보고 싶다고 했을 때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미국에 나와서 공부를 해 보고 싶다고 하면 그런 것도 더 지원해 주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을 까요?”(3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D)

“아무래도 부모님의 고위계층의 고소득자라면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다 보니까 세습이 될 테고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듣는 얘기도 다를 수 있고”(2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E)

“부모가 잘 살면 자식도 교육 수준이 높을 것이고, 자식에게 뭔가 예를 들어 공부라면 과외도 더 비싼 걸 붙여줬을 것이고 그게 어려서부터 조금씩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I)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 될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 줄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격차가 벌어질 뿐 아니라, 실패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뒷받침 될수록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실패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낀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사람은 불안함 때문에 더 잘 안 되는데 뒤에 뭔가 더 기회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서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우가 부모님의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부모님의 지원이 뽕뽕한 사람은 제가 말한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서요.”(3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J)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것이고, 실패를 한다 해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타격이 커서 재기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2) 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소득지원제도 인지: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구직수당, 실업 급여”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의 소득을 지원하거나 빈곤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인지여부에 대해 실업급여, 구직수당,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 내일채움공제 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 중소기업전세자금대출, 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 수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지인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니면 내가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해서 몇 백만 원까지 해서 몇 천을 저축해서 3년 뒤에 돌려준다 그거 알고 있어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청년 내일 채움 공제랑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그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청년 기본 소득 받았었어요.”(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C)

“청년 희망 통장, 취업 자금 등 몇 개 들어본 것 같기는 해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3년이상 다니면 얼마를 더 주는 내일채움 공제는 들어봤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I)

“청년 내일채움공제 이런 것. 3년인가 일하면 몇 천 만원씩 가지고 가고 청년 희망 통장도 있을 것이고, 지원하는 정책은 많은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I)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로 긍정적”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소득격차의 해소 정책은 대기업 쏠림문제가 완화되고,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늘어 취업난 해소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줘서 3년 뒤에는 훨씬 목돈을 모아서 나간다 이런 방식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많은데 원하는 취업 시장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취업 인력을 분산시켜서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좀 원하지 않아도 모두가 골고루 취업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정책을 해서 사람들의 시선도 끌고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소득지원 제도: 단기간의 경제적 부담해소 가능하지만 청년 빈곤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정적”

청년들의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은 단기간의 경제적 부담해소는 가능하지만,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인 취업난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소득에 대한 지원보다는 고용의 안정성 및 경제적 안정성이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취업 자리 알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C)

“효과적이었으면 지금 청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빈곤한 게 부각되고 있는 건 그 정책들이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 경우 가장 힘든 점이 취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소득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재정만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근본적으로 일자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주는 건 (돈을) 주면 땡큐 지만 단순히 50만원 준다고 세 살이 크게 나이지는 건 아니고 경제발전이란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계약직 단기 이런 것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게 해결의 핵심인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L)

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취업, 중소기업, 일자리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상위소득 청년들이 소득에 대한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원하고,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 지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V-3.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상위소득)

(3) 노동 상황과 인식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비정규직 청년”

이직 희망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일수록 이직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특히 비정규직 청년들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 직장을 얻기 위해 공기업이나 공무원 직종으로 이직을 희망하였다. 정규직 청년들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보상과 복지환경을 위해 이직을 희망하였다. 특히 현재 직종에서 업무 강도 대비 임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더 나은 보상체계를 위해 이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 중 현재 하고 있는 직종이 만족스러워 이직을 희망하지 않거나, 스스로의 경쟁력이 부족하여 이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지금보다 더 좋은 근무조건의 회사로의 이직을 희망하긴 하지만, 경쟁의 과열화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지 못해 원하는 곳으로의 이직이 어려워 이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사실 계속 프리랜서 하고 싶은 데 부모님께서 이쪽 일을 너무 안 좋아하셔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시험도 계속 2차는 들어가고 있고, 공무원 준비도 같이 하고 있어요.”(3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G)

“최종적으로 제가 이직하고 싶은 건 공기업, 요새 안정 기업이 필요하니까 공기업 사무직으로 가고 싶어요. 새로 가는 직장에서도 일하면서 계속 이직을 준비할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L)

“회사를 계속 다닌다는 가정하에 이직할 생각이 있습니다. 연봉이 조금 더 상승하고, 지금보다 좀 큰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런 데로 가면 점심 식대라든지 상여라든지 이런 복지가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O)

“제가 다른 곳으로 이직할 능력이 안돼서 이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갈수록 더 어린 사람들이

취업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제가 더 좋은 곳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현재 하고 일에 만족도가 높아서 특별히 이직 의향은 없는 것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D)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차이 부담, 현재의 복지차이만으로 차등 존재”

상위소득 청년들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에 대해 부담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고용 안정성과 복지 영역에서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까지 벌어진다면 부담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력에 대한 임금 차등은 인정하지만, 비슷한 업무 강도에 대해서는 똑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한편, 임금 차이가 당연하다는 청년들의 경우 입사 과정까지의 노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고,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효율성을 고려해 비정규직을 채용했으므로 차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굳이 그렇게 금액으로 비교하지 않아도 비정규직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금액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기준으로는 비정규직이 조금 더 많이 받아도 될 것 같거든요 회사적인 차원에서 복지적인 혜택을 많이 못 받으니까.”(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K)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의 일이 비슷하기는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임금을 두 배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아닌 것 아요 차별은 두터라도 경력에 대한 차별일 뿐이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평가를 제대로 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저는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비정규직을 안 뽑는 게 답이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줄이려고 뽑는 게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만큼 돈을 주는 게 말이 안 되고, 정규직인 사람들보다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벌이나 이런 점에서 차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출신 대학이 취업에 영향 미치는 것은 합리적, 하지만 개인의 능력이 강조되는 분위기로 변하고 있어”

대다수의 청년들은 출신 대학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상위권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차원으로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여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또한, 상위권 대학을 입학할 능력이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스펙을 쌓는 등 취업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능력이 높아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블라인드 채용의 증가로 출신학교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학연, 지연을 통해 회사에 입사하기보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증가로 출신 대학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다.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후에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얻는데 있어서 그 정도 매리트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C)

“그 어린 친구들이 굳이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요.”(2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E)

“그 사람들은 제가 놀고 있을 때 공부 했고, 저희가 그 시스템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권 대학을 가면 취업이 쉬울 것이라는. 하위권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어야 공부를 하겠죠.”(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똑똑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들어가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L)

“어떤 경쟁을 통해서 더 고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익숙해서 아무래도 트레이닝도 받았어요. 면접 관련해서 트레이닝도 받고 자격증도 관련된 자기가

원하는 직종의 그런 것들도 좀 더 많이 취득하는데 익숙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3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M)

“과거에 제가 처음 취업 할 때, 5년 전에는 학교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옛날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도 생겼고, 학연이나 지연을 나쁘게 얘기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2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E)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해서 지원할 때 아예 대학교 명이란 성적 증명서를 다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I)

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그림 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력과 공부가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한 노력의 결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청년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4.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상위소득)

“블라인드 채용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결과에는 큰 변화 없을 것이라고 생각”

블라인드 채용이 지원자의 출신학교, 성별, 지역 등 선입견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하며, 필요성에도 공감하였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에도 면접관의 주관의 반영된다고 느끼고 서류심사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되지만 심사의 마지막에는 학교 등 정보가 드러나 블라인드 채용 의미가 사라져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상위권 대학의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아 블라인드 채용을 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뽑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안 들어갈 수 없거든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도 면접관이 중요시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100%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학교만 안 보는 거지 그 외에 나머지 건 보는 건 똑같잖아요.”(3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J)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나름대로 공정한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는 블라인드라고 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다 오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정보들을 사전에 아는 경우도 있다고 본 것 같아서요.”(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K)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뽑아 놓고 상위권 대학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오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O)

“블라인드채용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본 배경, 사람의 출신 성향이나 이런 걸 배제하고 보겠다는 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3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M)

“출신 학교에 따른 월급 차이는 불합리. 직급과 능력이 중요”

상위소득 청년에서는 출신학교에 따라 근로소득이 다른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이 두드러졌다. 소득의 기준은 출신학교가 아닌 직급, 개인의 능력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상위권 대학 출신 청년일수록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선입견이며, 같은 업무를 할 경우 근로소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두드러졌다. 한편, 노력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높은 월급을 받는 것은 노력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출신학교에 따라 월급의 차등은 당연하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같이 공채로 들어와서 같은 직급인데 대학의 높낮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출신 대학은) 입사를 시킬지를 가르는 도구지, 연봉의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똑같은 일을 했을 때는 옳지 못한데 아무래도 부서가 다르다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이가 난다면 인정 못할 것 같아요. 월급은 대학출신이 아니라 직급이나 일의 중요도에 따라 받는 게 맞다고 봐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상위권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업무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I)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은 대학을 나오기까지 본인의 노력이 있었고 반영이 돼서 취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한 상위소득 청년들의 응답을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능력, 노력, 직종, 직급 등의 단어가 빈번히 나타났다. 이는 앞선 분석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청년들은 월급의 경우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 직급, 직종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비수도권 학생들이 가점을 받으면 아무래도 수도권 학생들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I)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방대학을 나왔다고 무작위로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3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M)

“수도권 학생들에 대해 역차별인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건 경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굳이 또 가산점을 줘야 하는지.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약자라고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지방 학교가 지잡대라는 걸 더 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E)

“청년 고용할당제는 신입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하지만 다른 연령층의 기회 빼앗는 점 불공정”

청년 고용할당제가 경력직과 경쟁하는 신입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경력을 쌓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청년 외의 다른 연령층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다.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연령에 따라 고용기회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뽑기 마련인데 그렇게 할당 제도를 하면 신규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 거잖아요 젊은 청년들을. 그래서 정당하다고 생각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I)

“워낙 스펙을 많이 쌓았던 분들과 경쟁을 하는 것보다 청년들은 아예 쌓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 주면 좋은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O)

“나이가 드신 분들도 꿈을 갖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일 텐데 의무적으로 청년을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야말로 진짜 공정하게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법안들은 좀 어긋난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F)

“노년들도 공공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고, 검증을 거치면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분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B)

“이직 준비를 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30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꼭 34세 이상이라고 해서 청년이 끝나는 건 아닌 데 나이를 정해놓고 얘네는 청년이니까 조금 더 보장해 주자라고 정하는 건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3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하위소득_ L)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취업 과정 공정”

현재 취업시장은 점수제 기준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취업 경쟁이 공정하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공기업이거나 기업의 규모가 큰 회사 일수록 언론 등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공정하게 채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채용 선발 시스템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의 경우 신뢰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학연 지연을 통해 채용하는 등 불공정 취업의 행태들이 남아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객관적인 점수로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취업 준비생들의 노력이 반영되니까 크게 불공정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공부로 하는 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취업 경쟁은 꽤 공평한 것 같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O)

“요즘에 블라인드 채용도 많이 늘었고 기업의 인사팀이나 담당자들도 그게 몇 년에서 많으면 몇 십 년 간 체득해 온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뭔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뽑지 않을 거 같아요.”(3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M)

“대기업은 차라리 괜찮은데 어설픈 규모 이런 데는 공정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소규모로 내려올수록 학연 지연이 더 깊어지는, 저만해도 동문이니가 일

시키자 이런 거니까.”(3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G)

“대기업이나 공기업처럼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뽑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잖아요. 블라인드로 한다든지. 그런데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아직은 공정하지 않은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L)

“원하는 직업이 아닌 현실과의 타협을 위한 직업 선택”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위소득 청년의 응답은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직업 선택 과정에서 현실과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적성과 상관없이 업무에 지원한 뒤 채용된 곳으로 취업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취업난으로 인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취업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학교 학과에 따라 추후 취업 직종 선택이 이어진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전공을 바꾸기 어렵고,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직무에 지원하기가 어려워 성적 수준에 맞춰 들어간 학과에 관련된 직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날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 직군에서 이 회사가 날 받아주니까 그냥 취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E)

“붙여주는 곳에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 보다는 선택을 받아서,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N)

“별 생각 없이 그냥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성적순으로 간다든지 그냥. 그런데 한번 전공을 그걸로 해 두면 다른 길로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L)

“대학에 맞춰서 취업서로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과에 진학을 했고 어찌다 보니 그 과에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는 직업을 많이 선택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C)

(4)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취업지원제도 인지: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청년면접수당”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인지여부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청년면접수당 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가 예전에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구직자와 기업을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내일배움희망카드랑 대전희망카드. 대전시에서 매달 미취업 청년한테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매달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I)

“취업 면접을 보면 수당을 얼마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지원하고 면접을 본 게 확인이 되면 수당을 주는 지원제도였어요.”(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C)

“취업성공패키지: 인지도 높지만 만족도 낮음”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다른 취업 프로그램에 비해 경험해 본 비율이 높았다. 프로그램이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나타났지만 프로그램 커리큘럼 구성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취업 연계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취업 연계 회사가 생소한 회사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제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한 비율이 낮아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의욕도 없어 보였고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는 아니까 지원자들이 있어서 명목상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국가에서 연결해 주는 직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이나 네이버를 연결해 주는 건 아닐 테고, 질이 떨어지는 곳일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개선하려면 직종이나 직장 폭을 넓혀야 할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O)

“친구들 3-4명과 함께 취성패를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취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도는 계속 시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연계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B)

“새로운 취업정책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

상위소득 청년들은 현재의 취업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가 정부나 지자체의 취업 알선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일자리가 없거나 취업 지원 제도가 부족해서 취업정책이 효과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정책을 통한 취업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과 청년을 연계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공급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게 정부와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C)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겠지요. 이견 상관이 없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상태에서도 (취업 지원 정책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이게 뉴딜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청년 인턴이라든가 이런 게 1년을 안 넘어가잖아요. 청년 인턴은 제가 알기로 거의 다 11개월이고 뉴딜도 1년이니까. 사실 부모님이 공무원을 하라고 하는 게 안정성을 위한 건데 어차피 1년이면 그것도 비정규직이니까 정부 주도로 비정규직을 많이 창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주변에서 좀 있었어요.”(30대, 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G)

“취업지원은 지금 있는 제도로도 충분한 것 같고 경제 발전이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취업 지원을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취업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고용노동부에서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일자리에 갔을 때 거기가 저질의 일자리라는 게 문제인 거지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상위소득_ I)

“취업 박람회도 있고.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런 데에 쓸 만한 회사가 없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2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상위소득_ O)

2) 하위소득

(1) 소득 상황과 인식

“지출대비 낮은 소득으로 현재 소득에 불만족”

청년 1인가구 하위소득자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이 커 현재의 소득 수준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소득의 대부분이 생활에 필수적인 식비 및 주거비용으로 빠져나가 유동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윌돈이 없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지출되는 영역은 주거비용이었다. 특히 월세에 거주할 경우 소득의 대부분이 주거비용과 주거 관리비용으로 빠져나가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서 생활에 필요한, 독립해서 혼자 살다 보니까 물가도 그렇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주거나 다른 생활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월 소득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F)

“나가는 돈에 비례해서 소득이 작으니까 적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소비하는 돈이 아니라 고정적인 지출이 이미 많은 상태여서 집값이나 관리비나 식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있는 상태여서 그에 비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작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J)

“180만원 아래를 받으면서 월세를 살고 있어서 월세 내야 되고 생활하는데 집에서 생활만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20만원이고 (중략) 소득은 없는데 비용은 늘어나고 주민세나 이번에 4대 보험료도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K)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월세를 내고 이것저것 내다보면 딱히 남는 게 없거든요.”(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M)

“또래 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하위소득자들은 낮은 소득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연령별로 20대보다 30대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또래 집단에 비해 소득이 낮은 상황이 심리적 불안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불안감까지 야기한다고 응답하였다.

“남들보다 버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그 이하라고 생각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B)

“그런데 사실상 요새 청년 취업이 어렵고 코로나 상황도 있다 보니까 심적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불안한 거지요. 주변에 같은 나이대를 보면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더라도 불안한, 미래가 불안한 느낌”(3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C)

“소득은 없는데 비용은 늘어나고 주민세나 이번에 4대 보험료도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현재를 딱딱딱하게 살고 있어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K)

“고시원 생활을 하다 보면 세제라든지 잡비가 드는데 그런 것도 부담이 많이 될 때가 있고 병원에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3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N)

하위소득 청년의 경제적 소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한 결과 주로 생활, 부족, 미래, 불안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전술한바

“주거비. 월세인데 소득의 25%에서 30%정도 됩니다. (부족한 소득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거의 절약하는 것. 잔테크 하는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전세라서 공과금 정도로 나가고 식비가 많이 나갑니다. 지출하기에 힘들지는 않지만 덜 쓰려고 노력하고 부담을 줄이려고 먹는 것도 사 먹는 것도 뭔가 같은 레벨 안에서 좀 더 저렴한 걸 먹게 되는 거지요”(3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C)

“전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과금. 예. 현재 소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돈에서 해결하다 보니 평소 일할 때보다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3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D)

“주거가 한 5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주거비용 감당하기 힘들 때가 가끔 있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F)

“주거비. 집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라든지 월마다 나가는 비용. 전세 이자도 주거비에 포함이 된다면 그것까지”(3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I)

“월세 비용과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비만 해도 거의 70만 원 정도가 나가요. 부족한 지출을 채우기 위해서 아껴서 사는 거죠.”(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K)

“학자금 대출, 주거비용 대출 등의 이유로 부채 경험”

대부분의 청년 1인가구 하위소득자의 경우 부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채는 학자금 대출 및 주택 보증금, 주택 전세자금 대출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생활비를 매우기 위해 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생활비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사 비용 중 복비를 지불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해 은행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하위소득자의 경우 상위소득자에 비해 부채 경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인가구 하위소득자 대부분의 청년들이 부채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이랑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 한 1500에서 2000만원 사이.”(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전세자금 대출로 8천만 원입니다.”(3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D)

“300만원 카드 현금 서비스 같은 것. 단기부채죠. 현금 서비스하고 바로 갚았어요.”(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G)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 지금은 다 갚았습니다. 한 천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2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H)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8천만 원 정도 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I)

“전세자금 대출이랑 학자금 대출 둘 다 있어요.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원리상환이라 이자도 안 내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고 있어요.”(2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J)

“전세에 대한 부채가 한 8천정도 있었어요. 부담이 됐지요. 8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24만원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너무 쎄다 보니까 1년 정도만 살고 나와서 원금을 다 갚은 케이스예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K)

“카카오뱅크에 비상금 대출이라고 300만 원 정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해서 빨리 갚았습니다. 이사할 때 복비라든가 목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현금이 없어서 급하게 카카오뱅크에서 빌렸습니다.”(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M)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대출보다는 생활비 대출이 많았어요.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모자라고 또 필요한 자료들 구매하는데 돈이 급해서 학기 중에 생활비 대출을 좀 받다 보니까 늘었던 게 있어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N)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도 앞선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자금, 전세자금, 등록금, 생활비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며 하위소득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용 대출의 경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7.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부채 경험(하위소득)

“높은 지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축의 비율 줄어”

청년 1인가구 하위소득자의 경우, 상위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축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40%~60%를 저축하는 반면, 하위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10%에서 많게는 20%~30% 정도로 저축을 하고, 높은 고정지출로 인해 저축의 비율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미취업자의 경우 소득 대비 지출 비용이 높아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생활비만도 너무 빠듯해서 잘 못하게 돼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 B)

“저축도 계속 하고 있고 적금이 3개 있어서 한 2, 30% 정도 저축하고 있어요”(3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 C)

“내가 소득이 생겼다고 했을 때 소득의 10% 정도”(2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 E)

“정기적금 정도 주택 청약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월급의 20%하고 있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F)

“10% 안될 것 같아요.”(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 G)

“15%에서 20% 정도 예/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 1)

“저축은 주택 청약 10만원과 일반 적금 10만원 밖에 못해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K)

“아직은 10%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택 청약으로, 일부는 적금으로 저축하고 있습니다.”(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M)

저축 비율이 하위소득자가 더 낮은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소득자에 비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위소득자의 경우, 적금은 소득의 15%에서 많게는 30% 이상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하위소득자의 경우 소액으로 투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위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예/적금으로 저축을 하는 방식보다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이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소액인데 10% 정도하고 있어요. 투자 특별히 사용목적은 없고 나중에 생활비에 보태려고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F)

“예/적금으로는 돈을 모아도 이자율이 얼마 안 되니까 크게 이득을 본다는 느낌이 없어서 주식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3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D_)

“적금을 한번 넣어봤는데 적금을 만기되고 나서 수익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형편없이 적어서 그 돈으로 차라리 은행 주식을 샀으면 더 많이 벌었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적금 없이 주식만 하고 있습니다.”(2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H)

“한 10%,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금이자보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I)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은 유일한 계층 이동의 수단”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몰입하는 청년 세대에 대해 청년 1인가구 하위소득 조사 참여자들은 경제적 참여 측면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몰두하는 것은 청년세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 이동 수단이며, 생존을 위한 투쟁이

라고 응답했다. 임금 상승률과 부동산 상승률 간에 간극을 좁히지 못해, 근로소득만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은 계층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 및 가상화폐에 투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제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을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월급쟁이가 된다 해도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분상승을 위한 마지막이 비트코인이라고 보거든요.”(2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E)

“금리도 엄청 낮은 시대이고 내 집 마련하려면 주택 금액이 제 수입보다 훨씬 느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예금에 저축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2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H)

“청년세대가 할 수 있는 경제 계층 이동 수단의 마지막이라고도 하잖아요. 저도 그것에 동의하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아니면 사회적 구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계층이 이동될 수 있다면, 있는 상황이라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청년세대를 육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으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로소득에 투자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2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J)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고생을 해도 나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발버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3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N)

"사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 빈곤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년들이 대부분 빈곤함을 느낀 경험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을 준비할 때 나타났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인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거나, 사고 싶은 물건 구매를 포기하고 최대한 저렴한 것으로 구매하려고 할 때 빈곤함을 느낀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또한 응답자는 병원비 때문에 진료를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부모님의 지원 없이 모든 경제적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나타났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타인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때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친구를 만나거나 제 개인적으로 맥주를 마시고 싶거나 밖에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 되게 많이 줄이기도 했지만 나가고 싶어도 억제하거나 못할 때. 그럴 때 많이 빈곤하다고 생각했어요.”(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정말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걸 먹을까 말까, 구매할까 말까 고민할 때. 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엄청 큰 게 아니라 만 원, 이만 원짜리임에도 고민하고 있을 때.”(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B)

“병원비가 70만원 나왔는데 병원비가 무서워서 사실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달 정도를 고민하고 병원에 갔거든요. 그럴 때 보면 내가 내 몸 하나 못 챙기는데 일해서 뭐 하나 사고 그렇지요.”(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G)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제가 입고 싶거나 사고 싶은 걸 사지는 않고 다 참고 살고 있으니까 부유하다기보다는 빈곤함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2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H)

“집에서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그때 내가 빈곤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 집이라면 내가 마음 놓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취업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은 데 면접 복장을 산다든지 학원에 다니면서 스펙을 키운다든지 돈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돈에 대한 걱정을 빈곤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J)

“늦어지는 사회진출로 인해 과거에 비해 청년의 빈곤 정도 상승”

과거에 비해 학력 및 스펙 상향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예전에 비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빈곤한 청년들이 늘어

났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기피 현상 및 대기업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취업난이 깊어지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활동 시기가 늦어져 청년 빈곤이 증가했다는 의견이다.

"어디든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청년들의 인식조차도 더 높은 급여를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취업이 미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눈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취업난이 심해지는 경향도 있고"(3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C)

"200만원 내외의 일자리 아니면 최저시급 더 적은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연봉상승이 아무리 올라도 뺄도는 느낌. 어떤 블라인드, 직장인들 하는 후기 글에서 본 것 같은데 대기업 신입 초봉에 다다르려면 중소기업에서 과장급이 더 적은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해서 취업 준비 시작할 때는 되게 충격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중소기업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지요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걸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니까."(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서른이 넘어도 아직까지 일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기업에서도 눈이 높아졌고, 대학이 많아져서 정말 좋은 대학이 아닌 이상 안 뽑아주고, 청년들도 눈이 높아서 중소기업으로는 지원을 안 하게 되죠. 서로 악순환인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B)

"물가도 높아지다 보니까 어디든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청년들의 인식조차도 더 높은 급여를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취업이 미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눈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취업난이 심해지는 경향도 있고"(3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C)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 해소"

부모의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자식의 청년 시기의 경제적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 조사 참여자들은 매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직접적 경제적 지원이 있을 경우, 1인 가구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

고 있는 주거비용 마련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생활비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벗어 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으로부터 직접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저축비율 또한, 달라진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부모님의 경제적 뒷받침은 경제적 부담감 해소뿐만 아니라 학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심리적 부담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주변을 보면 부모 도움 없이 잘 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부모님이 주신 원룸 건물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아파트를 사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B)

“(부모님이)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부담해 주게 되면 사실상 내가 버는 급여를 더 저축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모으는데 도움이 돼요.”(3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C)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인 것 같고 정보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어야 많이 얻을 수 있고 심적인 게 가장 크지 않을까. 부모님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없고 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취업에 노력할 수 있는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취업시장이 한두 달에 원하는 곳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을 투자할지 2년을 투자할지 그게 내 상황보다는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J)

“부모님이 경제적 소득이 많으면 자녀가 의욕만 있으면 뭐든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경험이 많으면 사회를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증을 따든가 이런 투자를 하기가 쉽다고 생각해요.”(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G)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식의 교육에 영향을 미쳐 교육 격차로 인해 빈부격차 대물림”

상위소득자와 마찬가지로 하위소득자에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식의 교육에 영향을 미쳐 교육격차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자식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은 취업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부모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학교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서 대학도 좋은 대학 가고 그러면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조금 더 취업시장에서 유리한 데에 먼저 진입하는 경우를 봤던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가난하면 계속 가난한 것 같아요. 부의 대물림. 그리고 요즘에는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부만 열심히 해도 올라갈 수 있지만 요즘은 혈연, 지연, 학연에 차이가 있으면 그만큼 더 올라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B)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교육 수준이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를 봤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를 보면 교육의 인풋과 자식이 얻는 사회적 지위가 비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 수준과 비례의 소득 수준이 비례하니까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사회적 지위 수준도 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2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E)

“집안에 (전문직인 직업을 가진) 부모님이 계신다거나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올라가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안의 환경이나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의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전문직을 가지면 그에 따라 소득이 높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M)

(2) 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소득지원제도 인지: 청년 면접수당, 기본수당,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의 소득을 지원하거나 빈곤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 인지여부에 대해 청년 면접수당, 청년 기본수당,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등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햇한 이슈가 기본 소득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말고도 취업 지원 할 때 수당들, 청년 수당이나 이런 것, 지자체별로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희망 통장인가 알고 있어요.”(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경기도 청년 수당, 기본 소득 수당이란 이전 회사가 송파에 있었는데 송파구에 국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세가 되면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면접 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구직을 하면서 한번이라도 면접을 더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회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면접을 보면 면접 확인서 받으면 주니까 한번 면접 보자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3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C)

“청년내일채움 공제 그리고 내일배움 카드 알고 있어요. (내일배움카드) 나쁘지 않았어요. 재료비 따지면 그 돈 이상일 것 같은 데 저렴하게 잘 배웠어요.”(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G)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제도 매우 필요, 수혜인원 확대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정책 경험 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실패를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청년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청년 소득 정책을 통해 구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감에서 해소되어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은 일부 청년에게만 해당되어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해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인이 청년 정책 수당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아 수혜를 받지 못한 경험 이 있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아 지원조차 하지 못한 경험 때문에 현재 제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현재의 정책을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한 청년의 경우, 선별적으로 청년제도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청년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과정으로 상대적 박탈감

을 일으킨다는 의견이었다. 또 보편적 지원은 차상위 계층의 청년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에 가까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빈곤까지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편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년들의 실패를 좀 보호해 주기 위한 측면에서 라도 청년지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해당되는 경우들이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계속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도 비참하거든요.”(3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N)

“중위 소득 몇%까지만 이걸 해 주겠다 이런 걸로 격차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박탈감을, 보편복지가 되면 좋겠어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상위소득_ A)

“조금은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턱도 없던 적이 있었거든요. 1인 가구가 한 달에 43만 원인가 벌어야 신청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건 너무 노답이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집에서 부모님과 사는 애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M)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한데 차상위 이하인 청년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살짝 위의 구간에 있는 청년들은 선택의 폭이 많이 없어서 정책들이 진짜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해당하는 경우는 한 두 개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3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I)

“지원이 되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건보다 조금 더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빈곤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3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D)

한편, 지역 간 청년 소득관련 제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할수록 청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해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주변에서 그런 혜택을 본 경우도 되게 드물고 그런 게 지자체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고 해서 지원을 받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F)

“일단 서울은 그래도 정책이 좀 잘 되어 있는데 지방은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이 없더라고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부족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B)

(3) 노동 상황과 인식

“직업의 안정성 및 직업적 대우를 위해 모든 하위소득청년 이직 희망”

하위소득 청년의 경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직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에 불만족하여 임금체계 개선 및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이직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또한, 고용 형태에 따라 이직 희망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응답자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소득이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직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정규직 응답자의 경우 업무 강도 대비 낮은 급여로 인해 더 나은 근무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라 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고민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데 조금이라도 그 방향에 닿을 수 있으면 일을 할 텐데 생각하면 할수록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늦기 전에는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이 업무로는 정규직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로 취직할 수 있는 노인복지 센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복지 센터들, 아니면 병원도 있고.”(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G)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제가 영양사 면허만 취득한 상태니까 같은 급여를 받을 바에는 돈으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직업적으로 대우를 받고자 옮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K)

“이건 경제적 도피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같은 디자인 업계인데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제가 원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3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하위소득_ L)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 차이 합당과 부당 의견 대립,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는 일반적으로 동의”

하위소득 청년들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에 대한 찬반 여부는 고용 형태에 따라 나뉘었다. 정규직의 경우 임금의 차등은 합당하다는 의견이, 비정규직은 차등이 부당하다는 응답이 일반적이었다. 미취업자의 경우 임금 차이가 합당하다는 의견과 부당하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임금 차이가 합당하다는 이유로는 정규직이 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비정규직보다 많이 투입되었고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만약 업무의 차등이 없이 같은 업무강도로 노동을 한다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였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편리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 비정규직화가 되어버리고 일상화가 되는 건 안 좋다고 느껴서 어느 정도는 간격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동일노동이라면 좀 많이 차별이 아닌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정규직 직원이라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노동을 하고 있는 업무의 책임 같은 게 전혀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노동이 아닐 경우에는 임금이 다른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3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하위소득_ L)

“당연해요. 능력이 안 되니까 정규직으로 못 들어간 것이고, 비정규직은 어떻게 보면 금방 그만뒀도 되고 금방 대체가 되니까. 정규직은 근속으로 계속되는 거니까 차이가 당연한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B)

“업무량이 같은, 비슷하다면 업무량에 따라서 임금이 지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제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3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C)

“출신 대학에 따른 선입견, 취업시장에 존재”

하위소득 청년들의 경우 출신 대학교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서류전형 과정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영향의 배경으로는 좋은 학교를 다니면 일을 잘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아직 존재한다는 점과 경력이 없는 신입의 경우 업무 능력 평가 기준이 부족해 학력을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았다.

“좋은 학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때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I)

“우선적으로 이력서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좋은 학교를 나오면 공부를 잘 했다고 1차원적으로 생각이 들어요.”(3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D)

“이것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로도 인사 담당자분들도 취업을 할 때 그런 대학교 출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2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E)

“솔직히 서울대생이랑 지방에 있는 대구대생이랑 뽑으라고 하면 누구라도 학력이 좋은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일하는 걸 본 게 아니니까.”(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G)

“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노력에 대한 보상”

하위소득 청년들은 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대부분 인식하였다.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노력하였기 때문에 좋은 직장으로 보상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 입학과정의 노력만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대학교에 입학하는 과정과 취업을 하는 과정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출신 대학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청년들은 계속해서 취업시장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사회적 구조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노력했던 건 사실이고 동등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H)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데 고등학교 때 많이 놀고 싶잖아요. 남자라면 여자 친구도 사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 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뽑아낸 결과라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2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O)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친구들은 그만큼 노력을 했고, 투자를 했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소득이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M)

“물론 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고 열심히 했고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만 학교만으로 모든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3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D)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은 어려웠을 지라도 취업은 또 새로운 밑바탕인데 대학으로 그렇게 상위권 대학으로 취업이 결정된다면 상위권 대학을 나오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부당한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F)

“블라인드 채용은 개인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 시스템”

하위소득 청년의 대부분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투명하고 평등한 채용 시스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상위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와 목적에 긍정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년들이 출신 학교를 능력의 일종으로 고려하지만, 그와 동시에 출신 학교가 채용의 평가기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지방 대학 나오거나 대학을 나오지 못한 친구들한테도 기회라는 게 주어질 수 있는 게 괜찮은 사회라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H)

“서류나 면접이나 이런 것 평가하실 때 학벌에 대한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측정하는 요소가 지금은 많이 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깔끔하게 상위권 대학이면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겠다. 이런 식의 요소가 많이 있었으니까 사람을 평가하는데 엄청 편한 요소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O)

“좋은 것 같아요. 조건을 먼저 보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3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D)

“대학이나 선입견 그런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가리고 하다 보면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F)

“근로소득은 출신 학교가 아닌 직급과 능력이 반영되어야 공정”

하위소득 청년에서도 상위소득과 마찬가지로 월급의 기준이 출신학교가 아닌 직급, 개인의 능력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같은 일을 할 경우 출신학교에 따라 월급이 다른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출신학교에 따라 월급의 차등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상위권 대학을 다니는 것은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할 확률이 높고,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취업하고 직장에 가면 어차피 새로 배우고 자기 성과를 내야 하는 영역이라 출신 대학은 이전 단계의 일이고 진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지 그게 더 많은 월급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그들이 만약 저보다 일을 잘하면 돈을 많이 받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순수하게 그들이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 이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2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E)

“대학이라는 것에 임금이 달라진다면 다시 대학을 갈 수도 없을 것이고 대학을 똑같이 나왔으면 비슷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차별을 두면 억울할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F)

“같은 노동을 하는데 대학이 다르다고 월급을 따로 주는 건 완전히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차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학력 청년들이 보통은 좀 더 노동이나 그 업무에 책임이 더 있는 부서로 가더라고요.”(3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하위소득_ L)

“성과제라면 제일 좋겠지만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좋은 직장에 가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월급이 높은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H)

“거주지역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 출신 청년의 취업 가산점 제도 찬반 양분”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수도권 출신의 하위소득 청년은 노력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 제도라는 응답을, 비수도권 출신의 하위소득 청년은 지역 간 기반 시설의 차이를 극복하는 제도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청년은 해당 제도가 노력을 통해 수도권의 대학을 간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응답하며, 취업은 노력과 능력의 결과라고 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기반 시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도권 청년들은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완화할 비수도권 청년 대상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취업이 개인의 노력의 결과라는 수도권 청년들의 응답과 차이를 보인다.

“지방대를 나왔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는 건 서울 애들에게 불공평하죠. 나는 서울에서 열심히 했는데 왜 지방에서 왔다고 가산점을 주나 하고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M)

“기업이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학벌도 있고 다른 능력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학벌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해 왔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인적인 노력을 가산점으로 없앤다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서 가산점이 옳은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2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E)

“지방과 수도권이 인프라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중략) 실제로 취업이라든지 대학을 가는 상황들을 생각해봤을 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 특혜를 보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못 누리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3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N)

“대부분의 회사 본사 큰 회사들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나 기회가 많지도 많을뿐더러 어렵게 그쪽으로 가는 건데 (중략) 지방에서는 서울로 가기 어려울 것 같고 문턱이 높을 것 같고 그런 가산점을 통해서 지방과 서울이 순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F)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한 하위소득 청년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그림 V-8]에 제시하였다. 주로 역차별, 노력, 교육, 인프라 등의 단어가 빈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앞서 수도권 청년들은 해당 제도가 노력을 통해 수도권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킨다고 응답하고, 비수도권 청년들은 취업 준비 또는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완화할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과 맥을 같이하는 분석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V-8.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지방대 청년 취업 가산점 제도(하위소득)

“취업 경쟁의 공정 여부 양분, 업무능력이 취업경쟁의 중요한 기준 돼야”

하위소득 청년에서는 취업 경쟁의 공정 여부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먼저 공정하다는 청년은 현재 취업 시장은 특별한 청탁이 없다면 블라인드 채용 또는 엄격한 심사기준 등이 반영되어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불공정하다는 청년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소기업의 취업과정에는 대기업에 비해 부정청탁과 같은 불공정한 측면이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친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20대, 비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름 심사 기준을 가지고 뽑는 거라 기준에 따라서 뽑는 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 1)

“학력에 따른 차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성별과 나이로 인해 쉽게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3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 D)

“대기업은 공정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들이 채용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면접을
공고를 내는 것 보다 주변에 아름아름 알아서 대학교에 바로 취업 지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K)

“내정자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서. 방과 후 학교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 있는 때 그런 경우에 내정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공고가 올라오고 그 다음날 바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당일에 면접인 경우도 있고.”(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G)

한편, 취업경쟁의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이라는 응답이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신입에게 업무능력이 높은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발전가능성, 스펙, 태도, 개성 등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업무능력을 키워줄 일자리 체험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서류보다는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평가하면 좀 공정하게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30대, 수도권, 남성, 미취업, 하위소득_ C)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경력을 확인하는 게 어렵겠지만 우선은 출발 조건에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경력이 있다면 업무 능력을 우선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3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D)

“사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취업 경쟁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인턴이나 이런 걸 하는 회사가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중략)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G)

“실무 능력이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실무 능력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니까 스펙을 보는 거겠지요.”(2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H)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모두가 업무 능력을 다 갖추고 취업하는 건 아니라서, 발전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3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I)

하위소득 청년이 인식하는 취업 경쟁의 공정성 및 기준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능력, 대학, 시험, 업무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이는 앞선 분석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위소득 청년이 취업경쟁의 중요한 기준으로 업무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현재의 취업 경쟁에서 출신 대학과 시험이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9.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_취업 경쟁의 공정성 및 기준(하위소득)

“원하는 직업이 아닌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 선택”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위소득 청년의 응답은 부정적이었다. 그들은 직업 선택 과정에서 현실과의 타협이 주로 이루어지며, 특히 직업은 생계유지의 목적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하위소득 청년들은 상위소득 청년들에 비해 직업이 자아실현의 수단이기보다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의견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편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을 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교육현장에서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 고민할 제도나 교육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의 선택지가 많지 않아 고용이 안정적인 직장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은 상태로 취업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간다거나 여기가 인기가 많다더라 혹은 많이 뽑는다더라 하면 그쪽으로 쏠리고. 특히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것 때문에 많이 하나까.”(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B)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찾는 것도 힘들지만 하기 싫은 일이라도 안 하고 살면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에는 힘들죠. 집 걱정이라든가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하나까.”(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M)

“대체로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진행하고 그렇게 성장하다가 나중에 취업할 때쯤 됐을 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그때야 취업하는 일도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게 많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2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H)

“청년들이 하고 싶은, 청년들이 원하는 롤모델 상이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롤모델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문도 좁잖아요. 그 좁은 문에 통과하는 몇몇 사람은 있겠지만 그 통과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차선택으로 선택을 하겠지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깐 그 차선택에 만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못 갔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2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J)

(4)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취업지원제도 인지: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면접수당”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인지여부에 대해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면접수당 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내일배움카드랑 제가 받은 고용촉진 수당도 그 중에 하나이고 공공기관 중에 서울 산업진흥원이나 노동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아예 몇 주 해서 현직자들과 매칭해서 직무 이해도 높여주고 자소서 쓰는 것부터 알려주는 것도 참여해 본 적이 있어서 그 정도 알고 있어요.”(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면접 볼 때 양복 같은 것 사 입으라고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들 중에서는 없고 예전에 내일배움카드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3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하위소득_ L)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저도 나중에 퇴사를 하면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2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M)

“내일배움카드: 경제적 부담의 해소는 만족, 고급 강의를 포함한 커리큘럼 다양화 필요”

내일배움카드 제도의 경우 수강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하위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취업에 필요한 토익이나, 영어 관련 자격증을 사설 학원에 비해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수업 커리큘럼의 대부분이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구성이어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외에 실력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세분화된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수업의 질 향상과 강사의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나쁘지 않았어요. 재료비 따지면 그 돈 이상일 것 같은 데 저렴하게 잘 배웠어요. 관심 있었던 장르인데 비용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거기에 있기에 돈 덜 들고 배웠지요.”(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G)

“영어 공부를 더 하려고 토익 학원을 다니는데 지원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구직자였어요. 그때는 만족했어요. 비용의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해 줬기 때문에 출석 이수라든지 이런 것만 조건에 맞게 하면 지원을 받으니까 좋았어요.”(30대, 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D)

“내일배움카드 해 봤어요. 바리스타 배웠거든요. 일제 학원 자체에서도 나라에서 주는 돈이다 보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높지 않아요.”(30대, 수도권, 여성, 정규직, 하위소득_ K)

“교육 수준이 너무 눈높이가 완전 초보자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는 포토샵을 배웠는데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 초보자와 같이 배우다 보니까 수업 질이 떨어지게 되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급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개개인 선생님마다 수업의 형태가 다른 것도 있고 환경 같은 것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걸로 느껴졌습니다.”(30대, 수도권, 남성, 정규직, 하위소득_ L)

“일자리 체험/인턴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

하위소득 청년들의 경우 필요한 취업 지원 정책으로 일자리 체험 및 인턴 프로그램을 주로 꼽았다. 직무를 경험하거나, 직업 탐색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적성에 맞는 일인지, 어떤 직무가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또한, 최근 기업의 취업형태 분위기는 직무관련 경험 및 경력을 중요시 여기지만,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일 경험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게. (중략) 일 경험이 있어야 진입하는 청년들이 한 줄이라도 더 쓰고 하다못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정부에서 제일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20대, 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A)

“경쟁 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어릴 때부터 찾을 수 있게 다양하게 직업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어요.”(20대, 비수도권, 여성, 미취업, 하위소득_ B)

“청년들도 자율학기제처럼 자기들이 이미 이 직업이나 자기가 관심 있는 직종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나랑 진짜 잘 어울리는구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30대, 비수도권, 여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G)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직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기업과 연결해서 인턴십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정부도 기업이랑 연계해서 그런 걸 많이 늘려주면 좋겠어요.”(30대, 비수도권, 남성, 비정규직, 하위소득_ I)

하위소득 청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경험, 일자리, 검색, 교육, 장기 등의 언급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전술한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서, 하위소득 청년에게 가장

3. 소결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의 전반적인 빈곤 의식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위하여 소득 상황과 인식, 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 인식, 노동 상황과 인식,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 인식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위 소득 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 등에 따라 청년 빈곤 인식에 대한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면담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 상황과 인식

상위 소득자의 경우 하위 소득자보다 현재의 소득으로 의식주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해결할 수 있어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하위소득자들은 또래 집단보다 낮은 임금으로 심리적인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경험에 있어서도 상위 소득자보다 하위 소득자에서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유로는 학자금 대출, 주거비용 해결을 위한 대출이 지배적이었다.

소득에 대한 지출 측면에서 월세 거주자보다 전세 거주자가 주거 지출에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 소득 상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소득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거비용으로 확인되었는데, 소득만으로는 주거마련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주거비용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취미생활을 포기하는 경우의 사례도 도출되었다. 소득과 주거의 연관성은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생길 경우 주거 마련을 가장 먼저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연장되었는데, 월세 거주자는 전세로, 전세 거주자는 자가 소유로 소득이 증가되면 주거사다리를 꿈꾸는 대부분의 청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청년 빈곤 문제에서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 주거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으며,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 후에도 맞벌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이는 주거비용으로 인한 노동의 가중, 취미 및 문화생활의 포기, 결혼 및 저출생 문제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상호작용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적금보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가 더 합리적인 투자 수단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 이유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 예/적금의 금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예/적금을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라는 인식이 많았으며,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임금 인상률이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주식의 경우 합리적인 투자에 대한 개념이 지배적이었으나, 가상화폐의 경우 투기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였다. 특히 빚을 내면서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청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위 소득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을 준비할 때 빈곤을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또래집단을 접했을 때 상대적인 빈곤감을 더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경제적·기술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먹고사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어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기성세대의 경우 개인의 노력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세대이지만 현재 청년세대는 개인의 노력으로 주거를 마련하거나 풍요로운 가정을 꾸리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발전의 속도가 과거보다 더디며 충분한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일자리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어 청년 빈곤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힘든 일에 대한 기피와 대기업

선호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구직난이 심화되고 빈곤한 청년의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의견이었다.

향후 미래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특히 부모로부터의 부의 세습과 부동산 유무에 따른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 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현재 청년 소득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구직수당,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내일채움공제 등을 대표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해소 정책은 대기업 쏠림 문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늘어 취업난 해소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현 소득지원제도는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해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지만 청년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인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 빈곤 문제 있어서 소득지원제도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또한, 하위 소득자의 경우 본인 자신을 평가할 때 지원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원할 경우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또한 높아 지원조차 하지 못한 경험 때문에 청년 소득지원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는 의견이 많았다.

3) 노동 상황과 인식

고용 형태에 따라 노동 상황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일수록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청년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을 우선순위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공기업이나 공무원 직종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은 더 나은 보상과 복지환경을 위해 이직을 희망한다는 의견과 경쟁의 과열화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이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고용 안정성이나 복지 영역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까지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입사 과정에서의 노력과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효율성이 고려되는 문제로 인하여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반되었다.

과거에는 상위권 대학 출신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유리하였지만 현재에는 블라인드 채용의 증가로 출신학교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출신학교에 따라 근로소득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근로소득은 출신학교가 아닌 직급이나 개인의 능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었다. 비수도권 대학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반면, 반대로 수도권 대학 출신 청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인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서는 신입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연령에 따라 고용기회를 차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취업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취업 과정이 공정하나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회사는 여전히 불공정 취업 행태가 남아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년은 본인의 직업에 대해 직업 선택 과정에서

현실과의 타협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업이라는 의견이 팽배하였다. 대부분의 청년은 적성이나 가치관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타협 가능한 직장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인식이었다.

또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을 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교육현장에서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 고민할 제도나 교육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의 선택지가 많지 않아 고용이 안정적인 직장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은 상태로 취업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4)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청년면접수당을 대표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사설 학원에 비해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하지만, 커리큘럼이 사설 학원에 비해 다양하지 않고 전반적인 수업의 질 향상, 강사의 전문성, 교육프로그램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인지도와 경험도는 높지만 형식적인 구성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 작용이 부족하여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취업정책이 효과적이 못한 이유는 정부의 취업 알선을 통해 연계되는 일자리 질이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공급하려는 노력으로 취업지원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하위 소득자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보다 일자리 체험 및 인턴 프로그램 등 직업 탐색 기회가 적어 정부차원의 경력 개발 및 일자리 탐색의 기회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표 V-3. 심층면담 결과 요약

	구분	상위소득	하위소득
소득상황과 인식	소득상황	소득 대비 높은 지출로 인해 현재 소득에 불만족, 지출 영역이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용	지출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소득에 불만족, 또래 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심리적 불안감
	소득인식	낮은 금리로 인해 예/적금에 저축하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워 주식 및 가상화폐에 몰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예/적금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 주식 및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유일한 계층이동의 수단
	청년빈곤	높은 대학 진학률 대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빈곤 증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향후 미래에 청년들이 지금보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 어려움	사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빈곤함을 경험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져 과거에 비해 청년의 빈곤 상승
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 인식	정책인지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구직수당, 내일채움공제 등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함	청년 면접수당, 기본수당, 내일채움공제 등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함
	정책 필요성	청년 소득 지원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 가능으로 긍정적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 제도는 청년의 실패를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 필요
	정책 개선사항	소득지원 정책은 단기적 경제 부담해소가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부족,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아 지원 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 많은 대상자가 정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선별 완화 필요

	구분	상위소득	하위소득
노동상항과 인식	노동상항	고용형태에 따라 비정규직일수록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된 직장으로 이직하기를 희망함 출신 대학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개인의 능력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어야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에 불만족하여 이직 희망 비정규직 응답자의 경우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소득의 안정성이 보장된 곳으로 이직의향
	노동인식	비수도권 대학 출신 청년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수도권 청년들에게 역차별	취업 경쟁의 기준은 출신 대학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 두드러짐 근로소득의 차이 또한 출신 학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급과 개인의 노력이 반영 되어야 함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 인식	정책인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면접수당,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면접수당,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취업 지원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함
	정책 필요성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인지도가 높지만 커리큘럼 구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가 되지 않아 불만족	청년들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 취업 관련 제도 확대 필요
	정책 개선사항	새로운 정책보다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임금의 안정성이 보장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사설학원에 비해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해소가 가능하지만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된 커리큘럼 구성 필요

○———— 제6장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비전 및 분야
- 2. 정책 제언
- 3. 결론

1. 정책 비전 및 분야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문제의 타개를 위한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의 토대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금년도 1차년도 연구의 중점 연구분야인 경제 분야와 노동 분야의 2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VI-1. 정책 비전 및 분야

26) 이 장은 김형주 선임연구위원과 연보라 연구위원(이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정리·집필하였음

2. 정책 제언

1) 경제 분야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

(1) 경제적 지원 연계 종합 서비스 강화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 빈곤은 다차원성을 지니고 있으며, 차원 간 연쇄적 또는 중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년 대상의 기존 지원은 각 차원별 단일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년 빈곤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다차원 빈곤 심층 분석 결과, 전체 청년의 약 10.2%가 ‘다차원빈곤심각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해당 청년들은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등 경제적 영역에서 빈곤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자본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심각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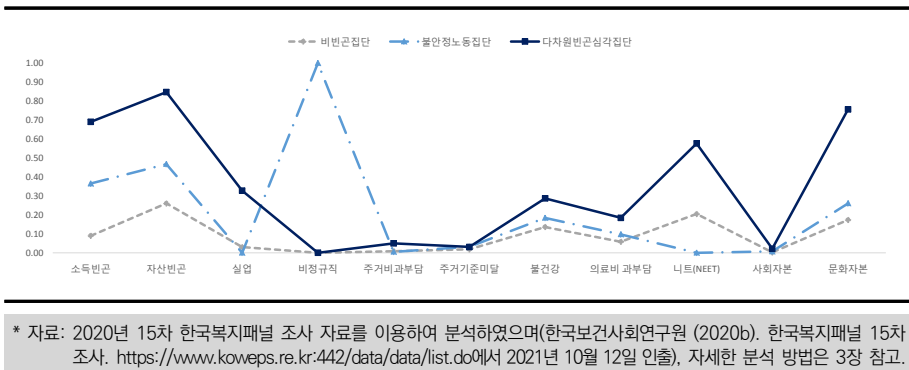


그림 VI-2.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집단

다. 추진내용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다면적인 종합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단일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혜자 중심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청년 다차원 빈곤의 유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적 영역을 중심으로 노동, 주거, 교육, 건강, 사회·문화 영역의 지원을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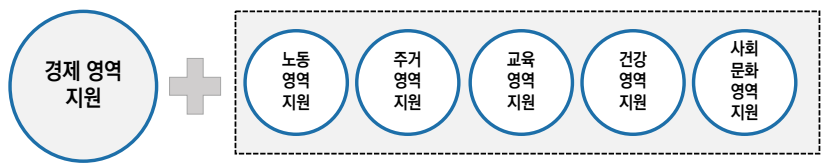


그림 VI-3. 청년 경제적 지원 연계 종합 서비스 강화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에서 사업 연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17개 시·도의 청년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1. 청년 경제적 지원 연계 종합서비스 강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가칭)청년 경제적 지원 연계 종합서비스 강화 방안 정책연구	2022년	50	-

※ 2021년도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평가방안 연구비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산정함.

(2)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 실업문제와 함께 저임금, 불안정 노동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청년들이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층 간 자산격차가 심화되면서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근로소득으로 자산을 증식하기도 어려운 엄혹한 현실에 놓여 있다.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축소시키고, 모든 청년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소득 관련 청년들의 정부정책 인식 및 정책욕구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소득 관련 정부 정책 중에서 우선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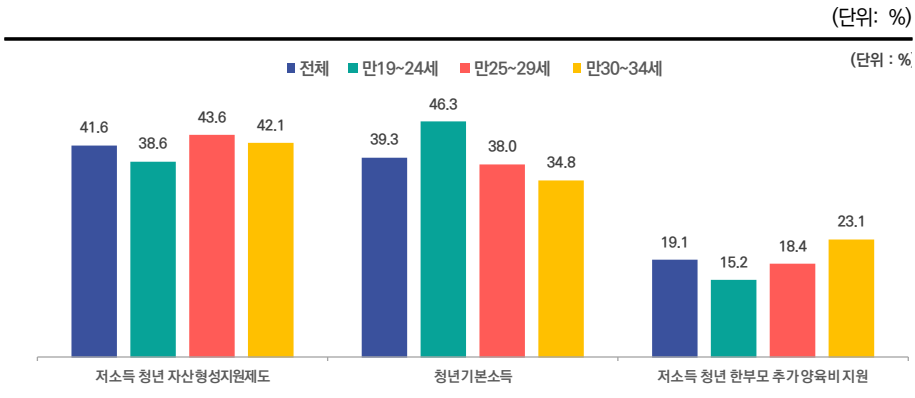


그림 VI-4. 소득 관련 정부 정책 내 우선 확대 정책

다. 추진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기준 중위 100%이하의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만기 후 수급액이 결혼, 주거, 교육 등 청년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는 데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저축액을 상향하여 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차상위 이상 청년층의 자산형성지원제도로서 도입된 ‘청년 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은 2년간 매달 15,000원에 불과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해당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2.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확대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2022년	57,800	
‘청년 희망적금’ 지원 확대	2022년	95,200	

※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소요 예산에서 개인 저축액 최대 지원 규모 및 2022년 청년 희망적금 소요예산에서 저축장려금 최대 지원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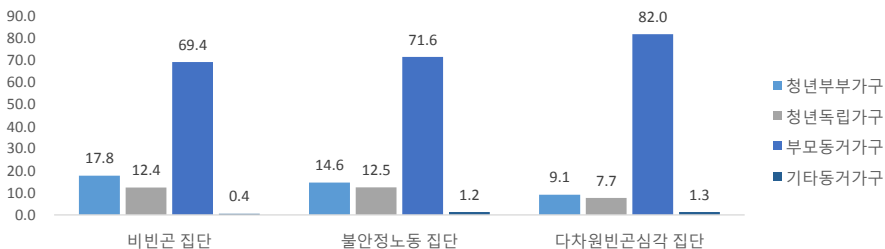
(3) 청년 개인 소득 및 자산 빈곤 지원 제도 개선

가. 필요성 및 목적

기존 청년 경제적 빈곤과 관련하여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년들이 동거하는 경우보다 빈곤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이는 주로 가구 중심의 소득과 자산에 기반을 두어 빈곤 여부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가구 중심의 빈곤 지원으로는 청년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자산 빈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캐거루족 증가와 청년의 독립 지연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청년 개인 중심의 경제적 빈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다차원 빈곤 심층 분석에서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부모동거가구 비율은 82.0%로 여타 빈곤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 이외의 개인의 소득과 실업, 비정규직, 니트(NEET) 등의 다각적 측면에서 빈곤 상황을 파악한 결과, 부모동거가구가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중적인 빈곤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자료: 2020년 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한국복지패널 15차 조사,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자세한 분석 방법은 3장 참고.

그림 VI-5. 가구유형과 청년 다차원 빈곤 유형

다. 추진내용

빈곤 가구의 가구원, 자녀라는 인식을 넘어 독립된 개인으로서 경제적 빈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특수한 이행기 특성을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대부분이 가구 소득 기준을 기본 요건으로 두고 있어,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의존한 지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일차적으로 청년 개인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정책적 배제 집단에 대한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모든 청년을 위한 지원으로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의 청년 소득·자산 빈곤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3. 청년 개인 소득·자산 빈곤 지원 제도 개선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가칭) 청년 개인 소득·자산 빈곤 지원 제도 개선방안 정책 연구	2022년	50	-

※ 2021년도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평가방안 연구비 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산정함.

(4) 청년 경제적 빈곤 지원 대상자 근로조건 완화

가. 필요성 및 목적

2021년 8월 26일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자산형성으로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국미 조정실, 2021).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의지와 상관 없이 일하지 못하고 있거나, 오랜 기간 구직의 어려움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빈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탈 빈곤을 목표로 하는 청년 경제적 빈곤 지원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을 수 있으나, 가장 심각한 경제적 빈곤 위험에 노출된 일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의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다차원 빈곤 심층 분석 결과,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은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으로, 실업율이 32.8%이며 일하지 않고 공식적 교육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니트(NEET)비율은 57.6%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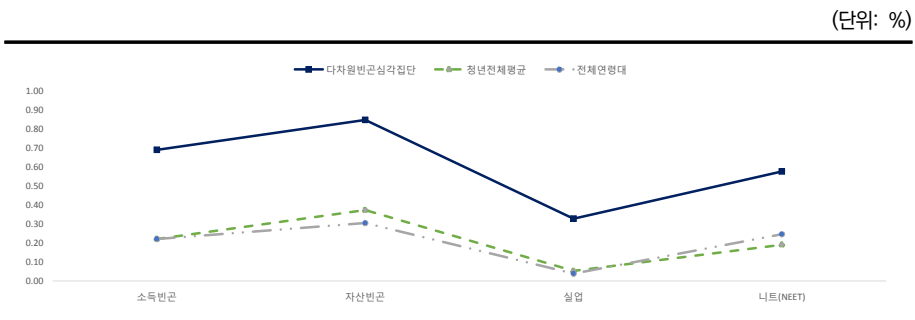


그림 VI-6. 청년 '다차원빈곤심각 집단'의 실업과 니트(NEET)비율

다. 추진내용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증대와 함께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제적 빈곤을 해소하는 기존의 정책적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의 불안정한 노동 상황과 개인의 근로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정책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청년 자산형성지원 제도에서 근로조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 연소득 600만원인 가입조건 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하한선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들의 불안정한 근로상황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자산형성제도의 중도해지 조건에서도 일시적 휴직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이행기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무부처로서 지원 대상자 조건 완화 및 개선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을 주관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4. 청년 경제적 빈곤 지원 대상자 근로조건 완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경제적 빈곤 지원 대상자 근로조건 완화	2022년	36,125	-

※ 2022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소요예산 규모 및 가입 규모를 준용하여 산정함.

(5) 취약계층 청년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채무 부담 완화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의 취업기회 감소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채무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학자금 대출과 취업을 위한 교육비는 늘어났으며, 생활비 부담과 높은 주거비를 충당 등 생존을 위한 청년들의 채무는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이러한 채무 부담은 장기적인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청년 경제, 노동 영역 빈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채 발생 이유’에 대하여 ‘주거비 마련’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생활비 마련’(26.1%), ‘학자금 마련’(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부채 발생 이유’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빈곤층은 ‘생활비 마련’과 ‘학자금 마련’이 주된 이유였고, 비빈곤층은 ‘주거비 마련’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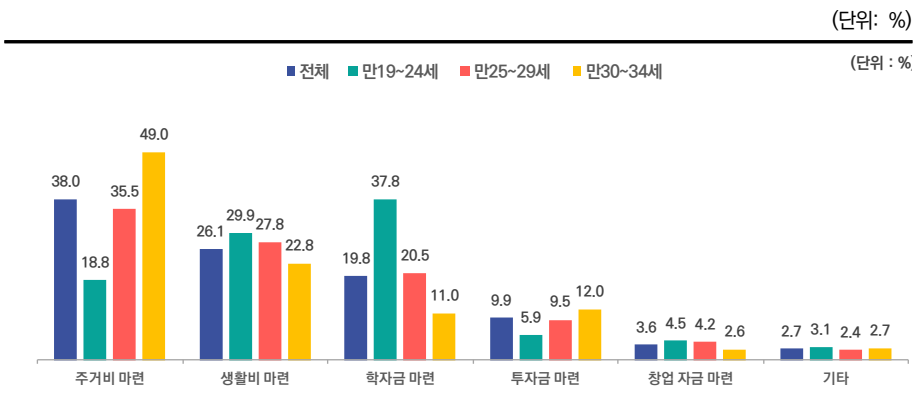


그림 VI-7. 청년 부채 발생 이유

다. 추진내용

대학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등 생존을 위한 청년들의 불가피한 채무가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청년들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금융위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된 기관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교육부 산하의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약은 미진한 상태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뿐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청년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주관하는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협약 및 제도를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5. 취약계층 청년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채무 부담 완화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취약계층 청년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채무 부담 완화	2022년	1,710	1,710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및 채무자 지원 예산 규모를 준용하였고, 국고와 지방비를 1:1 매칭함.

2) 노동 분야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1)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 취업을 위해 정부가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년들이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더불어 각 사업들의 주관 부처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 범정부 통합지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근거

대표적인 청년 취업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는 41.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6.3%,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43.1%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 평균
국민취업지원제도	4,114	13.1	19.5	26.1	32.1	9.2	3.05
청년내일채움공제	4,114	10.7	16.6	26.4	36.0	10.3	3.1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4,114	11.1	16.7	29.1	35.0	8.1	3.12

다. 추진내용

각 부처가 시행하는 청년 취업 지원사업 중 청년들에 대한 직접사업을 중심으로 각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접근방법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사업 담당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취업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전체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과정재설계(BPR)를 한다. BPR은 서비스 통합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업무처리 절차와 체계가 상이할 수 있어서 이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함이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청년 취업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 청년들에게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라. 추진체계

각 부처가 참여하는 통합지원 TF 운영과 범정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은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추진단에서 담당하여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7. 청년 취업지원 범정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취업지원 범정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022년	2,000	-
	2023년	15,000	-
	2024년	5,000	-

※ 2022년 예산은 디지털 예산 및 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 ISP 예산 규모를 준용하였고, 2023년 예산은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예산, 2024년 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으로 산정함.

(2)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환류시스템 구축

가. 필요성 및 목적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살펴보게 되는 두 가지 측면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인데, 특히 지원 사업에 대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중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정책만족도를 조사하였으나 50%내외의 만족도를 보였다. 만족도와 같은 평가 정보는 만족하지 않은 이유를 면밀한 분석하여 이를 해당 사업에 피드백하거나 더 나아가 기존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정책만족도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정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는 51.0%,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8.5%,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55.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5점 평균
국민취업지원제도	816	5.1	11.3	32.6	39.2	11.8	3.41
청년내일채움공제	659	3.8	10.3	37.5	35.1	13.4	3.4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594	4.2	6.6	33.7	39.1	16.5	3.57

다. 추진내용

우리나라 청년 취업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기존 사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수혜 청년들의 불만족 원인을 진단하여 사업의 개선, 확대 및 축소 여부, 지속 및 폐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 참여자들의 정책만족도에 대한 조사항목을 현실화하고 각 만족도 결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피드백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다.

라. 추진체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정책평가의 주무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이를 수행하는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주관하여 조사항목 조정, 피드백 등 환류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맡는다.

마. 소요예산

표 VI-9.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환류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환류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22년	200	-
	2023년	2,500	-
	2024년	2,500	-

※ 2022년 예산은 정책만족도 환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책연구비이고, 2023년과 2024년 예산은 정책환류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산정함.

(3) 청년 노동 빈곤 상황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정리화

가.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노동 빈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데 토대가 된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노동 빈곤 상황이 미래에도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인식으로서 우리나라 청년 노동 빈곤 상황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과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악화’ 응답이 43.6%(매우 악화될 것이다: 15.6% + 약간 악화될 것이다: 28.0%)로 ‘개선’ 응답 18.1%(매우 개선될 것이다: 1.5% + 개선될 것이다: 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 점수는 평균 2.60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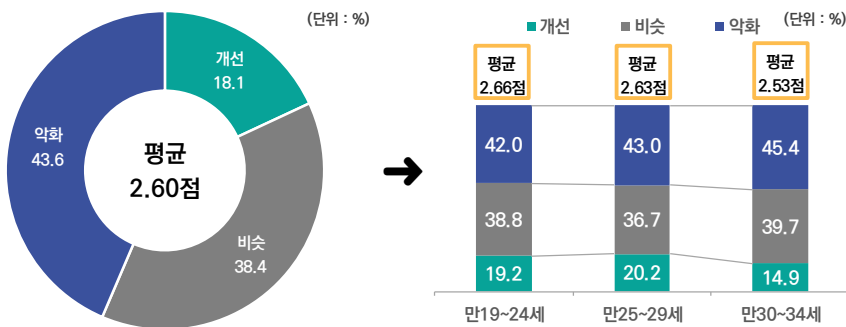


그림 VI-8. 향후 청년 고용 상황 예측

다. 추진내용

청년의 노동 빈곤 상황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열악성과 개선가능성, 노동을 통한 생활의 유지와 개선, 노동이 삶의 질, 자아실현,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폭넓게 파악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노동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빈곤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차별로 실시하고, 연간 노동 현실을 제시함과 더불어 시계열 데이터로 축적하여 사회·경제적 개선 상황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라. 추진체계

노동 빈곤 상황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청년정책연구실과 청년연구센터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노동연구원과 협동연구를 통해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10. 청년 노동 빈곤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연구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노동 빈곤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연구	2022년	181	-
	2023년	350	-
	2024년	650	-

※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연구의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1차년도 청년 노동 빈곤 전국실태조사 연구예산을 설정하였고, 시군구 단위의 분석을 위해 표본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2차년도, 3차년도 예산을 산정함.

(4) 노동 빈곤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내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기회 확대

가.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노동 빈곤을 타개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본인의 요구와 역량에 부합하는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청년 개인이 갖추고 있는 특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의 최선의 욕구를 감안하여 직업훈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 노동 빈곤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한국 사회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이 중요한가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요함’ 응답이 51.3%로 ‘중요하지 않음’ 응답 1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는 평균 3.51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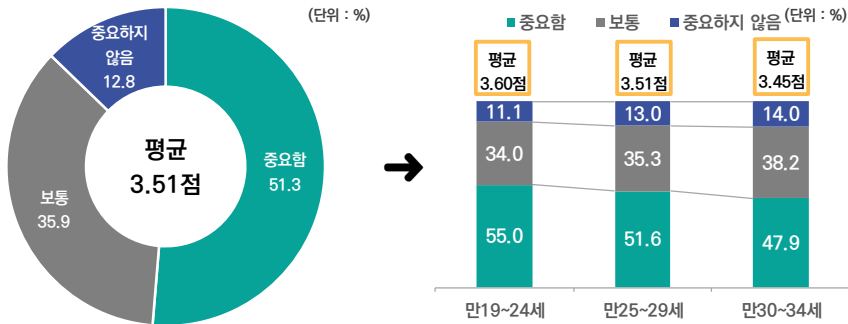


그림 VI-9.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다. 추진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교육 기회는 대표적으로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국비지원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대개의 경우 일반 학교 졸업이후 실업 혹은 구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이다. 청년의 일반적 삶의 경로를 살펴보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개인의 적성과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 직업훈련교육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졸업 이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연계 직업훈련과정을 정식 이수과정으로 편성하여 사회 진출 이전에 개인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라. 추진체계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산학연계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것으로 초·중·등 국가교육과정과 대학기본역량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담당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11. 노동 빈곤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내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확대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학교교육과정 내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이수단위 편성 확대	2022년	73,300	-
	2023년	75,500	-
	2024년	77,800	-

※ 2020년 대학 산학협력 지원예산 규모를 준용하여 편성하였으며, 2차년도와 3차년도 예산은 첫해 예산의 물가상승률(3%)을 반영하여 증액 산정하였음.

(5)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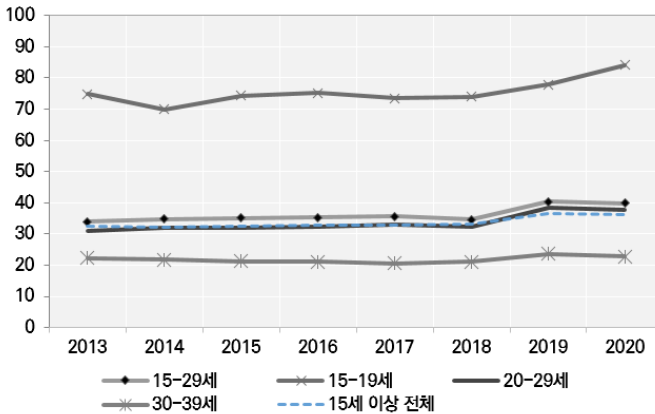
가.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플랫폼 노동,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 안정성 결핍을 경험하는 청년의 비율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산업체 인센티브의 강화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의 노동 빈곤 지표에서 2020년 기준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39.9%로 15세 이상 전체 연령집단의 비정규직 비율(3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 8. 15. 인출).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표 3-3> 수정, 발췌.

그림 VI-10. 비정규직 비율(2013~2020)

다. 추진내용

우리 사회의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격차 심화, 안정적 고용환경에 대한 욕구 확대 등 청년들의 기본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정규직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는 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본정책으로 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확대하여 지원 대상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1년간 임금상승분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100% 지급으로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라. 추진체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12.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 확대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 확대	2021년	3,400,000	1,457,140
	2022년	3,400,000	1,457,140
	2023년	3,400,000	1,457,140

*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상반기의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규모를 준용하였으며, 국비와 지방비를 7:3 비율로 매칭함.

3)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및 인프라

(1)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가. 필요성 및 목적

청년이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교육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제도 장치들이 있으나, 정작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혹은 빈곤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여건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국가 차원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로서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인지에 대한 청년들의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의함’ 응답이 49.8%로 ‘동의하지 않음’ 응답 13.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로 하여 동의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 3.46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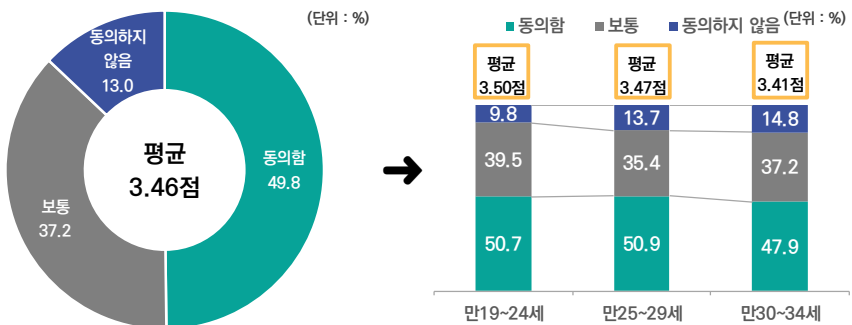


그림 VI-11.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

다. 추진내용

청년들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나 있듯이 청년 빈곤 해소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청년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는 청년 빈곤의 해소를 개인적 차원의 자력갱생의 영역으로만 볼 수 없으며 그러기에는 이미 청년 빈곤 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 기본법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보다 시급한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빈곤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각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실제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빈곤 타개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라. 추진체계

일반 빈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무기관이 되어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과 고용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수립한다.

마. 소요예산

표 VI-13.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2022년	90	-
	2023년	90	-
	2024년	90	-

※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 예산 규모를 준용하였으며, 각 년도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예산으로 산정함.

(2)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청년진흥원 설립

가. 필요성 및 목적

빈곤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청년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책사업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중점사업추진기관이 필요하다. 가칭 국가청년진흥원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사업 수행의 총괄기능과 함께 청년 빈곤 지원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근거

본 연구에서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한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동의함’ 응답이 62.7%(매우 동의함: 20.6% + 동의함: 42.1%)로 ‘동의하지 않음’ 응답 7.9%(전혀 동의하지 않음: 2.3% + 동의하지 않음: 5.6%)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점수는 3.73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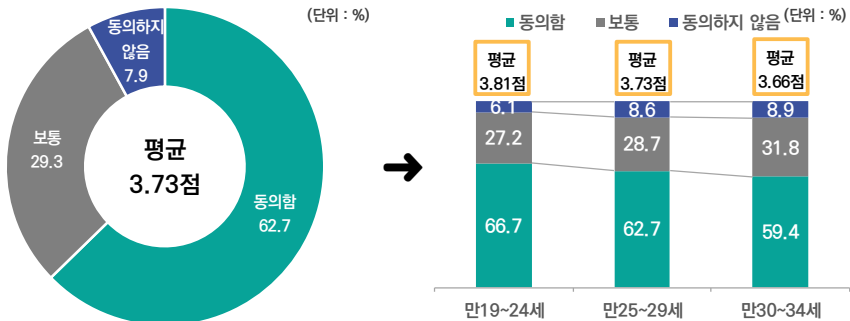


그림 VI-12.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다. 추진내용

우리나라 청년들이 청년 빈곤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청년 빈곤 정책 전반에 대한 확대와 강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조직상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없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관련 정책의 확대가 쉽지 않고 각 부처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밀릴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년정책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가칭 국가청년진흥원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라. 추진체계

빈곤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가칭 국가청년진흥원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마. 소요예산

표 VI-14.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추진사업	추진연도	예산	
		국고	지방비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2022년	41,000	-
	2023년	49,200	-
	2024년	59,040	-

※ 유관부처 진흥기관들의 정부출연금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매년 정원 증가에 따른 20% 출연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2차년도와 3차년도 소요예산을 산정함.

3. 결론

청년 빈곤에 관한 본 연구는 전체 3개년 연속연구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연구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 정책과 연구들은 청년 빈곤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살아가는 청년이 경험하는 빈곤 특성의 변화, 빈곤이행 경로와 위험·보호(예방)요인, 제도적 사각지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청년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고 빈곤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년기 빈곤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빈곤 실태를 다층적으로 확인하고 빈곤경험 청년의 이질성을 고려해 청년 빈곤의 영역별로 빈곤상태에 놓인 청년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청년기 빈곤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과 빈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와 영향요인을 3년간 연속연구를 통해 누적적으로 파악하고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금년도 1차년도는 연속연구 첫해로서 청년 빈곤의 분류틀 및 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지표별 실태 및 유형 분석, 경제/소득 및 노동 빈곤의 인식과 정책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자립안전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 빈곤의 개념을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였고, 청년 빈곤의 영역을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자본으로 분류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영역에서는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노동 영역에서는 실업과 노동안정성, 주거 영역에서는 주거비 부담과 최저주거기준,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과 의료비 부담,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과 니트(NEET), 사회·문화자본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문화활동 시간을 빈곤 지표로 확정하였고 각 지표별 빈곤선(cut-off)을 설정하였다.

청년 빈곤 지표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앞서도 언급했듯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영역별 지표의 빈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이행기 변화는 청년의 사회적 과업과 직결되는 영역의 빈곤 위험을 크게 만들고 있었다. 향후 노동과 교육에 관련해 결핍과 배제를 경험하는 빈곤 청년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은 노동과 주거, 그리고 교육영역에서 빈곤율이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해 정착하는 것, 그리고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는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년이 자원과 기회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과 교육영역 밖에서 일할 기회, 역량을 키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배제된 청년, 그리고 이행기의 불안정성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한 안정적 공간으로서의 주거 자원이 결핍된 청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과거보다 최근의 청년은 경제영역 중 자산빈곤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청년의 순자산 빈곤율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았으며, 그 경향도 최근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대물림으로 인한 청년의 집단내 격차가 커지는 등의 청년 불평등 문제가 악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고, 청년의 집단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최근 청년은 빈곤연구에서 간과해온 비화폐적 영역인 건강과 사회·문화자본 영역의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하였다. 건강과 사회·문화자본은 청년의 이행기 사회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노동, 교육, 주거와 달리 청년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기초역량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이 영역의

빈곤 위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청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소득지원만으로 청년 이행기의 배제, 박탈, 결핍을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년의 관계와 연결망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들의 빈곤 상황과 더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 대해서도 금년도 주요 빈곤 주제영역인 경제(소득)와 노동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소득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구직수당,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 내일채움공제 등을 대표적인 청년 빈곤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해소 정책은 대기업 쏠림 문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늘어 취업난 해소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현 소득지원제도는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해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지만 청년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인 취업난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 빈곤 문제 있어서 소득지원제도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또한, 하위 소득자의 경우 본인 자신을 평가할 때 지원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원할 경우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또한 높아 지원조차 하지 못한 경험 때문에 청년 소득지원제도에 대해 불만족하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청년면접수당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을 사설 학원에 비해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하지만, 커리큘럼이 사설 학원에 비해 다양하지 않고 전반적인 수업의 질 향상, 강사의 전문성, 교육프로그램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인지도와 경험도는 높지만 형식적인 구성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 작용이 부족하여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취업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취업 알선을 통해 연계되는 일자리 질이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공급하려는 노력으로 취업지원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하위 소득자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보다 일자리 체험 및 인턴 프로그램 등 직업 탐색 기회가 적어 정부차원의 경력 개발 및 일자리 탐색의 기회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청년의 자립안전망 체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 경제와 노동이라는 2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경제 분야의 자립안전망 정책 과제로는 경제적 지원 연계 종합 서비스 강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확대, 청년 개인 소득·자산 빈곤 지원 제도 개선, 청년 경제적 빈곤 지원 대상자 근로조건 완화, 취약계층 청년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강화를 통한 채무 부담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노동 분야의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서비스 구축,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 환류시스템 구축, 청년 노동 빈곤 상황에 관한 전국실태조사 정례화, 노동 빈곤 해소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내 맞춤형 직업훈련교육 기회 확대, 정규직 전환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기반 및 인프라로는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청년진흥원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청년 문제가 주로 고용의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고용이 해결 되면 청년층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년 실업난의 장기화와 더불어 여러 계층의 소득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청년 삶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서 성인기 이행 과정에 있는 청년 시기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고용을 통한 소득 확보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청년층의 삶에 있어서 존재하는 여러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삶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원인 진단과 이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였고 그에 따른 청년 삶의 안전망 체계 구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청년층 빈곤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지만 대신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진단의 다차원성에 따른 정책의 복잡성도 증가한다는 난점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를 통해서 청년 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책적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제고한 자립안전망 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진력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미나, 김혜승,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이길제, 조윤지, 우지윤, 이건우 (2020).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 강미나, 김혜승, 김근용, 이수옥, 박미선, 이재춘, 김지혜, 전성제, 조윤지, 우민아, 이건우, 권건우 (2019).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특성가구) 연구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질병통계(관심질병통계)」 각 연도. <https://nhiss.nhis.or.kr/> 에서 2021. 8.15. 인출.
- 고용노동부 (2021).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 8월 노동시장 동향. 2021년 9월 13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7차 개인·부가·가구조사 (2014년)와 18차 가구조사(2015년) 각 연도. <https://www.kli.re.kr/klips/index.do> 에서 2021. 8. 15.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1).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 계획(안).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4&lsiSeq=211961#0000>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293#0000>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c).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31&lsiSeq=228323#0000>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d). 문화예술진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22&lsiSeq=224589#0000>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e).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5&lsiSeq=227075#0000>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f).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805&lsiSeq=213951#0000>에서 2021년 5월 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g). 청년기본조례(17개 시도).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8월 30일 각 광역지자체별 청년 조례를 검색했음. [서울특별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064,20210720\)](https://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8064,20210720))

[부산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6440,20210714\)](https://www.law.go.kr/자치법규/부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6440,20210714))

[대구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청년기본조례/\(5472,20201005\)](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구광역시청년기본조례/(5472,20201005))

[인천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청년기본조례/\(6611,20210604\)](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광역시청년기본조례/(6611,20210604))

[광주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청년기본조례/\(5647,20210225\)](https://www.law.go.kr/자치법규/광주광역시청년기본조례/(5647,20210225))

[대전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청년기본조례/\(5675,20210730\)](https://www.law.go.kr/자치법규/대전광역시청년기본조례/(5675,20210730))

[울산광역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2299,20201229\)](https://www.law.go.kr/자치법규/울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2299,20201229))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1714,20210715\)](https://www.law.go.kr/자치법규/세종특별자치시청년기본조례/(1714,20210715))

[경기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청년기본조례/\(7018,20210520\)](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청년기본조례/(7018,20210520))

[강원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도청년기본조례/\(4530,20200306\)](https://www.law.go.kr/자치법규/강원도청년기본조례/(4530,20200306))

[충청북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청년기본조례/\(4571,20210701\)](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북도청년기본조례/(4571,20210701))

[충청남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4858,20201230\)](https://www.law.go.kr/자치법규/충청남도청년기본조례/(4858,20201230))

[전라북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4929,20210528\)](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4929,20210528))

[전라남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청년기본조례/\(5303,20210520\)](https://www.law.go.kr/자치법규/전라남도청년기본조례/(5303,20210520))

[경상북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청년기본조례/\(4475,20210401\)](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북도청년기본조례/(4475,20210401))

[경상남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4958,20210503\)](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상남도청년기본조례/(4958,20210503))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2607,20200812\)](https://www.law.go.kr/자치법규/제주특별자치도청년기본조례/(2607,20200812))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h). 청년기본조례 제정. <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2021년 8월 27일 각 광역지자체별 청년 조례를 검색했으며, 광역지자체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일은 아래로부터 확인하였음.

[서울특별시]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625565&chrClsCd=010202&gubun=KLAW&nwYn=N&onDatGubunCd=undefined>.

[부산광역시]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88416&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undefined>.

[대구광역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08930&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인천광역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40632&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광주광역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09072&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0>.

[대전광역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59379&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0>.

[울산광역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87125&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68337&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0>.

[경기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83786&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강원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09682&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충청북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34355&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충청남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19031&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전라북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84371&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전라남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79194&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 [경상북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22564&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 [경상남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36513&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38580&chrClsCd=010202&gubun=ELIS&nwYn=N&conDatGubunCd=1>.
- 국무조정실 (2021). 청년세대 ◆ 코로나 위기 극복 ◆ 격차 해소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2021년 8월 26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http://stat.molit.go.kr/portal/cate/statFileView.do?hRsId=327&hFormId=> 에서 2021. 8. 15. 인출.
-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관계부처합동 (2020a).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 (2020b).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안).
- 권재기 (201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한국아동복지학**, 34, 95-126.
- 기획재정부 (2021). **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세종: 기획재정부.
- 김기선, 오상호, 권준화 (2018). **청년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해외사례 심층연구: 독일**.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태, 김태완, 정세정, 이주미, 허대원 (2020).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선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미곤, 김태완, 최민정, 이세미 (2015).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세종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비오 (2019).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9(3), 408-436.

김수정 (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김수정 (2020).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한국인구학**, 43(2), 77-101.

김안나, 홍현우 (2018).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49(2), 93-124.

김유빈 (2021). 청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방향. **2021년 경기도 인구정책 토론회 자료집**.

김윤태, 서재욱 (2015). 빈곤의 다차원성: 이론적 논쟁의 검토. **비판사회정책**, 48, 146-186.

김원정, 류진석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자녀의 청년 빈곤가구 이행: 가구분리 연령과 교육수준의 다중매개효과. **사회보장연구**, 35(1), 53-73.

김준형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주거분야 과제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완, 김문길, 정진욱, 강성호, 윤상용, 이주미, 정희선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최준영 (2017).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 **보건복지포럼**, 244, 6-19.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배진우 (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남수정 (2018). 한국 노년기 가구주의 다차원적 빈곤 집단 유형과 특성: 잠재집단 모형(LCA)의 적용. **소비자학연구**, 29(3), 63-81.

노언정 (2019). 초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유형 분류와 예측 및 긍정적·부정적 결과 차이 검증. **교육문제연구**, 32(3), 261-287.

- 노혜진 (2019). 시간빈곤과 이중빈곤의 실태와 영향요인*-다양한 시간빈곤 개념 적용. **사회복지정책**, 46(4), 65-90.
- 두산백과사전 (2021). 빈곤 정의.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8485에서 2021년 4월 29일 인출.
- 박권일 (2009). 청년빈곤, 세대의 문제냐 성장의 단계냐. **황해문화**, 64, 63-76.
- 박미희 (2017).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 **노동정책연구**, 17(3), 1-44.
- 박미희, 조미라 (2019). 니트 청년의 시간사용 유형과 설명요인. **청소년학연구**, 26(5), 413-442.
- 박애리, 심미승, 박지현 (2017).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 진입과 주거 불안정성 인식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9(2), 1-20.
- 박영도 (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변금선 (2012).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4(3), 257-279.
- 변금선 (2020). **이행기 청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김선기 편(2020). 「청년학개론, 청년 연구자 되기」. 서울: 서울특별시·신촌문화정치그룹.
- 변금선, 이혜림 (2021).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연구원. 발간예정.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통계(장애인현황)」 각 연도. <http://kosis.kr> 에서 2021. 8. 15. 인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세종: 보건복지부.
- 서병수 (2007). 한국의 다차원적 빈곤 분석 실현능력접근. **사회복지정책**, 28, 199-232.

- 서종녀 (2016). 서울시 근로빈곤청년 자산형성지원정책 현황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9-250.
-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우경숙, 박찬미, 신영전 (2018).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빈곤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2), 25-57.
- 우석훈, 박권일 (2007). **88만원세대 : 절망의 세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 서울: 레디앙미디어.
- 유기영, 나도삼, 김원호, 조달호, 송인주, 이석민, 김인희, 양재섭, 남원석, 김승연, 윤민석, 손창우, 반정화, 오은주, 주재욱, 최유진, 정상혁, 김승준, 안기정, 신성일, 유경상, 변금선, 김진하, 이준영, 신가희, 임현정, 홍상연, 한영준, 양재환, 김고운, 김호기, 윤서연, 이보경, 안누리, 오찬섭 (2020). **서울의 미래 시정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미간행.
- 유동수 (2020.10.16.). **청년 신용불량자 1만 시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은 뭐하나**. 유동수 의원실 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newwds61/222117080646>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 유종성, 전병유, 신광영, 이도훈, 최성수 (2020).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한국사회정책**, 27(1), 5-37.
- 유지영 (2019). 우리나라 여성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10), 85-91.
- 이성균 (2009). 한국사회 청년층의 사회적 배제 : 청년실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 569-581.
- 이순미 (2018). 지방 중소도시 청년들의 다차원적 빈곤과 행복의 역설. **한국사회학**, 52(4), 243-293.
- 이승영 (2020). 영국의 빈곤 측정 방식 및 빈곤 현황. **국제사회보장리뷰**, 여름호 (13), 105-115.

- 이주미, 김태완 (2016). 다차원 빈곤 개념을 통한 청년빈곤의 측정. **한국사회복지 정책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85-108.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세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우선희, 최준영 (2017). 청년층의 주거실태는 어떠한가. **보건복지포럼**, 244, 38-53.
- 이현주, 정은희 (2014). 다차원적 접근을 이용한 한국 빈곤집단의 유형화와 특성 분석. **사회복지정책**, 41(2), 1-25.
- 이호근 (2017). 독일의 청년실업과 고용대책: 직업교육훈련 ‘이원체제 (dual system)’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4(3), 85-115.
-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377-402.
- 장민선,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 (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장지연, 이호근, 조임영, 박은정, 김근주, Enzo Weber (2020). **디지털 시대의 고용안전망: 플랫폼 노동 확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장세훈 (2006). 빈곤층의 내부 구성과 빈곤화 과정. **경제와 사회**, 71, 179-207.
- 전경숙, 송영호, 채창균 (2019).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전병유, 신진욱, 황규성, 이철승, 이재경, 오선영, 정준호, 정세은, 장지연, 강병익 (2016). **다중격차 :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경기: 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 정세정, 최권호, 최보라 (2021). 불리(disadvantage)의 경험과 취약 청년의 삶. **비판사회정책**. 70, 293-334.
- 중앙SUNDAY (2020.5.16.). 30가지 넘는 공공임대 유형 통합... 2025년 240만 가구로 확대. <https://news.joinson.com/article/23778156>에서 2021년 5월 18일 인출.

- 채준호 (2013). 영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국제노동브리프**, 10월호, 3-16.
- 최병숙, 최은영, 권지웅, 천현숙 (2013). 아동과 청년의 주거빈곤. **도시와 빈곤**, 104, 261-270.
- 최상미 (2019). 근로 빈곤 청년이 인지하는 고용 관련 장벽: 청년 고용장벽 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1), 31-56.
- 최상미, 유효은, 김한성 (2019). 당사자의 목소리로부터의 빈곤 청년의 삶에 대한 탐색. **사회과학연구**, 26(2), 32-58.
- 통계청 (2021). 2021년 8월 고용동향. 2021년 9월 15일 통계청 보도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 표준국어대사전 (2021a). 빈곤, 빈곤층 정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1년 4월 29일 인출.
- 표준국어대사전 (2021b). 청년 정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1년 5월 4일 인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https://www.mnuri.kr/munhwa/introduceNuri.do> 에서 2021년 5월 18일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조사 각 연도. <https://www.koweps.re.kr:442/main.do>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a).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b). 한국복지패널 15차 조사. <https://www.koweps.re.kr:442/data/data/list.do>에서 2021년 10월 12일 인출.
- 한국어기초사전 (2021). 청년 정의. <https://krdict.korean.go.kr/dicSearch/se>

- arch?nationCode=&ParaWordNo=&mainSearchWord=%EC%B2%AD%EB%85%84에서 2021년 5월 4일 인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a). **2021년 자활사업안내 II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서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b). <https://www.kdissw.or.kr/menu.es?mid=a10208010000>에서 2021년 5월 24일 검색 및 인출.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 한국행정연구원 (2018).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18-01- 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한무명초, 김양석, 이충권 (2017).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동남권 신공항 신문 기사 분석. **스마트미디어저널**, 6(1).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년 8월 15일 인출.
- 후지타 다카노리 저, 박성민 역 (2016). **우리는 빈곤세대입니다**. 서울 : 시공사.
- Alkire, S., & Foster, J. (2011).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 476-487.
- Beale, I., Bloss, C., & Thomas, A. (2008). *The longer-term impact of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UK: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Born, T., & Aldridge, H. (2015). *Poverty among Young People in the UK*, London: New Policy Institute, <http://npi.org.uk/publications/children-and-young-adults/739/>.
- Bussi, M. (2014). *The Youth Guarantee in Europe. ETUC/ETUI Report*. Brussels: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 Bynner, J., & Parsons, S. (2002). Social exclusion and the transition from

- school to work: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2), 289-309.
- Byun, G. (2020). Changes in household poverty among South Korean young adults: Decomposition analysis for 1995, 2006 and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9(2), 179-191.
- Caliendo, M., & Schmidl, R. (2016). Youth unemployment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in Europe. *IZA Journal of Labor Policy*, 5(1), 1-30.
- Calmfors, L., Forslund, A., & Hemström, M. (2002). Does active labour market policy work? Lessons from the Swedish experiences. Stockholm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Coleman, N., McGinigal, S., Thomas, A., Fu, E., & Hingley, S. (2014). *Evaluation of the youth contract wage incentive: wave two research* (Vol. 864). London: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Connelly, G., & Duncalf, Z. (2011). *Looked after children and further education in Scotland: a briefing paper*. Glasgow: GELCIS(Centre for excellence for looked after children in Scotland).
- De Giorgi, G. (2005). The new deal for young people five years on. *Fiscal Studies*, 26(3), 371-383.
- EAPN (2014). *Youth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https://www.eapn.eu/youth-poverty-and-social-exclusion-in-europe-issues-causes-solutions-and-what-the-eu-can-do/>에서 6월 28일 인출.
- Ebner, C. (2015). Labour market developments and their significance for VET in Germany: an overview. *Research in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10(4), 576-592.
- Eichhorst, W., & Rinne, U. (2016). Promoting youth employment in Europe: Evidence-based policy lessons. *IZA Policy Paper*, 119, 1-20.

Employment Related Services Association (2021). <https://ersa.org.uk/policy-campaigns/employability-programmes/youth-contract>에서 2021년 7월 3일 인출.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uropean Commission (2021). Youth Employment Support Platform.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327&langId=en>에서 2021년 7월 3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20). *The Youth Guarantee country by country*.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61&langId=en>에서 2021년 6월 30일 인출.

European Commission (2016). *The Youth Guarantee and Youth Employment Initiative three years on*. <https://ec.europa.eu/transparency/regdoc/rep/1/2016/EN/1-2016-646-EN-F1-1.PDF>에서 2021년 6월 22일 인출.

European Youth Forum (2010). *Policy paper on young people and poverty*. https://www.youthforum.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pdfs/0523_10_PP_Young_People_Poverty_FINAL.pdf에서 2021년 6월 20일 인출.

Eurostat (2021a). 유럽 청년층 빈곤율 통계.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Young_people_-_social_inclusion&oldid=526294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Eurostat (2021b). 유럽 청년 니트족 비율 통계.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Statistics_on_young_

people_neither_in_employment_nor_in_education_or_training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Fahmy, E. (2002). Youth,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ownsend Centre for International Poverty. University of Bristol. *Working Paper 27*.

Filmer-Sankey, C., & McCrone, T. (2012). *Developing indicators for early identification of young people at risk of temporary disconnection from learning*. Slough: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Groh-Samberg, O., & Voges, W. (2014). Precursors and consequences of youth poverty in Germany.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5(2), 151-172.

Hörisch, F., Shore, J., Tosun, J., & Werner, C. (2014). Labour market policies and youth unemployment. *Policy Brief*, (1). 1-9.

ILO (2020).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Kangas, O., & Palme, J. (2000). Does social policy matter? Poverty cycles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0(2), 335-352.

Mendola, D., Busetta, A., & Aassve, A. (2009). What keeps young adults in permanent poverty?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ECHP. *Social Science Research*, 38(4), 840-857.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345-368),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Nussbaum, M. (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21).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http://data.oecd.org/education/database.htm> 에서 2021. 8. 15. 인출.
- OECD (2021). *OECD Family Database*(HM1.4 LIVING ARRANGEMENTS BY AGE GROUPS). Paris: OECD.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 OECD (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Paris: OECD.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21).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notinwork/unemployment/bulletins/youngpeoplenotineducationemploymentortrainingneet/march2021>에서 2021년 7월 5일 인출.
- Protsch, P. & Solga, H. (201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the German VET system,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9(6), 637-661.
-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BS뉴스 (2019.9.20.). [단독] 821억 들인 문화누리카드, '전액사용' 실적은 고작 48%.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9&idx_800=2369417&seq_800=10359207에서 2021년 5월 18일 인출.
- The Federal Government (2016). <https://www.gut-leben-in-deutschland.de/indicators/income/risk-of-poverty-rate/>에서 2021년 7월 7일 인출.
- UN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economic-growth/>에서 2021년 6월 28일 인출.
- Yates, S., Harris, A., Sabates, R., & Staff, J. (2011). Early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fractured transitions: a study of entry into 'NEET' status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40(3), 513-534.

○ — 부 록

부록

1. 델파이 조사지(1차)

Research
& Research

ID

청년 빈곤 분류를 및 지표 개발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의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 연구로서 청년 빈곤 분류를 및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별 청년 빈곤실태와 규모 추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청년 빈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 빈곤의 분류들과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청년 및 교육 분야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연구진에서 제안한 청년 빈곤 분류들과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충실한 견해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의견은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과 함께 종합하고 분석하여 지표의 수정·보완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계획 :

조사	목적	방법	시기
1차 델파이 조사	1차 의견 수렴	온라인 조사	2021. 5. 03(월) ~ 5. 13(목)
2차 델파이 조사	2차 의견 수렴	온라인 조사	2021. 5. 20(목) ~ 5. 28(금)

본 조사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오며, 보내 주신 응답 내용은 오로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귀하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합니다)

※ 본 델파이조사지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보라** 연구위원 ㈜리서치앤리서치 **민주현** 선임연구위원
044-415-2119, ybora0326@nypi.re.kr 02-3484-3051, jhmin@randr.co.kr

※ 본 조사의 연구진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의 분류들과 지표(안)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 청년 빈곤의 개념(안) : 성인이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빈곤선(cut-off)
경제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가구)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개인) 개인 근로소득 임금근로자 중위 2/3미만
	순자산 (자산-채무)	(가구총자산 - 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50% 미만
노동	실업	6개월 이상 실업(장기비경활자)인 경우
	고용안정성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주거	주거비 부담	소득대비 (전월세) 주거비(RIR)가 30%초과한 경우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
건강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 의심 경우
	의료비 부담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10% 초과 지출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등의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그만둔 경우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회·문화 자본	사회적지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여가·문화비 지출	총 생활비 중 여가, 문화비 지출 수준이 중위 50% 미만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꾸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의 중위 50% 미만

1-1. 본 조사의 연구진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청년빈곤의 개념(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년 빈곤의 정의가 청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타당한지 평가해주시요.

☐
청년 빈곤의 개념(안) :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1-2. 청년빈곤의 개념(안)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1. 본 조사의 연구진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분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이 타당한지 평가해주시요.

분류 영역	1.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 경제 】 - 가구/개인 소득과 (순)자산	①	②	③	④	⑤
【 노동 】 - 노동의 기회와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 주거 】 - 주거비 부담과 주거의 질	①	②	③	④	⑤
【 건강 】 -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비 부담	①	②	③	④	⑤
【 교육 】 - 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	①	②	③	④	⑤
【 사회·문화자본 】 - 사회적지지와 여가문화 활동 기회	①	②	③	④	⑤

2-2.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년 빈곤의 6개 분류 영역별 중요도를 평가해주시요.

분류 영역	2.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경제] - 가구/개인 소득과 (순)자산	①	②	③	④	⑤
[노동] - 노동의 기회와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주거] - 주거비 부담과 주거의 질	①	②	③	④	⑤
[건강] -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비 부담	①	②	③	④	⑤
[교육] - 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화자본] - 사회적지지와 여가문화 활동 기회	①	②	③	④	⑤

2-3. 청년빈곤의 현재 분류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영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4.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1. 본 조사의 연구진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청년빈곤의 영역별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영역별 지표가 타당하지 평가해주시요.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지표 설명	1. 타당성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경제	1)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2) 순자산 (자산-채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노동	3) 실업	노동기회의 박탈	①	②	③	④	⑤
	4) 고용안정성	노동안정성 결핍	①	②	③	④	⑤
주거	5) 주거비부담	주거비 과부담 위험	①	②	③	④	⑤
	6)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최저 주거조건 결핍	①	②	③	④	⑤
건강	7)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①	②	③	④	⑤
	8) 의료비 부담	의료비 과부담 위험	①	②	③	④	⑤
교육	9)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및 훈련 기회 결핍	①	②	③	④	⑤
	10)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교육/일/훈련 등 배제	①	②	③	④	⑤
사회· 문화자 본	11) 사회적지지	사회자본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문화비 지출	문화자본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사회문화활동 기회 결핍	①	②	③	④	⑤

3-2. 본 연구에서 설정한 13개 영역별 지표의 중요도를 평가해주시요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지표 설명	2. 중요성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경제	1)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2) 순자산 (자산-채무)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노동	3) 실업	노동기회의 박탈	①	②	③	④	⑤
	4) 고용안정성	노동안정성 결핍	①	②	③	④	⑤
주거	5) 주거비부담	주거비 과부담 위험	①	②	③	④	⑤
	6)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최저 주거조건 결핍	①	②	③	④	⑤
건강	7)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①	②	③	④	⑤
	8) 의료비 부담	의료비 과부담 위험	①	②	③	④	⑤
교육	9)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및 훈련 기회 결핍	①	②	③	④	⑤
	10) 닛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교육/일/훈련 등 배제	①	②	③	④	⑤
사회· 문화자 본	11) 사회적지지	사회자본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문화비 지출	문화자본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사회·문화활동 기회 결핍	①	②	③	④	⑤

3-3-1.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경제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3-2.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노동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3-3.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주거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3-4.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건강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3-5.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교육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3-6.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사회·문화 자본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1. 본 조사의 연구진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각 지표별 빈곤선(cut-off)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지표별 빈곤선(cut-off)이 타당하지 평가해주시요.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빈곤선(cut-off)	타당성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경제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1) (가구)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개인 근로소득 임금근로자 중위 2/3미만	①	②	③	④	⑤
	순자산 (자산-채무)	3) (가구총자산 - 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50% 미만	①	②	③	④	⑤
노동	실업	4) 6개월 이상 실업(정기비경제활동자)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고용안정성	5)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주거	주거비부담	6) 소득대비 (전월세) 주거비(RIR)가 30% 초과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7)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건강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8)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 의심 경우	①	②	③	④	⑤
	의료비 과부담	9)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10% 초과 지출	①	②	③	④	⑤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10) 경제적/신체적 등의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을 그만둔 경우	①	②	③	④	⑤
	니트(N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11)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사회· 문화 자본	사회적지지	12)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여가문화비 지출	13) 총 생활비 중 여가 문화비 지출 수준이 중위 50% 미만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14)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의 중위 50% 미만	①	②	③	④	⑤

4-2-1.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경제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2-2.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노동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2-3.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주거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2-4.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건강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2-5.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교육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2-6.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사회·문화 자본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 델파이 조사지(2차)



청년 빈곤 분류를 및 지표 개발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의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 연구로서 청년 빈곤 분류를 및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별 청년 빈곤실태와 규모 추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청년 빈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의 분류들과 지표(수정안)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청년 및 교육 분야 전문가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연구진에서 제안한 청년 빈곤 분류들과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항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충실한 견해를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의견은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과 함께 종합하고 분석하여 지표의 수정·보완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계획 :

조사	목적	방법	시기
1차 델파이 조사	1차 의견 수렴	온라인 조사	2021. 5. 03(월) ~ 5. 13(목)
2차 델파이 조사	2차 의견 수렴	온라인 조사	2021. 5. 21(금) ~ 5. 28(금)

본 조사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오며, 보내 주신 응답 내용은 오로지 본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

귀하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 네, 동의합니다)

※ 본 델파이조사지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보라** 연구위원 (주)리서치앤리서치 **민주현** 선임연구원
044-415-2119, ybora0326@nypi.re.kr 02-3484-3051, jhmin@randr.co.kr

※ 본 조사의 연구진은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의 분류들과 지표(수정안)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 청년 빈곤의 개념(안) : 성인이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 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되어 평생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빈곤선(cut-off)
경제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가구)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개인) 개인 근로소득 임금근로자 중위 50%미만
	순자산 (자산-채무)(가구)	(가구총자산 - 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50% 미만
노동	실업	6개월 이상 실업(장기비경활자)인 경우
	노동안정성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주거	주거비 부담	소득대비 (전월세) 주거비(RIR)가 30%초과한 경우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
건강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 의심 경우
	의료비 부담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10% 초과 지출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사회·문화 자본	사회적지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여가문화비 지출	총 생활비 중 여가, 문화비 지출 수준이 중위 50% 미만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꾸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의 중위 50% 미만

1-1. 본 조사의 연구진이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청년빈곤의 개념(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년 빈곤의 수정된 정의가 청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타당한지 평가해주시시오.

- ☐ 청년 빈곤의 개념(원안) :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

☐ 청년 빈곤의 개념(수정안) :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되어 평생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

타당성 정도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1-2. 청년빈곤의 개념(수정안)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1. 본 조사의 연구진이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분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년 빈곤의 분류 영역이 타당한지 평가해주시요.

분류 영역	1.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 경제 】 - 가구/개인 소득과 (순)자산	①	②	③	④	⑤
【 노동 】 - 노동의 기회와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 주거 】 - 주거비 부담과 주거의 질	①	②	③	④	⑤
【 건강 】 -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비 부담	①	②	③	④	⑤
【 교육 】 - 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	①	②	③	④	⑤
【 사회·문화자본 】 - 사회적지지와 여가문화 활동 기회	①	②	③	④	⑤

2-2.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년 빈곤의 6개 분류 영역별 중요도를 평가해주시요.

분류 영역	2. 중요성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경제] - 가구/개인 소득과 (순)자산	①	②	③	④	⑤
[노동] - 노동의 기회와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주거] - 주거비 부담과 주거의 질	①	②	③	④	⑤
[건강] -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비 부담	①	②	③	④	⑤
[교육] - 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화자본] - 사회적지지와 여가문화 활동 기회	①	②	③	④	⑤

2-3. 청년빈곤의 현재 분류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영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4.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1. 본 조사의 연구진이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청년빈곤의 영역별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수정한 영역별 지표가 **타당한지 평가**해주시요.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지표 설명	1. 타당성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경제	1)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2) 순자산 (자산-채무)(가구)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노동	3) 실업	노동기회의 박탈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안정성	노동안정성 결핍	①	②	③	④	⑤
주거	5) 주거비부담	주거비 과부담 위험	①	②	③	④	⑤
	6)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최저 주거조건 결핍	①	②	③	④	⑤
건강	7)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①	②	③	④	⑤
	8) 의료비 부담	의료비 과부담 위험	①	②	③	④	⑤
교육	9)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및 훈련 기회 결핍	①	②	③	④	⑤
	10)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교육/일/훈련 등 배제	①	②	③	④	⑤
사회· 문화자 본	11)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문화비 지출~~ ~~지표 삭제 (지표 삭제가 타당한지 평가)~~	~~문화자본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사회문화활동 기회 결핍	①	②	③	④	⑤

3-2. 본 연구에서 설정한 13개 영역별 지표의 중요도를 평가해주시요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지표 설명	2. 중요성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경제	1)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2) 순자산 (자산-채무)(가구)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자산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노동	3) 실업	노동기회의 박탈	①	②	③	④	⑤
	4) 노동안정성	노동안정성 결핍	①	②	③	④	⑤
주거	5) 주거비부담	주거비 과부담 위험	①	②	③	④	⑤
	6)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최저 주거조건 결핍	①	②	③	④	⑤
건강	7)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	①	②	③	④	⑤
	8) 의료비 부담	의료비 과부담 위험	①	②	③	④	⑤
교육	9)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및 훈련 기회 결핍	①	②	③	④	⑤
	10) 닛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교육/일/훈련 등 배제	①	②	③	④	⑤
사회· 문화자 본	11)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12) 여가문화비 지출	문화자본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사회·문화활동 기회 결핍	①	②	③	④	⑤

3-3-1.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경제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3-2.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노동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3-3.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주거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3-4.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건강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3-5.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교육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3-6.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사회·문화 자본 영역” 지표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1. 본 조사의 연구진이 1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정한 각 지표별 빈곤선(cut-off)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지표별 빈곤선(cut-off)이 타당한지 평가해주시시오.

분류 영역	영역별 지표	빈곤선(cut-off)	타당성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경제	가처분소득 (가구/개인)	1) (가구) 균등화한 가처분소득 중위 50% 미만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개인 근로소득 임금근로자 중위 50% 미만	①	②	③	④	⑤
	순자산 (자산-채무)(가구)	3) (가구총자산 - 가구총부채)의 균등화 값 중위 50% 미만	①	②	③	④	⑤
노동	실업	4) 6개월 이상 실업(정기비경활자)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노동안정성	5)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주거	주거비부담	6) 소득대비 (전월세) 주거비(RIR)가 30% 초과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최저주거기준 (주거형태, 주거환경 등)	7)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건강	신체적/정신적 장애 및 중증질환	8)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CESD 척도 우울증 의심 경우	①	②	③	④	⑤
	의료비 과부담	9) 월 가처분소득 대비 보건의료비 10% 초과 지출	①	②	③	④	⑤
교육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결핍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	10)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니트(NEET) (교육 및 훈련 미참여)	11)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화 자본	사회적지지	12)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여가문화바 지출	13) 총 생활비 중 여가 문화바 지출 수준이 중위 50% 미만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화활동 시간 (재량시간)	14)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의 중위 50% 미만	①	②	③	④	⑤

4-2-1.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경제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2-2.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노동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2-3.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주거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2-4.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건강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2-5.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교육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4-2-6. 청년빈곤의 분류 영역 중 “사회·문화 자본 영역” 지표 내 빈곤선(cut-off)에 대한 의견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청년 빈곤 의식과 전망(소득, 노동) 설문조사지



ID

청년 빈곤 의식과 전망(소득, 노동)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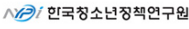
저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청년의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년도 연구로서 소득과 노동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 빈곤 의식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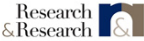
본 조사는 우리나라 청년층(만19~34세)을 대상으로 소득, 노동, 빈곤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청년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조사에 맞고 틀리는 답은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상황과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무부서 : 청년정책연구실

수행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조사문의 : 이정태 책임연구원 02-3484-3032, jitlee@randr.co.kr
민주현 선임연구원 02-3484-3051, jhmin@randr.co.kr

SQ. 응답자 선정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① 만19~24세 ② 만25~29세 ③ 만30~34세

SQ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SQ4. 다음은 청년의 다양한 가구형태입니다. 귀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십니까?
 ① 청년 부부 + 자녀가구
 ② 청년 부부가구
 ③ 청년 한부모 + 자녀가구
 ④ 청년 독립 1인 가구 (※세어하우스 포함, 본인이 가구주임)
 ⑤ 청년 독립 기타가구 (※형제자매와 함께 하는 경우 포함)
 ⑥ 부모 동거 청년 가구 (※부모와 청년자녀로 구성된 가구)
 ⑦ 부모 동거 청년 기타가구 (※혼인하여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포함)
 ⑧ 기타 (적을 것 : _____)

- 1 -

I. 청년의 소득

1. 소득 상황 및 전망

QA1. 귀하의 2020년(01.01~12.31) 총 연간소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없으면 0 기입)

구분		연간 소득 금액
1-1	귀하의 연간 근로 및 사업 소득은 얼마입니까?	_____만원
1-2	귀하의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연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용돈 등 포함)	_____만원
1-3	귀하의 2020년(1.1~12.31.)(세금공제 전) 총 연간소득은 얼마입니까? (1-1, 1-2의 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	_____만원

QA2. 귀하는 현재 총 연간소득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QA3. 귀하가 (최소한으로) 원하는 총 연간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 _____만원

QA4. 귀하의 향후 연령대별로 예측되는 연간소득 금액을 적어주세요.

연령대	연간소득 금액
(1) 40대	_____만원
(2) 50대	_____만원
(3) 60대	_____만원
(4) 70대 이상	_____만원

QA5. 귀하는 미래에 본인의 소득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재산

QA6. 귀하는 현재 본인 명의(자가, 전세, 월세 등 포함)로 거주하는 주택이 있습니까?

(※부모님 명의나 사업용은 제외)

- ① 예 → QA6-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QA7번으로 이동

QA6-1. 본인 명의 거주 주택의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 QA6-2번으로 이동
- ② 전세 → QA6-2번으로 이동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QA6-2번으로 이동
- ④ 보증금 없는 월세 → QA7번으로 이동

QA6-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QA6-1. 소유 형태	QA6-2. 금액
① 자가	(주택가격)_____만원
② 전세	(전세금)_____만원
③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_____만원

QA6-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비용은 누가 마련하였습니까?

(※ 자가인 경우 주택가격, 전세인 경우 전세금, 보증부 월세인 경우 보증금을 말함)

- ① 전부 본인 스스로
- ②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일부 도움
- ③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대부분 마련해주시고 본인이 일부 도움
- ④ 전부 부모님(또는 친지) 등이 마련해 주심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QA7.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본인명의로 부동산 재산은 얼마입니까? (※ 없으면 0 기입)

(※ 거주주택 외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보증금 및 권리금 등)
: _____만원

QA8. (QA6의 ②번 응답자만) 귀하는 본인 명의의 자가를 마련하기 원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QA8-1. (QA8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본인 명의의 자가를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2년 이내 ② 2년 초과 5년 이내 ③ 5년 초과 10년 이내
- ④ 10년 초과 20년 이내 ⑤ 20년 이후 ⑥ 마련이 불가능함

QA9. (QA6의 ③번 또는 QA7>0 응답자만) 향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 부동산(집과 집 제외 부동산 포함)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하락할 것이다 ② 대체로 하락할 것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상승할 것이다 ⑤ 매우 상승할 것이다

QA10. 귀하는 현재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습니까?

(※ 자동차(이륜차 제외):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 ① 예 → QA10-1번으로 이동
- ② 아니오 → QA11-1번으로 이동

① 경차(~1,000cc) ② 소형(1,600cc 미만) ③ 중형(2,000cc 미만) ④ 대형(2,000cc 이상)

① 예 → QA12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QA12번으로 이동

① 예 ② 아니오

① 2년 이내 ② 2년 초과 5년 이내 ③ 5년 초과 10년 이내
④ 10년 초과 20년 이내 ⑤ 20년 이상 ⑥ 마련이 불가능함

4. 부채	

QA16. 귀하의 2021.7.1. 기준 총 부채(학자금 대출 포함)액은 얼마입니까? (※ 없으면 0 기입)

대출 기관	금액
(1) 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_____만원
(2) 2금융권(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_____만원
(3) 대부업체	_____만원
(4) 기타(예: 외상, 미리탄 갚돈 등) (적을 것: _____)	_____만원
총합	_____만원 (0월인 경우 → QA20번으로 이동)

QA17. 귀하의 부채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투자금(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마련 ⑥ 기타(적을 것 : _____)

QA18. 귀하는 현재 부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부담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QA19. 귀하가 부채를 완전상환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1년 이내 ② 1년 초과 5년 이내 ③ 5년 초과 10년 이내
④ 10년 초과 20년 이내 ⑤ 20년 이상 ⑥ 상환이 불가능함

QA20.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의 부채부담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부담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부담된다 ⑤ 매우 부담된다

5. 소비지출

QA21. 현재 귀하의 주요 소비지출을 월평균 금액으로 써넣어 주십시오. (※ 없으면 0 기입)

소비 지출 유형	금액
(1)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_____만원
(2) 주거비	_____만원
(3) 교육비(보육료 포함)	_____만원
(4) 의료비	_____만원
(5) 교통비	_____만원
(6) 통신비	_____만원
(7) 기타 소비지출(오락문화,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등)	_____만원
총합	_____만원

6. 소득 관련 정부정책 인식 및 정책욕구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일하는 수급가구와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공통적으로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세부 사업별 대상자 상이
-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중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와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가구 중 일하는 만 15세~29세 이하 청년 대상)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만 15세~29세 이하 청년 대상

▶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 저소득 청년 한부모(25-34세)를 대상으로 기존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월 5만원~1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청년기본소득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A22. 귀하는 다음의 소득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항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①	②	③	④	⑤
(2)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청년기본소득	①	②	③	④	⑤

QA23. 귀하는 다음의 소득 관련 정부 정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항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참여경험있는 경우만) 해당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 지 않는다	만족하 지 않는다	보통이 다	만족한 다	매우 만족한 다
(1)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청년기본소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QA24. 귀하는 다음의 소득 관련 정부 정책에서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② 저소득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
- ③ 청년기본소득

II. 청년의 노동

1. 일자리 상황 및 전망

1) 취업

QB1. 지난주(21년 7월 00일 ~ 7월 00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① 예 → QB3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QB2번으로 이동

QB2. 지난 4주내(21년 6월 00일 ~ 7월 00일)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 ① 구해 보았음 ② 구해 보지 않았음

→ QB4번으로 이동

QB3.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임금근로자

- ① 비정규직_시간제노동 : 단시간, 파트타임 등
② 비정규직_한시적노동 : 기간제, 계약직 등
③ 비정규직_비전형노동 : 파견, 용역, 특수형태 노동, 프리랜서, 가내, 호출노동 등
④ 정규직

비임금근로자

- ☐ ⑤ 자영업, 창업 등

→ QB6번으로 이동

QB4. 과거(2018~2021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QB5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QB8번으로 이동

QB5. 과거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가장 최근에 일을 하였던 직장(일)에 대해서 응답함)

임금근로자

- ① 비정규직_시간제노동 : 단시간, 파트타임 등
② 비정규직_한시적노동 : 기간제, 계약직 등
③ 비정규직_비전형노동 : 파견, 용역, 특수형태 노동, 프리랜서, 가내, 호출노동 등
④ 정규직

비임금근로자

- ☐ ⑤ 자영업, 창업 등

→ QB8.번으로 이동

QB6. 현재 직장(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문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수입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직업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3)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QB7. 현 직장(일자리)을 그만두고 이직할 의향이 있습니까? (※ 창업 준비, 업종 변경 등도 이직 준비에 포함)

- ① 예 → QB7-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QB9번으로 이동

QB7-1.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더 나은 보수/복지를 위해
② 개인발전/승진
③ 더 나은 근무환경(직장상사, 동료, 식대, 출퇴근 시간/거리 등)
④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⑤ 더 나은 안정성을 위해
⑥ 기술 또는 기능 수준이 맞지 않아서
⑦ 개인 사업을 위해서
⑧ 건강상의 이유로
⑨ 집안사정 때문에(육아, 가사부담 등 포함)
⑩ 기타(적용 것 : _____)

- ▶ 「전문중소기업」이란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에 속하지만, 분야(서비스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별로 매출액 상위 순위를 차지하거나 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정책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
▶ 「일반중소기업」은 전문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업

QB8. 귀하는 향후 어디에 취업하기 원하십니까?

- ① 대기업 ② 공공기관(공기업, 정부행정기관 포함) ③ 외국계기업
④ 일반 중소기업 ⑤ 전문 중소기업 ⑥ 창업

QB8-1. 해당 기관에 취업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가능하다 ② 불가능하다 ③ 보통이다
④ 가능하다 ⑤ 매우 가능하다

QB9.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 ① 매우 악화될 것이다 ② 약간 악화될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개선될 것이다 ⑤ 매우 개선될 것이다

QB10. 귀하는 미래의 본인의 일자리 상황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일자리 상황 및 전망

2) 창업

QB11. 현재 창업 중입니까?

- ① 예 → QB12번으로 이동
② 아니요 → QB16번으로 이동

QB12. 현재 창업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스스로 창업하였다(친구와 동업 포함) ②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았다

QB13. 창업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③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④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⑤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⑦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⑥ 배우자(또는 친지, 친척)의 일이라 함께 해야 하므로 ⑧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⑨ 기타

QB14. 현재 창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QB15. 앞으로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응답자 →QB15-1번으로 이동

③④⑤ 응답자 →QB17번으로 이동

QB15-1. (①② 응답자만) 앞으로 창업을 유지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능력·경험이 부족해서 ②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③ 직장이나 학교생활과 병행하기가 어려워 ④ 성공하기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워
⑤ 부모,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의 만류로 ⑥ 가정 일에 소홀하게 되어서

→ QB17번으로 이동

QB16. 앞으로 창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응답자 →QB16-1번으로 이동

③ 응답자 →QB17번으로 이동

④⑤ 응답자 →QB16-2번으로 이동

QB16-1. (①② 응답자만)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마땅한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없어서 ②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능력·경험이 부족해서
- ③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④ 창업에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 ⑤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⑥ 직장이나 학교생활과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 ⑦ 성공하기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⑧ 부모,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의 만류로
- ⑨ 가정 일에 소홀하게 될 것 같아서

→ QB17번으로 이동

QB16-2. (④⑤ 응답자만) 창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② 좋아하는 업종이어서
- ③ 누군가(직장상사 등)의 간섭이 싫어서 ④ 일하는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 ⑤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려고
- ⑥ 배우자(또는 친지, 친척)의 일이라 함께 해야 하므로 ⑦ 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 ⑧ 친구나 친지의 추천으로 ⑨ 기타

→ QB16-3번으로 이동

QB16-3. 향후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가능하다 ② 불가능하다 ③ 보통이다
- ④ 가능하다 ⑤ 매우 가능하다

QB17. 현재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렵다 ③ 보통이다
- ④ 어렵지 않다 ⑤ 전혀 어렵지 않다

2. 일자리 관련 정부정책 인식 및 정책욕구

▶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 저소득 구직자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 함께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 근속 후 만기공제금을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 자치단체에서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수당 (50만원*6개월)

QB18. 귀하는 다음의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항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①	②	③	④	⑤
(2) 청년내일채움공제	①	②	③	④	⑤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①	②	③	④	⑤

QB19. 귀하는 다음의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항	참여 경험 없음	참여 경험 있음	(참여경험있는 경우만) 해당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청년내일채움공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①	②	①	②	③	④	⑤

QB20. 귀하는 다음의 취업 및 창업 지원 관련 정책에서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 ③ 청년구직활동지원금

Ⅲ. 청년 빈곤에 대한 인식 및 정책욕구

1. 청년 빈곤 실태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청년 빈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인이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

QC1. 귀하는 스스로 빈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①② 응답자 →QC1-1번으로 이동

③ 응답자 →QC2번으로 이동

④⑤ 응답자 →QC1-2번으로 이동

QC1-1. (①,② 응답자만) 귀하가 앞으로 빈곤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QC2번으로 이동

QC1-2. (④,⑤ 응답자만) 귀하가 앞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보통이다
④ 높다 ⑤ 매우 높다

QC2. 청년이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청년 빈곤 영역에 대하여 각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류 영역	영역 설명	2. 중요성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경제] - 가구/개인 소득과 자산	기본 생활에 필요한 소득 및 자산의 결핍	①	②	③	④	⑤
[노동] - 노동의 기회와 안정성	노동기회와 안정성 결핍	①	②	③	④	⑤
[주거] - 주거비 부담과 주거의 질	주거비 과부담 위험 및 최저 주거조건 결핍	①	②	③	④	⑤
[건강] -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의료비 부담	신체적/정신적 불건강한 상태 및 의료비 과부담 위험	①	②	③	④	⑤
[교육] - 교육 및 직업훈련의 기회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인한 교육 및 훈련 기회 결핍과 교육/일/훈련 등의 배제	①	②	③	④	⑤
[사회문화자본] - 사회적 지지와 여가문화 활동 기회	사회적 지지의 결핍 및 사회문화활동 기회 결핍	①	②	③	④	⑤

QC3. 다음의 청년 빈곤을 정의하는 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류 영역	빈곤층 정의	타당성					(③,⑤)응답자만 타당하지 않은 이유	
		전혀 타당 하지 않음	타당 하지 않음	보통	타당 함	매우 타당 함	빈곤 기준을 완화해야 함	빈곤 기준을 강화해야함
경제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가구의 자산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노동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근로자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주거	소득대비 (전월세) 주거비가 30%초과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주거 면적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비주택(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건강	중증 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우울증 의심의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월평균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이 10% 초과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교육	경제적/신체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현재 취업하지 않고 공식·비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사회· 문화 자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개인 재량시간(전체 시간 중 노동, 학업/훈련, 가구유지, 개인유지 시간을 뺀 시간)이 전체의 중간값(50%)보다 미만인 경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QC4.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청년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QC5.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청년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QC6. 귀하는 한국사회에서 청년 빈곤층이 향후 빈곤을 탈출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가능하지 않다 ② 가능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가능하다 ⑤ 매우 가능하다

QC7. 귀하는 다음의 각각의 항목들이 한국 사회의 청년 빈곤의 원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이다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개인적인 동기과 스스로의 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개인적인 능력(타고난 재능)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	①	②	③	④	⑤
(5) 개인적인 질환(질병)과 신체적 장애	①	②	③	④	⑤
(6) 개인적인 학력수준의 미흡	①	②	③	④	⑤
(7) 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①	②	③	④	⑤
(8)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9)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	①	②	③	④	⑤
(10) 빈곤층 및 일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①	②	③	④	⑤
(11) 개인적인 불행과 불운(불우한 가족배경 등)	①	②	③	④	⑤

QC8. 귀하는 다음의 청년 빈곤 정책에 대한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문 항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이다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청년 빈곤 해소는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IV. 배경문항

DQ1. 혼인 상태

- ① 미혼 ② 기혼(동거포함) ③ 사별 ④ 이혼

DQ2. 최종학력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2,3년제 대학 포함) ⑥ 대학교(4년제 대학 포함)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DQ3. 주관적 계층 인식

- ① 빈곤층 ② 중하층 ③ 중층
④ 중상층 ⑤ 상위층

DQ4.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장만이 중요하다 ② 성장이 분배보다 더 중요하다 ③ 비슷하다
④ 분배가 성장보다 더 중요하다 ⑤ 분배만이 중요하다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청년 빈곤 관련 심층면담지

청년 빈곤 관련 심층면담 개요

■ 심층면담 대상자 선정

- 20~34세 대졸/1인가구 청년 약 30명
- 연령(20대/30대), 성별(남/여),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근로형태(미취업/정규직/비정규직), 소득(월 중위소득 1,827,831원 기준, 소득상위/소득하위)을 고려하여 선정

■ 심층면담 조사지 개발 절차

- 조사 내용(안) 개발 → 연구진 협의 → 수정 및 보완 → 전문가 자문 → 수정 및 보완 → 예비조사 실시 → IRB 심의 → 본조사 실시

‘청년 빈곤 의식조사’ 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면담참여자 기초 정보			
성명		연령(만)	성별
거주지역	(수도권/비수도권)		
근로 형태	(미취업/정규직/비정규직)		
소득 형태	소득상위/소득하위(중위소득:1,827,831 기준)		
주소			
은행/계좌번호			
e-mail		mobile	

PART 1. 도입

○ 인사 및 소개

○ 인터뷰 소개 및 안내

- 본 면접의 목적은 청년들의 소득과 노동에 관한 의식을 파악하고, 청년들의 소득과 노동의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본 면접의 질문에 대하여 정답과 오답은 없으며, 평소 생각하시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보안 유지에 대한 안내, 녹음 안내 등

PART 2. 소득 상황과 인식

- 2-1. 현재 소득이 있나요(돈을 벌고 있나요)?
- 어디서 소득을 얻고 있나요?
(직장의 월급/자영업 소득/부모님으로부터의 용돈·지원금/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등)
- 2-2. 현재 나의 경제적인 소득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넉넉한 편이다/적정하다/부족하다)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3. 한달 동안 가장 많이 돈을 지출하는 데는 어디인가요?
- (월세등 거주비/식료품·식대/의료비/문화생활비/대출상환비용 등)
 - 지출하기에 현재 소득이 충분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부족 하다고 느끼시나요?
 - 부족한 지출은 어떻게 채우고 있나요?
- 2-4. 한달에 소득의 몇 % 정도를 저축하고 있나요?
- 하고 있다면 어떤 방식(예적금, 주택청약통장 등)으로 얼마나 하고 있나요
 - 안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5. 돈을 많이 벌면(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사고) 싶나요?
- (여행/자동차 구입·교체/집 마련/주식·가상화폐 투자 등)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6. 실례가 안 된다면 부채가 있으신 경험에 있으신가요?
- (부채 있음/부채 없음)
 - **(부채가 있다면)**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부채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부채가 생겼는지 여쭙 봐도 될까요?
- 2-7. 주식에 투자하시나요?
- (투자함/투자하지 않음)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투자하고 있다면)** 소득 대비 몇 % 정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나요?
 - **(투자하고 있다면)** 주식투자로 수익이 생기면 주로 어디에 쓰려고 하시나요?
 - **(투자하고 있다면)** 주식에 몰두 하면서 생활에 지장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2-8.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나요?

(투자함/투자하지 않음)

-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투자하고 있다면) 소득 대비 몇 % 정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나요?
- (투자하고 있다면) 가상화폐로 수익이 생기면 주로 어디에 쓰려고 하나요?
- (투자하고 있다면) 가상화폐에 몰두하면서 생활에 지장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2-9.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몰입하는 청년 세대에 대해 기성세대들이 경제적 참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투기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느 시각에 동의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10. 결혼을 하려면 경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조건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월소득, 주거마련, 안정적 일자리, 부모로부터의 지원 등)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11. 결혼을 한다면 맞벌이하기를 원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12. 최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기성 세대와 비교할 때 청년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충분하다/적정하다/부족하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13. 내가 빈곤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14. 청년이 빈곤하다고 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빈곤 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 수준, 주거 등)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15. 주변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빈곤한 청년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음/모름)

- (알고 있다면)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로 어려워 보이나요?
- (알고 있다면)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요?

2-16. 최근 우리나라에서 세대별로 보았을 때 가장 가난한 세대는 어느 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세대중에서)

2-17.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빈곤한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 혹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빈곤한 청년들이 예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18. 부모님의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청년시기의 경제적인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19. 향후 미래(대략 10년쯤 후)에 나는 지금보다 돈을 충분히 많이 벌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20. 향후 미래(대략 10년쯤 후)에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지금보다 돈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ART 3. 청년 소득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3-1.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의 소득을 지원하거나 빈곤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알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 예를 들어, 청년 수당 지급, 빈곤 청년 공공부조 확대, 구직 청년 선별 지원 확대 등등)

- 혹시 면접자 분 혹은 친구 중에 소득 지원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3-2. 정부나 지자체의 청년들의 소득을 지원하거나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정부나 지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가난한 청년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3-3.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소득 보완 정책 혹은 빈곤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요?
- 혹은 기존 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PART 4. 노동 상황과 인식

4-1. 현재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일을 한다면〉

- 현재 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 일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거나 혹은 불만족하거나 그 이유는)

〈일을 안한다면〉

- 실례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 예전에 일을 하다 지금은 안하는 것이라면 일을 그만둔 이유가 있을까요?
-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다면〉 향후 취업이나 창업을 무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울 것 같다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낄까요?

4-2. 현재(최근)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 현재의 고용형태를 선택하셨나요? /선택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정규직이라면〉

- 정규직이 되길 희망하시나요?
- 〈정규직 되기를 바란다면〉 향후 정규직이 되는 과정이 무난할 것 이라고 전망하시나요? 그렇게 느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4-3. 향후 이직 의향이 있나요?

- 이직을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향후 어느 직종(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하시나요?

4-4. 주변에 지인들 중에서 직장(일자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 4-5.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동등해야 한다)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6. 부모의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7.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출신 대학교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8. 이른바 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출신 대학을 가지고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4-9. 좋은 대학(이른바 상위권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10.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11. '청년 고용활당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일정비율을 만 34세 이하 청년들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활당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당한 정책인지/부당한 정책인지)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12. 우리 사회에서 취업 경쟁은 대체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무엇이 취업경쟁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4-13.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대체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14. 직장을 구하기 위해 외국으로 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15. 향후 미래(대략 10년쯤 후)에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원하는 데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ART 5. 청년 노동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요구

5-1.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 하는 정책들 중 알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 예를 들어, 구직활동 기간 동안의 소득 지원,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등)

- 혹시 응답자 분 혹은 친구 중에 취업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5-2. 정부나 지자체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필요하다면/필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정부나 지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정책들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효과적이었다면/효과적이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5-3. 정부나 지자체가 향후에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할 필요가 있는 취업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요?

- 혹은 기존 정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PART 6. 종결

○ 마무리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면접조사에서 말씀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다루지 못한 내용 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실태와 영향요인을 3년간 연속연구를 통해 누적적으로 파악하고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정책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금년도 1차년도는 연속연구 첫해로서 청년 빈곤의 분류틀 및 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지표별 실태 및 유형 분석, 경제/소득 및 노동 빈곤의 인식과 정책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자립안전망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년 빈곤의 개념을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박탈, 결핍된 상태’로 정의하였고, 청년 빈곤의 영역을 경제, 노동, 주거, 건강, 교육, 사회·문화자본 등 6개 영역 총 12개 빈곤지표로 분류하여 그 실태와 빈곤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였다. 또한 청년 빈곤 문제의 1차년도 중점영역인 경제/소득 및 노동영역에 관한 상황, 인식, 전망, 정책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청년의 자립안전망 체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서 경제와 노동이라는 2개 분야 총 12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그에 부합하는 청년들의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청년, 빈곤, 실태, 빈곤지표, 자립안전망

ABSTRACT

Study of Youth Poverty Reality and Establishment of the Self-Reliance Safety Net System 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cumulate multi-dimensional and in-depth facts and influencing factors on youth poverty through three consecutive years of research and to prepare preven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youth poverty, thereby establishing a policy safety net for young people to become socially self-reliant.

During its first year of continuous research, the study aimed to lay the foundation for a self-reliance safety net scheme by primarily developing a classification framework and indicators for youth poverty and analyzing the reality and types of each indicator, understanding economic/income and labor poverty, and identifying policy needs.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concept of youth poverty as 'a state of being deprived of and lacking the resources and opportunities necessary to sustain a basic living and social life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We classified youth poverty

into 12 poverty indicators across six areas including economy, labor, housing, health, educ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capital, and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the reality and types of poverty. In addition, we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on the situation, perception, prospect and policy needs related to the economy/income and labor areas, which were the focal areas during the first year of this study on youth poverty issues.

Upon integrating findings of the study, we proposed a total of 12 policy tasks across two areas of economy and labor as policy suggestions to build a base for the youth's self-reliance safety net scheme. In conclusion, this study endeavored to lay the groundwork for establishing a self-reliance safety net scheme for young people by approaching the problem of youth poverty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Key words: Youth, Poverty, Reality, Poverty Indicators,
Self-Reliance Safety Net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옥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원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효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 시 과 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적립금

-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수탁과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균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희·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흔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교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회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익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Ⅲ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번역 · 집필진 ◆

김 수 혜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박사)

협동연구총서 21-79-01
연구보고 21-R18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43-5 93330

연구보고 21-R18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43-5